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백서

〈참고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4·16세월호참사백서 참고자료

【 자료목록 】

- 개관 -

1-1.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 ····· 3
1-2.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 지원 계획 ····· 5
1-3. 공익법률지원단 제1차 워크샵 일정표 ····· 25
1-4. 공익법률지원단 위원 모집 공고 ····· 26
1-5. (워크샵)세월호법률지원단운영전략 ····· 30
1-6. (워크샵)2차 피해 ····· 39

- 현장지원 -

2-1. 여객선세월호침몰사고관련대한변협관련활동제안 ····· 51
2-2. 안산장례식장순회보고(20140428) ····· 55
2-3. 대한변협세월호대책TF결정사항(20140423) ····· 58
2-4. 사고대책본부 분야별 담당자(2014.04.25.) ····· 64
2-5. 세월호실종자대책위변호사파견요청의건(2014.10.22.) ····· 65
2-6. 세월호특위진도복귀기자회견문(2014.10.23.) ····· 67
2-7. 세월호특위진도군청기자회견문(2014.10.27.) ····· 69
2-8. 실종자가족과세월호특위합동기자회견(2014.10.29.) ····· 70
2-9. 실종자가족대국민기자회견문(2014.11.11.) ····· 73
2-10. 세월호특위기자회견(수색,구조방안에대한입장)(2014.05.27.) ····· 75
2-11. 세월호특위기자회견(2014.06.14.) ····· 76

2-12. 세월호사고59일째가족보고사항(2014.06.13.) ····· 77
2-13.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30.) ····· 79
2-14. 세월호잠수안전십계명(민간잠수안전지원단) ····· 80
2-15. 세월호국조특위여당불참에대한입장 ····· 81
2-16. 국회세월호국조특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공동선언문(2014.06.08.) ····· 84
2-17.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10.) ····· 86
2-18. 진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 호소문(20140628) ····· 87
2-19.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24.) ····· 90
2-20. 증거보전신청서-목포지원(DVR)(20140624) ····· 92
2-21. 국정원 지적사항(20130227) ····· 97
2-22. 국정원세월호증개축개입주장관련입장(2014.07.25.) ····· 102
2-23. DVR인양해군잠수기록지(2014.06.22.) ····· 103
2-24. 세월호실종자가족팽목항기자회견문 ····· 104
2-25. 교황께드리는세월호실종자가족들의서신(2014.08.14.) ····· 106
2-26. 교황이실종자가족에게보낸서신(2014.08.17.) ····· 110
2-27.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9.29.) ····· 111
2-28. 세월호특위'3자협의'결과브리핑(2014.10.01.) ····· 113
2-29. 청와대대변인의발언에대한입장(2014.05.27.) ····· 114
2-30. 잠수인력및장비축소에대한입장(2014.06.29.) ····· 115
2-31. 이주영장관복귀요구여당대표발언에대한입장(2014.08.08.) ····· 116
2-32. 20140420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118
2-33 20140428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 120
2-34 20140428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 126
2-35. 201405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 135
2-36. 20141230 현장 대응 활동 (안산) (초안) ····· 138

- 입법지원활동 -

3-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대책Ⅱ(제도적 고찰) - 특별검사제도, 국정조사청문회, 특별법제정의 비교 ····· 151
3-2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천만인 서명 용지 ····· 164

3-3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박종운) ····· 167
3-4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신현호 수정) ····· 180
3-5 140528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김택수) ····· 192
3-6 특별법 제정 소고(김희수) ····· 213
3-7 “세월호 4.16 특별법 공청회” 계획(안) ····· 223
3-8 140707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24
3-9 140707 기자회견문 ····· 240
3-10 위철환 협회장 4.16참사진실규명 및 안전사회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표문 ····· 242
3-11 140709 이명숙 부협회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 245
3-12 각 법률안 비교 컬러 도표 (박주민) ····· 247
3-13 특별법 내용 관련 우선 순위(중요도) 분석 ····· 248
3-14 피해자단체(안) vs 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 및 우선순위(중요도) ····· 251
3-15 기자간담회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 내용 (박종운) ····· 321
3-16 141031 여야 최종 합의문 ····· 333
3-17 150106_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 ····· 337

- 진상조사활동 -

4-1 진술청취카드 ····· 341
4-2 정보제공 요청문(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 348
4-3 세월호 피해자 휴대전화 복구 협조(삼성,엘지,팬택) ····· 351
4-4 증거보전 소송구조신청서 ····· 352
4-5 증거보전 소송구조결정문 ····· 356
4-6 진도VTS 증거보전신청 ····· 357
4-7 제주VTS 증거보전신청서 ····· 360
4-8 어업지도선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 363
4-9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사 설명 자료 ····· 366
4-10 ‘세월호 정식선장 신 모에 대한 질문사항’ ····· 387
4-11 ‘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 391

4-12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단장 허용범에 대한 질문사항' ····· 392
4-13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이윤철, 김영모에 대한 질문사항' ····· 394
4-14 '피고인 조기수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 395

- 형사재판지원 -

5-1. 선원사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재판진행관련) ····· 399
5-2. 선원사건 2014년 6월 10일 재판방청안내(가족용) ····· 413
5-3. 2014년 7월 3일자 보도자료 ····· 419
5-4. 선원사건 2014년 10월 6일 재판방청안내(가족용) ····· 421
5-5. 선원사건 진행정리 ····· 426
5-6.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피해자 질문사항 ····· 437

- 법률상담활동 -

6-1. 초기상담메뉴얼 ····· 443
6-2. 수정메뉴얼 ····· 445
6-3. 상담카드 ····· 447
6-4. 무료 법률지원여부에 대한 원칙 ····· 448
6-5. 상담내용정리표 ····· 449
6-6. 관련 법률검토 ····· 450
6-7. 세월초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의 협약서 전문 ····· 453
6-8. 기록단 협약서 ····· 456
6-9. 뉴스타파 협약서 ····· 459

- 언론대응활동 -

7-1. 최종_MBC세월호사건보도백서_完 ····· 465

7-2. 백서(언론) [별첨1]박상후부장인트라넷게시판글내용 ····· 511
7-3. [별첨2]오정환센터장인트라넷글모음 ····· 546
7-4. [별첨3]세월호보도공중파3사뉴스비교표 ····· 560
7-5. 방통위_재난방송요청및고시 ····· 601
7-6. KBS,MBC,방통위 기관보고 종합 질의서 ····· 606
7-7. 자유 경제원 현안해부 _004 ····· 664
7-8. [별첨10] 민실위보고서0521 ····· 681

- 가족대책위 문서 -

8-1.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 687
8-2. 보도국장 사표수리 촉구문 ····· 689
8-3. 국정원지적사항관련추가증거보전신청 ····· 690
8-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 692
8-5. 중간브리핑(VTS) ····· 695
8-6. 가족대책위_천만인 서명 용지, 취지문 ····· 698

※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514명 명단 ····· 701

Ⅰ. 개 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

제1조(목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족 대책위(이하, '피해자 등')를 위한 상담·자문 등 법률지원, 신청·고소/고발·소송 등 법률절차 대리,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책임)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이 업무협약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협력)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사항에 합의한다.

1. '대한변협' 측 협력 사항
 가.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나. 피해자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 등 법률지원
 라.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마.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등 협상 지원
 바. 피해자 등을 위한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적인 절차 및 신청·소송 지원
 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항
 아. 기타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사항

2. '가족 대책위' 측 협력 사항
 가. 단원고 학생 피해자 및 그 가족 간의 일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표성을 획득, 유지한다.
 나. 단원고 학생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전체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분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다. '대한변협'에서 파견한 'TF' 혹은 ' 특별위원회 '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참고자료 1-1

제4조(대리권) ① ‘가족대책위’를 대리하여 대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타 절차를 대리하는 명칭은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법률지원단’으로 단일화한다.
②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하는 법률 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의결에 전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세부 사항의 규정 및 협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실무적인 사항은 ‘대한변협’이 파견한 'TF' 혹은 '특별위원회'와 ‘가족대책위’ 대표단 혹은 임원진(자문위원 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대한변협’ 협회장, ‘가족대책위’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및 종료)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협약 목적의 달성,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의 발생 등을 사유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대한변협’ 협회장, ‘가족대책위’의 대표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일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 지원 계획

I. 주요 지원 가능 사항

II. 대한변호사협회 대응 경과

III.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안)

[참고 1] 변협 성명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참고 2] 변협 보도자료 :

대한변협 세월호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

* **아래의 내용은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의 논의를 종합한 것임.**
* **변협의 세월호 관련 지원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짐.**
* **지원 내용은 시스템이 아닌 변호사들의 자발성이라는 지원의 출발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의 협의 등에 의하여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으나,
  변협은 항상 '최선' 의 내용을 가감 없이 밝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적과 요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지원에 임할 것임.

참고자료 1-2

I. 주요 지원 가능 사항

(1)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안산 단원고 피해자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진도 팽목항 & 체육관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인천 등 기타 지역 피해자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 안산, 진도 등 현장 법률상담
- 24시간 이내 전화, 이메일 & 방문 법률상담
- 상담내용 중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별도로 법적 대응
- 요청 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상 법률 설명회 개최
- 요청 시 1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상시 법률상담
- 요청 시 1 가족 1 멘토 변호사 제도를 통한 장기 법률상담

(3)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 선장, 선원, 선박회사 및 해경 관계자 등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리 및 지원
- 검찰 및 경찰의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요청, 증거자료 제출 요청 시 감시, 동석 및 자문
-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고소 대리 및 지원

(4)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사고 발생 시부터 언론 및 SNS 2차 피해 내용 조사
- 취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2차 피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 언론 및 SNS글 게시자 관련 글 삭제, 사과 요구 및 법적 대응

(5)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 수색 및 구조, 지원, 의사상자 지정, 보상, 진상 규명 등 관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 정부, 선박회사, 보험회사, 교육기관 등 대상 협상 지원

(6)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 정부 지원절차 관련 감시, 실태조사, 자문 및 법적 대응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지정 등 행정절차 자문 및 법적 대응
-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관련 공익소송 지원

(7)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 촉구 및 추진
-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추진
-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학교, 지역 사회의 치유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촉구 및 참여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및 참여
-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에 근거하여 관련자 사과, 처벌 및 징계, 대안적인 시스템 제안 및 그 집행 감시

(8)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진상조사와 무관하게 드러난 혹은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자문 및 법적 대응
-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혹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Ⅱ. 대한변호사협회 대응 경과

4. 16. (수) :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 17. (목) : 변협 변호사 1명 진도 파견 및 복귀
4. 18. (금) : 변협 변호사 7명 진도 파견
4. 19. (토) - 4. 21. (월) : 변협 변호사 5명 복귀
/ 변협 변호사 2명 진도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자 가족 대표단 지원 제안 (거절됨)
4. 21. (월) : 변협 상임이사회 세월호 피해대책 TF 구성 결의
4. 22. (화) - 4. 23. (수) : 변협 변호사 4명 안산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및 보고
4. 23. (수) : 제1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회의 (위원 7명)
4. 24. (목) - 4. 27. (일) : 변협 변호사 2명 진도 파견
/ 변협 변호사 2명 진도 현장 조사, 언론 및 가족 면담 및 보고
4. 27. (일) : 변협 협회장, 부협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진도 방문
/ 변협 협회장, 부협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파견 변호사 2명 회의
4. 28. (월) : 변협 상임이사회 세월호 참사 TF 사업 계획 승인
4. 29. (화) : 제2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회의
4. 30. (수) : 제1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위원 14명, 분야별 전문가, 서울회, 경기중앙회, 여성변호사회, 민변, 기독법률가회 등)
/ 변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발표 (대국민사과, 법률 지원단 발족, 법률상담, 협상 지원, 소송 지원,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 등)
4. 30. (수) - 5. 01. (목) :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및 워크숍 신청 접수
/ 공익법률지원단 325명, 워크숍 189명 신청
5. 01. (목) : 제2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5. 02. (금) : 제3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제2차 신청 접수 개시
5. 03. (토) : 변협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 개최 (법률적인 문제 전반 (국가배상 포함), 보험관계, 정신적 상담 사례, 현장설명회,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책, 전체토론)
/ 공익법률지원단 약 100명 참가
/ 제4차 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확대회의

III.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

(1)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안산 단원고 피해자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진도 팽목항 & 체육관 대표단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 인천 등 기타 지역 피해자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1) 준비 상황

- 진도에 일주일간 파견되었던 변호사 2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음.
- 변협 TF에는 크고 작은 사건의 현장 즉각 대응, 즉 현장 기록, 관계기관 요구 사항 정리 및 이행 강제, 언론 활용 등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결합하고 있음.
- 안산 단원고 피해자 대표단의 경우, 요청 시 즉각적인 결합이 가능하고, 결합을 전후하여 서울과 안산 등에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밀착 법률 등 자문 및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진도의 경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목포지회, 인천의 경우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상황임.

2) 계획(안)

- 수시로 정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책위 혹은 피해자, 가족 등의 언론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특히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이 즉각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
- 변협 TF를 중심으로 현장파견/지원단을 구성하여 1) 대표단 자체회의 및 외부기관과의 만남 동석 자문 및 만남을 전후한 자문, 2) 대표단에서 결의된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대국민 행동 등에 대한 자문, 3) 언론 대응 자문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단과 상시적으로 결합된 자문단의 배치가 가능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도 자문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전화 응대, 1-2 시간 이내 현장 파견 등이 가능할 것임.

- 법률적인 자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의 관련 전문가 섭외 및 지원도 가능할 것임. 특히 정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한 입장 발표 및 전달 등과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의 섭외 및 안정적인 결합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장상황에 대하여 언론브리핑 전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나 불편함 해소 및 가족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력을 자문 및 지원할 계획임.

(2)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 안산, 진도 등 현장 법률상담
- 24시간 이내 전화, 이메일 & 방문 법률상담
- 상담내용 중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별도로 법적 대응
- 요청 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상 법률 설명회 개최
- 요청 시 1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상시 법률상담
- 요청 시 1 가족 1 멘토 변호사 제도를 통한 장기 법률상담

1) 준비 상황

- 4. 21. (월)부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안산지회를 중심으로 합동분향소에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5. 03. (토) 현재 약 10-15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 5. 01. (목)부터 변협 차원의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전화: (02-)2087-7883, 0103-8282-822 / 팩스 : (02-)6007-1409 / 이메일 : Lawhelp@koreanbar.or.kr) 24 시간 이내 답변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5. 03. (토) 현재 대표전화로 2건의 피해자 상담이 접수되어 상담 완료되었음.
- 진도의 경우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목포지회, 인천의 경우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상담의 홍보 및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지정이 가능한 상황임.
- 05. 01. (목) 현재 325명의 변호사가 무료 법률지원단을 신청한 상황이고, 05. 02. (금)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가 약 400-500명의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05. 03. (토) 약 100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등이 이루어졌음.

2) 계획(안)

- 세월호 참사를 원인으로 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절차 혹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어떠한 행위는 모두 그 법적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의의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을 후 있으므로 장례절차, 보상, 보험, 화물, 사망신고나 예금이나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 고용관계, 친족관계 등 세월호 참사를 원인으로 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임.
- 긴급 연락 시스템의 실질화, 법률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법률지원단 대상 추가적인 법률교육, 상담 양식의 통일 및 상담 내용의 축적 및 확산 등을 통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진상조사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 파악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도, 인천 등 합동분향소 외의 장소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계획임.
- 여러 법률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적인 질의에 답하는 설명회 형태가 개별적인 상담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 (대표단) 요청 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법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임.
- 개별적인 상담 중 여러 피해자에 걸쳐 있는 문제이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담 외에도 정부에의 문의, 보도자료의 배포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문제점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 1명의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특히, 보호대상아동, 위기가정 등 생활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임.

참고자료 1-2

(3)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 선장, 선원, 선박회사 및 해경 관계자 등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리 및 지원
- 검찰 및 경찰의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요청, 증거자료 제출 요청 시 감시, 동석 및 자문
-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지 않은 관계자에 대한 고소 대리 및 지원

1) 준비 상황

- 변협 TF에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까지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 차원에서 실질적인 준비나 대응이 없었으나 향후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관련 기록입수가 필수적이므로 형사수사·재판사건에 대한 진정 대리 형식의 피해자 조력을 변호사들이 담당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
- 현재 과거 재난 관련 사건 수사 혹은 피해자 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섭외 중에 있음.

2) 계획(안)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관련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수사, 변론 혹은 재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등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해상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 수사 혹은 재판진행상황 안내, 수사기록의 확보, 관련판례 및 법리연구, 진술서 및 참고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 검찰과의 수사협조 및 감시 등을 통하여 제대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계획임.
- 검찰 및 경찰의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요청 또는 증거자료 제출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적절한 시기, 방식 및 내용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임. 특히 생존학생이나 교사 등의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가 있을 경우, 조사 시기나 방법을 조율하고 (출장조사, 주말이나 방

과 후 조사, 심리적 안정이 된 후 전담의사의 허락 하에 시기조율 후의 조사 등), 출장 조사나 향후 법정증언 등을 대비하여 비디오 녹화를 통한 조사도 제안하고, 조사 시에 신뢰관계자인 부모나 심리상담 선생님 혹은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검찰에 요구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사방법이나 조사할 내용 및 범위를 사전에 변호사가 검찰과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에 기초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대리하거나 직접 고발할 계획임.

(4)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사고 발생 시부터 언론 및 SNS 2차 피해 내용 조사
- 취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2차 피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 언론 및 SNS글 게시자 관련 글 삭제, 사과 요구 및 법적 대응

1) 준비 상황

- 변협 TF에는 언론 기사 및 SNS글 등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하여 행정절차, 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결합하고 있음.
- 피해자 및 가족들 차원에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나 법적 대응을 진행한 바 없으며, 변협 역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하므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그러나 변협 TF는 현장 파견 활동 등을 통해 언론에 의한 오보, 원하지 않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분 노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명예훼손 사례가 다수 있었고 현재도 계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학생들이 선생님 생신 축하카드를 쓴 것을 보고 언론들이 보도를 위해 가지고 가버린다거나 학생 또는 친구인척 위장해서 가족들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취재한다거나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거나 등등의 과잉취재양

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변협 TF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2) 계획(안)

-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있어서, 한동안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취재 등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임. 따라서 항상 가족들 가까이에서 자문이 제공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협 TF에서도 별도의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즉 기존 및 추가 2차 피해 사례 수집 및 증거 확보를 통하여 보도 내용이나 사진, 게시글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요구, 사과방송 및 기사 요구,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활동을 지원 및 진행할 계획임.
-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오보 및 지나친 취재경쟁이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자협회나 언론사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나 학교 측,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취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에 대한 취재 제한, 학교출입통제와 학교장 허가 등의 조치와 기타 다양한 학교 및 교사, 학생들의 보호 장치를 위한 자문 및 조언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밀착하여 수행할 계획임.

(5)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 수색 및 구조, 지원, 의사상자 지정, 보상, 진상 규명 등 관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 정부, 선박회사, 보험회사, 교육기관 등 대상 협상 지원

1) 준비 상황

- 변협에서는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있는 상황임.
- 변협 TF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와 협력하며 활동하여 온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변협 자체적으로도 협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임.

-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변협이 직접 대정부 등 협상을 지원하는 것은 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별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② 공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변협이 나섬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임.

2) 계획(안)

- 일상적인 대정부 접촉은 현장파견/지원 변호사단이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협상 전문, 다양한 법률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별도의 협상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내외적 불신, 정부의 부실한 대응 등 사건 수습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 분노가 더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따라서 수색 및 구조, 지원, 의사상자 지정, 보상, 진상 규명 등과 관련한 대정부 협상에서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정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압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변협 TF는 미리부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관련 전문가들을 가능한 빨리 소집하여 착실하게 준비를 진행할 예정임.
-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쉽게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가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피해자 측 집단의 개별적 협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협 협상지원단에서는 각각의 다른 의견이 오해나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 대정부 협상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등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선박회사, 보험회사, 교육기관 등도 피해자의 손해나 2차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수행해 나가고 있음.

(6)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참고자료 1-2

- 정부 지원절차 관련 감시, 실태조사, 자문 및 법적 대응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지정 등 행정절차 자문 및 법적 대응
-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관련 공익소송 지원

1) 준비 상황

- 변협 TF는 천안함 사건, 서해페리호 사건 등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수집 및 검토 등 소송, 특히 국가배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수집·분석을 시작하였음.
-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유사 사건의 사건 수습과정에 대해서는 이에 관여하였던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자료와 평가 등을 수집하고 있음.
- 장례비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족에서 돌아갈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 (장례비 미지급) ⇒ 정부의 부정확한 발표 (“장례비 전액 정부 지원”) ⇒ 이에 따른 유족들의 혼란 (국가재정 절약을 위한 검소한 장례, 장례비의 장학금 기탁) ⇒ 언론과 대통령의 “검소한 장례” 칭송 (“국가재정 절약의 예“) ⇒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무회의의 의결 (”장례비 국가 부담“) 등 사건 수습 과정에서도 사건의 발생 및 수색,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에 변협TF는 주목하고 있고 적절한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2) 계획(안)

- 행정절차나 민원처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된 정부 및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함, 불성실함이나 무성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원할 계획임.
- 기타 다양한 기관이나 상대방에 대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학교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만,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주로는 법률상담을 통해 관련 사례들이 접수되고, 상담 피해자의 요청 혹은 변협 TF 자체 조사 등에 의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겠지만, 가족 대표단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더욱 체계적,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 국가배상 등 소송, 의사상자 혹은 국가유공자 지정 등 행정절차에 관해서도 우선적으로는 개별 피해자들이 변협에 요청하는 자문에 응하는 형태를 띠겠지만 피해자 가족들(대표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

(7)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 촉구 및 추진**
-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추진**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에서부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학교, 지역 사회의 치유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촉구 및 참여**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및 참여**
-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에 근거하여 관련자 사과, 처벌 및 징계, 대안적인 시스템 제안 및 그 집행 감시**

1) 준비 상황

- 한국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성역 없는 포괄적, 체계적, 장기적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선례가 없음.
- 변협도 성명서를 통하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및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한 상황임.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건 발생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던 국회의 진상조사(여당의 특별위원회 내지 야당의 국정조사안)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임.
- 한편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중립성·객관성에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

분하고 통상 40~6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수사미진에 따른 진실 은폐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특검 요구는 정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조기에 사안을 종결짓는 생색내기용 카드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음.

-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도 존재하지만 정부, 국회, 민간의 진상조사 모두 부분적인 진상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이 모든 흐름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임.

2) 계획(안)

- 미국 9/11 진상조사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도 그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그 조사대상도 대통령에서부터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사의 내용범위도 단지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침몰 전까지의 구조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① 사고 발생을 전후한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대응, 구조 및 수색과정에서의 정부기관 및 언론의 대응,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 ③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④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및 대책, ⑤ 경찰과 검찰의 수사, ⑥ 피해자, 피해자 가족, 학교, 지역 사회의 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협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표단)을 도와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진상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국내에 적절한 모범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유사 사례의 원인, 수습 과정, 진상조사 및 결과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을 조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한편 향후 진상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대표단)을 도와 이미 일어난 일들과 하루하루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그

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평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할 계획임.
- 당장에서는 진상조사단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 등에 대하여 기존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분석함을 통하여 적절한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에 공개된 정보 외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8)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진상조사와 무관하게 드러난 혹은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자문 및 법적 대응
-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혹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1) 준비 상황

- 정부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1-2개월 내에 '혁명적 발상'에 근거한 '국가 개조' 수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재까지도 정부의 부실 대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빠른 시일 안에 평가되고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지적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이번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와 관행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평가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협 TF의 인식임.
- 변협은 향후 진상조사단에 합류할 변호사들을 별도고 모집하여 사고 이전(예방)과 사고 이후(대응)에 있어서 기존 법제와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음.

참고자료 1-2

2) 계획(안)

- 언론이나 정부, 국회 차원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법령과 관행의 개선 논의를 종합하는 작업은 포괄적인 진상조사 전이라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할 계획임.
- 변협은 진상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이 사건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할 예정임. 뿐만 아니라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은 물론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다.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같이 법과 시스템에 따른 법치가 상실되고 책임 회피와 혼란만이 난무하는 정부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제 자리를 지키며 우리 사회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팽목항을 지키고 있으며, 구조대원들 또한 생명을 걸고 구조와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진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며 아픔을 나누고 있고, 전국의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까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변호사에게 지워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함을 고백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통렬히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사고 이후 대한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각 대표단을 진도로 파견했다. 대한변협은 파견된 변호사들로부터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의 생활・생계・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도 파악했다. 물론 대

참고자료 1-2

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조용히 진도를 방문하여 예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변협이 해야 할 의무 중 가장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진상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통해 대한변협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급선무이고 나아가 정당한 피해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은 사고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재난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여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협상과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둘째,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법률의 제정과 개정,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2014. 4. 30.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위 철 환

[참고 2]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대한변협 세월호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

-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연락처 및 워크샵 개최 공지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TF의 의결에 따라 4. 30.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총 325명 지원)하였으며, 5. 3.(토)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중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 설명, 보험·국가배상 등 법률적 문제, 정신적 상담 사례, 2차 피해예방 및 대응책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합니다(일정 첨부).

또한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 등의 법률적 조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를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	
전용 전화	(02) 2087-7883 / 0103-8282-822
전용 팩스	(02) 6007-1490
전용 이메일	Lawhelp@koreanbar.or.kr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의 모든 법률상담은 위 전용 긴급연락처를 통하여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무상으로 답변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협상과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주위에 피해 유가족, 특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중 일반인 유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의 존재 및 연락처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무리 작은 요청이라도 사력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5. 2.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공익법률지원단 제1차 워크샵 일정표

1. 일 시 : 2014. 5. 3.(토)10:00~14:3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4층
3.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4. 일 정

시 간	주 제	발표자(소 속)
10:00 ~ 10:10	개 회 식	
10:10 ~ 10:50	**법률적인 문제 전반 (국가배상 포함)**	신현호 변호사
10:50 ~ 11:00	질의응답	
11:00 ~ 11:40	**보험관계**	박종운 변호사
11:40 ~ 11:50	질의응답	
11:50 ~ 12:10	휴식시간(20분, 간식 제공)	
12:10 ~ 12:50	**정신적 상담 사례**	정유숙 교수 (삼성의료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12:50 ~ 13:00	질의응답	
13:00 ~ 13:40	**현장설명회**	황필규・배의철 변호사
13:40 ~ 14:10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책**	이명숙 변호사
14:10 ~ 14:30	전체토론	

참고자료 1-4

공익법률지원단 위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님!

현재까지 공익법률지원단에 총 503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공익법률지원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TF)는 ① 현장대응/지원팀, ② 법률상담/지원팀, ③ 진상조사/규명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지난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안산, 인천, 광주, 진도에 지원팀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5월 26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 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총괄지원팀과 법률상담지원단, 현장대응지원단, 진상조사규명단, 법제도 개선단 등 4개의 지원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TF 위원 10여분의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503분,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월호 특위에서는 2014. 5. 31.(토)까지 공익법률지원단에 자원하신 분들 중에서 구체적인 각 팀 활동을 위한 2차 지원을 받습니다(중복 지원 가능).

먼저,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의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kba1404)를 개설하였으니 지원하신 분들께서는 필히 카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카페에서의 공지를 통해 활동 그룹별로 상시 추가적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5. 3.(토)에 이어 제2차 워크샵이 추가 보완된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5. 31.(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공익법률지원단 소위원회 활동 위원 모집(1차)에 지원하신 분들께서는 추가된 항목을 고려하여 다시 지원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개인정보
  1) 이　름:
  2) 소속회:

1-1. 지역별 현장 법률상담 자원하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현장 법률상담 지원팀)

팀을 이루어 각자 몇 시간씩 현장에서 교대로 상주하시면서, 안산, 인천에서는 피해자 법률상담 및 절차 지원을, 진도 팽목항에서는 현장 상황 모니터링 및 실종자 가족 지원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 내용에 따라 신청서/소장/고소장 등의 문건을 작성하거나, 법률구조 요건에 따라 신청/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나아가 가족분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속회와 관계없이 특히,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장 지원 가능 여부는?
1) 안산 현장 지원
2) 인천 현장 지원
3) 진도 팽목항 현장 지원
4) 참여하지 않음

1-2. (지원하신다면) 활동 가능하신 요일 또는 날짜는?

2-1. 피해자 가족별 일대일 매칭 전담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가족 특히 자녀를 잃고 망연자실해 계시는 피해자 가족에게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희망과 버팀목이 되어주실 마음 따뜻한 변호사님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일대일 전담 변호사팀)

참고자료 1-4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2-2. (참여하신다면) 특별히 매칭을 원하시는 지역이나 가족이 있으면 표기해 주셔요.

---

3.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위하여 자료조사・입법례 등의 연구를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30분 이내 선착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도 개선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4.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팀에 지원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20명 내외). 언론의 오보,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감시, 정정 보도 요청과 향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등을 맡게 되실 예정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5. 법률상담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법률상담메뉴얼 작성팀) 선진국은 재난시 신속히 지원・가능한 법률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민사, 형사, 가족관계, 보험, 국가배상, 해상 관련법률,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등 관련 분야에 능하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6. 세월호 참사 백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실 변호사님 지원을 받습니다. 백서는 기록으로 남는 사건일지로서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다. 참을성 있고 문서의 분류와 정리에 능하신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백서작업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7.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대처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실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재난대처 매뉴얼팀)
금번 세월호 사태에서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투입되었으나 명확한 재난대처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우리 대한변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러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국가적, 사회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한변협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한변협 종합 재난대처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측 입장에서 법률지원, 대리하실 변호사분을 모집합니다. (수사/재판 지원팀)
우선 6월 10일경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조원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 저희 세월호 특위에서는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수사/재판 기록 확보, 진상조사 결과 발견된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

9.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현재 피해자 및 가족 면담, 포렌식 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위 사항들과 더불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도 진행될 예정이고, 각자 가능하신 시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시게 됩니다. (진상조사팀)

1) 참여 희망
2) 참여하지 않음

세월호 참사와 변호사단의 역할과 운영 토론

2014. 5. 3.

대한변협 세월호 지원 TF

이명숙 변호사

(세월호TF 공동위원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1

공익법률지원단의 역할 개관

현장파견 변호사단
법률지원 변호사단
진상조사 변호사단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력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2

진도 현장상황 모니터링

1.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현장 모니터링은 지속되어야 함
2. 특히 구조수색에서 인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정부 및 사회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3. 대한변협의 법률지원단이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가족대책위원회 및 실종자 가족들이 대한변협의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4. 현장결합은 실종자 가족들과의 '신뢰' 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5. 인양 때까지 현장에서 '드러내지 않고'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여야 함
6.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지 않는 현장 상황의 정확한 기록과 보고
7. 실종자 가족들과 유족, 피해자,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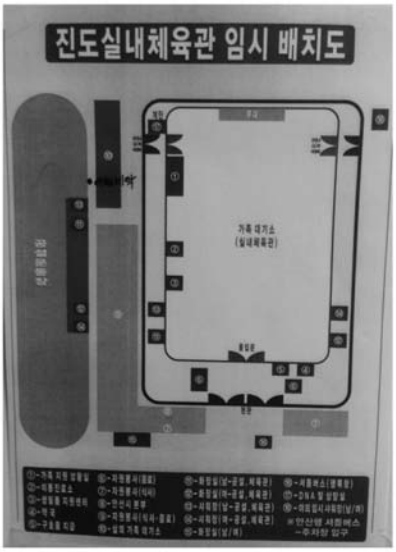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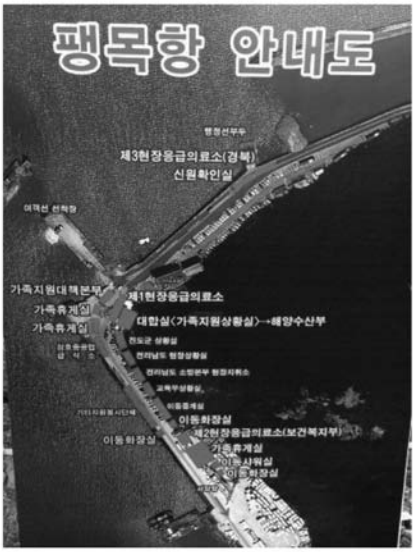
현장파견 변호사단 구성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지원, 합류

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장파견 변호사단을 구성
2. 현장파견 변호사단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
3. 순번을 정하여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에 각 1인씩 상주 (Rotation)
4. 파견을 마친 변호사는 현장파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5. 보고서를 접수한 대한변협, 광주회는 변호사에게 실비 + 수당 지원
6. 워크샵 이후 현장파견 신청을 받아 오리엔테이션 후 현장 배치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4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5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

1. **24시간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핫라인이 공지되면서 (☎ 02-2087-7883) 다수의 상담에 적확한 대책과 답변을 제시하여야 함**
2. **세월호 피해자 상담전화는 24시간 가동되며, 접수 후 변호사의 답변 내용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답변하되 신뢰를 위해 가급적 찾아뵙도록 함
3.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변호사단' 을 별도 구성하여야 할 필요**
4. 더 나아가 가족과 신뢰를 확보한 해당 상담 변호사는 '1가족 1변호사'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회복적 관점의 활동을 펼치도록 함
5. **변호사는 상담 내용 정리 및 자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데이터화하여 축적·공유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자문 수당을 지급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6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피해자가 흩어져 있는 각 지방회와 유기적 협조

1. **가족과의 신뢰는 이후 협상, 소송지원 등 사건 후속 대책으로 연결되는 핵심고리이므로 사소한 법률상담 내용이라도 상세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함** → 신뢰의 측면에서,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할 것
2. 정부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일 경우,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정부의 책임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중앙에서 수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책 제시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함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7

주요 분야별 담당자 목록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 현장 관련)

수색관련

① 발견된 희생자의 신원에 대한 문의 – 해경 송민웅 계장 010-5614-2733
② 현재 투입인원, 장비에 대한 문의 – 해경 강성일 실장 010-4611-8079 (인원), 신광운 계장 010-2621-3715 (장비)
③ 수중수색진행(선내 진입상황 등)에 대한 문의 – 해경 양종타 계장 010-2084-2000
④ 민간 잠수사 관련 문의 – 해경 서문종 경위(목포해경) 010-6440-7892
⑤ 희생자 유실 조치사항 관련 문의 – 해경 양종타 계장 010-2084-2000
⑥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 환경개선에 관한 문의 – 전남도 신상식 계장 010-6616-2844, 차제남 계장 010-9450-6879

희생자 신원 확인 관련

① DNA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 국과수 이원우 010-7621-0812
② 희생자 인도(가인도, 확정인도 기준 등)에 대한 문의 – 법무부 신호철 부장검사 010-5245-7328, 김정환 계장 010-9769-9762
③ 부검(진행상황, 결과 등) 관련 문의 – 국과수 조성진 010-9318-5602
④ 무연고자의 처리에 관한 문의 – 해경 지국현 계장 010-8759-8783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8

주요 분야별 담당자 목록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 지원

① 장례비 지원 기준 및 한도에 관한 문의 – 안행부 정구창 과장 010-3857-9969, 중앙지원단 02-2100-3686

② 부상자 치료 및 장례 등을 위해 이용 가능한 병원, 장례식장, 장묘시설 등 안내 등 – 복지부 김주영 과장 010-3201-1514, 김미경 사무관 010-8965-2238

③ 장례식장까지 이송에 대한 문의 – 방재청 임동권 010-3528-4923, 김문용 010-8601-0119 (헬기수송기 관련: 국방부 우재현 중령 010-5084-7914, 이의수 중령 010-5085-2362, 구급차 관련: 방재청 임동권 010-3528-4923, 김문용 010-8601-0119, 상조회 차량 관련: 복지부 김주영 과장 010-3201-1514, 김미경 사무관 010-8965-2238, 가족이동(택시): 안산시 손상경 010-8881-7109, 061-543-8972)

④ 분향소 및 영결식 – 교육부 오형균 사무관 010-3795-0922(분향소), 정현욱 서기관 010-3312-0576(영결식)

⑤ 일반인 (생존자 중 학생, 교사가 아닌 자) 지원 관련 – 심리지원: 복지부 이중규 과장 010-9045-2634, 박계성 사무관 010-5319-7578, 문상준 사무관 010-8955-2479, 부상자 치료 지원 기준 및 절차 문의: 복지부 고두경 과장 02-3270-6789, 010-8787-6921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9

주요 분야별 담당자 목록 (후속조치 관련)

후속조치 관련

① 희생자 보상관련 문의 – 해수부 류중빈 과장 010-8761-2382, 김영권 주무관 010-8004-4479

② 긴급가족 돌봄 지원 관련 – 여성부 윤강모 010-2257-9398, 오동훈 010-5567-7675

③ 기름 방제 관련 문의 – 해경 김형만 과장 010-6800-1263

④ 선박 인양 준비 관련 문의 – 해경 박종철 과장 010-7649-1042

⑤ 정부 보도자료 등 언론관련 문의 – 해수부 김창후 주무관 010-5676-9946, 전재훈 주무관 010-3116-8097

⑥ 교통 소통 및 주차장 이용 등 관련 문의 – 경찰청 조장섭 경정 010-2502-1530

⑦ 유언비어 신고 및 단속 문의 – 경찰청 나홍철 경정 010-8588-0794

◈ 본 연락처에 없는 사항이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이호찬 사무관 (010-4046-5389), 지윤식 주무관 (010-9622-9629)에게 연락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10

진상조사 변호사단 구성

1. 재난의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소재의 규명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법률가 본연의 역할**
2. **사고원인 (예방), 구조과정 (대응)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고 정보공개를 촉구할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목록화
3. **진상조사 보고서는 추후 국가배상시 입증을 위한 자료가 되므로 소송지원과 연결되며, 법제의 개선을 위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
4. **생존자, 유족, 전문가 집단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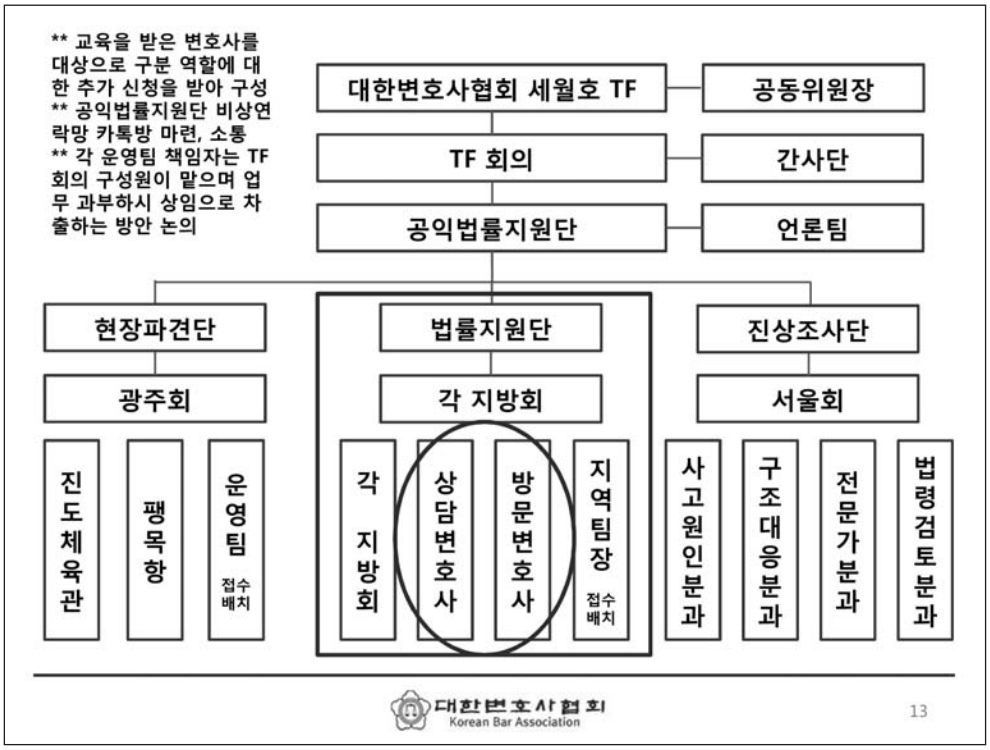
진상조사 변호사단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단 합류

1. **911, 카트리나 보고서 등 해외사례 참조**
2. **먼저 사고원인 / 구조과정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자료를 모두 비교, 분석하여 조사가 필요한 쟁점을 정리**
3. **생존자, 유족, 전문가 집단 등의 자문을 통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쟁점을 추출**
4. **지방선거, 월드컵 국면으로 사안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의 수사방향을 견인**
5. 추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을 확장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12

참고자료 1-5



법률지원단의 핵심은 상담 접수 후 24시간 내에 답변 및 대응 - 세부전략

피해자의 수: 피해자 가족 약 300명, 생존자 및 기타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400명을 예상
변호사의 수: 약 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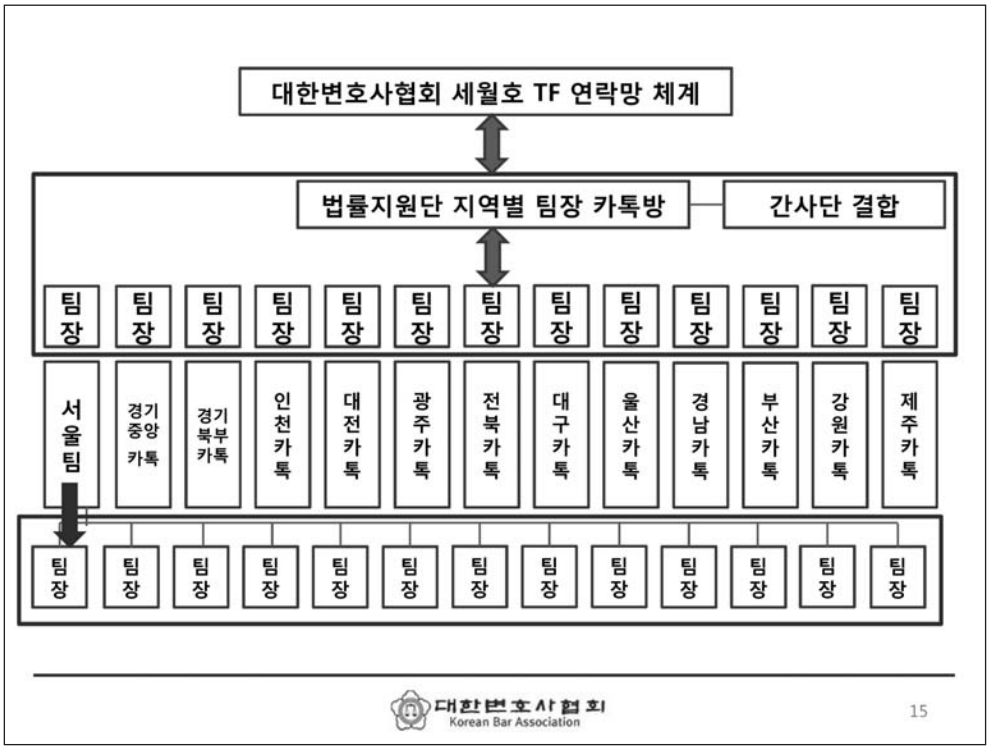
1. 지원한 약 400여명의 변호사를 지역별, 권역별로 30여개 팀으로 셋팅하여 각 팀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약 15인 정도씩의 팀) 팀별로 방을 만들고 팀장이 중앙을 통해 접수한 상담에 관해 팀원들에게 상담 및 방문을 제안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수렴하는 시스템

2. 서울지역은 중앙에서 팀장 카톡방을 별도 마련하여 소통(서울팀장 김영주), 경기중앙 2개조는 경기중앙에서 담당(경기중앙팀장 오지원), 기타 각 회에서는 회별로 1명씩의 팀장 선임을 요청하여 경기북부,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구, 전북, 대전, 제주, 강원, 경남 각 팀장이 팀원들과 카톡으로 소통

3. 각 지역별 팀장 13명이 별도 카톡방을 만들고, 이 카톡방에 TF 중앙에서 황필규, 배의철, 김정욱, 황수철 등 합류하여 지원단 상시 대응 체계를 구성

서울 (222명) – 15개조
경기중앙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7명) – 2개 조
경기북부 1 1 1 1 1 1 (6명) – 1개조
광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명) – 1개조
부산 1 1 1 1 1 1 1 (7명) – 1개조
인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명) – 1개조
울산 1 1 1 1 (4명) – 1개조
대구 1 1 (2명) – 1개조
전북 1 1 1 1 1 1 1 1 1 (9명) – 1개조
대전 1 1 1 1 1 1 1 1 (8명) – 1개조
제주 1 (1명) – 1개조
강원 1 1 (2명) – 1개조
경남 1 1 1 1 1 1 (6명) – 1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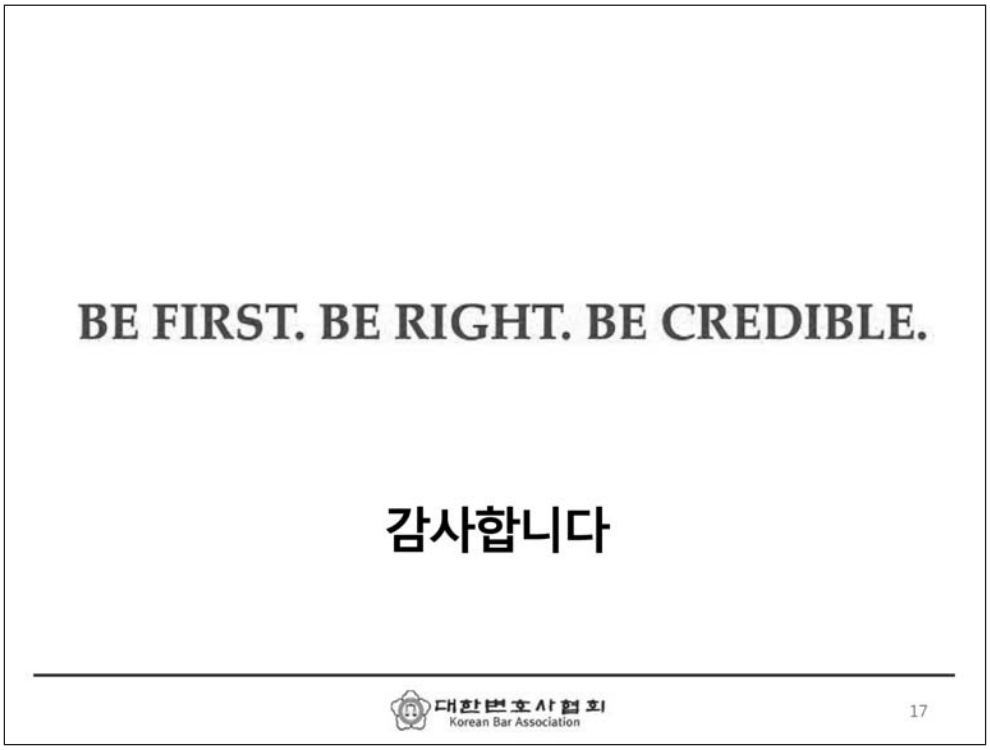
14



공익법률지원단의 역할 및 과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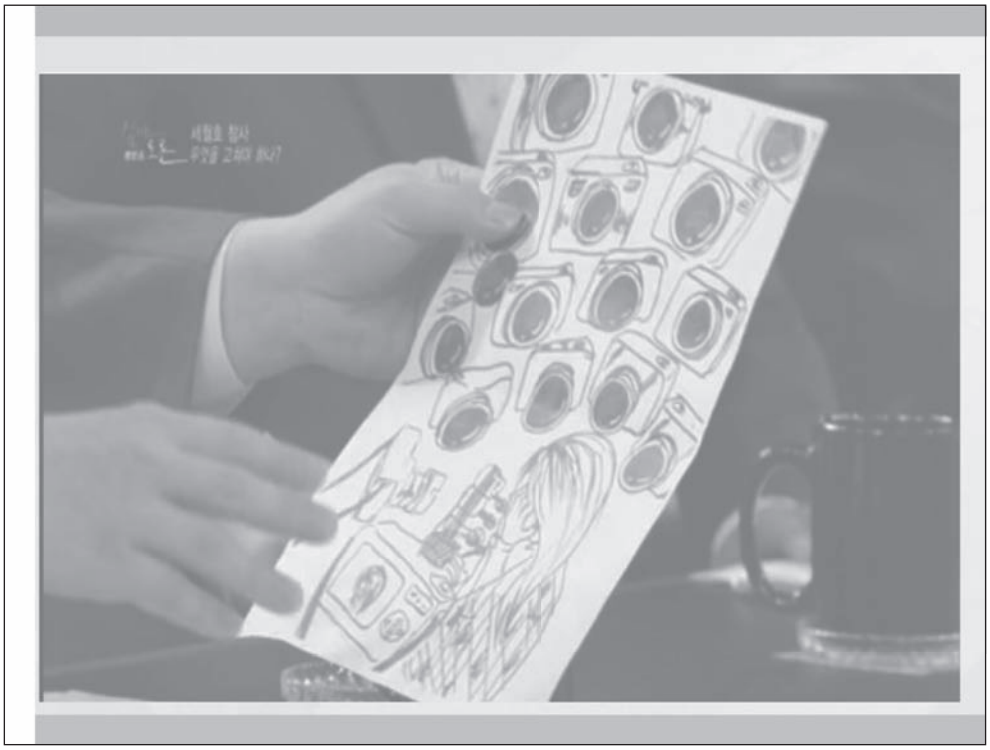
그 밖에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

참고자료 1-5


BE FIRST. BE RIGHT. BE CREDIBLE.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17

세월호 참사 2차피해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명숙



참고자료 1-6

1.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세월호 침몰사고 오보 및 부적절한 보도 사례	
4월16일	오전 YTN 등 대다수 언론 '전원 구조' 오보
	오전 MBN '뉴스공감' 사고와 관련 없는 시신 운구장면 방송
	오전 JTBC '세월호' 침몰사고 뉴스특보' 중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인터뷰해 논란이 됨. 손석희 사장 '뉴스 9'에서 사과
	오후1시 조선닷컴 '세월호 보험, 학생들은 동부화재 보험, 여객선은 메리츠 선박보험 가입' 보도하며 보험금 언급. 이후 수십 개의 보험 관련 기사 쏟아져 나옴
	오후2시 대다수 언론 '368명 구조' 오보
	오후2시 이투데이 'SKT, 긴급 구호품 제공, 임시 기지국 증설 "잘 생겼다 잘 생겼다~"' 보도
	오후2시 이투데이 '타이타닉·포세이돈 등 선박사고 다룬 영화는' 보도. 이후 타이타닉, 포세이돈 등 선박사고 다룬 영화 소개 기사 등장
	오후3시 뉴시스 '안산단원고 숨진 고교생 책상' 기사에서 숨진 학생 일기장 공개
	오후3시 대다수 언론 '180명 구조' 오보. 이후 수 차례 수정 끝에 탑승인원 476명 중 생존자 174명으로 잠정 집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보
	오후4시 일간스포츠 '여객선 침몰로 '울음바다'…음악방송 결방되나' 보도. 이후 음악방송과 세월호 묶은 기사 등장
	오후5시 MBC '특집 이브닝뉴스' '2달 전 안전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 리포트 중 보험료 언급
	오후5시 SBS 가족 없이 홀로 남은 6세 여아와의 인터뷰 영상 보도
	석간 문화일보, 내일신문 '전원 구조' 내용 실었다가 17일자에 사과문 게재.

4월17일	오전7시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 사고현장 연결 중 욕설 여과 없이 방송
	오후 YTN '공기주입 시작' 오보
4월18일	오전6시 MBN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홍모씨와 생방송 인터뷰했으나 인터뷰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짐 이날 오후 이동원 보도국장이 사과
	오전 YTN 등 대다수 언론 '잠수부들 선내 진입 성공' 오보
	오후4시30분 KBS '구조당국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 오보
4월20일	오전 SBS '뉴스특보-여객선 세월호 침몰' 방송 중 기자와 출연자의 웃는 모습 노출
4월23일	채널A 등 대다수 언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봉변' 오보
	동아일보 등 대다수 언론 '시신들 손가락 골절' 보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손가락이 골절된 희생자는 없었다"고 밝혀

<참고>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관련 문제

1. 나주 아동 성폭행 사건

세 언론사에 대해 각 언론사별로 2500만원, 3000만원, 2300만원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하고, 관련 기사들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

피해자의 집 위치를 위성 사진이나 외부 사진 등으로 드러내거나, 집 내부를 찍은 사진 · 영상을 보도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자 불법 행위라고 판단.

피해 어린이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과 그림일기장 같은 개인기록물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도 비록 모자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이자 불법 행위로 판단.

2. 칠곡 아동학대 사건

3. 기타 사건에서의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2. 진도체육관에서의 2차 피해



2014. 4. 세월호 참사



2011. 4. 일본 지진 재난당시

- 다른 가족들의 분노에 직접 노출되며 고통이 배가
- 실종자 가족들 건강과 인권 고려해 개인 공간 마련 필요
- 24시간 불 켜진 상태로 생활
- 외부인 통제가 어려워 절도 사건 발생
- 22일 해양수산부의 칸막이 설치 약속 현재까지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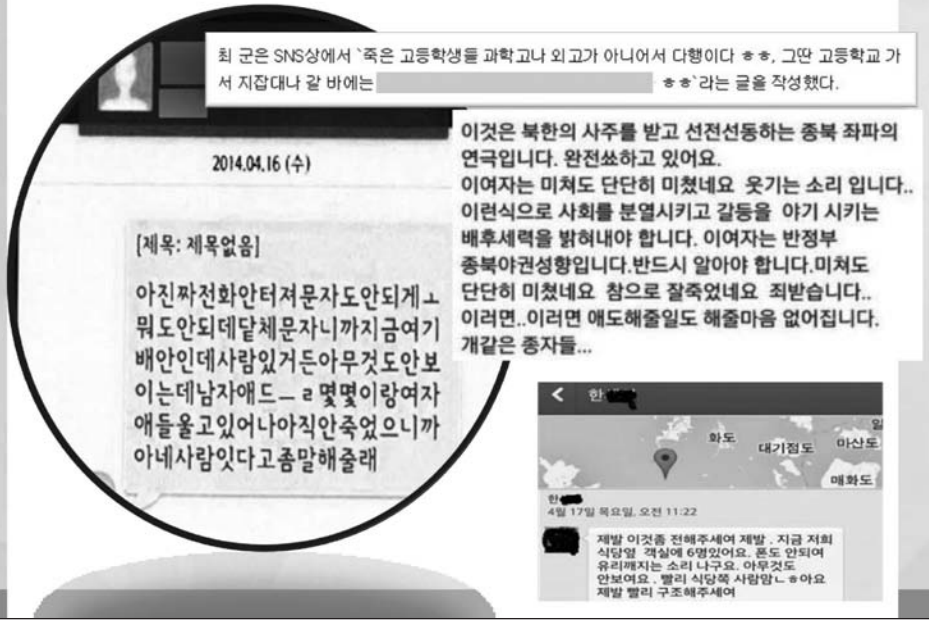
3. 유가족들의 생계곤란 등 2차피해

- 경기 안산시 유가족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115명에게 지급
- 안산시 거주 유가족들에게 안내 필요
- 안산시 통합사례관리담당 031-481-2832
- 다른 지역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필요
- 무성의한 장례절차에 대한 불만

4. 일반인 유가족들의 2차 피해

- 현재 대부분의 지원과 애도가 단원고 학생들에 집중
- 일반인 승객도 100명 넘게 탑승
- 학생들 구하다가 숨진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19세, 20세)에 대해 장례비 지원 거부
- 해당시 재난관련 비용으로 긴급지원할 필요성

5. SNS에서의 2차 피해



- SNS 허위 글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현재 수사 진행 중
-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스미싱 문자도 기승
-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10대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선행될 필요성

6. 단원고 교사, 생존학생, 재학생의 2차 피해

-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무기력함
- 선후배 학생들의 사망으로 인한 트라우마
- 정상적인 교육에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언론사의 해당 고교 접근을 제한할 필요성

7. 세월호 기름 유출



- 세월호에 기름 20만 3000리터 탑재, 현재 유출 중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피해어민에게 1800억 보상
- 태안 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2014. 1. 국비 1068억 투입
- 현재 어민 20명이 낚싯배를 타고 기름을 걷어내는 상황
- 어민들의 2차 피해 관련 보상문제 법률지원 필요

8. 잠수부의 2차 피해



- 천안함 사태 故 한주호 준위 잠수병으로 순직
- 2014. 4. 23.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부 10명이 마비 증세, 피로 누적 등으로 감압치료
- 2014. 5. 2. 민간 잠수부 1명 의식 잃고 쓰러져 긴급후송
- 잠수부들의 부상과 관련한 보상문제 법률지원 필요

9. 구원파 연예인 명예훼손

- 유병언 최측근인 국제영상 대표이사 탤런트 전모씨 소환
- 유병언과 무관한 구원파 연예인 실명 인터넷상 공개
-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 구원파 계열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

10. 선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 생존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 현재 변호사들이 선원에 대한 변호를 꺼리는 상황
- 선원 가족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언론사가 취재를 시도하는 등 선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 선원 가족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 필요성

11.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변호사들의 역할



감사합니다

Ⅱ. 현장지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한변협 관련 활동 제안

2014. 4. 21.
황필규, 배의철

(1) 변협이 처음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난 대응 법률 지원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꾀해야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현장 법률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 등 공익소송,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폐 등의 활동 진행
- 현장 법률지원의 경우, (피해자 요청 시) (교대로)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실행 (1인 기준 예산 : 왕복 교통 10만 + 숙박교통 10만/일 + 법률지원 10만/일)

(2) 변협은 자연 재해나 인재와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 차원의 구호, 의료 지원 분야와는 달리 아무런 협회 차원의 조직, 규정 또는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특별위원회 혹은 산하 TF, 기존 위원회의 소위원회 혹은 산하 TF로 변협 내 재난대응단위를 임시 구성
- 변협 내 재난대응단위의 임시 근거 규정 마련
-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임시 재난대응단위 가동 후 조직 및 규정 정비

(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협회 회원들의 뒤늦은 현장 파견/결합이 이루어졌지만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태안기름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국내 경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조사하여 변협 차원의 재난긴급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4) 대형 자연 재해나 인재의 경우, 정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바, 진상조사, 국가배상 등의 공익소송, 법령, 지침의 개선 및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가족)이 참가하는 대통령 직속 혹은 변협 차원의 진상조

참고자료 2-1

사단을 구성,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 원고를 모집하여 공익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
- 정부의 재난 대응 관련 법제 및 관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5) 재난 발생 시 정부와의 협력. 민간 차원의 공동협력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호보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활동의 모범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정부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MOU 체결 및 실시
- 다른 민간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변협의 법률지원 활동이 의협,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의 의료보건 지원활동 등과 결합하여 포괄적인 민간지원 시스템 구축 모색

[참고자료] 외국 사례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변호사단체의 관련 조직, 규정 및 활동 일반

미국변호사협회 (ABA) 내에는 **재해대응예방특별위원회**가 있어 자연 재해나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대형 재해가 일어날 때 자주 묻는 질문, 지역 내 연락 가능한 변호사의 연락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등의 정보를 담은 법률 지원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있을 때, 정부 관계자나 군 관계자에 법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긴급 전화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ABA 내 **청년변호사위원회**는 재해가 있을 때에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주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이나 사업체를 위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ABA는 2005년 카트리나 직후 소위 '카트리나 규칙', 즉 대형재난결정에 따른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모범재판규정이라고 하는 법률 지원을 위한 ABA차원의 참고자료를 마련했는데, 이는 재해 발생 시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소속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도 법률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등 기술적 요소를 담고 있는 수칙으로, 현재 미국 약 10개 주 법원이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ABA는 카트리나 이후 연방 긴급상황 관리처와 MOU를 맺어,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7년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리하기 위한 TF가 마련되어 위기 상황에서 법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한 자료를 출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현장 파견 / 지원 활동

Equal Justice Works(미국 법률공익활동 단체)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10명의 변호사를 현지로 파견하여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 9/11 등 크고 작은 재난이나 테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변호사단체나 로펌 차원에서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가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3) 특정 재난 관련 맞춤형 매뉴얼 발행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이후 2007년, 미국 대형로펌인 Morrison & Foerster LLP가 지방 변호사회와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협력해 출판한 72페이지 상당의 핸드북은 참고할만한 자료로 보입니다. 이 핸드북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체 등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변호사들이 실제로 법률 지원을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담겨, 피해자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권리나 보상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재난 관련 입법 & 기본계획 마련

2005년 12월 박싱데이 쓰나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UNDP가 주도한 재해관리 관련법 마련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UNDP는 파트너 NGO들과 변호사들과 함께 재해관리법 초안을 작성하고 몇 차례 워크샵을 통한 국회의원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재해관리법이 마련되자 이후에는 다른 단체들과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해/ 위기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해 위기 감소를 통한 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 진상조사 및 공익소송 - 국가배상 등

2010년 칠레 광산 사고의 경우, 광산주와 칠레 정부 광산부의 규제팀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진상 규명을 위해 3년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때 광산업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전문가 의견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산장례식장 순회보고(20140428)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

1. 활동 내용

○ 4. 21. 진도에서 복귀한 후 4. 22.(월) ~ 4. 23.(화) 안산지역을 순회

○ 4. 22. 김영훈 사무총장, 배의철 변호사 (안산영광교회 면담 및 장례식장)
4. 23. 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변호사 (장례식장)

2. 안산 장례식장 등 현황

○ TF 1차 회의를 통해 3교대(오전/오후/저녁)로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 4월 23일 배의철 변호사가, 4월 24일 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순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안산지역 기자리스트는 이명숙 변호사가 확보하기로 함.

○ 현재 안산은 12곳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시 합동분향소가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 추후 안산화랑유원지에 공식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

○ 4월 23일 저녁 배의철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순회 방문[1]하였을 당시 심리상담센터 부스가 장례식장마다 설치되어 있고, 목걸이 명찰을 한 다수의 지원인원들이

1) 제일장례식장,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한도병원, 사랑의 병원, 한사랑 병원, 온누리 병원, 단원 병원의 경우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행정부 사무관과 대화를 나눔. 동안산 병원, 군자 장례식장, 세하병원은 도교육청, 안산시, 안전행정부 인원이 상주하는지를 파악.

상주하여 있었으나, 여성가족부 등의 전시행정이 언론을 통해 크게 문제가 된 이후 4월 24일 저녁 재방문(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변호사) 시에는 심리상담센터 등의 부스를 철수하고 명찰을 패용한 지원인원들도 철수하였음. 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상주할 경우 공개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유족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변협 명찰을 달고 공개적으로 상주하거나 부스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됨

○ 현장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는 슬픔과 시신 확인 등 혼란이 공존하며 유족들의 분노와 항의로 나타나는 상황임. 따라서 유족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현재 기대하기 힘들며 장례식장 현장에서의 항의를 도교육청과 안산시청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음.

○ 현장 장례지원체계는 4월 22일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비용 보증문제, 시신 인도 문제, 유족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4월 23일부터는 지원체계가 완성되면서 유족에 의해 제기되는 장례절차의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있음. (즉 유족 장례절차는 안산시청에 종합지원본부가 마련되어 있고, 본부에 안산시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지원체계를 꾸려 협력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현장에는 도교육청 장학사 2명, 안산시청 공무원 1인이 장례절차를 비롯한 유족의 요청을 24시간 상주하며 적극 지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를 대표하여 안전행정부 사무관급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추가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그러나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문제는 상존하여서 제일장례식장의 경우 언론의 입장을 일체 통제하고 있으며, 고대 안산병원의 경우에는 시신 검안 과정에서 시신을 예를 갖추어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유족의 명예감정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간헐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안산 지역에 변호사들을 현장 배치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며, 만약 현장배치를 한다하더라도 비공개로 최대한 조심하며 고대 안산병원 등 대형병원

로비에 1-2인 정도만 상주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한변협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임.

3. 유족 지원을 위한 상황, 판단

○ 안산 영광교회를 통해 유족 1인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안산지역에서는 '유가족 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2차례 유족 모임을 가진 바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도에서 2차례 대표자가 바뀌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대책본부' 가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책위원회의 2명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결정하고 있어 진도에서 유족 장례 등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

○ 그러나 안산 등에서 장례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여 이를 진도의 실종자대책위원회에서 모두 취합하여 논의하기 곤란한 구조이므로 안산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별도의 유족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유족의 수가 실종자의 수를 넘어섬에 따라 무게중심이 진도, 팽목항의 실종자 수색에서 유족들의 장례절차 및 후속대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가족 모임을 2차례 가졌으며 4. 22. 이후에는 발인이 다수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모임을 가지지 않은 상황임. 변협에 지원을 요청한 유족의 경우, 변협 TF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대리인 내지 조력자의 역할로 향후 개최될 유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면 모임에서 변협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TF에서 사전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교육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2-3

대한변협 세월호 대책TF 결정사항(20140423)

2014. 4. 23.
배의철 위원

1. 1차 회의 참석자 및 활동 체계

○ 참석자: 김영훈, 이명숙, 황필규, 배의철, 조대진, 황수철, 김정욱
○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TF 체계로 운영한 뒤 5월 말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하여 6월 초부터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구성 (TF → 특별위원회TF, 담당부서는 변협 총무과)

2. 활동목표

가. 실종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민관합동진상조사단, 국가배상 등)
나. 생존자 및 단원고 학생[2], 안산시민 등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
다. 장기 재난대응시스템 확립방안
라. 기타
- 변협 명의의 성명서 발표
- 청와대에 비공개 건의문 전달 (유보)
- 변협신문에 피해지원TF 구성 기사화 (유보)
- 법조계 애도주간 설정 (논의 요망)
- 변호사 모금 등 지원 방안 (논의 요망, 연수원에서는 단원고에 모금 전달)

3. 예산 - 변협에서 산정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2) 1학년과 3학년은 극심한 트라우마적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가로 발견된 희생자 운구차량이 학교 운동장을 돌 때마다 학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다고 함. 따라서 3학년은 장기간 수능을 대비한 수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학생, 교사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는 상황임.

4. 활동을 위한 준비 역할 분담

가. 법률지원 변호사단 (법률자문단, 현장지원단)

○ 자문단의 공개모집이 논의되었으나 실무단 회의를 통해 공개모집은 당분간 자제하고 기존 위원들(TF, 인권위원회 등)의 추천에 따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비공개 충원하여 차차 증원하여 나가기로 함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 보험 / 해상
- 세월호 피해로 인한 직장 문제
- 법의학 / 부검
- 기타 영역 등

○ 현장지원단의 경우 봉사모임 '위안', 공익변호사모임 등을 통해 지원가능 변호사를 추천 방식으로 확보하고 파견가능 변호사 명단을 작성하여 대기하도록 함 (현장지원단은 진도, 안산 두 곳에 파견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나. 변협 회원 발송문안, 안내문(상담팜플렛)

○ 회원 발송문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잠정 중단하기로 함

○ 상담 팜플렛, 안내문: 변호사단 배치를 전제로 실종자, 유족에게 나누어줄 안내문이므로 일단 변호사 현장배치를 통한 개입이 현재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므로 잠정 중단하기로 함

다. 명함제작

○ 안산 등 유족의 연락 및 요청이 있어 만날 경우가 있고, 개인 사건 수임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TF 위원들이 외부 활동을 할 때 사용할 명함을 제작하기로 함

○ 명함의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은 변협 김정욱 사무차장이 정하기로 하고, 명함

은 ‘세월호’ 등의 명칭 없이 ‘공익법률지원단’ 으로 기재하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이름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함.

라. 클라우드 소통 등

○ 회의 안건지, 회의 결과, 기존 자료(해외 사례, 매뉴얼 등) 등을 클라우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질의응답 등 내용이 위원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함

5. 현장상황 및 변호사 파견(배치)에 관한 판단

가.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 황필규, 배의철 위원이 4. 19. ~ 4. 21. 대한변협 파견으로 현장에 다녀옴
○ 현장 관련 일지와 제안에 관하여는 별도 제안문서 참조
○ 3차례 대표가 바뀌고 실종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명찰→조끼)을 만들며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만연하여 불신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
○ 정부, 언론, 변호사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접근과 조언이 불가능한 상태임(파견된 두 명의 위원이 공식 제안을 하였으나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 거절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통해 장기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진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녹음, 사진, 영상 등으로 남기고 문서로 정리, 기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무부에서 팽목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막을 설치한 상태이나 상주인원이 없음
○ 전남나주병원 원장이 팽목항에 상주하며 의료지원을 하고 있어 부스설치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남변호사회에서 협회 활동계획이 정해지면 차량제공이나 전남회 회원과의 공조 등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함
○ 그러나 공개적인 부스설치 및 명찰 등을 통한 표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유

보하였으므로 현재는 전남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대한변협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전남회에서 현장에서 순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을 경우 현장배치 및 현장에서 활동할 간단한 활동지침(유의사항, 동선, 활동내용) 등을 만들어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변협 중앙에서 1인을 파견하여 전체 총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 요망

나. 안산 (장례식장 등)

○ TF 1차 회의를 통해 3교대(오전/오후/저녁)로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음

○ 판단을 위해 4월 23일 배의철 위원이, 4월 24일 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위원이 장례식장을 순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안산지역 기자리스트는 이명숙 위원이 확보하기로 함.

○ 현재 안산은 12곳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임시 합동분향소가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되어 있음. 추후 안산 화랑유원지에 공식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임.

○ 4월 23일 저녁 배의철 위원이 방문하였을 당시 심리상담센터 부스가 장례식장마다 설치되어 있고, 목걸이 명찰을 한 다수의 지원인원들이 상주하여 있었으나, 여성가족부 등의 전시행정이 언론을 통해 크게 문제가 된 이후 4월 24일 저녁 재방문 시에는 심리상담센터 등의 부스를 철수하고 명찰을 패용한 지원인원들도 철수하였음. 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상주할 경우 공개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유족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변협 명찰을 달고 공개적으로 상주하거나 부스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됨

○ 현장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는 슬픔과 시신 확인 등 혼란이 공존하며 유족들의 분노와 항의로 나타나는 상황임. 따라서 유족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현재 기대하기 힘들며 장례식장 현장에서의 항의를 도교육청과 안산시청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음.

○ 현장 장례지원체계는 4월 22일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비용 보증문제, 시신

인도 문제, 유족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4월 23일부터는 지원체계가 완성되면서 유족에 의해 제기되는 장례절차의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있음.

(즉 유족 장례절차는 안산시청에 종합지원본부가 마련되어 있고, 본부에 안산시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지원체계를 꾸려 협력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현장에는 도교육청 장학사 2명, 안산시청 공무원 1인이 장례절차를 비롯한 유족의 요청을 24시간 상주하며 적극 지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를 대표하여 안전행정부 사무관급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추가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그러나 언론에 의한 접촉 등 문제는 상존하여서 제일장례식장의 경우 언론의 입장을 일체 통제하고 있으며, 고대 안산병원의 경우에는 시신 검안 과정에서 시신을 예를 갖추어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유족의 명예감정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간헐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안산 지역에 변호사들을 현장 배치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며, 만약 현장배치를 한다하더라도 비공개로 최대한 조심하며 고대 안산병원 등 대형병원 로비에 1-2인 정도만 상주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한변협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임.

6. 유족 지원을 위한 상황, 판단

○ 안산 영광교회를 통해 유족 1인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안산지역에서는 ‘유가족 협의회’ 라는 이름으로 2차례 모임을 가진 바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진도에서 2차례 대표자가 바뀌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대책본부’ 가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책위원회의 2명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결정하고 있어 진도에서 유족 장례 등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

○ 그러나 안산 등에서 장례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여 이를 진도의 실종자대책위원회에서 모두 취합하여 논의하기 곤란한 구조이므로 안산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별도의 유족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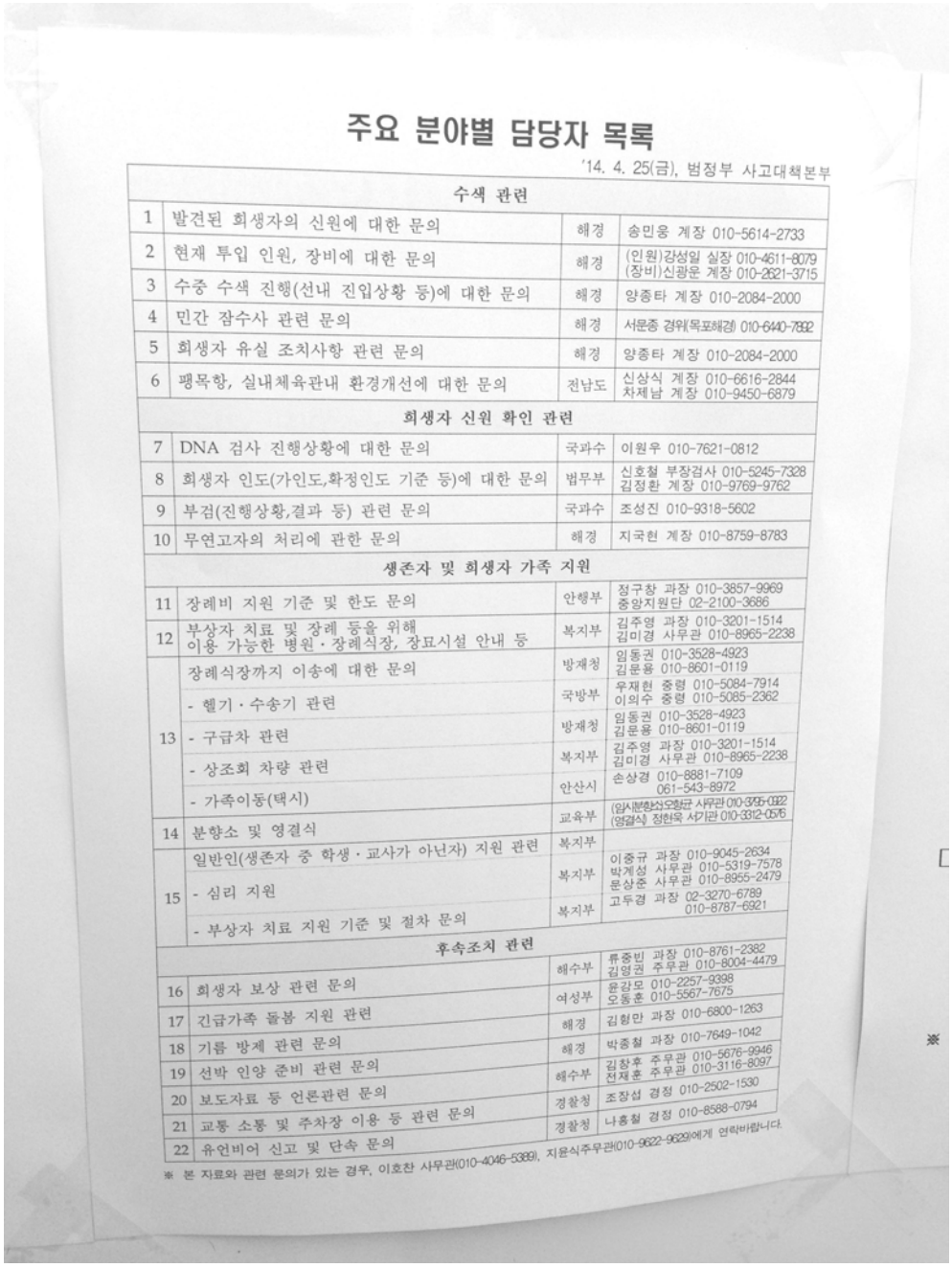
○ 뿐만 아니라 유족의 수가 실종자의 수를 넘어섬에 따라 무게중심이 진도, 팽목항의 실종자 수색에서 유족들의 장례절차 및 후속대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유가족 모임을 2차례 가졌으며 4. 22. 이후에는 발인이 다수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모임을 가지지 않은 상황임. 변협에 지원을 요청한 유족의 경우, 변협 TF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대리인 내지 조력자의 역할로 향후 개최될 유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면 모임에서 변협이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TF에서 사전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임.

7. 기타 사항

참고자료 2-4

사고대책본부 분야별 담당자(2014.04.25.)



주요 분야별 담당자 목록

'14. 4. 25(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수색 관련			
1	발견된 희생자의 신원에 대한 문의	해경	송민웅 계장 010-5614-2733
2	현재 투입 인원, 장비에 대한 문의	해경	(인원)강성일 실장 010-4611-8079 (장비)신광문 계장 010-2621-3715
3	수중 수색 진행(선내 진입상황 등)에 대한 문의	해경	양종타 계장 010-2084-2000
4	민간 잠수사 관련 문의	해경	서문종 경위(목포해경) 010-6440-7892
5	희생자 유실 조치사항 관련 문의	해경	양종타 계장 010-2084-2000
6	팽목항, 실내체육관내 환경개선에 대한 문의	전남도	신상식 계장 010-6616-2844 차제남 계장 010-9450-6879
희생자 신원 확인 관련			
7	DNA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국과수	이원우 010-7621-0812
8	희생자 인도(가인도,확정인도 기준 등)에 대한 문의	법무부	신호철 부장검사 010-5245-7328 김정환 계장 010-9769-9762
9	부검(진행상황,결과 등) 관련 문의	국과수	조성진 010-9318-5602
10	무연고자의 처리에 관한 문의	해경	지국현 계장 010-8759-8783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 지원			
11	장례비 지원 기준 및 한도 문의	안행부	정구창 과장 010-3857-9969 중앙지원단 02-2100-3686
12	부상자 치료 및 장례 등을 위해 이용 가능한 병원·장례식장, 장묘시설 안내 등	복지부	김주영 과장 010-3201-1514 김미경 사무관 010-8965-2238
13	장례식장까지 이송에 대한 문의	방재청	임동권 010-3528-4923 김문용 010-8601-0119
	- 헬기·수송기 관련	국방부	우재현 중령 010-5084-7914 이의수 중령 010-5085-2362
	- 구급차 관련	방재청	임동권 010-3528-4923 김문용 010-8601-0119
	- 상조회 차량 관련	복지부	김주영 과장 010-3201-1514 김미경 사무관 010-8965-2238
	- 가족이동(택시)	안산시	손상경 010-8881-7109 061-543-8972
14	분향소 및 영결식	교육부	(입시분향소)오형문 사무관 010-3795-0922 (영결식) 정현욱 서기관 010-3312-0576
15	일반인(생존자 중 학생·교사가 아닌자) 지원 관련	복지부	
	- 심리 지원	복지부	이중규 과장 010-9045-2634 박계성 사무관 010-5319-7578 문상준 사무관 010-8955-2479
	- 부상자 치료 지원 기준 및 절차 문의	복지부	고두경 과장 02-3270-6789 010-8787-6921
후속조치 관련			
16	희생자 보상 관련 문의	해수부	류중빈 과장 010-8761-2382 김영권 주무관 010-8004-4479
17	긴급가족 돌봄 지원 관련	여성부	윤강모 010-2257-9398 오동훈 010-5567-7675
18	기름 방제 관련 문의	해경	김형만 과장 010-6800-1263
19	선박 인양 준비 관련 문의	해경	박종철 과장 010-7649-1042
20	보도자료 등 언론관련 문의	해수부	김창후 주무관 010-5676-9946 전재훈 주무관 010-3116-8097
21	교통 소통 및 주차장 이용 등 관련 문의	경찰청	조장섭 경정 010-2502-1530
22	유언비어 신고 및 단속 문의	경찰청	나홍철 경정 010-8588-0794

※ 본 자료와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이호찬 사무관(010-4046-5389), 지윤식주무관(010-9622-9629)에게 연락바랍니다.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변호사 파견 요청의 건(2014.10.22.)

제 목: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변호사 진도 파견 공식 요청의 건

세월호 가족을 위해 함께해주시고 계신 귀 협회와 세월호 특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실종자 가족은 가족회의 결과 가족대책위 산하에 실종자 대책위를 결성하기로 의결하고 실종자 가족 대표로 황지현 학생 아버지 황인열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은 독자적인 논의와 의결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향후 현안에 있어서 가족의 의견이 다를 경우 토론 후 다수결(2/3)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는 실종자 대책위가 의결한 바에 따라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것은 실종자 가족의 의결에 따라 실행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진도는 중요한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가 상주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바지선의 철수 문제로 범대본과 마찰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진도군민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진도체육관 문제, 향후 수색 및 인양 문제 등 변호사가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대리하여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및 진도군과 협상하여야 할 중요 사안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양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특히 유가족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 진도체육관 문제에 있어서 실종자 가족은 이전에 합의하였으며, 진도체육관을 진도군민에게 돌려드리며 군민들이 실종자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통해 상호 믿음을 쌓아나가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3. 또한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을 위한 안행부와의 예산문제 협의, 정밀건강검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사안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의 수색구조, 유실방지 등에 대해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자료의 수집 및 기록 등 변호사가 하여야 할 역할이 실로 중대한 상황입니다.

4. 가족대책위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 실종자 가족은 전원이 배의철 변호사의 복귀를 반대하였으며 배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의 의결사항만을 집행하였을 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실종자 가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행보를 취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가족대책위를 통해 변협에서 파악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 내용은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올바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자 가족의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실종자 가족은 배 변호사에 대한 신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변협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배 변호사 역시 150일 동안 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눈물로 함께해 온 믿음을 바탕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한편 위 사항에 대해 가족대책위, 진도분과, 실종자 가족이 참여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파되고 있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사과드릴 것을 약속하며,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6. 변협에서 실종자 가족의 법률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만큼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변호사를 조속히 진도로 파견해주셔서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을 대리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가 변경되는 것 또한 원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하며 진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색구조 및 유실방지에 대해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범대본 및 해경, 진도군과의 실질적 협상이 가능한 것은 배 변호사가 유일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7. 따라서 배의철 변호사가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 법률대리인으로 진도에서 활동해 사고 수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서 실종자 가족을 위한 진도 재파견 의결을 해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월호 특위 진도 복귀 기자회견문(2014.10.23.)

1. 지난 10. 8.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위 업무 조정의 성격으로 150여 일 동안 진도에 머물러 온 법률대리인의 복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9일 변협 임원진들께서 직접 진도로 내려와 이를 실종자 가족과의 회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향후 진도에 대한 법률지원의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의 실종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은 10. 10. 자로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 이후 실종자 가족들께서 대한변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변호사의 재파견을 요청하였고, ▲ 국가의 총체적인 부정과 편법, 향응과 비리가 누적되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천명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며 ▲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의 현장인 진도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이 지옥같은 고통과 절규 속에 191번째 4·16 을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도체육관 대안 마련의 문제, 진도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중단 문제, 수색종료 및 잠수사 철수 관련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10월 22일 세월호 특위 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법률대리인의 진도 재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로 변협 세월호 특위의 변호사가 실종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진도 현장 지원 업무로 복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상기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10월 1일 ‘3자 협의’에 따른 진도군민들과의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여 진도군민과 실종자 가족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3자 협의’ 결과 ‘진도체육관 대안마련을 위한 수임기구(TF)’가 구성되었으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법률대리인의 부재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즉시 TF를 재가동하여 진도체육관 이전 대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피해자인 진도군민들과 실종자 가족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중단 문제에 관하여,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진도 현장에서의 실종자 가족지원은 장관의 약속이며 사고 수습까지 장관이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장관이 직접 주재한 해수부, 안행

부, 진도군, 안산시,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회의를 통해 장관께서 “실종자 가족 지원은 사고 수습 활동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부장 책임의 지시를 내려 특별교부세 지원가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정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로 실종자 가족을 더 이상 실의에 빠뜨리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91일째 반노숙생활을 이어나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실종자 가족의 복지와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 역시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 국민들과 실종자 가족에게 공표한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색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약속이며, 최우선적 가치는 ▲ 실종자 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실종자 가족이 미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붕괴되어 온 사회 전체가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면 이 사회는 이미 미래의 희망과 치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언론에 당부드립니다. 미디어는 세월호 보도에 있어서 ‘취재원 비닉권’ 이라는 이름으로, 전문(傳聞)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진실’ 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이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2차, 3차의 비수를 꽂아 또 다른 고통을 가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문무성’ 이라는 최근의 보도는 과연 우리 사회 미디어의 재난보도원칙이 과연 존재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재난보도에 있어 최종적인 입장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정확성’ 과 ‘미디어를 통해 알게될 때의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려’ 라는 재난보도의 대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월호 특위 진도 군청 기자회견문(2014.10.27.)

1. 실종자 가족은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에 11월 수색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11월 수중수색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요청하는 수색사항을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현장지휘본부는 11월에 ▲ 수중수색 가능 파고(1.5m 이하)가 20일, ▲ 11월 수온을 약 14.3° 로 예측하고 있어 작업여건으로는 충분히 수중수색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피항 후 바지선이 현장에 복귀하는 내일 수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잠수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편 실종자 가족은 26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장관님을 면담하고,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수색구역에 대하여 수색을 지속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으며, 장관님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수색팀을 독려하겠다.” 고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의 인양 여부에 대한 첫 공식논의를 시작한 실종자 가족은 인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지난달 4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에 대한 검토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가족들은 인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정부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입니다.

4. 정부가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도록 하겠다.” 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약속을 저버리고 수색을 포기할지언정 어떤 부모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침묵한 채 모든 결정과 책임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평생의 멍에를 가슴에 고통스럽게 지고 살아갈 실종자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2-8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 합동 기자회견(2014.10.29.)

1. 오늘은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10월 23일 인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도, 10월 27일 수중수색 지속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수색이 미진한 구역이 많다고 추정하고 있기에 실종자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교차 정밀수색을 통해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2. 먼저 27일, 88수중 정호원 부사장님께서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마음을 받아들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색을 계속하며, 잠수사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혀주신 후 실종자 수습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수사님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수사님들은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저희에게는 영웅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신 잠수사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3. 대통령, 총리, 장관이 말씀하신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 는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 이주영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오전 질책과 함께 지시사항을 통해 “11월에는 기본적으로 선내 전 구역을 재수색하고, 특히 가족요청사항은 선체 전문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다른 시각으로 수색계획을 면밀히 다시 수립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4. 4층 중앙 여화장실은 저희가 지난 27일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생존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색이 필요한 실종자 존재 추정구역으로 정확히 지목했던 곳입니다. 반면 현장지휘본부는 이 곳을 13회 수색하여 수색이 ‘완료’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영상촬영검증도 되었다고 분석하였으나 수색구조TF 영상검증팀(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팀)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독불가’ 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5. 103일 전 발견된 이묘희씨 역시 26회 수색하여 수색이 ‘완료’ 되었다고 했던 3층 주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곳 역시 저희는 실종자 존재 예상구역으로 지목했었습니다. 그 전에 발견되었던 윤민지 학생 역시 B22 격실 또는 중앙통로에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해 왔고 23회 이상 드나들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던 중앙통로에서 윤민지 학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에 특히 유의하면서, 현재의 수색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됩니다.

6. 저희는 실종자 발견 소식에 서로 얼싸안고 목메어 한없이 울었지만 반면 향후 실종자를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은 28일 저녁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원인을 분석해 정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토대로 범대본의 11월 수색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선내 전 구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수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종자 가족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7. 11월 수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히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자코시스템을 통한 해수분석 결과 4층 중앙 여화장실 반대편 격실인 F11에서 이상패턴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코시스템으로 이상패턴이 검출된 격실의 주변 구역까지 꼼꼼하게 수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자코 시스템으로 이상패턴을 보이고 있는 18개의 샘플 검출 구역 및 그 주변 구역에 대해 철저한 재수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지휘본부에서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4층 선미 SP1 28인실 구역은 영상검증팀에서 25일 02시 잠수와 영상촬영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압착되어 잠수사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은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2/3 정도는 장애물 제거와 우회통로 개척 등 추가 수색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P1 전체에 대한 바닥 수심체크와 영상검증팀의 검증촬영 후 SP1의 추가 수색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장지휘본부는 수중 특수촬영장비를 보유한 수색구조TF 영상검증팀이 전 격실을 입수 촬영함을 통해 검증 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5일, 4층 중앙 좌현 F8 격실에서 캐리어 1점이 발견되었습니다. F8 역시 11회를 수색했고 6월 30일 이미 수색완료를 선언했던 격실입니다. 유품을 포함해 수색이 완료되었다는 격실에서 커다란 캐리어가 이제야 나왔다는 것은 정밀수색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는 실종자가 격실 내에 있을 경우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현장에서도, 구조 전문가들도, 범대본도 갇혀있는 여객선에서 실종자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지휘본부는 승객 배정표와 생존학생의 증언에 기반한 실종자 존재 추정구역을 토대로 선내 격실 수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바

참고자료 2-8

랍니다.

8.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종자가족대국민기자회견문(2014.11.11.)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210일 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실종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 볼 때면 그렇게 진도를 떠나는 슬픈 현실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저희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찾아 품에 안고 한없이 목놓아 울고 싶은 희망 하나로 이 고통스런 삶을 견뎌 왔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아직 수색이 되지 못한 곳이 남아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수중수색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어 잠수사 분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계속하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저희는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물론 아직 사랑하는 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색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 분들의 안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수색 지속과 중단에 관해 정부도, 잠수사들도, 우리 사회도 고심을 거듭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겠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유실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88수중과 해군, 해경 잠수사 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수색 지속을 결정한 후 황지현 학생이 197일만에 기적처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저희가

참고자료 2-9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분들께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지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수색 중단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 분들의 말못할 고통스런 심정도, 저희를 위한 공무원 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고생도, 피해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군민들의 아픔도 모두 눈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비록 수중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장관님께서는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 선체 및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해 인양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의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88수중 정호원 부사장님과 백성기 잠수감독관님을 비롯한 민간잠수사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었던, 210일 동안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색작업에 임해주신 잠수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중략)

저희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에게,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1.

세월호 사고 실종자 대책위원회

세월호특위기자회견(수색,구조방안에대한입장)(2014.05.27.)

1. 금일 오전 10시 수색·구조TF 회의에서 선체 외판을 부분 절단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최종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전문가들과 해수부, 현장의 해경, 해군, 민간잠수사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외판을 부분 절단하여 부유물,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색방안을 채택할 것을 결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종자 유실 및 시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저희를 주저하게 하였으나 정부는 선체 부근에 1선, 선체 외곽에 2, 3선의 유실방지를 위한 고깔 에어백, 그물망, 안강망 등 설치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1명의 유실도 없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임을 믿습니다.

3. 부분 절단은 부유물이 쌓여있는 4층 선미부분을 수색하기 위해 4층 선미 우현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절단 크기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율 후에 오늘 중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법은 1차로 산소아크 절단법을, 2차적 대안으로 초고온절단봉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선체 절단 및 부유물 제거 작업을 하게 되면 크레인이 동원되어 선수, 중앙 쪽의 작업이 오랫동안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속히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5월 24일 1차 수색·구조TF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은 저희를 실의에 빠지게 하였음이 사실입니다.

5. 그러나 크레인 인양방식을 적용치 않고 그물망, 에어백, 윈치를 이용한 방안이 최종 제시되어 선수, 중앙 쪽의 작업이 조정의 문제가 있을 뿐 동시 수색 작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오늘 회의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의 전면 중지라는 위험성의 해소방안이 도출되었다고 판단, 이번 대안적 수색조치의 성과라는 희망의 끈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 도착하는 신규 바지선(88바지)에 실종자 수색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6.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정부는 논의된 대안적 수색방안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색현장과 범대본의 소통 및 지휘체계에 있어서도 혼선이나 차질이 없도록 해경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 그 외에 ROV, 소나의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 계획도를 수립하여 시행 여부를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11

세월호특위기자회견(2014.06.14.)

1.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사 안전과 수색의 효율성 및 작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대본이 위촉한 잠수안전지원단의 제언에 따라 세월호 선미(88)와 중앙(해군)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잠수작업 실시간 영상 촬영장비를 선수(해경, 언딘)에도 도입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오후 선수구역 민간잠수사들과 실종자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믿음을 확인하고 선수에도 실시간 촬영장비를 정밀수색에 활용하기로 하여 금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6월 13일 수색구조TF 제7차 회의에서는 ① 수색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② 새로운 수색방안이 도입된 6월 6일 이후 수중 촬영내용을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보고 객실 하나하나 수색을 완료하는 방안으로 촬영된 수중작업 영상 파일 전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③ 가족들의 수중작업 영상 판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내지 잠수사를 선정하여 바지선 현장 등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세월호사고59일째가족보고사항(2014.06.13.)

1.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가족 협의체 6. 12. 제3차 회의 보고

① 언딘 바지 및 잠수사들의 작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여야 공히 가족들의 분노와 항의는 당연하며 추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함께 대응하기로 함

- 여당에서 추가 잠수사들이 투입될 수 있는지 정보 파악하기로 함
- 야당 역시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주영 장관 면담으로 대안마련을 공식요청 하기로 함

② 세월호 실종자 12명에 대한 가족들의 트라우마 해결 방안 논의

- 팽목항의 예와 같이 가족들과 일상 생활을 함께하며 치유 과정을 밟을 의사 등 인력에 대해 보강하여 추진하기로 함
- 여당이 이를 담당하기로 함 (김명연 의원)

③ 현장 바지선에 상주하는 잠수안전지원단의 역할 논의

- 잠수안전지원단 단장, 부단장의 지휘, 통솔이 언딘바지에서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는 현황 및 현장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
- 현 단장과 부단장의 상황을 일단 신뢰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함

2. 6월 13일 오전 범대본 회의 실종자 가족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 6. 12. 언딘 잠수사 전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언딘 바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카메라를 헬멧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금일 도착하여 설치 후 저녁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함
- 언딘 바지에서 그 동안 촬영한 영상파일을 외장하드로 가족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매일 촬영되는 녹화영상은 당일 USB에 담아 전달하기로 함
- 유실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
- 선체 외판 절개를 위한 작약 시험방식 등을 논의할 때 사전에 쟁점을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와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족과 함께 회의하기로 함

3. 한부모 가정 비양육 모친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응의 건

- 금일 오전, 언론기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는 기사가 실림
- 사건은 비양육모친이 제기한 소송으로, 유가족/ 실종자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이 확인되었으나 다수의 언론에 유족이 제기한 것처럼 기사화되어 이에 대응
- 기자들과 통화하여 소송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망한 학생을 전혀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차원에서 전하도록 함
- 가족대책위 진도팀 총무가 한부모가정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 행동방향 등을 수립하기로 하고, 안산으로 올라가 대한변협 이명숙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를 만나 협의한 후에 정식 대응하도록 함

4. 6. 13. 오후 2시 수색구조TF 회의 결과 보고

- 수색구조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함 (해경 이춘재 경비구난국장)
- 수색완료 확인을 위하여 가족들이 촬영된 영상파일이나 실시간으로 작업상황을 보면서 **가족 측 잠수사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함
- 실종자 가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경, 해군, 언딘, 88이 ① 당일 실적 ② 다음날 계획 ③ 3일치 계획 ④ 12일치 계획한 범위 내에서 어느 구역, 어느 방을, 어느 팀이, 어떤 작업을, 전체 공정상 몇 %를 했는지 표기**하여 문서로 제출키로 함
- **작업일지를 해당 구역, 해당 방 수색 잠수사 실명을 표기하여 제출**키로 함
-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배 구조 전체를 방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컴퓨터에서 층별, 방별로 하이퍼 링크를 걸어 마우스로 방을 클릭하면 영상촬영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해경에 요청하고, 완성되면 그것을 카피해서 실내체육관 가족대책위 사무실 또는 변호사 노트북에도 설치하여 가족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함.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30.)

1. 금일 10:00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밀수색 및 7월 수색계획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수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충실히 보완하여 다시 개최하기로 하여 설명회는 취소되었습니다.

2. 특히 리브리더(수중재호흡기) 등 유속 1.8노트 이상에서도 잠수가 가능한 새로운 잠수 기법의 도입, 현재 35m 수심에서 25분, 40m 수심에서 10분 정도인 잠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나이트록스 전면 도입 등 방안, 현재 약 3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잠수인력 충원 세부 계획, 실종자 존재 예상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대한 확인, 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수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실종자 가족 및 수색구조TF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요청해 온 내용들이 7월 수색계획에 전혀 명시되지 않아 계획서의 충실한 보완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3. 한편 6월 29일 보도된 해군의 잠수인력 및 장비 축소와 관련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범정부대책본부에서는 보도된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주영 장관님이 거절하여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님께서 유임 후 첫 일정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총력을 다해 수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총리님의 의지가 현장 지휘부로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실종자 가족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4. 설명회가 취소됨에 따라 객실 수색상황을 설명해주시기 위해 진도군청을 방문한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사님들께 실종자 가족 모두는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가족의 애절한 마음을 전하며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눈물을 흘리며 부탁드렸습니다.

5. 지난 6. 27. 수색구조TF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정밀수색결과 및 7월 수색계획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 수색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오늘 해경청장님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명단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색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색 평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수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 실종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잠수안전십계명(민간잠수안전지원단)

"잠수사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세월호 잠수안전 십계명

1.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은 능력이 검증된 잠수사만이 안전잠수와 임무완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자격증, 경력기록, 건강기록, 잠수일지(Log Book) 등 해경에 제출)
2. 잠수팀원은 각 개인의 임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이행합시다.
   - 잠수사 : 건강유지, 임무숙지(Image Training), 비상절차 숙지, Debriefing
   - Tender : 잠수장비 정비·검사, 잠수사 복장/장비 탈착 및 이상유무 점검
   - 기록수(통신) : 입수·퇴수 시간, 잠수사 교신내용, 작업일지 등의 기록
   - 대기잠수조 : 즉각 입수태세 유지, 지시에 의거 잠수자 지원
   - 잠수감독자 : 잠수조의 건강 및 정신상태 확인, 안전교육, 입수 전 Briefing 및 유의사항 하달, 퇴수 후 잠수사 이상유무 확인
3. 안전잠수의 책임은 잠수사 자신(충분한 휴식, 금주 등)에게 있으며, 잠수조의 상호 안전은 조원만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신참 잠수사는 적응잠수 및 검증잠수 후 임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잠수 감독자)
5. 잠수 후 Debriefing 정보는 팀 전원이 공유해야 합니다. (잠수 감독자)
6. 잠수사에게는 2일 잠수(4회) 후 1일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잠수바지에는 감압 챔버와 작동 요원 및 의료진을 배치해야 합니다.
   - 감압챔버 : 즉시 사용 가능토록 점검 및 준비하고 모든 필요 장비와 치료표 구비
   - 의료진 : 잠수 전·후 모든 잠수사의 신체검사 실시
8. 감압 잠수 시는 표준 감압표에 의거 감압을 시행하며, 현장 잠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9.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팀별·조별로 반복적인 응급조치 훈련을 실시해야합니다.
10. 매일 잠수팀 감독자 회의를 개최하여 잠수계획 협조 및 조정과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민간 잠수안전지원단」

"우리 모두의 염원은 안전하게 세월호의 수색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불참에 대한 입장

금일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먼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조 시작과 함께 실종자 가족들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실종자 가족과의 약속이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는 비록 가족들이 일부 입원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의견 차로 야당만 우선 방문하였고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함과 동시에 여당과 함께 하나되어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경청하기 위해 국조특위 위원이 진도실내체육관에 상주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해주시는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고 서로간의 오해가 정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실종자 가족, 유가족을 위해,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당파를 초월하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국민들을 위해 하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말한 “진도 팽목항 현지 가족들로부터 오늘 0시 30분쯤 방문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 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들은 풍랑이 거세 바지선이 피항을 하고 며칠 간 수색이 완전 중지되며, 일부 가족들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입원을 택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국조특위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선택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새정

참고자료 2-15

치연합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정상의 이유로 진도일정을 5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하였고 이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진도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6. 1. 오전 11시경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국조특위 방문일정이 5일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일 국조특위 개시일정도 범대본으로부터 알게 되었기에 범대본에서 연기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48일동안 악화된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씨 상의 이유로 수색구조가 2일간 불가능하고 또 국조특위가 5일로 연기된다고 범대본에서 통보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을 택하는 등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은 5일로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여 일부는 병원으로, 일부는 안산으로 유품을 정리하는 등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이러한 일정 변경이 여야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이미 회복을 위해 입원 등의 조치를 시작했기에 정상적으로 실종자 가족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가족대책위에 실종자 가족들이 2일에는 치료 등을 위해 다수가 진도체육관에 없기에 여야가 함께하는 일정은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에서 진도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의견을 수용하여 연기가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치권이 하나되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배경이 모두 생략된 채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가 반쪽이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세월호 실종자 및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실종자 가족 및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을 방문해주신 야당에 감사드리며, 저희 실종자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의 의견을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경청해주신 여당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 함께 하나되어 진도 실종자 가족 방문조사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의하여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공동선언문 (2014.06.08.)

1. 먼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라 칭합니다)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291명의 숭고한 희생자들과 깊은 바다 속에서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수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이광욱, 故이민섭 잠수사님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아직 13명의 실종자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 13명이 모두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3.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하여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토록 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며 수색,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잠수사의 안전 문제는 국회에서도 각별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유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가족들과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가족들의 의견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헌신하는 민간잠수사님들께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잠수사 여러분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국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사님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과 사기 진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범정부대책본부에 제안하여 잠수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잠수사님들께서 실종자 수색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실종자 가족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수색, 구조에 임하는 해군과

해경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새로운 수색, 구조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함에 있어 국회 역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통해 이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정부의 초기대응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실종자 수색, 구조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한 해군, 해경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세월호 사건은 현행 법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대참사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대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대응 및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유례가 없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 안산, 진도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은 수색, 구조로 인한 어업피해 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역이 경제, 사회적으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세월호 참사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국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넘어 현재 실종자 수색과정과 구조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책임 있게 지원하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6.10.)

- 실종자 가족이 만든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상황실

1. 국회 국조특위는 2014년 6월 5일 실종자 가족과의 간담회 결과로 2014년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대책위와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였고, 국조특위 현장 상황실을 진도체육관에 설치하여 특위 위원이 상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여 수색,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조사일정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 간담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말한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들을 위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는 약속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우리 실종자 가족들은 국회 공동선언으로 하나 될 것을 약속한 여야에 희망을 가졌으나 그 희망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다시 합심하여 세월호 국조특위가 표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이제 곧 장마와 태풍이 밀려오고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수색을 위해 1분 1초가 절박합니다. 57일 동안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12명의 실종자들이 의원님들의 아들, 딸이라면 지금과 같이 어느 때보다 수색, 구조 지원이 절박한 상황에서, 해수부와 해경이 현장 바지선, 팽목항을 굳게 지키며 실종자 수색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 국조특위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제공 요청이나 현장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충실한 사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정도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답답한 나머지 국회 행정실에 연락을 하여 국조특위 위원의 현장 상주와 상황실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처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체육관 내 가족대책위원회 사무공간에 '세월호 국조특위 상황실' 현판을 달아 국조특위 현장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여야에 전해져 '해답은 현장에 있다' 고 선언했던 국회 공동선언에서의 약속을 국회는 책임있게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현장담당 의원과 조사위원들이 속히 진도 상황실에 상주하며 진도VTS 방문 등 충실한 사전 조사를 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진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 호소문(20140628)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 30분경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고 있던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가족과 동거동락을 하던 진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도에 머무르고 있는 저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업무를 담당하던 김태호 계장님은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진도와 가까운 해남에 살고 있던 그 분은 집에도 가지 않고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밤낮을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형이자 동생이자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아침식사를 챙기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가족을 위해 가까운 해장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억지로라도 건강을 챙기는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더욱이 실종자가 수습될 때마다 팽목항의 방파제 외딴곳을 찾아가서 남몰래 흐느끼며 통곡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실종자의 처참한 시신의 모습을 보기 두려운 가족들을 대신하여 시신의 특징을 얘기해주며 누구인지 확인해주었고, 새벽에 실종자가 수습될 때에는 잠도 자지 못한 채 가족들과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계장님은 가족과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가족들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침에 안 보이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왠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가족을 찾아서 올라간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는 유가족이 되어 체육관을 다시 찾으면 제일 먼저 김태호 계장님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초기 가족들이 공무원, 특히 정보과 사람들을 경계할 때도 김태호 계장님은 자식을 잃은 본인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으면서 우리 가족들 입장에 서서 정부와 가족, 일반인 가족과 학생 가족, 교사 가족 간의 매개 역할을 훌륭히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장님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공직자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태호 계장님은 진도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참고자료 2-18

그런데 차츰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 가족들을 지켜주던 김태호 계장님에게도 12명의 실종자 가족이 남은 6월이 접어들자 가족과 동일하게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근이가 발견된 날은 밤새 내내 줄담배를 피워가며 시신안치소를 지키며 내 자식을 잃은 것과 똑같이 가슴이 찢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담배가 떨어지면 다시 담배를 달라고 하며 구석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친근감 넘치던 김태호 계장님은 점점 말수가 줄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실종자 가족들조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계장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장님은 밤 늦게까지 진도체육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6월 26일 이전에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가족들을 위로해주었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바라는 점을 하나씩 얘기하며 꼭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계장님의 진도대교 투신을 접하고 나서야 가족들은 계장님이 가족들을 한 명씩 만나 꼭 들어달라고 한 바람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힘든 시기, 계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하였고 실종자 가족은 계장님이 있었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보다 더 큰 트라우마와 고통이 계장님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저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저희는 계장님 앞에서 책임감과 죄송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계장님의 희생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것이기에, 저희의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온 몸으로 받아주셨기에, 계장님의 죽음을 접한 이후에야 계장님께서 저희로 인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은 세월호 업무가 계장님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도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지만 저희를 위해 순직하신 계장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계장님의 희생에 대해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째, 김태호 계장님의 희생은 저희를 위한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계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계장님께 순직자 예우를 갖추어주십시오.

셋째, 제2의 김태호 계장님과 같은 분이 나오지 않도록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물론 진도와 안산시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심리 트라우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2014년 6월 28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일동

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6.24.)

1. 6월 22일 23:40 경 세월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인양되었습니다. 해군 SSU 잠수사 2인이 수거하여 1007함으로 인계되었으며, 6월 23일 08:30경 P-39정으로 인계되어 진도파출소로 같은 날 10:30경, 진도파출소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정박중인 해경 소속 바지선 39호 내 유류물 처리반 사무실로 13:00경 인계되었습니다.

2. 그러나 가족들은 인양 당시 바지선에 있던 가족대책위 영상기록단을 통해 이 사실을 6월 23일 오전에 전해 들었으며, 이후 가족대책위 대리인을 통해 검경합수부 현장채증팀에 ① 가족들과의 협의 후에 검사지휘 상신하여 처리방향을 정할 것 ② 가족들이 확인 차 이동할 예정이므로 실물 보전조치하여 대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후 19:00경 실종자 가족 대표와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이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이동하여 DVR 및 같은 장소에서 인양된 노트북 1대를 확인하였으며, 20:00경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 도착하여 범대본, 해경, 가족들이 모두 동석 참관한 상태에서 DVR 및 노트북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한 후, 보관장소 역시 시건장치 후 봉인하였습니다.

4. 가족대책위는 DVR 영상자료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이 세월호 침몰 과정 및 정확한 정황,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복구 및 분석의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이후의 절차는 먼저 금일 14:00경 가족대책위 및 범대본, 검경합수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검사 지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포렌식팀이 하드디스크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녹화하여 복원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원 및 분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 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6. 범대본 이주영 장관님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분석의 객관성, 공정성이 핵심이라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셨습니다. 이에 금일 오전 09:00 가족들이 참여한 범대본 회의를 통해 복원 과정에 조금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7. 가족대책위를 대리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금일 12: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전자접수하였으며, 금일 15:00경 목포지원에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증거보전결정 및 명령을 요청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 부식방지조치는 탈이온수(초순수액)에 하드디스크를 담가놓아 소금물과 오염된 부분들이 중화되어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하드디스크는 밀봉된 상태이나 공기구멍이 있고, 이 구멍은 거름망으로 막혀있습니다. 따라서 진흙 등은 유입되지 않으나 바닷물은 들어갈 수 있어 염분에 대한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탈이온수 안에 장비를 담가놓으면 그 상태에서는 공기와 마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의 신속한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복원 및 분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2-20

증거보전신청서-목포지원(DVR)(20140624)

신청인 1. 김○○ (670***-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0-** 3**호

2. 김○○ (650***-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천동로**

위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1. 변호사 배의철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11-1 KCC파크타운 101동 302호

2.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

전화 :02-588-5965

피신청인 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서해지방해경청장

전남 목포시 옥암동 1390

2. 해양경찰청장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 1. 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3반에 고(故) 김 학생의 아버지(상속인)이며, 신청인 2는 같은 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고(故) 김 학생의 아버지(상속인)입니다. 망인들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3]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해경 등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승객 약 476명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세월호 정밀수색 중이던 6. 22. 23:40경 해군 SSU 잠수사 2명은 세월호 선내 3층 로비 안내실에서 DVR(Digital Video Recorder)을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며, 같은 날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2 소정 기관 등

참고자료 2-20

22:50경에는 세월호 선내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 1대를 인양하였습니다.
이 선내 수습 물품들은 언딘 바지에서 1007함으로 인계되었으며, P-39 피정을 거쳐 (인계자: 1007함 경위 이영수, 인수자 P-39정 경사 이승준), 진도파출소로 6. 23. 11:00경 이동하였고, 최종적으로 같은 날 13:00경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이동되었습니다.

위 물품 중 특히 DVR은 세월호에 설치된 총 64개 CCTV 화면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노트북 역시 하드디스크에 영상자료 기타 사고에 관한 중요한 자료 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신청인들 및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으로부터가 아닌 물품 인양 당일 언딘 바지선에 있었던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라 합니다) 영상기록단 PD로부터 CCTV 저장장치인 DVR의 인양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PD는 바지선에서 나온 후 6. 23. 13:00경 가족대책위 및 실종자 가족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에 가족대책위 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검경 합수부에 시급히 연락하여 이 사건 참사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CCTV 저장장치인 DVR의 현재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추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6. 23. 19:00 경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도착하여 DVR과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 사진을 촬영하고 가족대책위 위원장, 부위원장인 신청인들과 변호사, 해경이 모두 입회한 상태에서 물품을 상자에 담아 봉인조치를 취하고, 아래 기재 보관장소 역시 봉인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DVR이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해경은 인양 후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채 DVR의 부식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가족대책위는 급히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금일 13:00경 관계자 모두의 입회 하에 협의하여 부식방지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인 세월호 선내 및 선체 외의 상황 등이 하드디스크에 녹음 파일 및 영상 파일 등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증거보전을 통해 DVR의 하드디스크 등 내부 저장파일을 복원하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신청인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세월호 DVR 및 CCTV 셋톱박스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CCTV 영상파일 등에 대한 증거 등을 보전하여,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가. 증거보관장소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정박 중인 해경소속 바지선(39호) 내 봉인된 DVR 및 노트북이 보관되어 있는 선실(유류물처리반 사무실)

나. 보전대상 증거

DVR 및 노트북 등 장치 내부에 있는 ① 하드디스크 ② CD 기타 저장장치 등 세월호 CCTV 영상파일 및 음성파일 등 일체

다. 보전방법

(1) 위 보전대상 증거물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되, ① 위 증거물이 약 2개월 이상 바닷물속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긴급한 복원절차를 진행하고, ② 복원된 증거물에 대해 포렌직절차의 일환으로 이미징(imaging)을 하고 해시값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

으로 증거로 보전해주시고,

(2) 이러한 증거보전을 위해 ①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되, 긴급성을 요하므로 ②차선책으로 신청인,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과 이미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24.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의철 (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국정원 지적사항(20130227)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1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거성종합	5~6일
2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	임차장님	보고
3	분리수거함 및 재떨이 위치선정	임차장님	보고
4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신환 및 천정 도색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	예비휴게방 출입문 DOOR 상힌지 및 유리창 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	레스토랑 유리 파손면 썬팅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7	편의점 유리파손면 썬팅보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	화장실 타일 및 변기 신환 공사	풍성산기	
9	여성샤워실 누수부분 용접 및 타일 마무리작업	풍성산기	
10	샤워실 배수구 분리작업	본선작업	
11	베드룸 입구 불량장판 보수작업	거성종합	우드타일
12	3층 선수 화장실 입구장판 보수작업	거성종합	우드타일
13	객실 내.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청소용역	
14	여객구역 비상등 램프 교체작업	본선작업	
15	CCTV 추가 신설 수리신청(브릿지 LIFERAFT 2곳)	삼아ENG	수리신청서
16	CCTV 추가 신설 수리신청(트윈데크 2곳)	삼아ENG	수리신청서
17	객실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작업	본선작업	
18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19	커피숍 냉장고 FAN 불량 및 R-22 냉매보충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20	커피숍 원터식 세척벨브 신환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참고자료 2-21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21	신객실 고정고리 신설 수리신청	더난터	수리신청서
22	야외행사장 장소명 제출	본선작업	
23	여객구역 비상탈출로 현위치 부착(주황색)	정상기획	스티커부착
24	여객구역 안내문구 부착	정상기획	
25	구명동의 착용법 안내문구 부착물 확인	본선작업	
26	안내방송 멘트 준비(코팅)	본선작업	정현선
27	해양안전수칙 CD 준비	운항관리실	홍영기 주임
28	해양안전수칙 ALL 채널 준비	태광ENG	
29	S-4 입구 천정등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30	여객구역 전기소켓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31	외부 출입문/문틀 고무몰딩 신환작업(외부출입문 11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32	침대등 등기구 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33	샤워실 샤워기헤드 이물질 제거작업	본선작업	
34	샤워실 거울 실리콘 마감작업	거성종합	
35	통로 출입문 일본어 제거작업	본선작업	
36	신설객실 SP-1,2,3 비상탈출 및 안내문구부착	정상기획	
37	로얄실 내.외부 도색작업	본선수리	
38	조리실 내부 출입문 도색작업	본선수리	
39	분리수거함/음식물수거함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40	조리실 출입문 손잡이 수리	더난터	수리신청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41	화장실 휴지/물비누 보충	청소용역	
42	S-1 전기콘센트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43	4층 로비 자판기 코드 마감작업(우현)	더난터	수리신청서
44	S-1,2,3,4 매트리스/모포/베개 SETTING	청소용역	
45	화장실 거울 전체교체작업	풍성산기	
46	JDC 면세점 홍보관 시트지 및 바닥데코타일 신환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47	커피숍 책장 증설 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48	플로어 룸 전기콘센트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49	레스토랑 유도화살표 제작 및 부착	정상기획	
50	출입문턱 타이거 TAPE 작업	본선작업	
51	화장실 거울 제활용 선원실(5명)	풍성상기	서비스작업
52	불꽃이벤트장 계단트랩 타이거 TAPE 작업	본선작업	
53	불꽃축제장 믹서기 및 행사장비 보관장소 선정	임길준 차장	강 용
54	여객구역 객실내 TV수량 파악 및 수검준비	임길준 차장	양대홍
55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수리신청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6	편의점 전자렌지 고정함 설치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7	편의점 POS 고정함 수리신청	더난터	수리신청서
58	3층로비 식수대 벽면 시트지 작업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59	로비계단 후면 스텐몰딩 작업(2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0	레스토랑 DOOR 상.하 힌지 수리신청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참고자료 2-21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61	3월 휴가계획서 작성제출(사무부/조리부)	본선	정현선
62	2월 선용품 사용현황 제출(사무부/조리부)	본선	강 용
63	복지환경 작업완료 사양서 작성후 메일전송	본선	양대홍
64	CCTV 모니터 장소명 표기 후 코팅	본선	강 용
65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본선	양대홍
66	S-4 신발장 밑면 카펫보강작업(좌.우현 2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67	S-4 트랜스포머 철거 작업(우현 1곳)	본선작업	
68	S-4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교체(내부)	본선작업	
69	객실 구명동의 수량표기 수정	본선작업	
70	객실 채널표(일본어표기) 제거작업	본선작업	
71	S-1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교체(내부)	본선작업	
72	S-1 환풍기 청소 및 조립작업	청소용역	
73	3층 선수 남.여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본선작업	
74	S-2 환풍기 청소작업	청소용역	
75	S-3 환풍기 청소작업	청소용역	
76	3층 장애우화장실 출입문 시건장치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77	4층 선수 남.여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본선작업	
78	4층 선미 화장실 소변기 앞 벽면 실리콘 보강작업	풍성산기	
79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본선작업	
80	전기 등기구(샤워실,객실입구 S-4) 마감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2013년 2월 27일(수)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81	4층 선미 샤워실 샤워기 배관 파공 누수 불량	풍성산기	수리신청서
82	4층 선미 남자샤워실 세면대 중간벨브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83	4층 선미 남.여샤워실 탈의 수납장 신설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4	4층 선미 남자샤워실 앞 외부출입문 도어크로저 신환	더난터	수리신청서
85	베드룸 침대등 불량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86	B-20 스탠다드룸 천정스팀라인 동파이프 파공누수	더난터	수리신청서
87	신객실 출입문 고정고리 설치작업(3층:13곳,4층:20곳,5층:6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8	여객구역 객실 출입문 도어크로저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89	편의점 천정등기구 상층부 아크릴설치 작업(9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90	객실내 전기콘센트 불량 신환(S-1,S-4,F-1,4,5,9):8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91	S-4 객실 트랜스 테이블 고정작업	더난터	수리신청서
92	S-2 객실 출입문 정첩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93	객실내 벽면 파손 보수작업(F-7,F-8):3곳	더난터	수리신청서
94	객실내 입구 바닥장판 파손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95			
96	객실 댐퍼작동불량(B-2,3,6)		
97	객실 출입문 손잡이 불량(F-8,B-24		
98	객실 침대등불량(F-11-D,B-12-D,B-17-F,D)		
99	객실 침대등불량(B-21-A,G,B-9)		
100	객실 도어크로저불량(B-2,5,13,24,26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2014.07.25.)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4. 7. 25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복원 결과 발표’ 및 이른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

국정원은 舊국토해양부(現해양수산부) 요청(2013년 2월 20일)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3월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4월11일 해양수산부(비상계획관)에 통보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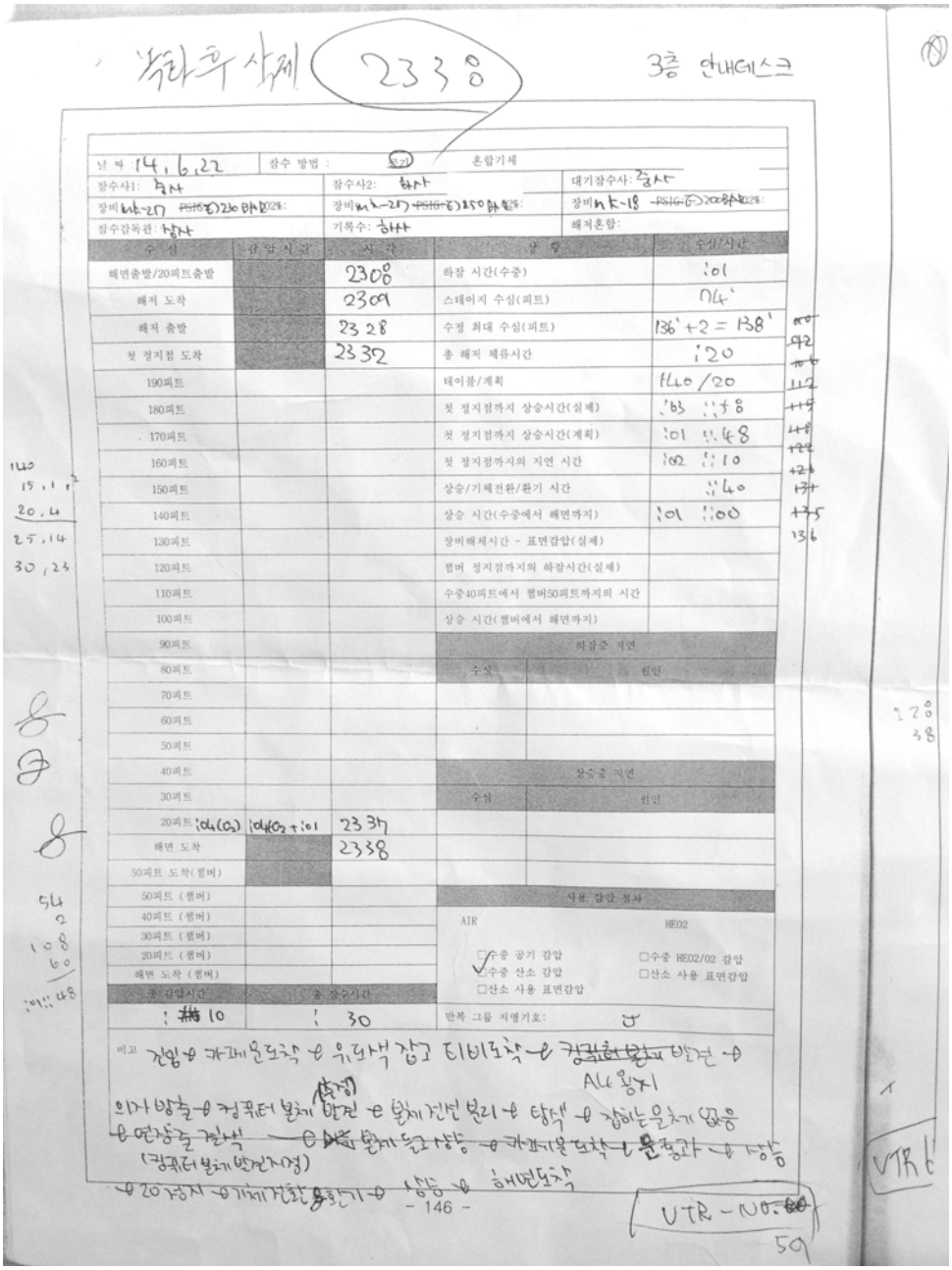
*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항공기는 전쟁·테러 등 비상사태시 敵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

당시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 ▲선원 침실·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이 미비점으로 지적됐음

이에따라 국정원은 ▲CCTV추가 설치 ▲비상상황 발생시 각 임무 숙지 ▲진화장비 추가 ▲비상 대피로 확보 등 미비 항목별로 개선 대책을 제시하였음

가족대책위가 25일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 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음

DVR 인양 해군 잠수기록지(2014.06.22.)



작업후 사체 2338

3층 안내데스크

날짜 14.6.22	잠수 방법 : 공기	혼합기체	
잠수사1: 홍사	잠수사2: 함사	대기잠수사: 홍사	
장비 MK-21 ~~PSHG-E 250 bar~~	장비 MK-21 ~~PSHG-E 250 bar~~	장비 MK-18 ~~PSHG-E 200 bar~~	
잠수감독관: 함사	기록수: 함사	해저혼합:	

수심	감압시간	시각	항목	수심/시간
해면출발/20피트출발		2308	하잠 시간(수중)	:01
해저 도착		2309	스테이지 수심(피트)	N/A
해저 출발		2328	수정 최대 수심(피트)	136' +2 = 138'
첫 정지점 도착		2332	총 해저 체류시간	:20
190피트			테이블/계획	HL40/20
180피트			첫 정지점까지 상승시간(실제)	:03 ::58
170피트			첫 정지점까지 상승시간(계획)	:01 ::48
160피트			첫 정지점까지의 지연 시간	:02 ::10
150피트			상승/기체전환/환기 시간	::40
140피트			상승 시간(수중에서 해면까지)	:01 ::00
130피트			장비해체시간 - 표면감압(실제)	
120피트			뭄버 정지점까지 하강시간(실제)	
110피트			수중40피트에서 뭄버50피트까지의 시간	
100피트			상승 시간(뭄버에서 해면까지)	
90피트			하강중 지연	
80피트			수심	원인
70피트				
60피트				
50피트				
40피트			상승중 지연	
30피트			수심	원인
20피트 :04(02)	:04(02)+:01	2337		
해면 도착		2338		
50피트 도착(뭄버)				
50피트 (뭄버)			사용 감압 절차	
40피트 (뭄버)			AIR / HE02	
30피트 (뭄버)			☐수중 공기 감압 ☐수중 HE02/02 감압	
20피트 (뭄버)			✓수중 산소 감압 ☐산소 사용 표면감압	
해면 도착 (뭄버)			☐산소 사용 표면감압	
총 감압시간	총 잠수시간		반복 그룹 지명기호: U	
: 제10	: 30			

비고 간밤에 카메라모듈 & 위치색 잡고 티비도착 ~~경계선 부표~~ 발견 & 인양 방침 & 컴퓨터 분석 (변경) ALE 원치 인가 방침 & 컴퓨터 분석 완료 & 원격 지원 부리 & 탐색 & 잡아는 올리게 성공 ~~& 연장줄 결박 & 부표 묶고 상승~~ & 카메라모듈 도착 & 분리작업 & 상승 (컴퓨터 분석 변경사정) & 해면도착

- 146 -

UTR-NO.60

59

세월호 실종자가족 팽목항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그리고 진도군민 여러분

오늘로 세월호 참사 100일째, 저희는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을 떠나니는 10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아직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고통스런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먼저,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께 가슴 아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저희는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를 찾아와 격려해주시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려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색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숙박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실종자 수색을 지휘하고 계신 이주영 장관님과 김석균 해경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반드시 모셔드리겠다고 약속해주셨기에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팽목항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 곁에서 참사를 당한 작은 영혼 하나하나를 위로해주신 진도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저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어선을 동원하여 수색구조에 도움을 주셨고, 진도체육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은 최근에 진도군의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도의 아픔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이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희를 기억해주시는 국민여러분의 마음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군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정부, 국회에 다음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참사 100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수색이 되지 않은 구역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구역에 대한 정밀수색을 마쳐 마지막 실종자 10명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고, 10명의 실종자를 기억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둘째, 지금까지 많은 국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께서 저희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오셔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군민들을 위해, 진도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서 진도를 기억하고 찾아주실 때입니다. 저희는 진도와 진도군민들을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이 곧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정부에 호소합니다. 진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부지원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지원 및 경제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 참사의 희생자들이 왜 희생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아직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조차 못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곡기를 끊고 노숙을 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신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참사가 벌어졌기에 전례 없는 시스템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4. 7. 24.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일동

교황께 드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서신(2014.08.14.)

1.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희들은 4월 16일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가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배에 탑승했던 304명이 수장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을 헤매는 10명의 실종자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남은 10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극도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며 사선에 서 있습니다.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많은 가족들이 탈진하여 쓰러지고 있으며, 한 명의 실종자 가족은 한쪽 폐의 2/3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고 다른 가족은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딸을 찾기만을 기다리며 수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노숙을 하며 120일이 넘도록 참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교황님의 자비와 축복의 손길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젖은 잠자리 밑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팽목항에는 그 목소리가 넋이 되어 울리고, 가족들의 눈물과 절규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진도의 참사현장은 진행형임에도 남은 실종자가 10명이라는 이유로 저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하신다는 소식을 이 곳 진도에서도 전해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저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교황님께서 참사 현장인 이 곳 진도 팽목항에 방문해주셔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합니다.

4. 교황님, 이를 통해 저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국민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신의 가호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며 부모와의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 또한 차디찬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목놓아 통곡하며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실종자 가족들과 잃어버린 10명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교황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자식을 찾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커다랗게 뭉친 피멍을 안고, 어깨와 등에 자식의 십자가를 뼛속 깊이 박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저희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교황님의 위로와 안식을 위한 기도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라는 말씀이 교황님을 통해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받는 참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구원의 손길로 다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 교황님 당신 앞으로 갈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삶의 보석과 같았던 실종된 아이들, 선생님들, 일반인들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꼭 기도해주십시오. 우리는 교황님의 방문을 눈물과 아픔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실종된 이들이 바다에서 더 이상 춥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황님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2014. 8. 14.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일동

Your Holiness, Pope Francis, from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from the Sewol tragedy

Most Holy Father, we are the families who lost our loved ones on April, 16th, when our beloved ones were on board the Sewol ferry, heading for Jeju Island. South Korea has been in deep sorrow and shock as the whole nation watched the live broadcast of 304 passengers being swallowed by the ocean. 10 missing people are still wandering over the deep cold water, and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bosom of their families.

Families who are anxiously waiting for the last 10 missing passengers are standing on their edges of life, enduring unbearable agony and sorrow at Paengmok Harbor. Many have fainted due to extreme exhaustion, and one of the family members had to go through a lung surgery to remove 2/3 of his one lung. Another family member is not receiving his brain tumor surgery, as all he wishes for is finding his daughter from the deep ocean. We are going through this severe pain for over 120 days, staying up days and nights at Paengmok Harbor. We pray to the Lord for the reach of His blessings and mercy on us through your holy hand.

We feel like our missing children are crying on the wet beds waiting for the reach of a helping hand. At Paengok Harbor, their voices are echoing and their families' tears and painful outcries are unending. We are still unable to escape from this ocean of agony, and although the Sewol tragedy is still on-going, we are being forgotten as there are "only" 10 missing passengers left. Your Holiness, we heard that you are meeting the bereaved families. Please, Your Holiness, we beg for your prayer for the blessings of the Lord onto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so that we don't let go of the courage and strength to fight against this time of sorrow and so that the people of Korea remember us. And we beg for your presence at Paengmok Harbor, to hold our grieved hands.

Also Your Holiness, we beg for your prayer for our sons and daughters in the ocean, so that they can say goodbyes in the bosom of their parents, and also for us, to be able to let our loved ones go to the heaven after the last

encounter we longed for. We sincerely wait for the reach of your prayer upon us, as we are unable to find our children and will live the rest of our lives with huge bruises in our hearts.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Matthew 11:28)"

We pray that these words may get to us as a saving hand through our prolonged encounter with you, to comfort the suffering souls of ours.

Our Most Holy Father, on behalf of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who can't come near you, please pray for the missing students, teachers, and people who were the jewels of our lives. Please pray for us with all the people of South Korea. We bless your visit to South Korea with tears and pain. We sincerely hope for the Lord's love upon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through Your Holiness, and your presence at Paengmok Harbor.

2014. 8. 14.

With every best wish. Sincerely yours,

the families of those missing from the Sewol ferry tragedy

교황이 실종자 가족에게 보낸 서신(2014.08.17.)

✝ 그리스도의 평화

2014. 8. 17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 전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도 희생자들을 품에 안지 못해 크나큰 고통 속에 계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실종된 단원고등학교 학생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황지현, 허다윤,
단원고등학교 교사 고창석, 양승진,
일반승객 권재근, 이영숙, 그리고 일곱 살배기 권혁규 어린이가 하루 빨리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주옵소서."

실종자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실종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Servus Servorum 프란치스코)

Francisco

세월호 특위 기자회견문(2014.09.29.)

1. 정부는 4·16 참사 이후 진도체육관을 임시수용시설로 제공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 마치 난민촌과 같은 이 곳 체육관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167일째 반노숙생활을 해야 했고, ▲ 언제나 등이 켜져 있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프라이버시조차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삶의 유일한 희망을 간절히 기다리며 정부가 지정한 장소인 진도체육관에 머물러 왔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의 건강 또한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수술로 폐의 절반을 잘라낸 가족, 급성폐렴으로 입원했던 가족, 뇌종양을 앓고 있는 가족, 한쪽 다리의 마비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 등 실종자 가족은 약과 링거가 없이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4월 16일이 재현되며 반복되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10명, 그러나 아직도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격실이 존재하고, 선체 내부 정밀수색은 기상여건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남은 극소수의 실종자 가족은 비탄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민대책위원회 50여명은 25일 저녁에 진도체육관을 방문하여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전 연락 없는 갑작스런 방문에 소수의 실종자 가족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자리를 피할 수 밖에 없었고, 힘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자 내려오신 유가족들이 항의를 듣고 저희 실종자 가족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4. 군민대책위원회 50여명의 항의 방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실종자 가족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쏟아지는 눈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갈 곳조차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마치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조되어 살 수 있었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아이를 억울하게 잃었고,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을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는 아직도 눈물로 가득한 고통의 바다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나약한 저희의 처지를 이해해주셔서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진도군민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정부가 진도군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오지 못하고 있었기에 군민대책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체육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 상황을 저희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희에게 진도체육관을 임시거처로 마련해 제공하고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한 것도 정부이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재난 수습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군민대책위가 언급한 장소에 있어서는, ▲ 팽목항에서 바다를 보고 오열하는 트라우마를 반복해 경험해야 하는 엄마들은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진도체육관에 머무르고 있기에 팽목항으로 옮기라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 전남대 자연학습장 또한 바다가 펼쳐져 있어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저희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족을 잃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피해자와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군민들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사를 해결하고, 치유가 시작되기도 전에 실종자 가족의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으며 나약한 소수의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정부에 진도군민과 실종자 가족이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6.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 역시 진도군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 군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실종자 가족, 군민 3자가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 동안 군민대책위는 정부에 군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지 못하여 군민대책위가 다시 실종자 가족을 찾아오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참사의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실종자 가족과 군민대책위원회, 대안 마련의 주체인 범대본과의 '3자 협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소통의 부족이 오해를 낳아 정부, 군민, 실종자 가족 간에 불신과 깊은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3자 협의를 제안하며 서로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세월호특위 '3자협의' 결과브리핑(2014.10.01.)

실종자 가족,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진도군민이 상호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을 열고 3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및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체육관 문제의 해결에 있어,

첫째, 범군민대책위는 ▲ 동절기를 앞두고 실종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대안 시설이 필요하며 ▲ 처음처럼 실종자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할 실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이주영 장관님은 이 제안에 대해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해 참사의 피해자들인 실종자 가족과 군민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 진도체육관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구 제안에 실종자 가족이 함께한다면, 정부에서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책임있게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여토록 하여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는 모든 지원을 100% 다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실종자 가족은 가장 소중한, 삶의 모든 것이었던 자식을 잃고 탈진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6달 넘게 지속되면서 간절한 기다림의 염원이 응축된 진도체육관이 가지는 의미가 그 무엇보다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진도군민들이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머무르는 동안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 정부가 실종자 가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에 감사드리며 ▲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도체육관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TF)' 구성에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수임기구(TF)를 통해 3자의 실무 책임자들이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시기, 지원 범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2014.05.27.)

1.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고 직후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린 것에 이어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잠수사들을 모욕한 발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실의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잠수사들의 사기 저하는 곧 실종자 수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엿새째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지만, 저희는 현장 바지선을 통해 민수사들께서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사들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도 실종자 가족의 애절한 마음으로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역시 잠수사 여러분을 위해 낙지, 충무김밥, 김치찜 등을 조리하여 바지선으로 갖다드리면서 최선의 환경에서 구조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지선에서 만난 민간잠수사들은 우리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수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잠수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가족들을 위해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진정성을 마치 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자존감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잠수인력 및 장비축소에 대한 입장(2014.06.29.)

1. 잠수사 인력 축소와 관련해 장기간 수색으로 피로에 지친 잠수사들의 교대 수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잠수사들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실종자 수가 적다면 오히려 잠수시간을 늘리고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실종자 수가 적다고 수색구역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밀수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수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잠수인력 역시 충분하게 충원되어 잠수사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11명 남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잠수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 총리님께서 27일 실종자 가족을 방문하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대조기와 중조기에 잠수사들을 전원 철수시킨다는 내부 방안은 정부의 방침이 현장 지휘체계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기와 중조기에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시기에 잠수사들을 전원 철수시킨다는 방안은 11명의 실종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종자 아버지, 어머니, 가족의 마음으로 대조기와 중조기에 유속에도 불구하고 심해잠수를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과연 있는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명이 남았다고 하여 수색을 포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있는 태도로 현장 지휘체계를 제대로 세워 총리님께서 실종자 가족에게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장관 복귀요구 여당대표 발언에 대한입장(2014.08.08.)

1. 금일 오전 10시, 실종자 가족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귀 요구 발언과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진도군청 4층 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중략)

2. 참사의 희생자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i)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헌법 제34조 제6항) 라는 헌법상 책무를 실종자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하는 것이며 ii) 국민 누구라도 억울한 희생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라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밝혀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외면받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금일 면담을 통한 이주영 장관님의 (진도 참사현장을 지키겠다는) 10명 실종자 가족에 대한 약속이 실종자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국민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김무성 여당 대표님께는 다음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실종자 가족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장관이 진도 팽목항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장관에게 (세종청사 업무로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하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가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일 면담에서 이주영 장관님은 실종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며 품속에 있는 실종자 10명의 전원의 사진을 꺼내어 한 사람씩 넘겨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4월 16일의 참사를 반복해 살고 있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함께하며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115일째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이주영 장관님의 진정성을 여당 대표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국가에 대한 믿음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휘하고, 실종자 가족 및 희생자의 목소리를 현장

에서 경청해 그 고통에 함께하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국민적 대참사의 현장을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당 대표님은 이주영 장관님이 사고 현장을 지휘하는 범정부 '사고대책' 본부장 이라는 점과 '해답은 현장에 있다' 고 명시했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선언문의 내용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32

20140420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대표단으로 파견된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배의철 변호사 (퍼블릭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 새벽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변호사들, 국민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협 회장님께 요청 드리고 공감을 얻어 변협 대표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저녁때까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며 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움, 해경, 해수부, 국무총리실 등의 브리핑의 문제점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직접 와서 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 여러분께 지속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틀 사이에도 진도에 가면 변호사가 도움이 될 일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러 변호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① **대표단의 단순 실무** (저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아픔에 조금이라고 공감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② **대정부 협의/협상, 언론 대응 자문 및 조언, 협의/합의 내용 법적 검토** (저희는 그동안 주로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정부부처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③ **대표단, 가족분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상담**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즉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청이 있으시면 변협 차원에서 회원들을 조직하며 최대한 전문적인 자문 혹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구조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참여 및 조사

⑤ 국가배상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⑥ 재난・사건 시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활동 등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족분들과 함께 진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안) 대표단의 실무진으로 결합하여 대표단과 가족분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안
(이 경우 변협 대표단의 지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2안) 대표단의 실무진은 아니되 대표단의 인정을 받아 대표단과 긴밀한 협의 하에

대표단의 지원요청에 응하는 활동을 포함한 활동을 하는 방안 (이 경우 계획된 활동의 내용, 진행된 활동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대표단과 공유함.)
대표단, 가족분들과 논의하셔서 다음을 결정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원 혹은 결합을 원하시는지
2) 원하신다면 그 지원의 내용(위 ①~⑥ 중 하나 이상)과 형식(위 1, 2안 중 하나 혹은 제3의 안)은 어떠한지.

어떠한 내용 혹은 형식의 활동이든 무료 자원활동임은 당연한 전제이고, 특히 대표단 실무진으로 결합할 경우에는 대표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 언론 접촉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자료 2-33

20140428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

1. 대한변협 진도 2차 파견 활동기간

- 황필규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가 4월 25일(금)~27일(일) 3일간 2차 활동

2. 진도 현장 상황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가. 진도실내체육관

○ 구조 초기와는 달리 시신이 187구 수습되어 절반 이상의 가족들이 체육관을 떠나 이전보다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사고 초기 매일 오전, 저녁 2차례 정도의 가족대표 브리핑 및 정부의 구조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시신 발견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긴급가족돌봄 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체육관 입구에 책상을 놓고 '긴급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개요' 및 '가족 정서 회복 지원 안내' 에 대한 간단한 안내문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음. 가족 지원에는 연계서비스로 *법률, 의료, 복지 서비스 기관 등으로 연결하여 지원받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의 경우 현재 연결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26일부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피해자 가족별로 1대1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희생자 이송에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을 밀착하여 지원하기로 함

나. 팽목항

○ 가족들은 24일까지 수습을 마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조에 진척이 없고 사고 현장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수색 과정의 혼선,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의 구조상황이 전혀 다른 사실 등이 보고되었음. 이에 격앙된 가족들은 24일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범정부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해경청장에게 구조에 관한 책임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수색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면담을 지속함

○ 현재 팽목항에서는 오전 9시, 저녁 7시 정부 구조상황 브리핑이 가족대책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5일 오전 9시 가족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가족들은 해경, 해군이 민간의 구조를 막고 있고 그 원인으로 정부와 계약한 언딘마린인더스트리를 지적하며 구조상황 혼선의 원인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 가족들은 다이빙벨의 투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언딘과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판단, 현장 구조책임자를 가족본부로 소환해 다이빙벨을 제작한 알파잠수공업의 이종인 대표와 현장 구조책임자 및 가족들과 3자 회동을 해야한다며 거세게 항의함

○ 정부는 오후 7시에 책임자를 모두 모아 면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가족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함. 이에 해경에서는 오후 2시로 면담시간을 당기겠다고 하였고,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1분이 급한 상황에서 해경의 늦은 대응을 질타함. 이에 오후 12시에 언딘대표, 이종인 대표, 해수부 장관, 해경 차장, 가족들이 함께 회동을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다이빙벨은 이틀 뒤에 다시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정부의 구조와 관련된 회동이 결론없이 마쳐지자 가족들은 고함을 치며 신속히 시신을 수습할 것을 요구함. 현장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여 가족 관계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거나 말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 가족들이 정부에게 언론 등 가족 이외 접근자들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후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로 인해 추가 수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신의 유실이나 부패,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

3. 현장에서의 활동 내용

가. 현장 상황 파악 및 기록

○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부모대책회의, 정부와의 면담 등을 녹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들이 기자들의 진입을 막아줄 것을 해경에 요청하여 대책회의 등이 있을 때 사복해경들이 가족본부 주위의 기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쫓아내고 있는 실정임. 정부가 가족들에게 언론을 통제해주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가족 뒤로 숨은 형국이어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그에 따른 대비책 등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

참고자료 2-33

나. 실종자 학부모와의 팽목항 현장 면담 (총 3인의 학부모)

○ 실종자 학부모들에게 변호사임을 밝히고 대화를 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극심한 비탄에 빠져 탈진 상황인 부모들은 오직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므로 현장 상황의 정확한 기록과 요구사항 정리 등에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음

○ 뿐만 아니라 미숙한 대응으로 구조 초기의 시간을 놓쳐버린 정부, 초기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언론, 학부모 대표로 초기에 나섰던 송○○ 목사 등에 대한 반감이 극심하여 가족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여 가족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족대책회의, 정부와의 면담 등에 임하고 언론마저 모두 쫓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현재 필요한 것은 '구조' 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은 구조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3명의 학부모와 면담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학부모님들은 초기부터 변호사가 결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전에 학부모, 일반인 대표를 자체 선임하였다가 계속 교체되고 학부모들의 수많은 요구를 대표단이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실종자 대표는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이며 가족대책회의, 정부와의 협의 모든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의견들이 거센 항의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므로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조력하는 결정을 실종자 가족 전체의 의견으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

○ 그러나 이후에 작은 부분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 상호 연락을 요청하여 실종자 학부모 3인 중 현재 핸드폰 통화가 가능한 학부모의 연락처를 받고 명함을 드림

○ 지○○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 010-6***-8***

다. 전화 면담 (실종자 학부모 및 친척, 2인)

○ 사건 3일째 기자를 통해 소개받은 학부모와 통화를 하였으나 시신이 아직 실종 상태임에도 다른 유족들의 장례를 추모하기 위해 현재 안산에 있으며 많은 변호사들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임.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대한변협의 지원이 가능함을 밝히자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음. 따라서 대한변협 차원의 진정성있는 법률지원 노력이 이제는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차 파견 때 다른 변호사를 통해 연결이 된 단원교 교사의 친척과 통화를 하였음.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여전히 경황이 없고 현장에서 탈진한 상태라고 함. 앞서 말한 다른 모든 실종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시신을 찾는 ‘구조수습’ 방안 마련과 정부를 강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장에 있던 친척이 다시 전달하고 대표단의 전화번호를 전해준 상태임

○ 실종자 교사의 친척 시신이 수습될 경우 향후 절차에 있어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함

라. 천주교교구 천막 방문 면담

○ 천주교 교구 천막에 방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를 받으며 상담을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천주교 교구 천막의 신부, 수녀님들을 방문하여 면담함

○ 정부에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신부, 수녀님들 역시 학부모들은 수색 이외에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불신이 팽배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함. 신부, 수녀님들은 학부모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있으며 질문을 하거나 자세한 것을 물어보지 않고 단지 경청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고 함

○ 학부모들이 신부, 수녀님들께 진척이 더딘 답답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혹시 조력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변호사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명함을 몇 장 더 드리고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변호사들이 실종자, 유족을 조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함

마. 외신 기자들과의 대화

○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임. 그러나 사건 초기, 가족들의 호소나 요청을 보도하지 않는 국내 언론과는 달리 외신의 경우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팽목항에서의 정부 면담 때 외신과 아프리카TV(인터넷 생중계)만 참여시킨 전례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언론의 접근이 없어야 대화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모든 언론이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

○ 현장에서 일본 기자 2인(요미우리 통신, 문예춘추 기자)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음. 그 중 문예춘추 기자(*** 기자)의 경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일반인 실종자 가족을 어렵게 인터뷰 할 수 있었다고 함. 따라서 *** 기자에게 인터뷰를 한 일반인 실종자 가족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함 (차후 인터뷰 내용 전달 요청 필요)

○ 그러나 실종자 가족이 현재는 경황이 없고 힘들어 변호사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명함을 전달하여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연락을 하여 달라고 부탁함.

○ 요미우리 통신 *** 기자 (010-3***-1***),
문예춘추 *** 기자 (korea***@yahoo.co.jp)

바. 현장에 상주하는 기자들과의 대화

○ 그 밖에 현장에 상주하는 MBC 전** 기자 (010-7***-1***), 뉴스타파 박** 기자 (010-3***-4***), 한겨레 서** 기자 (010-3***-0***), 연합뉴스 최** 기자 (010-4***-0***), JTBC 성** 기자 (010-2***-5***) 등과 대화를 나눔

○ JTBC 성** 기자의 경우, JTBC로 학부모 실종자 이전 대표였던 최** 대표가 찾아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향후 최** 대표와 연락하여 법률지원과 관련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에 협조하겠다고 함. 최** 전 대표에게 명함을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함.

○ 향후 증거확보, 사건 현장 상황 협력 등을 위하여 광주회 등에서 현장 지원이 가능할 경우 다수의 현장 취재 기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대한변협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및 회의

집행부 방문: 위철환 협회장,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김정욱 사무차장
현장: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

회의 내용과 결과

○ TF는 법률지원단을 모집하여 협상지원, 소송대리지원, 상담지원, 진상조사 등 법

률지원단 내에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변호사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천안함 사건, 대구지하철 사건, 서해페리호 사건등 국내 선례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로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대응 등 참고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언론사를 섭외하여서 미리 자료를 주고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 배포는 TF 구성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알리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공표

○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때에는 각 변호사들이 가족들과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속히 교육 내용을 확정하고 변호사 지원신청을 받아 워크샵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참석하지 못한 변호사의 경우 교육을 동영상 촬영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TF 위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각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

○ 현장 활동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지방회가 현장에 결합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1차, 2차, 안산 파견 지출 내역 (교통비)

날짜	내역	금액
4. 19.	차량 주유	80,000
4. 20.	차량 주유	70,000
4. 21.	차량 주유	30,000
4. 23.	차량 주유	60,000
4. 25.	차량 주유	60,000
4. 27.	차량 주유	70,000
4. 20.	톨게이트 (1차)	16,900
4. 21.	톨게이트 (1차)	16,900
4. 23.	안산 톨게이트 왕복	6,900
4. 24.	톨게이트 (2차)	17,100
4. 27.	톨게이트 (2차)	17,600
총계		**445,400**

참고자료 2-34

20140428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2014. 4. 28.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주요 내용

(1)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과

(2)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즉각 실시 (법률지원단 구성 및 교육, 체계적 지원 포함)

(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 지원

(4)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공익소송 지원

(5)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 제안 및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 진행 (관련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등 포함)

(1) 변협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1) 내용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변협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과 관련한 조직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② 변협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 대한 감시나 법제·관행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바 없습니다.
③ 변협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얻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들에 대한 법률자문, 정부와 언론에 대한 감시와 협력 등 지원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④ 변협은 과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대정부 협상 자문, 개별적인 법률상담 등 조직적인 활동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⑤ 변협은 과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포괄적·실질적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건 발생 및 정부의 부적절한 사후 대응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제·관행의 개선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 바 없습니다.

변협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협이 무엇을 하여야 하였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지는 자세가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 받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그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2) 실행 계획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대국민 사과의 내용에 포함.

(2) 변협은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에 조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 내용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언론과 여론에 의한 확대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장례, 보험, 보상/배상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당장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교육, 고용, 건강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변협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안산 임시분향소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여성가족부도 긴급가족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 서미스 기관 등에 연락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가족 밀착형으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 치료 등 다른 비법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하고 모든 치유・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갖춘다면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혹은 상호보완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 내용에 포함.

② 구성

- 단장은 TF에 참여한 상임이사 중 1인이 맡음.
- TF 또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단 구성
- 사무국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 사무국 구성
- 지방 변호사회, 로펌들에 동참 적극 촉구하고 변협 전체 프로그램에 직접 결합하거나 이를 상호보완하는 지방 변호사회, 로펌 차원의 참여 권장 (필요한 경우, 긴급 회의를 소집)
- 4. 28. 계획 공표 후 일단 세월호 TF 위원 혹은 TF 위원이 직접 섭외한 변호사들를 중심으로 활동 개시
- 4. 28. 계획 공표 후 변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 변호사 신청 접수 (일단 2주간의 집중 신청기간을 두되 이후 상시 접수 시스템으로 전환)

③ 홍보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전후로 체계적인 언론 작업
- 4. 28.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배포하고 진도 실내체육관, 팽목항, 안산 분향소, 장례식장 등에서 게시 및 배포
-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 상담 시 안내 요청
- 변협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접촉 가능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안내 요청

④ 교육

- 교육이 의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4. 28. 계획 공표 후 변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 변호사 신청 접수 시 법률지원단 교육 안내 공지
- 교육은 **세월호 사건과 법률가의 역할, 장례, 보험, 보상/배상 등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상담 시 유의할 점** 등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함.
- 5. 3. 오전 및 오후에 진행하되 녹화를 통하여 직접 참석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바

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내용을 매뉴얼화하고 상담내용이 쌓이면 추가적인 매뉴얼 자료를 작성 & 배포함.

⑤ 활동

-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변협 및 지방 변호사회 문의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피해자 가족 나이와 유사한 나이의 경험 있는 변호사, 법률지원단 교육 이수자 등등을 고려하여 배치함.
- 모든 상담 내용은 문서로 정리되어 법률지원단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조사, 교육, 매뉴얼, 진상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함.
- 직접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함.
- 기간은 일단 3개월로 하되 사태의 추이를 보고 연장 가능함.

⑥ 예산

- 방문 상담 1회 10만원+교통비 / 전화상담은 비용 없음.
- 교육의 경우, 자료복사 등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탑승객이 476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인권재단, 법률구조재단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회원, 로펌을 상대로 모금을 고려할 수 있음.

(3) 변협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1) 내용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신, 정부의 부실한 대응 등 사건 수습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 분노가 더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특히 보상절차 등의 경우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률적 검토와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쉽게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협상 지원 내용에 포함.

② 구성

- TF 위원 중 1인이 책임지고 협상지원단위를 총괄
- TF를 중심으로 협상지원단위 구성

③ 홍보 및 활동

- 언론 보도자료와 가능한 피해자 가족 접촉 등을 통해 협상 지원활동의 취지와 내용을 알림.
-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피해자측 집단의 개별적 협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협 협상지원단위에서 의견조율 등을 꾀하고 불가피한 경우 각 피해자측 집단에 결합 변호사들은 그 이해에 충실하도록 함.

④ 예산

- 자체 회의, 피해자측 집단과 협의, 정부 등과의 협상에 대하여 회의비 지원
- 필요한 연구조사가 있을 경우, 일정한 연구조사비 지급

(4) 변협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이 사건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1) 내용

참고자료 2-34

과거 인재의 성격을 지닌 재난의 경우, 협상을 통한 보상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배상 등 피해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변협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사건 전체를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건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협상 지원 내용에 포함.

② 구성

- TF 위원 중 1인이 책임지고 소송지원단위를 총괄
- TF 또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지원단위 구성

③ 활동

-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언론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드러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조사를 진행함.

④ 예산

- 변협 차원의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복잡성, 소송 진행과정에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5) 변협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를 제안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 내용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잘못된 법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시작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와 관련 진상조사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던 국회의 진상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의 흐름이 존재하지만 정부, 국회, 민간의 진상조사 모두 부분적인 진상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이 모든 흐름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과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민관합동, 범국민 진상조사를 제안, 이에 결합하고 그 결과가 이 사회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되어야 하고 국내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분석, 외국의 입법례, 관행,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이 사건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며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2) 실행 계획

① 공표

- 4. 28. 대국민 성명 발표 시 진상조사 관련 내용에 포함.

② 구성

참고자료 2-34

- 단장은 TF에 참여한 상임이사 중 1인이 맡음.
- TF 또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구성
-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사무국 구성
- 지방 변호사회, 로펌들에 동참 적극 촉구하고 변협 전체 프로그램에 직접 결합하거나 이를 상호보완하는 지방 변호사회, 로펌 차원의 참여 권장 (필요한 경우, 긴급 회의를 소집)

③ 활동

-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정부, 국회,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협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시작하되 범국민 진상조사단위가 구성되면 그 실무단위로 적극 결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단 활동을 진행함.

④ 예산

-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진상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01405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 한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고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신뢰 재건에 앞장서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 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하여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참고자료 2-36

20141230 현장 대응 활동 (안산) (초안)

I. 활동 목표

1. 피해가족 법률상담 등 지원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구조 작업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피해가족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직접적인 현장 개입을 통해 필요한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2. 피해가족 조직 안정화, 유지 지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직접적인 관련 피해가족만 천명이 넘은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당연히 많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사회적인 경험과 삶의 방식을 가진 피해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의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조직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하였다.

3. 피해가족 활동 지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생계 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대응이 미비하였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및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에 피해가족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부, 국회 및 경찰 등을 상대로 별다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물론, 내용적인 설명 및 자문, 협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II. 활동 내용

1. 피해가족-변협 관계 & 지원체계 수립 활동

(1) 변협–피해가족 관계 수립 과정 일지

4/16 세월호 참사 발생
4/17 변협 협회장 현장조사단 파견 결정
4/18 상임이사 중 담당 결정, 현장조사단 결정, 변협 인권위원회 자문, 공익변호사모임 임시모임 & 자문
4/19-4/21 변협 현장조사단 1차 진도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 팽목항 상황 파악
4/20 변협 현장조사단,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에 법률지원단 제안
4/21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 법률지원단 제안 거부 의사
4/21 변협 현장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장단기 활동 제안
4/21-4/24 변협 현장조사단, 1-4차 안산 방문, 안산 상황 파악
4/23 변협 세월호 TF 1차 회의
4/25-4/27 변협 현장조사단 2차 진도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 팽목항 상황 파악
4/27 변협 위철환 협회장,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진도 방문
4/27 변협 현장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활동 긴급 제안
4/30 변협 세월호 참사 관련 입장 발표
4/30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모집 안내
5/03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샵 개최
5/05 변협 TF, 세월호 가족대책위 면담,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지원 계획 전달
5/16 변협, 세월호 가족대책위 협약 체결식

(2) 변협–피해가족 관계 수립 경과

1) 변협 현장조사단 1차 진도 방문

2014. 4. 18. 밤 현장에 파견된 변호사들은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을 오가며 구조활동 진행 현황, 가족들의 상태, 정부의 대응 태도 및 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구조활동과 관련된 대정부 의견 개진 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피해가족들의 경우, 언론의 오보,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 등으로 인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변호사의 접근도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몇몇 가족을 통해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변협 변호사들을 정부에서 가족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공무원으로 확신하는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4. 4. 20. 변협 현장조사단은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과, 대정부 협상의 경우 진도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에 법률지원단 제안하고 가족대표들 회의에 안건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지원단의 역할로는 ① 대표단의 단순 실무, ② 대정부 협의/협상, 언론 대응 자문 및 조언, 협의/합의 내용 법적 검토, ③ 대표단, 가족분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4] 그러나 다음날 피해가족 대표는 내부 회의에서 법률지원단 제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왔고, 따라서 피해가족을 조기에 직접 지원하고자하는 계획은 일단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 변협 현장조사단 변협 제안 및 2차 진도 방문, 수차례 안산 방문

2014. 4. 21. 서울로 복귀한 변협 현장조사단은 진도에서의 활동의 결과와 재해 발생 변호사단체 등의 활동과 관련한 미국 사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협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장단기 활동을 제안했다. 제안의 내용으로는 ① 단기적으로는 현장 법률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 등 공익소송,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폐 등의 활동을 통한 향후 관련 활동의 체계화, ② 변협 내 재난대응단위를 임시 구성 및 재난대응단위의 임시 근거 규정 마련, ③ 태안기름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국내 경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조사하여 변협 차원의 재난긴급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④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가족)이 참가하는 대통령 직속 혹은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⑤ 정부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MOU 체결 및 실시 등 재난 발생 시 정부와의 협력, 민간 차원의 공동협력활동 경험 축적 및 체계화 등을 들 수 있다.[5]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구성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안산 방문을 통해 피해가족 일부와 그 지인들을 만나 면담하고,[6] 2차 진도 방문을 진행하여 일부

4) 참고자료 1 :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2014. 4. 20, 황필규, 배의철)
5) 참고자료 2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단기 관련 활동 제안 (2014. 4. 21, 황필규, 배의철)
6) 참고자료 3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안산지역 현장 상황 순회 보고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피해가족에게 대한변협의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7]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는 진도의 경우, 변협 중앙에서의 총괄 1인 파견, 전남회에서의 순회변호사 배치, 안산의 경우 장례식장 상주 혹은 비공개 현장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긴급한 제안으로 ①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과, ②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즉각 실시 (법률지원단 구성 및 교육, 체계적 지원 포함), ③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 지원, ④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공익소송 지원, ⑤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 제안 및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 진행 (관련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등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8]

3) 피해가족들과의 정식 만남 및 법률지원 제안

2014. 5. 5. 안산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들과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협의 그동안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대한변협의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4. 30. 대한변협의 대국민 성명과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도 설명하였다. 제시된 주요 지원 가능사항으로는 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③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지원, ④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⑦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⑧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등을 들 수 있다.[9]

---

7) 참고자료 4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2014. 4. 28, 황필규 배의철)
8) 참고자료 5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2014. 4. 27,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9) 참고자료 6 :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피해자 지원 계획(안) (2014. 5. 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피해대책 TF)

참고자료 2-36

4)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의 협약서 체결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 1인이 안산 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상근을 개시하였고, 비록 대한변협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대한변협이냐 민변이냐 등의 다소 소모적인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의 공식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2014. 5. 16.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정식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협약서 상 공동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0]

"제3조(공동협력)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사항에 합의한다.

1. '대한변협' 측 협력 사항
   가.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나. 피해자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 등 법률지원
   라.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마.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등 협상 지원
   바. 피해자 등을 위한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적인 절차 및 신청·소송 지원
   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항
   아. 기타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사항

2. '가족 대책위' 측 협력 사항
   가. 단원고 학생 피해자 및 그 가족 간의 일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표성을 획득, 유지한다.
   나. 단원고 학생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전체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분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다. '대한변협'에서 파견한 'TF' 혹은 ' 특별위원회 ' 활동에 적극 협력한

10) 참고자료 7 :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안) (2014. 5. 16, 대한변호사협회)

다.”

2. 피해가족 진상규명 관련 입장 정리 자문

(1) 대한변협 결합 이전의 상황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결합 이전에도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사고책임이 있는 선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사고 초기 구조작업이 이틀 이상 지연되고 이후 구조작업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검찰의 수사내용의 공개’ 정도가 그 주장내용의 전부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족대책위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대책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은 특별검사 도입을 일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제가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과 내용 자문

2014. 5. 5. 변협 현장지원단은 일부 가족들의 요청으로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여 특검, 청문회,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이 시작했다. 5. 6. 다시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특별검사 도입 주장 논란으로 가족대책위 대표단 및 집행부에 대한 신임여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은 특별검사 등 형식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원칙과 내용의 진상규명인지에 대한 기족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가족대책위 총회와 가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조사의 목적, 피해자의 목소리 반영, 조사의 범위 및 기간, 조사의 대상 및 정보공개의 범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조직, 조사의 권한, 민간 진상조사 등의 반영,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행 및 이행감시, 예산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가족대책위 소단위별 의견수렴을 독려하였다.

원래는 5월말 정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2014. 5. 16.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를 5. 15. 받게 되어 그 때까지 수렴된 가족들의 의견을 토

참고자료 2-36

대로 다음의 원칙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대한변협과의 협약식에서 이를 밝히고 대통령 면담 시에도 이를 전달하였다.[11]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

11) 참고자료 8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2014. 5. 16,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피해가족 현장지원활동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은 광범위하고 무정형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등과 관련해 각 팀의 지원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내용적 혹은 기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이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대책위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밀착 자문에 집중되었다. 자문의 형식은 주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총회, 임원회의 혹은 반별 모임에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농성하는 현장에서 가족들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외적인 협의 혹은 협상의 자리에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현장지원활동의 주된 내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피해가족 조직 운영 및 활동 자문

-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체계 확정 및 집행부 선거, 구성 (선거관리 포함)
-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및 내규(안) 작성 및 제정
-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대변인, 분과(진상규명, 심리생계, 장례, 진도, 대외협력), 반별 활동
-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회의 등 회의 운영, 정보 공개
- 국민성금의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 세월호 가족대책위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
-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단법인화 (정관초안 작성 포함)
-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 강화 방안

참고자료 2-36

-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생계지원 및 심리지원, 트라우마센터
- 분향소 운영, 추모시설(추모비, 추모기억관, 추모공원) 내용 및 부지
- 실종자가족 지원, 실종자 수색, 세월호 인양 등

(2) 피해가족간 관계 개선, 유지 자문

-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구집행부 의사소통
- 생존학생가족모임에 대한 주요 현안 설명 및 자문 (자살시도 생존학생 사건 관련 자문 포함)
-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의 관계 개선 및 통합 가능성 모색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 10여차례 방문 포함)
-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관계 개선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로의 편입 가능성 모색 (화물피해자들 모임이 있는 제주 3회 방문 포함)

(3) 피해가족 대외관계 자문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산시민대책회의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계 설정 및 협력관계 구축
- 시민기록위원회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외부의 여러 단위들과의 관계 정립
-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대공공기관 협상 및 협의
- 분향소 주변, 이동 시, 청와대, 국회 및 광화문 체류 시 대경찰 협상 및 협의
- 대언론 활동, 다큐 제작 관련 협약안 작성 및 체결

(4) 피해가족 특별법 제정운동 및 집행 자문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 국회 국정조사특위 설치 촉구, 국정조사기간 모니터링 등 자문 및 현장지원
- 국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 (수십차례에 걸친 여야 국회의원 면담 포함)
- 국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
- 국회, 광화문, 청와대 앞 가족대책위 농성 자문 및 현장지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상 위원 추천 및 선출

Ⅲ. 활동 평가 및 전망

1. 변협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비 & 개선점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혹은 제시의 시스템 구축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특위 차원에서도 현장지원이 현장에 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지원을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관된 활동 및 활동지원의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된 활동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대응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마련, 그리고 이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변협 차원의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설정 미비 & 개선점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등 변협 특위 내의 다른 팀들과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가족대책위 뿐만 아니라 국민대책회의 등 다른 단위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변협 진상규명팀과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가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변협 특위 내의 여러 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현장지원단위와 어떻게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족 현장대응 활동 배치 부족 & 개선점

현장대응 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대응의

참고자료 2-36

활동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리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한 큰 틀 내에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현장대응 활동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필요가 있다. 즉 피해가족들의 조직체계 정비 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단계, 정리된 조직과 법제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단계 등에서 현장활동은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이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현장대응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의 형태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입법지원활동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대책Ⅱ(제도적 고찰)
- 특별검사제도, 국정조사청문회, 특별법제정의 비교

* 비교표

	특별검사제도 (현행 법제 기준)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법 제정
목적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대상이 됐을 때처럼 수사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확인, 증거제시, 정보제공 - 정부행위나 입법조치가 필요한 활동을 의회,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함	-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의 근거 마련 -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절차	1)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후, 특별검사가 임명됨. 2) 특검임명절차 :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추천 의뢰 →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7일 이내에 각 사건 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함 →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 당 1명씩 임명 3) 특검 임명이 끝난 후, 사전준비 기간(20일)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특별 검사보, 특별 수사관 등을 임명	1) 계획단계 : 중요안건인지 여부 판단, 재적위원 1/3의 요구로 청문회 개최 결정, 증인·감정인·참고인 선정 2) 예비단계 : 청문회 공고(개회 5일 전), 증인 등의 출석요구 3) 청문회단계 : 재적위원 1/4의 참여	- 일반 법안 발의 절차와 동일 -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발의 → 국회상임위 심의 및 의결 → 국회 법사위 심의 및 의결 →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대통령 공포

	4) 준비기간 만료일부터 수사시작		
장점	-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모든 권한을 허락하여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 -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등에게 수사협조 요청, 관련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입법에 필요한 정보취득 및 사실관계 파악에 용이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독자적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증거수집 및 조사권 등의 부여를 통한 기관 운영, 기능수행의 독립성 확보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나누어 지명하는 방식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능 -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진상규명이 가능 - 법률의 규범력으로 인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
단점	-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발동이 어려움 - 짧은 수사기간(통상 60일 이내), 주요 수사인력의 검찰로부터의 파견 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가 어려움 - 수사비용이 10억~20억 정도로 드는데 비하여 효과는 미미함	- 증인의 선서거부시 제재수단 없음 - 의원들의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정쟁대립으로 치우칠 우려	- 수사와 공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안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중복될 여지 있음 - 다른 제도에 비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있음 - 정부입법의 경우 발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의원입법의 경우 절차 및 기간이 정부입법에 비해 간이하나 회기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됨 - 특별법 규율 범위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될 수 있음

1.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 independent counsel]

가. 정의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에게 수사 및 기소 등 검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에 착수케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나. 목적 및 연혁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즉,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검찰이 아닌 변호사에게 검찰 역할을 맡기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1년 11월 이용호 게이트, 2003년 3월 대북 송금 의혹,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7월 러시아 유전 의혹, 2007년 12월 삼성 비자금 의혹, 2007년 12월 이명박 · BBK 주가 조작 의혹, 2010년 7월 스폰서 검사 의혹 등에 특검이 꾸려진 바 있다.

다. 절차

1) 종래의 절차

종래의 특검법안은 특별검사를 설치할 때마다 각 개별 수사범위를 한정해서 국회입법이 이루어져 왔는 바, 통합된 특검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박이인 법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래의 설명은 통상의 경우를 상정한다.

참고자료 3-1

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심의(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에 공포된다.

②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 먼저 국회의장이 특검법안 공포 이틀 안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사흘 안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 자격은 10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로 제한된다.
- 대법원장은 7일 이내에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검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사무실 확보, 특별검사보 6인 및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임명,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다. 한 번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06. 19.] [법률 제12423호, 2014. 03. 18. 제정]

가) 제정 목적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왔는바,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나) 주요 내용

특검은 수사대상과 수사범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국회의원 출석 의원 2분의 1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된다[1]. 특검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의 1명을 임명[2]하는 식이다.

다) 문제점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조건을 담으면서, 사실상 여당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사건마다 특검법을 발의해 시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

라. 장단점

1) 장점

- 특별검사는 특히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특검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

1)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사대상자는 특검이 직무범위를 일탈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 및 처분 등을 집행 정지시킬 수 있다.

2) 단점 및 한계

특별검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한계와 정치권에 의해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 내지는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반부패기구로서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3)]

- 발동의 제한 : 개별사건마다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자체로 발동이 어렵고 사건이 극소수로 제한된다.

- 비상설의 한계 : 짧은 수사기간, 주요 수사 인력의 검찰로부터의 파견, 일상적인 비리 제보 및 정보수집 기능의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특검법이 발효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특검제도 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4)]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특검제도 하에서는 수사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별검사 1명이 20여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도덕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5)]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추천기관(예를 들면 대한

3) 김선수(변호사),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내용 중 발췌

4)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기간이 규정된 이용호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5)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재직시절 향응접대 받은

변호사협회)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추천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기회 부여나 추천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내부의 협력관계(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정된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 특검법 무용론 : 위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루어진 특별검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의혹' 특검팀은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은 반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는 결론을 주로 내려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미국의 경우 특검법은 1978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의회에서 제정된 후, 의회는 2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특검을 구성했다. 하지만 4건만 성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켄 스타란 특별검사조차 특검법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미국은 1999년 특검법을 폐지했다.

<참고> 역대 특검 수사 사건(연도) 수사 결과

특검	시기	의혹	결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1999년	조폐공사의 파업에 검찰 개입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옷로비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재벌총수 부인 등 옷로비	로비 실체 인정
이용호 게이트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의 정관계로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 구속, 핵심배후로 지목된

의혹이 드러나 중도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이다.

참고자료 3-1

			김영준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은 못 밝혀
대북송금	2003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	박지원 전 장관 구속, 5억달러 불법송금 사실 밝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2003년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의 금품수수	각종 의혹 못밝혀
유전 게이트	2005년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정치적 외압	제기된 의혹 대부분 근거없음, 무혐의 결론
삼성 비자금	2008년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찾아내 조세 포탈혐의 밝혔지만, 삼성 핵심간부 불구속 기소함
BBK	2008년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불거진 BBK 주가조작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상암 DMC 특혜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 내림.
스폰서 검사	2010년	부산·경남 지역 검사의 건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받은 불법 접대	구체적 접대정황과 검찰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사 수십 명의 길명이 담긴 리스트 확보하고도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구속, 고위 인사들 무혐의 처분
디도스	2012년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 테러	사건의 핵심인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밝히지 않음. 수사기밀 누설한 5명 불구속 기소
내곡동 사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부지를실제보다 싼 값에 매입하고 대신 청와대가 추가비용 부담	경호처장 등 3명 특가법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은 무혐의 처리

2. 국정조사 청문회

가. 근거

- 국회법 제65조 제1항[6)]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7]

나. 목적

-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확인, 증거제시, 정보제공
- 정부행위나 입법조치가 필요한 활동을 의회,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함

다. 절차[8]

(1) 참여자

1) 운영주체 ;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도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가 가능하나, 청문회 제도 도입된 제13대 국회 이후 모든 국정조사는 한시적 성격의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었음.

---

6)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③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8)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③ 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11.5.19.>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⑧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9조로 이동 <1991.5.31.>]

2) 증인, 감정인, 참고인

(2) 절차

1) 계획단계
- 중요안건인지 여부 판단
- 재적위원 1/3의 요구로 청문회 개최 결정
- 증인, 감정인, 참고인 선정

2) 예비단계
- 청문회 공고; 개회 5일 전
- 증인 등의 출석요구; 국회법 제121조 제3항에 준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 필요

3) 청문회단계
- 재적위원 1/4의 참여

(3) 공개의 원칙

라. 장단점

(1) 장점

1) 입법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사실관계 파악에 용이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단점

1) 증인의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4조 참조[9)]

9) 제7조(증인 · 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 · 감정인에게 증언 ·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사례; 일부 증인들이 대상 사안 중 일부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함.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증언을 듣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 미국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언 및 증언에서 도출된 정보를 형사소추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면책권을 부여

2) 의원들의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정쟁대립으로 치우칠 우려

- 특히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에서는 교섭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국정조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쟁대립의 장이 될 수 있음

3. 특별법 제정

가. 목적

-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보상의 근거
-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나. 절차

- 일반 법안 발의 절차와 동일
-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발의-국회상임위 심의 및 의결-국회 법사위 심의 및 의결-본회의 상정 및 의결-대통령 공포

다. 장단점

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참고자료 3-1

(1) 장점

1) 독자적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증거수집 및 조사권 등의 부여를 통해 기관운영, 기능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

2)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 중립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가능;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조 참조[1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11]

3)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있어 능률의 향상 및 보다 심도 있는 규명 가능;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12],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률 제5조[13] 참조

4) 법률의 규범력으로 인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가능성

(2) 단점

1) 기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들의 경우, 주로 공소시효/소멸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현실적인 법적 제재 및 배상/보상, 명예회복이 어려운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들의 경우에 성과가 컸음; 수사와 공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안의 경우, 특별법

---

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1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 이상 전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을 통한 진상규명과 중복될 가능성

2)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수집이 어려워질 가능성

- 정부입법의 경우 발의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리고, 의원입법의 경우 절차 및 기간이 정부입법에 비해 간이하나 회기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됨[14]

3) 특별법 규율 범위의 문제

- 세월호 참사에 한정된 특별법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될 수 있음

1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의원입법임에도 제안부터 공포까지 2년 이상 걸린 반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제안 당일에 본회의 심의 및 정부 이송을 거쳐 이틀 후 공포됨

참고자료 3-2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천만인 서명 용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청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참고자료 3-2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번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와스타디움 2F “유가족대책위 사무실”
☎ 031)481-1726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박종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제도, 국가 시스템 등을 개혁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등에 이르게 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으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구성

제3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 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15] 직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3.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정한 피해자등을 위한 보상, 배상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5) 혹은, 국무총리

참고자료 3-3

6. 그 밖에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전문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16]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조사위원[17]의 구성) ① 위원회의 진상 조사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16) 혹은, 임명
17) 혹은, 조사관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구조 전문가, 선박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의사, 상담전문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률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0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그의 가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청의 방식)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고자료 3-3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3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에게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조사위원,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이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6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회와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참고자료 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청문회는 K-TV 국정방송과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한다.

제18조(진상규명 기간)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진상규명 결정)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에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를 의결로써 채택한다.

제20조(진상규명불능 결정)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13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제10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14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발·수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진상규명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의결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한다.
③ 관계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3-3

제26조(이행에 대한 감시)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등이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위 제1항의 목적을 위해 1년에 2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국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로 종료된다.

제4장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조치

제2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피해자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상금) ① 피해자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때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양육 기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29조(의료지원금)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후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장애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

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등이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제2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3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등은 제33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참고자료 3-3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7조(조세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40조(세월호 참사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 및 학생,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의료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기부금품은 이 법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1. 안전교육시설이 포함된 추모관 건립
2.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추모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불이익 금지 등) 피해자등은 위원회의 피해자등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4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이었던 사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3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특히, 청문회의 경우, 국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KTV국민방송 및 공중파 방송을 통해 중계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22조).

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세월

호 참사의 원인, 경과,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함.(안 제23조).

아. 국회는 의결로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관계 기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에 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차.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활동이 끝난 후에도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불이행시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불이행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안 제 제26조).

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 및 상담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40조).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장기간 양육을 하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참고자료 3-4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신현호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제도, 국가 시스템 등을 개혁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등에 이르게 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으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위원회나 개인이 행하는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발방지계획의 이행 및 결과보고, 평가서를 매년 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구성

제3조(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 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18] 직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3. 피해자등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정한 피해자등을 위한 보상, 배상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전문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19]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

18) 혹은, 국무총리
19) 혹은, 임명

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조사위원[20]의 구성) ① 위원회의 진상 조사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구조 전문가, 선박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의사, 상담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률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0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그의 가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청의 방식)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

20) 혹은, 조사관

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3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에게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조사위원,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이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6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회와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청문회는 K-TV 국정방송과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한다.

제18조(진상규명 기간)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진상규명 결정)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에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의결로써 채택한다.

제20조(진상규명불능 결정)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13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제10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14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발·수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진상규명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 국회는 의결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할 수 있다.
■ 국회는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한다.
■ 관계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이행에 대한 감시)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등이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위 제1항의 목적을 위해 1년에 2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 제3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국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로 종료된다.

제4장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조치

~~제2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피해자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상금) ① 피해자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때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양육 기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29조(의료지원금)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후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장애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등이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제2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3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등은 제33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7조(조세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40조(세월호 참사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 및 학생,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의료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등을 위한 의료 및 상담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기부금품은 이 법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시설이 포함된 추모관 건립
2.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추모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불이익 금지 등) 피해자등은 위원회의 피해자등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4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이었던 사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그밖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직원, 감정인, 그밖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관계자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조사위원, 소속 직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3-5

140528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김택수)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5. .
제 출 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안이유

○ 세월호참사는 사고로 인한 직접 희생자, 실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깊은 슬픔과 충격, 분노에 빠뜨려 앞으로도 사회 전체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칠 한국전쟁 이래 최대 재난

○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호의 모순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존재이유 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 사변

○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민·형사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대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지원, 기념사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고로 인한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피해자단체 포함) 등의 희생과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와, 사

고 발생원인,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대책, 법제개선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상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의 상임위원과 8인의 비상임위원을 두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회가 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보하되, 8인의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가 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1조)

○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1조)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

○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특별검사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7조)

○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유족을 포함하여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4조)

○ 위원회는 사고 원인 진상규명, 구조활동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법제개선 등에 관한 의결에 앞서 반드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청문절차), 의결이유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9조)

○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수사 또는 특검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 또는 특검이 불기소결정하는 경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안 제41조)

○ 피해자단체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생활지원, 장학금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성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세월호 희생자 지원 및 재난피해 예방 등을 위해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을 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44조)

○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참고자료 3-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신속·원활한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 조사기피, 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58조)

법률 제 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등 지원 및 국가적 재난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이란 2014년 4월 16일 오전 인천에서 제주도로 운항 중인 (주)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생존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세월호참사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참사에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청 등과의 유착비리 등 직, 간접 및 근본 원인 규명
2. 해경,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총리실, 청와대, 범정부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 과정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유족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언론포함)의 재난지원(보도) 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일체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 및 개선과제 규명
4.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된 법・제도, 정책, 관행, 문화 등의 진상 및 개선과제 규명

참고자료 3-5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이하 〃 세월호참사〃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중립성과 독립성)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사고 발생원인,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법제개선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임명자격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공인된 종교시설 및 단체의 성직자
5. 기타 피해자 인권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0조(상임위원) ① 상임위원은 1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국회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공인된 종교시설 및 단체의 성직자
5. 기타 피해자 인권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상임위원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비상임위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공인된 종교시설 및 단체에서 10년 이상 성직자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
6.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기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성, 객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1항 제4호, 제1항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조사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사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조사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조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조사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사당사자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위원이 불공평한 심의·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관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또는 전문위원 임기직으로 조사관 및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 감사원 등에 조사위원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 법에 정한 외에 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권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세월호참사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예외 등) ① 위원회가 의결로서 직무상 비밀로 정한 정

보를 제외하고 진상규명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위원회가 직무상 비밀로 정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조사관 및 조사위원
3. 자문위원회의 위원
4. 위원회 직원
5. 감정인
6.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9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의 진상규명 사항에 대한 조사
2. 위원회의 직권 및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 등의 신청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3.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5.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수사의뢰결정에 관한 사항
6. 세월호참사 피해자, 유족, 피해자단체 등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와 관련한 대책 마련 및 법, 제도개선 권고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앞서 제44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의결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 및 증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의 방식) ① 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4. 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4조(신청의 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1. 신청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가 조사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3-5

1. 조사당사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당사자와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과 열람 요구
5.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6.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 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제출 요구
7.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 2의 규정의 절차에 딸라 금융기관에 제출 요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제1항 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열람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장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당사자와 참고인 등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거짓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제4항 및 제6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처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특별검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3-5

제28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
2.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소명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특별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과 특별검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 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개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제33조의 진상규명결정, 제34조의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피해자단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조사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6월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대통령과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보고서의 발간)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 등의 책임면제)제18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

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검찰청 또는 군 검찰부에 송치한 후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 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로 본다.

제43조(형의 감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피해자지원 등 조치

제44조(피해자단체) ①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유족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단체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생활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위

하여 국민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피해자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지원 및 재난피해 예방 등을 위해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을 조성하거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 또는 재단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피해자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국가는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보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긴급지원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다.

제47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 등 의료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46조에 따른 보상금, 제47조에 따른 의료지원, 제4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념사업등) ① 국가는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세월호기금 또는 그 기금의 출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2.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에의 출연
4. 국가기념일 제정
5.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의 결의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재해 예방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의사상자, 상훈법 개정에 따른 훈포장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 및 국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④ 대통령 및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5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 인, 증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5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공무를 수탁받거나 대행,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공무를 수탁받거나 대행,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공무원(공무를 수탁받거나 대행,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7. 폭행, 협박, 위협, 회유, 업무상 불이익 행사 및 그 암시 등의 방법으로 동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 방조 또는 강요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제6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 제1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제61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자에 대한 특례)이 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실종된 사람은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이 법에 의한 조사대상자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협력을 요구받은 모든 공무원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안업무규정」등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디지털저작물에 관한 특례)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가 남긴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 제정 소고(김희수)

1. 특별법 제정의 목적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첫째, 4·16 참사와 관련한 진실규명 및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동일·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조치가 가능해야한다.

넷째,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하여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배상금 등“이라 한다.)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4·16 참사를 기억하고, 재난의 위험성을 각성할 수 있도록 기억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등의 문화적 구축 작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향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법 제정의 기본 원칙

가. 독립성 보장 원칙

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하며,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제3조 제3항,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31조 등)

나. 충분한 조사권한 등의 부여 원칙

과거에 설치 운영된 진실·화해위원회 등을 비롯한 제반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려움의 공통 원인은 ① 조사권한의 미약성, ② 조사 기간의 촉박성, ③ 조사대상의 한정, ④ 조사인원의 불충분성 이었다.
특별법은 과거 각종 위원회가 겪은 위와 같은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제15조, 제19조, 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등)
과거처럼 기본적인 입법 원칙이 훼손되는 '누더기 입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검사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권한의 미약성 등으로 인하여 진실규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억과의 투쟁

위원회는 단순한 사실조사뿐 아니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가칭 4·16 기억비 및 기억관을 건립하고, 4·16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한다.(제5조 제4항, 제47조 등)
이러한 후속작업을 통해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동일·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구체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16 참사는 기억과의 부단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되는 기억과의 투쟁을 문화적·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4·16 기억비, 기억 박물관, 4·16 재단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주요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특별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설립되는 4·16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 사항을 법안 제3조 제2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제5조 제3,4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2. 동일·유사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3.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4.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6. 4·16 참사 관련 상이·질병·후유장애자의 장해등급 판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배상금 등“이라 한다.)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법안 제5조 제3항의 위원회 업무로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2.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총리실, 청와대, 범정부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법안 제5조 제3항의 위원회 업무로 구체적으로 예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법안 제4조 제1항),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제4조 제2항)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4조 제3,4항)

이러한 원칙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고, 정부가 4·16 참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3개의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개의 소위원회는 법안 제3조 제2항 제1,2,3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1개의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4,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5조)

2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소위원회는 담당 업무의 성격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업무를 구체화하여 독자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규정하고(법안 제6조),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19조 1항) 위원회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9조 제3항)

이는 실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 기간이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실질적 활동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것이며, 위원회의 연속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 종료기간까지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라. 위원회 권한

1) 위원장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법안 제7조 제1항), 위원장에게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법안 제7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법안 제7조 제4항)

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활동이 방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특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입법안 건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2) 사무처 설치 권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14조)
과거 각종 위원회에서 사무처장과 위원회 위원 사이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마찰과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사무처는 직원의 정원을 120명으로 정하고,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으로 정하고, 20명을 행정 요원으로 두는 구조를 택하였다.(법안

제15조)
과거 각종 위원회의 업무 및 경험 등을 고려한 인원 배정이며, 위원회의 조사인원 불충분성을 극복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고,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안 제15조 제4항), 그리고 위원회는 검사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을 파견받아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법안 제15조 제3,5항) 민관 합동 조사의 성격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3) 조사 개시 및 종결 권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4·16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제를 직권으로 조사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조사요구 사항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법안 제21조)

4·16 참사라는 단일적 특성을 감안할 때 신청 개별주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신청주의를 취할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업무의 포괄성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피해자별로 사건 내용이 전혀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신청을 중심으로 조사개시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는 구조 등을 취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불법적인 공권력 개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4·16 참사의 경우는 진실과 의혹을 규명하여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족하기 때문에 진화위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도 없다.

4) 수사 및 기소권 부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권

한을 부여하였다.(법안 제22조 제1,2항) 조사 사건에 한하여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이며,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독자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법안 제22조 제4,5항)

아울러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법안 제23조 제1항),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에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23조 제3,4,5항)

숱하게 지적되어온 과거 각종 위원회의 조사권한 미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임의 수사가 원칙인 것처럼, 위원회 조사도 임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조사방법, 실지조사, 자료제출 명령권 등의 규정이 필요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검사의 지위와 권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면 위와 같은 조항이 불필요하게 된다.

5) 동행명령권과 청문회 권한

위원회는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집행 할 수 있게 하였다.(법안 제24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에도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다.

나아가 위원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법안 제25조) 그동안 각종 위원회 조사

권한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요구되어온 사항이기도 하다.

6) 배상금 등의 지급

위원회는 4·16 참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배상금 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고, 위원회는 배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를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33조)

국가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4·16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배상금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4·16 참사 희생자 및 유족과 4·16 참사 피해자 중에서 상이·질병을 입은 자 또는 후유증을 앓는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따른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법안 제34, 35조)

그리고 위원회 출범 전에 정부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안 제35조 제5,6항) 특별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4·16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4·16 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정부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4·16 참사 가해자 및 가해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구상권을 정부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법안 제43조) 정부의 가해자 및 가해회사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양도된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이 법에 의하여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되

도록 특칙을 두고, 정부가 이 법에 따른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 등을 지불하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이 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였다.(법안 제45조 제2,3항)

7) 재단 설립

4·16 참사에 대한 문화적 충격은 기억과 싸움이 될 것이다. 향후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책 그리고 기억 작업은 이 법의 중요한 목적이고, 원칙이다. 이에 따라 4·16 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활동 종료 직후 4·16 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4·16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법안 제47조 제1,2,3항)

4·16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법안 제47조 제5항)

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국내 재난 발생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3.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5. 이 법 제35조 제1항 규정의 의료지원금 업무
6. 이 법 제28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마. 기타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고(법안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법안 제9조), 위원의 겸직금지(법안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법안 제11조), 위원 보호규정(법안 제31조)을 두고, 직원도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법안 제17조), 독자적인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8조) 위원회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권고 이행을 강제

하는 방안을 두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법안 제28조, 제47조 제5항, 제6호)

위원회 업무 보호를 위해 자격사칭을 금지하고(법안 제48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며(법안 제49조), 4·16 참사를 빙자한 영리목적 활동을 금지하고(법안 제51조), 대신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추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50조)

바. 형사처벌 조항

형벌의 최후 수단성, 보충성 원칙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두려고 노력하였다.

동행명령 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처벌 등의 위헌성 논란을 감안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처럼 과태료 규정으로 두었다.

2013. 6. .

보고자 : 김희수 변호사

“세월호 4.16 특별법 공청회” 계획(안)

▢ **개　　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 16.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자문 등 법률지원,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하여 세월호 유가족 및 피해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기 진행하였으며, 오는 7. 2. 국회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가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 7. 2.(수) 14: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대상** : 전국 회원, 관련 시민단체,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

▢ **일정(안)**

시 간	일 정	
14:00~14:15 (15분)	개　　회	**※ 전체 사회** -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 **개회사**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4:15~14:40 (25분)	주제발표	**※ 좌장** : 장완익 변호사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방안 >** ■ 발표자 : 김희수 변호사 (25)
14:40~15:20 (40분)	지정토론	■ 여당 추천 국회의원 1인 - 미정 (10) ■ 야당 추천 국회의원 1인 - **전해철 의원** (10) ■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추천 1인 - 미정 (10) ■ 민변 추천 1인 - 미정 (10)
15:20~16:00 (40분)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40707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 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 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

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 6, 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참고자료 3-8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참고자료 3-8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

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 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7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 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140707 기자회견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1.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7건 모두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는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새누리당이 기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슬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2.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사이 국민의 뜻을 보았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한 달 만에 백만이 훌쩍 넘는 성의가 모였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 서명은 삼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 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명대에 서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3.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월중에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 특별법은 이러한 원칙하에 구성되었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만은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4.16특별법의 제정입니다.

4.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 여야 대표를 면담하고, 4.16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종교 지도자,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나 4.16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 천만 서명의 1차 전달로 3백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 가족들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이 함께 하는 대규모 4.16특별법 청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 여야와 함께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은 7월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MBC 기관보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언론은 사건 초기부터 희생자들과 가족을 모욕하고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오보가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불출석 통보를 버젓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세월호 참사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만나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2014. 7. 7.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위철환 협회장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입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2일째 되는 오늘, 4·16 참사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저희 대한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4·16 참사와 관련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한변협에 소속된 개인, 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을 모아 단일 통합법을 만들었고,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특별법 공청회는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각 정당, 국민 대책회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은,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피해자 단체 및 국민들의 뜻이, 4·16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오늘, 특별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안)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한과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제2장, 제3장).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동일·유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법률가단체인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3-10

그동안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전한 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4·16 참사를 통해 그동안에 누적된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되었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대형 재난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은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법(안)을 통하여, 단원고 학생 및 교사와 일반인 피해자 특히,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피해자 단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모아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의견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2일,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실종자를 비롯하여 모든 피해자 및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 7. 7.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위 철 환

140709 이명숙 부협회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이명숙 변호사입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지원 활동 중 하나가 가족분들과 국민분들의 염원 즉, 온 사회를 충격에 몰아 넣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그를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대한변협이 여러 단체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수정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 드디어 공식적으로 입법청원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준비한 판넬을 이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넬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이 특별법은 다른 법과 달리 피해자추천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성실하고 신속하게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넬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충분한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3에서 보듯이,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이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상관없더라도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에 대한 점검과 대안마련이 가능하도록 안전사회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안전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

참고자료 3-11

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또 판넬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참사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넬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입법청원할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기존의 법률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의된 다른 법률안이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뛰어넘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보다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꼭 헤아려주시어 특별법의 입법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각 법률안 비교 컬러 도표 (박주민)













참고자료 3-13

특별법 내용 관련 우선 순위(중요도) 분석[1)]

1. 특별법 제정 과정상의 목표

- 1차 목표 : 피해자단체(안) + 각 정당(안) 중 피해자 지원 부분
  혹은 피해자단체(안) 원안 그대로 통과

- 2차 목표 : 피해자단체(안) 중 특위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양보(삭제)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안)의 감사원 감사 + 특검 요구 조항으로 보완

- 3차 목표 : 상당 부분을 삭제 당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을 선택/결정하여 지킨다.

2. 방법상의 전술

- 주요 쟁점을 뽑아내고 그 쟁점 중심으로 논의・정리・결정한 후에 나머지 사항을 결정할 것인가? 주요 쟁점을 남겨두고 나머지 쉬운 내용을 먼저 통과시킨 후에 쟁점별 논쟁을 통해 정리할 것인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주요 쟁점을 먼저 뽑아내어 1차 논쟁을 벌인다. -> ② 정리되지 않는 쟁점은 일단 놓아두고(내부적으로 논의) 나머지 쉬운 내용을 먼저 통과시킨다. -> ③ 마무리 단계에서 남은 쟁점 정리를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한다." 가 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총론)

특별법(안)의 내용 중 ① 진실규명 - 재발 방지 및 대응책 마련 - 권고의 이행(4・16 참사 특위) > ② 지속적인 기억/안전사업의 시행(4・16 안전재단) > ③ 피해자 지원(보/배상)의 순서로 중요합니다.

---

1) 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비공개되어야 합니다.

<진실규명~권고의 이행> 조항 중에는, ① ‘권고의 이행 강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② 특위의 구성(추천자가 누구인가, 누가 위원이 될 것인가) 및 업무 내용 및 원칙(독립성 확보, 위원장의 권한, 3개의 소위원회 역할 분담, 사무처장 및 120명 사무처 직원 확보 등 포함), ③ 특위의 권한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단체(안)이 다른 정당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상임위원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번 4·16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는 ‘권고의 이행 강제 및 모터터링’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진실규명 vs 대안 마련 vs 이행 강제 중에 선택하라면 저로서는 이행 강제 > 대안 마련 > 진실규명 순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 강제’되는 내용은 ‘대안 마련’에서, 적정한 ‘대안의 마련’은 ‘진실규명’에서 오는 것이므로, 세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지만, 만일 선택해야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행 강제’에 중점을 둘 경우, 중요한 것은 ‘대안 마련’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위 위원이 어느 정도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진실규명 및 대안마련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히려 ‘진실규명’ 문제를 후순위로 미룬 것은, 이미 합동수사, 국정조사, 언론 및 민간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지고 있거나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위 위원이 검사의 지위를, 특위 조사관이 특사경의 지위와 권한을 갖지 못하면, 특위 차원의 진실규명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전술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통되는 혹은 좀 더 쉬운 부분은 우선 통과시키되, 마지막 순간에는 위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입니다(위 2차 목표 참조).

그래서, 저는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충분히 강조하여 그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은 피해자단체(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을 적정하게 선택하면 될 것인데, 특히, 기억사업 + 안전사업 + 모니터링의 핵심 영역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3-13

<피해자 지원> 부분은, 한부모 등 특칙 > 국가배상책임 > 구체적인 특례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칙은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그것을 특례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소송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만일 여당이 의사상자 부분을 반대한다면 그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안)이나 여당안 중 피해자 지원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사실, 의사상자 인정, 대학입학 특례, 군입대 특례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요청을 하는 피해자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정서상 피해자단체에 불리하고, 지나친 주장/요구로 보이기 쉬우므로 개인적으로는 양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마지노 조항(내용) 설정(각론)

이 부분은 피해자단체(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표를 살펴보면서(참고로 여당안도 옆에 놓고 보아야 할 듯) 결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밑줄을 그은 부분, 진하게 한 부분은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단체(안)vs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 및 우선순위(중요도)〉

항목	피해자 단체(안)	새정치민주연합(안)	비고
법안 명칭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특별법은 피해자단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법의 명칭은 피해자안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침몰사고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등 세월호 참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새정치안이 피해자 지원/회복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안은 간결하게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취사선택 혹은 짜깁기가 가능합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1.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에 이르게 된 구조적·관행적 요인, 침몰에 따른 탑승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 및 실종 등을 비롯해 구조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새정치안도 훌륭한데, ‘수색’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좋을 듯
		2. “희생자”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세월호의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조치·긴급구조 및 수습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바.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 중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사.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피해자단체"라 함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6. "피해지역"이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피해자 및 피해자단체 등록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단체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신청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에 등록부서를 설치하고 신청 절차를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된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 등록 신청 절차·방법,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	제6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 관행,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사항 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 치유, 추념에 관한 사항 5.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언론의 재난 관련 공정성 보도 및 출판물,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등으로부터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8. 세월호 참사 관련「형법」 중 살인의 죄, 유기치사상의 죄, 선박매몰의 죄, 「수난구호법」에 규정된 죄, 「해운법」에 규정된 죄, 「선원법」에 규정된 죄,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9.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등 구조구난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10.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과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6인을 선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6인을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선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해양학, 해양물리학, 선박학, 조선술 등 해양·선박 등 관련 분야 및 사회복지 관련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난사고 구조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정신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소위원회 구성, 업무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	제74조(추모사업 추진단) ① 추모공원 등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추모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추모사업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추모사업 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과 관련해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교육부차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2. 안전,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심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3.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자 ⑤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단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활동 종료 전 제77조에 따른 4·16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4·16재단이 추모사업을 수행한다. ⑦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활동기간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한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 또는 피해자단체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위원의 겸직 금지	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의 공개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사무처의 설치 및 조직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조직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에 직접 규정한 것입니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직원의 신분 보장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직원 등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 2년이 될 수 있고 추가 6개월~ 1년 연장하면 될 것이나,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유의해 주세요.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위원회 업무 원칙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 개시 및 종결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의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는 위원회에 조사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요구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4조(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 등) ① 누구든지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또는 진정의 취지와 원인이 된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 및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 및 진정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 및 진정인이 종전의 신청 또는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 또는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또는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이 제	

		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방법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27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조사의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	*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을 수 있는 청문회의 개최 7.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대상이 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위원회에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108조제1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38조(특별검사)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수사가 미진	

수사 및 소추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	한 경우 의원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한 결과 진상조사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 및 재판 기간)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수사는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각 특임검사 또는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고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	

	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감사 요구		제3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관련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및 신변확보**) ① 누구든지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 및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	

		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08조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사대상자인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조사대상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직원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조사관의 권한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관) ① 위원회에 제7조 각 호의 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둔다.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7조 각 호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조사관에게도 준용한다. ④ 조사관의 임용, 자격,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사법경찰권**) ①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제7조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 특위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조사관이라도 특사경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동행명령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	제30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청문회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제29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3조(청문회의 준용규정) 제29조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등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7조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조사의 비공개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사의 공표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조사대상 및 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제, 청문회 대상,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선정할 때에는 7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 예고 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경과 및 결과를 6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제108조(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 2.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관한 종합보고서 ② 제1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과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번 특별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00조(진상규명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 세월호 참사를 포함하여 과거 발생했던 사건·사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악화된 심리적 증상을 종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계획 3. 재난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 ⑤ **대통령은 제3항의 권고사항 및 보고내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이 이행한 조치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권고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조(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의결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의하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한다.** ③ **관계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이행에 대한 감시)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등이 제23조 제2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위 제1항의 목적을 위해 1년에 2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

		⑦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행에 대한 감시 업무는 국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로 종료된다.
조사 보고서 발간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위원 등 책임 면제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8조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원 등의 보호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제37조(위원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보자 등 보호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보상·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 기관의 협력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제42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공소 시효의 정지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수준 등을 피해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단체와 협의한다. 제44조(피해자 및 민간 참여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반	**제4장 배상금 등의 지급** 제33조(배상원칙) ① 위원회는 4·16 참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배상금 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위원회는 물적 피해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액을 배상한다. ④ 위원회는 배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영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 의견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단체와 협의한다.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 ①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위,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원된 어업인에 대해 그 참여·동원된 기간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산물 생산감소 및 어로채취작업 실기로 인한 수확피해, 관광산업 수입감소·농수산물 판매감소 등 경제활동	제34조(배상금) ① 정부는 4·16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배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1. 4·16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각 위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 세월호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4·16 참사 피해자 중에서 상이·질병을 입은 자 또는 후유증을 앓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금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다. 2.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3.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군민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④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배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고, 생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그리고 위원회가 4·16 참사 2차 피해자로 인정한 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 및 후유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③ 정부는 4·16 참사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6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4·16 참사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심) ① 위원회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40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① 배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2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4·16 참사와 관련하여 입은 정부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4·16 참사 가해자 및 가해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구상권을 정부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44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배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

			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5조(시효 등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배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② 이 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이 법에 의하여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절차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③ 정부가 이 법에 따른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 등을 지불하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이 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교육지원 등) ①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

			담·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금융채무 및 세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 4·16 참사 이후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활 지원		제50조(생활지원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제00조(교육지원 등) ①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금융채무 및 세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 4·16 참사 이후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공공요금의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범위 및 감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조세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안전행정부 장관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5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은 유급으로 하되,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월호 참사 생존자 2.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고용유지비용은 세월호 참	

		사 직전 해당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교육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60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	

		봄 지원법」등 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1조(간병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의 간병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용 지급의 대상·금액·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여 물적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는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은행,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지원		제6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민간 공익단체,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때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교육정상화특별구역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정상화특별구역(이하 “교육특구”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하 “관할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교육특구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특구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교육특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특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특구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2. 교육특구 내 학교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교육특구 내 학교 교직원의 교육여건 개선방안 4. 교육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5. 교육특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특구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특구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교육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비 또는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교직원의 휴직 등) ① 교육특구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세월호 참사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교직원의 확보·배치 및 우대) ①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피해자인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및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 외의 교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 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1조(전문상담기구 구성·운영) ① 교육특구 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피해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관할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보	

		호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등 설치) 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지역 안산의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모사업 관련		제73조(추모사업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추모제 지원 5.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국가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추모사업 추진단) ① 추모공원 등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추모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추모사업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추모사업 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과 관련해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교육부차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2. 안전,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심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3.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자 ⑤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단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활동 종료 전 제77조에 따른 4·16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4·16재단이 추모사업을 수행한다. ⑦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추진단은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의 명칭에 대해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추모시설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6 기금		제9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4.16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지원금 4. 제98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98조(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9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및 운영 2. 추모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3. 재단 설립 및 운영 4. 추모식 등 추모사업 5.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등의 의료 및 복지사업 6. 재난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7. 국가 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교육사업 8. 장학사업 9. 그 밖의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100조(성과의 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99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해 배상 등 특례		제101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배상 및 보상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손해보전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또는 피해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및 보상 청구, 손해배상액 및 보상액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손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험자의 배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제105조(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증거 기록단		제109조(증거기록단) ①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및 보존 등을 위하여 증거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증거기록단은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증거기록단에서 수집 및 보유한 자료는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에 보관, 전시한다.	
지자체 및 정부 대책 부서		제111조(전담부서의 설치)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2조(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 구성) 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이하 “지원대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단체의 대표는 지원대책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지원대책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사항을 대통령, 국회(해당 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회에 매년 2차례 보고한다. 단,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대책단은 제3항에 따른 보고 후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제102조(**부양의무 해태자의 상속분 분배에 관한 특칙**) ① 희생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한부모가족인 경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우, 피상속인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을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나머지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그 자의 상속분의 일부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배는 부양의무의 해태기간·그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보삼금 청구권 등의 보호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권리의 보호) 피해자 등록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조세 면제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51조(생활지원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생활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재단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제77조(재단의 목적)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4·16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8조(법인격 및 설립)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7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80조(사업) 재단은 제7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추모공원 조성 및 운영 2. 추모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3.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등의 의료 및 복지사업 4.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5. 재난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6. 국가 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교육사업 7. 장학사업 8.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보관사업 9.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1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85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7조(사무처)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89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1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재	

		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2조(결산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4조(지도·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95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 사칭 금지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조사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추모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추모사업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추모제 지원 5.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국가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자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		

지원 단체 조직의 제한	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14조(벌칙)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10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미수범 처벌		제116조(미수범) 제114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과태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을 방해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4항의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사람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및 제5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기자간담회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 내용 (박종운)

박종운(변협 세월호 특위 대변인, 특별법팀)

4·16 참사가 발생한지 88일째 되는 오늘, 4·16 참사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입법 청원을 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각 언론과 기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정확한 내용을 널리 보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 비방, 유언비어(流言蜚語)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위 내용들이 불식(不息)되도록, 아예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지난 7월 2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내용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지난 7월 9일 입법 청원 당시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 설명 및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입법청원 경과

4·16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 후인 5월 16일,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

회’(이하, ‘변협 세월호 특위’)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4·16 참사 이후 확인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협 세월호 특위’ ‘법제도개선단’ 산하에 ‘특별법(제정)팀’을 만들었고, 특별법팀을 중심으로 먼저 대한변협에 소속된 개인, 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을 모아 대한변협 단일 통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반영하여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지난 7월 2일 특별법 공청회는 바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각 정당, 국민 대책회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이때 피해자분들은,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특별법팀은 피해자 단체 및 국민들의 뜻이, 4·16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만든 후, 피해자 단체 설명회를 마치고, 지난 7월 9일 입법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4·16 참사 이후에 정부와 국민들이 펼친 수많은 활동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래의 의미 및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가. 수요자 중심의 법 제정 운동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법률 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 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안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단체와의 지속적인 지원·연계 활동 및 협의, 천만인 서명 운동의 성과,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의 참여 등이 그것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공급자 입장에서는 법률 수요자의 생각을 추정하거나, 법률 공급자의 편의를 극대화 시킬 가능성이 높게 되지만, 법률 수요자들은 이 법이 왜 필요한지(필요성과 목적),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중요 내용 및 방향성 설정) 등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들을 하나로 모으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인식의 변화와 공유를 가져오게 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그러한 점에서 법률 공급자인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국가적 사회적 재난의 재발 방지 및 대응책의 이행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목적은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입니다(제1조).

과거에도 국가적, 사회적 대형 재난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백서 혹은 보고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은 결국 시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안전한 사회'는 우리 곁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16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적 사회적 재난의 재발 방지 및 대응책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에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권고를 정부 관계 기관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또한, 4·16 안전재단을 통하여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제5항 제6호).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의 동일·유사한 특별법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반드시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 철저한 진실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그런데, 위와 같은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을 위한 권고를 하려면, 먼저 철저한 진실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동일·유사한 특별법의 장·단점, 한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각종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활동기간, 조사 인력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4·16참사 특별위원회(이하, '4·16 특위')와 관련하여, ① 4·16 특위를 국회 추천 8명, 피해자 단체 추천 8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 민주성, 대표성을 강화하고(제3조, 제4조, 제7조~제11조), ②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 등 3개의 소위원회로 업무를 분장한 후(제5조)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제16조), ③ 위원회의 임기를 2년 + 1년으로 확장함으로써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제6조, 제19조), ④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 예산 관련 권한을(제7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제24조) 각 부여함으로써 성역없는 진실 규명에 충분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고, ⑤ 상임위원 중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고(제14조), 조사관을 100명 확보(제15조)함으로써 충분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반드시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라. 국민참여형 진실규명 및 대책 마련

지난 번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4·16 특위의 활동은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발표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1조, 업무 원칙).

또한, 조사의 개시는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2조).

그밖에도 조사 결과의 수시 공표, 중간 공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9조).

이와 같이 진실규명에 전 국민이 함께 한다면, 투명성, 합리성이 보장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반드시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마. 보/배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에는 공청회 당시 법률안과 비교하더라도,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되 4·16 특위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고(제37조), 한부모 가정, 재산상속인과 실제 양육자가 다른 경우 등에 관한 특칙을 두었습니다

(제38조).

법률가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각 정당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충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바. 사회적 치유

4·16 참사는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슬픔, 분노, 울분, 화, 자책감 등 온갖가지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이 '멘붕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국가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회복 또한 어렵게 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 심리적인 극복 노력, 상담/치료 등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치유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희생자/실종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명을 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진실규명, 책임소재 파악, 재난 방지 및 대응책 수립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인 치유 과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재난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로운 넋을 기리고 위로·기억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운데, 다른 국민들도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4·16 안전 재단의 설립을 통해, 안전사회 건설·확립, 치유·기억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순간의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문화가 뿌리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반드시 경청하고 존중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3.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특별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요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한과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제2장, 제3장).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동일·유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법률가단체인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4. 여·야 의원 발의안과의 비교

아래에서는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과 여·당 각 정당의 의원발의안 중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안과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당의 경우,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안은 7월 1일경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7월 2일경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되었고, 야당의 경우,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7월 4일경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단일 통합법안으로 제출된 것을 참조하였습니다.

가.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피해자 단체(안)	김학용 의원(안)	전해철 의원(안)
구성	국회 추천 8, 피해자 단체 추천 8 = 16명	국회의원 10, 국회 추천 6, 피해자 대표 4 = 20명	국회 추천 12, 피해자 단체 추천 3 = 15명
업무	4·16 참사 특별위원회(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규명, 피해자 지원등 2개 소위원회)
조치와 권한	전해철 의원안 + 조사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과 분석 + 출석 요구, 진술 청취 + 정보 조회, 감정의뢰 + 자료제출명령 + 동행명령 + 청문회 + 고발 및 수사의뢰 + 사법경찰관 권한 + 감사, 특검 요구..
활동기간	2년 + 1년 이내 1회 연장	6개월 + 3개월 연장	1년 + 6개월씩 2회 연장
대책 마련 및 이행	- 3개 소위원회 특히 안전사회 소위원회 통해 안전사회 건설·확립위한 대책 마련 - 권고 및 정부 관계 기관	권고할 수 있다.	-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 관행, 정책 개선에 관한 업무 수

	에 대한 이행 강제 + 징계 요구 가능 - 4·16 안전재단을 통한 향후 안전사업 지속 및 권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행
국민참여	가능		가능
제보자 보호	가능		가능

나.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	피해자 단체(안)	김학용 의원(안)	전해철 의원(안)
요지	- 보/배상, 피해자 지원의 핵심 원칙만 정리	- 세월호 사고 보상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 소속) -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상금 선 지급, 구상권 행사	의사상자, 진도 어민 보상, 생활지원·공동체회복 지원 등 상당히 상세한 지원 목록 나열

다. 기억 및 안전 사업

기억 및 안전 사업	피해자 단체(안)	김학용 의원(안)	전해철 의원(안)
내용	기억 및 안전 사업	추모사업	추모 사업,
주체	4·16 안전재단		4·16 재단/기금

5. 결론

이번 4·16 참사를 통해 그동안에 누적된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들을 침착하게 하나씩 혹은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대형 재난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은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은 다른 의원발의안들과 비교하더라도 절대 혹은 비교 우위에 선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심정으로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8일째,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단원고 학생 및 교사와 일반인 피해자 특히, 실종자를 비롯하여 희생자 및 유가족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41031 여야 최종 합의문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세월호특별법

[별지 1]의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행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참고자료 3-16

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 내 대 표 _____	원 내 대 표 _____
정 책 위 의 장 _____	정 책 위 의 장 _____
원내수석부대표 _____	원내수석부대표 _____

[별지 1]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1.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 · 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 · 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형사소송법」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 · 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 · 선서 · 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 한다.

15. 여야는 4 · 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 · 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150106_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

여야는 2015년 1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간사간 회의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등 세 가지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 확인하고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 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안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사항>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Ⅳ. 진상조사활동

진술 청취 카드

<table>
<tr><td colspan="2">상 담 일 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간 :</td></tr>
<tr><td rowspan="3">상 담
신청자</td><td>성 명</td><td></td><td>피해자와 관계</td><td colspan="3">1. 부모 / 2. 기타( )</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E-mail</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답변 변호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피해자</td><td>이 름</td><td></td><td rowspan="3">피 해
내 용</td><td colspan="2" rowspan="3">1. 사망( )
2. 상해( )
3. 재산( )
4. 기타( )</td></tr>
<tr><td>나 이</td><td></td></tr>
<tr><td>성 별</td><td>남( ) / 여( )</td></tr>
<tr><td>지 위</td><td colspan="4">학생( ) / 교사( ) / 일반( ) / 기타 ( )</td></tr>
<tr><td>연락처</td><td></td><td>기 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상담요지</td><td colspan="5"><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 진술 청취 상담 매뉴얼></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2">특 이 사 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답 변 자</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답 변 일 시</td><td colspan="5">년 월 일 시간 :</td></tr>
<tr><td colspan="2">답 변 내 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2">keyword</td><td colspan="5"></td></tr>
</table>

참고자료 4-1

Ⅰ. 사고 전 상황에 관하여

1. 수학여행지로 제주도가 정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2. 제주도로의 교통편을 배로 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수학여행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 혹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요?

4. 인천항이나 항해 중 피해자로부터 선박의 이상 징후에 관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 (2) 예(휴대전화/ 통화 / 문자 / 카톡 등 기타수단)

5. 위 당시 연락받은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Ⅱ.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1. 피해자로부터 사고에 관한 연락을 받았나요?

(1) 아니오 / 예(휴대전화/ 통화 / 문자 / 카톡 등 기타수단)

(2) 연락받은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오 / 예(포렌직 팀 전달여부 확인)

2. 정부나 학교당국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연락을 받았나요?

(1) 아니오 / 예(휴대전화/ 통화 / 문자 / 카톡 등 기타수단)

(2) 몇 시 경 연락을 받았나요?

3. 위 연락과정이나 초기 학교측의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Ⅲ. 구조과정에 관하여

1. 귀하는 사고이후(4.16.) 구조과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경이나 정부당국자로부터 설명을 잘 받았나요.

(1) 아니오

(2) 설명 받음

- 누가 설명했나요 (해경, 기타) :

- 구조과정 설명내용 :

2. 사고 당시, 또는 직후 구조현장에서 구조 과정을 지켜보았나요?

(1) 아니오 / 예

(2)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ex: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등)

아니오 / 예(구체적인 증거기재) :

(3) 구조현장에 가는데 해경이나 정부당국자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오 / 예

3. 16일 구조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4. 17일 구조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5. 18일 구조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항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6. 언론 및 정부 발표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1) 아니오 / 예

(2)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Ⅳ. 수습과정에 관하여

1. 실종 뒤 사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구조나 수색 당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나요(시신 발견후의 신원확인 과정을 포함하여)?

2. 시신 수습 후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요청받은 경위는 어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후 실종자 구조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무엇인가요?

4. 신원확인과정에서 해경측의 안내와 설명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5. 신원확인 후 인수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6. 안산으로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7. 유류품을 반환받는데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Ⅴ. 경찰감시여부, 생계지원대책, 심리치료 등에 관하여

참고자료 4-1

1. 진도체육관, 팽목항, 현재 안산 등에서 경찰관이나 정보기관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예(구체적으로):

2. 정부생계지원대책에 관하여

(1) 정부나 안산시로부터 가족생계지원대책 안내설명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구체적으로) :

(2) 가족생계지원대책 개선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3. 심리치료에 관하여

(1) 귀하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사로부터 심리치료(트라우마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오(이유 : 안내부족, 충격과슬픔, 시간과 정보부족, 기타)

*예(구체적인 날짜, 장소, 횟수) :

(2) 심리치료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오/예(구체적으로)

(3) 향후 심리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 아니오(이유:)

* 예 (정부나 안산시에 심리치료에 대한 요청사항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4. 휴대전화 등 증거에 관하여

(1) 귀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이나 인터넷 ID/패스워드, 기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오 / 예(휴대전화, 인터넷 관련정보, 동영상 등 기타 증거)

(2) 대한변협 포렌직팀(와스타디움 1층 사진판독실: 김인성교수)에 위 증거를 제출하였나요

*아니오(향후 맡기실 의사여부 확인: 예 /아니오)

*예

Ⅵ. 진상조사 등에 관하여

1. 대한변협 진상조사에서 시급 밝혀야 할 사항(과제)이나 방향에 대해 적시해주세요

2. 기타 정부나 안산시, 대한변협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상세히 적어주세요.

(1) 정부 :

(2) 안산시 :

(3)대한변협 :

참고자료 4-2

요 청 문

발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신: 네이버 주식회사
제목: 디지털정보제공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첨 명부 기재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의 메일, 밴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일체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본 위원회는 위 자료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며, 모든 정보를 해당 소유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5. 구체적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한변협(담당 변호사 박주민: 010-****-****, *****@gmail.com)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정보제공 대상자 명부

2014년 6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요 청 문

발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제목: 디지털정보제공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첨 명부 기재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의 메일, 밴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일체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본 위원회는 위 자료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며, 모든 정보를 해당 소유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5. 구체적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한변협(담당 변호사 박주민: 010-****-****, *****@gmail.com)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정보제공 대상자 명부

2014년 6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참고자료 4-2

요 청 문

발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신: 주식회사 카카오
제목: 디지털정보제공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별첨 명부 기재 희생자, 실종자 및 생존자의 메일, 밴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일체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 본 위원회는 위 자료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며, 모든 정보를 해당 소유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5. 구체적인 제공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위원회를 대리하는 대한변협(담당 변호사 박주민: 010-****-****, *****@gmail.com)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정보제공 대상자 명부

2014년 6월 [*]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大韓辯護士協會

㉾135-784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대한변협회관(역삼동) ☎ 02-2087-7711 FAX: 02-3476-4008
담당과: 총무과, 과장: 조원희, 담당: 대리 홍창수, E-mail: changsuda@koreanbar.or.kr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문서번호 총무 제 호

시행일자 2014. 5. .

받 음 수신처 참조

참 조

			결재		
기안일	2014. 5. 20.			협 회 장	
보 존	5년			사무총장	
처리과	총 무 과				
부국장	허 정			사무차장	
과 장	조원희				
담당자	홍창수			사무국장	

제 목 세월호 참사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관련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TF'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5. 16.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가족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의견 표명이나 법률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피해 가족의 휴대전화 복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사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업 무 : 세월호 참사 피해자 휴대전화 복구 작업
(2) 장 소 : 안산시 '와스타디움' 1층, 사진 판독실
(3) 요청인원 : 휴대전화 복구 전문가 1인
(4) 지원기간 : 2014. 5. 22.부터 약 2일간 협의 후 업무 진행
(5) 책 임 자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TF
오영중 위원(010-****-****, 02-***-****),
황필규 위원(010-****-****)
(6) 기타문의 : 대한변협 김정욱 사무차장(02-****-****) <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수신처] 삼성전자 사장, 엘지전자 사장, 팬택 사장

참고자료 4-4

증거보전 소송구조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 2014카기208 손해배상(자)

신청인 1. 김○○

경기 안산시 단원구

2. 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위 신청들의 소송대리인

1. 변호사 ○○○

상대방 1.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목포해양경찰서장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2. 대한민국(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해양경찰청장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소관청○○○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변호사비용
■ 기타 (세월호 CCTV 복구비용 청구에 따른 감정료 80,641,000원)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신청인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3반에 고(故) 김 학생의 아버지(상속인)입니다.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하여 일자 및 시각 불상 경 사망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경위

1) 재판의 내용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국가 및 해경 등 그 소속 공무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승객 약 476명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려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의 취지

이 증거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인 세월호 선내 및 선체 외의 상황 등이 하드디스크에 녹음 파일 및 영상 파일 등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증거보전을

통해 DVR의 하드디스크 등 내부 저장파일을 복원하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3) 증거보전신청의 결과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보전대상 증거물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① 위 증거물이 약 2개월 이상 바닷물 속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긴급한 복원절차를 진행하고, ② 복원된 증거물에 대해 포렌직 절차의 일환으로 이미징(imaging)을 하고 해시값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로 보전하여 세월호 64개 CCTV의 DVR을 복구하였습니다.

다. 소송구조신청 이유

1) 신청인의 자력

신청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로 인해 몇 달째 생업을 포기하고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회와 광화문 등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광화문 등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의 일환으로 2014. 6. 14.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인해 같은 해 8. 11.에 80,000,000원의 예납금 납입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보정명령 이의 기간이 도과하도록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 공익적 사유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은 국가적 대참사의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구된 자료는 향후 검찰에 전달되어 관련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래는 검찰이나 정부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를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신청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이므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2014. . .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신 청 인	본인(법정대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128조~133조 ·민사소송규칙 24조~27조
불복방법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고자료 4-5

증거보전 소송구조결정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 정

사 건 2015카구1001 소송구조

신 청 인 김[redacted]
안산시 단원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주 문

이 법원 2014카기208 증거보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CCTV 복구비용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3.

판 사 류 봉 근

※ 이 결정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진도VTS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000 (000000-0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000

상대방: 1. 해양경찰청장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2.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50-17

3. 대한민국(소송수행자 법무부장관)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고(故) 전찬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1]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약 명의 승객 476명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은 그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즉, 신청인은 위 보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들인 세월호와 교신한 교신기록(문서, 녹음 파일 등) 일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신청인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16일 00시부터 20시에 이르기까지 세월호가 해양경찰청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하였던 모든 문서 및 녹음파일 등에 관한 증거 등을 보전하여,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 전후 운항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2 소정 기관 등

가. 증거보관장소

해양경찰청 및 진도 해상 교통관제센터(VTS) 내 세월호 교신 등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

나. 보전대상 증거

2014년 4월 16일 07:00 ~ 12:00시까지 ①레이더영상, ② AIS기록, ③세월호와 교신기록, ④로그인기록 등 세월호 교신관련 문서, 녹음 파일 등 일체

2014. 6.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귀중

참고자료 4-7

제주VTS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 영 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 3층 303호
전화번호 : 02-588-5965, 팩스번호 : 02-581-8710

상대방: 1.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01

2.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소관 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대한민국(소관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고(故)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 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2]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 2 소정기관 등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약 476명의 승객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보전의 긴급성)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영상 자료 등은 그 보존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그 보존기간 및 보존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서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즉, 신청인은, 제주해상관제센터 내부 CCTV 영상자료 보존 기간이 경과하거나,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가 보존된 CCTV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임의 폐기할 경우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와 관련한 핵심적인 증거인 침몰 당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CCTV영상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는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의무 및 해경에의 신고의무, 해경의 구조 원조 의무 등을 해태하거나 방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 바, 신청인은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CCTV 영상 자료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참고자료 4-7

가. 증거보관장소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 내부 CCTV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

나. 보전대상 증거

2014년 4월 16일 00:00 ~ 24:00 까지의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 내부 CCTV 영상 자료.

5. 증거보전방법

현장검증 및 감정

[소명자료]
추후제출

[첨부서류]
1. 위임장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증명

2014. 6.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귀중

어업지도선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 영 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 3층 303호
전화번호 : 02-588-5965, 팩스번호 : 02-581-8710

상대방 : 1. 전남도청 해양수산국(소관 부서)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

2. 대한민국(소관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고(故)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은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 소유 세월호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2014. 4. 16.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이하 '세월호 침몰 사고'라 합니다) 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일자 및 시각 불상경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정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참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3]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위 법 제4조 참조).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지1의 2 소정기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약 476명의 승객 가운데 약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바, 본건 증거보전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신청 이유 (보전의 긴급성)

2014. 4. 16. 세월호 침몰 당시,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 204호, 207호, 210호(이하 전남도청 어업지도선)가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은 그 보존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그 보존기간 및 보존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위 국가배상청구에 앞서서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들입니다. 즉, 신청인은,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의 보존 기간이 경과하거나,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가 보존된 구조 영상 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임의 폐기할 경우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와 관련한 핵심적인 증거인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의 구조 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부디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명할 사실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 바, 신청인은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해경 등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4.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가. 증거보관장소

전남도청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

나. 보전대상 증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 204호, 207호, 210호)가 촬영한 세월호 승객 구조 영상 자료 일체.

5. 증거보전방법

현장검증 및 감정

[소명자료]
추후제출

[첨부서류]
1. 위임장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증명

2014. 6.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오영중 (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귀중

참고자료 4-9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14. 10. 6.

책임자 : 반부패부장 직무대리 윤갑근, 형사부장 조은석
전화번호 : 02-535-9388(반부패부)/5331(형사부)

제 목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사고원인·구조과정·실소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 금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설명드림

■ 검찰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하였음

※ 분야별 수사현황은 별첨1~5「검찰 수사현황 개요」등 참조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및 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 이는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되었으며,

-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아울러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톤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음

■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결과,

- 진도VTS 관제 담당자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하였으며,

-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고,

-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음

■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배임 범행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음

-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현재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 중에 있으며,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에 있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음

■ 아울러,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과정, 선박 검사 과정,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선박 안전점검 과정, 선박 운항 과정,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여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과 한국선급 前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병언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임

참고자료 4-9

Ⅰ. 개요

1.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 2014. 4. 15. 21: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해 운항하던 세월호가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어 이동이 정지되고 같은 날 10:17경 전복되어 침몰되는 사고 발생

○ 단원고 학생 245명을 포함하여 승객 등 294명 사망, 단원고 학생 5명 등 10명이 실종 상태

2. 검찰수사 전개과정

○ 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 과실, 구조과정에서의 과실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감독기관의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위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음

- 사고발생 직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여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을 수사
- 4. 20. 인천지검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11개청에서 해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
- 5. 29. 광주지검에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3. 검찰수사 진행상황

○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기관·분야 및 공직자 비리 전반에 걸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음

○ 수사결과, 현재까지 총 399명을 입건하여 그 중 154명을 구속
-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비리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진도VTS 센터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총 17명 입건, 5명 구속
- 세월호 관련사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69명 입건, 88명 구속

○ 범죄수익 동결 및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 유병언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빼내간 피해재산을 법인에 회복시킴으로써 국가의 조세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1,157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징보전 조치로 신속하게 동결
- 국가의 구상금 채권 확보를 위해 유병언의 은닉재산 864억원을 포함한 1,222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 조치 병행

Ⅱ.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4. 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 구성·설치, 4. 17.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개편
※ 사고발생 직후 '변사체 신속 검시·인도 계획'을 수립, 목포지청 형사1부장 검사를 진도 팽목항 현장책임자로 지정하고, 목포지청 검사 2명 및 수사관 2명이 진도 팽목항 현장에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신속히 검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희생자 DNA 확인 즉시 희생자를 가족에게 인도

○ 사고원인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정밀감정을 위하여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11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시뮬레이션 실시를 의뢰하여 그 회신결과를 수사·공판에 반영

○ 사고발생 다음날(4. 17.) 청해진 해운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3일째(4. 18.) 선장 등 3명 구속을 시작으로 4. 18.부터 4. 26. 사이에 선박직 15명 전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책임자 총 38명을 입건하고 32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2 ‘사고원인 관련 구속기소 현황’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세월호 침몰 원인 개요

○ 세월호는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됨

○ 위와 같은 세월호 침몰의 직접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청해진해운 자금 착복과 전횡으로 청해진해운의 재무 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고 과적을 자행함은 물론, 선박관리·직원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해 졌던 것에 기인함

- 매출 증대를 위해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상시 과적 상태로 운행한 단계에서 사고 위험이 이미 상당부분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이 기폭제가 되어 침몰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것임

※ 유병언과 그 일가가 고문료, 상표권료 등 각종 명목으로 2005년부터 착복한 청해진해운의 자금이 약 56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청해진해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과적을 상시적으로 자행

나. 세월호 사고 시뮬레이션 등 분석을 통한 사고원인 규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 복원성이 약화된 선박이 과도한 조타로 인하여 횡경사가 크게 발생하였고, 횡경사와 선회 원심력으로 인해 일부 화물이 미끄러지며 이동하면서 선박의 경사를 더욱 심화

※ 화물을 5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마찰계수와 고박효과를 고려한 유효마찰계수를 적용하여, 선박의 경사에 의한 화물의 미끄러짐과 선회 원심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 대각도 선회에 의한 횡경사와 화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약 30도의 횡경사가 발생한 후, 화물적재구역(D-Deck)의 측면 문과 선미 램프(차량 출입문)를 통하여 초기 침수가 발생
- 이후 지속적인 침수 진행으로 선박 침몰

○ '전문가 자문단' 사고 원인 분석 결과

- 세월호는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성이 더욱 악화되어 직립하지 못하였고,
- 이후 수면 부근 개구부(開口部)로 침수가 개시되어 횡경사가 계속 악화된 결과 결국 전복, 침몰

※ 전문가 자문단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주기관을 비롯한 기관실 각종 기기(주발전기, 비상발전기, 배터리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조타장치도 사고 전까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

- 한국선급 승인 적재조건 준수시 모든 조타의 경우 횡경사가 10도 내외로 발생하나, 사고 당시 세월호의 평형수 및 화물 적재량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운항할 경우 급선회시 횡경사가 최대 30도로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 고박된 화물의 이동이 없는 경우 선박 전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고박 불량으로 화물이 이동할 경우 선박의 침수가 발생할 정도의 횡경사가 발생하고, 그 결과 침수에 따른 선박 전복이 발생 가능한 사실 확인

다.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규명

○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자료,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착수

- 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 및 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회계자료,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사고관련자들 통화내역·이메일 확보 및 분석, 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업무지도팀, 사장단회의 멤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주요 전·현

직 임직원, 그 외 신엄마 등 전반적 조사

○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매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고받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

※ 세월호 출항 이후 사고 발생시까지 과적을 통해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초과 수입을 얻음

○ 유병언의 과적 운항 묵인 내지 지시하는 등 과실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과적·부실고박 과실, 선장 등의 운항상 과실 등과 중첩하여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에 해당하므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성립함

○ 다만,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 관련 수사자료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소송자료로 활용 예정

라. 세월호 침몰 및 구호의무 위반 책임

○ 세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하고,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및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탈출한 선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 과적 등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5명 구속)과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및 운항관리실 관계자 4명(전원 구속)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

마. 세월호 안전 관리 · 감독상의 부실 책임

○ 증선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4명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인천해양항만청 前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4명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 (구속 4명, 불구속 4명)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추가 입건

○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구속 3명, 불구속 1명)

○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 1명을 구속기소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방송 화면에 의하면 선체 오른쪽 바닥에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세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위 흔적은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가자문단 의견도 동일하며, 세월호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아니함
- 그 밖에 세월호의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세월호 선체에 다른 물체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세월호는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 아님

○ 7. 25.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의「국정원 지적사항」파일에 100여건에 이르는 작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으로 보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 노트북에서 복원된「국정원 지적사항」파일에 2013. 2. 26.~27. 국정원의 사전 예비점검시 지적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 ①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②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15,089톤)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및 ③「국정원 지적사항」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임

○ 세월호 침몰 당시 123 구조함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구조하였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길래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는지, 세월호 침몰이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맨 등의 폭파에 의한 것은 아닌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인 A(62세)로 확인되었음

  ※ A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신고 있던 신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이 동일함을 확인

- 세월호의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도 일체 없음

○ 8. 22.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한 결과, 재생된 세월호 CCTV 영상은 4. 16. 08:30:59에 꺼지는데 반하여 CCTV를 제어하는 DVR이 08:33:38까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로그파일(‘20140416.alg’ 파일)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이 3분 차이가 나는 것은 CCTV가 조작되었기 때문 아닌지

- 대검DFC 분석결과 및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지는 시각이 세월호 사고발생 시각인 08:48경 보다 18분가량 빠른 점에 비추어, 누군가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닌지

- 세월호 CCTV 영상에서 표시된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42:10임에 반하여,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 15. 20:59:42로 확인되는바,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일 뿐, 사고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님

Ⅲ.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수사진행 경과

○ 5. 29. 광주지검에 검 · 경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세월호 구조 관련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사고 후 구조과정의 문제점 전반에 관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진도VTS에서 야간 시간대에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센터장 등 13명 관제사 전원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 불이행·상급지휘관서의 퇴선유도 지시 불이행 등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로 승객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확인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언딘에 해경 상황실 보고서를 유출하고,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본청 수색구조과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10. 6. 불구속 기소

○ 또한,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해양경찰청 차장과 수색구조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

○ 6. 5.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하고, 7. 7. 언딘 본사, 대표자 주거지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7. 21. 해양구조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컴퓨터 70대 총 68,000여개 파일 압수, 해경 TRS 무선교신기록, 상황실 경비전화, 내부 메신저 대화기록, 내부 작성 보고서, 진도VTS 관제석 복무감시용 CCTV 압수 · 복원, 언딘 의혹 관련 78개 계좌 추적

※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관련자료 일체 확보·분석

○ 해경, 언딘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였고, 해경 95명을 비롯하여 세월호 승무원, 구조 참여 어민, 언딘 관계자 등 총 172명(연인원 450명) 소환 조사

※ 군검찰에 의뢰하여 군 관련 필요부분 조사 및 자료 확보

○ 형사책임 추궁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음

※ 상세내용은 별첨3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 등 참조

2. 주요 수사 결과

가. 진도VTS 관제담당자의 부실 관제

○ 진도VTS의 부실 관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요원 13명 전원을 입건하여, 7. 21. 기소 (구속 5명, 불구속 8명)

○ 범죄사실 요지

- 2014. 3. 15.~4. 16.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음 【직무유기】

※ 사고 당일 06:00~07:30 B(C팀원), 07:30~08:15 C(C팀장), 08:15~08:50 B(C팀원), 08:50~09:00 D(A팀원)이 단독으로 관제하였고, 사고현장을 관제하는 2섹터 담당 관제사 등 다른 관제사들은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

- 2014. 3. 28.~4. 16. 마치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교신일지 허위 작성·비치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14. 4. 19.경 관제업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5. 22.경 녹화파일을 삭제 【공용물건손상·공용전자기록등손상】

※ 수사결과 관제업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제실내 복무감시용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영상녹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도VTS 관제사 전원이 대책을 상의한 사실, 감사원 감사·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로 진상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정황 확인됨

※ 대검DFC에서 삭제파일을 복구한 결과,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1섹터 관제요원조차 장시간 휴대전화사용·수면·무단 이석 등 관제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한 사실도 확인됨

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결과, 미흡한 선내승객 구호조치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지휘관으로서의 현장 판단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어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기소하였음

○ 범죄사실 요지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 · 유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병언,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선장·선원 등의 고의·과실과 중첩·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함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 하에 상급지휘관으로서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014. 5.경 세월호 침몰사고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마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첨부하는 등 조작함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공용서류손상】

※ 감사원 조사·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됨

다. 해경 차장 등의 '언딘' 특혜 제공 관련

○ '언딘'이 구난(선체인양)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해경이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최상환, 수색구조과장(총경) E,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경감 F를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 해경 차장을 비롯한 일부 해경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일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계약체결 당사자인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하도록 하여 사고현장에 동원 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됨

○ 범죄사실 요지

- 최상환, E, G는 공모하여, 언딘 대표의 부탁에 따라 당시 건조 중인 선박이어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일주일 안에 사고현장에 동원시키기 위해, 2014. 4. 21. 조선소에 리베로호를 신속히 출항시키도록 명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선박안전법위반교사】
- E, G는 공모하여, 2014. 4. 21. 목포해양경찰서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조선소에 내리도록 압박·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F는 2013. 7. 12. 공무상 기밀사항이 기재된 상황실 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언딘 이사에게 송부하고, 2014. 4. 16.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 행사 등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아닌지

- 해경·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들을 구조활동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민간잠수사 H가 언딘의 협력업체 관계자임에도 다른 민간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강조류 및 해수 선체유입으로 인해 해경과 해군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이 골든타임을 놓친 한참 뒤에야 뒤늦게 도착한 과정상 문제는 없는지

- 사고 사실 파악 직후 출동 준비를 하였으나 이동 헬기의 부족, 준비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 사정에 기인하여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지휘가 중요한데도 즉시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3009함에 그대로 승선한 채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 지휘 소홀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목포해경서장이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즉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으로 현장지휘관인 123정장에게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였고 123정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목포해경서장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움

○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119 첫 신고학생과 통화시 위도·경도를 물어보고, 119신고를 진도VTS에 문서로 통보하느라 10분 허비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안전여부 및 선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119로부터 3자 통화를 통해 연결된 최초 신고자에게 위·경도를 묻느라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 신고자와 통화 중 AIS를 통해 세월호의 위치를 찾아 서해청 등에 유선 보고를 하고, 09:03경 TRS를 이용하여 경비정 등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조난 사실을 알리고 출동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군의 VHF 청취록에는 있으나 해경이 제출한 VHF 교신록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해경의 늑장 대응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교신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 VHF의 도달 거리는 통상 25~30마일이며, 목포305함의 방송 당시 진도VTS가 305함과 80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도VTS의 VHF 교신기에는 위 방송 내용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조작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함

Ⅳ.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책임재산 환수 및 그 관련 의혹 수사결과

1.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수사

○ 수사 착수경위

-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로 인한 부실운영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하였음

○ 수사 진행상황

-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 5명, ㈜다판다 대표이사 등 계열사 임원 9명 구속 기소

  ※ 상세내용은 별첨4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 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으며,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재판 중에 있고,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

○ 범행수법

- ① 상표권료, ② 고문료, ③ 경영자문료 또는 컨설팅비, ④ 사진대금 또는 사진사업 출자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 수사결과, 유병언 회장이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지에서 개최한 사진 전시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대금으로 빼돌리는 등 유병언 일가가 상표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책임재산 환수

○ 재산환수 특별반 구성

-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검사 4명과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으로 특별반을 구성·운영

○ 제1차 추징보전 명령

- 5. 27. 161억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및 21개 주요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 635,080주(평가액 234억원 상당)에 대해 제1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2차 추징보전 명령

- 6. 16. 유병언 차명 소유 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유대균 실명 보유 부동산, 유대균 차명 소유 자동차,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 합계 213억원 상당에 대해 제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3차 추징보전 명령

- 7. 1. 유병언 차명 소유 역삼동 상가 및 농가주택, 유혁기 실명 소유 아파트, 고가의 사진기 등 합계 102억원 상당에 대해 제3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4차 추징보전 명령

- 7. 17. 유병언 차명 소유 영농조합법인 6개, 계열사 2개, 측근 20명의 토지 및 건물, 비상장주식 등 합계 344억원 상당에 대해 제4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제5차 추징보전 명령

- 7. 31. 유병언이 영농조합법인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토지·건물 86억원 상당, 김혜경과 그 가족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104억원 상당에 대해 제5차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인용결정

  ※ 190억원 상당 재산 중의 6/11에 대한 상속지분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인용

○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합계 1,157억여원으로 이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자금 횡령·배임 금액 1,334억원의 약 86%에 해당함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는 법무부 및 서울고검 주도로 진행 중이

며(예상 구상금 채권 4,031억원), 가압류 대상재산의 가액은 약 1,222억원(유병언 실·차명 재산 864억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선원 등 358억원)임

3. 관련 의혹 수사결과

○ 유병언의 사돈인 I(의료재단과 학교법인의 이사장)가 유병언의 지시로 ‘ㄱ’골프숍을 운영하는 J로부터 골프채 50억원 어치를 구입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 I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로비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I는 “J 운영 골프숍에서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
- 골프숍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 확인 결과, I가 구입한 골프 용품은 50억원 상당이 아닌 4년 동안 총 3,000만원 상당에 불과
- 구입한 골프 용품 사용처 확인 결과, I 본인과 부인이 사용 중이거나, 나머지는 I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직원 3명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교부된 것은 없었음

  ※ 그 밖에 유병언 측에서 ‘ㄴ’ 골프수입업체로부터 골프채 50억원을 구입하였다는 의혹도 있으나 ‘ㄴ’ 골프업체 관계자 진술 및 거래내역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유병언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이 중요한 구원파 내부자료를 숨겨 두었다는데 사실인지

- 유병언이 도피용으로 준비한 가방(종이박스 포함)은 총 13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일부 언론에서 ①번 가방에 유병언의 로비리스트 등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확인 결과 그곳에는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 유병언이 평소 애장하던 해외 고가 명품들이 들어 있었을 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는 발견되지 않았음

  ※ 그 외 나머지 가방에서도 로비 리스트 등 중요 서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가방을 쌌던 K도 로비리스트는 없었다고 진술

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1. 수사 진행경과

○ 4. 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4. 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 5. 2. 인천·부산지검 이외에 전국 9개 검찰청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관하여 수사 확대
※ 상세내용은 별첨5 ‘해운비리 구속기소 현황’ 참조

○ 수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유병언 일가의 회사 경영비리, 증축·과적 등 운항상의 직접적 문제,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이외에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선박 건조·도입 단계」에서는 ① 불법 대출 ② 해운·조선업체 리베이트 ③ 불법 중선인가 등의 문제가 확인
「선박 검사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선박검사 ②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③ 우수정비사업장 비리 ④ 감독기관·검사기관·안전관리 대행업체·선사 간 유착 비리 등의 문제가 확인
「안전점검·관제 단계」에서는 ① 허위・부실 안전점검 ②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③ 정원초과·과적·부실고박 등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④ 선박검사 및 점검 미이행 ⑤ 해상교통 부실관제 등의 문제가 확인
「선사·안전업무 수탁기관 운영 단계」에서는 ①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해운조합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② 선사 등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의 문제가 확인

2. 선박 관련 단계별 비리 수사

○ 선박 수입 과정
-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활용하여 59억원 상당을 편취한 선박회사 대표 등 선박 담보 사기 대출 사범 7명 구속 (부산지검, 포항지청)

○ 선박 검사 과정

- 대여받은 해기사 자격증으로 해수부 장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받고, 팽창식 구명뗏목 등에 대한 허위의 점검결과표를 작성하는 등 해수부장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업체 대표 2명 구속 (인천지검)
- 선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시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한 한국선급 지부장 구속 (창원지검)
- 건조 중인 선박 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수수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및 금품공여 업체대표 등 구속 (창원지검)

○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 인천·제주 복선면허 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검·경 합수부)
- 인천·제주 복선면허 신청시 선박매매계약서의 톤수를 축소기재하여 증선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3명 기소 (검·경 합수부)
- 선박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당 면허 취득 사범 15명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

○ 선박 안전점검 과정
- 상습적으로 과적·정원초과 등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수백회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계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운항관리자들 19명 구속 (인천지검, 제주지검, 군산지청, 통영지청, 포항지청)
-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장비결함이 있는 선박에 운항정지명령을 한 부하경찰관에게 정지명령을 철회토록 한 해경 간부 구속 (인천지검)

○ 선박 운항 과정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석유류인수증 발급하여 항만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유류보조금을 편취한 해운사 대표 등 5명 구속 (순천지청)
- 평택항 민자컨테이너 운영수입을 조작하여 정부보조금 6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평택지청)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3,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통영요트협회 부회장 구속 (창원지검)

3. 관련기관 유착 등 비리 수사

○ 선박톤수 측정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목적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항만청 소속 6급 공무원 및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무마 대가로 감사 담당 공무원을 퇴직 후 연봉 1억원의 한국선급 감사팀장으로 고용한 한국선급 前 회장 등 한국선급 임직원 4명 구속 (부산지검)

○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관련 손해사정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한 사업본부장 및 손해사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인천지검)

○ 해운조합 자금 1억 6,000만원을 횡령한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선주들의 안전운항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본부장 등 해운조합 간부 7명 구속 (인천지검)

Ⅵ. 향후 계획

1. 공판 활동에 만전 및 남은 의혹 계속 수사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과정 등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음

2. 해외 체류 중인 비리 관련자 검거·책임재산 확보에 주력

○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청해진해운 실사주 일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해외에서의 검거 및 범죄인 인도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음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유병언 일가가 보유한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여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에 주력하겠음

참고자료 4-9

3. 국민 안전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 해운업계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음

○ 수사결과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세월호 정식선장 신 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3항사 박 모의 5월 27일 질문조서에 따르면[4] ‘동그란 회색 화물’의 적재를 지적하고 있다. 평소에 이런 동그란 회색 빛깔 화물이 적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 문 : 선수쪽에 철재가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
> 답 : 선수 컨테이너 사이에 처음보는 동그란 회색 빛깔의 화물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냥 안 넘어지게 컨테이너 사이에 넣었나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질문 2. 조타실에서 비상벨을 7회 누르면 퇴선명령인 것과는 별도로, 선원들이 탈출하던 조타실 좌현 갑판에, 선원들이 구조된 지점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기적을 울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를 장음으로 7회 누르는 경우전원 퇴선 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가?

질문 3. 국정원이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면서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2013년 2월 27일 경 견습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보안측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참여하였는가? ① 커피숍 책장 증설 작업 ② 오락실 바닥 데코타일 변경 및 도색작업 ③ 직원들의 작업수당 보고서 같은 부분이 특별점검이나, 월례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가?

[가. 나온다면]

(1)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면 특별점검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인천항만청, 해양경찰서, 운항관리실(한국해운조합), KST(선박안전기술공단), KR(한국선급) 중 주로 어디에서 지적하는가? / 월례점검에서 나온다면 운항관리자인 한국해운조합에서 지적하는 것인가?

(2) 위 ①②③은 그 국정원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저 내용은 월례점검이나, 특별점검 기간에 충분히 지적한다는 것인데,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는 보안측정 자리에서 보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4) (140430_0527) 세월호 (3항사 박한결)

참고자료 4-10

[나. 나오지 않는다면]

(1) 경영자가 아닌데도 저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외부 기관이 있다면 어디인가?

(2) 국정원은 보안측정 때,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인천해경, 기무사에서 한 지적한 사항이 95가지 정도이고 국정원이 한 지적은 4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해양항만천/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인천해경/ 기무사가 그간 세월호의 운항에 관련하고 있었는가? 세월호 운항에 관련해왔다면 각 5개 기관에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지적해왔는 지 자세히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인천해경의 경우 특별점검에 참여하여 선내의 어떤부분을 집중해서 검토했었는지 등.)

질문 4. 세월호 CCTV는 운항하는 내내 늘 작동해야하는 것인데 2014년 8월 22일 목포지원에서의 증거보전에서 복원된 세월호 CCTV 64개 화면은 8월 30일 59초에 모두 꺼진다. 그 때는 아무런 충격도 없었고, 배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CCTV가 작동을 멈추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 정전때문이라고 한다면]

(1) 여태까지 8시 30분 경에 정전이 있었다는 증언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정전으로 CCTV가 꺼졌다면 이는 8시 52분 이후일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8시 30분에 정전 때문에 CCTV가 꺼졌다는 것이라면, 사실 실제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것은 8시 30분 경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 문 : 사고전후 발전기가 고장 났거나 전기가 나갔는가요?
> 답 : 사고 발생 후 조기수(박 모)가 컨트롤 룸에서 나올적에 발전기 계기를 보니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후 전등이 1번 꺼졌다가 켜져습니다. 나중에 기관장에게 물어보니 발전기 lo가 공급차단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140529) 세월호 (3기사 이수진)

(2) CCTV 전력 공급원은 어디이며, 그 공급원의 위치 및 차단하는 방법을 알고 는 승무원은 누구인가?

[나. 충격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충격강도를 가지는 경우에 CCTV가 멈추는가? 선체에서 그런 충격을 느낀 사람은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데, CCTV가 멈출 만큼 큰 충격이 30분에 있었단 말인가?

[다. 모르겠다고 한다면]
CCTV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CCTV 영상 등 작동 여부는 누구에게 제출하며, 그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

질문5. 2013년 2월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한 보안측정에서 국정원이 지적했다고 하는 CCTV 추가 신설하라는 브릿지 LIFERAFT 2곳과 트윈데크 2곳에는 CCTV를 설치하였는가?

[설치했다면]
화물을 선적하는 등 외부에는 설치하면서 선원들의 조작과실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타실에는 CCTV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지적사항을 지키지도 않았음에도 현재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된 보안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며, 청해진해운 및 세월호 선장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질문 6. 세월호는 평상 시 서울-제주 운항할 때, 맹골수도 쪽으로 통항하였는가?[5] 만약 다른 때에는 바깥쪽으로 둘러서 다니는데, 4월 16일만 특이하게 안쪽으로 통행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름값이나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아끼려면 매번 그 길로 다녔어야 하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면 이미 너무 늦었는데 굳이 그래야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질문 7. (1) 조타실의 로드마스터 등 기계들을 통해서 배의 복원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계기판 등이 존재하는가? 만약 계기판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운항 중에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 세월호 평형수는 운항 도중 각 탱크별로 펌프 등을 이용해서 채우는 것이 가능한가?
(3) 평형수 보충 여부 결정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평형수를 채우고 빼는 조

5) 사고를 목격한 진도 어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청취한 일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민들 중 세월호가 늘 맹골수도 안쪽으로 통항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비슷한 항로를 지나다니는 다른 배의 선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세월호가 운항할 때 맹골수도를 통해서 통항하지 않고, 맹골수도 밖으로 돌아서 통행하였다고 하여 각 진술이 엇갈린다고 보고 있음. 선체에 문제가 생겨 침몰할 것을 알고 일부러 물살이 센 맹골수도쪽으로 배를 몰아 침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유가족이 있음.

참고자료 4-10

정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예를 들어 노트북? 리모트 컨트롤? 혹은 직접가서 밸브를 여닫는지) 설정하는가?

‘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국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 항공기는 전쟁 · 테러 등 비상사태 시 적(敵)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며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거의 유사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오하마나호도 보안측정을 받았는가?

[가. 받았다면]오하마나호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보안측정을 받았을 때 국정원에 의해 지적받은 사항들을 기록하고 처리한 담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항은 어떤 것인가?

[나. 안 받았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는데 왜 받지 않은건가?

질문2. 오하마나호의 CCTV는 조타실 등 선원들이 근무하는 곳에도 설치되어있는가? 총 몇 개의 화면이 나오게 설치되어 있는가? 세월호와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왜인가?

질문3. CCTV를 꺼도 되는 경우는 운항규정 상 어떤 경우일 때 허용되는가? CCTV를 꺼야한다는 판단 등을 하는 의사결정자는 선장인가? 아니면 다른 기술담당 선원이 따로 있는가?

질문4. (1) 배의 복원성을 확인하는 것이 조타실의 로드마스터로 가능한가? 평형수라는 것은 각 탱크별로 처음 채우고나면 출항 뒤에 복원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보충하거나 빼는 것이 불가능한가?

(2) 운항 중 조절할 수 있다면, 평형수를 조절하는 것은 누가 담당하는 역할이며, 평형수 보충하는 것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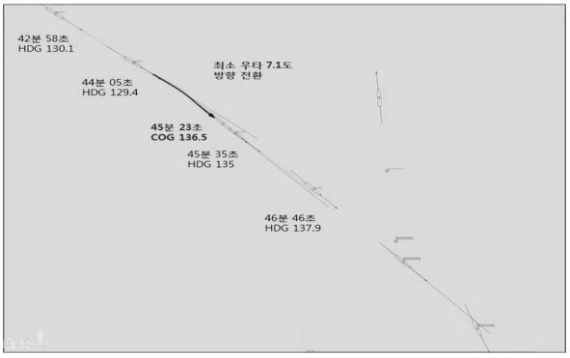
(3) 원격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가? 노트북을 통해서 하는가?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단장 허용범에 대한 질문사항’

Ⅰ. 지그재그 운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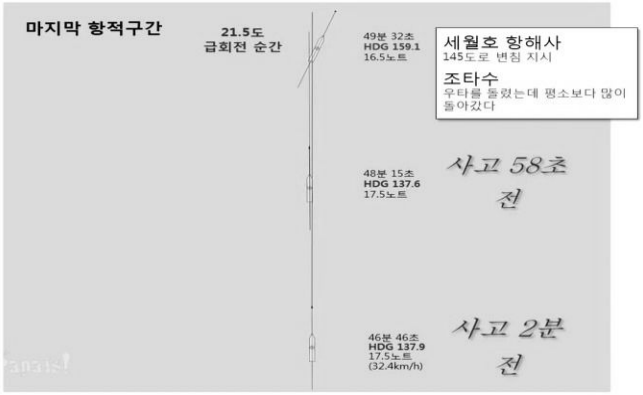
질문 1. HDG(헤딩) 정보와 COG(코드) 정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예상답변]
1) HDG(헤딩)이라는 것은 현재 뱃머리가 향하는 방향(각도)를 말한다. 나침판이 전해주는 각도 정보가 헤딩(HDG)정보로 북쪽을 기준으로 몇도인가 개념.
2) COG(배가 지나온 발자취) 정보. 자기가 지나온 코스 정보이다. 지나온 과거 정보.
※모르시는 경우, 질문의 진행상 필요하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헤딩값과 COG를 고려할 때 8시 45분 23초부터 46분 46초의 세월호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타 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일견에서는 그 위치까지의 이동은 좌타로 꺾었다가 다시 우타로 꺾어야 갈 수있는 코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질문 3. 137.6도에서 140도로 회전(2.4도)하는 경우와, 134.7도에서 140도(5.3도)로 회전하는 경우의 화물의 고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4. 헤딩값과 COG를 고려할 때 항적에 있어서 46분46초 위치에서 48분15초 위치로 가려면 어떻게 운항해야 할까?를 고려할 때 우현 타를 이용해서만도 이동이 가능합니까?



질문 5. AIS 항적로는 8시 48분 37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 복원되지 않았는데, 그 비는 부분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헤딩값과 COG를 고려할 때 48분15초 위치에서 49분 32초 위치로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항해야 합니까? 한 방향의 타만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좌타를 쓰지 않고서는 49분32초에 배의 위치 및 HDG(헤딩) 정보가 저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것은 48분15초의 헤딩(HDG)이 137.6도 였는데, 여기서 우타로 조금씩 138->139->140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48분15초에 137.6도 였던 헤딩이 134.7도로 좌회전 했다가 다시 우회전 해서 140까지 급회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II. 화물 선적에 관련하여

질문 1. 선적했던 화물 중에서 70톤 이상에 해당하는 화물이 존재합니까? 한다면 어떤 화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질문 2. 증거 375 cctv 채널2번 16시 36분 이후 화물을 적재할 때 크게 기울었던 때에 적재했던 화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들은 전문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화물 중에 70톤 이상 나가는 군용화물[탱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일단은 작성합니다.

참고자료 4-13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이윤철, 김영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증인 이윤철의 채널 A 인터뷰 제시) 증인은 채널A에 출연해서 “17.1 에서 11 정도로 내려간다는 게 비정상이죠. 선박은 정지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17.1노트가 상당히 더 많은 거리를 나가면서 한참 있다가 11노트 정도가 돼요. 엔진을 죽인 상태여도 한참 후에야. ”, ”앞에 위험물체가 나타난다거나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충돌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엔진을 조타실에서 스톱엔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라고 인터뷰 한 적이 있나요? 충돌위험이 있어서 스톱엔진을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질문 2. 현재로서는 충돌위험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속력을 줄었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질문 3. 증인은 세월호의 속도가 왜 갑자기 줍었는지 알고 있는가요.

'피고인 조기수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질문 1)

1) 탈출 당시 기관부 선원 중 무전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무전기를 통해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교신하였습니까?

2) 기관부 선원 중 한 사람이 강혜성과 무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그 무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 피고인들, 양 모, 강 모 외에 선내에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고 당시 복도에서 무전 중이던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

(질문2)

• 기관실에 기관부가 한 명은 상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박 모는 기관부 선원 모두 기관실에서 나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세월호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질문3)

• 기관실에는 선내 전체에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질문4)

• 피고인이 3층에서 박 모를 만났을 당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였습니까?
→ (작동하지 않았다면)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였다면 세월호가 더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Ⅴ. 형사재판지원

#1 선원사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재판진행관련)

사 건 2014 고합 180 살인 등
피 고 인 이준석 외 14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향후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들어가며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취지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거의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으로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 대다수가 집단적으로 사망, 실종되어 부모는 자녀를 잃고, 학생들은 친구와 선생님을 잃고, 학교는 한 학년 학생들의 3분의 2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된 참사이자 불행입니다. 게다가 다른 대형사고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들이 나중에 그 결과를 전해 들을 뿐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그 부모, 가족들, 온 국민이 인식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실제 많은 가족들이 배가 기울어진 이후 “어떡해.. 엄마 안녕 사랑해” 등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 분노, 불신, 슬픔 등을 심각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실체진실의 발견에 목적이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도 형사재판에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변호인들이나 피해자들은 그런 형사재판의 본질을 존중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 시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대형재난 피해자들은 사고 후 “분노, 화, 원망, 불신,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정서는 ‘비정상적인 사건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들' 인데, 이 사건과 같은 대형재난에서는 최소 1~2년이 지나야 서서히 위 정서들이 극복되고 새로운 출발 및 정서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심리적 고통이 제대로 아물 틈이 없이 정서적으로 회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 스스로도 그 분노와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향후 재판의 원활한 진행 및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혹여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막고자,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느낀 바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찬찬히 읽어보시고 재판 과정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의견서에는 생존자,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경험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에 잘못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의 상태 등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어 이 의견서는 검찰, 재판부,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외 외부에는 절대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심리상태에 대한 의견

가.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망 혹은 실종 가족을 두게 된 분들은 "가족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분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슬픔과 상실감, 죽은 가족을 살려낼 수 없다는 절망감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등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1)]

1) 전문가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外傷後 障碍,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위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PTSD,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주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서 벗어난 사건들, 이를테면 천재지변, 화재, 전쟁, 신체적 폭행, 고문, 강간, 성폭행, 인질사건, 소아 학대,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 그 밖의 대형사고 등을 겪은 뒤에 발생합니다.
증상은 과민반응(hyperalertness, hyperarousal)과 충격의 재경험(Re-experience or intrusion), 감정 회피 또는 마비(avoidance or emotional numbness)로 나타납니다. 과민반응은 쉽게 깜

특히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부모나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에 비해 훨씬 더 비통하고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일상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기가 싫어요. 밥하려고 밥통을 쳐다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밥 한 번 해 먹일 수 있는 애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밥 먹고 살겠다고 밥을 하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가슴이 미어져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분들의 특성은 외견상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죄책감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돌변하여 순간적으로 돌출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 중 하나로서, 이분들 대부분은 상당한 기간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가족들의 상당수가 아직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고,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가도 이내 후회를 하면서 사망신고를 취소하기를 원한 분도 있고,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매일 같이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리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들의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분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재판부나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짝 놀라고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집중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참전 군인의 경우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항상 벽쪽에 등을 대고 있고, 강간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범인이 있는 것처럼 경계하게 됩니다. 충격의 재경험 증상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꿈, 환각이 재연되어 실제와 같이 느끼고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정 회피 또는 마비의 증상은 정상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비현실적인 감정만 들기 때문에 분노와 피해의식, 수치심이 들게 됩니다. 또한, 두통이나 소화불량, 위통, 수전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기와 같은 현상도 생기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는 게 어려워지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별 불안과 학교 공포, 외부인 공포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비현실적인 감정 때문에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여 남용 및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율신경계 장애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환각이 보이고, 해리성 장애나 공황 발작이 같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출처,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 %EC%99%B8%EC%83%81_%ED%9B%84_%EC%8A%A4%ED%8A%B8%EB%A0%88%EC%8A%A4_%EC%9E%A5%EC%95%A0)

참고자료 5-1

나. 생존자 및 가족들

생존자 및 그 가족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증세 중 하나로 사망자와 실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생존자 죄의식'이라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친한 친구들 중 한 아이만이 생존하여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님이 자식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듣길 원해서 생존한 아이를 만나고자 했으나, 그 아이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친구들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아이들을 4개 반으로 다시 반 편성을 하였음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죽은 친구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생존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낮에는 태연히 행동하고도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곤 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금방 경험한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곤 하는가 하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학습효과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생존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생존한 일반인들이나 단원고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커서,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사고 엿새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생존 교사들도 정상적인 수업이나 업무는 물론 본인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심리상태 때문에, 심리전문가나 곁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순간적인 언동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잠깐 스치는 재판부나 검찰,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언동들을 그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언행에 대해 여느 정상적인 사리변별력을 가진 일반 평균인들의 잣대로 화를 내거나 제재를 가하려고 함으로써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께서는 따뜻한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상당한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주신다면 피해자들의 혹여 생길 수 있는 돌출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나오는 비이성적인 언동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들이나 법조인들의 잣대를 기준하여 엄하게만 다루지 마시고 이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시면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재판과정에서 배려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사항

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아 주십시요

재판진행시, 이 사건의 사망자나 실종자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단어사용이나 표현 방식에 하나하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에서 방청객들이 당혹스러워하거나 불편해 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능한 피하고 좀 더 순화된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학여행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아이가 그저 돌아 올 것같은 마음에 매일 같이 아이의 방을 청소하는 등 아직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시신”이나 “시신수습, 시신인양, 시신 건졌을 때”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감정의 동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가족들 서로 간에나, 심리전문가, 변호인들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검찰에서도 “시신”이라는 용어 대신 “아이들”, “자녀들”로, “시신수습, 인양” 대신 “사고 후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사고 후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이를 찾은 날”, “아이가 뭍으로 올라온 날” 등으로, “실종자” 대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아드님, 따님)”라는 용어를 사용해주시면 방청석에 계신 가족분들이 재판부와 검찰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청인들 중 피해자들을 지칭할 때 “피해자”나 “유족”이라는 단어 대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가족분들” 등 평소 피해자들이 불리는 통상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도 법정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 처음이라 긴장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단어의 사용으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특히 피해자들 중 대다수인 학생, 선생님유가족들은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되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주십시오

모든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방청석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설명해주실 때 혹은 검찰에서 어떤 설명을 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들이나 생존자를 신문하거나 증언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법률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초기 재판과정에서, 가급적 딱딱한 법률용어로 말씀하시기보다 각각의 법률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바꾸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질문이나 설명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한 두 번만 설명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생략하여도 되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처음 몇 번만이라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향후 재판진행과정에 대하여 초기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공권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나 재판에 대해서도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근저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에 더 불신하고 더 절망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초기에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좀 더 재판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진술기회를 주겠다는 점이나 그 시기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주시고, 재판 이전에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법원과 재판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피해자들도 신뢰의 토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생존자증언시 비공개재판으로 해주시고, 증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해주시길 바라며, 증언기일을 잡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해주시고,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받아 불필요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신문내용을 제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존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존학생에게 많은 유족들 및 피고인들 앞에 서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반드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고, 비디오중계장치의 활용, 비공개증언, 피고인들의 퇴정 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존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동석하여 생존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함께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증언이 필요한 쟁점과 취지를 미리 알려주시어 검찰과 피해자들 변호인들이 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필요할 경우 증인이 증언 이전에 심리적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이 증언 직전에 제출되어 재판부에서 미리 증인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질문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본건의 경우 생존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가급적 사전에 증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밀봉하여 제출받은 후 현재 생존자들을 치료 중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등으로 치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신문사항을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등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 피해자들이 방청석에서 다소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일단 그 심정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청객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피해자들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이고, 이들은 자녀들을 잃은 1차적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지만 2차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및 구호조치미숙 등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보다 가족들의 집단반발을

참고자료 5-1

예상하여 정보과 형사를 통해 가족들을 미행하며 감시하는 일을 경험하였고, 실종자 구조활동에 적극적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으며, 이번 공판마저 피해자들 모두가 방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재판절차에서도 배제되었다는 분노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성적으로 차분히 법정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나 재판부, 검찰, 기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치유 중인 전문가들(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심민영 박사님 등)에 의하면, 희생자 가족들의 일시적 분노폭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치유적인 관점에서도 조용히만 있거나 긍정적이거나 주변 분위기를 애써 의식하며 맞추려는 분들보다 자연스럽게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가장 예후가 낫다고 합니다.

(2) 때로 피해자들 중에서는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도대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실제 해 주는 게 뭐가 있소”, “당신들이 뭘 해줄 수 있는지 먼저 보여라”, “왜 쓸데 없는 말을 하냐”며 무작정 화부터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상, 협상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지 보상 협상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가끔 변호사나 제3자들이 무심코 관련 얘기를 꺼내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피해자분들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는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몰라서 무심코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조금 기다리면, 곧 합리성을 찾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모 국장의 망언에 대해 항의하고자 KBS를 항의 방문했을 때, 희생자 가족 대표분이 생존학생 대표가 응원차 전화를 했다면서 그 목소리를 마이크로 들려주었는데 생존학생이 “어머님, 아버님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꺼내자 어떤 분도 흥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하며 “아니야, 뭐가 죄송해, 너희라도 살아와 줘서 고맙다”라고 했었습니다.

(3) 따라서 혹여 피해자분들이 피고인들을 처음 대면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재판부나 제3의 인물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하더라도 회복을 위해 거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또 재판부가 너그럽게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이 그러시군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런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1차적으로 진심으로 피해자 가족의 심리상태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재판에서의 유의점’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를 줌과 동시에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더 큰 분노표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정적 심리상태에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재판 시작 전에 공식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재판 도중 항의나 분노표출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논리적,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감정적으로 더 격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성을 찾게 하고 치유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통상 방청석 내에 소란이 있을 경우 감치, 퇴정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일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고지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만 행해 주시고, 법정 경위분들도 제지시 물리적인 모습보다 피해자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판부께서 법정 경위분들께 이러한 점을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순간적으로 돌출적인 행동을 해 놓고도 일단 공감해 주면서 차분히 상황 설명을 해 주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왔으므로,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처음 몇 차례 그런 돌발 행동에 재판부가 잘 조율해 주신다면 재판부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돌발적인 사태는 사라져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재판부께서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들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십시요

피해자들, 특히 사망자의 가족들은 자녀들의 죽음과 상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을 사고 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며, 그들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자료 5-1

피해자 변호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에서 재판부를 통하여 본 사건이 변호인의 선임 없이는 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부분이 국선 변호인이라는 점, 피해자들도 검찰과 직접 연락이 어려우므로 변호인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듯 피고인들도 그러한 조력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들 변호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점 등을 설명 듣는다면,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며, **국선변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이나 분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칠곡계모사건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몇몇 사건들의 경우, 국선변호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사퇴하는 사례가 빈발하곤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이므로, 첫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들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 재판부께서 최선을 다해 진실 규명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요

피해자들이 아이들, 가족들의 죽음과 상처, 고통을 두고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른채 억울하게 죽거나 고통받은 자녀, 가족에게,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한 노력과 과정,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이야말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녀사냥처럼 피고인들을 특정하여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이를테면 선박회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그리고 구조단계에서 일어났던 부조리 등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잘잘못을 법의 잣대를 통해 조목조목 명확히 밝혀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 그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 과정을 조목조목 명확히 밝혀내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 전

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본 재판은 그러한 우리 사회의 책무이행의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자주 환기해 주시고, 법조인의 시각으로는 다소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거신청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조금의 의혹도 없이 법원과 검찰을, 그리고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와 검찰에서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주신다면 피해자들은 분명 서서히 분노와 슬픔을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유지와 피고인의 방어를 기본 축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에 참여할 여지가 적습니다. 비록 형사소송법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하게 형사재판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은 현재 수사진행내용이나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충분한 진술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광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탓에 제대로 방청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마저 자신들이 피고인들보다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비록 공소사실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들의 신뢰 회복, 실질적인 치유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진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5-1

자. 피해자들은 집단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직접 희생자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다수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가족대책위, 생존자모임 등 각각의 상황별 대표기구가 있기는 하지만(현재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한 유가족대책위, 단원고 생존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 생존자모임, 일반인생존자모임, 선생님유가족모임, 진도실종자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 해도 모두 상황도 다르고 심리적인 부분도 달라서 피해자들은 각각 이 사건 범죄의 개별 피해자이고 개별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각각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타내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항의를 할 때, 피해자들 전체의 입장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또 침묵하는 다수가 발언자 편이라고 보고 섣불리 한 사람의 항의내용을 전체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칫 과잉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조직으로 느껴져서 그 자체로 다른 분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압도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평범하고 순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체적으로 의사결정된 어떤 입장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분들 중 어떤 분들은 현재 분향소 옆에 설치된 유가족분들을 위한 텐트에 자주 나와 대화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을 기피하고 유가족 텐트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존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 고지하는 사항을 피해자 변호인들이, 각 대책위 등에서 아무리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냐”,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러한 부분을 절차적으로 억울하게 느낄수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피해자 대리인들도 미리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고지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분들이 이미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해경, 언론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탓에 사소한 안내의 미비 등에도 감정적으로 항의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이고 다수여서, 개별적인 소통이 잘 안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의 전달사항이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달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들에게 따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는 등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개별 피해자분들이 각기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특히 유가족분들과 생존자 분들 사이에서는 상호간의 죄책감 등으로 인해 서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로 더 큰 감정적 동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이 다소 감정적인 언동을 반복할 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자제하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등의 비교하는 표현은 삼가 주시고,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크실 수 있는데 향후 진술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광주까지 오는 게 어렵다면 따로 진정서 등을 내시면서 누구였다고 알려주시면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는 등으로 다른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정적으로 납득 및 위로가 될 것입니다.

4. 결 어

가.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어 재판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나 상담 등 여러 지원 과정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에서도 함께 노력하여주신다면 피해자들의 분노와 슬픔을 가라앉히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청이 기존의 형사절차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이 결집되어 일어난 참담한 결과물로서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례가 없다고 하여도 적극적인 변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절차 등에 대해 요청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의

참고자료 5-1

견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6. .

피해자들의 변호인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1부 귀중

#2 선원사건 2014년 6월 10일 재판방청안내(가족[2])용)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

1. 공판기일 및 재판 진행

-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 -> 증거조사(증인신문, 현장검증 등)기일~로 진행됨
- 6월 10일(화) 14:00 첫 기일(공판준비기일), 6월 17일(화), 19일(목), 24일(화)~ 집중하여 매주 화, 목에 재판 진행 예정임(그중 3~4회는 준비기일)

* 따라서, 가족분들은 반별/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방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 및 방청권(출입증)

- 담당 재판부(제11형사부, 세월호 관련 사건 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가족분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주법정(201호, 103석+장애인석), 보조법정(204호, 75석+장애인석, 폐쇄회로 영상중계)을 설치하고, 그 중 주법정 60석, 보조법정 45석(총 105석)을 가족 및 가족측 변호사단의 좌석으로 배정함

* 배부되는 방청권은 주법정(갈색, 201호), 보조법정(녹색, 204호)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 방청권의 유효기간은 11일(2주 동안 방청 가능)이므로, 방청을 마치신 후에 각 그룹 위원장/부위원장/총무님께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일 법정 입장 과정

- **1. 버스 하차 직전** : 법원 직원이 탑승하여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세월호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

참고자료 5-2

- **2. 검색대 통과** : 법정 입장 전에 모든 방청객(변호사단 포함)에 대해 자켓(겉옷 상의) 탈의 및 가방/소지품 검사

* 이는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안전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호주머니에 있는 물품들을 가방이나 자켓에 모두 넣어서 검색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간단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 **3. 방청 과정** : 피고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되고,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할 경우에는 무척 화가 나시겠지만,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가급적 감정 표출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조법정인 204호의 경우에는 영상중계가 이루어지므로 정숙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 **4. 피고인들의 변호인에 대함** :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3)]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정형이 무거운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반드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재판 진행을 위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현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사정으로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들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변호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사건 개요 및 상세 진행 과정

- 1.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선장 및 선원 15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입니다. 현재 위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 **2. 6월 10일 예상되는 재판(공판준비기일) 진행 순서**

3) 1~2명 정도는 해당 피고인의 부모가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① 재판부 입장 및 개정 선언 ⇨ **②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 재판부 입장시, 방청객 기립

■ 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합니다.

⇨ **③ 인정신문** ⇨ **④ 검사의 모두진술**

■ 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물어 출석한 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합니다.

* 공판준비 첫 기일이므로,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까지 진행될 수도 있음), 예상 소요 시간은 최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 이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 쟁점 정리 절차 ~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월 10일은 첫 기일이므로, 담당 재판부는 가족측의 대표 진술(이 재판에 대한 기대/바램, 담당 재판부에 바라는 점 등)을 5~10분 정도 경청하겠다고 하였으니, 재판부가 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향후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특히, 형량 결정하기 전 양형에 대한 의견), 가족측이 진술할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3. 피고인별 죄명 및 의견서를 통해 살펴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순번	피의자명	직책	죄명[4]	인정 여부[5]
1	이준석	선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특가법위반(도주선박)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참고자료 5-2

2	강원식	1등 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 ・화물적재・고박은 청해진 해운 물류팀이 주도한 것이다.
3	김영호	2등 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일부 인정 ・선내방송은 선장 지시 따른 것이고 탈출 방송 했다. 좌현 슈터 터트리려했으나 실패했고, 지원요청 받은 적 없으며, 선원이라고 밝혔다.
4	박기호	기관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
5	박한결	3등 항해사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전체적으로 인정(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음)
6	조준기	조타수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7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승선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정식 직원도 아니다. ・경비정에서 구조 작업 도왔고, 선내 사람 많다고 이야기했다. 선원임을 밝혔다.
8	손지태	1등 기관사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모두 인정
9	이수진	3등 기관사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10	이영재	기관원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11	박성용	기관원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12	박경남	조타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일부 인정 ・긴급상황임을 고지받지 못했고, 퇴선명령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비정에 탔다. 유리창 깨고 승객 구조했다.
13	오용석	조타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전체적으로 인정(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있음) ・해경과 함께 승객 구조했다.
14	전영준	조기장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모두 인정
15	김규찬	조기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배가 기우는 바람에 오른쪽 어깨, 무릎 등 다쳐 거동이 불편하여 임무를 못한 것이다 -> 공소사실 부인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4) 주위적, 예비적 죄명 : 주위적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만 예비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별 죄명에 두 줄이 나누어진 경우, 죄명 사이의 쉼표 : 두 줄에 기재된 죄, 쉼표로 나누어진 죄가 모두 적용됨을 뜻합니다.

5) 피고인 중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2

<일반적인 주의사항>

① 재판 시작 10분 전까지 방청권에 기재된 지정 좌석에 앉아 주세요.
② 휴대폰은 끄거나 무음모드로 바꾸어 주세요.
③ 재판 과정에서는 가급적 큰 소리 내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변호사한테 쪽지로 적어서 전달해 주세요.
④ 화장실은 방청 중에도 다녀오실 수 있지만, 가급적 미리 다녀 오세요.
⑤ 재판 과정은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⑥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대부분 국선변호인입니다. 위 변호사들은 재판을 위해서 법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적대감을 갖지는 말아 주세요.

<공판준비기일 재판절차 요약>

①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 경위의 요청대로 모두 일어나는 예의를 갖춥니다.
②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들을 호명하면 피고인들이 대기실에 있다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 이때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길...
③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이름과 변호인을 확인합니다.
④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등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⑤ 검사가 기소된 범죄사실을 말로 설명합니다.
⑥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 봅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라도 부인하게 될 경우,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가급적 자제하고 침착하게 앉아 계시길...
⑦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백하는 경우,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증거이름이 적힌 목록을 제출하고 그 증거별 제출이유를 설명합니다.
⑧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를 답변합니다.

#3 2014년 7월 3일자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자료문의		
	공동위원장	이명숙 변호사 (010-****-****)
	공동위원장	김영훈 변호사 (010-****-****)
	대 변 인	박종운 변호사 (010-****-****)
	간 사	황필규 변호사 (010-****-****)
	담당 ▌ 김정욱 사무차장, 변호사 (02-2087-7883)	

해경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적반하장식 고소를 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 피해자 전병삼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그 전날(6월 30일) 오하마나호 검증기일에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해경이 자신에게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전 씨는 공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 씨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현장검증기일에 피해자 변호사들의 요청으로 병원복을 입은 채로 어렵게 참석했다. 전 씨는 사고 직후부터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두드리던 단원고 학생들을 두고 살아남았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치료 중인 병원에서 잠시 외출하여 검증기일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장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들을 만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경의 구조지체 내지 무능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우연히 엿들은 기자가 중요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해경 측에서는 이러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막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 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감행했다. 만약 해경 입장에서 전 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반박내용 발표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발언의 진위 여부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해경 측에서는 생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참고자료 5-3

고소하는 가해자의 2차 가해 행태와 유사하다. 특히 해경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면, 해경 측의 고소에서 고소인은 경비정 123정 관계자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지 관계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존 피해자를 고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해경 감찰 직후에 고소장이 제출된 점, 해경이 앞장서서 고소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언론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고소가 아니라 해경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게다가 고소 전날인 6월 30일 해경이 진도관제센터의 CCTV를 일부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CCTV 삭제와 근무일지 조작을 이유로 지난 7월 2일 진도 VTS 소속 해경 3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또한 어제(7월 2일) 국조특위과정에서 해경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현황과 구조 활동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궁지에 몰린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과정에서 더 이상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리적으로도 공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전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전 씨의 경우 전 국민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인 공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을 뿐 특정 개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현재 세월호 선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경이 생존 피해자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감행한 것은 증언에 나서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 전체에게 큰 2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변협 세월호 특위(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전 씨를 도와 형사고소에 대응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고소인들은 당장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2014. 7. 3.

#4 선원사건 2014년 10월 6일 재판방청안내(가족[6]용)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본 사건은 10월 6, 7, 8, 13, 14, 15일 피고인 및 증인신문을 하고, 20일 피해자 진술, 21일 최후 진술 및 구형을 마치고 선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한반씩 재판과정과 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은 과정이었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 이번주 재판 소개

피고인 조준기, 박한결,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조준기는 사고 당시 조타수, 피고인 박한결은 사고 당시 항해사, 피고인 이준석은 세월호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 피고인 강원식은 1등 항해사, 피고인 김영호는 2등 항해사로 모두 이 사고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인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재판을 지켜 보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들은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에서 진술을 해 오면서 일관성 없이 번복하여 오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집중해서 진실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신문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번주 신문을 하는 피고인들을 이 사건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인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변명할 기회)를 주지**

6) 세월호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

않는 경우, 추후 재판의 공정성, 진술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부모님들이 위협,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격 방어 과정이 지연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부득이 방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가뜩이나 보수 언론들이 가족 때리기를 하고 있어 악의적으로 보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금 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공판기일 진행 순서(변동가능)

10월 6일(월) 10:00 피고인 조준기 신문
14:00 피고인 박한결 신문
10월 7일(화) 10:00 14:00 피고인 이준석 신문
10월 8일(수) 10:00 피고인 강원식 신문
14:00 피고인 김영호 신문

2. 피고인 신문 절차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 -> 재판장 직권신문

◆ 피해자 측은 신문권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공소사실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오로지 사실만을 물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을 검사가 안 묻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광주에서 방청하시는 분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날 때까지 알아보기 쉽도록 글씨를 잘(반듯이) 써서** 피해자 변호인에게 전달해주시면, 질문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고, 별도로 신문사항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피고인 신문을 하는 당해 피고인 외에는 검찰도 다른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피고인에게 궁금한 사항이 생겼더라도 오늘 당장 질문을 할 수는 없고 피해자 변호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다른 피고인 신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보고

지난주 9월 30일에는 피고인 김규찬(일명 오렌지맨)이 「세월호는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고 다만 소모품을 정기 교체했으며, 근무를 마치고 선실에서 자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어 굴러 떨어져 다쳤기 때문에 선장 지시가 없어도 구조 활동을 해야 함에도 하지 못했으며, 사고 후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황색 작업복과 모자, 장갑을 끼었고, 지혈을 하려고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박기호는 9월 30일 피고인 신문 및 10월 1일 증인신문 시 「박한결이 조타 지시를 하였는데, 조준기가 안돼안돼안돼 소리를 지르고 조타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선체가 바로 기울었고, 박한결은 반대로반대로하고 한 것 말고는 계속 울고 있었으며, 선장 등이 조타실에 들어 왔고, 자신이 엔진을 정지시켰다. 침몰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독자적 판단으로 기관실에 전화해서 탈출을 지시했고, 발전기 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3층에서 기관부 선원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다가 구조되었고, 다른 조리부 선원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았다. 승객 및 조리부 선원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조준기는 10월 1일 「세월호는 고박 상태가 불량했고, 우측 변침 시 복원에 더뎠는데, 박한결과 함께 맹골수도를 지난 것은 처음인데, 사고 지점에서 조타가 많이 돌아 갔고, 조류 흐름은 조타 중 고려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 보고도 안했고, 조타실의 선원끼리 협동을 하면 선내 방송기계까지 접근이 가능했는데, 시도해 보다가 포기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기록 열람

승객의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두 형사사건(14고합180, 14고합197 등)의 기록은 꾸준히 수집되어 있으므로, 안산 분향소 대한변협 텐트에서 법률상담 시간(매주 월금 1-6시)에 상담 변호사님 입회 하에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 절차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이나,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공소장 정도만 복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록 내용이 언론에 왜곡 보도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출되는 경우 혹은 이를 토대로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기록 복사를 허가해 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기록 입수를 위하여 부모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정 및 방청권(출입증)

* 광주 주법정(201호) 중 30석, 안산지원(410호 중계법정) 중 70석은 가족 및 가족측 변호인단의 좌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 광주 주법정(201호) 방청권은 피해자 변호인 또는 총무님이 배포하고, 안산지원(410호 중계법정) 방청권은 안산지원 앞 법무법인 해마루에 보관되어 있으니 가족 대표분께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 방청권은 재판을 마칠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하고, 지정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 중에 외부로 나가실 때에도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입장하실 때 법원 경비한테 보여 주셔야 합니다. 광주 법원 방청권은 1일권이라 방청을 마치신 후에는 버리셔도 되지만, 안산은 기간권이라서 가족 대표님이 회수하여 법무법인 해마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본법정 및 안산지원 법정 가장 앞줄에는 기자단이 앉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라서 보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광주 본법정 왼쪽 기자단 바로 뒤에 피고인 가족이 방청하십니다. 피고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쉽게 만날 수 없기도 하여 재판정에서라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피고인들 가족도 가족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피고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기색이 별로 없이 덤덤해 보이거나 오히려 당당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접 부딪치는 것은 재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모습을 의견서로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편이 훨씬 양형 참작에 효과적입니다.

2. 주의사항

* 재판정 입장 시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모두 하는 절차이니 협조해 주세요.
* **피켓팅 관련 : 법원 경내에서는 피켓팅(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그와 동시에 구호를 외치는 것), 집회/시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재판 시작 10분 전까지 방청권에 기재된 지정 좌석에 앉아 주세요.
* 휴대폰은 끄거나 무음모드로 바꾸어 주세요.
* 화장실은 방청 중에도 다녀오실 수 있지만, 가급적 미리 다녀오세요.
* 재판 과정은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범죄로 기소되어서 이런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이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치열한 공방 속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행은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손지태 피고인의 경우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손지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하였으니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공판기일 재판절차 요약

①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 경위의 요청대로 모두 일어나는 예의를 갖춥니다.
② 재판장이 호명하면 피고인들이 대기실에 있다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 이때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③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이름과 변호인을 확인합니다.
④ 이전 재판절차(증거조사)에 이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5 선원사건 정리

피고인의 직책, 죄명, 공소사실, 의견 변호인

순번	피고인	직책	죄명	의무, 업무내용	공소사실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	변호인
1	이준석	선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특가법 위반 (도주선박)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 법위반	직접지휘 의무 재선의무 위험시구조조치지시의무 훈련실시 의무 승객구호 지휘의무	과적, 고박 여부 점검 안함 맹골수도 지날 때 조타실 이탈 8:52 정지 후 30도 정도 기울자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신정훈, 박경남, 오용석**은 **조타실** 모임 8:52 피해자 최모군 119에 최초 신고 8:58 김영호에 구조끼 입고 선내대기 방송 지시, 비상버튼을 누르지 않아 선내 방송 안됨 9:00 조타실 피고인들은 9:00 제주VTS로부터 구명조끼 착용하고 퇴선준비해달라는 교신 받고도 묵살하고 강혜성에 선내 대기 방송 지시 9:13경 둘라에이스호교신 9:21, 9:23, 9:24, 9:25 교신 묵살 박지영과 강혜성이 추가 조치 요청했지만 묵살, 9:50까지 선내 대기 방송 7회 9:26, 9:27 교신 묵살 9:46 해경 123 탑승하여 탈출 선원임을 안밝힘	맹골수도 진입 시점에 조타실에 있었음 옆구리, 꼬리뼈 상해 입었고, 조타실에서 1, 2등 항해사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배의 수평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도 VTS와 교신을 유지하며, 구명벌, 슈터 등의 투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선내대기, 퇴선 등의 방송을 순차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다했다. 해경 지시 묵살한 것아니고, 박지영, 강혜성으로부터 추가 지시 요청 받은 기억 없음 살인고의 없음, 해경 왔을 대 법적 작위의무는 해경에게 이전, 상당인과관계 없고, 피해자 불특정, 실행행위없음, 임시선장, 고박등은 청해진 관리, 사고지점 과거 아무 문제 없고, 이준석도 협수로지점에는 조타실에 잇었으므로 무과실, 상당인과관계없음 수난구호법은 사고후 도주선박에 적용되는 것, 가용조치 했음 해경 구조후에는 의무는 해경에게 있음 선원법 가용조치, 해경에 의해서만, 추가적인 구조활동 불가능 특가 도주는 해상 충돌사고에 적용되는 법조라서 이 사건은 해당없고, 과실도 없고, 인과관계 없고, 도주한 것이 아님 가능한 구호조치하고, 신원이 불명 아니고, 기대가능성 없음 임시선장은 훈련의무 없고, 과적은 1등 항해사로부터 문제없다고 보고 받았고, 청해진소관, 보고서는 형식적인 서류, 복원성 악화는 주지의 사실, 선장이 계속 조타실에 있을 수는 없음.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수) => 선박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조안하고 도주(특가법 위반)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 선장은 선원법 상 급박한 위험시 구조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선원법 위반)	협수로 지나고 박한결이 문제가 없으니까 침실로 간 것 피고인은 2013. 10. 25.경 2번째 담낭 수술을 받아 이 사건 당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음 고 김동협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지시를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치를 하였음 안내방송을 실시한 강혜성이 구조정의 구체적인(10분후)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조타실로부터의 연락지시 뿐임 피고인이 정년퇴임한 2013. 8.경 이후에는 신보식이 세월호의 정식 선장임	
2	강원식	1등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수난 구호법 위반	선장 유사시 직무대행 항해, 적재 고박업무 비상시 우현슈터 투하, 승객 유도의무	과적, 고박 부실 묵인 8:55 제주VTS에 구조요청 나머지는 이준석과 유사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구조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고박은 청해진해운(김정수), 실제로 화물의 적재 및 고박을 하는 우련통운 주도, 청해진이 화주와 운송계약 체결하고, 적하운임목록을 작성하면, 청해진의 수급인이 우련통운이 화물 적배하고, 고박업무는 원광공사가 하였음 당직 후 조타실 뒤쪽 침실에서 자고 있었음 소리에 깨서 기울어진 것 알고 조타실로 감, 이준석,(해도대 오른쪽), 김영호(엔진 텔레그래프 핸드레일), 박한결(그 옆 좌현 출입문), 박경남(핸드레일), 오용석(헨드레일)이 있었음. 간신히 VHF 통신기 쪽으로 가서 8:55 채널 12로 최초 제주 VTS 구조요청(자다 깨서 제주 근처인 줄 알았음) 9:10(?9:07) 제주와 진도에 교신 침실로 가서 휴대전화 가져와 해도대 옆에 앉음 9:14 청해진(해무팀 홍영기)과 3:14 통화 후 좌현구명벌 터뜨리러 갔다가 실패, 박경남도 실패, 박경남이 그 때 기관원이 구조되는 걸 알고 해경정에 올라탐 해경정에 승선해서 구조활동 구조요청, 좌현 구명벌 시도, 우연히 조타실 나온 것, 해경 구조 기대로 살인고의 없음	

3	김영호	2등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운항관리, 항해장비, 통신기 점검 업무 비상시 대기반 지휘, 좌현슈터, 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8:58경 이준석 지시로 방송했지만 비상버튼 안눌러 실패, 양대홍에게 무전기로 침몰상황 안 알려주고 안내방송 지시, 양대홍이 3층 안내데스트 강혜성에게 지시하여 방송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구조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대기반 지휘는 침몰퇴선시 아닌 다른 비상시 업무 당직근무 후 자다가 8:50 기울려지자 55분 조타실로 가서 박한결, 조준기에게 힐링탱크 가동 지시, 9:00 양대홍에게 구명조끼 착용 후 선내 대기 방송 지시, 진도 VTS와 계속 교신함. 대기 선내방송 지시는 이준석이 하였고, 9:25 진도 VTS에서 경비정 온다는 말 듣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경비정 온다고 하고, 이준석이 퇴선명령해서 or 경비정온다는 교신 듣고, 사무장에게 두 번 이상 퇴선 송신(대답은 없었음) 교신 직후 오용석과 좌우현 구명뗏목과 슈터를 터드리려다가 미끄러져 실패 박지영, 강혜성에게 추가 요청받은 사실없음 123 해경정에 두 번째 탑승한 박경남, 강원식, 오용석, 김영호, 신정훈은 선원 신분 밝혔고, 선원복 착용 중, 승객 5-7명 구조조치 후 2차로 신분 밝힘 응급조치도 함 해경정이 브릿지 옆에 붙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쳐서 빠져나온 것임 상시 좌현슈터를 담당하지만 이는 한국해양안전설비 측의 검사 합격취지의 부실정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투하하였어도 어차피 작동 되지 않았을 것임 해경동영상은 편집된 의심이 보임 서너시간 후에 전복될 줄 알았음 살인고의 없고, 작위의무이행가능성 없고, 상당인과관계 없고, 면책적 긴급피난 수난구호법 적용 대상 아니고 조치하고, 기대불가능성 유기고의 없고, 구호조치했고, 상당인과 없고, 책임조각 고 김동협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지시를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치를 하였음 여객선 교재 발췌본에 의하면 퇴선조취를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함	
			수난구호법 위반				

						주철수 변호사가 제출한 언론기사 부분에는 피고인들 중 1명이 유리창을 깼다고 함	
4	박한결	3등항해사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장 보좌 선원교육 훈련,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사항에 관하여 항해일지 작성 등 문서 작성 출항 전 세월호에 화물적재 및 하역시 힐링맞추기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항시간, 홀수수치 등 항해일지 기재, 항해 시 항해당직사관으로 조타실에서 여객과	이준석 위임으로 화물 점검 없이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김영호 지시로 안전점검무선보고 8: 48 맹골수도 지날 때 레이더 침로만 보고 조준기에 1차 140, 2차 145 변침 일임 => 선박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조안하고 도주(특가법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반대편에 배 1척이 올라 오고 있었고, 5도 이내 변침하도록 지시, 과실 없음 공황상태로 조타실에 앉아서 울기만 했음 특가 도주는 해상 충돌사고에 적용되는 법조라서 이 사건은 해당 없고, 과실도 없고, 인과관계 없고, 단지 공황상태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님 다른 선원들이 가능한 구호조치하고, 신원이 불명 아니고, 기대가능성 없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신보식으로부터 도시지시법으로 조타수에게 변침하라는 지침받아 조준기에 5도 이내 변침 지시, 조준기도 항상 무리 없이 운행했으니 과실 없고, 상당인과관계 부정 항적도는 정확하지 않고, 박한결 변침 지시 당시의 항적도가 없으므로 박한결은 과실 없음 변침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보식과 이준석도 모두 이 구간을 지날 때 도수로 지시해 왔으며 맹골수도는 지날 때 특별히 감속해야하는 곳은 아니므로 박한결은 과실 없음 2013. 12. 10. 입사, 출항 전 세월호에 화물적재 및 하역시 힐링 맞추기는 당직 근무자에 부여되는 것인데, 당시는 박한결 당직 아님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항시간, 홀수 수치 등 항해일지 기재는 선장지시로 하거나 당직 때 하는 것이지 박한결 전담작성 아님 안전점검보고서는 이미 확인 끝난 후 형식적 작성하는 것이라서 관례적으로 박한결이 확인 불요. 이준석 지시로 서류 작성제출. 과거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김용규도 형식적으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음, 조준기에 변침 일임하지 않았음 조타수가 제대로 하는지 감사할 필요 없음. 레이더를 봐야 함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항업무 비상시선장 보좌, 항해 일지 등 운항관련 기록 보존, 통신기기로 조난신고, 구호요청등			
5	조준기	조타수	특가법 위반 (도주 선박),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 비상시 우현구명 뗏목 사다리를 투하, 승객 유도	8: 48 당황해서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대각도로 돌림 화물 쏠려 8:52 정지 => 선박사고를 내고 승객을 구조안하고 도주(특가법 위반) =>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침몰시킴	우현으로 대각도로 돌린 사실이 없음, 세월호가 1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박한결이 140도 우현변침지시 그랬는데 143도까지 가서 3도 좌현으로 돌렸으나 더 우현으로 진행 이를 막고자 좌현으로 5도 돌림 우현으로 더 진행하자, 박한결이 레이더 앞에서 조타기로 와서 '반대로요, '반대로요'라고 지시 그래서 좌현으로 15도 돌림 해경에 연락하라는 것 외에 선장 지시 없었음 해경이 구명조끼를 주면서 바다에 뛰어 들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도주가 아님 특가 도주 관련해서 선장 등 구호 지시 없고, 해경의 지시로 탈출했으니 도주 아님, 법리 문제 과실 없음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변침과실도 없었음	
6	신정	(견습)	유기 치사·상,	2등항해사 보조,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당직 후 자다가 8:50 조타실왔음. 9:00 SSB 통신기 안되는 줄 알고 휴대전화 가져옴 제주운항관리실	

	훈	1등항해사	수난구호법 위반	김영호 보조하여 운항관리, 각종 항해장비, 통신기 점검 등 업무 비상시 좌현슈터와 구명뗏목 운용 승객 응급처치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과 통화시도했으나 한번 실패 한번은 통화되어도 감이 안 좋음 9:13 제주 운항관리실에서 SSB 통신기로 연락와서 구조요청함, 9:20, 23 진도 VTS와 교신, 박경남이 구명뗏목 쪽을 갈 때 구명조끼 주었음 피고인은 진도연안 VTS에 지금 탈출하면 승객들을 다 구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나 10분내에 도착한다는 교신을 들었을 뿐 승객구조가능성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음 승선 이틀 후라서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조타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었음, 외국인 두명 먼저 탈출시킴 해경정탈 때 선원임을 밝히고, 구조작업을 도왔음 방송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장치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태 아무도 탈출하라고 소리지르지 않았음 수난구호법 적용 대상 아니고 조치하고, 기대불가능성 유기고의 없고, 구호조치했고, 상당인과 없고, 책임조각 비상대응배치표를 보면 비상시 피고인 신정훈의 임무에 대해 규정된 바 없음 피고인은 세월호 승선 전까지는 1등 항해사로 승선했었던 사실이 없고, 청해진 해운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음 피고인은 사고당일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해경동영상은 편집된 의심이 보임 고 김동협군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지시를 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구조조치를 하였음 여객선 교재 발췌본에 의하면 퇴선조취를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함	

						주철수 변호사가 제출한 언론기사 부분에는 피고인들 중 1명이 유리창을 깼다고 함	
7	박경남	조타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 비상시 우현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8:50 당직 교대 후 자고 있었는데,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 물건이 쏟아져 브릿지로 향함 8:55 조타기를 잡고 배를 돌려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준기가 잡고 있어서 힐링펌프 조작하여 배를 세우려고 했지만 작동이 안됨. 8:57 기관장이 발전기가 나갔다고 함 9:00 조타기 우현으로 가서 무전기 잡고 진도 VTS 나옴 9:25 구명벌 터뜨리러 감 9:35 구명벌 터뜨리러 못 가고 있다가 9:46 해경정 탑승 9:50 세월호로 가서 승객 구출 작업 선장 등 지시 없었음 수난구호법 법리 문제, 구호조치함, 책임조각 망치로 객실창을 깨려고 시도했음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변침과실도 없었음 목포해경123정 구조 도영상 이외의 동영상이 있으며 거기에는 피고인 박경남이 승객의 구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월호를 밧줄로 묶고 이는 장면이 있음	
8	오용석	조타수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 비상시 좌현구명뗏목 투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우현 구명정 투하 준비하러 우현 문열려다 실패하고 박경남이 좌현 구명 투하 한다길래 좌현 가는 중 좌현 이동 불가능, 선장도 퇴선조치, 경비정 승선 후 인명 구조 참여 선장, 항해사 지시가 없었음, 선원임을 밝혔음 수난구호법 법리 문제, 구조조치함, 책임 조각	

				승객 유도		피고인은 검지손가락 2마디, 엄지손가락 1마디가 없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객실창을 깨는 구조활동을 함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변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변침과실도 없었음	
9	박기호	기관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기관부 선원지휘, 선박엔진, 전기설비 운전 보수관리 총괄 비상시 기관사, 조기수 등 기관부 선원의 승객구호 의무 이행지휘	선박이 기울어져 컨테이너가 좌현으로 무너지는 것보고 전복 우려 엔진정지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준석의 지시로 정지시킨 후 기관실로 전화해서 이수진, 박성용, 이영재에게 기관실에서 나올 것 지시 박기호는 이준석 지시로 5층 조타실 나와 **3층 복도**까지 계단 내려갔고 선저 기관실에서 올라온 **이수진, 박성용, 이영재**와, 기관부 선실에서 올라온 **손지태, 전영준, 김규찬**과 함께 9:06부터 대기 김문익, 이묘희 보고도 30분동안 대기만 함 9:39 박기호 등 기관부 선원 3층 복도와 연결된 좌현쪽출입문으로 퇴선 =>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구조의무를 불이행(살인, 살인미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이준석이 조타실 전등이 꺼져 있으니 비상발전기 확인하러 기관실로 내려가봐라고 지시해서 조타실 나와서 3층 복도까지 가서 기관실 선원 만남 3층과 4층 사이 비상발전기실가기 어려워서 이동 불가능하니 가만히 있었음, 일반 선실로 가기 위해서 수평이동이 아니라 우현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식당으로 진입해야 함 선내대기방송하는지 몰랐음 이묘희는 뇌진창으로 손 쓰기 어렵다고 하고, 김문익도 즉사했다하여 방법이 없었음. 갑판을 열고 나가는 시간은 선내에 물이 차기 시작한 시간. 마침 해경정이 있어서 탑승함. 선원임 밝혔음. 이준석과 공모공동한 적 없고, 유기고의 없고, 인과관계 없고, 긴급피난, 기대가능성없고 '2014년 제2차 해상법 이슈진단' 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려 국내 선박운영체계 및 안전교육의 미흡 등으로 인한 능력 부족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음	
10	손	1	유기	기관장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지태	등기관사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보좌 주기관 엔진운전, 정비 및 기관 부속품 관리 업무 비상시 주기관담당 우현슈터및 구명뗏목 투하, 승객유도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11	이수진	3등기관사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장 보좌, 엔진 및 발전기등 기관장비의 운항 상태 점검 조작업무 비상시 기관장 보좌 승객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조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긴급피난 갑작스런 충격 후 물건 및 자기들도 넘어지고, 박기호가 2회 걸쳐 기관실 탈출하여 3층으로 올라 오라는 전화 지시, 1층 기관실에서 철계단에 매달려 3층 선원실 복도에 겨우 도착, 30분간 간신히 선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중 퇴선 아무런 구호명령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도 안 받았다. 선원임을 숨긴 적없음	
12	전영준	조기장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기관장, 기관사 지시로 조기수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14. 4. 15. 입사하여 배의 구조, 승선인원 모름. 당직 후 쉬다가 배가 기울어져 허리를 부딪치고, 침실에서 나와 보니 침실 문앞 복도에서 다른 기관부 직원들이 구명조끼 입고 기다리다가 박기호가 좌현갑판으로 나가자는 제안을 하여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경정	

			위반	지휘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정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익수자 구조, 우현 슈터 및 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에 탑승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움	
13	이영재	기관원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장, 기관사 , 조기장 지시로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정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좌현 슈터 및 구명뗏목 투하 승객 유도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함(수난구호법 위반)	긴급피난 갑작스런 충격 후 물건 및 자기들도 넘어지고, 박기호가 2회 걸쳐 기관실 탈출하여 3층으로 올라 오라는 전화 지시, 1층 기관실에서 철계단에 매달려 3층 선원실 복도에 겨우 도착, 30분간 간신히 선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중 퇴선 아무런 구호명령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도 안 받았다. 선원임을 숨긴 적없음 구조할 아무런 장비가 없었으므로 선내 진입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했음	
14	박	기	유기	기관장,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	긴급피난	

	성용	관원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사 , 조기장 지시로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 · 정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우현 비상 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	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갑작스런 충격 후 물건 및 자기들도 넘어지고, 박기호가 2회 걸쳐 기관실 탈출하여 3층으로 올라 오라는 전화 지시, 1층 기관실에서 철계단에 매달려 3층 선원실 복도에 겨우 도착, 30분간 간신히 선체 벽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중 퇴선 아무런 구호명령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도 안 받았다. 선원임을 숨긴 적없음	
15	김규찬	조기수	유기 치사·상, 수난 구호법 위반	기관장, 기관사 , 조기장 지시로 엔진 및 발전기 기관 장비 점검 · 정비하는 업무 종사 비상시 좌현 비상 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	=> 승객들을 유기해서 사상케함(유기치사상) => 조난당한 선박 승객 구조를 안 함(수난구호법 위반)	당직 후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냉장고에 부딪쳐 입술 찢어지고, 앞니 두 개 부러짐 구명동의 입고 나가 함께 있다가 갑판으로 나가자는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서로 손을 잡고 갔는데,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다른 선원의 손을 잡지 못하여 혼자서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선원이 먼저 구조되고 난 다음 다시 다가온 해경에게 구조됨 피고인은 승객의 상황 및 구조 활동 필요성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여 구조활동을 하지 못한 것임	

#6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피해자 질문사항

1. 교신관련

(1) 123정이 조타실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 활동을 개시한 시각은 9시 38분경인데, 처음 VHF로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보고를 한 것은 약 10분 후인 9시 46분인데 10분간 교신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난 국정조사에서 첫 교신과 관련하여, 해경청장 및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첫 교신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왜 초기에 공식적인 그래서 기록이 남는 통신수단이 아닌 휴대폰으로 교신을 하였는가요? 휴대폰으로 교신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3) 피고인은 작년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내진입에 대한 명령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열게 된 것인가요?

2. 선내 진입지시/ 퇴선지시

(1)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 재판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지시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2) 목포해양경찰서장과 123정의 교신 내용을 살펴보면, 09시 57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 직원도 올라가서 하고 그래 안 되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10시 5분 “정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침착하게 방송해서 반대 방향쪽으로 뛰어내리게끔 유도해봐. 지금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웅숭웅숭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만 밖으로 빠져나오면 다 줄줄이 따라 나오니까. 방송해서 방송내용이 안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라고 지시하며 123정에게 선내 진입을 하여 퇴선조치를 할 것과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퇴선조치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왜 목포해양경찰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인가요?

(3) 사고 당시 123정에 탑승했던 김종운은 선장 및 선원 재판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선내진입을 지시하였다면 진입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선내진입명령을 했다면 지휘체계나 평상시 훈련내용대로 123정의 선원들은 세월호 선내진입을 시도하였을 것이지요?

(4) 오하마나호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해경도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세월호의 윙브릿지에 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벨을 이용하여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는데, 왜 구조당시 이 벨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5) 세월호 도착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현장파악을 위해서 이동하는 동안 뭐 하셨나요?

(6) 교신 외에도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는 OSC로서 현장에 임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교육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선원 우선 구조

(1) 123정은 왜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선미가 아니라 선수의 조타실로 향하였는가요?

(2) 1월 27일 제출된 생존학생인 김○○ 양의 진술서에 따르면 첫 출동 당시 구명단정이 3층 갑판 쪽 출입문으로 1m 거리까지 접근하였다가 10여명의 승객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선원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그들을 구조하였다고 하는데, 기관실 직원부터 구조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3) 위와 같은 선원들 중심의 구조활동을 보면 피고인이 123정의 선원들에게 세월호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시한 바 없는가요?

4. 선원식별

(1) 선장 및 선원 재판의 제25회 공판조서에 보면 김영호에 대한 피고인 신문 중에 김영호는 해경정에 오를 당시 스즈끼 복을 입고 있었으며, 해경 중 한 명이 "선원들 맞지요!" 라고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누군가가 "예 맞습니다. 우리 선원들이에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21회 공판기일에는 조준기가 선원복을 입고 구조되었고, 복장을 보고 해경이 선원이냐고 묻고 자신이 그렇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먼저 구조된 사람들이 선원들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2)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등 항해사는 해경에 신원을 밝혔고, 2등 항해사는 무전기를 들고 있어서 (해경이 선원임을) 추정 가능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고 밝혔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구한 사람들이 선원이라고 생각을 못하였는지요? 그리고 구조된 선원 혹은 구조한 123정의 선원들로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나요?

5. 구출 상황 촬영 및 보고

(1) 123정에는 구조활동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실려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123정의 해경들을 휴대폰으로 구조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 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상황실쪽으로 사진과 동영상 보고를 요청했기 대문이지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구조보다는 보고에 치중했던 것은 아닙니까?

(2) 국정조사 때 공개된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상황실 간의 핫라인 녹취록의 내용 중 사고 당일 9시 42분에 이루어진 교신을 보면 해경이 "구조단계가 아니며, 지켜보는 단계다" 라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실제 피고인은 현장에서 9시 42분 경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였습니까?

참고자료 5-6

6. 박상욱의 진입에 관련

(1) 선장 및 선원 재판 제27회 공판조서에 보면 신정훈은 자신이 123정에 탑승한 후에 로프를 엮어서 잡고 있었는데 해경이 “바로 풀 수 있게 그냥 잡고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굳이 풀 필요 없이 손을 놓고 바로 배를 떼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선내 진입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급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선을 위한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소리들림

(1) 선장 및 선원 재판 제19회 공판기일에 조기수 김규찬은 3층 출입문 길에 누워있는데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내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록 헬기가 떠있어서 굉장히 소리가 컸지만, 입구는 상층부에서 소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해경이 배 안에다 대고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김규찬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경이 확성기 까지 사용하여 퇴선지시를 했더라도 안에 있는 승객들은 퇴선지시를 들을 수 없었나요?

8. 어선 통제

(1) 세월호 참사 당시 주변에 있던 어선에게 세월호에 접근하여 구조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송을 한 바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어선에 의해 구조된 사람이 60여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어선의 접근을 통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9시 55분 이후 어선이 도착한 뒤 어선이 선미와 선중앙에서는 승객을 구조하는 동안 선수 쪽에서 123정은 뒤로 빠져있었는데, 왜 다시 접안하여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3) 10시 17분 이후 세월호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한 바 있었는데, 이 때 어선들이 세월호에 접근하여 구조하려는 것을 123정은 방송을 통해 빠져 나가라고 오히려 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Ⅵ. 법률상담활동

#1. 초기 상담 매뉴얼

① 안산 상담소는 일반 상담소와 달리 유족분들이 모이는 유족텐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고, 내담자들도 모두 유족분들이라는 점, 상담시간, 식사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지나친 잡담 및 큰 소리의 대화를 삼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② 처음 오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피해자 가족 중 총무 이00께 연락, 안내를 받아 분향소 조문 후 유가족 천막으로 가서 가족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린 후에 상담 업무를 시작합니다.

③ 내담자가 오면, 가족 신분증 또는 희생자 가족 뺏지 소지자에 한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 + 공익적 측면 감안).
→ 가끔 유가족대책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해상반자(비양육 부모 등)들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협약에 근거해서 무료상담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분이나 위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상담천막이 비지 않아야 하므로,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유가족 천막에서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료급식 봉사 천막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⑤ 반드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정리한 후, 수기로 작성한 것은 상담폴더 안에 넣어 두고,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텐트 안 컴퓨터의 보안 문제로 인해 bluecat@koreanbar.or.kr(대한변협 김정욱 변호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⑥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레지던트, 수습변호사)는 독자적인 법률상담이 어려우므로, 배석하거나, 상담일지를 정리하거나, 상담 접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⑦ 상담 진행 중 즉답하기 어려운 경우, 1차 상담(사실관계 정리)만 하고, 전문 변호사와 연결하여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응답하면 됩니다.

⑧ 법률지원 관련, 유/무료 여부 질문을 받게 되면,

㉠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 신청/소송 사건의 경우, 법률상담/지원팀 내부 논의를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료 소송이 가능하나, 공익소송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피해자 간 이해상반의 경우에는 공익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무료 소송지원이 불가능하나, 각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인권재단 등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알려주겠다고 답변하고,

소송의사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서울회나 경기중앙회에 문의해서 무료소송 가능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회와 경기중앙회에는 각기 회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음).

⑨ 시간이 있을 때, 바탕화면>자료집을 참조해 주세요.

대부분의 상담은 이혼, 상속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양육권자 아닌 일방 부모도 자녀에 대한 보상금 중 2분의 1에 대한 상속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억울해 하는 분들이 많으며, 대체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상계 등을 주장해서 지급액을 깎고, 법원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30만 원, 50만 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인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⑩ 상담과 관련해서는 외부적으로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사항도 예민하므로 부탁합니다.

⑪ 복장은, 남성의 경우 정장에 어두운 색 넥타이를, 여성의 경우, 정장(긴 치마 혹은 바지)에 어두운 색으로 코디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⑫ 상담 천막 내부에 계실 때, 변호사들끼리 큰 소리로 잡담을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천막인지라 밖에서 다 들리고, 혹시라도 잡담으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수정 매뉴얼

① 유족 및 생존자들은 겉으로는 때때로 웃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에 여전히 큰 상처를 안고 있고, 정부나 언론 등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큰 소리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무료상담 왔다고 많이 챙겨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크게 긴장하실 건 없고, 상담시 말투나 자극적인 단어 사용(예: 시신 수거→아이를 찾았을 때)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상담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② 상담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즉답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화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특히 법률검토 이외 유가족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은 비치된 하얀 책자인 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참고하되, 그 내용에 기재된 관련 부처(예를 들면,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가족부) 또는 정부가족지원전담팀(02-2100-4080~81, 24시간 운영, 중앙) 또는 조00 가족도움반장(010-****-****, 경기도)님께 전화를 하여 세부 내용까지 확인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책자에는 다 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자리에 있는 동안 해결이 안 될 경우 24시간 이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무실에 가셔서 검토 후 전화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사항의 경우 비치된 인수인계 파일에 상담 자료와 이후 변호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써서 별도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이 때 수습변호사에게 알려주면 상주 변호사가 나가서 해결할 수도 있다).

③ 내담자가 사건선임을 원하나 상담변호사가 수임 불가능할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알려주면 상주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보전소송이나 간단한 본인명의 고소장 작성은 무료로 진행했고, 보전소송에 연결되는 본안소송은 내담자의 요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진행하면 되는데, 경제사정이 되는 분들은 유로로 진행하더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님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담자가 무료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담변호사들은 내담자들에게 “본안 사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도록 각종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선임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수습변호사에게 변호사 연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④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카드 맨 밑에 따로 진상조사요청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있고, 상담변호사들은 내담자와의 상담이 끝난 후, “많은 유족분들이 진상규명을 원하는데 사소한 부분이라도 경험진술, 목격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불만이 있었던 사항들, 이건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물어보고 상담카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3. 상담카드

NO.

세월호 피해자 상담카드(변호사용)

상 담 일 시	2014 년 5 월 18 일 시간: : ~ :				
상 담 신청자	성 명		피해자와 관계	1. 부모 / 2. 기타( )	
	연락처				
	E-mail				
답변 변호사					
피해자	이 름		피 해 내 용	1. 사망( )	
	나 이	세		2. 상해	
	성 별	남( ) / 여( )		3. 재산	
				4. 기타( )	
	지 위	학생( ) / 교사( ) / 일반 ( ) / 기타 (녀)			
	연락처		기 타		
상 담 요 지					
특 이 사 항					
답 변 자					
답 변 일 시	2014 년 5 월 일 시간:				
답 변 내 용					
Keyword					
상담방법 : 전화상담 / 팩스, 우편상담 / 방문상담(월 일)(방문상담의 경우 방문일자 표기)					

#4. 무료 법률지원여부에 대한 원칙

* 법률지원대상 : 세월호 피해자 및 그 가족
* 무료지원대상 :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 문제 + 공익성

① 현장대응지원, 법률상담지원, 일괄 타결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 조력, 진상조사규명, 법제도 개선 등 대한변협의 각종 다양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각 개인이 보상/배상/보험금 청구 등을 할 경우, 개인 간의 법률적 분쟁의 경우에는 (별도로 논의할 수는 있으나) 유료가 원칙입니다.

②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법률상담, 문건 작성 등)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③ 변론(위임, 법정 출정)이 불필요한 신청사건(보전절차 등)의 경우 법정비용은 본인부담, 수임료는 무료 원칙입니다(본인 명의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

④ 변론(위임, 법정 출정)이 필요한 사건의 유료가 원칙이나 각종 법률구조를 활용하도록 조언합니다(가정법률상담소, 각 지방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원 소송 구조 등).

⑤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담 변호사 본인, 법률상담/지원단 등이 무료 구조를 결정할 경우에는 각 결정 단위의 책임 아래 무료 법률구조가 허용됩니다.

#5 초기 상담내용 정리표

	상담내용	횟수	처리상황
1			
2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2	가압류신청 예정: 000 변호사님
3	유언거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공증여부	1	공증사무소 안내
4	네이버 아이디	1	n
5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상속포기	1	상속포기 또는 합의 유도 안내
6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3	000 변호사님 처리 중
7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2	가압류 안내
8	친권행사자 변경	1	재방문시 불가능 안내할 것
9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1	000 변호사님 선임
10	비양육친의 유가족 대책위 가입여부	1	어려울 것이라 안내
11	사고당시 엘지유플러스 불통: 이유확인 및 손해배상	1	사실확인시 변협차원에서 진상조사 요구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안내
12	민사소송 진행 중 출석 불가	1	기일정지신청 안내
13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1	가압류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000 변호사님 연결 예정
14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1	가압류 안내
15	비양육친도 생계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	1	비양육친의 경우, 심사 후 가능 안내
16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인터뷰 발언에 대한 항의	1	변협 및 대책위에서 의논 중이라 안내
17	보험금 수령 위한 서류	1	안내
18	자영업자 대책 문의	1	안내
19	진상규명	1	해경에 정보공개청구 안내
20	사자명예훼손	1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제출(000 변호사님)
21	명예훼손	1	특정 및 발언진위 여부에 따라 가능
22	1. 사자명예훼손 2. 네이버 엔드라이브의 동생 자료 열람 여부	2	1. 고소장 제출(000 변호사님): 단원서 ->사자명예훼손 어려울 듯 하여 고소장 대신 진정서 접수: 게시물 삭제 및 사과받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경찰서에서 안내 2. 네이버에 연락하기로 안내: 자료 특정시 열람 가능할 것이라 답변 받음 ->다른 부모님들과 공동으로 신청하기로: 대한변협에 지원요청(다른 포털 및 통신사도): 진상규명 팀에서 진행하는 듯
23	자녀 인터넷 기록 열람 가부	1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연락하고 안내할 것
24	의사자 인정 여부 및 자료수집	1	친구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받도록 안내
25	사자명예훼손	1	단원서에 고소장 제출
26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2	가압류 안내: 공탁금 있을 수 있음
27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조모가 양육	1	가압류 및 소송구조 안내
28	인터넷 기록 및 카톡메시지 열람 가부	1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연락하고 안내할 것
29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관련: 전배우자 연락두절	2	양육비청구소송통해 주소확보 안되면 공시송달재판
30	부정확한 DNA검사로 인하여 가족 없이 입관	1	해경 등에 공문보내 진상규명 할 것을 안내
31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1	가압류신청: 안산지역 연계 변호사님 연결 안내
32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전 배우자의 인감증명	1	인감증명 받도록 안내
33	변협 업무범위	1	안내
34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록비 반환여부	1	안내
35	보험금 수령: 신청자는 양육비 지급	1	균분상속 안내
36	친권, 양육권 없으나 실제로 양육한 어머니의 배상금, 보상금 수령 여부	1	아버지와 이해상반: 상담여부 미공개!! 균분상속 및 비율합의 안내
37	비양육친의 보험금 수령	1	가압류 및 상속포기 합의 안내
38	비양육친의 보험금 수령: 연락두절	1	실종선고 안내
39	유가족 개인 법률상담: 가압류 해제	1	안내
40	비양육친의 보험금 수령	2	가압류 안내
41	비양육친의 보험금 수령	1	가압류 안내
42	비양육친의 보험금 수령: 모가 보험금 포기 권유	1	보험금과 양육비를 일괄합의하도록 안내
43	생계지원 및 실업급여 문의	1	담당자와 연락하여 안내받음
44	유가족 개인 법률상담: 배우자의 채무	1	안내
45	비양육친의 보험금 수령	1	가압류 안내, 000 변호사님과 상담
46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 유가족 개인상담	1	안내
47	진상규명: 휴대폰 수신내역 공개 요청	1	대리점에서 수신내역 복구 및 수사상 필요시 수신번호 제공함을 안내
48	의사자 인정 및 보험금 수령 여부: 외주업체 직원	1	자료확보 및 수령가능할 것이라 안내: 인천연결
49	보험금 수령	1	안내
50	비양육친의 보험금수령: 연락두절	1	실종선고 안내

#6 관련 법률검토

가) 개요

부모 중 이혼하거나 가출하여 실제 양육하지 않은 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매우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했다.

나)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인정 여부

(1) 쟁점

위 민법 규정에 위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한 경우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경우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직계존속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특별한 부양' 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관련 판결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의 공평한 규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법은 그에 따라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008조의2),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3) 소결

위 판결은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민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에 따라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본다.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이라고 하여 특별한 부양의 방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으나 특별한 부양의 정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보호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제913조), 특별한 질환을 요양간호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모의 일방 당사자가 가출 등으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일방 부모(부양자)가 자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상속한 경우 기여분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결을 찾기 어렵고, 부모 일방이 미성년인 자를 홀로 양육하였을 때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면 다른 일방 부모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막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수 있다면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이 가능할 것이 생각하며, 또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 양육비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방법

(1) 판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8.16. 자 2010스85 결정).

(2) 소결

과거 양육비지급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7 세월초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의 협약서 전문

제1조(목적)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이하 시민기록위원회, 영상, 사진, 집필 등 모든 저작자 개인도 포함, 이하 동일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과, 원인, 대책 및 가족 대책위의 활동(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 포함, 이하 동일함)을 기록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관계)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피해당사자로서 진상규명 및 기록의 주체이고, 시민기록위원회 역시 중요한 기록의 주체로서 가족 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의 관계는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다.

제3조(정의) 본 협약서에서 “기록”이란 세월호 참사 관련 그 경과 및 가족대책위의 활동에 대하여 사진촬영, 영상촬영, 집필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적으로 기록하는 일체의 활동 및 그 산출물을 의미한다.

제4조(인격권의 존중) 기록대책위는 “기록”을 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가족대책위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협력)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사전합의 원칙

본 협약서 또는 기타 다른 서면 합의로 사전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기록위원회가 “기록”을 하고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대책위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6-7

2. “기록” 의 위탁

가족대책위는 시민기록위원회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제3조의 “기록”을 위탁하며, 가족대책위는 위 과정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의 직계 가족,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촬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한다. 단, 가족대책위의 비공개 회의 등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촬영 등은 그 위탁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3. “기록” 에 대한 공동저작권

“기록”에 대한 저작권은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저작권자 표기는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를 공동저작권자로 표기한다.

4. “기록” 의 이용

① 가족대책위가 “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시민기록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록”에 대한 이용은, 그 이용 형태를 불문하고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의 사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지금까지의 시민기록위원회의 결과물은 가족대책위에 양도한다.

③ 공동저작권의 행사는 각 단체의 대표가 동의권을 행사한다.

5. “기록” 에 대한 관리

기록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가족대책위와 함께 시민기록위원회가 담당하며, 시민기록위원회는 도난, 유실, 유출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기록위원회는 가족대책위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가족대책위는 책임 있는 과정(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질책할 수 있으며, 시민기록위원회는 가족대책위의 결정에 따른다.

6. 비밀유지

시민기록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하여서는 안 되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의 허가를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7. 운영자금

시민기록위원회 운영자금은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가족대책위는 시민기록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의 규정 및 협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실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시민기록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8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및 사회적 관례에 따르며, 우선적으로 가족대책위 의견을 존중한다.

#8 기록단 협약서

제1조(목적)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4.16 기록단(영상 등 모든 저작자 개인도 포함. 이하 동일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위해 취재에 협조하며 가족대책위 및 가족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활동(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그 가족 포함. 이하 동일함)의 기록과 관련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관계)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피해당사자로서 진상규명 및 기록의 주체이고, 4.16기록단 역시 중요한 기록의 주체로서 가족대책위와 4.16기록단의 관계는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다.

제3조(정의)
본 협약서에서 "기록"이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세월호 가족을 기록하거나 가족대책위가 허락하여 촬영한 일체의 영상, 사진 및 유사형태의 활동과 그 산출물 등을 의미한다.

제4조(인격권의 존중)
4.16기록단은 "기록"을 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가족대책위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협력)
가족대책위와 4.16기록단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사전합의 원칙
본 협약서 또는 기타 다른 서면 합의로 사전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4.16 기록단이 "기록"을 하고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대책위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2. 인격권과 공개여부

가족대책위는 위 과정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의 가족,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 및 그 가족이 촬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한다. 단, 가족대책위의 비공개 회의 등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한 대상에 대한 기록은 금지되며, 필요시 얼굴의 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의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다.

3. "기록"에 대한 공동저작권

① "기록"에 대한 저작권은 가족대책위와 개별기록의 저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저작권자 표기는 가족대책위와 개별기록의 저작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기한다.

② 4.16기록단은 개별기록의 저작자가 본 협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고, 개별기록의 저작자는 4.16기록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기록"의 이용

① 가족대책위가 "기록"에 대한 확인 및 제공을 요청할 경우 4.16기록단은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록"에 대한 이용은, 그 이용 형태를 불문하고 가족대책위와 4.16기록단의 사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양[redacted]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권의 행사는 가족대책위 대표와 개별기록의 저작자가 동의권을 행사하되, 개별기록의 저작자는 4.16기록단에 동의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기록활동이 끝날 때 4.16기록단은 그동안의 결과물을 가족대책위에 제공한다(단, 개별 가족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제외).

5. "기록"에 대한 관리

기록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4.16기록단이 담당하며, 4.16기록단은 도난, 유실, 유출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4.16기록단은 가족대책위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가족대책위는 책임 있는 과정(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질책할 수 있으며, 4.16기록단은 가족대책위의 결정에 따른다.

6. 비밀유지

4.16기록단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하여서는 안 되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의 허가를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의 규정 및 협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실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성립)
① 본 협약은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4.16기록단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② 4.16기록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은 본 협약서를 숙지하고, 본 협약서 내용에 동의하며,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자필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명단은 추가할 수 있으며, 자필로 서명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4.16기록단은 활동하는 사람들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가족대책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각서)
4.16기록단은 본 협약서에 동의하며, 활동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활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령하여 가족대책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및 사회적 관례에 따르며, 우선적으로 가족대책위 의견을 존중한다.

2014. 8. 29.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4.16기록단 대표 박 보 남

별첨 : 4.16기록단 활동자 연서명 명단

위 사실을 확인함 변호사 오세범

변호사 조성찬

#9 뉴스타파 협약서

제1조(목적)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 및 이용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관계)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피해당사자로서 진상규명 및 자료의 주체이고, 뉴스타파 역시 중요한 진상규명 및 공정보도의 주체로서 가족대책위와 뉴스타파의 관계는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다.

제3조(정의)
본 협약서에서 "자료"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가족대책위가 보유한 일체의 영상, 사진, 문자, 디지털, 구술, 집필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적으로 자료된 산출물 등을 의미한다.

제4조(인격권의 존중)
뉴스타파는 "자료"를 분석, 정리 및 이용함에 있어서 가족대책위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협력)
가족대책위와 뉴스타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사전합의 원칙
본 협약서 또는 기타 다른 서면 합의로 사전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뉴스타파가 "자료"를 분석, 정리 및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가족대책위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소유와 위탁 등

①"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가족대책위에게 있다.
②가족대책위는 뉴스타파에게 "자료"를 위탁하며, 뉴스타파는 위 "자료" 중 의미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③가족대책위가 "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뉴스타파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자료"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가족대책위와 함께 뉴스타파가 담당하며, 뉴스타파는 도난, 유실, 유출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뉴스타파는 가족대책위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가족대책위는 책임 있는 과정(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뉴스타파는 가족대책위의 결정에 따른다.
⑤가족대책위는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뉴스타파에 위탁을 종료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⑥뉴스타파는 위탁이 종료되는 즉시 "자료"를 가족대책위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이용
①뉴스타파는 공정보도를 위해 가족대책위와 사전합의에 의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대책위는 위 과정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의 가족,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 및 그 가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한다. 단, 가족대책위의 비공개 회의 등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한 대상에 대한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②뉴스타파는 "자료"에 등장한 가족들의 영상을 이용할 경우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얼굴 모자이크처리, 음성변조 등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비밀유지
뉴스타파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하여서는 안 되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의 허가를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의 규정 및 협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실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뉴스타파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8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 및 사회적 관례에 따르며, 우선적으로 가족대책위 의견을 존중한다.

2014. 8. 29.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변호사 오세범

변호사 조성찬

Ⅶ. 언론대응활동

최종_MBC 세월호 사건 보도 백서_完

Ⅰ. 요약

세월호 참사에 대한 MBC의 보도는 1) 현장 취재기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2) 구조 과정에 대한 비판보도 및 3) 정부 관계자들의 실언과 부적절한 행태를 눈감고 4) 유족들을 폄훼·모욕·비하했으며 5) 이 같은 보도행태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문제를 드러냈다.

MBC 세월호 보도에는 1)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보도가 "절제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돼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세월호 보도와 연관시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MBC 안광한 사장, 2)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해 특보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라크 총리와의 인터뷰'를 메인 뉴스에 내보낸 이진숙 보도본부장, 3) 보도국 편집회의라는 자리를 통해 유족들을 "깡패"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겸 보도국장, 4) 세월호 보도 취재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구조과정이나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러 차례 차단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유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보도한 박상후 전국부장 등 MBC 지휘라인 전체가 관련돼있다.

안광한 사장이 회사 게시판을 통해 효순·미선양 사건을 거론하는 글을 게시한 시점(4.25)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 3사 사장이 회동(4.23)한 직후였다. 당시 방통위는 세월호 관련 방송을 '조정통제'한다는 내부 문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4.22)한 바 있다. 4월 25일을 전후해 MBC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지나친 통곡이나 극단적 분노 표출, 총리나 대통령 모욕 장면 등은 국민 행동양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니 유의 바람"이란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노동조합과 사내 기자회 등이 세월호 보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박상후 전국부장과 오정환 당시 취재센터장(현 편집 1센터장)등 주요 책임자들은 일제히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불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문제제기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징계 및 민·형사 소송을 거론하며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기자 2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피디와 기자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회사 측은 또 현재 노·사간 단체협약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세월호 보도 문제를 논의하자'는 일체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Ⅱ. 들어가는 글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5월 14일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회 대국민 사과,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에도 나타나듯,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해경의 부실 대응과 무능은 공인된 사실이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 지상파 방송 3사가 속보경쟁에 매몰되고 해경 등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정된 사실'이다.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KBS와 MBC가 포함됐다는 불행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이 중 MBC는 더 심각했다. KBS와 MBC등 지상파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던 상황에서, KBS는 5월 15일 2건의 메인뉴스 리포트를 통해 유가족들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1] KBS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만 했다. △ 특히, 구조작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할 당시, 쏟아진 실종자 가족들의 하소연을 담지 않고 박수소리가 강조되었다. △ 구조작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보도한 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가족의 회견은 메인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등 모두 5가지 내용이었다. MBC는 이런 보도가 없었다.

	KBS 사과 내용	MBC 방송 내용
1	정부 발표 받아쓰기	- KBS와 마찬가지로 '받아쓰기 오보' 심각 - 목포 MBC 현장취재 통해, "전원구조"오보 등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기회 놓쳐
2	구조 상황에 대한 확인 취재 소홀	- 잠수사 투입 상황 등에 대해 KBS와 마찬가지로 오보
3	구조 등 정부대응 비판 소홀	- 정부대응 비판기사 관련, KBS는 물론 SBS에 비해서도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
4	대통령 실내체육관 방문 리포트	- KBS와 다른 점 없음. 유족들의 외마디 있으나 구체적인 목소리 들을 수 없음
5	유가족의 목소리 누락	- 4월 29일 국무회의 간접사과 당시는 물론, 5월 19일과 20일에도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MBC만 유족 입장을 누락하거나 단신 보도

[표1] KBS 사과내용과 MBC 방송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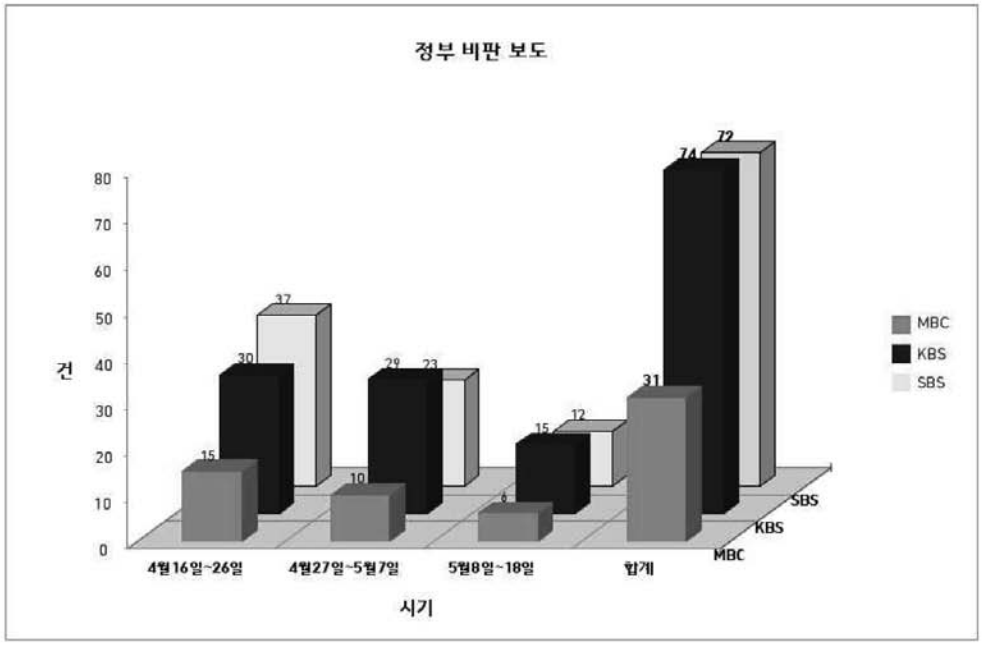
'청와대 외압' 논란의 당사자였던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관련 비판 보도를 축소하라는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지만, 그래도 KBS가 MBC보다 비판 보도를 2배 이상 많이 했다"[2]고 폭로한 바 있다.

청와대 외압 논란에 휩싸인 방송사가, MBC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감시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MBC의 세월호 보도는 문제가 많았다.

Ⅲ. MBC의 '보도 참사'

1. 비교되는 비판보도 - KBS 74 : MBC 31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 달 동안, 재난 대응 체계와 해경 대처 문제 등 정부 비판/감시 보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누락했다. 주요 일간지 뿐 아니라 KBS와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단 [그래프1] 참고 : KBS 74건 / SBS 72건 / MBC 31건 - 집계 기준과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3])



[그래프1] 지상파 3사 '정부 비판 보도' 시기별 집계 및 합계 (4월16일~5월18일)

MBC는 여야 특정 정파의 진영 논리를 배격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다. MBC는 동시에 '납세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활용해 뉴스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곳이다. 시청자를 대신해 세금의 용처(用處)와,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이중으로 있다.

그런데 MBC는 KBS나 SB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며 협박[4]하고 2명의 기자의 보직을 박탈[5]했으며, 이와 별도로 기자와 피디 등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6]해 정직 6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7]

2. '해경 · 정부 비판' 발제하면 묵살 · 누락

세월호 참사 현장을 취재했던 MBC 기자들은 "해경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이템, 기사 일부 문장 등을 발제하거나 쓰면, 데스킹 과정에서 묵살되거나 삭제됐다"고 증언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3일, 현장 기자들이 차장급 데스크를 통해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는 해경 간부의 '막말 파문'(당시 채널A가 가장 먼저 보도)을 기사로 발제했지만, 박상후 전국부장은 "80명이면 많이 구했고, 대단한 것 맞다"며 묵살했다.(다수 기자들 증언) MBC <뉴스데스크>에 빠진 이 기사는 당일 타사 메인뉴스에 보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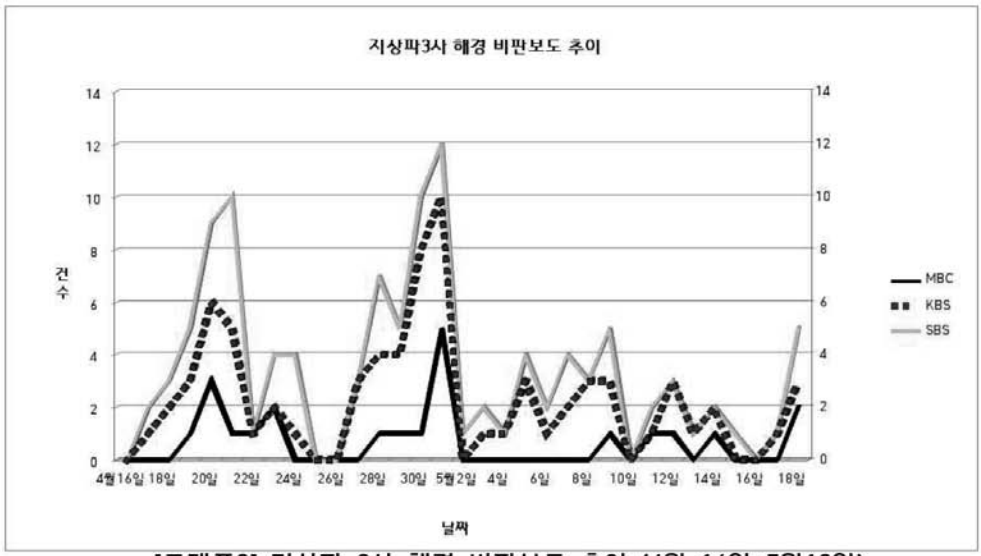
이 뿐만이 아니다. <'기념 촬영' 국장 물의 (4월 20일)>, <정몽준 의원 '국민 미개' 사과 기자회견(4월21일)>, <선원들만 전용 통로 탈출 (4월 21일)>, <해경 구조 동영상 은폐 (4월 25일)>, <해경 구조 인력 '뻥튀기' (4월 26일)>, <세월호 적재량 축소 조작 (5월 1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5월 10일)>, <대통령 담화 관련 유가족 기자회견 (5월19일~20일)> 등 주요 기사가 잇따라 묵살, 누락됐다.

날짜	내용	MBC 보도
4.16	"전원구조"오보 관련	목포MBC "전원구조 아니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오보 수정 기회 놓쳐
4.20	'기념촬영' 국장 논란	현장 취재기자가 아이템 발제했으나, "제작하지 마라" 지시. 20시 30분 정부에서 "직위해제"보도자료 배포
4.21	정몽준 의원 아들 관련 기자회견	SBS, KBS 포함 거의 모든 언론이 다뤘으나 MBC만 누락
4.21	선원만 전용통로 탈출	SBS,KBS 포함 거의 모든 언론이 다뤘으나 MBC만 누락
4.22	공무원들 구급차로 출퇴근	목포MBC 21일 사전 취재해 송고했으나, 박상후 전국부장 "지방 방송에 쓰라"며 거부. 오후 늦게 타사 기사 나오자 "다시 올려달라" 주문. 이후 사회1부 리포트.
4.22	"80명 구했으면 대단" '해경 막말 파문' 누락	최초 채널 A보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고했으나 박상후 부장 "80명 구한 거면 잘한 거 맞다. 기사 안된다"며 묵살. 이후 SBS 보도

4.23	'해경 구조 혼선' 누락 (바지선 늑장 투입, 민간 잠수사 갈등 등)	현장 기자들 발제 했으나 박상후 부장이 묵살. 기자들 이튿날 다시 발제. 24일 해경의 반박기자회견이 나오자 '논란'으로 묶어서 다뤄.
4.25	'해경 구조 동영상 은폐' 누락	목포MBC 단독 발제했으나 박상후 부장 채택 안 해. 이후 27일 KBS 단독보도, 30일 해경이 해당 동영상 공개
4.26	'구조인원 뻥튀기' 누락	해경이 구조인원을 과장한 사실 현장에서 확인. 기사 발제했으나 박상후 부장 채택 안함
5. 1	'적재량 축소' 조작 누락	SBS,KBS 보도했으나 MBC만 누락
5.10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SBS,KBS 보도했으나 MBC만 누락
5.19	박근혜 대통령 담화 유족 기자회견 누락	당시 현장에서 유가족 기자회견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준비해 송고까지 했으나 채택 안 됨
5.20	유가족 공식 기자회견 누락	현장에서 발제하고 보고했으나 <뉴스데스크>아이템 에서 빠짐. SBS와 KBS는 리포트. MBC만 2줄짜리 단신 보도

[표2] 누락, 축소, 오보 등으로 문제됐던 사례들

MBC의 한 현장 기자는 "매일 아이템이 모자라 편집부가 아이템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해경 비판 등의 기사를 발제하면 박상후 전국부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빼라고 한 적도 많다"고 했다. 이렇게 묵살된 기사들은 MBC를 제외한 타 지상파 방송사 뿐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 등 주요 조간지에 일제히 보도됐다.[8]



[그래프2] 지상파 3사 해경 비판보도 추이 (4월 16일~5월18일)

보도가 누락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념 촬영 국장' 물의 (4월 20일)> 발제했으나 묵살

4월 20일 18시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일행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왔다. 이 때 이 장관 옆에 있던 안전행정부 모 국장이 "온 김에 기념사진 찍고 가시지요"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이 장관 일행을 가로막고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MBC 기자들은 곧바로 현장 취재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1명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1명은 취재를 계속했다. 이주영 장관 측이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한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이 사태는 '공식 확인'된 뉴스가 됐다. 취재 기자가 19시 10분쯤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팀장 점검을 거쳐 19시 31분 기사를 송고했다.[9] 그러나 박상후 전국부장은 아이템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20시30분쯤 기념사진 발언 국장을 직위해제한다는 정부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MBC 현장 취재팀이 다시 박상후 부장에게 연락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고 다른 언론사도 기사를 쓰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리포트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일 뉴스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편성이어서, 바로 제작한다면 충분히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C 메인뉴스에서 누락된 이 아이템은 같은 날 KBS 메인뉴스와 다음날 SBS 메인뉴스에 각각 보도됐다.

(2) <'해경 구조 혼선' (4월 23일)> 누락

4월 23일 아침, 진도 현장취재팀은 해경의 '엇박자 구조작업' 기사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아이템으로 발제했다.[10] 1주일에 걸쳐 부산으로부터 현장까지 바지선을 끌고 왔지만 해경과 협의가 안 돼 투입이 보류됐고, 민간 잠수사 집단 반발과 현장 철수 선언 등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침 편집 회의(8시 30분) 직후 이 아이템은 전면 보류됐다.

다음날 현장 취재팀은 이 아이템을 다시 발제했다. 민간 잠수사와 해경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살됐다. 그러다 민간 잠수사들을 비난하는 해경의 반박 기자회견이 나오자, 그제야 '논란성 공방 아이템'으로 제작 지시가 떨어졌다. 당시 기자들은 "이 기사를 포함해, 해경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민감한 기사다 싶으면 묵살하기 일쑤였다"며 "보통 편집 회의 직후, 박상후 전국부장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3) <해경 구조 동영상 은폐 (4월 25일)> 발제했으나 묵살

4월 27일, <KBS 뉴스 9>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일 선원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별도로 확보하고도 11일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해경이 다음날 이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하자,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 모두 이 내용을 '톱뉴스'로 다뤘다. KBS는 "KBS의 공개 촉구 이후, 해경이 뒤늦게 공개했지만 편집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사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 있던 목포MBC기자들이 KBS 보도 이틀 전인 4월 25일 이미 발제했던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박상후 전국부장 판단으로 보류됐으며, 결국 25일 목포 지역 뉴스에만 방송됐다.

(4) <해경 구조 인력 '뻥튀기' (4월 26일)> 발제했으나 묵살

해경과 민간 잠수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4월 26일 해경이 구조 인원을 수 백 명으로 과장했다는 사실이 현장 확인됐다. MBC 현장 취재기자가 실제 사고 해역에 투입된 잠수사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 당시 팽목항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가 구조 인원을 '뻥튀기'하고 있다며 계속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이런 현장 상황을 담은 기사를 발제했다.[11] 그러나 박상후 전국부장은 역시 "제작하지 말라"는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유 설명은 없었다. 이틀 뒤인 28일, KBS가 "물량 공세 과장이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집중 비판 보도를 했다.

(5) <세월호 적재량 축소 조작 (5월 1일)> 누락

지난 5월 1일 KBS와 SBS는 나란히 "세월호 선사 측이 침몰 중에 적재량 축소 조작부터 했다"는 수사 결과 스트레이트를 '톱뉴스'로 올렸다. 그러나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톱뉴스'는 물론 그 다음 뉴스에서도 이 소식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는 <적재량 축소 조작> 기사가 애초부터 빠져있었다. 이 내용은 당일 오후 대검찰청 측 '백그라운드 브리핑'[12]을 통해 공개됐지만, 사회1부나 서울 전국부가 이 내용을 목포MBC에 공유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목포에서 진행된 합동수사본부 브리핑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13]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에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박상후 전국부장과 목포MBC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세월호 침몰 당일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해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비판 보도'를 발제하는 목포MBC와 서울 전국부 사이에 사사건건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22일 목포MBC 김양훈 기자가 복지부 공무원들이 진도 한옥펜션에 숙박하며 응급차량을 이용해 출근한 사실을 취재해 보고했으나,[14] 전국부장이 이 기사를 채택하지 않았다가 취재 내용이 타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인 저녁 7시(메인 뉴스 방송 1시간 전)에 '다시 제작하라'고 지시하자 목포MBC가 이를 거부하는 등 충돌이 잇따랐다. 결국 목포MBC는 로컬(개별 지역 방송) 시간이 살아난 4월24일 경부터 현장 취재한 비판기사를 목포 로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날짜	내용
4월24일	신고시간 속이고..황당한 해경 대응
	침몰 때까지 수중 구조요원 없었다
	진도 관제센터 2차례 기회 놓쳤다
	구조 급한데.."선체부터 인양해라"공문
	쏟아진 의혹..입 닫은 해경
4월25일	최초 구조 동영상 있다..공개 안한 이유는
	재난 대응 시스템 엉터리
	의문의 사고시간
	기념사진 요구에 컵라면까지
	구급차량이 공무원 이동수단?
	가족들 분노

4월28일	13일 만의 동영상 공개
	또 거짓말..승객들 버렸다
	위기관리 이래서야
	구조방식 및 장비투입 오락가락
	무용지물 122
	세월호 구명벌과 구명조끼 20년 전 제작
4월29일	아르바이트생 6명 중 2명만 승무원
	24명만 선원 공제 가입
	해경, 언딘과 지하상황실서 수시 회의
	소형 카페리 '위험한 운행'..허술한 규정
	세월호 참사보다 위약금이 걱정?
	구조 동영상 뒤늦은 공개놓고 진실 공방
	전국 대다수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위반

[표3] 목포MBC가 자체 지역 뉴스로 소화한 비판보도

(6)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이틀 연속 누락 (5월 19일,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해경 해체 등 파급력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만큼 큰 기사였다. 그리고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의 주요 당사자는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이었다. 따라서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게 정상이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19일 대통령 담화 직후, 진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경 해체 발표로 실종자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깊이 우려한다"면서 "해경 해체 같은 대책보다 실종자 구조가 우선인 만큼, 마지막 1명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도 유족들을 의식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긴급 답변 및 브리핑을 했다. 당시 취재기자는 이 내용이 당연히 메인뉴스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해 <뉴스데스크>용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다. 그런데 타사 메인뉴스(심지어 제작거부로 파행 중이던 'KBS 뉴스9'까지)에 다 보도된 이 기사가, MBC <뉴스데스크>에는 아예 빠졌다. 취재기자는 오후 5시쯤 "아이템이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뉴스데스크> 편집부 측은 "유가족들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견을 모아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게 20일이었고, 실제 20일 <뉴스데스크>에 이를 보도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는 이 20일 기자회견마저 두 줄짜리 '단신'으로 처리했다. 반면 SBS와 KBS는 이 기자회견도 메인뉴스 리포트로 처리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이 함께 모여 실종자 17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고, 담화문에 실종자 언급과 면담 요구 사항 등이 담겨지지 않은데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당시 현장 기자들은 "아이템 발제 뒤 기사를 보내고 현장 촬영까지 했는데 역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아이템이 빠졌다는 연락만 받았다"며[15] "20일 기자회견도 당초 <뉴스데스크> 큐시트에 잡혀있었지만, 오후 5시쯤 난데없이 두 줄짜리 단신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MBC가 누락하고 묵살한 이 기사는, MBC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모두 보도했다.

(6) <정몽준 의원 '국민 미개' 사과 기자회견 (4월 21일)> 누락

4월 21일 오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과 총리 등에게 보인 실종자 가족 반응을 놓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표현한 자기 아들의 '막말' 파문을 사죄했다. 정 의원 측은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돼 사죄문을 내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사죄의 진정성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BS와 SBS는 당일 자사 메인뉴스 아이템으로 이 소식을 다뤘다.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다", 유력한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사죄 기자 회견까지 함으로써 주요 '스트레이트 기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는 이 뉴스가 빠졌다. 당일 편집회의에서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승진 정치부장 등은 "19살짜리가 한 말이고 단신 기사 처리까지 한만큼, 메인 뉴스로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 “갇힌 사람 더 많다” 현장보고 무시

4월 16일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1시쯤, 언론사 중에 제일 먼저 목포MBC 현장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긴 채 잠겨 있었고, 해경 경비정·헬기·어선들은 선체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하는 상황이었다.□목포MBC 취재팀은 즉각 어촌계장 등 현장 사정에 밝은 어민들과 목포 해양경찰서장 등을 취재했고, “세월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다” “중앙정부 구조자 집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는 내용을 서울의 본사(박상후 전국부장 등)에 보고했다. 당시는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가 방송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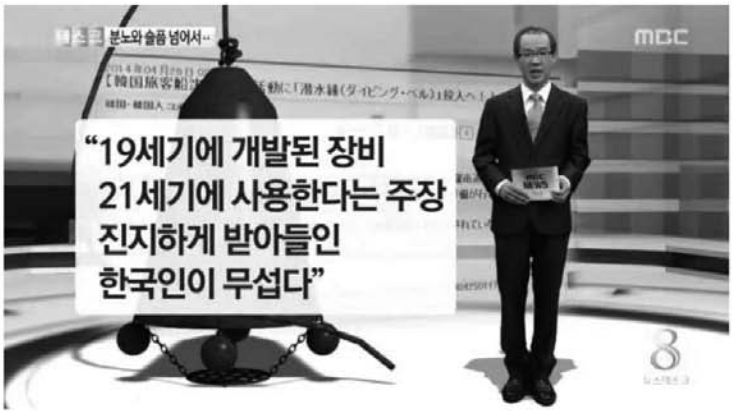
목포MBC 보도부장은 11시 이후 ~ 12시 30분 이전 2차례, 목포MBC 현장 기자와 목포MBC 보도제작국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368명 구조발표가 났던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전국부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보 생방송에서도 목포MBC 기자는 11시대, 12시대에 전화연결을 통해 “현재까지는 부상자 11명이 팽목항으로 이동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12시대 특보에서도 “공식적으로 해경이 밝힌 구조인원은 168명입니다.”라고 보도했다.

MBC 보도국은 “당시 너무 상황이 급박해 중앙 정부의 공식 집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 목포MBC의 보고가 구체성이 떨어지고 짐작에 가까워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재난 보도 준칙 상, 중앙정부의 공식 집계를 인용하는 게 최선일 수 있고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러나 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당시, MBC는 정부 집계에만 의지하지 않고, 기자들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상황이나 실종자 숫자와 관련해 일일이 탐문 취재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확인 취재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런 확인 작업이야말로 공영방송사 참사 취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건의 경우 우선 목포MBC의 보고가 있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보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목포MBC 기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재난의 초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자, 구조자 집계가 정확한 것인지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정정했어야 했다.

4. 사상 초유 '유족 폄훼' 보도

세월호 참사 초기 수습 과정은, 대통령까지 적극 동참한 국상(國喪)이었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 속에서 실종자 시신이 모두 수습되기 전까지는, 사태가 냉정하게 정리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근거도 박약했다. 그런데 MBC는 5월 7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식의 유족 폄훼 모욕 보도를 했다.



[사진1] 5월7일 박상후 전국부장 리포트

리포트를 맡았던 박상후 전국부장은 『이광욱 잠수사가 숨졌다 → 조급증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사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 실제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다 → 사고 초기 일부 실종자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 → 외국 사례는 어떨까?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다 → 동일본 지진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외면으로는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16]

이 리포트는 중대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왜곡한 기사였다. ① 숨진 잠수사는 사고 전날 처음 팽목항에 왔고, 사고 당일 아침 첫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는 사실 ② 사고 당시 잠수사들에 대한 의료 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했고 바지선에 전문 의료진도 없었으며, 사망 사고 직후에야 대책본부가 뒤늦게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사실 ③ 보도 시점 당시 잠수사의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④ 하다못해 해당 잠수사가 실종자 가족, 해경 등의 조급증과 압박에 시달렸는지 여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대부분의 언론사는 ①②③을 다뤄, 당국의 안전대책 미비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 경찰청장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고, 그 조급증에 떠밀려 잠수사가 숨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고 인과관계를 왜곡했다. 이런 식의 논지를 전개한 기사는 주요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에 인용된 외국 사례도 부적절했다.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인 세월호 참사를, 자연재해인 중국 쓰촨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에 비교하면서, 중국과 일본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는 식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 행진을 외쳤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일본 자연 재해 피해자들은 성숙하고 애국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 독재자에 비유하는 등, 한국 비난이나 혐한(嫌韓) 글을 수백여 개 올린 일본 네티즌의 댓글 하나 만을 인용하며 "(다이빙벨 투입에 대해) 일본에서도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17]

Ⅳ. '보도 참사'의 배경… 반성 없는 MBC

1. '세월호 한 달'… 자성도, 사과도 없었던 MBC



[사진 2] 5월15일 <SBS 8뉴스> 5월15일 <KBS 뉴스9>

5월 15일 KBS와 SBS는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아 대대적인 특집 뉴스 편성을 했다. KBS는 23꼭지, SBS는 19꼭지를 세월호 관련 보도에 할애했다. 유가족 영상편지, 실종자 가족들이 바라는 점, 정부 재난 대응체계와 컨트롤 타워 문제, 세월호 관련 자사 보도 비판, 수사상황 스트레이트 등, 내용도 다양했다. 반면 MBC는 이날 10꼭지를 방송했는데 이 중 4꼭지는 유병언 전 회장과 구원파 관련 보도, 3꼭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 수사 속보, 1꼭지는 스승의 날 표정 등이었다.

특히 KBS는 이날 메인뉴스에서 자사의 보도 행태에 대해 2꼭지에 걸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당시,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한 육성 하소연은 뉴스에서 빼고 박수소리만 강조했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보도한 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가족 기자회견은 다루지 않았다>, <유가족이 제기한 구조작업 검증도 하지 못했다>, <길환영 사장 관련 폭로를 제때 뉴스에 내지 않았다> 등의 비판과 반성을 그대로 보도했다.

SBS도 유가족 대표와 앵커와의 대담을 5분 넘게 별도로 구성해, 사고 당일 첫날 구조 인력과 구조자 숫자와 관련된 자사의 오보와 무비판 보도에 대해 지적하는 꼭지를 방송했다. 그러나 비판 보도 축소와 유족 폄훼 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MBC는 5월 21일 야당 의원을 비판하는 리포트 말미에, "오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사과한다."는 문장을 한 줄 삽입하는데 그쳤다.[18]

2. MBC 책임자들의 상황인식

(1) 안광한 사장의 담화, 세월호 사건 인식과 실제 영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국이 작성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대응 보고> 문건 등[19]에 따르면 방통위는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을 운영했으며, 특히 방송정책국은 '방송사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로 하도록 돼 있었다.

이 재난 상황반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4월 22일이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월 23일 MBC, KBS, SBS 등 지상파 3사 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틀 뒤인 4월 25일, 안광한 사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

"세월호 사건이 채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송은 전체 국민의 정서와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원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크고 비극적이며 한국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할 교훈적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이 우리사회의 수준과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효순·미선양 방송"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비해, 이번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추스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고가 학생들의 대규모 희생으로 더없이 가슴 아팠던 만큼, 이를 대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사명감도 남달라 MBC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보방송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모두들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을 던져서 제 역할들을 해준 덕분에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사와 지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동해 보게 된 것도 향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생한 만큼의 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라 주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파이팅하고 MBC가 어떤 상황이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그 중의 으뜸입니다. (중략) 임직원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우리사회에 분명한 교훈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가 국가와 사회의 수준과 격을 좌우합니다. 방송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클수록 몰입과 절제의 적정선을 지켜나가기 위한 고민을 해나가야 하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성숙한 사회를 향한 제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MBC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회사와 사원의 역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암동시대의 토대가 굳건해야 MBC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만큼 우리의 조직문화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이 반면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 1] 안광한 사장 담화문

안광한 사장은 '담화'를 통해 느닷없이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을 거론한다. 당시 사건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묘사한다. 또 끊임없는 오보와 누락 논란이 일어난 MBC 세월호 보도에 대해 '이번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2002년 당시 방송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안광한 사장의 발언에 담긴 태도는 앞서 열거한 세월호 관련 MBC 보도의 문제, 즉 정부에 대한 비판보도를 축소하고 누락한 태도, 가급적 유족들의 입장 보도를 회피하고 심지어 폄훼하는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담화가 회사 게시판에 올라간 전후 시점에 MBC 예능국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정상화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일선 PD나 현장 간부들은 '분위기에 맞지 않다. 재고해 달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상부의 결정이다. 이행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금요일인 25일부터 정상방송에 들어갔다.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25일 담화가 나왔던 그 주 초(4월 21일)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당초 <MBC 다큐스페셜>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18일, PD 2명을 배정해 세월호 관련 다큐 제작에 착수했으며 <생방송 오늘아침>도 금요일이었던 18일, "다음 주 다루는 모든 아이템을 세월호 참사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모두 시사제작국장, 교양제작국장의 지시와 부서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 일이었다. 특히 <다큐스페셜>은 입체적 취재를 위해 외주 PD와 해외 코디네이터까지 고용했으며, 당시 임원회의에도 이 내용이 보고된 상태였다.

그런데 21일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교양제작국장은 21일 <다큐스페셜>의 제

작중단을 지시했다. <생방송 오늘아침>도 시사제작국장과 담당부장이 "월, 화, 수 방송 분만 (세월호 내용을) 통으로(전체로) 다루고 이후에는 다른 아이템을 섞는다."고 지시했고, 22일에는 "수요일 방송분도 통으로(전체 분량으로) 가지 말라"고 재차 수정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 '상부'에서 부장들에게 '유가족들이 통곡하는 장면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 총리나 대통령을 욕하는 등의 장면은 내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었다.[20][21]

(2) 유족 폄훼 발언 등 보도국 책임자들의 부적절한 인식

이러한 분위기는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상후 전국부장 등 세월호 보도를 직접 담당하는 보도국 지휘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현장에서 발제된 기사를 누락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공·사석에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막말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메인뉴스 기획 보도와 회사 게시물 등을 통해 유족들을 폄훼하는 등 보도국 간부로서의 부적절한 의식수준을 스스로 드러냈다.□

[김장겸 보도국장]

한겨레신문 5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장은 4월 25일 오전 편집회의 자리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발언했다. 이는 박상후 부장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과 가족들의 대화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한 말이었다. 김 국장은 또 같은 자리에서 팽목항 상황과 관련해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국민 수준이 그 정도구만"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페이스북에 써서 물의를 빚은 '국민이 미개' 발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국 편집회의는 사적인 대화의 자리가 아니다. 편집회의는 보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 공유·전달하는 회의이고, 이 자리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보도국장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박상후 전국부장]

박상후 전국 부장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5월 7일 보도를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족들에 대한 '적의'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냈다.□예를 들어 보도 다음 날인 5월 8일 KBS 간부들이 합동분향소에서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팽목항에서 KBS 중계 천막이 철거되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뭐 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

어. 그런 X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 중계차 차라리 철수하게 돼서 잘 된 거야.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X들은.."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11일 회사의 전 구성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4건의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사를 조문했다는 보도는 아쉽게도 접하지 못했다.", "교감이 목숨을 끊기 전날 단원고 교사들이 학부모 앞에서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것도 생각해 보자.", "(5월 7일 리포트에 대해)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 보도가 팩트(fact) 위주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5월 7일 보도가 나간 뒤 기자회 구성원 121명은 유족 폄훼 보도 등과 관련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박상후 부장은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적극 가담이든 단순 가담이든 성명 참여 확인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기자들을 협박했다.

이어 다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퇴사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선배인 OOO가 있는 jtbc나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미디어오늘로 가면 되지 비루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적반하장식 막말을 했다. □이처럼 박상후 부장의 공·사석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막말이 계속됐지만 사측은 이를 제지하거나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글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한 뒤 삭제되었다. □

날짜	구분	내용
4.23	발언	("80명 구했으면 대단" 발언이 파문을 빚는 상황에서) "80명 구했으면 많이 구한 거 맞잖아."
5.8	발언	(KBS 보도본부장 등 합동분양소 조문 상황에)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X들 해줄 필요 없어. 중계차 차라리 철수하게 돼서 잘 된거야.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새끼들은.."
5.11	게시판	"(단원고) 교감이 목숨을 끊기 전날 단원고 교사들은 학부모 앞에 꿇어앉은 채 왜 너희들은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 리포트(5월7일)가 나간 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보도가 팩트 위주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습니다."
5.27	게시판	"황당한 것은 어쨌거나 일은 언론노조원들이 저질러놓고 회사더러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사죄를 하라고 떼를 쓰는가 하면, 외부단체들까지 불러 사진을 찍고 우리만 사죄를 안 해 피눈물 난다느니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퇴사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선배인 OOO가 있는 jtbc나 한겨레, 오마이, 경향, 미디어오늘로 가면 되지 비루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6.3	게시판	(카카오톡 내용 징계 관련) "저는 회사 징계와는 별도로 정직 받은 기자는 물론이고 그 친구들에게도 민·형사 소송을 걸 작정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조직의 기강이 바로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륜을 비호하고 아무 얘기나 절제 없이 마구 떠드는 방종을 언론자유라고 착각하는 기자회도 각성하기 바랍니다."
6.4	게시판	(카카오톡 내용 징계 관련) "그러면서 지금이 MBC의 시계는 나치시대인가라고도 합니다. 나치시대 같으면 천 번은 가스실에 들어갈 사안입니다."
6.6	게시판	(카카오톡 내용 징계 관련)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사적인 공간의 대화도 난도질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정몽준 후보의 19살 아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로 미성년이지만 난도질당했습니다."

[표4] 박상후 전국부장 주요 발언 및 게시판 글 내용

[이진숙 보도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국내에 없었다.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이라크 출장을 떠났다. 이라크 정전 11주년 기념식을 현지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본부장의 이라크 총리 인터뷰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메인뉴스 큐시트(방송예정 목록)에 잡혔었고, 세월호 사고 3일째인 4월 18일, '한국기업 진출 희망한다'는 제목으로 결국 <뉴스데스크>에 방송되었다.□

6월 19일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한 이진숙 본부장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권력기관을 무차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안광한 사장의 '담화'에 대해 "사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라고 언급하고, 박상후 전국부장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조급증을 돌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V. '보도 참사' 이후 MBC 현 주소

1. 거듭된 부당 · 보복 징계

2011년과 2012년에 있었던 해고와 징계, 보복인사는 여러 차례 법원을 통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22]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이 같은 부당 인사·징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종국 전 사장 당시에 주춤하는 듯 했던 징계와 보복인사가 김재철 전 사장 당시 부사장이던 안광한사장의 취임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23] 이 같은 사측의 행태는 인사권을 통해 1)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2) '확실한 배제'라는 수단을 통해 회사 내부의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회사는 이러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항소, 상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도 회사는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날짜	내용	대상	징계 사유
3월17일	부당전보	기자 5명 전보 - 박00, 이00 → 경인지사 - 민00, 양00, 김00 → 미래방송연구실	
4월7일	부당징계	<PD수첩> 제작진 재징계 -조00, 김00 정직1개월 -김00, 이00 감봉2개월	"광우병" 보도 이유로 정직3개월, 감봉6개월 → 2심까지 징계무효로 확정 → 양형 과하다면 재징계하겠다
4월10일	부당전보	기자 1명 부당전보 임00 → QC팀	보도국 내 부서이나, 실제 업무 없음. 현업 배제 의도
4월23일	부당징계	조00 PD 정직 4개월	'재징계' 관련 외부 인터뷰
	부당징계	김00, 최00 정직1개월 교육2개월	3년 이내 인사평가 최하 등급 3회
5월13일	부당전보	기자2명 부당전보 양00, 김00 → 경인지사	
6월2일	부당징계	신00 기자 정직 1개월	박상후 부장 기사 입사동기 '카톡방'에 공유 → '비밀 유출'
6월9일	부당징계	권00 피디 정직 6개월	인터넷 글 '회사 명예실추' 이유

[표5] 2014년 징계 및 부당전보 현황

(1) 성명(聲明)내자, 이유 설명 없이 영업직으로 강제 발령

기자회 성명(5.12)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5월 13일 회사는 보도국 중견 기자 2명을 경인지사로 발령했다. 경인지사는 기사를 쓰거나 리포트를 하는 곳이 아니며, 경인지역 관공서 등을 상대로 광고 및 사업영업을 하는 곳이다. 각각 14년, 15년차 기자들의 '기자'라는 직업을 일거에 박탈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배경과 관련해서 이들이 보도국 간부들은 '왜 이런 인사가 났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 기자는 통일전망대 팀에서 프로그램 코너를 맡아 출연과 제작에 힘써왔으며, 다른 기자의 경우, 오후 뉴스를 책임지는 주간뉴스팀 팀원으로서 특보체제로 가동됐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기자였다.

(2) 박상후 부장 기사 '입사동기 카톡방' 공유한 기자 '기밀 유출'혐의 징계

회사는 보도국 신OO 기자에 대해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6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튿날인 6월 3일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24]. 회사가 문제 삼는 신 기자의 행동은 지난 5월 7일, 같은 해 MBC에 입사한 40여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일 뉴스에 나갈 예정인 보도국 전국부 박상후 부장의 초벌기사를 올려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5월 7일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박상후 부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구조과정의 문제 등에 대한 보도를 누락, 축소([표3] 참조)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유족들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와중에 유족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까지 작성돼 방송이 예정되자, 보도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보도까지 나가게 되면 MBC는 시청자들이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다. 실제로 보도국 기자들은 5월 12일, 세월호 참사관련 보도 내용을 참회하고 회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25],[26]를 발표했다.

신OO 기자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인 카카오톡 대화방[27]을 통해 입사동기들과 '우려'를 공유한 것이었다. 또한 현장 기자의 리포트가 아니라 부장이 직접 나서는 리포트의 특성상 '이러한 방향과 형식의 리포트를 하자'는 방침은 이미 보도국 국장이 주재하는 아침 편집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돼, 모든 보도국 부장들이 공유하는, 말하자면 '비밀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곧 시청자들에게 공표될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다. 애초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OO 기자가 박상후 전국부장의 기사를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는 2004년 MBC에 입사한 입사동기 42명으로 기자와 카메라기자 피디 등 전 부문에 걸쳐있다. 그런데 김장겸 보도국장 등 보도국 수뇌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신OO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더 나아가 박상후 전국부장은 '카톡방' 캡처 내용을 전 사원이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올리기까지 했다.[28),29)]

(3) MBC 상황 설명하며 사죄·자성 촉구 글 올린 PD도 징계

회사는 MBC 예능국 권OO 피디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중징계를 예고하는 대기발령을 내리고, 6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30)] 회사가 문제 삼는 권OO 피디의 행동은 지난 5월 17일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31)]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는 길환영 사장의 유족 앞 사과(5월 9일)와, 자사 보도를 통한 반성(5월 15일)을 했다. 그러나 길환영 사장이 김시곤 보도국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길 시장의 보도개입 사실이 드러났고 이 파문이 기자회의 제작거부와 KBS의 양대 노조의 동시파업이라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반면 MBC의 경우 기자회가 성명을 발표(5월 12일)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과와 개선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벌였지만(5월 16일~23일), 회사는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날짜	KBS	MBC
5.3	새노조, 김시곤 보도국장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발언 공개	
5.7		박상후 부장 <생각해 봅시다> 보도
5.8	세월호 유가족 KBS 앞 사과·면담요구	민실위보고서 배포 <우리 뉴스에 '분별'은 있는가?>
5.9	길환영 사장 청와대 앞에서 공개 사과	

5.10		세월호 추모집회 <뉴스데스크> 누락
5.11		박상후 부장 5월 8자 <민실위 보고서> 비난. "제 리포트(5월 7일)가 나간 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보도가 팩트 위주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습니다."
5.12	KBS, 백운기 보도국장 임명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 가결	MBC기자회, 사과 성명 발표 노동조합, "반성은커녕 망언" 성명서 발표 한겨레, "김장겸, 국장 유족비하 발언" 보도
5.13		'신00 기자 카톡방 대화 내용 사측 확보하고 징계 예정이다.' 소문
5.14		김00, 양00 기자 기자직 박탈, 경인지사 발령
5.15	<뉴스9> 2건의 기사로 세월호 보도 사과 (SBS도 세월호 1달 특집 유족 대담 편성)	
5.16	KBS 보도본부 부장단 길환영 사장 퇴진 촉구하며 일괄 보직 사퇴. 김시곤 전 국장 2차 폭로. 보도본부 팀장 49명 보직사퇴성명	노동조합,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합니다." 피케팅 돌입 (5.16~23)
5.17		권00 PD 인터넷 글 게시

[표6] 5월 17일까지 KBS와 MBC 상황 비교

오히려 박상후 전국부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5월 11일 전사원이 보는 게시판에 5개의 글을 연달아 올렸으며,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 가담이든 단순 가담이든 나중에 확인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32]. 회사는 기자회 설명 발표 직후 기자 2명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기자직을 박탈했으며[33], 5월 20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도 세월호 보도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논의하자는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왜 MBC는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인터넷이나 SNS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으며,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는 '엠병신'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터넷 기사의 한 대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말로는 MBC가 KBS보다 못한 최악의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파업의 동력 운운

하며 고작해야 성명이나 내고 노조위원장이 사과쇼, 눈물쇼나 벌이고 있는 것은 추한 모습이다. 입으로는 공정방송이 마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듯 굴면서 막상 제 이익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 몸을 사리는 듯한 태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대 때릴 수 있지만 더 많이 맞을 것 같아 파업은 못하겠다는 겁쟁이들이 삭발은 왜 하나, 그런 쇼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인가.[34]

따라서 권 피디의 행동은 "어째서 맞서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 글의 한 대목처럼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MBC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취지였다. 역시 징계의 대상일 수 없다.

2. 언로(言路) 막는 언론사 : '사과하라' 피케팅이 정치행위?

현재 MBC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무단협'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2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지만, 단체협약을 다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노·사간에 공정방송 문제를 논의하는 '공정방송위원회' 조항이며 회사는 이 내용을 아예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회사는 단체협약 전체협의 자리를 겸한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김종국 사장이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등 민사재판, 노조집행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방송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회사 측에 공정방송협의회를 열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단체협약이 없어 개최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노동조합은 5월 20일에 열렸던 정기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긴급 안건으로 '세월호 보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미리 협의된 안건이 아니다.", "노사 서로가 신뢰할만하다는 인식이 오면 그 때 논의하겠다."는 이유로 역시 논의를 거부했다.□

2012년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다시 말해 파업의 정당성이 받아들여졌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 회사가 여러 가지 편파보도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기 공정방송협의회는 물론 임시 공방협

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논의될 통로를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4년의 상황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상적인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측이 모든 논의의 장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회사는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출근 전과 점심시간,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5월 17일 "정치적 집회"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35]

방문진 야당이사들은 박상후 부장의 리포트가 나간 다음날인 5월 8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세월호 보도 전반에 대해 이진숙 보도본부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자'고 제안했으나 6(여):3(야) 이라는 구조에 막혀 좌절되었다. 이어 15일에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해외 시찰이 예정된 여당이사들의 반대[36]로 한 달이 더 지난 뒤인 6월 19일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MBC는 사내 의견제시 통로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물론, 6:3이라는 이사 비율의 구조적인 한계에 갇혀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이라는 설립목적[37]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석 및 참고자료]

1) 5월15일 KBS <뉴스9> "'대통령 부각·유족 소홀' KBS 보도 반성합니다."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71540221

3) **[표7] 정부 비판보도 3사 비교 (4월16일~5월18일)**

※ 3사 메인뉴스 대상. 정부 대응체계, 해경 초동 대처 비판, 초기 집계 혼선 비판 등 포함.

※ 같은 기사 중복 보도 제외. 검찰 수사 결과, 유족 분노 □주장 단순 전달, 여야 정치권 공방 단순 전달, 정부 측 대책 또는 사과문 발표 단순 전달 등 내용은 제외

※ MBC 노동조합은 세월호 관련 12차 민실위 보고서(4월 24일, 5월8일 자)를 통해 사고 수습 초기 '집계 혼선' 비판 기사 건수를 집계에 포함시켰다가, 사고 수습 중후기 보도 관련 3차 보고서(5월21일자)에서는 3사 모두 제외. 이번 세월호 백서 집계에는 포함.

	KBS	SBS	MBC
4월 16일 (수)	① 정부 탑승-구조자 집계 '우왕좌왕'… 혼란 가중	① 구조 인원 '오락가락' 발표…혼란 키웠다	① 구조 집계 '오락가락' 대혼란…실종자 가족 타들어가는 속
4월 17일 (목)	①구조당국-해양조사원, 엇갈린 '정조시간' 논란 (해경)	① 생존자 생사 가를 '골든타임' 놓쳐 화 키웠다(해경 초기대응) ② 지금까지도 갈팡질팡 '3류 대책 본부' (중대본 부실 대응) ③ "학생 전원 구조" 엉터리 발표 진원지는 해경	
4월 18일 (금)	①"선내 진입" 번복… 오락가락 정부 행태에 혼란 ② 세월호 대피 훈련 소홀… 감독 기관 책임 미루기 ③ '사고 공화국' 오명 20년…도대체 뭘 배웠나? (정부 재난대응체계 부실)	① 구조됐다던 내 딸 어디에…억장 무너지는 가족 (정부가 사고대처과정 혼란 키워) ② 해경 어설픈 시신 확인에 망연자실 ③ 총체적 '갈팡질팡'… 제 역할 못하는 정부	① 오락가락 정부발표- '선내 진입' 발표 번복 또 혼선
4월 19일 (토)	① 수색 요원, 장비, 민관군 혼성 배경 달라 ② '대규모 투입'에도… 지휘 체계 문제 있나? ③ 지금까지 다섯 번 집계 번복, '시스템'이 문제 ④ 천안함 백서 '무용지물'… 우왕좌왕 되풀이 ⑤ "해경 여객선 점검 시간 1척당 13분"	① 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 한심한 정부 ② 상황은 긴급인데.. 53분간 아무 조치 없었다 (재난안전본부) ③ 피해 키운 官災..최악 사고에 최악 대응 ④ 500억 구조함, 진수식까지 해놓고 ⑤ 해경, 세월호 교신 내	① 6번 바뀐 세월호 승선자 집계 '혼선' ②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 (해경)

참고자료 7-1

	⑥ 탑승자 수 확인 "주먹구구" ⑦ 안전 허점 "알고도 조치 없었다" (정부, 선박 관리 허술 문제점 알고 있었다)	역 왜 공개 않나 (미심쩍은 교신내역 비공개) ⑥ 사고 날 때마다 달라 진 게 없다 (시행착오만 20년/해난 구조체계)	
4월 20일 (일)	① 교신공개·· 천금같은 초기 18분 낭비 ② 교신 뒤늦게 공개·· 의혹 제기 바지선 동원·· "뒷북 투입" 비판 ③ 눈도장 찍기 방문 논란, 구경꾼까지? (*안행부 국장 '기념촬영' 물의) ④ 시신 중복 집계 또 '혼선'··불신 가중	① 허둥대기만 한 31분·· '골든 타임' 날렸다 (골든 타임 놓치고 속수무책) ② 제주→진도관제센터, 11분간 뭐했나 ③ 있으나마나한 '정부 재난대응체계' (유명무실 대응체계)	① 허둥대다 골든 타임 놓쳤다 ② 교신 내용 왜 이제 공개? (때늦은 공개 이유는?) ③ 첫 교신 후 잃어버린 12분 (의문의 12분) ④ 출동 경비정 선내 상황 몰 랐다
4월 21일 (월)	① 실시간으로 지켜보고도 감지 못해 ② VTS, 해수부 해경 관할 경쟁 ③ 구조선박 몰렸는데 선장에게 미뤄 (관제센터 '소극대응') ④ 학생 신고하자, "위도 경도는?" ⑤ 재난대책 본부에 재난 전문가 없어	① 자기들끼리도 연락 안된 해경 (해경의 '우왕좌왕' 비상대응) ② 모니터 보면서 위험도 모른 진도VTS (관제센터, 눈뜨고도 못봤다) ③ 대형바지선 이제야 왔다 ④ '컵라면 장관'에 '기념촬영 국장'까지 ⑤ '위 따로 아래 따로 관리' (몰래 개조되는 배 /해수부) ⑥ 엉터리 안전점검·· 눈 먼 감독기관 (해경)	① 관리 제각각··날아간 '골든 타임' ② 정부 재난대응체계 침몰 (실망 준 재난 대응체계) ③ 최초 신고자 단원고 학생
4월 22일 (화)	① 사고 시각 제각각·· "인터넷 보고 베껴" ② 정치인 잇단 물의, 경찰수사까지 ③ 재난대책본부 역할은? (현장 지원 우선돼야)	① 선동꾼 운운, 유언비어 퍼나른 與의원 ② 확증편향·· 듣고싶은 말만 받아들여 (불통 불신이 키웠다) ③ 이번엔 구급차 출퇴근 복지부 공무원	① 모니터만 믿고 안이한 대응? (관제센터) ② 여객선 한 척 관리 관청 겹겹 ③ 복지부 공무원 구급차 퇴근 물의
4월 23일 (수)	① 바람직한 정보 전달 자세는? (정부 미숙한 언론대응)	① "80명 구했으면 대단"·· 자화자찬 직위해제 ② '평형수' 점검하는 곳조차 없었다 ③ 또 시신 뒤바뀌고·· 처리 미숙	

4월 24일 (목)	① 교신 녹취 분석·· "2곳 이상 편집 의혹" (세월호-진도 VTS) ② 해경 해양청에도 선물 접대 의혹	① "다른 배 돕느라 세월호 상황 못봤다" (진도VTS) ② "창문 깨고 밧줄이라도 내려줬으면··" (초기 대응 문제) ③ 큰 도움 안되는 첨단 장비들 ④ 안전규제 한국은 완화 vs 일본은 강화 (정부 관리감독 체계) ⑤ 사고 나면 똑같은 소리·· 달라진 건 없다 (정부대처)	
4월 25일 (금)	① "구해달라" 119 신고 23건 더 있었다	① "안전 점검 독점 깨야"·· 보고서 묵살 ② 손놓고 있다가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안전관리대책) ③ 백서 만들면 뭐하나·· 참사는 되풀이 (무용지물 재난백서)	① 구조업체 '언딘' 특혜 있었나?
4월 26일 (토)	① 위기 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개발"	① 쏟아지는 뒷북대책	
4월 27일 (일)	① 허위신고··해경 승인 ② '눈대중' 과적 단속 ③ '선원 탈출 영상' 공개 안 해, 왜?	① 아무도 모르는 해양긴급 신고 122 ② 대책은 말뿐··· 반복되는 '판박이' 실수	
4월 28일 (월)	① 해경 뒤늦은 동영상 공개 ② 불신 키운 잠수사 투입 규모 ③ 전시 행정 만연·· 대안은?	① 대피지시도, 구조도, 아무도 안 챙겼다 (해경 대응) ② 생사의 기로·· 너무나 달랐던 안과 밖 (해경 구조 문제) ③ VTS 사각지대 없애고 일원화하라	① 해경 자동경보 고장 나 있었다
4월 29일 (화)	① 침몰 7분 전 수십 명·· 선미 우현, 대거 구조 (해경 초동대처 문제) ② 해경의 '선원 구조', 구조체계 무너뜨려 ③ 문서제목서 '세월호' 삭제 (해경)	① 해경 구조, 아쉬움 넘어 분노까지 ② 해수부 장관 집무실이 '선주협회' 건물에 ③ 뒤늦은 점검에 운항중지 속출	① 퇴선 실패 통한의 초동 대처
4월 30일 (수)	① "해경, 언딘 우선 잠수 위해 군 투입 통제" ② 둘째 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쳐 ③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책임 통감" ④ 구조 매뉴얼 안 지키고	① 35분이나 걸린 헬기·· 전달 안된 VTS ② 사고 9일 뒤에야 소집된 전문가 회의 ③ "UDT 잠수, 해경이 통제했다"는데	① "해경이 해군 저지", "혼란 예방"

참고자료 7-1

	허술하고 ⑤ 해경 약 3분의 1, 수영 못해 ⑥ 경비정 "탈출" 방송 선내선 못 들어 ⑦ 어설픈 지휘·· 곳곳 혼선		
5월 1일 (목)	① 세모 경력 해경 핵심 국장 전격 경질 ② "한 때 구원파" 유병언과 관계없다? ③ "영향력 있는 지위"·· 수사 관여 안했다? ④ 구속 전 수사관 집에서 1박··누가 지시? (해경 집에 머문 선장) ⑤ 관제 센터 운용 실태는?	① 해경 국장이 세모 출신 구원파였다 ② 선장을 유치장 아닌 아파트에	① 해경 수사국장이 전 '세모' 직원 ② "구원파 떠났다" 의혹 부인 ③ 세월호 선장 경찰 집에 재워 ④ 해경 지휘부 반, 바다 경험 없어 ⑤ 인력 늘리고도 초기대응 허술 ⑥ 해군SSU 공기통 없이 출동
5월 2일 (금)		① 안 지켜진 매뉴얼, 구체적 지침도 없다 ② 해경-해양구조협회 물고 물린 유착	
5월 3일 (토)	① 인양까지 '언딘'에···의혹	① '사기범'을 왜 해경이·· 고유 업무 충실해야 ② 1조 넘는 예산, 해양 안전은 1.6%뿐	
5월 4일 (일)	① 세월호 인양 계약에 해경 부당 개입?	① 끼리끼리 주고받은 해수부 연구용역	
5월 5일 (월)	① <이슈> 해경 해난 구조 역량 문제 ② 잠수병 속출··· '전문시설' 서해엔 없어 ③ 근거리 여객선은 차량 묶지 않아도 돼	① 돈 들여놓고 안쓰는 '안전운항 장비'	
5월 6일 (화)	① 무방비 감압실 (응급 무방비 감압실)	① 우려했던 일이·· 너무 허술한 안전조치 ② 해경청장, '해양구조협회 지원' 공문 지시	① 안전 무시 강행군 예고된 사고
5월 7일 (수)	① 잠수사 투입 경위 파악 못해··책임 회피 급급 ② 엉뚱한 도면으로 수색하기도	① " 이상한 인력 배치·· 수색보다 '윗분 의전' ② 지휘부 절반은 해상근무 경험 '0'	
5월 8일 (목)	① 구조 현장 안전 실태는? ② <이슈> 해경의 몸집 불리기 (사고 때마다 몸집 불리기) ③ <이슈>구난구조전념해야		
5월 9일 (금)	① 해경 갈팡질팡·· 허둥지둥 왜?	① 또 드러난 해경의 엉터리 현장 보고	① 해경, 침몰상황 '팩스 보고' 시간 허비

	② 국제선 안전 빨간불 (허술한 점검도 문제)	② 잠수사 DB, 보고만 하고 실천은 안했다	
5월 10일 (토)			
5월 11일 (일)		① "즉각 진입했으면 전원 구조 가능했다"	① 해경이 한강에 진출한 까닭은?
5월 12일 (월)	① 해경 초동 대응 문제 ② "대대적 조직 개편"… 해경 긴장	① '속도'만 생각했다가 잊어버렸던 교훈 ② 해양사고 내도 면허 취소는 0.1%	① 해경 해난구조 자체평가 '우수' (자화자찬)
5월 13일 (화)	① 현직 해경 간부가 '협회 근무'		
5월 14일 (수)	① 사고 1시간 동안 승객 유무도 파악 못해 ② 119 상황실, 구조보다 의전이 먼저?	① 구조도 바쁜 탓에 윗분 의전부터	① "의전 챙겼다" "의료진 대기"
5월 15일 (목)	KBS 자사 보도 반성 2꼭지 [그 외 정부 비판] ① 재난 관리 엉성 ② 국가 안전처…과제는? ③ 세월호 참사 충격·슬픔· 분노의 30일…지금은? (정부 부실대응 비판)	[자사 보도 반성] 유족 영상편지 유족들 \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외 정부 비판] ①진입시도도 안한 해경 ②신뢰 무너진 대한민국 ③ 컨트롤 타워 제 역할 하려면 ④ 구조 매뉴얼 현장 중심으로	
5월 16일 (금)			
5월 17일 (토)	① 경비함정 90% 긴급구조 장비 없어 ② 규제 풀어 '조종 면허' 장사…수상 안전 위협		
5월 18일 (일)	① "바다로 뛰어들게 해라" "진입불가" (해경 교신 내용)	① 침몰 보면서도 "못 들어갑니다" (해경 교신 공개) ② 또 드러난 '우왕좌왕 뒷북 대응' (해경 대응문제)	① 해경 교신 첫 공개 "진입 어렵다" (초기 대응 문제) ② '우왕좌왕' 탈출 명령도 못했다

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0

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72

6)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39650.html?_fr=mt4

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54

8) 박상후 부장 등 보도국 책임자들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공인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4월 말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경 비판 보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4월 29일자 석간 문화일보가 해경 비판 기사를 집중 보도하자, 오후 2시 편집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상후 전국부장이 "문화일보에 있는 해경 기사 아무거나 하나 제작하라"고 주문하는 일도 벌어졌다.

9) [사진3] 기사가 송고되었음을 보여주는 '취재데스크' 화면

	04/20 19:31		[데스크]'해경과 기념사진?' 이주명 장...	사회2부	리포트
✔	04/20 19:31	01	↳[특보]'해경과 기념사진?' 이주명 장관...	사회2부	04/20 20:10 리포트
✔	04/20 19:31	03	↳[특보/수정]'해경과 기념사진?' 이주명...	사회2부	04/20 21:57 리포트

10) [사진4] 4월23일 진도 현장팀 아이템 보고

게시일자	2014-04-23	게시시간	07:56	게시자		PAGE	1/1
제 목	24일 팽목항 인력배치						

1. 사고 해역 LTE ( ) 낮 뉴스특보와 데스크

2. 팽목항 중계차 (-데스크)
   낮특보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커버

3. 오늘 내일이 구조 최적기 24시간 구조작업...소조(조금) 절정 ( )
   모레부터 다시 조류 빨라져. 사실상 내일이 구조 작업 마지막이 될 수 있음.
   오늘 내일 구조 집중하고 최소한 유도선 많이 깔아야 하는 상황
   시신도 많이 나올 듯

4. 엇박자 구조작업 ( )
- 바지선 부산에서 일주일 걸려 왔지만 활용없어...해경과 협의 안돼 투입 보류중
- 민간 잠수부 성명 예정 (** 이거 없으면 야마 바꾸겠음)

* 가족 움직임이나 신원미상 많아지면 관련 아이템 발제하겠음.
  아직은 신원 모두 나오는 상황
* 어제 헬기 흔들림 현상. 오늘 오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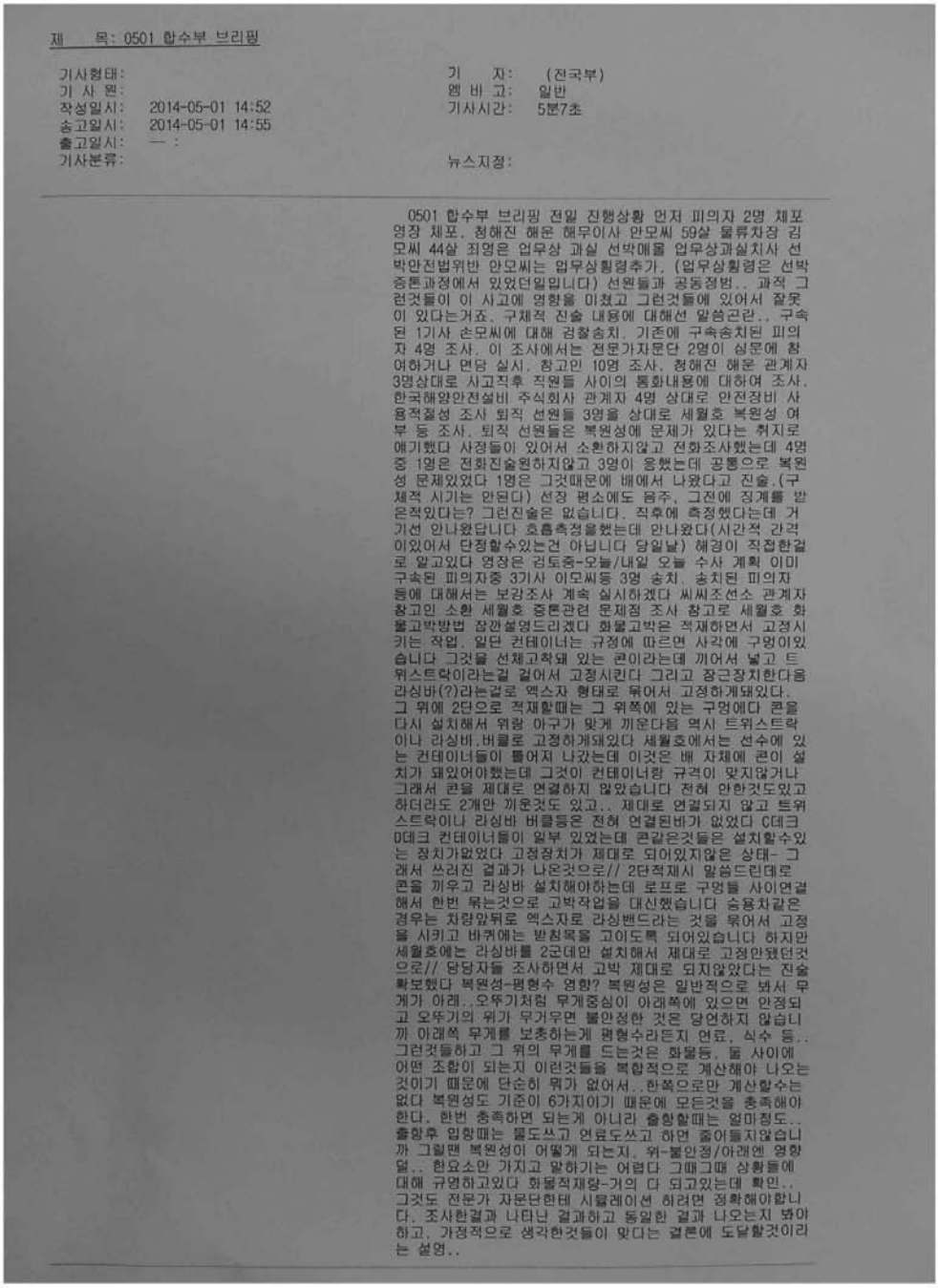
11) [사진5] 4월26일 진도 현장 아이템 보고

게시일자	2014-04-26	게시시간	13:13	게시자		PAGE	1/1
제 목	진도 아이템						

1. 구조인원 뺑튀기... 민관군 잠수부 500명 투입?
- "잠수부 반복되는 잠수로 고통호소"..수백명되는데 왜 반복 잠수?
- 해군 UDT126명 SSU 127명도 잠수투입 인원 아니고 행정요원도 포함
- 현장 방문 가족들도 이 부분 항의
- 초기 사상 최대 500-600명 투입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루 70여명 투입으로 발표 변경

12)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 배경설명을 하는 브리핑

13) [사진6] 당시 보고된 합동수사본부 브리핑 내용



제 목: 0501 합수부 브리핑

기사형태:
기 사 원:
작성일시: 2014-05-01 14:52
송고일시: 2014-05-01 14:55
출고일시: — :
기사분류:

기 자: (전국부)
원 고: 일반
기사시간: 5분7초

뉴스지정:

0501 합수부 브리핑 전일 진행상황 먼저 피의자 2명 체포영장 체포. 청해진 해운 해무이사 안모씨 59살 물류차장 김모씨 44살 죄명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안모씨는 업무상횡령추가. (업무상횡령은 선박증톤과정에서 있었던일입니다) 선원들과 공동정범.. 과적 그런것들이 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것들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거죠. 구체적 진술 내용에 대해선 말씀곤란.. 구속된 1기사 손모씨에 대해 검찰송치. 기존에 구속송치된 피의자 4명 조사. 이 조사에서는 전문가자문단 2명이 심문에 참여하거나 면담 실시. 참고인 10명 조사. 청해진 해운 관계자 3명상대로 사고직후 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조사. 한국해양안전설비 주식회사 관계자 4명 상대로 안전장비 사용적절성 조사 퇴직 선원들 3명을 상대로 세월호 복원성 여부 등 조사. 퇴직 선원들은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사정들이 있어서 소환하지않고 전화조사했는데 4명중 1명은 전화진술원하지않고 3명이 응했는데 공통으로 복원성 문제있었다 1명은 그것때문에 배에서 나왔다고 진술.(구체적 시기는 안된다) 선장 평소에도 음주, 그전에 징계를 받은적있다는? 그런진술은 없습니다. 직후에 측정했다는데 거기선 안나왔답니다 호흡측정을했는데 안나왔다(시간적 간격이있어서 단정할수있는건 아닙니다 당일날) 해경이 직접한걸로 알고있다 영장은 검토중-오늘/내일 오늘 수사 계획 이미 구속된 피의자중 3기사 이모씨등 3명 송치. 송치된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계속 실시하겠다 씨씨조선소 관계자 참고인 소환 세월호 증톤관련 문제점 조사 참고로 세월호 화물고박방법 잠깐설명드리겠다 화물고박은 적재하면서 고정시키는 작업. 일단 컨테이너는 규정에 따르면 사각에 구멍이있습니다 그것을 선체고착돼 있는 콘이라는데 끼어서 넣고 트위스트락이라는걸 걸어서 고정시킨다 그리고 장근장치한다음 라싱바(?)라는걸로 엑스자 형태로 묶어서 고정하게돼있다. 그 위에 2단으로 적재할때는 그 위쪽에 있는 구멍에다 콘을 다시 설치해서 위랑 아구가 맞게 끼운다음 역시 트위스트락이나 라싱바.버클로 고정하게돼있다 세월호에서는 선수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틀어져 나갔는데 이것은 배 자체에 콘이 설치가 돼있어야했는데 그것이 컨테이너랑 규격이 맞지않거나 그래서 콘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한것도있고 하더라도 2개만 끼운것도 있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트위스트락이나 라싱바 버클등은 전혀 연결된바가 없었다 C데크 D데크 컨테이너들이 일부 있었는데 콘같은것들은 설치할수있는 장치가없었다 고정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은 상태- 그래서 쓰러진 결과가 나온것으로// 2단적재시 말씀드린데로 콘을 끼우고 라싱바 설치해야하는데 로프로 구멍들 사이연결해서 한번 묶는것으로 고박작업을 대신했습니다 승용차같은 경우는 차량앞뒤로 엑스자로 라싱밴드라는 것을 묶어서 고정을 시키고 바퀴에는 받침목을 고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에는 라싱바를 2군데만 설치해서 제대로 고정안됐던것으로// 당당자들 조사하면서 고박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진술확보했다 복원성-평형수 영향? 복원성은 일반적으로 봐서 무게가 아래..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정되고 오뚜기의 위가 무거우면 불안정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래쪽 무게를 보충하는게 평형수라든지 연료, 식수 등.. 그런것들하고 그 위의 무게를 드는것은 화물등, 둘 사이에 어떤 조합이 되는지 이런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가 없어서..한쪽으로만 계산할수는 없다 복원성도 기준이 6가지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충족해야한다. 한번 충족하면 되는게 아니라 출항할때는 얼마정도.. 출항후 입항때는 물도쓰고 연료도쓰고 하면 줄어들지않습니까 그럴땐 복원성이 어떻게 되는지. 위-불안정/아래엔 영향없.. 한요소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때그때 상황들에 대해 규명하고있다 화물적재량-거의 다 되고있는데 확인.. 그것도 전문가 자문단한테 시뮬레이션 하려면 정확해야합니다. 조사한결과 나타난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 나오는지 봐야하고, 가정적으로 생각한것들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할것이라는 설명..

14) [사진7] 4월22일 작성 및 송고된 목포MBC 현장 기자의 리포트

제 목 : 사고현장 응급차량이 공무원 이용수단?(R) PAGE : 1

기사형태 : 리포트 | 기 자 : 김양훈 (전국부)
기 사 원 : | 엠 바 고 :
작성일시 : 2014-04-22 10:04 | 기사시간 : 01 분 28초
송고일시 : 2014-04-22 11:23
출고일시 :
기사분류 : , | 뉴스지정 :

◀ANC▶ (단독)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진도 팽목항에 부상자와 시신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중인 응급차량을 현장에 나온
총양무치 공무원들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END▶
기적적으로 구조될 수도 있는 생존자와
시신을 이송하기 위해 수십대의 응급차량이
24시간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팽목항에 있어야 할 응급차량이
어젯 밤 진도의 한 한옥펜션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펜션에 숙소를 잡은 공무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SYN▶ 응급차량 기사
복지부 직원 기다리고.//

해경이 시작되자 응급차량은
직원들을 태우지 않고 긴급히 사라졌습니다.

총양무치 공무원들은 어제 아침에도
응급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숙소인 휴양지 펜션도
논란입니다.

하룻 밤, 최고 35만원에 달하고
진도 팽목항은 물론 사고대책본부와도
20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SYN▶ 펜션 관계자
15만원에서 35만원.//

펜션부지는 군청에 민방이 없어 멀리 떨어진
펜션을 숙소로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가은 체육관과 천막 바닥에서
발잠을 설치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응급차량 이용과
한옥펜션 숙소는 분명 부적절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15) [사진8] 당시 진도 현장팀의 아이템 보고

제 목: 5월 20일(화) 진도팀 보고

기사형태: | 기 자: (전국부)
기 사 원: | 엠 바 고: 일반
작성일시: 2014-05-20 07:26 | 기사시간: 0분46초
송고일시: 2014-05-20 07:26
출고일시: — :
기사분류: 사회 | 뉴스지정:

< 사신해은 심각.. 애타는 가족들 >

[더딘 수색.. 사신확은 현실화]

- 세월호 침몰 35일째
중조기 접어들었지만, 어젯밤 11시 40분
점조시간에도 유속 빨라 구조팀 투입 실패

- 시신 확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어제 저녁 발견된 실종자,
얼굴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 중조-소조기인 일요일까지 남은 17일
수습 집심

[혼란 가중..공식 기자회견 예정]

- 어제 '해경 해체' 발표로 수색 차질 우려
- 오늘 팽목항 내려온 유가족들과 합께
★ 다시 기자회견 열 예정(시간 미정)
- 그러나 김칠이 유가족 놀래 따라가다
발각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 발생

-----

16) [전문2] 5월 7일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박상후 전국부장의 리포트,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 앵커 ▶ 세월호 참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더해,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이번 사고에 녹아있을 텐데요.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 언딘 관계자 ▶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 그러니 안된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다 그렇게 나가고...우리한테 '인원 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 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에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 박규생/고 박주현씨 아버지 ▶ "부산외국어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고 정차웅군의 유족들은 장례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가장 싼 수의와 관으로 장례를 치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고에서 초동대처 미흡은 물론이고 대책본부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의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 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17) 일본 <야후 재팬> 사이트에 링크된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에, isa*****라는 아이디로 올린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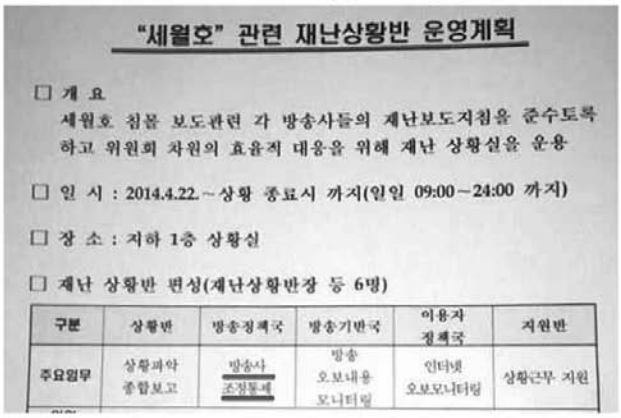
「한국은 3류 국가 이전에 독재 국가다.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총리에게 뒤집어 씌워 잘라버리고, 국민을 죽게 하고 피해자, 유족, 추모식까지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하니 이건 북한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

18) [전문3] 5월 21일 기사 전문

◀ 앵커 ▶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MBC가 촉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틀린 주장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시청자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공영방송인 MBC가 시작해 촉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막과 앵커멘트, 기자 리포트로 학생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 다른 방송사의 오보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 측은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 오보' 자료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와 최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전원구조'의 최초 보도는 모 종합편성채널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MBC는 자막과 앵커멘트, 기자 리포트"가 오보로 동시에 나갔다고 했지만, 해당 시간에는 앵커멘트 등이 없이 자막만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최 의원이 사실 확

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화방송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 의원 측에 모 종합편성 채널의 최초 오보내용을 포함한 수정자료를 내고 "MBC보다 먼저 자막을 낸 방송사에서는 앵커의 멘트가 '각 곳에서 오는 정보가 다른데…'라며 단정적이지 않아 오보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방심위의 판단에 동의하며, MBC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종편채널은 학생 모두 구조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는 "일단 단원고에서는 학생 모두가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MBC는 이번 논란을 떠나 MBC 역시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를 내고 정정보도를 하는 등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시정차 여러분께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19) [사진9] "세월호"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 개 요
세월호 침몰 보도관련 각 방송사들의 재난보도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원회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 상황실을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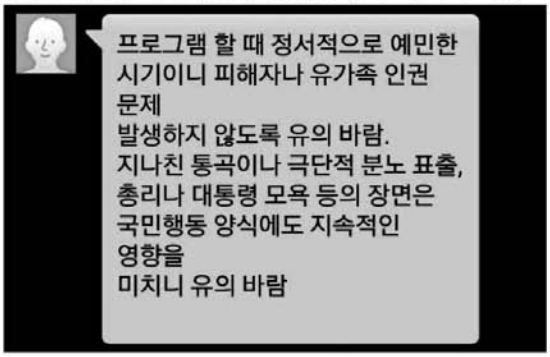
□ 일 시 : 2014.4.22.~상황 종료시 까지(일일 09:00~24:00 까지)

□ 장 소 : 지하 1층 상황실

□ 재난 상황반 편성(재난상황반장 등 6명)

구분	상황반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이용자 정책국	지원반
주요임무	상황파악 종합보고	방송사 조정통제	방송 오보내용 모니터링	인터넷 오보모니터링	상황근무 지원

20) [사진10] 제작진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 내용



21) [표 8] 4.16~6.30 방송 3사 주요 시사프로그램 분석

	MBC	KBS	SBS
세월호 아이템 전체 분량	140분	340분	305분
정부, 해경 비판 분량	10분	120분	130분

MBC <PD수첩> <시사매거진2580>
KBS <추적 60분> <취재파일 K>
SBS <그것이 알고싶다> <현장 21>

22) [표 9] MBC관련 주요 소송 진행 결과

	사건 내용	구분	결과
1	정영하 전 위원장 등 해고 및 징계 무효소송	민사	1심 승소
2	2012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민사	1심 사측 패소
3	정영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업무방해 혐의	형사	1심 승소 (국민참여재판)
4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민사	2심 승소
5	회계팀원 명령휴직 무효 소송	민사	1심 승소 (확정)
6	이00 피디 등 정직무효 소송 - "인권 침해 취재" 사유	민사	1심 승소
7	김00 기자 등 정직무효 소송 - "외부 언론 인터뷰" 사유	민사	1심 승소
8	이00 기자 정직무효 소송 - "사내 게시판 활동" 사유	민사	1심 승소
9	안00 PD 정직무효 소송 - "라디오프로그램 풍자" 사유	민사	1심 승소
10	PD수첩 정직무효 소송 - "광우병 보도" 사유	민사	2심 승소 (확정)

23) [표10] 2012, 2014년 주요 보직자 비교

이름	2012년	2014년 현재	비고
안광한	부사장	사장	대량 해고 및 징계 당시 인사위원장
임진택	감사	감사	법인카드 자료제출 거부로 2013년 감사원이 고발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사장	허리우드 사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 (2심까지 기자회·노동조합 승소, 회사가 상고)
이진숙	기획홍보 본부장	보도본부장	정수장학회 최필립 회동 당사자
김철진	시사국장	편성제작본부장	PD수첩 팀장시절 몰래 PD 책상서랍 열었던 인물
문철호	보도국장	MBC경남 사장	박성호 前 기자회장 앵커 보직해임 당시 국장
김장겸	정치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에서 보도국장으로 수직상승
박승진	정치부 차장	정치부장	정지부 차장에서 정치부장으로 수직상승

24) 회사가 밝힌 인사위원회 부의 사유 :

2014.5.7(수) <뉴스데스크> 방송용 데스크 리포트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가 방송되기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원고를 타국실로 유도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함.

근거 : 취업규칙 제3조, 제5조, 제66조 등

25) [전문4] 5월 12일 MBC기자회 성명 전문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지난주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취재를 진두지휘해온 전국부장이 직접 기사를 썼고, 보도국장이 최종 판단해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경청장을 압박'하고'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을 했다면서,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민 조급증'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왜 중국인들처럼 '애국적 구호'를 외치지 않는지, 또 일본인처럼 슬픔을 '속마음 깊이 감추'지 않는지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무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훈계하면서 조급한 비애국적 세력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보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보도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저희 MBC 기자들에게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머리 숙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경의 초동 대처와 수색, 그리고 재난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시스템 등 정부 책임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 MBC는 그 어느 방송보다 소홀했습니다. 정몽준 의원 아들의 '막

말'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 실종자 가족들을 향한 가학 행위도 유독 MBC 뉴스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찾아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빠짐없이 충실하게 보도한 반면, 현장 상황은 누락하거나 왜곡했습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축소됐고, 권력은 감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됐습니다.
더구나 MBC는 이번 참사에서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결과,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는가 하면, '구조인력 7백 명' '함정 239척' '최대 투입' 등 실제 수색 상황과는 동떨어진 보도를 습관처럼 이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국민들에겐 큰 혼란과 불신을 안겨줬으며, 긴급한 구조상황에서 혼선을 일으키는데도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이점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해직과 정직, 업무 배제와 같은 폭압적 상황 속에서 MBC 뉴스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신성시하는 저널리즘의 기본부터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재난 보도의 준칙도 마련해 다시 이런 '보도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가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맞설 것이며,무엇보다 기자 정신과 양심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MBC 기자회 소속 30기 이하 기자 121명 일동

26) [전문5] 기자회 성명 등 관련, 오정환 취재센터장이 6월2일 회사 게시판에 올린 글

<MBC 세월호 참사 취재 이렇게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편집회의가 끝난 직후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급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의 지시로 우선 김00 편집2센터장이 특별방송을 준비하고, 편집1센터장인 저는 현지 취재 인력 파견에 착수했습니다. '구조 착수' '전원 구조' '단원고 학생 모두 무사' 등 오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김00 사회2부장과 노00 시경캡이 취재팀 5팀을 징발해 진도로 급파했고, 이런 빠른 판단이 초기 현장 취재와 방송에 결정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한때 '전원구조'의 오보로 들떴던 희망은 이내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중략) 모든 기자들의 분투를 통해 MBC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방지책을 찾는' 언론의 기본 소임을 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 접촉을 꺼려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분들의 아픈 사연들을 찾아 전달하려 애를 썼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이 이중으로 겪는 소외의 고통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의 노고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당국의 안전 관리 부실과 구할 수 있는 생명마저 놓쳤던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부만 비판하면 사실 여부는 상관없다는 자세도 지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경의 다이빙벨과 민간 잠수사 투입 방해 등 불확실한 주장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전 확인을 통해 오보를 막았습니다. 다수의 언론사들에 해당되는 사항도 MBC가 포함돼 있다면 MBC만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어떻게든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의 초상권 보호에 주의했습니다.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관계자들까지도 최대한 늦게까지 익명 보도를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여러 차례 호소가 있었듯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지양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후략)

<MBC 보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상략)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은 국민의 아픔과 분노를 악용하고 심지어 유족의 상처를 덧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며 제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보여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MBC 역시 그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 목표가 되어 비틀거릴 만큼 상처투성이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뉴스도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며, 개선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MBC에 가해진 파상 공격을 보면 올바른 뉴스를 위한 제언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 체제를 무너뜨려 MBC를 장악하겠다는 욕심이 번득거리는 것 같아 극히 우려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MBC를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수 언론사의 문제를 마치 MBC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MBC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이 또한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소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MBC 체제를 이른바 진보진영이 장악하도록 하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우려하고 요청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중략)

4.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자세를 돌아보는 데스크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자원했다 숨진 고 이광욱 잠수사의 희생을 애도하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주로 사내에서 몰아쳤습니다.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보도국 30기 이하 성명」이 발표되더니, 다시 각 기수별 성명이 나오고, 언론노조 MBC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희생자 유족들을 모욕하려는 기사가 아닌데 왜 그리 왜곡된 해석을 강요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른바 '세월호 유족 폄훼 발언' 주장이 불씨가 돼 유족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보도국장이 사실상 해임되고, 다시 그 보도국장이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고, 회사가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KBS의 상황을 그대로 MBC에 옮겨놓으려는 시도가 아닌 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해당 기사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의 한 기수별 성명은 이를 '우리 시청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4월 16일 보험금 보도는 이브닝뉴스의 시청률이 높아서 문제가 됐나요?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사가 '유족을 모욕하지도, 상식에 어긋나지도, 우리 사회를 그릇된 길로 유도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조 MBC 위원장은 사내 시위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자 이른바 사과를 하겠다며 안산의 합동분향소로 찾아가 희생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사내 권력투쟁을 위해, 가뜩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의 상처를 더욱 자극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누가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특정 회사의 노사 분규에 이용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결국 유족들로부터 강한 질책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5월 13일 한겨레가 20여일 전인 4월 25일 MBC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막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KBS가 보도국장의 유족 폄훼 발언 논란으로 혼란에 휩싸였으니 MBC도 같은 구도로 만들면 제작거부나 파업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악의가 느껴지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는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MBC의 법적 대응 방침으로 이 시도 역시 아무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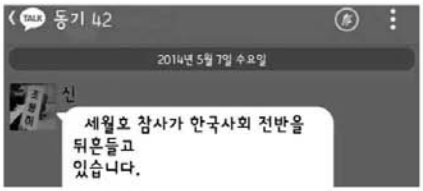
(중략)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아직도 MBC의 세월호 보도를 비판할 때 주요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해당 언론사 가운데 MBC와 KBS만은 집어 현 경영진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6. 4월 16일 사고 당일 목포MBC는 서울MBC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다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지만 이것이 미처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목포MBC의 전언을 급히 확인해 기사로 처리했어야 옳았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 누가 어떤 오류를 범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MBC 전국부 부장은 목포MBC 보도국장과 취재부장이 각각 전화를 걸어와 배 안에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는 어민들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사고가 엄청날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방송에 반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울MBC 전국부 차장도 목포MBC로부터 '현장 어민들 이야기는 다르다'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을 목포MBC 기자들은 오전 11시 이후로 기억하고 있고, 서울MBC 전국부에서도 전화를 받을 당시 모든 방송 모니터에서 '전원구조'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MBC의 오보 지속 시간이 첫 자막이 나온 오전 11시 1분부터 정정보도가 나온 11시 24분까지 약 23분 동안이었는데 그 시간을 줄일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00년 작성 배포된 MBC 재해방송 보도 준칙에는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의 발표는 공식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의심하고 다른 내용을 보도하기에는 당시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보도 준칙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MBC가 목포MBC의 보고를 묵살해 구조 활동을 지연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은 배의 침몰 시간과 현장 구조인력 배치 상황 등을 볼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목포MBC 취재부장과 서울MBC 전국부는 협조와 갈등이 여러 차례 교차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MBC 취재부장의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나 인정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4월 22일 '복지부 공무원 구급차 퇴근 물의' 리포트는 저희 서울MBC 판단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날 목포MBC는 공무원들이 펜션에서 묵은 게 더 큰 일이라며 이를 주제로 하겠다고 주장했고, 저희들은 구급차 퇴근을 주제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다 결국 목포MBC에서 현장 취재한 화면 제공을 거부해 자료화면만 가지고 서울에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펜션이란 대학생들이 MT를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 제 생각 이상의 고급 시설이었다 해도 공무원들이 그곳을 비우고 팽목항의 숙박시설 확보 경쟁에 합류하는 게 옳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오랜 노사분규의 결과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끝없는 공격대상이 되어버린 MBC의 현주소를

고려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보도를 살얼음을 걷듯 주의에 주의를 더하며 진행해왔습니다. 사건 초기의 혼란 이후에는, 속보 경쟁에 뒤지더라도 사실 확인에 더욱 힘을 기울이려 노력했고 시청률이 뒤질지언정 자극적인 소재들을 뉴스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언론 중재 신청이 MBC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작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사려의 부족으로 저질러지는 실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고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며 맞설 것입니다.

27) [사진 11] 박상후 부장이 6월5일 회사 게시판에 올린 카카오톡 '캡쳐 화면' 일부. 박 부장은 이 '캡쳐 화면'을 어떤 경로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사내 구성원들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28) [표11] 박상후 전국 부장이 지난 3월 이후 회사 게시판에 올린 글의 목록

날짜	내용
3월 28일	민실위 보고서가 도대체 무엇인가? (3.27자 민실위보고서 반박)
3월 28일	민실위 MR MIN? (민실위 활동 비난)
3월 29일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간 베스트' 게시물 퍼온 글. 노조위원장·박석운 사진)
5월 11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5.8자 민실위보고서 비난)
5월 11일	MBC기자는 절대 안쓰는 기사 (5.11자 데일리안 기사 전제)
5월 11일	워낙 명문이라 올려봅니다. mbc 기자도 이런 기사를 써야 (포브스지 기사 전제)
5월 11일	궁금하여 여쭙니다. (노조위원장·박석운 사진)
5월 11일	기자회를 탈퇴합니다. (내용 없음)
5월 27일	'ㄴ'부장이 히죽 히죽 (한겨레 21 기사관련 비난)
5월 27일	이제라도 사죄해야 (MBC기자회에 대해, "비루하게 살지 말고 JTBC로 가라")
6월 3일	버르장머리를 뜯어교쳐야 (이후 '부장기사를 인민재판?'으로 제목수정, '카톡징계' 관련)
6월 4일	안 두들겨 맞아 피눈물나요 (카톡내용 비난)
6월 5일	신00기자의 언론자유를 공개합니다 (카톡내용 캡처 공개)
6월 6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후 '협박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로 수정)

29) 사원 중 한 명이 "사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박상후 부장은 다시 <협박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원하든 원치않든 사적 공간의 대화도 난도질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정몽준 후보의 19살 아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로 미성년이지만 난도질당했습니다."라고 밝혔다.

30) 사유 : 2014.5.17(토)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게시한 글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및 MBC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
근거 : 취업규칙 제 3조, 제4조, 제 66조, MBC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나.공정성, 마.품격 유지 등

31) [전문 6] 권00 PD가 '오늘의 유머'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 (전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방문횟수가 엄청 낮습니다. 가입한 이후에 줄곧 눈팅만 해와서 그렇습니다.대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00이고, 예능PD입니다.

오늘의 유머는 제가 학부 졸업학기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수업에서 '온라인 공론장'의 연구주제로 삼았을 만큼 관심 있게 봐온 사이트입니다. 연구의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온라인 상의 공론장은 공론장 자체를 목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유희적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꾸준한 상호작용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충실한 공론장으로 기능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온라인의 주요 기능인 유희적 문화 대부분은 오유를 비롯한 유머 커뮤니티들에서 1차로 생성된 후 온라인 공간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흐름을 타고 공공 이슈에 대한 여러 의견들도 함께 확산된다는 사실도 수치상으로 확인했습니다.사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불과 3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워낙 곳곳에서 오유발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오유를 즐겨보는 편인데, 최근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조심스레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저는 신방과 출신이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살았으면서도, MBC만큼은 꽤 좋아했습니다. 시사부터 예능까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다루어내는 솜씨를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 MBC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미 그 때도 슬슬 엠병신의 모습이 한창 엿보일 때였지만, 머잖은 미래에 다시 마봉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바닥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안가는 모습으로 추락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입사동기들은 한동안 회사에서 '파업둥이'로 불렸습니다.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를 기다리는 동안 파업이 시작됐고, 파업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이 입사일이었으니까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수습기간 동안 빈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동안 회사 밖에서 만난 선배들은 어차피 수습 3개월이 끝나기 전에 파업도 끝날테니 염려 말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업은 거짓말처럼 7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수습기간 동안 이런저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수습해제 후 파업에 동참하려고 하면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무게는 달랐지만, 저희들도 수습이 해제되자마자 바로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믿기지 않지만, 마봉춘은 엠병신과 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나마 학생신분과 별다를 바 없었던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는 7개월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훨씬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에 마땅한 알바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꾸준히 이어지는 서명운동과 집회에 사실 구한다고 해도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대리운전을 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도 업무로 복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그들의 독무대가 되었습니다.그래도 당시에 거리에 나가면 응원해주시고, 서명에 참여해주시는 수많은 시민분들 덕분에, 힘이 나고 때론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졌습니다.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결국 방문진에 의해 좌우되는 사장인사의 문제는 정치 역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을 노예삼지 않을 정권이 들어서는 것

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다른 활로가 없었고, 대선의 결과는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제의 경영진 대부분이 유지된 채, 얼굴마담일 뿐이었던 김재철 사장은 전혀 다를 바 없는 다른 허수아비로 바뀌었습니다.그 사이 사측은 '시용직'이라는 전무한 고용형태로 대체인력을 대거 뽑았고, 눈에 거슬리는 이들은 차례차례 해고해나갔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도, 사측의 직원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들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보란 듯이, 이미 두 차례나 중복징계한 바 있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또 다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이들은 모든 비판으로부터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화자찬하기에 바쁩니다.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습니다. (다음은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전문이 실린 기사 링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7114505927)

어째서 맞서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변명처럼 보이고, MBC 밖의 분들에게나, 안의 분들에게나 그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경솔한 발언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지금 MBC는 노조가 세 개가 되었습니다. 2012년의 파업까지를 주도했던 원래의 MBC 노동조합(편의상 제1노조라고 부르겠습니다)이 하나이고, 이 노조의 활동 대부분을 편향적이라 공격하던 기자출신 직원 이상로 씨가 만든 노조가 두 번째(제2노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파업 이후, 파업 복귀 세력과 시용직들이 중심으로 새롭게 만든 노조(제3노조라고 하겠습니다)가 세 번째입니다. 제2노조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고, 따라서 현재의 MBC는 크게 제1노조와 제3노조의 두 세력으로 양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경영진은 노골적으로 제3노조에 소속된 인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고, 제3노조 세력들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에 사측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용기자세력은, 파업 인원들이 전원 복귀하여 제작 인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력직 채용 등의 형태로 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1노조 소속으로 활동하던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서 조정 등으로 취재부서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남아도는 제3노조 세력의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엠병신의 뉴스입니다.(몇가지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시용기자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30619164518875

MBC 파업 정당 판결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8030226753

가장 최근 시행된 MBC 경력기자 채용 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29104809475

김재철을 변호하던 변호사를 법무부장으로 채용한 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29210507145)

가장 앞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던 분들이 본보기로 해고되어, 회사 바깥에서 대안언론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 저도 늘 알리고, 후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MBC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그들과 함께 많은 것을 각오하며 싸웠고, 졌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실 예능국 소속인 저는, 보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예능국은 아직까지는 은근슬쩍 시사적인 풍자도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슬쩍 넣는 풍자는 처연한 자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능국에 있기에, 보도국의 기자들 스스로는 차마 하지 못하고 있는 말들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복종 실험,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BC에서는 아주 사소한 반발로도 취재 업무를 빼앗깁니다.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떤 기사든 써낼 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개인의 반발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까지 떨쳐내고 분연히 일어난 영웅들께는 박수를 보냄이 마땅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노조가 존재합니다. 질 수 밖에 없는 개인들의 싸움을, 해 볼만 한 덩치끼리의 싸움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파업 때 할 수 있는 싸움을 다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회사 구성원은 상당수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함께 싸움에 참여했던 지난번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싸움을 다시 시작하면,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너무나도 손쉽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원을 교체할 것입니다. 대놓고 MBC를 영원히 넘겨주는 꼴이 될 뿐입니다.

그럼 MBC는 그냥 영원히 엠병신으로 망하게 놔두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새로운 언론을 형성하면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참은 쉬이 망하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쇠퇴하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토록 열심히 손에 쥐려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활약하는 대안언론들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안언론을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장악된 지상파 언론에도 쉽게 속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별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MBC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 뜻을 모아 새로운 언론을 만든다 한들, 지상파 전파를 타는 것은 여전히 MBC입니다. 아니, 그때의 MBC는 더욱 노골적이겠지요. TV조선을 지상파에 안착시켜주는 모양이 될 겁니다. 지상파 사업자의 허가는 엄격합니다. 새롭게 만든 대안언론이 지상파를 타고 송출되기란 요원할뿐더러, 그런 허가가 날만한 정부라면 MBC도 얼마든지 마봉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온, 원래의 마봉춘을 자랑스러워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독을 차고 있습니다. 혹은, 노조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치욕을 삼키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력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거부할 수 없다면, 리포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바꿔가며 그래도 차라리 차악의 형태로 바꾸어 방송에 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뉴스, 내가 안하면 더 최악의 형태로 읽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세월호 관련 보도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당사자들은 못합니다.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나간 뉴스이니까요. 묵묵히 기레기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엠병신을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욕해주세요. 더 먹어야 합니다. 사실 욕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 이미 안 보시겠지만,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보지 말라고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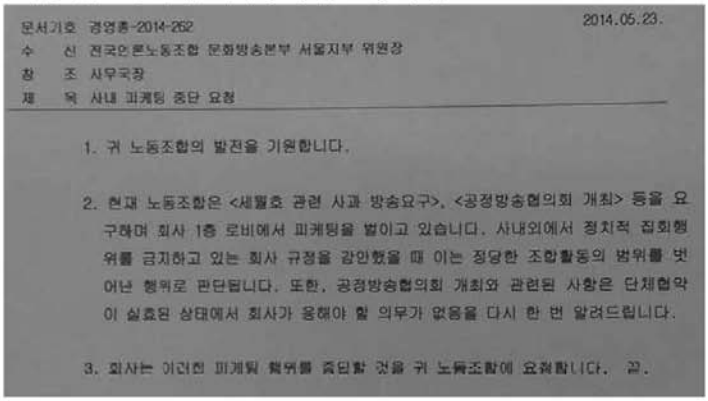
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는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최근 KBS와 MBC의 보도국장들과 관련하여, 노조와 기자협회 등에서 성명서를 내고 발언을 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차가운 반응들을 봅니다. 실망하고 분노하신 마음들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들은 물타기도 아니고 여론전 환용도 아닙니다. 그 속의 사정은 이랬고, 이런 싸움들이 이어져왔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박근혜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박근혜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수치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싸워 비록 대통령이 박근혜라 한들 그 정부에게라도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엠병신의 직원들이라고 해서 모두 엠병신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기다리고 있고, 그 승패는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부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2) [노동조합 성명] '세월호 유가족 폄훼 보도'장본인, 반성은커녕 망언 일관
http://mbcunion.or.kr/bbs/board.php?bo_table=tb03&wr_id=228

33) [기자협회보] 반성은커녕 MBC 또 부당인사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4

34)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5712

35) [사진 12] 사내 피케팅 중단 요청 공문



문서기호 경영총-2014-252 2014.05.23.
수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 위원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사내 피케팅 중단 요청

1. 귀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노동조합은 <세월호 관련 사과 방송요구>,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회사 1층 로비에서 피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외에서 정치적 집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회사 규정을 감안했을 때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3. 회사는 이러한 피케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귀 노동조합에 요청합니다. 끝.

36) MBC에서는 '카톡방'에서의 비공개 대화가 중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문진 여당추천 차기환 이사는 '공개 트위터'를 통해 '일간베스트'의 글을 전파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MBC방문진 이사, 박원순 비방 '일베' 글 퍼날랐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51

37) http://www.law.go.kr/법령/방송문화진흥회법

VI. 별첨 자료

[별첨 1] 박상후 전국부장 게시글

[별첨 2] 오정환 취재센터장/편집1센터장 게시글

[별첨 3] 지상파 3사 메인뉴스 아이템 비교

백서(언론) [별첨1]박상후 부장 인트라넷 게시판 글 내용

[별첨1]

박상후 부장 글 (1) 2014년3월28일 15시33분

민실위 보고서에 대한 전국부장의 견해
"뉴스데스크에서 닷새간 운석관련 리포트를 9꼭지 보도한 반면 sbs는 2꼭지, kbs는 없었다" 라고 했는데 어떤 꼭지를 몇 개 할지는 편집회의에서 정합니다. 물론 담당부장의 견해도 많이 반영되고요. 그런데 민실위가 타사는 몇꼭지 했는데 우리는 왜 몇꼭지를 했느냐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방이후 처음 있는 운석낙하여서 충분히 국민적 관심사이고 호기심도 높았습니다. 그럼 관심사는 괜찮치만 호기심이란 단어에는 시비를 걸겠지요. 호기심이 높아 보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호기심이 나쁜겁니까?

편집부가 왜 있고 편집회의가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템 때문에 "스트레이트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 했는데 이 아이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아이템이 빠졌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딧불 오징어도 봅시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일본 특별천연기념물인 '반딧불오징어'

2~3년전부터 몰려…일 수출 모색
일본의 특별천연기념물인 '반딧불오징어'가 최근 울릉도에서 무더기로 잡히고 있다.
경북 울릉군은 13일 "2~3년 전부터 울릉도 서북쪽 바다에 반딧불오징어가 몰려들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잡힌다"고 밝혔다.
반딧불오징어는 꼴뚜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밤이면 온몸에서 푸른빛을 내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192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가 1952년 특별천연기념물로 승격해 관리하고 있다. 반딧불오징어 박물관·축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다가 몇년 전부터 울릉도 해안으로 몰려들자 어민들은 바가지 등으로 한꺼번에 수백마리씩 잡아올리고 있다. 울릉도 어민들은 내장을 빼지 않은 채 통째로 반딧불오징어를 요리해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귀한 대접을 받는 일본에 반딧불오징어를 수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김경학 울릉군 해양수산과장은 "반딧불오징어를 말리거나 삶아서 진공 포장한 뒤 오는 7월 울릉도에서 열리는 오징어축제 때 선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시설이 아직 없고,

참고자료 7-2

홍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계획을 확정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역시 한겨레도 천연기념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딧불 오징어 자체보다는 오징어가 노니는 '군유해면'을 천연기념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도에서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이라 먹지도 않는 것을 한국에서는 라면에 넣는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코믹할수도 있습니다. 뉴스가 항상 시어리어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코믹하게 들리는 게 그렇게 비난할 사안인 지 묻고 싶습니다.

또 왜 민실위 보고서에서 우리뉴스를 씹으면 그것이 그대로 미디어 오(?)에 전재돼 회사를 비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보도를 한겨레에서 할 경우 미디어 오(?)에서 씹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실위가 미디어 오(?)의 뉴스 공급원입니까? 도대체 민실위 멤버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회사입니까? 야당입니까? 미디어 오(?)입니까? 다소 거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본분이 뭔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울릉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제발 그 열정으로 취재라도 제대로 하면서 동료 선배들을 비난하시길 바랍니다.

박상후 부장 글 (2) 2014년3월28일 20시47분

저는 바로 아래글을 실명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합니다. 회사 조직도에도 없는 민실위가 어떤 사조직인지? 그리고 동료선배의 기사를 비방할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작성했으며 민실위원들이 누구고 각부서에 누가 민실위 멤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전국부를 비방한 당사자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기자라면 민 실위라는 크레딧 말고 실명 크레딧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에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성이 민씨고 이름이 실위인지요?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3) 2014년3월29일 11시38분

민실위 보고서를 보니 결국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발행하는 것이었군요
그러면 다음의 상관관계도 밝혀주십시오.

"민실위원들은 <MBC 프로그램/선거방송 관련 준칙>과 맞지 않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준칙을 보면 "정치 문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래 사진이나 강령을 시청자가 보면 언론노조는 특정정파나 정당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는 공평한 언론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따로 해석하거나 코멘트하지는 않겠습니다.

[경향포토]발언하는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경향신문 기사입력 2014-02-24 12:21 최종수정 2014-02-24 13:49 기사원문 0



다음은 진보연대 강령입니다.

1.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정책에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1)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외국과 체결된 모든 불평등 조약이나 협정을 폐기 혹은 전면 개정하여 국가주권을 확립한다.

2) 무분별한 개방정책에 반대하며, 경제주권과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관련협정과 법, 제도를 파기 혹은 전면 개정하고 초국적 독점자본을 규제하여 경제주권과 식량주권을 확립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폐지, 유엔사의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환수, 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의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 시킨다.

4)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퇴폐 향락적이며 상업주의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제국주의문화를 배격하고 건전한 민중문화,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

5)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따른 사죄와 배상,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 등 국제관계에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

2.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3.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 민중의 생존권 및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4. 민중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5. 반민주적 제도와 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들을 확대하는 등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6.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7.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8. 모든 환경파괴정책에 반대하며, 자연친화적인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9.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클릭]

10.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클릭]

北지령 받아 반미투쟁 진보연대 대표 기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8-17 10:13 | 최종수정 2010-08-17 10:36



CH, 한상렬 목사, '아리랑' 공연 관람한상렬 목사, '아리랑' 공연 관람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허가없이 방북중인 한상렬 목사가 11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 했다. 2010. 8. 13. <<조선신보>>

한국진보연대

이름	오종렬(70)	한상렬(58)	박석운(53)
			
현 직책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주요 경력	-고교 교사,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광역시 의원 -전국연합 의장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007년 한·미 FTA 반대	-목사 -전북대 총학생회장 -통일연대 상임대표 -효순·미선 사건 범대위 공동대표 -한·미 FTA 반대 집회로 기소돼 1심 진행 중	-서울대 법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2007년 한·미 FTA 반대 집회로 징역 1년6월에 집

박상후 부장 글(4) 2014년5월11일 15시24분

1) 지난 4월 25일 리포트입니다. 이주영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감금됐다는 리포트를 제가 주문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밤사이 이 장관과 해경청장이 10여시간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수모를 당하다 풀려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지 출장팀에게 물론 이런 사태를 있는대로 리포트 하는게 어떠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분위기가 험악하니 표현을 완화해달라는 현지팀 차장급 기자가 얘기하길래 흔쾌히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리포트가 데스크에 나갔습니다.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도 없으며 누가 반발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취재팀이 봉변당할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밤사이 실종자가족들이 장관에게 항의하는가하면 해경청 차장의 뺨을 때리고 사고대책본부 관계자의 무전기까지 빼앗아 " 나 청장인데 너히들 모두 물속에 들어가 "라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고 온갖 욕을 퍼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하기가 녹녹친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후배들이 이런 사실을 가감없이 전달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드업 부분을 가만 들여다 보면 진실이 어땠었는지를 눈치 빠른 사람은 짐직할수 있습니다.

◀ANC▶
어제 팽목항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렀습니다.

밤사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결국
구조당국의 설득으로 새벽부터는
누그러들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마지막 구조기회라는 '소조기'가 끝나가던
어제 저녁 5시.

생존자 소식은 없이 시신만 잇따라 발견되자
실종자 가족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팽목항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던
이 장관을 실종자 가족들이 끌어냈고
이를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가족 대책반 천막으로 이동했고 학생 부모들과 함께 맨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구조 인원이 너무 적고,
진행도 더디다"는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조 작업중인 민간업체가 세월호선사와 계약한 사실이 전달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해경을 믿지 못하겠다"며
민간업체의 잠수부 이송장치 '다이빙벨'의
투입을 요청했고, 이 장관 등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새벽 2시 쯤에는 구조 작업 지휘를 위해
해경청장은 돌려보내자는 장관의 제의로
김 청장은 사고대책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가족들에게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팽목항 가족 천막을 떠났습니다.

(S-U) 이주영 장관은 가족들에게 강제로
붙잡힌 것이였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았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2)또 다이빙 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야후 저팬의 “19세기에 발명돼 20세기에 쓰지 않는 것을 21세기에 쓴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한국인이 무섭다“는 부분은 직접 인용입니다.
야후 저팬에서 잠수종을 찾아보면 6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리로 된 다이빙벨을 이용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벨이 진화돼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인의 다이빙 벨은 위의 인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만든거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죠. 감압장치도 없고 노란색의 정화조 반 자른것과 같은 조악한 형태에다 안에는 청테이프를 덕지 덕지 바른 것도 보이고요. 다이빙벨의 초기형입니다. 해군에서도 구난함인 청해진함에 최신예의 다이빙 벨(감압장치도 있는)이 탑재돼 있는데 맹골수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 투입하지 않은건데 어느날 이종인이 모 종편에 출연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이 만능인 것처럼 실종자가족들을 현혹시켜 결과적으로 구조에 방해만 된 겁니다.

다이빙벨도 위 리포트에서 보시듯 그 날밤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구조 인원이 너무 적고, 진행도 더디다"는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라고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어린 목숨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수사 이광욱씨도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실종자 가족들이 이 잠수사를 조문했다는 보도는 아쉽게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에 앞서 단원고 교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감이 목숨을 끊기 전날 단원고 교사들은 학부모 앞에 꿇어 앉은 채 왜 너희들은 무슨 낯으로 살아 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교감의 자살과 이 상황을 어떻게 직접 연관시키냐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리포트가 나간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 보도가 팩트위주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거겠지요.

박상후 부장 글(5) 2014년5월11일 15시55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켜보던 시민들은 물론 집회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도심에서의 첫 집회에 이어 10일 오후에도 청계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오후 5시부터 경찰 추산 약 2000여명(주최측 추산 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도교 등 5대 종단 평신도 관계자들의 시국기도회로 시작해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맨처음 순서로 무대에 오른 원불교의 박현공 교무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선일 알카에다 납치피살사건때 "우리 국민 한 사람도 못지킨 노무현 대통령 자격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국민 보호 못하면 국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 못지킨 박 대통령은 자격없고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청와대서 방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독교의 김동한 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다. 하느님이 너희는 왜 잠만 자느냐고 꾸짖는다. 왜 아무런 이유없이 당하고만 있느냐고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대종단 평신도 시국기도회가 끝난뒤 세월호참사시민촛불원탁회의와 국정원시국회의가 주최하는 2, 3부 순서까지도 별 문제없이 진행됐다.

7시 45분께 40대 남성 2명이 폴리스라인을 치우라고 경찰에 거세게 항의, 주최측이 평화롭게 진행하자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그때까지의 유일한 소동.

문제는 그후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했다. 8시 47분께 집회참가자들이 중앙극장과 백병원 사이의 도로를 지날 때 중앙차로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씨(70)가 버스가 안온다고 불평을 하자 시위대안에서 20여명이 달려들었고 그중 한명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등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시위대를 따라 행진하던 경찰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으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나서서 말리면서 큰 불상사는 면하게 됐다. 이를 지켜보던 현수막을 든 한 여고생은 "이러니까 욕을 먹는다"며 "제발 평화롭게 시위하자"고 고함을 질렀다.

현장을 지켜본 30대 주부는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시내 나왔다가 폭행 현장을 보게 됐다"며 "할아버지가 '집에 좀 가자'고 말하자 행진하던 사람들이 '너도 자식 있나'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참고자료 7-2

또 피해자 옆에서 폭행을 말리던 조모씨(65)는 "2시간째 버스가 오지 않자 연세드신 분이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려서 때리는데 경찰은 가만있고 이래선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회고 행진이냐"고 분개했다.

국정원시국회의 실무팀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대해 "일단 시민분들께 평화적으로 행진하자고 호소 드리는 정도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분들 간혹 있더라도 주변에서 시민분들께서 말려주시고 스스로 다독이는 분들 많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후 부장 글 (6) 2014년5월11일 16시43분

본문내용)
제목 : 워낙 명문이라 올려봅니다. mbc 기자도 이런 기사를 써야
포브스지가 세월호를 바라본 기사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특정 정치성향의 재외교포)이 쓰는 외신보다는 이런 외신을 참조해도 좋을듯 합니다

첨부물)
Andrew SalmonContributor

Follow

I am a Seoul-based reporter covering the Koreas. full bio →

Opinions expressed by Forbes Contributors are their own.
Hundreds Missing After Passenger Ferry Sinks Off South Korean Coast
Andrew SalmonContributor

Forbes Asia4/17/2014 @ 1:15PM28,452 views

Ferry Disaster Shows Korean Leadership At Its Best And Worst

SEOUL - The maritime tragedy unfolding off the south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s displaying two sides of modern South Korea: A fast-moving, accountable and responsive government, assisted by selfless citizens - contrasted with an opaque, undutiful and craven corporate.

Korea achieved hard-fought for political democracy in 1987. In the years since, the public sector, from the presidency on downward, has become increasingly accountable and responsive to public requirements and demands.

The corporate sector, however - the locomotive that originally enriched this "zero-to-hero" nation, and which has spawned some world-beating companies - is a bastion of reform resistance. Senior business figures are opaque and unaccountable to shareholders; they have customarily been above the law. Not for nothing was "economic democracy" a key battleground in the country's 2012 election.

South Korean Coast Guard officers search for missing passengers aboard a sunken ferry in the waters off the southern coast near Jindo, South Korea on Thursday, April 17, 2014. (AP Photo/Ahn Young-joon)

Currently, the public and media are venting at their government as it strives to respond to the Sewol ferry tragedy. There are some grounds for fury. Seoul stumbled badly in the first hours of the crisis, releasing misleading figures that vastly inflated the number of those rescued, raising hopes that were to be cruelly dashed.

But if crisis communications were poorly handled, on the action front, things proceeded more surely. Seoul has a large and capable military and it swiftly deployed naval and coast guard vessels and helicopters to the scene.

Dramatic and inspirational footage showed coast guard boats and volunteer fishermen conning small vessels right up against the hull of the foundering ferry to get people off, and coast guards actually clambering aboard the sinking ship to save lives - a risky business for the rescuers. Helicopters were seen hovering low over the wreck, plucking people to safety.

Several hundred divers are on-site. Some are elite naval commandos and underwater salvage specialists. Others are civilian volunteers. Theirs is a perilous task: Diving through swift currents into the cold, dark, murky waters of the Yellow Sea to rescue children who just may be trapped in air pockets inside the sunken ship - a vast underwater labyrinth.

While these operations proceeded,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was dispatched to the scene. He was greeted by furious family members with abuse and a barrage of thrown water bottles. Ever-greater rescue efforts were demanded.

President Park Geun-hye reportedly did not sleep on Wednesday night. On Thursday, she unexpectedly appeared at the disaster site, assessing the situation and urging rescue workers to increase their efforts.

Then - heedless of the rough handling her prime minister had received - Park spoke before gathered family members. Some asked questions; others screamed at her. This was a no-win situation for the president, but her actions demonstrated responsibility, dedication and moral courage.

This is leadership.

Alas, the leadership displayed by Park - and the courage displayed by the servicemen and volunteers diving under the Yellow Sea - stand in stark contrast to the behavior shown by the owner of the vessel, the captain of the vessel and

the crew of the vessel.

According to Korean media reports, the president of Cheonghaejin Marine, the company that owns the Sewol, was en route to the scene when he collapsed "with shock" and was taken to an (undisclosed) hospital.

Perhaps he is, indeed, ill. Or perhaps he is evading responsibility, as some local media suggest. Korea watchers will be familiar with the expression "wheel-chairmen" - a derisory term for those corporate chairmen who roll up for their latest court appearance dressed in hospital pajamas, in wheelchairs or even lying on gurneys, in order to generate sympathy.

The behavior of the Sewol's captain, Lee Joon-seok, appears even less dutiful
A crewman who spoke to the Associated Press said that after the initial (still unexplained) incident, Lee spent 30 minutes trying to right his listing ship. When these efforts failed, he agreed with a crewman that it was time to abandon ship - but did not check whether that order was passed down to passengers. Separately, Coast Guard officials told Korean media that Lee left his ship 32 minutes after the initial incident.

If these reports are accurate, they indicate that Lee departed his dying command within two minutes of making that decision.
In the 21st century, nobody expects a captain to go down with his ship. But being among the first to leave - without first ensuring the safety of the passengers who are a captain's most critical responsibility - is shabby behavior.

Lee was photographed in a police station, cowering with his head under a hoodie. He has not appeared before victims' families, but mumbled an apology and said he is speechless. He may face criminal negligence charges.

And what about those orders given out over the ship's public address system, urging passengers to remain where they were, below decks and in cabins? In a marine disaster, it is critical to get topside or to an open deck. From there, persons can board a raft, be picked up or - worst case - go into the water. To remain on closed or lower decks invites being trapped underwater as a vessel goes down.

Why were these orders broadcast? What kind of thinking - what safety procedures? - underlay them?

If we turn to the New York Times we meet the ship's communications officer.

Kang Hae-seong, 32, said that it was he who made the decision to tell people to remain where they were to prevent panic. "I didn't have time to look at the manual for evacuation," he told the NYT. Clearly, the situation Kang found himself in was highly stressful - but it was not momentary. It persisted, he said, for one hour.

Kang survived, as did most of the Sewol's crew, according to local media. Most passengers remain missing.

The only crew member so far to emerge from the incident with an aura of nobility is a 22-year-old colleague of Kang named Park Ji-young, who reportedly took her job to assist her poor family. The PA system had been broadcasting dangerously misleading orders, but Park, according to survivors, took resolute action: She stood in chest-deep water, distributing life jackets and shoving passengers toward exits, telling them that she would leave only after they had escaped.
Park's actions proved sacrificial. Her body was among the first recovered.

At present, Koreans are - as is their wont, for they are a people who prize "passion" - showering abuse upon authorities. This is their hard-won right, and derision toward leaders is a quixotic feature of many democracies.

But in days to come, it might be more just if they refocused some of their ire away from those attempting to ameliorate the situation and towards those whose inefficiencies, ill-judged procedures and absence of duty for those in their care exacerbated a horrific tragedy.

Speaking more broadly, perhaps Koreans will, subsequently, reflect that while democracy - with its attendant values of responsive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is now deeply embedded in their political life, similar virtues are not yet represented in their corporate sector.

박상후 부장 글 (7) 2014년5월11일 19시13분

첨부물)
제목 : 이 두 사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아래 사진에 등장한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정말 궁금해서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참고자료 7-2

[경향포토]발언하는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경향신문 기사입력 2014-02-24 12:21 최종수정 2014-02-24 13:49 기사원문 0



박상후 부장 글 (8) 2014년5월11일 19시31분

제목 : 기자회를 탈퇴합니다.
내용 : 없음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9) 2014년5월27일 15시44분

제목 : ㄴ부장이 히죽 히죽 (수정)

다음은 한겨레 21에 mbc 기자가 기고했다는 글입니다.

"제작 거부 안 해? KBS도 한다던데 당신들은 파업 안 해? 왜 가만있어?" ㄱ부장이 히죽히죽 웃는다. 그는 지금 MBC 수뇌부의 일원이다. 무시하고 돌아서는데 그가 재차 물었다. "이럴 거면서 2012년 170일 동안 파업은 왜 했어? 그때 당신들 구호대로라면 지금도 '다 물러나라'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 아니야?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시나?" 비아냥거림은 계속됐다. "공정방송 외치는 훌륭한 기자님들이 왜? 뭐가 두려우신가? 아하, 단체행동 하면 죄다 외곽으로 쫓아내고 경력사원 뽑아 채워넣을까봐? 그거 알면 쥐 죽은 듯 계셔야지."

ㄱ부장의 말은 비아냥거림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웠다. 파업 기간에 대체 인력으로 뽑은 '시용기자들'(※김재철 사장이 파업 참가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 조건을 내걸고 채용)과 파업 직후 선발한 '경력기자' 대다수가, 'MBC의 현재 안보'를 지켜주는 큰 축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취재하고 방송 잘하던 기자들은 하나둘 계속 쫓겨났다.

여기에 등장하는 ㄱ부장이 누구죠 ?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보도국의 어느 부장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런 말을 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꿈에서 가위눌린 장면을 토대로 보도국의 어느 기자분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안되는 글을 한겨레 21에 기고하신 분은 제 후배일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는 팩트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상속의 날조글을 바로 또 pd 저널이란데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ㄱ부장이 k 부장으로 바뀌고 이를 사실로 단정해 무릎꿇은 포로를 점령군이 묘욕하는 악몽같은 풍경이라고 비약까지 합니다. 아래 글의 저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술김에 포크레인에 돌을 던져 입건됐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분이 "인문학"을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참으로 "인문학의 위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 MBC 간부 입에서도 나왔다. "제작 거부 안 해? KBS도 한다던데 당신들은 파업 안 해? 왜 가만있어?" 부장이 히죽히죽 웃는다. 무시하고 돌아서는데 재차 비아냥거린다. "이럴 거면서 170일 동안 파업은 왜 했어? 그때 당신들 구호대로라면 지금 '다 물러나라'며 뛰쳐나가야 하는 것 아니야? 왜 가만히 계시나?" (한겨레21, 5월 24일자)

무릎 꿇은 포로를 점령군 졸개들이 모욕하는, 악몽 같은 풍경이다. 선배가 후배에게, 기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바로 아래 첫줄은 제 기사를 출고도 되기전에 카카오톡 채팅방에 노출시킨뒤 인신공격을 자행하다 징계위에 회부된 분들 얘기인데, 별거 아닌데 탄압을 받는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징계와는 별도로 저는 이분들을 민형사로 모실 예정입니다.

문제의 '유족 모욕·비난 기사'를 입사 동기들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유한 기자는 "기사를 대외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사 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예능 PD가 MBC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며 "MBC 구성원들이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경영진은 "MBC 뉴스를 보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중징계할 방침을 세웠다.

한겨레 21에 기고한 어느 기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MBC 구성원들은 가만히 앉아 저절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개별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백병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철저한 비관 속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이 시작되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희망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또 한 번 변명을 해본다.

개별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백병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ㄱ부장을 내세워 회사를 욕하는 것을 '백병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ㄴ,ㄷ부장을 인용한 외부 기고문도 또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 (10) 2014년5월27일 20시19분

제목 : 이제라도 사죄해야 (수정)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하루빨리 참회해야 한다." "우리만 사죄 안해 피눈물 난다." "이제라도 사죄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보도참사"

참 말의 성찬입니다. "국민의 뜻" "참회" "사죄" "보도참사"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방송'이 어떤 것이고 '국민'이 정확하게 어떤 국민인지 ㄱ부장을 인용해 외부에 기고하는 기자가 외치는 공정방송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왜 선거를 앞두고 참회 사죄를 외치죠? 시청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보를 낸 것을 사죄한다고요 그럼 왜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일엔 아무얘기 없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 kbs 보도국 기자 막내기수들이 반성문을 올린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죄를 하자고 외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또 보도참사라는 전원구조 자막은 누가 냈습니까. 나중에 알고보니 후배기자가 나름대로 특종이라 생각해 수퍼실로 달려가 냈더군요. 그런 열정은 높이 삽니다. 당연히 속보 경쟁에서 언론사로서는 질수 없으니까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어쨌거나 일은 언론노조원들이 저질러놓고 회사더러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사죄를 하라고 떼를 쓰는가 하면 외부단체들까지 불러 사진을 찍고 우리만 사죄를 안해 피눈물이 난다느니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ㄱ부장을 인용해 한겨레 21에 기고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자가 mbc 보도국에 있는 자체가 '보도참사'입니다. 없는 사실을 소설로 써서 유포시키는 찌라시보다도 못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발표만 받아쓴 우리는 기레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현장의 판단을 중시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차가 어린 기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중심을 잡아야 하겠고 후배들이 보기엔 기사를 심하게 뜯어 고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만 받아쓴 것은 누구입니까. 데스크입니까 전국부장입니까? 정부발표는 이런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 현장은 이렇더라 오늘 보도 방향은 마땅히 이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기레기지요. 왜 느닷없이 일터인 회사 욕을 하고 사죄를 하라고 하죠?

언론노조 소속 후배들에게 묻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위해 그리고 회사와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 당신들이 주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특정 정파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

회사를 상대로 백병전을 벌인다고 했는데 왜 회사를 상대로 백병전을 벌이죠. 퇴사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선배인 손석희가 있는 jtbc나 한겨레 오마이 경향 미디어오늘로 가면 되지 비루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박상후 부장 글 (11) 2014년6월3일 10시5분

제목 :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방송기자회 성명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세월호 가족들을 폄훼하는 리포트가 방송되기 직전에 동료들에게 '이런 리포트가 나가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은 기자가 인사위원회 징계에 회부됐고"

세월호 가족들을 폄훼하는 리포트가 방송되기 직전에"라고 했는데 폄훼인지 아닌지는 읽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니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포트가 나가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은 기자"라고 한 부분은 아전인수입니다. 세상에 어느 언론사에서 부장급 기자가 쓴 기사를 출고도 되기 전에 타 부문 동기들을 불러모아 카톡에서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을 해대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패륜입니다. 뉴스 시스템이 보도국 누구나 볼 수 있다 보니 남의 기사 보고 맘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쓴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야지 각 부문의 동기들을 모아 인민재판 하듯 욕설을 해댑니까?

해당 기자는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회사 징계와는 별도로 정직 받은 기자는 물론이고 그 친구들에게도 민 형사 소송을 걸 작정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지 않고는 조직의 기강이 바로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륜을 비호하고 아무 얘기나 절제 없이 마구 떠드는 방종을 언론자유라고 착각하는 기자회도 각성하기 바랍니다.

성명서 안에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직접 보게 되는 방송의 결과물은 물론, 방송이 이뤄지기까지 언론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토론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언론사 안에서 기사를 놓고 벌어지는 선후배간의 논쟁, 특히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토론은 예로부터 건강한 언론사 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으나, 방송이 권력에 장악된 어느 순간부터 이 같은 토론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게 돼 버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자라면 옳은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논쟁하고 토론하면 될 일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고 했으니 징계를 각오하고 할 말을 하면 되지 왜 익명이나 뒤에 숨어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회사에 어떻게 하면 손해를 끼칠까를 궁리합니까 ?

참고자료 7-2

또 얼마 전에도 언급했듯이 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인물인 ㄱ부장을 만들어내 스스로 자해를 한 뒤 회사에 증오심을 가지죠? 회사 비방하는 외부 기사 어디선가 mbc 기자가 월급 받으려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ㄱ부장을 내세워 회사를 비방하는게 백병전이라면서요? 백병전 말고 한쪽이 완전히 궤멸될 때까지 붙어볼 용기는 없습니까?

ㄱ부장도 실체가 있으면 누군지 밝혀보시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테니까요?

예전에 쌍용자동차 분규당시 노조원이 모터쇼까지 나와서 우리회사제품 불량품이니 사지 말라고 피케팅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mbc 언론노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우리 프로그램 보지 말라고 외부에 떠들면서 이게 충정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 보십시오. 뭐라고 할지...

기자라는 직업과 mbc맨들의 정신상태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

박상후 부장 글 (12) 2014년6월4일 17시17분

제목 : 안 두들겨 맞아 피눈물나요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란 데스크 리포트를 작성하던 지난 5월 7일 오후 3시쯤 저는 진도에 파견나가 있었던 경쟁사 친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그 친구는 제가 리포트 하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잘 있었어" "오늘 용기있는 기사를 쓴다면서" 진도 팽목항에는 자네가 무슨 기사 쓰는지 기자들 사이에는 소문 다 났어"

이 친구는 제 방송이 나간 직후 "누군가 언젠가는 지적해야 했을 내용을 잘 보도했어" "아주 잘 했고 그런 리포트 할수 있다는 게 부럽네"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작성하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보안이 필수적인 언론사의 기사내용이 경쟁사에 전달될 수가 있나하고 말입니다.

그날 제 리포트 기사는 많은 보도국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에 나간 후배는 물론 본사에 있던 후배들도 뉴스시스템을 통해 뭐라고 쓰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도현지 상황이 몹시 살벌하니 기사 톤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도에 나가 있는 후배들이 행여 유가족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모두 수용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진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가 우리회사의 박상후란 부장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 알고 있냐고 물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별일 없자 kbs는 질책이라도 하는데 우리mbc는 시청자가 관심도 없다며 갑자기 노조원들은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mbc 점퍼를 입고 다니는 취재진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이라도 휘둘렀으면 그 핑계로 저와 회사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신기자의 기사 카톡유출사건도 이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개월 정직은 죄질로 볼 때 아주 경징계입니다. 기자회는 "어차피 방송될 기사를 사적인 공간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도 비상식적이었는데,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결정이다."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다는 대목에서는 어이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mbc의 시계는 나치시대"인가라고도 합니다.

나치시대 같으면 천 번은 가스실에 들어갈 사안입니다. 유신시대, 일제 시대에 이어 나치시대까지 별의 별 단어를 다 갖다 붙이는군요. 기자회도 정상적인 조직같으면 신기자를 심하게 꾸짖어야 맞습니다.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후배 잘못한 것도 적극 비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 대오각성하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13) 2014년6월5일 15시53분

게시판 본문)
제목 : 신지영기자의 언론자유를 공개합니다.
내용 :
진도 팽목항에서 제기사가 타사로 유출되는 것과 때를 맞춰 출고전 기사를 입사 동기 카톡방에 올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신지영씨가 오는 9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뻔뻔하게도 감형을 요구하겠죠.
신지영씨의 소속 부서장과 데스크는 저에게 "신지영씨가 경솔히 행동한점 많이 반성한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저는 본인으로부터 아무 얘기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사내에서 마주친적도 없고 반성할 것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자회와 노조가 외부 매체를 이용해 회사를 공격하도록 신지영씨의 비행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이 치기어린 사적공간의 대화라고 치부해도 공개된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외부세력이 횃불들고 회사로 쳐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기자는 2580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런 기자가 제작한 시사프로그램은 사회의 흉기가 됩니다. 저에 대한 원한이나 적개심에서 나온 근거없는 비방은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보면 싫은 인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회사는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 아마 답이 없을 겁니다. 이런 회사원아닌 해사원이 대한민국 어느기업에 있을수 있을까요? 아마 기자회나 노조가 잘 쓰는 단어인 "초유"를 가져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
최소한의 상식이나 양식을 누가 저버리고 있는지 노조와 기자회는 저의 이 글과 아래 첨부하는 카톡화면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신들의 상부매체에 보고하십시요.

첨부파일) 유출된 카톡 대화내용

박상후 부장 글 (14) 2014년6월6일 11시13분

이제 원하든 원치않든 사적인 공간의 대화도 난도질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정몽준 후보의 19살 아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로 미성년이지만 난도질당했습니다.

하물며 공중파 방송사 뉴스프로그램과 간판시사프로그램에서 제작물을 만드는 기자는 19살난 청소년이 아니라 이미 공인입니다. 입사동기의 카톡에 올린 사적인 대화라고 했지만 저는 그 사적인 범위를 회사로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사를 유출시킨 분들이 사내 동기 카톡이라고 외부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저도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것이니 외부유출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MBC의 구성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두절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다 같이 생각해보시자는 취지로 올린겁니다.

사적인 공간의 글도 그 글이 부적절한 경우 일단 폭로되면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간판 시사프로그램에서 제작물을 만드는 기자가 '차라리 회사에 외부에서 횃불들고 왔으면 좋겠다" 란 부분은 몸서리쳐집니다.

협박하지 마시고 현행법위반이라면 저를 고소하면 됩니다. 저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니 맞고소하면 되겠군요. 이런 경우 재판 결과는 법학과 언론학 서적에 두고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케이스가 될겁니다.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 (15) 2014년6월9일 14시56분

우리만 선동 못해 사죄합니다.

세월호 취재에서 mbc 기자들의 금기는 다이빙 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원리를 따져 봐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텐데도 유독 mbc 기자들은 다이빙 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jtbc처럼 앵커가 직접 이종인을 스튜디오에 불러 잔뜩 실종자가족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위안을 심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이빙 벨이 투입되는데 대해 mbc 기자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 실패한데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mbc 기자들이 다이빙 벨이 진실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현장에서 있었던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을 담아내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제가 현장기자의 다이빙 벨 관련 리포트 데스크 과정에서 "녹차티백"이란 단어를 사용하려 했다(녹차티백처럼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사용하려다 말았습니다)는 점을 유난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녹차티백"이 일베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저를 인신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녹차티백"을 뭐라고 할까요? "녹차 우리는 종이 봉지"라고 풀어써야 할까요? "녹차티백"이란 단어를 일베에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일베에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까 ?

mbc 구성원들이 존경하는 jtbc 손석희를 비판했다고 저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다이빙 벨은 결국 실종자가족들을 우롱한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언론이 검증해 봤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복기해보면 다이빙 벨을 들고 나온 이종인이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 때 어떤 황당한 발언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봤으면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mbc 기자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기조차 꺼렸습니다. 특히 천안함에 대해서는 폭침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안함 당시 국정조사 자료에 나오는 그의 발언을 그대로 써서 보도하란 지시에도 불구하고(국정조사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 그에게 반론권을 줘야 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보도를 맡았던 저로서 그래도 가장 괜찮았다고 자평하는 부분은 다이빙 벨 선동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자회나 MBC언론노조가 참담하다는게 JTBC가 한 선동을 우리가 하지 못해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상후 부장 글 (16) 2014년6월18일 15시47분

4.16일 11시 6분 37초경 000기자 리포트 중 "현재 정부가 밝힌 공식구조인원은 147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식구조인원은 147명이구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밝힌 공식 구조인원이 147명임에도 그 배가 넘는 단원고 학생이 전원구조됐다는 모순된 내용의 리포트가 보도된 이유 및 이에 대한 mbc의 입장.

위와 관련해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보도한 근거 (누구로부터 해당 소식을 언제, 취재했는지)

최민희 민주당의원이 세월호와 관련해 본사에 답변을 요구한 내용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위 취재기자가 출입처에서 이 같은 보도를 한 상황은 백분 이해합니다. 누군가 취재원에게 자료를 받거나 취재해서 썼을 겁니다. 저라도 그 상황이면 똑같이 보도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 명백한 오보지만 당시 상황에선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인 만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런 것은 모든 언론사가 거의 동일하게 낸 보도(물론 오보가 잘 됐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를 가지고 MBC 언론노조는 "보도참사"라고 뒤늦게 주장하며 회사공격에 나섰고 급기야는 찌라시 매체 등 외부세력과 연계해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 보도를 한 기자도 보도참사라는 주장을 하는 언론노조에 동참해 회사가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는 성명에 가담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 (17) 2014년6월24일 14시27분

언론노조 mbc 본부는 권성민 pd의 회사비방 오유글 이나 신지영기자의 카카오톡 욕설사건을 두고 회사에 대한 충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수 십명 많게는 100명 훨씬 넘는 인원을 모아 남을 음해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2013년 2월에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를 주도한 기자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밥그릇에 침 뱉는 행위나 다름없는 회사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자유일까요?

당시 기사와 함께 게재됐던 카카오톡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제 버릇 남 주나' MBC 노조, 새노조 생기자 음해부터?
"기존 MBC노조에 불만 가득한 조합원 이탈 막기 위한 것"

소훈영2013.02.15 11:4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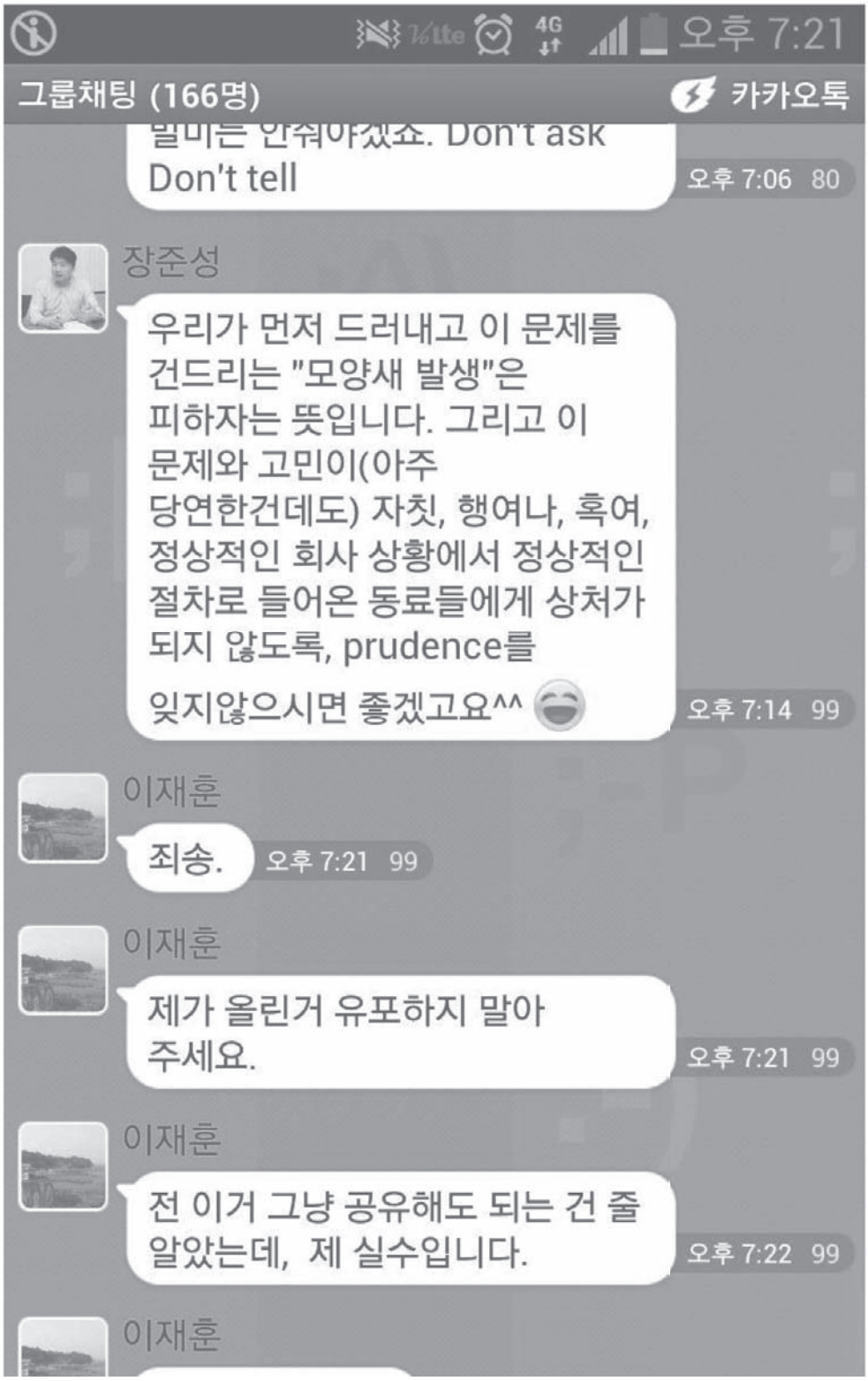
MBC 새 노조가 14일 출범 첫날부터 언론노조 MBC 지부 등으로부터 각종 음해성 공격을 당하는 모양새다.

9기 집행부 이재훈(MBC 노조 보도민위실 간사) 기자는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새 노조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력기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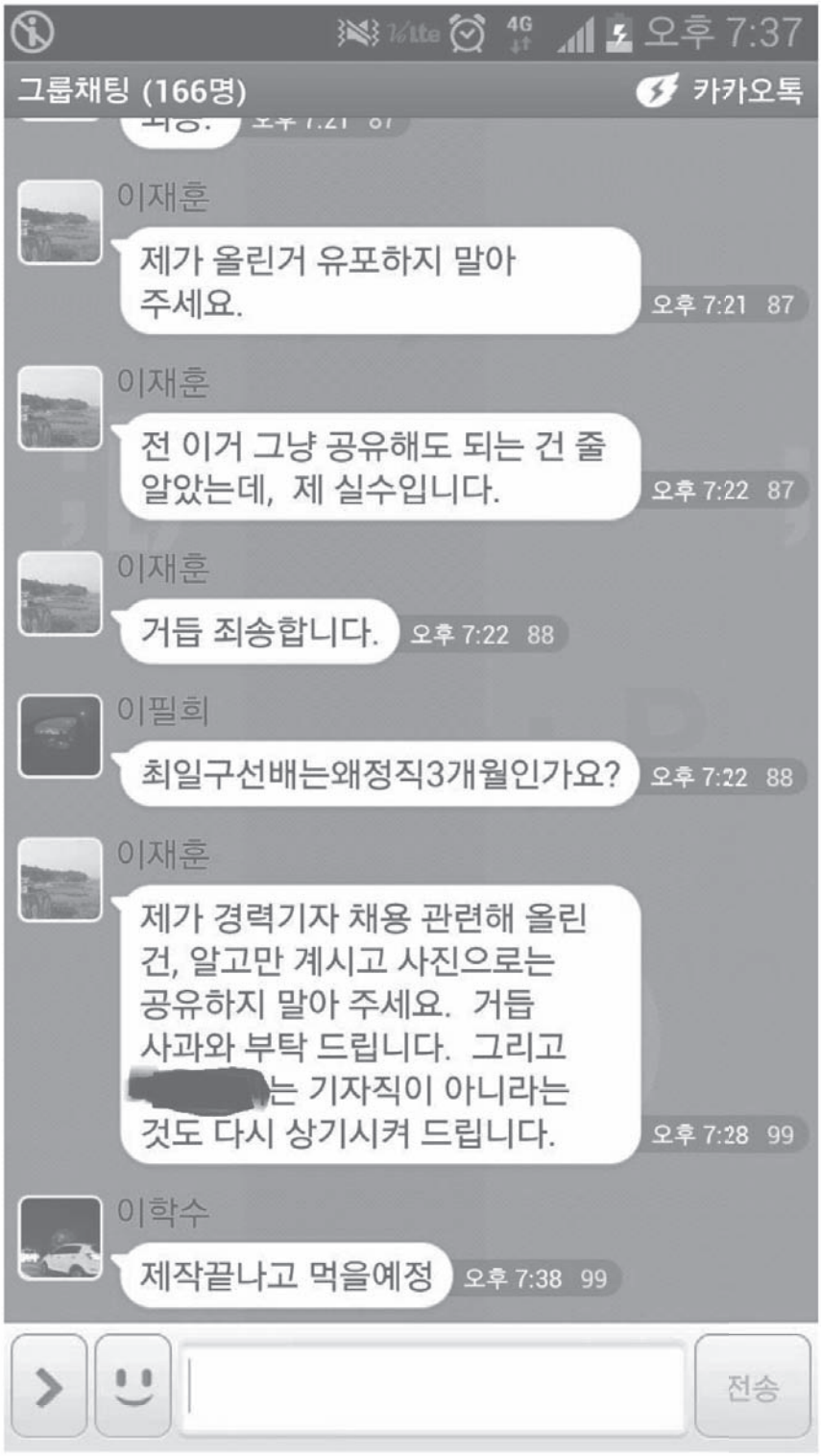
이 기자는 MBC 인사과로부터 빼낸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장준성 기자가 "우리가 먼저 드러내고 이 문제를 건드리는 모양새 발생은 피하자는 뜻"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이거 그냥 공유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수입니다"라며 "제가 경력기자 채용 관련해 올린 건 알고만 계시고 사진으로는 공유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때늦은 수습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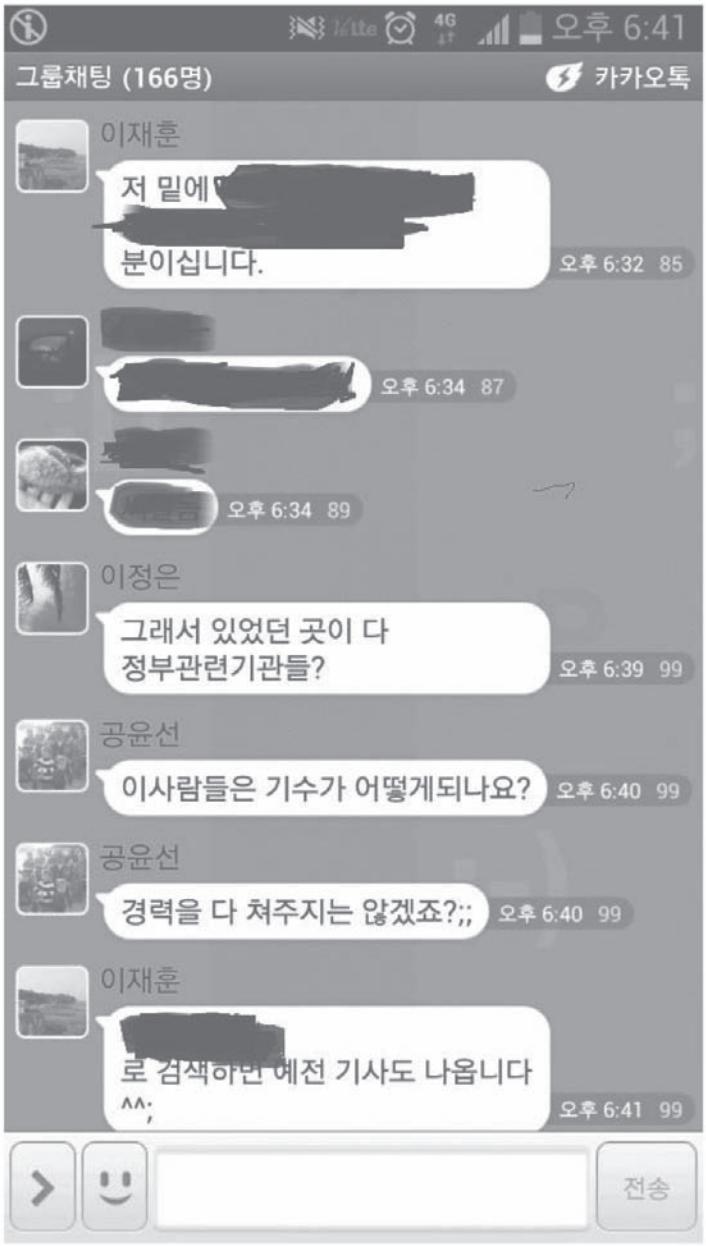
하지만 이재훈 기자의 행위는 기밀유출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개인 신상정보 유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MBC 노조의 이 같은 행동은 아직 조합원 가입 신청서조차 돌리지 못한 새 노조의 출현에 기존 노조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며 "MBC 노조의 이런 행위들은 기존 노조의 극단적 투쟁에 불만이 팽배한 조합원들이 새 노조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태로, 신상털기와 같은 불법적 행위들을 내부단속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조가 일종의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7:21
그룹채팅 (166명)
카카오톡
Don't tell
오후 7:06 80
장준성
우리가 먼저 드러내고 이 문제를 건드리는 "모양새 발생"은 피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고민이(아주 당연한건데도) 자칫, 행여나, 혹여, 정상적인 회사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prudence를 잊지않으시면 좋겠고요^^
오후 7:14 99
이재훈
죄송.
오후 7:21 99
이재훈
제가 올린거 유포하지 말아 주세요.
오후 7:21 99
이재훈
전 이거 그냥 공유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실수입니다.
오후 7:22 99
이재훈

참고자료 7-2


오후 7:37
그룹채팅 (166명)
카카오톡
이재훈
제가 올린거 유포하지 말아 주세요.
오후 7:21 87
이재훈
전 이거 그냥 공유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실수입니다.
오후 7:22 87
이재훈
거듭 죄송합니다.
오후 7:22 88
이필희
최일구선배는왜정직3개월인가요?
오후 7:22 88
이재훈
제가 경력기자 채용 관련해 올린 건, 알고만 계시고 사진으로는 공유하지 말아 주세요. 거듭 사과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redacted]는 기자직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후 7:28 99
이학수
제작끝나고 먹을예정
오후 7:38 99
전송


오후 6:41
그룹채팅 (166명)
카카오톡
이재훈
저 밑에
분이십니다.
오후 6:32 85
오후 6:34 87
오후 6:34 89
이정은
그래서 있었던 곳이 다
정부관련기관들?
오후 6:39 99
공윤선
이사람들은 기수가 어떻게되나요?
오후 6:40 99
공윤선
경력을 다 쳐주지는 않겠죠?;;
오후 6:40 99
이재훈
로 검색하면 예전 기사도 나옵니다
^^;
오후 6:41 99
전송

참고자료 7-2

박상후 부장 글 (18) 2014년6월30일 09시22분

6월 19일 민실위메모입니다. 편의 문제일까요? 아래 민실위 주장과 함께 사진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전국부장이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을 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편(side)의 문제일까요?

브라질 월드컵 오심 논란처럼, 원칙과 반칙은 '편'(side)의 논리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자기 편 유·불리를 따지는 진영 논리로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뉴스를 취재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져야 할 건 오직 진실을 구성하는 사실입니다. 방송사 사장이 A, B, C, D 중에 누구든, 보도본부장이 A, B, C, D 중에 누구든, 보도국장이 A, B, C, D 중에 누구든 상관없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MBC에서는 내부 의견을 '진영 논리'에만 맞춰 재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과 비판을 '상처내고 흠집 내는 일'로 여기는 건 아주 손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에게 불행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보도 책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비난'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기준과 범위가 과연 존재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의 문제는 A입니다"라고 얘기하면, A가 아닌 C나 D를 언급하고 '네 편 내 편'을 논해가며 핵심을 묵살하는 '논점 일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편의 나라'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따위의 정파 공방 프레임으로,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조명돼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속의 MB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정파와 진영 논리를 배격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언론 고유의 책임"(MBC 프로그램 준칙 내용입니다)을 다할 수 있도록, 민실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국민만이 주인이다



[별첨2]오정환 센터장 인트라넷 글 모음

[별첨 2]

오정환 부국장 글(1) 2013년11월22일 00시31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동안 상승세가 주춤했던 우리 뉴스 시청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이를 못 마땅히 여기는 듯 회사 내 일부 세력이 왜곡된 비난을 하고 편향된 매체들이 퍼 날라 다시 우리 뉴스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나쁜 예상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군요.

뉴스데스크편집부장인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검찰이 발표한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는 전 청와대 직원 두 명의 불구속 기소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을) 고의로 폐기”했다는 우리 제목이 옳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각시킨 KBS와 SBS는 틀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김병헌 민실위 간사가 노 전 대통령을 앞세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을 비교 예로 들었는데, 두 신문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왜 두 신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은 많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검찰 출석은 적게 보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간사는 두 사람의 정치 사회적 비중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48%를 득표한 문 의원과 일반 시청자들이 누군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김 의원의 뉴스 가치가 같다고 김 간사는 생각하세요? 기자라도 사람인 이상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선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 간사를 포함해 MBC 기자라면 누구도 파당의 이해를 위해 언론인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이른바 ‘MBC 뉴스에 대한 평가’들을 여럿 나열했습니다. 전문가 천명, 현직기자 304명, 방송학회 회원 129명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MBC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조사해 MBC가 불공정한 뉴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더 불공정한 일이 아닐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시청자 14,400명을 조사했다는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는 눈이 퍼뜩 뜨이더군요. 시청자의 요구에 의해 시청자의 이익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하는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잘못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만, 갤럽 TNS 등 대형기관들의 조사에서 우리 뉴스의 신뢰도가 1위 또는 2위로 나왔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김 간사는 몰랐나요, 아니면 일부러 눈을 감았나요?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오정환 부국장 글(2) 2014년3월14일 07시21분

편파적인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민실위보고서만 인용해 기사를 쓸까봐 급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길거리에서 키 작은 사람들만 골라 한국인 평균 신장이 150cm라 주장할 사람들이지만 다 그냥 맞다고 합시다. 다만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전임자들이 정말 회사를 사랑한다면 더 큰 문제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경쟁력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노조가 왜 점심 무렵 출근해 긴 식사를 하며 회사 욕을 하고 잠시 쉬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고, 하루 14시간 일하는 사람과 한 달 14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은 월급을 받는 마르크스도 지하에서 돌을 던질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을 좀 먹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노조의 진정성을 의심 받고 다만 잃어버린 패권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MBC 노조는 한때 막강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장들이 노조 눈치를 봤고 심지어 어떤 사장은 주요 안건 결재가 올라올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먼저 받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노조의 뜻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몇 사람의 의견인데, 차장급인 그들이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했으니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지요. 회사의 본부장 국장들이 모두 노조에 머리를 숙였고, 현직 국장이 노조 사무실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아무도 상대 안 해주자 멋쩍게 앉아있다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권력을 바탕으로 노조위원장 출신 부장이 곧바로 사장이 되고, 입사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현업이 아닌 노조에서 보낸 분들이 국장 본부장 계열사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사 내 입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조에게 밉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2012년 파업 때 어느 부장이 그동안 크게 도움을 준 한 차장에게 "너는 파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커리어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게 MBC를 6개월 장기 파업으로 몰아넣은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 노조 편에만 서면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맹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유지를 생명처럼 여겨야할 회계부 직원들이 사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째로 노조에 갖다 바치고 감사실에서 조사하자 묵비권을 행사하며 우리 중 누가 했는지 맞춰보라며 회사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각종 패륜행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 파업 때 들어온 여성 경력기자가 지나가자 "야 전화 끊어라 재수 없는 년 지나간다"고 크게 말하던 남성 기자는 지금도 민주와 국민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경력기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가하면, 출장을 가서는 아침에 집합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치졸한 수법도 동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7-3

파업 때 동참하지 않은 간부들을 왕따시키라고 지시해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아직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막상 일부 노조 지도부 출신들은 자신은 회사 최고위층에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위선은 비단 노조 출신 고위직들만 보여온 것이 아닙니다. 허구헌날 비정규직의 권리 신장을 부르짖는 분들이 숙직실이 비좁다며 비정규직 여직원들 몰래 비밀번호를 바꾸고, 갈 데가 없으니 오늘 하루만 잘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마저 뿌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MBC가 민영화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어떤 이는 종편으로 자리를 옮겼고, 또 어떤 이는 부장 몰래 회사 재산까지 훔쳐다 바친 타 민영 방송에 경력기자 지원을 했다 떨어지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MBC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이중인격이고 부도덕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그런 분들이 우리 조직을 좀먹고 분위기를 흐리며 우리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노조 전임자들도 회사의 경쟁력과 생존에 관심이 있다면 치유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숙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정환 부국장 글(3) 2014년6월2일 17시11분

MBC 세월호 참사 취재 이렇게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편집회의가 끝난 직후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급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의 지시로 우선 김대환 편집2센터장이 특별방송을 준비하고, 편집1센터장인 저는 현지 취재 인력 파견에 착수했습니다. '구조 착수' '전원 구조' '단원고 학생 모두 무사' 등 오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김소영 사회2부장과 노재필 시경캡이 취재팀 5팀을 징발해 진도로 급파했고, 이런 빠른 판단이 초기 현장 취재와 방송에 결정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한때 '전원구조'의 오보로 들떴던 희망은 이내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뉴스의 규모를 키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도국 모든 부서에 다른 취재를 일절 중단하고 특보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뒤, TV편성부와 협의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종일 특별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향진 생방송뉴스팀장이 서울MBC의 모든 중계차들을 진도로 출발시켰고, 목포MBC는 물론 광주MBC와 MBC경남의 중계차들까지 진도와 목포 각지로 이동했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현장의 혼란, 통신시설 미비 등을 모두 극복해준 생방송뉴스팀과 중계부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보도국 각부에서 기자들을 진도로 추가 파견하고, 보도국장의 지시로 뉴스데스크 박상권 앵커까지 현지로 보내 사고 당일에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다음날부터는 진도 팽목항에서 뉴스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메인 앵커의 현지 진행은 우리 뉴스가 해당 사건의 비중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보도행정부에서 전태석 씨가 진도로 내려가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사이 숙소를 구했고 덕분에 우리 취재진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난방송에 온 신경이 집중돼 사고 사흘째 오후에야 출장자들에게 집에서 보낸 택배를 전달해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 그때까지 취재진과 중계팀 모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보가 시작된 직후에는 사회2부 오현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 신문 출신 경력기자가 생방송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습니다. 당일 오후부터는 경제부 백승우 차장과 박영회 강민구 기자가 번갈아 밤을 새며 모든 뉴스에 출연해 관련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뉴스데스크만 보더라도 사고 당일 38개, 4월 17일 58개, 4월 18일 48개의 아이템이 방송됐는데, 그 상당수를 전국부에서 데스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TV와 라디오 모든 뉴스마다 세월호 관련 리포트와 생중계를 요구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의 정리, 현장 취재진과 연락까지 모두 전국부 박상후 부장과 고현승 김태래 차장이 맡아 흐트러지거나 중복됨이 없이 처리했습니다. 문화레저부 왕종명 차장과 국제부 박찬정 차장은 야근 데스크로 사건 초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야근을 했습니다.

참고자료 7-3

진도 취재진을 지휘하기 위해 사회1부 박재훈 차장과 전봉기 차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파견됐는데, 두 사람 모두 장기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묵묵히 임무를 맡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회2부 김주만 차장과 국제부 박찬정 차장 등이 파견됐습니다.

박상권 앵커에 이어 도인태 앵커가 진도로 가 사고현장 인근의 동거차도에서 뉴스데스크를 진행했습니다. 중계부에서 통신장비를 산기슭에 세우고 정상까지 길을 만들며 수백 미터 케이블을 깔았고, 도인태 앵커와 박승권 진행PD · 프롬프터 담당 허윤선 씨 등이 모두 방송 때마다 30분씩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타 방송사들도 우리 옆에 중계석을 만들었습니다. 동거차도에서는 또 여러 차례 우리 기자들이 특보 생방송을 했는데, 동거차도는 민가가 몇 안 돼 우리 앵커와 기자들이 방송을 마친 뒤 창고를 빌려 잠을 자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목포MBC 김양훈 기자가 팽목항에서 LTE 중계로 급박한 현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이동경 기자가 배를 타고 나가 역시 LTE로 구조 현장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이 선상 생중계는 이후에도 우리 뉴스에 강한 현장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형석 기자에게 원고 없는 리포트를 요청했다 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놀랐고, 이후에도 여러 기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사고 해역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기자들도 때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특히 잠수사들이 세월호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하는 영상을 구해 독점 보도한 현기택 기자와, 생방송 카메라 배치에 대해 건의해준 손재일 차장 등에게 감사합니다.

전문가 섭외와 기획기사 발굴 등에 적극적이었던 여러 취재부서 부장들과 '선박의 복원력 상실 문제'를 실험으로 보여준 도쿄 임영서 차장 등 여러 특파원들의 노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검의 청해진해운 수사가 유병언 회장 일가 수사로 번져나가면서 사회2부 김지만 홍신영 기자가 타 방송사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많은 특종을 해 우리 뉴스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언제나 편집부의 주문은 취재 인력보다 많았지만 현장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 수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의 순발력에도 감탄했습니다. 보도국 전체가 하루 종일 특보에 매달리다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오후 늦게 기자별로 배정하곤 했는데, 모든 기자들이 각 위치에서 취재를 하며 기다리다 배정된 주제로 단 몇 시간 만에 리포트를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을 함께 견디다 보니, 진도에서는 공채와 경력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분투를 통해 MBC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방지책을 찾는' 언론의 기본 소임을 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 접촉을 꺼려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분들의 아픈 사연들을 찾아 전달하려 애를 썼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이 이중으로 겪는 소외의 고통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의 노고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당국의 안전 관리 부실과 구할 수 있는 생명마저 놓쳤던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부만 비판하면 사실 여부는 상관없다는 자세도 지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경의 다이빙벨과 민간 잠수사 투입 방해 등 불확실한 주장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전 확인을 통해 오보를 막았습니다.

다수의 언론사들에 해당되는 사항도 MBC가 포함돼 있다면 MBC만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어떻게든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의 초상권 보호에 주의했습니다. 세월호와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관계자들까지도 최대한 늦게까지 익명 보도를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여러 차례 호소가 있었듯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지양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 역시 저는 편집센터의 업무를 통해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놓치거나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도국 취재와 영상, 편집, 지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었고, 이를 극복했고, 좋은 기사를 발굴했으면, 이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보도국 구성원들이 이를 공개적이나 사적으로라도 서로 알리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7-3

오정환 부국장 글(4) 2014년6월2일 18시41분

MBC 보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꽃 같은 어린 생명들을 가둔 채 침몰해가는, 몇 번을 보아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참사는 온 국민에게 씻어지지 않을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켜켜이 쌓인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이 뿌연 먼지가 일 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국난(國難)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는 없으며, 솟아오르는 눈물을 참고 일어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건을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언론도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그 같은 국난 극복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은 국민의 아픔과 분노를 악용하고 심지어 유족의 상처를 덧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며 제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보여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MBC 역시 그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 목표가 되어 비틀거릴 만큼 상처투성이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뉴스도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며, 개선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MBC에 가해진 파상 공격을 보면 올바른 뉴스를 위한 제언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 체제를 무너뜨려 MBC를 장악하겠다는 욕심이 번득거리는 것 같아 극히 우려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MBC를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수 언론사의 문제를 마치 MBC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MBC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이 또한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소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MBC 체제를 이른바 진보진영이 장악하도록 하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우려하고 요청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1.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일부터 MBC에 대한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집요한 비난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MBC 이브닝 뉴스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금 액수를 거론해 국민의 정서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사고 당일 금융감독원이 급히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 주체가 보상 능력이 있는지 살피고 보험 가입 내역을 따지는 게 오랜 취재 관행이었습니다. MBC 이브닝 뉴스 이전에 이미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KBS SBS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보험금 기사를 전했고, 다음날 상당수 종합일간지들이 지면에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MBC 적대 세력은 마치 'MBC만' 보험금 보도를 한 것처럼 공격해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보험금 기사를 함께 실었던 일부 언론사조차 MBC에 같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보험금 보도가 국민과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수 언론사의 문제를 MBC만의 문제로 축소 왜곡 보도하는 것은 사악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4월 24일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해수부 장관에게 대책을 따져 묻는 장소에 끼어들어 당시 상황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생방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MBC가 배에서 방송을 하며 파도가 거친 것처럼 보이려 잠수부들을 시켜 배를 흔들었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MBC에 대한 비난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보도국은 홍보국을 통해 이를 통보받은 뒤 현장 취재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주장임을 확인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사태는 일단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수색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후배기자들에게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는 자체가 고통이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당사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또 5월 8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 아닌 흉기"라며 MBC를 모욕했습니다. 2012년 6개월 파업 때 MBC는 세 차례에 걸쳐 경력기자들을 채용했는데 이 중 이른바 '시용기자'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온 이른바 '공채기자'들이 경력기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할 때 대표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보도국에서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소수의 약한 집단을 특정 용어로 낙인찍어 배척하며 위안을 얻는 것은 다수 집단의 보호 아니고는 기댈 것이 없는 열등한 자들의 특기입니다. 이는 마치 누구를 '특정 지역 출신' '비명문대 출신' '성씨가 천민' 등으로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열한 행동이며 천박한 의식 수준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3. 5월 2일 인터넷 뉴스타파는 'MBC 보도국장이 유족들의 우는 장면을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5월 9일 오마이뉴스가 다시 인용하면서 MBC에도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사고 직후부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유족들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뒷모습을 써왔으므로 우는 장면 배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박하자, 아무런 해명도 없이 보도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지금도 뉴스타파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4.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자세를 돌아보는 데스크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자원했다 숨진 고 이광욱 잠수사의 희생을 애도하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참고자료 7-3

생각해봐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주로 사내에서 몰아쳤습니다.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보도국 30기 이하 성명」이 발표되더니, 다시 각 기수별 성명이 나오고, 언론노조 MBC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희생자 유족들을 모욕하려는 기사가 아닌데 왜 그리 왜곡된 해석을 강요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른바 '세월호 유족 폄훼 발언' 주장이 불씨가 돼 유족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보도국장이 사실상 해임되고, 다시 그 보도국장이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고, 회사가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KBS의 상황을 그대로 MBC에 옮겨놓으려는 시도가 아닌 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해당 기사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의 한 기수별 성명은 이를 '우리 시청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4월 16일 보험금 보도는 이브닝뉴스의 시청률이 높아서 문제가 됐나요?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사가 '유족을 모욕하지도, 상식에 어긋나지도, 우리 사회를 그릇된 길로 유도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조 MBC 위원장은 사내 시위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자 이른바 사과를 하겠다며 안산의 합동분향소로 찾아가 희생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사내 권력 투쟁을 위해, 가뜩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의 상처를 더욱 자극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누가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특정 회사의 노사 분규에 이용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결국 유족들로부터 강한 질책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5월 13일 한겨레가 20여일 전인 4월 25일 MBC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막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KBS가 보도국장의 유족 폄훼 발언 논란으로 혼란에 휩싸였으니 MBC도 같은 구도로 만들면 제작거부나 파업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악의가 느껴지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는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MBC의 법적 대응 방침으로 이 시도 역시 아무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5.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전원구조 오보를 MBC가 가장 먼저 시작해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타사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MBN이 우리보다 20초 먼저 해당 자막을 냈고, 다른 방송들도 1-2분 간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같은 논리로 "전원구조 오보를 MBN이 가장 먼저 시작해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으니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게 일관성 있는 태도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MBC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며 "나 아니고 재라는 그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MBC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게 MBC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물론 누가 20초를 먼저 낸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막을 보고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전원구조 집단 오보는 MBN 기자가 회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풀이 됐고 이를 여러 언론사들이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민희 의원 측에서도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MBC의 해명이 나온 뒤에도 경향신문 등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전원구조' 오보를 가장 먼저 내보낸 방송사는 MBC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아직도 MBC의 세월호 보도를 비판할 때 주요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해당 언론사 가운데 MBC와 KBS만은 집어 현 경영진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6. 4월 16일 사고 당일 목포MBC는 서울MBC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다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지만 이것이 미처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목포MBC의 전언을 급히 확인해 기사로 처리했어야 옳았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 누가 어떤 오류를 범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MBC 전국부 부장은 목포MBC 보도국장과 취재부장이 각각 전화를 걸어와 배 안에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는 어민들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사고가 엄청날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방송에 반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울MBC 전국부 차장도 목포MBC로부터 '현장 어민들 이야기는 다르다'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을 목포MBC 기자들은 오전 11시 이후로 기억하고 있고, 서울MBC 전국부에서도 전화를 받을 당시 모든 방송 모니터에서 '전원구조'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MBC의 오보 지속 시간이 첫 자막이 나온 오전 11시 1분부터 정정보도가 나온 11시 24분까지 약 23분 동안이었는데 그 시간을 줄일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00년 작성 배포된 MBC 재해방송 보도 준칙에는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의 발표는 공식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의심하고 다른 내용을 보도하기에는 당시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보도 준칙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MBC가 목포MBC의 보고를 묵살해 구조활동을 지연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은 배의 침몰 시간과 현장 구조인력 배치 상황 등을 볼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목포MBC 취재부장과 서울MBC 전국부는 협조와 갈등이 여러 차례 교차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MBC 취재부장의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나 인정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4월 22일 '복지부 공무원 구급차 퇴근 물의' 리포트는 저희 서울MBC 판단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날 목포MBC는 공무원들이 펜션에서 묵은 게 더 큰 일이라며 이를

참고자료 7-3

주제로 하겠다고 주장했고, 저희들은 구급차 퇴근을 주제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다 결국 목포 MBC에서 현장 취재한 화면 제공을 거부해 자료화면만 가지고 서울에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펜션이란 대학생들이 MT를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 제 생각 이상의 고급 시설이었다 해도 공무원들이 그곳을 비우고 팽목항의 숙박시설 확보 경쟁에 합류하는 게 옳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오랜 노사분규의 결과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끝없는 공격대상이 되어버린 MBC의 현주소를 고려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보도를 살얼음을 걷듯 주의에 주의를 더하며 진행해왔습니다. 사건 초기의 혼란 이후에는, 속보 경쟁에 뒤지더라도 사실 확인에 더욱 힘을 기울이려 노력했고 시청률이 뒤질지언정 자극적인 소재들을 뉴스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언론 중재 신청이 MBC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작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사려의 부족으로 저질러지는 실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고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며 맞설 것입니다.

오정환 부국장의 글 (5) 2014년6월4일 15시30분

MBC 권성민 PD의 MBC 뉴스 시청 거부 주장에 대해

화는 나지만, 그저 한 번의 치기 어린 행동일 뿐이라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성민 PD의 선배들까지 그의 글을 옹호하고 나서면 그의 거짓 주장은 세상에 진실로 알려지고 그는 계속 비뚤어진 시각으로 회사를 해하는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권 PD가 어떤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민 PD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우리 보도국 구성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취재해 보도했고 그에 대해 쉴 새 없이 제기된 비난들의 상당수가 얼마나 왜곡되고 악의에 찬 것이었는지에 대해 게시판 아래 제가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권 PD께서 읽어보시고 우리 보도의 무엇이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비판이라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권 PD께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사려 깊지 못한 글로 다시 우리 회사에 대한 공격거리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해야 마땅합니다.

권성민 PD는 또 글 곳곳에서 방송 종사자로서는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 PD는 "문제는 분별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고 다시 봐야 했습니다. '분별없는 지상파 시청자'라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청자를 스승이자 하늘로 여겨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등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권 PD는 글에서 "저는 신방과 출신이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살았으면서도, MBC만큼은 꽤 좋아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거의 안 본 MBC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가 TV 시청을 천박스럽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는 "저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복종 실험,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지식을 내세우는 글과도 맥이 통할 것입니다. TV 매체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지원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TV를 거의 보지 않고 산 분을 뽑았는지 김재철 전 사장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갈 곳 없을 권 PD에게 회사를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시청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어달라는 부탁입니다. TV 시청은 정보와 재미와 감동을 찾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며, TV는 문화 대중화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 PD는 글에서 우리 회사를 '엠병신'이라고 반복해 지칭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막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MBC PD가 MBC에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권 PD를 향해 "야 이 병신아!"라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황당하고 대단히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조직도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마찬가

참고자료 7-3

지입니다. 권 PD의 욕설은 용감하거나 의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습니다.

권 PD는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서 조정 등으로 취재부서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남아도는 제3노조 세력의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지요? 보도국에서 어떤 기자가 '결정사항에 조금 반발했는데 취재부서에서 배제'되던가요? 열심히 일하는 타부서 동료들을 '조금도 결정사항에 반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폄하하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옵니까? 그리고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요. 우리 뉴스가 그런가요? 혹시 우리 뉴스를 본 적은 있으세요? 언제 어떤 기사가 타사에 비해 '질과 완성도'가 떨어지던가요? 말이나 글은 가려서 써야 합니다. 특히 그것이 공개적이라면 더욱 엄격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권 PD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습니다. "마음껏 욕해주세요. 더 먹어야 합니다. 사실 욕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 이미 안 보시겠지만,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보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것은 상식과 기본 윤리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권 PD를 지지하는 예능본부 48명 PD들의 성명에서마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야하는 사람이 광고 불매운동 제안? 웃기는 소리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웃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가 권 PD 같은 분들로 가득 차고, 권 PD 글과 같은 주장들로 망가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권 PD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반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권 PD의 인사위원회 회부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내신 예능본부 PD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후배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저 또한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를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성명 내용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역시 굳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배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잘못 행동했다면 무조건 감쌀 게 아니라 꾸짖고 고쳐줘야 그 조직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찾은 권성민 PD의 글 전문을 첨부합니다.

오정환 부국장의 글 (6) 2014년6월30일 09시16분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노조)는 5월 21일 민실위보고서를 통해 MBC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정부 비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증거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및 해경의 구조·수색에 대한 비판 기사가 4월 16일부터 5월 18일 사이 KBS는 68건, SBS는 66건인데 비해 MBC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호 보도에 월드컵 방송에 국정조사 답변 준비까지 겹치면서 너무 바빠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노조의 주장은 '불공정한' 미디어오늘 등을 통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방문진 야당 추천 인사 등이 MBC 보도를 공격하는 자료로 쓰이고, 그러면 또 '불공정한' 미디어오늘 등이 이를 다시 받아쓰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일부는 제가 직접 검토해 그 많은 뉴스 아이템들을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BC에는 일하는 사람과 욕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일하면서 상대를 하려니 정말 힘이 드네요...

그 결과 세월호 참사 뒤 한 달 동안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과 구조·수색에 대한 비판 기사를 모두 47회 방송해, SBS 8시뉴스의 58회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민실위 보고서가 기사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부터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요. 혹시 생각이 있으면 민실위의 기사 목록을 공개해주세요. 비교해보면 누가 정확한지 알겠지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재난방송의 목적이 '재난의 예방과 수습·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정부를 비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MBC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 정부의 재해 예방과 구조·수색 활동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재난방송의 기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비판을 재난 보도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로 내세우는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첨3]세월호 보도 공중파 3사 뉴스 비교 표

[별첨3]

세월호 침몰 관련,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4월16일 ~ 6월2일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6일 (수)

	M B C		S B S		K B S
1	여객선 침몰 최악의 참사(사고내용)	1	사망·실종 295명.. 최악의 참사 우려(사고상황)	1	10명 추가 구조, 4명 사망 284명 실종(사고상황)
2	2시간 반 만에 침몰 필사의 탈출(좌초에서 침몰까지)	2	"쿵 소리 후 기우뚱".. 암초 충돌 가능성(사고순간)	2	하늘서 본 긴박한 현장(헬기스케치, 사고현장)
3	사고 해역 '썰물' 뱃머리 드러나(중계차)/사고해역	3	배 기우는데.. "가만히 있어라" 안내방송(승객 촬영영상)	3	선실 3곳 물 가득 차‥야간 수색 계속(내부 수색)
4	객실에 피신? 실낱같은 희망(실종자들 위치 추정)	4	숨가쁜 구조.. 한 명이라도 더(구조대원 촬영영상)/KBC	4	물살 빠르고 앞도 안 보여 구조 난항(유속·시경·장비)
5	실종자 수색 어떻게 진행되나?(수색계획)	5	안도·걱정·오열.. 눈물바다 임시진료소(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5	시간과의 싸움, 선실 공기 여부가 관건(생존 관건)
6	"그대로 있으라" 대응 적절했나(선내 안내방송)	6	좌석 위치가 생사 가른 듯(실종자 위치 추정)	6	"갑자기 기울어"…손 쓸 새도 없었다(사고 상황)
7	뒤집힌 배 각층마다 공기층(배 현재상황)	7	혼신의 구조.. 헬기에 함정에 어선까지(구조작업)	7	내부 구조 복잡 학생들은 3·4층에(세월호 내부구조)
8	수온 12도 체온 유지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8	수심 얕은 곳부터 수색.. 내일 구조함 도착(구조계획)	8	일시적 정전에 구명장치까지 말썽(탈출과정)
9	"내 아이가 저곳에" 무사 기원(중계차)/진도 팽목항	9	악몽 된 수학여행.. 침통한 안산 단원고(학교 분위기)	9	집계 우왕좌왕, 탑승 구조자 수 혼란(정부 당국)
10	서해해경 긴장 속 수색 지휘(중계차)/서해해경	10	사망자는 학생·여승무원(사망자 명단)	10	이 시각 상황은?(진도 팽목항 상황)
11	"전화 받아" 애끓는 가족들(가족들 표정)	11	'오락가락' 발표, 혼란 키웠다(안행부 발표)	11	"참담한 심정‥생존자 구조에 최선 다해야"/@
12	유족 오열 의료진도 비상(목포 한국병원)/광주	12	출항부터 침몰까지의 2시간(3D 재구성)	12	화물 떨어져 부상, 온수 쏟아져 화상(부상 유형)
13	순식간에 침몰 선내 아수라장(생존자들 증언)/목포	13	신고 후 42분 만에 현장 도착까지(신고부터 구조시작)	13	부상자 2명 중상, 대부분 경상(중계차)/목포 한국병원
14	단원고 학생 2백여 명 연락두절(실종자)	14	"실종자 대다수, 침몰한 배에 있을 것"(실종자 위치 추정)	14	'광' 소리 후 기울어‥사고 되짚어 보니(재구성)
15	"엄마 사랑해" 애타는 메시지(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15	수중 시야 20cm.. 거센 물살에 구조 난항(구조 어려움)	15	출항에서 침몰까지 1시간(긴박했던 과정)
16	'세월호'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세월호 설명)	16	저체온증, 저산소증이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16	안전속 유일한 출항, 권장 항로 이탈(무리한 항해 가능성)
17	학생·동창 단체여행 가다 참변(승객 면면)	17	진도 팽목항 "제발 구조되길"(중계차)/진도 팽목항,KBC	17	격벽 적고 창문 많아 급격히 기운 듯(침몰 이유)
18	안개 속 운항 암초 못 봤나?(사고원인)	18	목포·해남·진도 병원으로 이송(중계차)/목포한국병원,KBC	18	'굉음'의 정체가 사고 단서(여러 가능성)
19	"구명보트 오작동" 결함 의혹(선박개조 의혹)	19	제목 없음(앵커대담, 사고원인)	19	'대체 선장'이 운항, 사고 원인 조사 착수(안전기준 준수 조사)
20	'쿵' 굉음 2시간 반 만에‥(사고 재구성)	20	침몰 전 굉음.. 왜 암초 못 피했나?(사고원인)	20	'생사의 갈림길' 긴박했던 그 순간(탈출 영상)
21	절박한 구조 요청 "침몰 중"(승객들 구조요청)	21	입항 시간 맞추려 '과속' 가능성(항로변경·과속 의혹)	21	"순식간에" 구조된 이들의 육성 증언(생존자들)
22	"한 명이라도 더" 숨가쁜 구조(구조현장)/목포	22	대피지시가 없어 화 키웠다(승무원 안내 문제)	22	"배가 기운다‥한 명이라도 더"(구조현장)
23	육해공 구조작업 '총출동'(군 당국)	23	20년 된 배.. 선장은 '대리 선장'(세월호)	23	육·해·공 총동원 입체 수색(구조 지원)
24	하늘에서 본 필사의 구조(헬기스케치)	24	청해진 해운 "죄송‥보상 최선"(사고 여객선 선사)	24	현지 어민들 초기 구조의 주역(민간 어선 구조)
25	생업 제치고 구조 현장으로‥(어민들 구조)	25	인천-제주 항로, 年 11만명 이용(제주 항로)	25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26	서해해경 긴장 속 수색 지휘(중계차)/서해해경	26	인양, 두 달 이상 걸릴 듯(세월호 인양)	26	애타는 학부모 직접 현장으로(안산단원고)
27	연락두절 학부모 '발동동'(중계차)/안산 단원고	27	학부모 발동동.. 엉터리 통보에 분노(교육청 발표 혼선)	27	"전원 구조" 통보 등에 큰 혼란(발표 혼선)
28	다 구조됐다더니·참사 소식(발표 혼선)	28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6살 어린이 생존자)	28	국내 최대, "정기 검사 이상 없었다"(세월호)
29	구조 집계 '오락가락' 대혼란(정부 당국)	29	"참담한 심정.. 생존자 구조 최선"(최대통령)	29	천안함 10배 무게, 인양도 난항(인양계획)
30	청해진 해운 "죄송‥보상 최선"(사고 여객선 선사)	30	잠수요원 투입.. 밤 늦게까지 구조(중계차)/중앙재난대책본부	30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재난안전대책본부
31	탁하고 빠른 물살 수색 난항(실내 수색)	31	해난 사고, 한 번 터지면 대형 참사(역대 선박 사고)	31	여객선 침몰, 4명 사망 284명 실종(사고내용)
32	선체 인양 열흘 이상 걸릴 듯(인양계획)	32	좌초 후 36시간 만에 구조 사례도(아틀라스 유람선 좌초 사고)	32	하늘서 본 긴박한 현장(헬기스케치, 사고현장)
33	사상 최악 해상사고 우려(역대 해상사고)	33	사망·실종 295명.. 최악의 참사 우려(사고상황)	33	선실 3곳 물 가득 차‥야간 수색 계속(내부 수색)
34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4	"쿵 소리 후 기우뚱".. 암초 충돌 가능성(사고순간)	34	물살 빠르고 앞도 안 보여 구조 난항(유속·시경·장비)
35	"참담한 심정 구조에 최선"(최대통령)	35	"가만히 있어라".. 대피 늦어 화 키웠다(승객 촬영영상)	35	시간과의 싸움, 선실 공기 여부가 관건(생존 관건)
36	비상 근무 밤새 수색 계속(중계차)/국방부	36	"실종자 대다수, 침몰한 배에 있을 것"(실종자 위치 추정)	36	"갑자기 기울어"…손 쓸 새도 없었다(사고 상황)
37	여객선 침몰 최악의 참사(사고내용)	37	숨가쁜 구조.. 한 명이라도 더(구조대원 촬영영상)/KBC	37	내부 구조 복잡 학생들은 3·4층에(세월호 내부구조)

38	2시간 반 만에 침몰 필사의 탈출(좌초에서 침몰까지)	38	좌석 위치가 생사 가른 듯(실종자 위치 추정)	38	일시적 정전에 구명정까지 말썽(탈출과정)
39	객실에 피신? 살날같은 희망(실종자들 위치 추정)	39	안도·걱정·오열.. 눈물바다 임시진료소(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39	집계 우왕좌왕, 탑승·구조자 수 혼란(정부 당국)
40	실종자 수색 어떻게 진행되나?(수색계획)	40	혼신의 구조.. 헬기에 함정에 어선까지(구조작업)	40	이 시각 상황은?(진도 팽목항 상황)
41	"그대로 있으라" 대응 적절했나(선내 안내방송)	41	수심 얕은 곳부터 수색.. 내일 구조함 도착(구조계획)	41	"참담한 심정···생존자 구조에 최선 다해야"/@
42	뒤집힌 배 각층마다 공기층(배 현재상황)	42	충돌에서 침몰까지의 2시간(3D 재구성)	42	화물 떨어져 부상, 온수 쏟아져 화상(부상 유형)
43	수온 12도 체온 유지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43	'오락가락' 발표, 혼란 키웠다(안행부 발표)	43	부상자 2명 중상, 대부분 경상(중계차)/목포 한국병원
44	서해해경 간장 속 수색 지휘(중계차)/서해해경	44	신고 후 42분 만에 현장 도착까지(신고부터 구조시작)	44	'쾅' 소리 후 기울어···사고 되짚어 보니(재구성)
45	"전화 받아" 애끊는 가족들(가족들 표정)	45	수중 시야 20cm. 거센 물살에 구조 난항(구조 어려움)	45	출항에서 침몰까지 14시간(긴박했던 과정)
46	유족 오열 의료진도 비상(목포 한국병원)/광주	46	자체온증, 저산소증이 관건(실종자 생존 관건)	46	안갯속 유일한 출항, 권장 항로 이탈(무리한 항해)
47	순식간에 침몰 선내 아수라장(생존자들 증언)/목포	47	침몰 전 굉음.. 왜 암초 못 피했나?(사고원인)	47	격벽 적고 창문 많아 급격히 기운 듯(침몰 이유)
48	"엄마 사랑해" 애타는 메시지(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48	입항 시간 맞추려 '과속' 가능성(항로변경·과속 의혹)	48	'굉음'의 정체가 사고 단서(여러 가능성)
49	'세월호'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세월호 설명)	49	20년 된 배.. 선장은 '대리 선장'(세월호)	49	'대체 선장'이 운항, 사고 원인 조사 착수(안전기준 준수 조사)
50	안개 속 운항 암초 못 봤나?(사고원인)	50	학부모 발동동.. 영타리 통보에 분노(교육청 발표 혼선)	50	'생사의 갈림길' 긴박했던 그 순간(탈출 영상)
51	"구명보트 오작동" 결함 의혹(선박개조 의혹)	51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6살 어린이 생존자)	51	"순식간에" 구조된 이들의 육성 증언(생존자들)
52	'쿵' 굉음 2시간 반 만에···(사고 재구성)	52	해난 사고, 한 번 타지면 대형 참사(역대 선박 사고)	52	"배가 기운다···한 명이라도 더"(구조현장)
53	<이슈&토크>앵커대담(이후 수색·구조)	53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 내일 비(날씨정보)	53	육·해·공 총동원 입체 수색(구조 지원)
54	절박한 구조 요청 "침몰 중"(승객들 구조요청)	54	한일 첫 '위안부 협의'.. 여전한 평행선(협의내용)	54	현지 어민들 초기 구조의 주역(민간 어선 참여)
55	육해공 구조작업 '총 출동'(군 당국)	55	돈 돋고 압력 넣고.. 죽음 부른 '甲의 횡포'(공항공사 직원)	55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56	사고 해역 '썰물' 뱃머리 드러내(중계차)/사고해역	56	親러 만행대 무력 진압.. "내전 직전"(우크라이나)/파리	56	애타는 학부모 직접 현장으로(안산 단원고)
57	생업 제치고 구조 현장으로···(어민들 구조)	57		57	"전원 구조" 통보 등에 큰 혼란(발표 혼선)
58	"내 아이가 저곳에" 무사 기원(진도 팽목항 상황)	58		58	국내 최대, "정기 검사 이상 없었다"(세월호)
59	연락두절 학부모 '발동동'(중계차)/안산 단원고	59		59	천안함 10배 무게, 인양도 난항(인양계획)
60	다 구조됐다더니···참사 소식(발표 혼선)	60		60	미세먼지 올 들어 최고(날씨)
61	구조 집계 '오락가락' 대혼란(정부 당국)	61		61	北, '판박이' 중국산 무인기 활용했나?(추락 무인기)
62	청해진 해운 "죄송···보상 최선"(사고 여객선 선사)	62		62	'위안부' 국장급 협의 정례화 합의(한·일 협의)
63	탁하고 빠른 물살 수색 난항(실내 수색)	63		63	<단신>국토부 장관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 外
64	"물이 고여요" 탑승객 영상메시지(학생 선박내부 촬영)				
65	선체 안양 열흘 이상 걸릴 듯(인양계획)				
66	사상 최악 해상사고 우려(역대 해상사고)				
67	"참담한 심정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68	비상 근무 밤새 수색 계속(중계차)/국방부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7일 (목)

	M B C		S B S		K B S
1	이틀째 수색 비바람에 난항(구조상황)	1	안타깝게 흐른 35시간.. 시신 추가발견(구조 상황)	1	기상 악화에 구조 작업 난항(구조상황)
2	해군 "가용 전력 모두 투입"(구조계획)	2	사고 직전 급회전.. 무게중심 쏠린 듯(사고원인)	2	생존 시간 늘리려 선체 공기 주입 어떻게?(구조방법)
3	조명탄 쏘며 선체진입 안간힘(야간 구조)	3	"배 넘어갑니다".. 너무 늦었던 첫 교신(교신음성 공개)	3	'생명줄' 달고 2인 1조 수색(내부수색 방법)
4	최악 조건 구조 하루 '최대 4번'(시간대별 구조과정)	4	"학생 먼저 구하자".. 호스를 구명줄로(승객 촬영영상)	4	500명 잠수부 투입에도 수색 지연, 왜?(악화된 기상)
5	"물러설 수 없다" 필사의 구조(어민들 구조 도움)	5	선장이 먼저 탈출.. 분노한 가족들(초기대응 문제)	5	선박 구멍 뚫어 구출?…"산소 고갈 우려"(신중한 이유)
6	시속 12km 물살 최대 걸림돌(수색 난항)	6	피의자로 조사.. '조타실 이탈' 정황(사고 수사)	6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진도 팽목항
7	거센 파도 민간 잠수부 표류(MBC취재선 구조)	7	설상가상 날씨에 늦어지는 구조(사고 해역)	7	구조 활동 독려‥실종자 가족 위로(朴대통령)
8	"1분 1초가 급하다" 최선 다할 것(朴대통령, 사고해역 방문)	8	오열·절규.. "제발 살아돌아 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8	수심 35m 안팎, 해저 언덕까지(사고해역 해저지형)
9	가족들 위로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실종자 가족 만남)	9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朴대통령)	9	잠수부 한때 실종‥물살 위력 재 보니(실험 확인)
10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	10	추가 사망자는 교사·승무원(중계차)/중앙재난대책본부	10	'기회' 하루 4번, 유속 금세 빨라져(수색 적기)
11	시간은 흐르는데 공기주입 난항(구조방법)	11	슬픔에 잠김 안산의 빈소(중계차)/고대안산병원	11	엇갈린 정조 시간 논란(구조당국 VS 해양조사원)
12	산소가 관건 사나흘이 한계(생존 관건)	12	"가만 있어라" 안내 방송, 영업직원이..(수습과정)	12	수온·조류·수압, 구조 3중고(구조 난항)
13	기적의 생존 언제나 있다(해외 사례)	13	구명보트 42척, 써보지도 못한 채(구명벌)	13	이 시각 사고 해역 선상(중계차)
14	사고 직후 배 안팎 상황은?(실종자 위치)	14	우왕좌왕 90분, 신고조차 승객이..(선원들 대응)	14	무리한 급회전 사고 불렀나?(사고원인)
15	비바람 거친 파도 "접근 힘들다"(중계차)/사고해역 선상	15	안전수칙 위기대응, 제대로 된 게 없어(선원들 대응)	15	직접적 원인? 급선회 왜?(여러 가능성)
16	"배 밑에 들어가는 수밖에"(수중구조작업 지휘관)	16	'골든타임' 놓쳐 화 키웠다(초동대처)	16	"빠르고 거친 조류고 침몰 가속화"(침몰 영향)
17	시신 도착 병원 유족 애통(중계차)/목포한국병원	17	'3류' 정부 대책본부.. 계속된 갈팡질팡(정부 대응)	17	배 무게 1/6 화물, "쏠리면서 균형 잃은 듯"(침몰 원인)
18	병상 위 학생들 '정신적 충격'(중계차)/고대안산병원	18	'전원구조' 발표, 진원지는 해경(단원고 학생들)	18	후미 수직 증축 객실로‥사고 연관 의혹(세월호 개조)
19	차가운 시신으로‥가족 오열(유가족 표정)	19	선체 진입로를 확보하라(수중탐색)	19	3등 항해사가 사고 구역 키 잡아(사고의혹)
20	세월호 선장 승객 두고 탈출(사고 초기 대응)	20	잠수요원 집중 투입.. 악전고투(선체 수색)	20	선장·선원 상대 사고 원인 조사(중계차)/목포해경
21	"가만 있으라" 골든타임 날렸다(선내 안내방송)	21	물살 약할 때, 다 합쳐야 3시간(구조 가능한 시간)	21	"배 넘어가 있습니다" 첫 조난 교신 공개(음성파일 공개)
22	구명벌 사용 '안'했나 '못'했나(구명보트)	22	배 꼬리, 펄 위에 박혔다(선박 상황)	22	조난 신고 7분전 이미 이상 징후(초기대응 문제)
23	"배 넘어간다" 다급한 첫 교신(교신음성 공개)	23	남아있는 공기층 '에어포켓' 찾아라(선박 구조)	23	"움직이지 마세요" 잘못된 안내방송(피해 확대)
24	이 시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중계차)/목포	24	"쾅 소리 나기 전 이미 기울었다"(침몰원인)	24	급박한 순간 필사의 탈출 장면(승객 촬영영상)
25	부실한 승선 관리 혼란 키웠다(탑승인원 집계)	25	첫 굉음 정체.. 암초? 선박내 화물?(여러 가능성)	25	천 명도 탈 구명정 수 딱 2대만 펴져(구명보트)
26	경영난에 무리한 운항 했나?(청해진 해운)	26	'GPS 좌표·항로'로 본 항적(세월호 행적)	26	승객 남아 있는데 선장은 탈출(무책임 비난)
27	무책임 부주의 대형사고 불러(과거 선박사고들)	27	확 바뀐 '배꼬리'.. 두 차례 증축(세월호 구조개조)/도쿄	27	선장 등의 대응 따라 결과 '극과 극'(과거 사례)
28	급선회에 기우뚱 "조타기 고장"(사고원인)	28	치솟은 강력한 물기둥, 원인은?(사고영향)	28	'승객 대피' 매뉴얼 대로 했나?(선박 사고)
29	20년 된 배 "팔 때와 모습 달라"(日 세월호 제조사)/도쿄	29	제목 없음(앵커 대담. 선체 진입 관련)	29	최종 탑승자 475명, 파악 왜 늦었나?(해운사)
30	객실 늘리려 뒤편 집중 개조(세월호 개조)	30	"승객 탈출 돕다가 끝내 자신은.."(승무원 故 박지영)	30	"전원 구조" 문자‥혼란 확산(발표 혼선)
31	승객 귀에 들린 '쿵' 정체는?(화물소리 추정)	31	"초콜릿 사올게요"약속 지킬 수 있기를(탑승자들 문자)	31	수학여행 등 '안전 매뉴얼' 허술(교육부)
32	"제발 살아오기를"애타는 가족들(가족들, 팽목항)	32	동창생 환갑 여행길이..(실종자 사연)	32	이 시각 상황은?(중계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3	애끓는 슬픔 가약 없는 기다림(가족들, 진도실내체육관)	33	이 와중에 '구조 동영상' 사칭 사기(스미싱 문자)	33	구명조끼 친구 주고‥다른 친구 구하려(단원고 정차웅)
34	실종자 가족 올리는 가짜 SNS(허위 문자들)	34	맹골수도, 10년 동안 사고 58차례(주변 해난사고)/KBC	34	"너희들 먼저" 살신성인 박지영 씨(승무원 박지영)
35	"너희들 먼저" 숭고한 희생(승무원 故 박지영)	35	생업 중단하고 구조나선 어민들(구조 동참)	35	"살아서 보자" 끝까지 서로 격려(학생들 문자)
36	친구에게 구명조끼 벗어주고‥(단원고 故 정차웅 학생)	36	인양 크레인 내일 도착.. 두달 걸릴 듯(인양 전망)	36	학생 20여 명 구한 용감한 승객들(승객 김홍경)

37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승객 김홍경)	37	60시간 만에 극적 구조 사례도(해외 사례)	37	홀로 구조된 어린이 안타까움 더 해(6살 생존 어린이)
38	이틀째 뜬눈 피 말리는 기다림(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38	기적도 참사도 '선장 리더십'에..(유사 사례)	38	초등 동창 환갑 여행‥생사 아내워(실종자 사연)
39	안양될 때마다 무너지는 가슴(팽목항의 하루)/목포	39	3년 전에도, 3주 전에도.. 고장·사고(청해진해운 사고)	39	사고 발생 36시간 살붙 같은 학망 안고‥(실종자 가족들)
40	추운 바다 "대답 없는 내 아이"(가족들 사고현장 방문)	40	수학여행 매뉴얼 안 지켰다(단원고)	40	침몰 선박서 72시간 만에 구조되기도(해외 사례)
41	온 학교에 슬픔 다음주까지 휴교(중계차)/단원고	41	마·중·일 "깊은 애도.. 신속 지원"(해외 반응)/워싱턴	41	온 국민 한마음 '실종자 생환하길‥'(국민들 표정)
42	밤새 뜬눈으로 제발 살아 있길 ·(단원고, 촛불기도회)	42	안타깝게 흐른 35시간.. 시신 추가발견(구조 상황)	42	실종자 가족과 한마음‥지원봉사 발길(전국 지원 행렬)
43	'세월호' 현재 상태는?(양카대담, 선박상태)	43	사고 직전 급회전.. 무게중심 쏠린 듯(사고원인)	43	"살아 있다" SNS 확산·확인 안 돼(허위 문자)
44	인양선 내일 도착 '구조' 우선(인양 계획)	44	"배 넘어갑니다".. 너무 늦었던 첫 교신(교신음성 공개)	44	'구조 동영상' 문자, 알고 보니 스미싱(문자 사기)
45	선체 인양 한 달 이상 걸릴 듯(인양 과정)	45	"학생 먼저 구하자".. 호스를 구명줄로(승객 촬영영상)	45	구조 학생들 사고로 심리적 충격(생존자들 치료)
46	인양 어떻게? 기상이 변수(인양 방법)	46	선장이 먼저 탈출.. 분노한 가족들(초기대응 문제)	46	정신적 충격 조기 치료 중요(외상후스트레스장애)
47	사고해역 바바람 주말도 악조건(주변 해역 날씨)	47	피의자로 조사.. '조타실 이탈' 정황(사고 수사)	47	일본서 18년 운항, 기름 유출 사고만(세월호)
48	구조작업 어떻게 진행되나?(양카대담, 이후 구조)	48	"가만 있어라"안내 방송, 영업직원이..(수습과정)	48	여객선 4척 운영‥적자 등 경영난(청해진해운)
49	학부모 불안 "수학여행 폐지"(학부모들 청원)	49	구명보트 42척, 써보지도 못한 채(구명벌)	49	이 시각 사고 해역 선상(중계차)
50	섬여행 줄줄이 취소 "배 안타요"(선박 예약 취소)/경남	50	우왕좌왕 90분, 신고조차 승객이..(선원들 대응)	50	무리한 급회전 사고 불렀나?(사고원인)
51	절박했던 구조 순간(양카대담, 승객 촬영영상)	51	'3류' 정부 대책본부.. 계속된 갈팡질팡(정부 대응)	51	직접적 원인? 급선회 왜?(여러 가능성)
52	선거 일정 중단 수습 지원 총력(정치권)	52	설상가상 날씨에 늦어지는 구조(사고 해역)	52	"빠르고 거친 조류고 침몰 가속화"(침몰 영향)
53	각국 애도 "모든 지원할 것"(각국 반응)	53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朴대통령)	53	배 무게 1/6 화물, "쏠리면서 균형 잃은 듯"(침몰 원인)
54	이틀째 수색 비바람에 난항(구조상황)	54	오열·절규.. "제발 살아돌아 와"(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54	후미 수직 증축 객실로‥사고 연관 의혹(세월호 개조)
55	최악 조건 구조 하루 '최대 4번'(시간대별 구조과정)	55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 본부(중계차)	55	3등 항해사가 사고 구역 키 잡아(사고의혹)
56	승객 대부분 3·4층에 있었다(세월호 구조)	56	LA공항 착륙 후 시설과 충돌.. 날개 파손(대한항공 여객기)	56	"배 넘어가 있습니다" 첫 조난 교신 공개(음성파일 공개)
57	시속 12km 물살 최대 걸림돌(수색 난항)	57		57	조난 신고 7분전 이미 이상 징후(초기대응 문제)
58	"1분 1초가 급하다" 최선 다할 것(朴대통령, 사고해역 방문)	58		58	"움직이지 마세요" 잘못된 안내방송(피해 확대)
59	가족들 위로 "구조에 최선"(朴대통령, 실종자 가족 만남)	59		59	급박한 순간 필사의 탈출 장면(승객 촬영영상)
60	세월호 선장 승객 두고 탈출(사고 초기 대응)	60		60	천 명도 탈 구명정 수 딱 2대만 펴져(구명보트)
61	구명벌 사용 '안'했나 '못'했나(구명보트)	61		61	승객 남아 있는데 선장은 탈출(무책임 비난)
62	제목 없음(가족들 표정, 팽목항)	62		62	구명조끼 친구 주고‥다른 친구 구하려(단원고 정차웅)
63		63		63	"너희들 먼저" 살신성인 박지영 씨(승무원 박지영)
64		64		64	학생 20여 명 구한 용감한 승객들(승객 김홍경)
65				65	홀로 구조된 어린이 안타까움 더 해(6살 생존 어린이)
66				66	초등 동창 환갑 여행‥생사 아내워(실종자 사연)
67				67	촛불에 소망 담고, 쪽지에 기원 담아(단원고 촛불문화제)
68				68	<단신> 정부, 외국인 승선자 정보 해당국 통보 外
69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8일 (금)

	M B C		S B S		K B S
1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세월호 생존자)	1	선체에 공기 주입.. 출입문은 열었다(수색상황)	1	사고 사흘째‥하늘서 본 구조 현장(헬기스케치)
2	침몰 사흘 만에 화물칸 진입(구조상황)	2	일단 들어가기는 갔지만 장애물 가득(선체진입)	2	진입‥14분 만에 철수‥3층 진입 시도(구조상황)
3	줄 끊겨 14분 만에 철수(선실 진입)	3	선체 진입, 유도선·생명줄 이어가면서(진입 방법)	3	"선내 진입" 번복‥혼선 계속(정부, 발표 혼선)
4	칠흑같은 해저 진입로 확보 사투(확보 방법)	4	세월호, 뱃머리까지 다 잠겼다(침수 이유)	4	선체 '공기 주입' 작업 계속(진행상황·효과)
5	희망의 불씨 공기 주입 성공(효과)	5	장비·인원 총동원.. 필사의 수색(리프트백 설치)	5	'에어 포켓' 가능성‥문제는 시간(생존 가능성)
6	크레인 도착 가족 동의 뒤 인양(인양 절차)	6	"일분일초가 아쉽다".. 긴박한 구조(구조모습)	6	거센 물살에 무인 로봇도 무력(투입 실패)
7	세월호 완전 침수 이유는?(현재 상황)	7	경력 1년 '3등 항해사'가 지휘했다(사고원인)	7	동시다발 잠수 위험해 랠레이식 수색,소수 잠수 이유)
8	"부력 키워라" 리프트백 설치(부력 유지 용도)	8	승객은 머물러라.. 선원은 대피하라(운항규정 준수여부)	8	사고 해역 들어가 보니‥"거친 물살"뿐(KBS 촬영)
9	여객선 주변 유속 빠르고 '암흑'(수중상황 촬영)	9	먼저 탈출한 선장, 카메라에 찍혔다(영상 공개)	9	세계 최고 간판 차, 급류까지 걸릴돌(사해 조수 간만차)
10	'선내진입' 발표 번복 또 혼선(구조당국)	10	선장 구속영장.. 무기징역까지 가능(수사상황)	10	내일 다시 강한 바람‥거센 파도(날씨 전망)
11	공기 주입부터 선체 진입까지(시간대별 상황)	11	구조됐던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자책)	11	뱃머리까지 침수‥이유는?(무게·공기유출)
12	세월호 선장 구속영장 청구(중계차)/서해해경	12	실종자들 '구조자 명단'에 올려놓다니..(발표 엇박자)	12	침수 방지 대형 공기주머니 설치(기대효과)
13	상공에서 본 구조현장(헬기스케치)	13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 이래서야(정부혼선)	13	해상 크레인 4대 도착, 수색·인양 병행(대기상황)
14	침몰 사흘째 한계 다가오는데‥(생존 가능시간)	14	총체적 갈팡질팡.. 제 역할 못하는 정부(정부 대응)	14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15	우측 선실 에어포켓 가능성 커(생존자 위치추정)	15	과적도 원인?.. "얼마나 실었는지 모른다"(선적량 모호)	15	첨단 탈출 장비 사용 못 해(세월호 장비들)
16	늘어나는 사망자 온국민 애타다(사망자 확인 추가)	16	급선회에 '화물 묶은 줄' 풀렸나(복원력 미작동 원인)	16	반별 선실 배정 따라 생존자 수 차이(숙소 위치)
17	선체 재진입 총력 시도(중계차)/사고해역	17	너무 닮은 사고, 2009년 일본에 있었다(日 사례)/도쿄	17	실종자 가족과 통화 "구조 최선"(朴대통령)
18	내일 오후부터 또 기상악화(수색 영향)	18	부실한 화물적재.. 추정원인도 비슷(日 사고원인 비교)	18	생사 갈림길에서 "어르신·여성 먼저"(탈출 도움 사연)
19	대형 구조함 접근 어려워(구조 영향 우려)	19	한·일 닮은꼴 사고, 연관성 있는 듯(日 사고조사 결과)	19	끝까지 제자 돕다‥참 선생님들(사망자들 사연)
20	구조 함정 수병 사고로 중태(전기작업 중)	20	좁은 선폭, 국제해사기구 '위험'경고(로로선 위험성)	20	안산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
21	세월호 인양에 '플래팅 독' 투입(용도)	21	잠수 한 번에 작업시간은 12분(수색 지연 이유)	21	제자들의 축하 속 마지막 생일(김초원 교사)
22	실종자 가족 대국민 호소문(중계차)/진도실내체육관	22	직접 본 맹골수도.. 탁한 시야·거센 물살(SBS 취재)	22	'말기암' 아버지 애타는 부정(실종자 아버지)
23	"얼굴만이라도‥"눈물의 팽목항(사망자 인양)	23	크레인 4대 도착.. 사고 해역 대기 중(인양 시기 예상)	23	세월호에서 사랑의 시작과 끝을‥(사망자 사연)
24	"친구야 돌아와" 하루종일 침통(중계차)/안산 단원고	24	先구조 後인양.. 안전 인양의 조건은(인양방법)	24	단원고 탁구팀 눈물의 우승(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25	50년지기 친구야! 눈에 선한데‥(승선자 사연들)	25	크레인 출발 지연.. 황당한 이유(해경 판단오류)	25	구명조끼 입고도 참변‥'안타까움 더해'(사진 추가 인양)
26	"모두가 가족" 줄 잇는 자원봉사(곳곳 현장지원)	26	실종자 수색 밤에도 계속(중계차)/진도 팽목항	26	사고 60시간‥애타는 마음들(실종자 가족들)
27	생존 학생들 심리 치료 시작(중계차)/고대 안산병원	27	"제발 살아있기를.." 애타는 가족(중계차)/진도 실내체육관	27	이 시각 팽목항‥구조 현황은?(중계차)
28	조타실 누가 있었나?(사고 당시)	28	"무사히 돌아오세요.," 촛불집회(안산 단원고)	28	눈물 속 추모 발길 이어져(빈소표정)
29	신참 3급 항해사 운항 적절했나?(운항 적절성 논란)	29	구조된 학생들도 불안증세(중계차)/고대 안산병원	29	"무사 귀환" 기원의 빛 전국으로(촛불모임)
30	세월호 선장 사고 순간 어디에?(선장 행적)	30	비도 바람도 그친 사고해역(헬기스케치)	30	슬픔에 잠긴 안산‥지역 시민도 충격(안산시 표정)
31	침몰 순간 승무원들 어디에?(선원들 행적)	31	학생들 생명 구한 따뜻한 마음(화물차 기사)	31	조계종,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축소/@
32	"선수 컨테이너 침몰 주요 원인"(침몰 영향)	32	"생명의 은인 찾고 싶어요"(할머니 구한 청년)	32	"불안" 선박 여행 잇달아 취소(예약 취소)
33	4층 출입문 탈출에 불리(학생 피해 증가)	33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행사 축소·연기)	33	수학여행 폐지 논란까지(개선요구)
34	애 선생님‥ 끝까지 제자 구조(생존 학생들 증언)	34	선체에 공기 주입.. 출입문은 열었다(수색 현황)	34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 '엉터리'(선장 작성)
35	왼쪽으로 전복, 우측 선실 최악(피해 차이)	35	일단 들어가는 갔지만 장애물 가득(선체진입)	35	대피 훈련 소홀‥감독 기관 책임 미루기(해수부 vs 해경)
36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역'(세월호 선장)	36	선체 진입, 유도선·생명줄 이어가면서(진입 방법)	36	구명정 안전 '정상'‥부실 검사?(안전검사 성적표 공개)

37	청해진해운 압수수색(합동수사본부)	37	세월호, 뱃머리까지 다 잠겼다(침수 이유)	37	"11년 전과 여러모로 닮은꼴"(대구 지하철 화재 비교)
38	"죽을죄 지었다" 대처 미흡 여전(청해진해운 대표)	38	장비·인원 총동원.. 필사의 수색(리프트백 설치)	38	대형 참사 반복 뭘 배웠나?(정부 사후대책)
39	나흘 만에 구출 기적은 있다(日 사례)/도쿄	39	교감 숨진 채로.. "모든 책임지고 가겠다"(자책, 자살)	39	사망·실종자 등 인원 변동 긴급 발표(정부 발표)
40	'한국 위해 기도' 누리꾼들 추모(전세계 네티즌)	40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 이래서야(정부혼선)	40	신고 7분 전 신호 '뚝' 무슨 일이?(사고 전후 항적)
41	"승무원들 대처 이해 안 돼"(해외 선박 전문가들)	41	실종자들 '구조자 명단'에 올려놓다니..(발표 엿본자)	41	남진하던 세월호 뱃머리는 북서쪽(조류 영향)
42	'카페리' 선박 안전에 취약(연안 여객선 안전기준)	42	총체적 갈팡질팡.. 제 역할 못하는 정부(정부 대응)	42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수사상황)
43	선체 재진입 총력 시도(중계차)/사고해역	43	먼저 탈출한 선장, 카메라에 찍혔다(영상 공개)	43	조선소, 인천항만청도 압수수색(수사상황)
44	객실까지 어떻게 진입하나?(앵커대담, 구조작업)	44	선장 구속영장.. 무기징역까지 가능(수사상황)	44	본업 외 사업 확장…로비 의혹까지(청해진 해운)
45	"뱃길 여행 두렵다" 취소 속출(예약·행사 취소)	45	경력 1년 '3등 항해사'가 지휘했다(사고원인)	45	민간 잠수부 지쳐 '파문 발언' 내사 착수(홍모씨 발언 논란)
46	안전 불감증 위험천만 여객선(남해안 여객선 운행실태)/경남	46	"무사히 돌아오세요.," 촛불집회(안산 단원고)	46	탑승 476명·구조 174명/@
47	각국 정상 "깊은 애도"(오바마·시진핑 外)/베이징	47	학생들 생명 구한 따뜻한 마음(화물차 기사)	47	"한 달 걸릴 듯"…인양 어떻게?(인양 과정)
48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	48	"생명의 은인 찾고 싶어요"(할머니 구한 청년)	48	해상 크레인, 힘과 균형이 관건(크레인 역할)
49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세월호 생존자)	49	옷장에 붙인 'SEWOL'.. 구조에 1억 기부(류현진·추신수)	49	탑승 476명·구조 174명(정부 발표 변경)
50	줄 끊겨 14분 만에 철수(선실 진입)	50	이 와중에 사기 문자.. 정말 나쁜 사람들(스미싱 문자)	50	물 찼다면 만 톤, 수심·조류도 악조건(인양 난관)
51	칠흑같은 해저 진입로 확보 사투(확보 방법)	51	과적도 원인?.. "얼마나 실었는지 모른다"(선적량 모호)	51	각국 정상 등 "깊은 애도", 지원 약속(오바마 外)
52	희망의 불씨 공기 주입 성공(효과)	52	급선회에 '화물 묶은 줄' 풀렸나(복원력 마작동 원인)	52	"한국을 위해 기도" 태국 국민도 한마음(생환 기도 행사)/방콕
53	크레인 도착 가족 동의 뒤 인양(인양 절차)	53	너무 닮은 사고, 2009년 일본에 있었다(日 사례)/도쿄	53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54	"부력 키워라" 리프트백 설치(부력 유지 용도)	54	부실한 화물적재.. 추정원인도 비슷(日 사고원인 비교)	54	해경 "잠수부 객실 근처 3층 진입 성공"/@
55	상공에서 본 구조현장(헬기스케치)	55	좁은 선폭, 국제해사기구 '위험' 경고(로로선 위험성)	55	탑승 476명·구조 174명(정부 발표 변경)
56	침몰 사흘째 한계 다가오는데…(생존 가능시간)	56	잠수 한 번에 작업시간은 12분(수색 지연 이유)	56	선체 '공기 주입' 작업 계속(진행상황·효과)
57	우측 선실 에어포켓 가능성 커(생존자 위치추정)	57	직접 본 맹골수도.. 탁한 시야·거센 물살(SBS 취재)	57	사고 해역 들어가 보니…"거친 물살"뿐(KBS 촬영)
58	세월호 인양에 '플로팅 독' 투입(용도)	58	크레인 4대 도착.. 사고 해역 대기 중(인양 시기 예상)	58	해경 "잠수부 객실 근처 3층 진입 성공"(긴급 브리핑)
59	"얼굴만이라도…"눈물의 팽목항(사망자 인양 시)	59	先구조 後인양.. 안전 인양의 조건은(인양방법)	59	뱃머리까지 침수…이유는?(무게·공기유출)
60	50년지기 친구야 눈에 선한데…(승선자 사연들)	60	이 시각 진도 팽목항(중계차)	60	해상 크레인 4대 도착, 수색·인양 병행(대기상황)
61	신헌 대표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롯데홈쇼핑)	61	제한없는 '여객선 증축'.. 이런건 규제해야(선박안전법 한계)	61	실종자 가족과 통화 "구조 최선"(朴대통령)
62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성공(국내 연구진)	62	수학여행 취소하고 싶은데..(위약금 문제)	62	생사 갈림길에서 "어르신·여성 먼저"(탈출 도움 사연)
63	줄기세포 치료제 전망과 과제는?(질병치료 영향)	63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전염 우려(사고 트라우마)	63	끝까지 제자 돕다…참 선생님들(사망자들 사연)
64	아라크 '한국 기업 진출' 희망(아라크 총리 인터뷰)	64		64	안산 단원고 교감 숨진 채 발견/@
65	단원고 탁구부 눈물의 '우승컵'(종별탁구선수권)	65		65	'말기암' 아버지 애타는 부정(실종자 아버지)
66	"힘이 될 수 있기를"(류현진·추신수)			66	세월호에서 사랑의 시작과 끝을…(사망자 사연)
67	이 시각 중앙재난대책본부(중계차)			67	단원고 탁구팀 눈물의 우승(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68	이 시각 수색 상황은? (중계차)/사고해역
				69	<단신>"직장인 62% 건강보험료 12만 6천 원 더 내야"外
				70	"국민들게 힘을"(류현진, 추신수)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19일 (토)

	M B C		S B S		K B S
1	선장 구속 도주선박 첫 적용(선장 구속·도주 선박 협의)	1	선내 수색 동영상 공개..3층 통로 확보(수중동영상 공개..3층 진입)	1	4층 객실서 시신 발견…수습은 못 해(객실 첫시신 확인)
2	"먼저 탈출하지 않았다"("먼저 탈출 안 했다")	2	수중 장애물에 내부 진입 또 미뤄(장애물 탓 내부 진입 또 난항)	2	선내 진입 번번이 실패, 왜?(선내 진입 난항, 왜?)
3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첫 지휘(맹골수로 첫 조타 지휘)	3	공기주입 안간힘..계속 기포없는 선체(사력 다하는 공기주입)	3	선내 진입 수색··조타실 식당칸 집중(조타실 식당칸 총력)
4	생존 승무원 줄 소환(생존 선원 줄소환)/서해VTS항해경력철청	4	이 시각 구조 현장(이 시각 동거차도)/동거차도	4	선내 진입·수색 어디로, 어떻게?(수색 어디로, 어떻게?)
5	누가 남으라고 지시했나?(대기하라 누가 지시?)	5	이 시각 진도 팽목항(이 시각 팽목항)/팽목항	5	뱃머리 수면 아래·왼쪽 바닥 닿아(공기주머니 차질)
6	6번 바뀐 발표 계속되는 혼선(또 수정··집계 오락가락)	6	저인망 어선까지..유실 막아래(저인망 어선까지 동원)/팽목항	6	가라앉은 세월호···구조·인양 영향은?(가라앉은 선체)
7	진도·안산 재난지역 선포 하나?(재난지역 선포 검토)	7	더딘 구조에 불만..DNA 채취 응해(더딘 구조)/진도 실내체육관	7	희생자 유실 막을 저인망 어선 투입(저인망어선 투입)
8	<팽목항>4층 객실 시신 4구 확인(4층 객실 시신 3구 발견)	8	거칠어진 바다..그래도 끝까지 찾는다(거칠어진 바다..수색난항)	8	"수색 범위 최대 20Km로 확대해야"(수색 범위 확대해야)
9	최악의 시야 창문 통해 발견(객실 창문 통해 확인)	9	선장의 뻔뻔한 변명..檢 "퇴선명령 없었다"(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9	구조 수색 아이다어 다이빙벨 논란(다이빙벨 투입 논란)
10	수면에서 10미터 더 내려갔다(10m 내려갔다)	10	해경, 세월호 교신내역 왜 공개 않나(내심찔은 교신내역 바공개)	10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 현장은?)/사고 해역
11	"에어포켓 있을 가능성 높다"("에어포켓 가능성 높다")	11	급회전-화물쏠림-전복에 무게(급회전-화물 쏠림으로)	11	내일 오전까지 거센 바람·파도(악천후 내일 호전)
12	수중 수색 영상 첫 공개(수중영상 첫 공개)	12	승무원 "화물 제대로 묶지 않았다"("화물 제대로 안 묶었다")	12	기름도 유출, 수색에 방제까지(기름까지 유출, 확산)
13	사고주변 8Km 긴 기름띠(8Km 기름띠 번져)/헬기	13	안타까운 유서 "제자 생사 모르는데.."(숨진 교감 유서)	13	세월호 기름 200톤 "유출 더 커질 위험"(기름 유출 위험)
14	선내 진입 필사적 시도(선내 진입 다시 시도)	14	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한심한 정부(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	14	수색 요원·장비, 민관군 혼성 배경 달라(민관군 혼성)
15	2백미터 그물 시신 유실 막는다(저인망 어선 투입)	15	상황은 긴급한데..53분간 아무 조치 없었다(보고 신경쓰다 기능상실)	15	대규모 투입에도···지휘 체계 문제 있나?(지휘체계 문제 있나?)
16	공기 주머니 설치도 중단(리프트백 설치 중단)	16	피해 키운 官災..최악사고에 최악대응(최악의 대응)	16	美 재난 상황 "신속한 현장 지휘"(구조 현장 지휘는?)
17	거친 바다에 또다시 발목(거친 바다 또 발목)	17	1,500억 구조함, 진수식까지 해놓고..(진수식까지 해 놓고선)	17	다섯 번 잡계 번복, 시스템이 문제(시스템 문제)
18	<단독>경보기 작동법도 몰랐다("경보기 작동법도 몰라")	18	조타수 "내가 돌린 각도보다 더 돌았다"(전속력 급회전 왜?)	18	"천안함 혼선"···미숙한 대응 되풀이(우왕좌왕 되풀이)
19	선장부터 어긴 비상시태 매뉴얼("비상시태 매뉴얼 무시")	19	증언으로재구성한우왕좌왕의순간(퇴선명령했어도...)	19	수중 수색 공개···"진척 없어 답답"(수중 수색 화면 공개)
20	안개 때문에 항해사 바꿨다(지연출항·항해사 바꿔에)	20	더딘 구조 답답한 마음..작업시간 25분 뿐(더딘 구조)	20	실종자 확인 위해 가족 DNA 채취(DNA 샘플 채취)
21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감독(영터리 보고서 제출)	21	하늘에서 본 사고해역..기름띠까지(기름띠에 공기주머니 둥둥)	21	"조타기 빨리 돌아"…고장 여부 등 수사("조타기 빨리 돌았다")
22	세월호 공용 채널 안썼다("공용 교신 채널도 오프")	22	"인양은 가족 동의 후에"..또 다른 난제(또다른 난제)	22	"해경 여객선 점검 시간 1척당 13분"/@
23	닮은 꼴 사고에도 전원 구출(같은 사고, 다른 결과)/도쿄	23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검토(특별재난지역 검토)	23	선령 30년 연장···사고 위험성 높여(노후 선박 왜 늘었나?)
24	아! 선생님 눈물 속 발인("눈물의 영결식")	24	안산의 장례식..구조학생들도 불안증세(일부 장례진행)/고려대 안산병원	24	日, 안전 우려 '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도쿄
25	시신 확인도 오락가락(비번 시신·무너진 억장)	25	"꼭 살아오길"..확산되는 희망의 메시지("희망의 끈 놓지 말라")	25	안전 허점 "알고도 조치 없었다"("내항선 허점 알았다")
26	실종자 가족 DNA 채취(가족 DNA 채취)	26	사흘째 사기문자.."유언비어도 처벌"(혼란 노린 문자사기)	26	탑승자 수 확인 "주먹구구"(주먹구구 탑승자 확인)
27	촛불 모아 무사귀환 기원(촛불기도)/안산 화랑유원지	27	사고 뒤에도 여전한 주먹구구 탑승관리(주먹구구 탑승관리)	27	몰래 탑승자 등 승선자 파악 허점(몰래 탄 사람 등 허점)
28	시간이 멈춘 듯 슬픔의 도시(슬픔에 잠긴 안산시)	28	숙연한 주말..주말 나들이객도 줄었다(나들이객 줄었다)	28	업체 이익단체, 안전운항관리자 선임(자기배, 자기가 감독?)
29	커지는 충격에 호흡곤란도(정신적 충격 보살펴야)	29	선박안전을 해운사가 감독하다니..(이익단체가 안전관리)	29	높은 무게 중심, 복원력 떨어져(높은 중심, 복원력 취약)
30	온 국민이 함께 아프다("온 국민 함께 아프다")	30	이 시각 진도 팽목항(이 시각 팽목항)/진도 팽목항	30	연 4차례 사고, "기피 항로"("기피 항로")
31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상황)/세월호 침몰 해역기LTE	31	저인망 어선까지..유실 막아래(저인망 어선까지 동원)	31	가까운 곳 두고, 먼 곳 신고 더 늦어져(먼 곳에 신고)
32	세월호 급하게 방향 튼 이유는?(급선회한 이유는?)	32	더딘 구조에 불만..DNA 채취 응해(더딘 구조)/진도 실내체육관	32	명목 뿐인 위기 훈련··예산도 거의 없어(평소 훈련은 했나?)
33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 빠른 곳(거센 조류 맹골수도)	33	거칠어진 바다..그래도 끝까지 찾는다(수색난항)	33	"초기 탈출 쉽게" 갑판에 구명조끼(유럽 "초기 탈출 쉽게")/미르세유
34	줄줄이 실려니 3분 뒤 출항(화물점검 있었나?)	34	이 시각 구조 현장(이 시각 동거차도)/동거차도	34	선장 등 3명 구속 회사로 수사 확대(3명 구속··수사 확대)
35	"화물 묶을 새도 없었다"(컨테이너 쏠려 균형 상실)	35	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한심한 정부(8번째 바뀐 구조자 숫자)	35	검찰, 선장에 뺑소니 혐의 첫 적용(선장에게 뺑소니 첫 적용)
36	안전 교육에 54만원 썼다(비상훈련도 부실 의혹)	36	피해 키운 官災..최악사고에 최악대응(최악 대응)	36	선박직 선원 전원 탈출(선박직만 전원 탈출)

37	1억 주면 꺼내준다 브로커 기승(구조 미끼 금전요구)	37	53분간 無조치..이래놓고 재난안전본부(보고 신경쓰다 기능상실)	37	신혼여행 중국 동포 '취소 못 해 사고'(안타까운 신혼여행)
38	구조 방해 혼선 수사 착수(논란 일으키고 잠적)	38	1500억 구조합, 진수식까지 해놓고..(진수식까지 해 놓고선)	38	희생자 첫 발인, 마지막 배웅(희생자 첫 발인)
39	또 스미싱 세월호 침몰 진실은?(세월호 사칭 스미싱까지)	39	안타까운 유서 "제자 생사 모르는데.."(숨진 교감 유서)	39	단원고 슬픔 나누며 "기적 일어나길"(지금 단원고는?)
40	채널A 어선 사고 해역 밝힌다(오징어 어선까지 투입)	40	선내 수색 동영상 공개..3층 통로 확보(동영상공개)	40	주변 사람도 충격, 심리 지원 시급(주변 사람도 심적 충격)
41	1초도 아깝다 구조도 첨단으로(뒤늦은 시설 투입)	41	수중 장애물에 내부 진입 또 미뤄져(내부 진입 난항)	41	온 국민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온 국민 온정 이어져)
42	수색 상황 정리(약조건에 성과 미비)/대담	42	선장의 변명..檢 "퇴선명령 없었다"(뻔뻔한 변명)	42	팽목항에 자원봉사의 손길 이어져("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43	생존자 수색이 우선(인양방법과 시간은?)	43	해경, 세월호 교신내역 왜 공개없나(미심쩍은 교신내역 비공개)	43	행사 발길 뚝..간절한 기원 물결(축제도 취소)
44	체인 걸기가 최대 관건(인양체인 설치가 관건)	44	급회전-화물쏠림-전복에 무게(급회전-화물 쏠림으로)	44	"안산사·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45	슬픔 함께 나누자 줄 잇는 조문(사진 조문 이어져/고려대 안산병원	45	조타수 "내가 돌린 각도보다 더 돌았다"(전속력 급회전 왜?)	45	국민들도 충격..청소년 더 취약(국민들도 심리 충격)
46	기다리는 가족들도 실신 속출(탈진가족 속출)/진도 실내체육관	46	급회전때 하필 조류까지 바뀌었다(조류방향도 모르고 급회전)	46	LPGA 한국선수들 "무사 구조 기원"(선수들도 구조 기원)
47	불안증세 호소 약물치료 병행(생존자 대비 비상 대기)/목포 한국병원	47	다친 구조 답답한 마음..작업시간 25분 뿐(다친 구조)	47	지구촌 곳곳 위로·응원 물결(지구촌 곳곳 위로·애도)
48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잠시 뒤 상황점검회의)/진도군청	48	하늘에서 본 사고해역..기름띠까지(기름띠에 공기주머니 둥둥)	48	실종자 조롱·문자 사기··"즉시 수사"(조롱사기··즉시 수사)
49	중국 대륙도 애도 물결(중국 덮은 애도물결)/베이징	49	"인양은 가족 동의 후에"..또 다른 난제(또다른 난제)	49	애도 빙자한 선거홍보·판촉 눈총(애도 빙자한 홍보)
50	선장 구속 도주선박 첫 적용(선장 구속·도주 선박 혐의)	50	안산의 장례식..구조된 학생들도 붙안 증세일부 장례 진행/고려 안산병원	50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 현장은?)/사고해역
51	"먼저 탈출하지 않았다"("먼저 탈출 안 했다")	51	"꼭 살아오길.."확산되는 희망의 메시지("희망의 끈 놓지 말라")	51	선내 진입 번번이 실패, 왜?(선내 진입 난항, 왜?)
52	<단독>경보기 작동법도 몰랐다("경보기 작동법도 몰라")	52	사흘째 사기문자.."유언비어도 처벌"(혼란 노린 문자사기)	52	선내 진입 수색·조타실 식당칸 집중(조타실 식당칸 총력)
53	선장부터 어긴 비상시태 매뉴얼("비상시태 매뉴얼 무시")	53	사고 뒤에도 여전한 주먹구구 탑승관리(주먹구구 탑승관리)	53	뱃머리 수면 아래·왼쪽 바닥 닿아(공기주머니 차질)
54	안개 때문에 항해사 바꿨다(지연출항·항해사 바꿔어)	54	숙연한 주말..주말 나들이객도 줄었다(행사취소..숙연한 주말)	54	가라앉은 세월호···구조·인양 영향은?(가라앉은 선체)
55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감독(영타리 보고서 제출)	55	선박 안전을 해운사가 감독하다니..(이익 단체가 안전관리)	55	"조타기 빨리 돌아"···고장 여부 등 수사("조타기 빨리 돌았다")
56	세월호 공용 채널 안쐈다("공용 교신 채널도 오프")	56	온 국민이 충격..잡단 트라우마 현상(잡단 트라우마)	56	"해경 여객선 점검 시간 1척당 13분"/@
57	닮은 꼴 사고에도 전원 구출(같은 사고, 다른 결과)/도쿄	57	같은 사고, 다른 선장..결과가 달랐다(판이한 대응)	57	선령 30년 연장··사고 위험성 높여(노후 선박 왜 늘었나?)
58	악천후 속 수색 총력(침몰 나흘째·수색 총력)	58	"선장, 배로 돌아가 구조 도와라"("구조 도와라")	58	日, 안전 우려 '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선령 20년 전 해외 매각)/도쿄
59	수중 수색 영상 첫 공개(수중영상 첫 공개)	59	年 안전교육비, 고작 1인당 4천원(1인당 4천원)	59	안전 허점 "알고도 조치 없었다"("내항선 허점 알았다")
60	공기 주입, 수색 어떻게?(공기주입 수색 어떻게?)	60	사고 날 때마다..달라진 게 없다(시행착오만 20년)	60	탑승자 수 확인 "주먹구구"(주먹구구 탑승자 확인)
61	장비 동원 총력전(장비동원 총력전)	61	안전 관리 안 되는 집단 수학여행(안전관리 취약)	61	몰래 탑승자 등 승선자 파악 허점(몰래 탄 사람 등 허점)
62	1억 주면 꺼내준다 브로커 기승(구조 미끼 금전요구)	62	스포츠도 한마음..세리머니도 자제(세리머니 자제)	62	업체 이익단체, 안전문항편리자 선임(자기배, 자기가 감독?)
63	구조 방해 혼선 수사 착수(논란 일으키고 잠적)	63		63	높은 무게 중심, 복원력 떨어져(높은 중심, 복원력 취약)
64	또 스미싱 세월호 침몰 진실은?(세월호 사칭 스미싱까지)	64		64	신혼여행 중국 동포 '취소 못 해 사고'(안타까운 신혼여행)
65	채널A 어선 사고 해역 밝힌다(오징어 어선까지 투입)			65	희생자 첫 발인, 마지막 배웅(희생자 첫 발인)
66	1초도 아깝다 구조도 첨단으로(뒤늦은 시설 투입)			66	단원고 슬픔 나누며 "기적 일어나길"(지금 단원고는?)
67	전 검찰총장 동창생 구속(17억 횡령혐의 구속)			67	주변 사람도 충격, 심리 지원 시급(주변 사람도 심적 충격)
68	공식대회 첫 양2 성공(빼어난 성적에도 비통)			68	온 국민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온 국민 온정 이어져)
69	4·19 혁명 기념일 묘지 참배/@			69	이 시각 수색 상황은?(이 시각 수색 현장은?)/사고해역선상
				70	<간추린>채동욱스폰서 의혹 동창생구속 外 4개/@
				71	종교계도 한마음 "기원"(종교계도 한마음)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0일 (일)

	M B C		S B S		K B S
1	긴박했던 31분 교신(진도와마지막교신)	1	교신공개.. '승객탈출' 명령 무시했다(교신공개.. '우왕좌왕31분')	1	교신공개…천금같은 초기 18분 낭비(천금같은 '18분' 낭비)
2	허둥대다 골든 타임 놓쳤다(허둥대다시기놓쳐)	2	허둥대기만 한 31분.. '골든타임' 날렸다(골든타임놓치고속수무책	2	교신 뒤늦게 공개…의혹 제기(교신뒤늦게공개)
3	"탈출불가능" 말만 되풀이(즉시탈출시지에도..)	3	교신은 항해사가..자리에 없었던 선장(선장아닌항해사가교신)	3	9시 14분 탈출 보트 누가 탔나?(첫구명정누가탔나?)
4	마지막 교신 뒤 필사의 탈출(필사의탈출순간)	4	드러나는 거짓말.. '허위보고' 까지(허위보고..드러나는거짓말)	4	11번교신… "승객탈출제촉에,구조가능성" (탈출제촉에 "구조가능")
5	'침몰중' 의침에 민간 어선 총집결(물고지잡다구조)	5	선장 "담배 피우러 갔다" ..의문투성이(담배피우러갔다)	5	교신 공개로 드러난 시간대별 상황(시간대별상황분석)
6	침몰 세월호 눈앞에 두고‥(거센물살이접근방해)	6	'위급' 과학한 선장연원, 끼리끼리 탈출(선장연원끼리만대피)	6	4층 객실 등 진입 희생자 대거 수습(시신잇따라수습)
7	교신 내용 왜 이제야 공개(때늦은공개이유는?)	7	제주→진도관제센터, 11분간 뭐했나(첫교신뒤11분동안 '깜깜')	7	수색 돌파구 진입 통로 5곳(통로5곳에돌파구)
8	첫 교신 후 잃어버린 12분(의문의12분)	8	승선원 SNS압수수색..사고상황조사(선원SNS확보해분석)	8	민관군 총력 수색 박차(시간싸움수색총력)
9	탑승객 대화 내용 분석(합수부, 중계차)	9	시신추가수습..불밝힌 밤샘수색(동거차도, 중계차)	9	4층 객실연층 출입구 수색 주력(3층객실연층출구 '집중')
10	청해진 임직원 10여 명 줄소환(청해진해운집중수사)	10	처음으로 선실 접근..유도선 5개확보(선실접근..유도선5개확보)	10	선체 지입에서 바다까지 입체 수색(진입연색입체작전)
11	객실 진입했지만 시신만 수습(겨우진입했지만‥)	11	선내 진입통로는 4층 객실로(유리창으로진입수색)	11	바지선 동원… "뒷북 투입" 비판(뒷북투입비판)
12	세월호 진입 긴박했던 순간(긴박했던진입순간)	12	구조 지원하던 해군병사 순직(구조지원해군병사순직)	12	구조 지원 참여 대조영함 병사 1명 숨져@
13	5곳 희망 줄 뚫었다(유도선5곳설치)	13	현장선박 200척, 어선에서 함정까지(팽목항, 중계차)	13	오늘부터 나흘간 조류약화‥수색 최적기(나흘간약한조류)
14	손도끼로 유리창 '쾅쾅'(유리창깨고선내진입)	14	구조작업 닷새째..잠수요원도 극한상태(잠수요원사투..극한상태)	14	이 시각 수색 상황은?(사고해역선상, 중계차)
15	잠수해 선체 수색 이유는?(참수수색이유)	15	지인맞어선, 바닷속 8km 그물벽(바닷속그물벽수색)	15	학생 첫 발인… "아픔 잊고 평안하길" (학생첫발인)
16	분노한 가족들 "청와대 가겠다" (청와대항의방문시도)	16	가족·총리 면담.. '청와대 행' 대치까지(진도실내체육관,중계차)	16	환한 미소만 남은 못다한 수학여행(못다한여행이야기)
17	구조 적기 앞으로 닷새(구조적기향후닷새)	17	안산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진도군청, 중계차)	17	미안하다‥부끄럽다(미안하다‥부끄럽다)
18	선장의 큰소리 "승무원 따르라" (선장과거인터뷰)	18	학생 희생자 첫 발인..심리치료 늘린다(고대안산병원, 중계차)	18	'개조 후 선체이상' 주장, "남편, 운항 꺼려" (개조후이상)
19	삼풍 땐 7년 6월 형(삼풍때와비교)	19	'친구의 실종' 이 남긴 충격(극심한충격뒤집단불안)	19	"평소에도 흔들림 심하고쉽게기우뚱" (평소에도쉽게기우뚱)
20	비슷한 참사 전혀 다른 선장(전혀다른선장)	20	수습나몰라라..뒷짐 진 청해진해운(나몰라라청해진해운)	20	급격한 '급회전' 실험해보니 위험천만(급회전실험, 위험천만)
21	침몰 전날 신참 운행 '합법'(선원법시행령개정)	21	엎친 데 덮친 해역..유출된 기름확산(세월호유출기름확산)	21	기울기 측정 '클리노미터' 도 멈췄다(클리노미터멈춰)
22	"선장 고령화 안전 위협" ("선원자질낮다" 는보고서)	22	주민도 고통.. "그래도 실종자 구조부터" (슬픔에빠진진도)	22	"떨어지고 쏠리고" …화물 고정 안해(화물고정엉터리)
23	제2사고 막자 꼼꼼히 살피자(철저해진운항권리)	23	모여드는온정.. "의료진도움이필요해요" (자원봉사행렬..의료인력난)	23	차량 결박도 규정 위반 의혹(느슨한결박확인)
24	안산연도 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24	계속되는 세월호 '문자사기' ..속지마세요(교묘해진세월호문자사기)	24	3분 넘게 정전…비상 발전기 결함 의혹(비상발전기결함?)
25	사회적 재난 특별 지원(사회적재난특별지원)	25	허위인터뷰 女, 잠수자격증도 없었다(잠수자격증도없으면서..)	25	정전 3분 36초 세월호에 무슨 일이?(정전분여, 무슨일이?)
26	수색 지원 해군도 끝내 사망(해군병사끝내숨져)	26	軍 "美잠수함 충돌 운운은 유언비어" (잠수함충돌유언비어)	26	사고 당시 카카오톡 내용 확보 분석(당시카톡확보, 분석)
27	사고 후 108시간 치열한 구조작업(치열한구조현장, 헬기)	27	있으나마나한 '정부재난대응체계' (유명무실새대응체계)	27	"선실 대기" 누가 지시?책임은?(선실대기누가지시?)
28	수색 빨라지는 이유는?(수색빨라지는이유는?)	28	교신공개.. '승객탈출' 명령 무시했다(교신공개.. '우왕좌왕31분')	28	작동 안 한 구명정 "페인트 덧칠" (선박용페인트덧칠)
29	세월호 어떻게 띄우나?(플로팅독국내첫시도)	29	허둥대기만 한 31분.. '골든타임' 날렸다(골든타임놓치고속수무책	29	구조 불만 항의 나서, 경찰 대치(실종자가족경찰대치)
30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첫발인… '눈물바다')	30	교신은 항해사가..자리에 없었던 선장(선장아닌항해사가교신)	30	눈도장 찍기 방문 논란, 구경꾼까지?(눈도장찍기방문논란)
31	"기적을 기다립니다" (부활절‥ '눈물의기도')	31	드러나는 거짓말.. '허위보고' 까지(허위보고..드러나는거짓말)	31	충격에 건강악화, 환자 속출(실종자가족건강악화)
32	이픔나누자 자원봉사 밀물(자원봉사 '한마음')	32	승선원 SNS압수수색..사고상황조사(선원SNS확보해분석)	32	김기춘, "실종자 가족 위해 의료진 보강" @
33	숨죽인 주말 줄줄이 축제 취소(축제취소, 텅빈영화관)	33	시신추가수습..불밝힌 밤샘수색(동거차도, 중계차)	33	책만으로 '유실' 다 막을 수 있나?(4척으로가능하나?)
34	세월호 교신 내용 전격공개(교신공개, 드러난상황)	34	처음으로 선실 접근..유도선 5개확보(선실접근..유도선5개확보)	34	시신 중복 집계 또 '혼선' …불신가중(집계또혼선)
35	이 시각 수색 상황은?(팽목항, 중계차)	35	선내 진입통로는 4층 객실로(유리창으로진입수색)	35	"실종자 찾는 데 최선" (진도실내체육관, 중계차)
36	기름 유출 확산 방제 '이중고' (기름띠방제도 '역부족')	36	구조 지원하던 해군병사 순직(구조지원해군병사순직)	36	NAT, "선장 탈출은 세계 수치 "비판(도망간선장, 수치)/뉴욕

37	무인기뢰 탐색기 투입(참단장비투입한다)	37	더딘 수색, 인원경비 늘려 보강(팽목항, 중계차)	37	타이타닉호…어린이여성 먼저(어린이여성먼저)
38	무더기 발견에 좌절(진도실내체육관, 중계차)	38	현장선박 200척, 어선에서 합정까지(팽목항, 중계차)	38	권한만큼 위급 상황 시 '의무' 막중(선장의권한의무는?)
39	이 시각 수사상황?(서해해경청, 중계차)	39	구조작업 닷새째..잠수요원도 극한상태(잠수요원사투...극한상태)	39	세월호 선원들 당시 어떻게 했어야?(위기때원래역할)
40	시신 이송 신원확인 중(한국병원, 중계차)	40	교신공개.. '승객탈출' 명령 무시했다(교신공개.. '우왕좌왕31분')	40	박봉모령여우 열악, 화 키웠나?(박봉모령여우열악)
41	진도-세월호 교신 공개(대책본부, 중계차)	41	허둥대기만 한 31분.. '골든타임' 날렸다(골든타임놓치고속수무책	41	영세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필요(준공영제필요성)
42	긴박했던 31분 교신(진도와마지막교신)	42	교신은 항해사가..자리에 없었던 선장(선장아닌항해사가교신)	42	<데스크>반복 훈련 필요
43	마지막 교신 선장 아닌 항해사(마지막교신항해사)	43	드러나는 거짓말.. '허위보고' 까지(허위보고..드러나는거짓말)	43	구조인양 이이디어…옥석 가려야 (제안, 옥석가려야)
44	허둥대다 골든 타임 놓쳤다(허둥대다시기놓쳐)	44	선장 "담배 피우러 갔다" ..의문투성이(담배피우러갔다)	44	'정주영 공법' 응용…제2들 현실성은?(정주영공법응용?)
45	"탈출 불가능" 말만 되풀이('즉시탈출' 지시에도··)	45	'위급' 과학한 선장여원, 꺼리꺼리 탈출(선장여원꺼리만대피)	45	<집중>해경청선도비상훈련..안전교육강화(1주일마다 '훈련')/파리
46	'침몰중' 외침에 민간 어선 총집결(물고지잡다구조)	46	제주→진도관제센터, 11분간 뭐했나(첫교신뒤11분동안 '깜깜')	46	내항선은 국제규제 예외?(내항선국제규제예외?)
47	침몰 세월호 눈앞에 두고··(거센물살이접근방해)	47	가족·총리 면담.. '청와대 행' 대치까지(진도실내체육관, 중계차)	47	사고 잦아도 '우수' 평가… '안전' 항목 소홀(물평가했나?)
48	생존자는 어디에 애가 탔다(군동원전방위수색)	48	학생 희생자 첫 발인..심리치료 늘린다(고대안산병원, 중계차)	48	진도안산재난지역결정… "특별지원" ('재난지역' 지원 '탄력')
49	객실 진입했지만 시신만 수습(겨우진입했지만··)	49	수습나몰라라..뒷짐 진 청해진해운(나몰라라청해진해운)	49	'사망자 명단 앞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 박탈@
50	세월호 진입 긴박했던 순간(긴박했던진입순간)	50	주민도 고통.. "그래도 실종자 구조부터" (슬픔에빠진진도)	50	휴일에도 여객선 터미널 썰렁(여객선이용 '뚝')
51	출동 경비정 선내 상황 몰랐다(선내상황몰랐다)	51	모여드는온정.. "의료진도움이필요해요" (자원봉사행렬..의료인력난)	51	해외스타여상들 잇단 위로여부도(스타여상들, 위로여부)
52	5곳 희망 줄 뚫었다(유도선5곳설치)	52	계속되는 세월호 '문자사기' ..속지마세요(교묘해진세월호문자사기)	52	극심한 사고 후유증… "우울불안증세" (구조학생후유증심각)
53	손도끼로 유리창 '쾅쾅' (유리창깨고선내진입)	53	허위인터뷰 女, 잠수자격증도 없었다(잠수자격증도없으면서..)	53	장례 절차 논의…임시 합동분향소 예정(장례논의)
54	잠수해 선체 수색 이유는?(참수수색이유)	54	"배와 함께하는 선장의 전통 깼다" (자랑스러운전통깼다)	54	'브레이크 없는' 유언비어…본격 수사(온갖유언비어··수사)
55	분노한 가족들 "청와대 가겠다" (청와대항의방문시도)	55	있으나마나한 '정부재난대응체계' (유명무실새대응체계)	55	도 넘은 악성댓글 "반사회성" (악플심리 '과시혈만')
56	구조 적기 앞으로 닷새("사라끝난다" 구조적기)	56	이 기도가 들리신다면…(기적을바라는간절한기도)	56	미안하다…부끄럽다(미안하다…부끄럽다)
57	선장의 큰소리 "승무원 따르라" ('승무원지지' 따르면안전?)	57	스포츠계도 애도 한물결(스포츠스타들애도행렬)	57	이 시각 수색 상황은?(사고해역선상, 중계차)
58	삼풍 땐 7년 6월 형(삼풍사고때보다 '엄벌')	58	한국 車 운반선에 불..전원구조(한국車운반선 '불')	58	안산 단원고 1학년 24일부터 수업 재개外
59	비슷한 참사 전혀 다른 선장('선장전통' 저버렸다)	59	삼성SDS센터화재..온라인 결제장애(삼성SDS센터화재)	59	부활절 "무사 구조 기원" (부활기적구조현장애도)
60	침몰 전날 신참 운행 '합법' (침몰하루전 '개장')			60	"희생자 등에게 하나님의 위로 손길 함께하길" @
61	"선장 고령화 안전 위협" ("선원자질낮다" 는보고서)				
62	제2사고 막자 꼼꼼히 살피자(철저해진운항관리)				
63	31분 교신 동안 세월호는?(31분교신동안세월호는?)				
64	안산단원도 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				
65	수색 지원 해군도 끝내 사망(해군병사끝내숨져)				
66	사고 후 108시간 치열한 구조작업(치열한구조현장, 헬기)				
67	수색 빨라지는 이유는?(수색빨라지는이유는?)				
68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첫발인… '눈물바다')				
69	"기적을 기다립니다" (부활절·· '눈물의기도')				
70	이 시각 수색상황은?(팽목항, 중계차)				
71	오바마 국새여보 갖고 온다(오바마 '국새여보' 반환)/워싱턴				
72	삼성 SDS불 홈페이지 '먹통' (삼성SDS센터에 '불')				
73	장애 등급에 막혀 번번이 거절(장애등급 '이중고')				
74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방북 승인@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1일 (월)

	M B C		S B S		K B S
1	본격 수색□조 시신 7구 수습(3명□진입시도)	1	기관사들, 자신들만의 통로로 탈출("자신들만의통로로탈출")	1	음파탐지… "선체좌현거의바닥에누워" ("선체좌현거의바닥에")
2	선원 4명 구속영장 청구(서해지방해경, 중계차)	2	뻔뻔한진술 "내가 운항했으면.." (선장은변명에 '거짓진술')	2	음파 탐지…뱃머리, 15m 이상 기라앉아(뱃머리,15m이상침수)
3	"해경도 수사대상" 전방위 확대(해경도수사대상)	3	기계 탓하는 선원들..변명만 '급급' (선원은기계탓에남탓)	3	<앵커>3명□중 중점수색, 식당 문개방 집중 시도(3명□, 식당에집중)
4	과다 선적 탈세 여부 조사(몰래더싣고탈세?)	4	자기들끼리도 연락 안된 해경(해경의 '우왕좌왕' 비상대응)	4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사 활약(민간잠수사활약)
5	세월호 담보 100억 대출 특혜(노후선박에100억대출)	5	모니터 보면서 위험도 모른 진도VTS(관제센터, 눈뜨고도못봤다)	5	원격 탐색 장비 투입…격실 진입(원격탐색장비투입)
6	최초 신고자 단원고 학생(학생이최초신고)	6	청해진해운특혜의혹…소유주출국금지(청해진해운특혜의혹수사)	6	이 시각 수색 상황은?(사고해역, 중계차)
7	사고 전 연착방송 위험 알았나?(사고20분전 '연착' 안내)	7	잠잠해진 바다..수색환경양호(동거차도, 중계차)	7	"책임 있는 모든 사람 민형사상 문책" (朴대통령)
8	탈출 선원 매뉴얼만 지켰어도··(선원, 제역할만했어도··)	8	대형 바지선 이제야 왔다(이제야빨라진수색작업)	8	<앵커>관제 이원화…대처 한계
9	승객 놔두고 선원만 탈출 준비?(선원, 미리탈출준비?)	9	美원격 수중탐색 장비 투입(원격수중탐색장비투입)	9	실시간으로 지켜보고도 감지 못 해(지켜보고도감지못해)
10	안개 속 '나홀로' 출항 이유는?(환불부담에출항?)	10	진입통로 추가확보..유도선 연장(진입로늘려집중수색)	10	'바다권력' VTS, 해수부-해경 관할 경쟁(해수부-해경관할경쟁)
11	'허위 인터뷰' 여성 경찰 출석(허위인터뷰여성출석)	11	차가운 수온12도..또다른 변수(차가운수온이변수)	11	화물 줄이라 했는데 더 늘려?(화물오히려더실어)
12	사고 2주전 '조타기' 이상징후(2주전조타수이상)	12	'2-3일 안에 수색 마쳐 달라" (진도실내체육관, 중계차)	12	화물 무게만큼 평형수 비웠나?(침몰단서평형수)
13	사고 당시 급회전 조타기(왜균형잃었나)	13	DNA 확인 전에도 시신 인계하겠다(대책본부, 중계차)	13	사고 전 맹골수도에서 방향 전환 4차례(무리한방향전환)
14	증축 후 바뀐 허용 화물량 초과("허용중량한식권듯")	14	'컴라면장관' 에 '기념촬영국장' 까지(위로해주진못할망정..)	14	'노후' 고장, 수리…운항은 계속(노후고장,수리잦아)
15	수차례 우수 해운 평가 기준은?(수차례 '우수해운')	15	"불신 공무원 퇴출..선장의 행위는 살인" (朴대통령)	15	'해양수산부 출신' 선박업무 독점(민간검사제□리 '독점')
16	"책임 있는 사람 모두 처벌" (朴대통령)	16	"미개한국민정서" 아들이SNS파문("미개한국민" 아들의파문)	16	선원 전용 통로 탈출…드러나는 거짓말(선원대상수사속도)
17	"복지부동 공무원 반드시 퇴출" (朴대통령)	17	'허위인터뷰 女' 구속영장 신청(허위인터뷰女영장신청)	17	'전원생존' 선박직 전용 무전기로 교신(무전기로선원탈출만)
18	수색 본격화 식당 진입로 확보(진입로확보수색총력)	18	학생사망발인 "이못난어른들을.." ("구조학생20%, 치료필요")	18	승객 탈출시킬지 묻자 '묵묵부답' ("승객탈출?" 물어도외면)
19	내일부터 사흘간 수색 최적기(조류느려져 '호전')	19	교감선생님, 유해는 사고 해역에..(단원고교감, 눈물의발인)	19	"바다 뛰어내렸으면 우리가 구했다" (민간선박)
20	무인 잠수정 어떤 장비?(무인잠수정투입)	20	'옆집 살고 윗집 사는 아이들인데" (슬픔에잠겨있는안산시)	20	구조 선박 몰랐는데 선장에게 미륙(관제센터 '소극대응')
21	기상 양호 선체 수색 '활기' (사고해역, 헬기)	21	구조 영웅들, 병원에서 다시 현장으로(구조영웅, 다시현장으로)	21	<앵커>신고하자, "위도경도는?"
22	민간 잠수대원 맹활약(민간잠수부맹활약)	22	가족 등쳐먹는 파렴치 사기꾼들(실종자가족노린사기까지)	22	음성 분석… "1등 항해사가 교신" (교신중선장어디에?)
23	이 시각 사고해역(사고해역, 중계차)	23	몰래 개조되는 배..이러니 위험('위따로아래따로' 관리)	23	'어린이□생명연재' 영국160년전통('어린이□생명연재' 전통)/버킨헤드
24	이 시각 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 중계차)	24	영타리 안전점검..눈 먼 감독기관(영타리보고, 겉핥기점검)	24	"국민정서미개" 아들막말정몽준사죄('아들막말' 파문…사과)
25	이 시각 실종자 가족(진도실내체육관, 중계차)	25	가벼운 처벌, 화키웠다(부실관리..솜방망이처벌)	25	재난대책본부에 재난 전문가 없어(재난전문가없다)
26	바닷속 '세월호' 옆으로 누웠다(선체옆으로누웠다)	26	특별재난지역, 先보상금-後구상권('비용지원□금혜택' 가능)	26	실소유주는 유병언 前세모 회장 일가(실소유주는세모회장일가)
27	3명□ 본격 수색 생존 가능성은?(생존가능성얼마나?)	27	건조 중 선박에 큰 불..2명 사망(건조중선박 '큰불')	27	美뉴욕□A 등에 거액 부동산(해외에거액부동산)
28	눈물로 지샌 엿새 건강악화 우려(가족건강 '한계상황')	28	차량 통행 늘어나..北핵실험 주시(北추가핵실험여부촉각)	28	학생□감 발인 "못다한 꿈 이루길" ('사제' 눈물의영결식)
29	생존자 대비 비상체제 유지(한국병원, 중계차)	29	아베 '야스쿠니공물' …거리엔나치깃발(아베, 야스쿠니에공물)/도쿄	29	남은 자들의 슬픔□통 "함께 보듬어야" (살아남은자의슬픔)
30	눈물의 장례식 제자들 곁으로··(다시제자들곁으로··)	30	'검은완장' 찬 손흥민, 7번째 '도움' (스포츠스타들에도)	30	생업 포기…물□기 끊긴 가족도(단전□수된가족도)
31	구조 대기 뛰어내렸더라면··(바다로뛰어들었다면··)			31	현대重 건조 중 선박서 불…4명 사상(건조중선박서불)
32	애타는 기다림 또 하루가 간다(팽목항, 중계차)			32	공물 봉납 '대리 참배' (아베, 신사공물봉납)/도쿄
33	'42분 전 통보' 알고보니 '실수' (8시10분해경연락?)			33	中, 엄중항의…美언론 "오바마 순방 취지 퇴색" @
34	우왕좌왕 경기교육청 혼란 키워(혼선준경기교육청)			34	'기념 촬영 논란' 안행부 국장 사표 수리外
35	여객선 규정 위반 '수두룩' (안전점검소홀여전)				

36	관리 제각각 날아간 '골든타임'(통신관리 '제각각')				
37	대부분 인재 징계는 솜방망이(해상사고대부분인재)				
38	온국민 울었다 대리 외상 우려(국민들 '정신적외상')				
39	조선강국 한국 여객선 중고 수입(허울뿐인 '조선강국')				
40	<데스크>정부 재난대응체계 침몰(실망준재난대응체계)				
41	이 시각 사고해역(사고해역, 중계차)				
42	수색 본격화 식당 진입로 확보(진입로확보수색총력)				
43	내일부터 사흘간 수색 최적기(조류느려져 '호전')				
44	무인 잠수정 'ROV' 어떤 장비?(무인잠수정투입)				
45	현대중공업 화재 2명 사망(현대중공업화재)				
46	삼성 금융사 전산장애(삼성금융사전산장애)				
47	일본뇌염주의보 전국에 발령(일본뇌염주의보)				
48	오바마 방한 때 북한 핵실험?(북한핵실험징후)				
49	SM5 '시동 꺼짐' 전면 리콜(SM516만대리콜)				
50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공물(아베또대리참배)/도쿄				
51	'저 하늘에도 슬픔이' 복원('저하늘에도슬픔이' 복원)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2일 (화)

	M B C		S B S		K B S
1	선원 4명 영장 발부 수사 확대(선원 줄줄이 구속)/해양경찰청	1	안전부실-해운비리 전방위 수사(해운비리 전방위 수사)	1	식당 격벽 뚫기 집중, 3·4층 동시 수색(동시수색…식당뚫기 집중)
2	세월호 선장 무기 구형 방침(무기징역 구형 방침)	2	청해진해운, 횡령·탈세·로비의혹까지(횡령·탈세·로비 의혹까지)	2	산소부족 경보에도 "한 명이라도 더"(이찔 필사의 구조)
3	오너 일가 국내외 재산 추적(오너 재산 찾기 주력)	3	인건비 아끼려고 안전 팽개쳤다(인건비 줄이려 팽개친 안전)	3	이 시각 수색 상황은?(수색 상황은?)/사고해역 선상
4	실제 소유주 유 회장 누구?(전 세모 일가 주목)	4	일가 국내 재산 2400억 추적(일가 재산 2400억 원 추적)	4	일부 가족, 부검 요구하기로(일부, 부검 요구키로)
5	충돌에 표류까지 툭하면 사고(청해진 툭하면 사고)	5	해외에도 편법 부동산 수두룩(해외 자산 편법취득까지)/팜스프링스	5	세모 일가 재산 추적(재산 전방위 추적)
6	노선 독점 욕심에 무리한 구입?("노선 독점 욕심")	6	늘어난 사망자..명단에 없던 중국인도(구조 현장)/동거차도	6	직원 상당수 구원파(직원 상당수 구원파?)
7	수색 박차 사망자 확인 증가(사망자 100명 넘어서)	7	희생자 인양에 오열..마르지 않는 눈물(잇단 인양)	7	천막대 추산 땅, 차명? 관리인 검찰 소환(차명 토지 관리인 소환)
8	이 시각 사고해역 식당 잔입 계속 시도)/사고해역 선상	8	장례절차 합의..안산에 분향소(장례절차 합의)/진도군청	8	인천 바다 위 세월호 마지막 항해 영상(마지막 항해 영상)
9	조타실 비상버튼도 안 눌렸다(퇴선신호도 안 했다)	9	물살 느린 조금..수색 최대 분수령(수색 분수령)	9	"네가 있어 행복했다, 사랑한다다"(눈물로 맞는 슬픈 재회)
10	최초 신고 때 탈출했더라면··(기울기 전 대피해야)	10	학생들 많던 3, 4층 집중 수색(학생들 있던 곳 집중수색)	10	다운이의 마지막 등교···그리고 아별다운이의 마지막 등교)
11	구명벌도 해경이 펼쳤다(구명벌도 해경이 펼쳐)	11	친구를 보내든 날..슬픔에 잠긴 교정(학생들의 마지막 가는 길)	11	선생님의 마지막 통화 "조끼 입혀야"(끝까지 제자 걱정)
12	선원들만 전용통로로 탈출(선원 전용통로로 탈출)	12	홀로 남겨진 실종자 가족의 고통(홀로 남은 가족의 고통)	12	美 CNN이 본 경찰관의 눈물(美 CNN이 본 현장)
13	115도 아닌 45도 급선회(45도로 급선회, 왜?)	13	정말 절실한 노란리본의 마음으로("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13	항해 절반 침실에, 사고 이전 또 침실로(항해절반침실에···)
14	36초 정전 사고 원인 됐나?(36초 동안 정전)	14	또래들이 보내는 희망의 구호품(또래들이 보낸 희망)	14	기관사도 자다가 탈출?(기관사도 자다 탈출?)
15	사고원인 여전히 안갯속(사고 원인 베일 속)	15	가족 아닌 사람이 실종자 가족대표라니(알고 보니 가짜 가족)	15	뱃머리 컨테이너 560톤···고정 허술(뱃머리 컨테이너 560톤)
16	<동거차도>이 시각 사고해역본부("희생자 가족 지원")/진도군청	16	선동꾼 운운..유언비어 퍼 나른 與의원(유언비어 퍼나른 與의원)	16	사고에서 배운 日··화물 고정 강화(사고에서 배운 日)/도쿄
17	잔잔한 바다 수색 총력전(비빠진 사고 해역)	17	확증편향..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여(불통·불신이 키웠다)	17	<추적>제주 뱃길 타보니··안전불감증 여전(여객선 여전히 불안)
18	숨기쁜 구조수색 모레가 분수령(조류이화 본격구조)	18	이번엔 구급차출퇴근 복지부 공무원(사고 수습할 차로 출퇴근)	18	세월호 정기검사 보고서(세월호 만족등급 세례)
19	바지선 투입 구조수색 활발(수색기지 바지선)	19	의문의 시간 복구..급회전 각도는 45도(45도급회전 뒤 표류)	19	"실제 검사, 선주가 선택한 대형업체가"(검사대행 선주가 골라)
20	무인탐사 게로봇 현장 투입(크랩스터 긴급 투입)	20	앤진 꺼진 채 표류..선장이 "꺼라"지시(화 키운 앤진정지 지시)	20	"구명정 2개는 구조 해경이 투하"(세월호 구명정 의문 풀려)
21	9따른 사망자 실종자 가족 침통맘 졸이는 실종자 가족)/팽목항	21	AIS 항로궤적으로 본 사고의 순간(항로로 본 참사의 순간)	21	"너무 기울어 구명정 못 써" 거짓 드러나("너무 기울었다"···거짓말?)
22	일주일째 피 마르는 기다림(가족, 갚은 상실감)/진도실내체육관	22	엉터리화물적재 이렇게 위험(엉터리화물 적재)/도쿄	22	정치인 잇단 물의, 경찰 수사까지(가짜가족··명예훼손까지)
23	모니터만 믿고 안이한 대응?(자동식별장치 믿다가·)	23	먼저 탈출한 선원 4명, 구속 수감(선원 4명 구속)	23	휴대전화 2대로 카톡, 유언비어 자작(카톡자작··"뜬소문을")
24	여객선 한 척 관리관청 겹겹(중구난방 안전관리)	24	잦은 사고 무시한 채 배짱 운행(과거에도 잇단 사고)	24	사고 시각 제각각··"인터넷 보고 베껴"(사고시각 제각각··왜?)
25	낙하산 인사 관리감독 구멍(해수부 마피아 도마)	25	균형잡는 평형수, 규정 안 지켜진 듯(평형수도 부실 관리)	25	"혼선 송구··안전혁신 종합 계획 마련"("곧 안전 혁신 종합 계획")
26	청해진 해운 면허취소 추진(면허취소 추진)	26	"노후 여객선 위험" 2년 전 보고 묵살(사전 경고만 들었어도..)	26	英 강도 높은 훈련··신고 9분 내 도착(신고 9분 내 도착!)/런던
27	"범정부 재난대응체계 마련"(재난대응 새 틀 짠다)	27	지금이라도 세월호방지 입법을..(뒤늦은 세월호 방지 입법)	27	<데스크>재난대책본부 역할은?(현장 지원 우선돼야)
28	"사랑해, 안녕하··"눈물의 작별(눈물의 작별)	28	애도 물결에 술소비도 줄었다(애도 물결에 닫힌 지갑)	28	구조 지원하다··故 윤대호 병장 영결식(故윤대호 병장 영결식)
29	잡단 정신적 충격 대응책 필요(정신 충격 체계적 대응)/뉴욕	29	"北, 큰 것 한 방 준비 중" 첩보 공개(첩보 공개)	29	"아버지로서 애통" 직접 위로 검토(오바마 위로)/워싱턴
30	순직 해군 장병 영결식 엄수(구조지원 해군 영결식)	30	오바마 방일 앞두고..의원들 잡단 참배,오바마 보란 듯 잡단참배)	30	北 내부, "큰 한 방"···기습 핵실험 가능("北, 기습 핵실험 가능")
31	출항시 대피훈련 생사 가른다(승객안전교육 효과)	31	사이버사 정치글 의혹 연제욱 교체(정치댓글 의혹 비서관 교체)	31	日 의원 150여 명 집단 참배 도발(日 의원 집단 참배)/도쿄
32	"출발부터 위험 안고 달렸다"(출발부터 기울었다?)/도쿄	32	테러에 지지 말자..다시 달린 보스턴(다시 달린 보스턴)	32	<간추린>北 TV, 김정은 어린 시절 사진 첫 공개 外 4개/@
33	실종자 대표 가족 아닌 정치인(앞장 선 예비후보)	33	추신수, 시즌 2호 홈런(추신수, 시즌 2호 홈런)	33	알당 모아 "성금" 편지(익명으로 전한 성금)
34	세월호 유언비어 유포자 검거(유언비어 유포 검거)	34		34	
35	복지부 공무원 구급차 퇴근 물의(구급차로 퇴근 물의)	35		35	
36	경선 연기 정치인 잇단 물의(경선연기·잇단 물의)	36		36	

37	오바마 "사고 수습 전력 지원"(오바마 지원명령)/워싱턴	37		37	
38	이 시각 사고 해역/이 시각 사고해역/사고해역 선상	38		38	
39	오너 일가 국내외 재산 추적(오너 재산찾기 주력)	39		39	
40	실제 소유주 유 회장 누구?(전 세모 일가 주목)	40		40	
41	기본인 퇴선 버튼 안 눌렀다(퇴선신호도 안 했다)	41		41	
42	최초 신고 때 탈출했다라면…(기울기 전 대피해야)	42		42	
43	北 "큰 한 방 준비" 핵실험 암시(北 "큰 한 방 준비")	43		43	
44	日 국회의원 150명 집단 참배(방일 하루 전 집단참배/도쿄	44		44	
45	연제욱 前 비서관 국방부 복귀/@	45		45	
46		46		46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3일 (수)

	M B C		S B S		K B S
1	계열사 종교시설 압수수색(유병언 일가 관련)	1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나(구속 수색상황, 중계차)	1	5층 진입 성공, 선체 전체 수색(구조·수색상황)
2	비자금 정황 전방위 수사(수사 방향)	2	4층 배꼬리 '다인실' 집중 수색(수색방향)	2	사망감에 무리한 잠수 "매일 사선 넘어"(잠수요원들)
3	거미줄 '순환출자' 일가족 지배(유병언 소유 기업들)	3	"얘들아.." 지쳐가는 가족들(실종자 가족들)	3	목숨 건 수색 잠수병 10여 명 치료(건강영향)
4	전국 곳곳 수천억대 부동산(유병언 재산규모)	4	눈물의 조문행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중계차)/합동분향소	4	수중 작업 후 목숨 위협하는 '잠수병'(원인·치료방법)
5	유병언 전 회장 '구원파' 창시(구원파와의 관계)	5	슬픔의 안산.. 가슴 멘 대한민국(조문객들 표정)	5	장시간 잠수 '표면 공급 잠수'로 전환(머구리 잠수 투입)
6	"세월호 선원 상당수 '구원파'"(관련성)	6	또 시신 뒤바뀌고.. 빈소 없이 애태우고(처리 미숙)	6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7	신도 집단생활 외부와 격리(구원파 관련 시설들)	7	'해수부 마피아' 정조준.. 유착 집중 조사(한국해운조합)	7	션박 안전 점검 검찰 직접 나서(안정규정 위반 여부)
8	유 회장 측 "위법행위 없었다"(유병언 일가 입장)	8	검찰-국세청-금감원, '유병언 잔방위 조사'(잔방위 조사)	8	정부, 오늘부터 총체적 안전 점검 착수/@
9	기다림이 통곡으로…(중계차)/팽목항	9	실제 소유 뿐 아니라 경영에도 개입한 듯(운영 관여 정황)	9	유병언 자택 등 압수수색…은닉 재산 추적(해운사 실 소유주)
10	3·4층 다인실 격벽 뚫고 수색(수사방향)	10	"5층 증축의 이유는 유병언 사진 전시"(세월호)	10	유병언 前 회장 측 "세월호 보상 책임지겠다"/@
11	상공에서 본 구조 현장(헬기스케치)	11	"직원은 구원파 신자로.. 한금으로 사업"(구원파와 관련)	11	폐쇄적 '금수원'…유병언 별장처럼(구원파 종교시설)
12	느려진 조류 야간수색 박차(중계차)/사고해역 바지선	12	'인천-제주', 20년이나 독점 운항(특혜 의혹)	12	구원파…'독특한' 문화?(구원파 소개)
13	검은 바닷속 목숨 건 구조(잠수부들의 24시)	13	'여수-거문도'는 하루도 없이 띄우고.(청해진해운)/KBC	13	차명으로 땅 관리, 각서 받고 월급 주고(은닉재산)
14	야external 기다린 억장 무너진 대(중계차)/진도 실내체육관	14	"구명 뗏목 내릴 수 없었다"는 거짓말(사고당시 화면 분석)	14	<집중>계열사 30여 개 '거미줄 지배 구조'
15	합동분향소 줄잇는 조문(조문표정)	15	구명조끼 입고 갑판 위로 나왔다면..(구명정 해경 인터뷰)	15	회사 대표 등은 '핵심 7인'…재산 관리인?(오너 일가 경영진)
16	따뜻한 위로 전국에서 위문품(온정의 손길)	16	파란바지의 구조자 "모두 내 딸 같았어요"(승객 구조)	16	유 씨 사진 달력 개당 500만 원 강매?(계열사 강매)
17	션박직 선원 '전원 구속 방침'(중계차)/서해지방해양경찰청	17	잠수요원도 체력 한계.. 마비 증상도(잠수요원 피로)	17	작품 가치 평가할 경매 기록 없어(유병언 전 회장 사진)
18	"배 떨림 심했다" 회사가 묵살(세월호 사전징후)	18	'80명 구했으면 대단".. 지휘체제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18	계열사 부동산 전국 1800억 원대
19	무리한 개조 무게 중심 '휘청'(떨림 원인)	19	도 넘은 사진조작.. '알베의 기짜 리본까지'(유언비어)	19	'알짜 노선' 인천-제주 20년째 독점(특혜 의혹)
20	세월호 '수밀문' 고장 가능성(한국선급 부실점검)	20	'평형수' 점검하는 곳조차 없었다(감독기관 전무)	20	제목 없음(탈출 장애물)
21	'비상 근무 배치표' 마저 부실(내용 모호)	21	확산되는 '문책론".. 개각 불가피할 듯(정부 책임론)	21	"구명정 안전핀 안 뽑혀" 애초초 작동 불능(새로운 증언)
22	"선실에서 구명조끼 절대 안 돼"(잘못된 안내 방송)	22	학교 친구들이 '정신적 치유'의 힘(피해 학생들)	22	'작동 불능' 선장·선원 알고 있었나?(구명정)
23	국제 대피 지침 '1시간 내 탈출'(로로선 별도 지침)	23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하게 차분하게(기업들 자체 분위기)	23	제목 없음(화물 과적으로 이득)
24	"국가개조 수준 적폐 척결"(청와대)	24	中 "한국을 반면교사로.."(해상안전관리 강화)/베이징	24	제목 없음(문제 많은 한국선급)
25	"北 핵실험 모든 준비 끝나"(北 동향)	25	승객 숫자 확인 안 되면 출항 못 해(美 승선관리)/룸비치항	25	임시 합동 분향소…추모 발길 이어져(조문 표정)
26	"핵실험 중단 적극 설득"(朴대통령)	26	"추가 핵실험 하지 않게 설득해 달라"(한중 정상 전화통화)	26	깊은 침묵, 슬픔·안산은 지금(안산시 표정)
27	오바마 방문 日 최고 예우(日 도착)/도쿄	27	北 "평화냐 전쟁이냐".. 도발 명분?(공개질의)	27	닫힌 마트 철문엔 '기원' 쪽지 수백 장(실종자 가족 운영)
28	대법원 "전공노 합법노조 아냐"(판결내용)	28	'초법외교'로 美·日 관계 복원 안간힘(오바마 방일)/도쿄	28	간절한 희망의 기다림 '노란 리본' 물결(노란리본운동)
29	'위생불량' 도시락 식중독 주의(식품업체 위생점검)	29	경기 광역버스 '입석금지'.. 취지는 좋지만(세월호 계기)	29	<데스크비평>절한 정보 전달 자세는?(정부 미숙한 언론대응)
30	바나나 전염병 급속 확산(동남아시아)	30	6이닝 2실점.. 잘 던졌지만(류현진 外)	30	특히 징후 포착… "언제든 핵실험 가능" (北 동향)
31	北, 세월호 침몰 사고 조의/@	31		31	北, 세월호 침몰 위로 전화 통지문 보내/@
32		32		32	북핵 중단 中에 설득 요청(朴대통령)
33		33		33	美 대법 "대입 소수 인종 우대 폐지 합헌"(역차별)
34		34		34	<단신>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전국 설치 外
35		35		35	성금 모금 각계 확산(세월호 희생자 돕기)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4일 (목)

	M B C		S B S		K B S
1	"나는 몰랐다" 변명 급급(세월호 선원들)	1	눈물의 행렬.. 이틀째 3만 명 넘어(합동분향소)	1	인력·장비 총동원··수색 작업 대폭(구조·수색상황)
2	뻔뻔한 선원들 입 맞췄나?(세월호 선장)	2	슬픈 등굣길.. "불신·배신감을 예고했다"(단원고)	2	끝내 학생자로··안타까운 사연들(피해자들 사연)
3	<단독>구명벌 작동 훈련까지 받고도··(안전검사 사진)	3	"기다릴게요".. 편지와 노란리본의 물결(전국 애도표정)	3	이 시각 수색 상황은?(중계차)/사고해역
4	"배 기울어도 탈출 가능하다"(시뮬레이션 연구결과)	4	사망자 171명.. 또 애끓는 하루가 갔다(중계차)/동거차도	4	"수색 제대로 안 돼" 가족들 항의(중계차)/팽목항
5	기대와 절망 안타까운 기다림(중계차)/팽목항	5	타들어가는 가슴.. "시신이라도"(실종자 가족들)	5	제목 없음(해운조합 유착 의혹)
6	집중 수색 5층 선실 첫 진입(수색 진척 상황)	6	물살 다시 거세지는데.. "정부 못믿겠다"(실종자 가족들 항의)	6	해경·해양청에도 선물·접대 의혹(해운조합)
7	'소조기' 마지막 날 긴박한 수색(중계차)/사고해역-바지선	7	"다른 배 돕느라 세월호 상황 못 봤다"(진도VTS)	7	비슷한 오하마나호 안전 실태도··(청해진 해운)
8	칠흑같은 바다 목숨 건 수색(잠수부들)	8	창문 깨고 밧줄이라도 내려줬으면..(초기 대응문제)	8	선박직 직원 15명 전원 사법처리(수사내용)
9	"가족 동의로 민간잠수부 철수"(철수 논란)	9	여객선에는 '블랙박스' 없어도 된다는데..(선박항해기록장치)	9	사고 원인·경영 비리 등 전방위 수사(수사 흐름)
10	실종자 가족 수색 결과 항의(사고대책본부 항의 방문)	10	청해진해운 또 다른 배 압수수색(오하마나호)	10	사정기관 총동원··유 씨 전방위 압박(기타 수사)
11	눈물의 팽목항 밤낮 없는 봉사(팽목항의 하루)	11	큰 도움 안되는 첨단 장비들(수색작업)	11	"사업가보다 신비주의 교주 가까워"(과거 수사검사)
12	<단독>"최측근 여성에 거액 은닉"(새로운 증언)	12	학생증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인근 사진관 할아버지)	12	폐가처럼 위장··뒷편엔 호화 주택(유 전 회장 일가 자택)
13	부도 2년 만에 재기 차명 동원?(부도이후 재기과정)	13	진도-안산 380km, 희생자와 함께 달린다(택시기사들)	13	"뱃값 중 43억 불분명··비자금 의혹"(청해진 해운)
14	신도에게 장사해 기업 운영?(다판다 이용)	14	보험금 빼돌려 '뒷돈 거래' 정황(해운조합·한국선급)	14	부당 대출 여부 검사, '자금 흐름' 조사(금융당국, 금융권 검사)
15	"구원파 사이비 아니다" 주장/@	15	세모그룹 경영권 '편법 회수' 조사(유병언 전 회장)	15	신도 헌금 가족·측근 돈줄 활용(헌금 유용)
16	초등학교보다 큰 '유병언 타운'(서울 염곡동 일대)	16	사진 판매로 '200억 비자금' 정황(헌금흐름 추적)	16	北 위로·협박 두 얼굴··핵실험 강행하나?(北 동향)
17	환경단체 내세워 토지 매집(차명 재산증식 의혹)	17	"전국 곳곳 부동산, 헌금으로 샀다" 증언(은닉 재산)	17	"원심분리기 공장 확장 곧 핵물질 양산"(北 핵개발 수준)/위성된
18	"어른들이 미안해" 조문 줄이어(합동분향소)	18	사업도 종교도 후계자는 '차남'(지분구조)	18	"북핵, 한미일 공조"··센카쿠 일본 지지(미일 정상회담)/도쿄
19	제발 돌아오길.. 전 국민 '애도'(노란리본 운동)	19	대출금 회수.. '돈줄 죄기' 본격화(금융권 특별감사)	19	오바마 내일 방한··희생자 애도 표명(방한 일정)
20	단원고 다시 등교 심리치료 병행(등교 첫날 표정)	20	여객선마다 뒤늦게 긴급 점검 '북새통'(안전점검 확대)	20	다시 학교로··"의지하며 아픔 극복"(단원고 학생들)
21	<이슈>정신적 상처 어떻게 치유하나?(우종민 서울백병원 교수)	21	안전규제, 한국은 완화 vs 일본은 강화(정부 관리감독 체계)	21	조문 행렬··"지켜주지 못 해 미안하다"(합동분향소)
22	'오하마나호' 개조 뒤 잦은 사고(청해진해운)	22	사고나면 똑같은 소리.. 달라진 건 없다(정부대처)	22	교신 녹취 분석··"2곳 이상 편집" 의혹(세월호-진도VTS)
23	세월호 안전검사 '한국선급' 수색/@	23	형제나라를 위한 '케밥' 봉사(자원봉사)	23	화물 절반 줄여야··단속 당국 "깜깜"(한국선급)
24	끈끈한 선후배 '해수부 마피아'(해수부)	24	영토 분쟁, 일본 손들어 준 미국(미·일 정상회담)	24	평형수 대신 화물 과적 상습 위험 운행(세월호 입출항 내역)
25	세월호 후폭풍 '개각설' 확산(정부대응 비판)	25	내일 한·미 정상회담.. 북핵 집중협의(논의 내용)	25	<데스크>세월호 안전 실태는?(사고원인 종합)
26	北 미사일 발사 가능성(北 동향)	26	슈퍼 황사에 스모그.. 대낮에도 '캄캄'(中 파헤쳐/베이징	26	제목 없음(중고 여객기 개조 확인절차)
27	미·일 중국 견제 '동맹 강화'(미·일 정상회담)/도쿄	27	월드컵 코앞인데.. 치안은 불안하고(브라질 준비상황)	27	해안경비대가 '예외없는' 선박 검사(美 사례)/볼티모어
28	"시위 중 경찰 폭행 유죄"(제주도 강정마을 시위)	28	재활훈련 시작.. "경기도 보여주겠다"(박주영 外)	28	"힘내세요" 진도에 밀려드는 온정(구호품)
29	월드컵 D-50 브라질은 공사 중(준비상황)/상파울루	29		29	"손자는 어디에··"할아버지의 기다림(실종자 가족)
30	GDP 3년 만에 최고 증가율/@	30		30	고통스러운 '체육관 생활' 대안 없나?(피해자 관리)
31	'심야 게임 셧다운제' 합헌/@	31		31	야 "정부 책임론"··여 "개각 불가피"(정치권)
32		32		32	8년 만에 최악 모래폭풍 中 서북부에(피해상황)
33		33		33	<단신>정부 "독도는 한미방위조약 적용 대상" 外
34		34		34	국민 85% "16강 이상 기대"(월드컵 설문조사)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5일 (금)

	M B C		S B S		K B S
1	"미국민 대표해 깊은 애도"(한미 정상회담-1)	1	"수백억 전 재산 털어서 보상하겠다"(유병언 전 회장)	1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한미 정상회담-1)
2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한미 정상회담-2)	2	"비자금 창구로 이용한 유령회사 포착"(수사상황)	2	"北의 핵 모발 용납 안 해"(한미 정상회담-2)
3	"종군 위안부 끔찍한 인권침해"(한미 정상회담-3)	3	차명관리 위해 '영농조합' 택한 듯(재산관리 의혹)	3	"아베, 과거사 솔직히 인정해야"(한미 정상회담-3)
4	대한제국 국새 '황제지보' 반환(오바마 美대통령)	4	"미안한 마음뿐".. 6만 명 추모 행렬(임시 합동분향소)	4	고궁에 간 첫 美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방한 일정)
5	안보는 '화끈' 경제는 '냉랭'(오바마, 아시아 방문 목적)/도쿄	5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와의 이별(단원고 학생들)	5	오바마 '묵념' 제안, 성조가·묘목 전달(세월호 참사)
6	무거운 침묵 깊어가는 시름(구조·수색 종합, 중계차)/팽목항	6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의사자' 청원 운동(정차웅 군 外)/KBC	6	절반 정도 수색 내일부터 기상 악화(수색상황)
7	우현 수색 완료 좌현 진입 못해(수색 현황)	7	기다림 언제까지.. 눈물만 흐르는 바다(희생자 가족들)	7	시신·유류품 찾아 전남 해안 전체 수색(육상 수색 시작)
8	'다이빙벨' 투입 준비 야간 수색(수색 계획, 중계차)/사고해역	8	선체 수색 이제 1/3(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8	실종자 가족들 17시간의 대화?(해수부장관·해경총장)
9	"더 이상 못 믿겠다" 거센 항의(실종자 가족들)	9	왼쪽은 더 맡버닥으로.. 수색 쉽지 않아(수색난관)	9	다이빙 벨 등 요구 대부분 수용(가족들 요구 내용)
10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고통(가족들 하루)	10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합의(한미 정상회담-1)	10	다이빙 벨 사고 해역에 투입(투입과정 논란)
11	구조업체 '언딘' 특혜 있었나?(민간구조업체)	11	'두 딸의 아버지'로서 희생자 애도 묵념(한미 정상회담-2)	11	논란 다이빙 벨 원리와 효과는?(기능과 원리)
12	"화물 기준 딱 두 번 지켰다"(세월호, 입출항 자료)	12	대한제국 '국새', 60년 만에 돌아왔다(국새어보 반환식)	12	<확대경>민간 잠수사 투입 필요성 논란(양측 입장)
13	"미안하고 또 미안해" 조문 행렬(임시합동분향소)	13	핵 실험 움직임 계속.. 지연 전술 쓸 수도(北 동향)	13	'들어온 돈'은 있는데 '보낸 돈'은 없어(청해진해운-천해지)
14	세월호 의인들 '의사자' 추진(승무원 연인 外)	14	간첩혐의 무죄.. "구금 상태의 허위 자백"(유우성 사건)	14	천해지 임원이 지휘사 외부회계 감사(실정법 위반)
15	"다 엄마들 마음" 온 마을 침통(안산시 분위기)	15	美 "전두환 알가 집 판 돈, 몰수"(차남 부동산)/캘리포니아	15	유 씨 차남·두 딸에 "귀국해 조사받아라"(유병언 전 회장)
16	<단독>"감찰 출석해 조사받겠다"(유병언 전 회장)	16	논란 많았던 '다이빙벨', 투입하기로(결정이유)	16	"계열사 등에 장당 수천만 원 판매" 의혹(유 회장 사진작품)
17	자녀 소환 통보 부당 내부거래?(차남·장녀)	17	"해드릴 게 이것뿐".. 낯은 곳에서 봉사(봉사활동 활약)	17	특허 수백 개·계열사서 고가 제품 판매(유 회장)
18	대사관이 '아해' 홍보를?(주 체코 대사)	18	불과 7m 옆 승객조차 무시한 채 탈출(선원들 탈출경로)	18	"일가 계열사 50개", 유 씨 지분 '0'?(재산규모)
19	'부동산 차명 매입 계획서' 확보(추진계획서 단독공개)	19	돈 빼돌린 '안전 감독관'.. 8명 출국금지(한국선급)/KNN	19	농사 짓는다고 땅 사 놓고··(부동산 투기 의혹)
20	백령도 곳곳에 직원 명의 땅(보유 실태)	20	"안전점검 독점 깨야".. 보고서 묵살(해수부, 한국선급)	20	"구해 달라" 119 신고 23건 더 있었다(사고 당시)
21	100억대 해외 재산 집중 조사(불법외환거래)	21	철제 로프 아닌 일반 로프로 묶었다(세월호 화물)	21	'최초 신고' 단원고 학생 의사자 지정 검토/@
22	한국선급 임원 출국금지(전현직 임원)/부산	22	평소에도 3배나 많이 싣고 다녔다(세월호 상습과적)	22	탑승 기사들 "바퀴 단 27개만 묶어"(화물 선적)
23	안전은 '뒷전' 비리 눈감기(한국해운조합)	23	손 놓고 있다가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안전관리대책)	23	합동 분향소 추모 행렬(조문표정)
24	<단독>"전자발찌 보조금만 챙겨(승선권 전산화)	24	백서 만들면 뭐하나.. 참사는 되풀이(무용지물 재난백서)	24	정부 장례 지원단 구성··24시간 가동/@
25	'해상안전' 법안 뒷북 통과(국회)	25	뒤늦은 '안전법' 처리.. 이나마도 지켰으면(국회)	25	추모 쪽지 수만 장 "비극 되풀이 않기를··"(안산시)
26	감정단 구성 침몰 원인 규명(첫 자문회의)	26	'천리 세력' 유혈 진압.. 군사 충돌 우려(사방-러시아)/파리	26	아픔 함께하는 자원봉사 몰려(진도 현지)
27	"힘 모아 이겨내요" 잇단 온정(자원봉사 활약)	27	부상 박주호도 돌아왔다(조기귀국)	27	<데스크>세월호 충격 극복하려면(충격 치유 방안)
28	여름 병·해충 한 달 빨리 왔다(더위 영향)	28	위기의 LG, 연패 탈출 안간힘(프로야구 外)	28	유언비어 유포자 절반이 10대(수사내역)
29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판결(항소심 결과)	29		29	엔진 경고 무시하고 4시간 운항 강행(아시아나 항공)
30	전두환 알가 미국 재산 몰수(차남, 美 주택대금)/LA	30		30	北 단속정 NLL 침범··· 경고 사격 후 퇴각(北 동향)
31		31		31	北 이번엔 '위로 동영상'··대거 '위로 전문'(이중적 태도)
32		32		32	간첩 혐의 유우성 씨 항소심도 무죄(항소심 판결)
33		33		33	대한제국 국새·어보 9점 반환(오바마 美 대통령)
34		34		34	미국 집 팔자 美 압류 소송··"한미 공조"(전두환 차남)/뉴포트비치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6 (토)

	M B C		S B S		K B S
1	연합사 첫 공동방문 "함께 간다"("군력사용 주저않을 것")	1	나빠진 가상..강풍에 수색 차질(수색 차질)/동거차도	1	"한국 방어 위해 군사력 사용 주저 안 해"("한국 방위 위해 군사력")
2	"끔찍한 인권침해" 일본 당혹(당혹 "정치문제 아냐")/도쿄	2	야속한 물살..유실방지 총력(야속한 물살..유실방지 총력)	2	포사격 지휘 김정은, "전쟁 예고 없다"("전쟁 예고 없다")
3	센카쿠 편들기에 중국 발끈(美 대사 불러 항의)/베이징	3	탄식.흐느낌..기약 없는 기다림(탄식..기약 없는 기다림)	3	日 정부 당혹…日 언론 "美 아베 인식 비판"(오바마 비판에…日 당혹)/도쿄
4	"전쟁은 예고없이 난다"(김정은 포 사격 훈련 지휘)	4	"동맹 위한 군사력 사용, 주저 않겠다"("동맹국 위해선 군사력 사용")	4	인선회 거액 후원금…입법 로비 의혹(인선회 입법 로비 의혹)
5	"2백억 챙겼다" 비자금 추적(비자금 추적)	5	"끔찍한 인권침해"..당혹스런 일본("끔찍한 인권침해"..日 당혹)/도쿄	5	안전 관련 업계 요구 상당 부분 수용해(규제 완화…왜?)
6	"월급 4분의 1근 구원파 헌금"("헌금 1/4은 헌금")	6	"마진봐고 또 마진챕냐"..나흘째 10만("마진챕냐"..10만 조문)	6	통로 등에 집기류 쌓여 수색 난관(집기류 쌓여 수색 난관)
7	운동장 두 바퀴 숙연한 발걸음(숙연한 애도 행렬)	7	함께 떠난 가족여행이..홀로 남은 아이(함께 떠난 가족 여행이..)	7	안타까운 기상 악화…다시 수색 난항(수색 난항)
8	"아픔 함께 합니다" 연등 행렬(연등 행사)/탑골공원	8	"내 아이 잃은 것 같아요"..숙연한 안산("내 아이 잃은 듯"..숙연한 안산)	8	다이빙벨 설치 실패 "바지선 고정 못 해"(다이빙벨 설치 실패)
9	이 시각 수색 현장은?(이 시각 수색현장)/사고해역	9	연등행렬도 추모와 기다림으로(연등 행렬도 추모와 기다림)	9	침몰 직전 본사와 통화…또 시간 지연(본사 통화 퇴선 문의)
10	세월호 왼쪽 수색 제자리걸음(왼쪽 객실 수색 어려워)	10	해외도 이 슬픔 함께..일본 前총리도(해외도 이 슬픔 함께)	10	진도VTS, 회계 사무실 압수수색(진도VTS 등 압수수색)
11	다이빙벨 이틀째 투입 실패(이틀째 투입 실패)	11	자원봉사도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자원봉사의 수칙.."더 낮게")	11	조타수 등 추가 영장…해경도 수사(해경으로 수사 확대)
12	진도 관제센터 전격 압수수색(승무원 전원 구속?)	12	"갈아진 사회 불신..그 상처 보듬어야"("갈아진 불신..상처 보듬어야")	12	유 씨 재산 추적 확대 배경은?(재산추적 배경은?)
13	소방서장이 현장 최고 지휘자(현장전문가 현장 지휘)/워싱턴	13	회계사 사무실 수색..측근 소환 시작(회계사 압수수색..측근 소환)	13	유병언-세월호 연결 고리 규명해야(실소유 입증 주력)
14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 또 훈련(훈련 무한 반복)/파리	14	진도VTS 자료 압수..해경으로 수사 확대(해경으로 수사 확대)	14	세월호 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출항 자체가 규정 위반)
15	<단독>해운조합 권한 뺏는다(해운조합 권한 회수)	15	CCTV만 64개..진실상자 복원해야(CCTV 64개..진실상자)	15	출항 결정권 사실상 해운사 손에?(출항 결정 해운사 손에?)
16	거칠어진 바다 애끓는 가족들(밤부터 비바람)/팽목항	16	해운업계 수장 줄줄이 사퇴(해운업계 수장 줄사퇴)	16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 사의 표명/@
17	수색 난항 깊어가는 인양 고민(어려운 수색)	17	증원용 구조 변경 금지..뒷북대책(쏟아지는 뒷북 대책)	17	화물차 기사 대부분 생존, 왜?(화물 기사 생존 배경은)
18	조류에 악한 수중 로봇(조류에 약한 수중 로봇)	18	오바마 방한에 "미 관광객 억류" 공개(北 "美 관광객 억류" 공개)	18	버스에는있는 탈출용 망치 배에는 없어(탈출용망치 있어야)
19	말 대신 피켓 "조용한 봉사"(조용한 봉사)	19		19	<이시각 현장>안산올림픽 기념관
20	세일즈 외교 "미국에 와 달라"("미국에 투자해달라")	20		20	전국에서, 가족 단위로…3만 명 조문(가족 단위 조문 이어져)
21	전셋값 86주 만에 꺾였다(86주 만에 하락)	21		21	바람에 실려 보내는 가족편지-리본(팽목항의 편지-리본)
22	스마트폰 내 손으로 조립(조립하는 스마트폰)/LA	22		22	위기 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개발"(충격 상쇄용 기사 개발?)
23	"유병언 사진전, 前 체코대사 연관성 확인 중"/@	23		23	<간추린>중국, 마일 대사 불러 공동성명 항의 外 4개/@
24		24		24	숙연한 연등회(희생자 추모 연등회)
25		25		25	
26		26		26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7일 (일)

	M B C		S B S		K B S
1	"세월호 참사 책임지고 사퇴" (총리 "책임지고사퇴")	1	총리사의표명.. "미숙한 정부대응 사과" (총리사의..대국민사과)	1	총리사의표명… "사고수습후수리" (사의… "사고수습후수리")
2	"수습총력" ·· "책임 회피" ("수습총력" ·· "책임회피")	2	"수리는사고수습후" ..개각폭커질듯("사표수리는사고수습후")	2	"정쟁 중단, 사고 수습 뒷받침해야" (새누리당)
3	거센 비바람 꽉 막힌 수색(비바람때도속구조작업)	3	野 "비겁한 회피..대통령 사과 필요" (野 "비겁한책임회피")	3	"상시 국회로 새 시스템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4	물살 가장 빠른 '사리' 시작(물살빠른 '사리' 눈앞)	4	종일 거센 비바람..원편 객실 접근 못해(동거차도, 중계차)	4	사고 해역 풍랑주의보··수색 제자리(사고해역풍랑주의보)
5	빗속 추모 인파 국화꽃 동났다(빗속추모인파)	5	"하늘이시여" ..기다림에 탈진(기약없는기다림에탈진)	5	잠수병호소늘어… "수중투입 제한" (통증때비…잠수병호소↑)
6	"옷 갈아 입고 여유있게 탈출" ("옷갈아입고탈출")	6	간절한 기도..눈물에 젖은 팽목항(종교계, 간절한기도)	6	신도 통장 이용해 지속적 돈세탁?(신도통해돈세탁?)
7	이 와중에 구호품 도둑이라니··(가족행세구호품빼돌려)	7	줄 잇는 봉사자,, "내 아픔 같아요" (줄잇는봉사자)	7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보복 두려움 호소(투명팀이감시)
8	목숨 건 잠수 벌써 6명 부상(목숨건잠수작업)	8	위로도 모자랄 판에..이 나쁜 사람들(위로도모자랄판에..)	8	김재원 "유병언 사진 판매로 비자금 5백억 조성의혹" @
9	'다이빙 벨' 실패 커지는 논란(논란만부른 '다이빙벨')	9	빗속 추모 행렬..분향소 전국 확대(분향소전국확대)	9	유병언 씨 일가 수입원은?(유씨일가수입원은?)
10	해상 사고 구조율 9% 비결은?(특수부대처럼훈련)/도쿄	10	통영 벽화마을에 '추모의 벽' (통피랑에 '추모의벽')	10	인수 자금 340억 원 자금원 수사(인수자금원수사)
11	안전최우선선장에 '무한권한' (권한도책임도 '무한')/뉴캐슬	11	구조는 뒷전이 채 해운사와 통화만..(구조뒷전, 해운사와통화)	11	구원파 예배에서는…관련성 부인(구원파예배에선…)
12	해운조합 관계자 소환 시작(안전관리소홀추궁)	12	아무도 모르는 '해양긴급신고122' (아무도모르는 '122')	12	과적 근거 기준 허위 신고…해경 승인(허위시고…해경승인)
13	"보복 두려워" 가명 수사(보복피해 '가명' 수사)	13	대책은 말 뿐..반복되는 '판박이' 실수(대책은말뿐)	13	무게만 따지고 같은 요금…과적차량묵인(무게달라도요금같아)
14	부실 위험 알고도 백억 대출(부실알고거액대출?)	14	유병언 측근 7인방 이번주 줄소환(유병언7인방줄소환)	14	여객선 과적 단속 '눈금만 맞으면…' ('눈대중' 과적단속)
15	21년 前 사고와 판박이(21년前판박이사고)	15	안전감독 간부들, 수상한 돈거래 추적(수상한돈거래추적)	15	해운회사 감독 기관이 보험 영업까지(보험장사하며유착?)
16	착한 아들의 마지막 노래(부서진가수의꿈)	16	"마음의상처, 피하지말고 털어놔야" (피하지말고털어놔야)/뉴욕	16	'선원 탈출 영상' 공개 안 해, 왜?(선원탈출영상비공개)
17	집단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규칙적생활로극복)	17	北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 취할 것" (北, 더강력한조치취할것)	17	<이시각>경기도안산시단원구안산올림픽기념관
18	"음악으로 위로합니다" (추모곡봇물··수익기부)	18	MT간 대학생, 펜션에서 흥기난동(대학생펜션흥기난동)	18	주말 빗속 전국에서 추모 발길(빗속추모행렬)
19	굳건했던 콜라 매출 '흔들' (콜라매출 '흔들')/뉴욕	19	'자유의 날' 20년..갈길먼 공존(민주화20년, 갈길먼공존)/카이로	19	잠 못 자고…죄책감…자신감 상실도(불면…죄책감)
20	차 안에 '몰카' 털이범 잡는다(차량털이막는몰카)/LA			20	내일부터 단원고 전 학년 수업 재개@
21	세계 신차 중국에 다 모였다(중국찾은전세계신차)/베이징			21	애도 속 소비 감소, 경기 영향?(애도속소비감소)
22	'원정 징크스' 깼다(5년여만에원정승리)			22	단체 여행 취소 항공업계까지 타격(항공업계객업계타격)
23	북한 "한미 정상이 북한 존엄에 악담" @			23	'사설' 관광지, 기념품점… '뒷돈' 수학여행?('뒷돈' 수학여행?)
				24	北 "대결 택한 결과 단단히 치를 것" 外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8일 (월)

	M B C		S B S		K B S
1	텅 빈 갑판 긴박했던 구조(목포해경 공개영상)	1	어느덧 13일째.. 수색은 재개했지만(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1	구조하러 왔는데‥적막한 갑판(목포해경 영상)
2	구명정 불러 선원들만 탈출(선원들 구조모습)	2	첫 구조 동영상 공개.. 말문이 막혔다(목포해경)	2	속옷 차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구조돼(세월호 선장)
3	"퇴선 명령" 거짓말 드러나(이준석 선장)	3	대피지시도, 구조도.. 아무도 안 챙겼다(해경 대응)	3	'구조 안간힘'해경 뒤로 '줄행랑' 선원들(선원 vs 해경)
4	"아무도 안 보였다" 구조대 당황(해경)	4	비겁했던 선원들.. 준비한 밧줄로 탈출(선원들 탈출 모습)	4	생사의 기로, 그 순간 그 현장(세월호 승객들)
5	"기다리래"마지막 문자(단원고 학생 문자)	5	생사의 기로.. 너무나 달랐던 안과 밖(시간대별 구조과정)	5	급격히 전복‥시간대별 상황은?(구조과정)
6	선장 '나몰라라' 구명벌 그대로(구조당시)	6	침몰 3분 전 마지막 카톡.. "방송이 없어요"(학생추정)	6	10시 17분 마지막 문자 "안내방송 없어"(단원고 학생)
7	악천후 속 수색 재개(중계차)/사고해역	7	하늘도 함께 울었다.. 빗속 조문 행렬(단원고·분향소)	7	이미 45도 기울어 "자력 탈출 불가능"(전문가 분석)
8	하염없는 기다림 구조 영상 분통(실종자 가족들)/광주	8	전국에서 온 손편지.. "힘내세요"(또래들의 편지)	8	제목 없음(해경 뒤늦은 동영상 공개)
9	대처 적절했나' 해경 압수수색(초동대처)/목포	9	"내일까지 쉽니다".. 13일째 닫힌 세월호(안산 세월호 부부)	9	합수부, 해경 초동 대처 수사(압수수색)
10	해경 자동경보 고장 나 있었다(지능형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10	'200억 비자금·160억 말반출' 정황(수사상황)	10	세월호와 정반대 대처‥승객 전원 구조(스페인 여객선)
11	스페인 여객선 화재 전원 구조(완벽한 대응)/파리	11	"해외 부동산부터 처분해 피해 보상"(유병언 전 회장)	11	<집중>'비상 대응' 결정권 CEO에?‥회사 통한 50분(세월호)
12	하늘도 울었다 빗속의 조문 행렬(전국 분향소)	12	VTS, 사각지대 없애고 일원화하려(관제센터 운영실태 점검)	12	선장 판단보다 회사 결정 문제없나-R?(여객선운항관리규정)
13	법인세 안 내려 회계 조작?(청해진해운)	13	재개발 공사에 금 가는 '학생 안전'(중구 환일길 학교)	13	<이 시각>팽목항
14	유병언 '유령회사' 압수수색(수사상황)	14	도심 덮은 검은 연기.. 긴급대피 소동(대전 아모레퍼시픽 공장)/TJB	14	수색 전전기지 바지선에 기대(휴식·영양보충 부족)
15	신협 만들어 돈 빌린 뒤 파산(세모그룹 유입)	15	엎친데 덮친 사고.. '판사·대장경 스님' 숨져(교통사고)/KNN	15	수심 40m‥선내 수색 상황은?(수중상황)
16	떼인 대출금 세금으로 보전(공적기금 투입)	16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 7월지급 불투명(새정치민주연합)	16	<이슈>제목 없음(수색 난항)
17	<단독>"유 회장 신격화 돈 쓸어가"(측근 인터뷰)	17	참사의 슬픔에 가라앉은 내수 시장(경제영향)	17	제목 없음(불신 키운 잠수사 투입 규모)
18	유병언 재산 추적 산 넘어 산(추적 상황 종합)	18	소비 위축에 '개각설' 정책 공백까지(정부 고민)	18	<데스크>전시 행정 만연‥대안은?(국민시각 접근)
19	강매한 사진 경영 개입 증거로(해외법인)	19	'반값 단말기'라더니.. 결국 생색용(이통사)	19	유 씨 사진 200억 원어치 매입 사인(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
20	"세월호 선장 구원파 아니다"(구원파 항의집회)	20	여름에 앓는 '수족구병', 벌써부터(이상고온 영향)	20	청해진해운 대표 곧 소환‥유 씨 일가는?(수사상황)
21	새삼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가족애 신드롬 현상)	21	분향소 찾은 아베 "진심으로 애도"(日 세월호 분향소)/도쿄	21	대형 사고는 기업도 형사처벌 해야(日 사례)/도쿄
22	기초연금법 처리 또 무산(새정치민주연합)	22	여객선에 불.. 첫 조치는 "갑판 대기"(스페인 여객선)	22	연료·용수 쓴 만큼 평형수 보충 안 해?(세월호)
23	화장품 물류창고 큰불(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대전	23	여객선 20%가 증축.. 부실한 안전점검(국내 여객선 실태)	23	'높이'는 허가 없이‥선박 개조 규정 '허점'(선박안전법)
24	'대장경 지킴이' 성안 스님 입적(교통사고)/경남	24	최룡해 건강이상설.. 新실세 황병서(北 동향)	24	세월호처럼‥여객선 1/3이상 증축·개조(국내 상황)
25	"위안부에게 수은 먹였다"(임신부방지)/베이징	25	두 전임 교황, '성인'에 올랐다(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파리	25	궂은 날씨 속 전국 곳곳 추도 행렬(합동분향소)
26	최룡해 지고 황병서 뜨나?(北 동향)	26		26	노승열 PGA 첫 우승 "국민들께 희망"(경기내용)
27	수족구병 고온 탓에 일찍 유행(증상·예방법)	27		27	<단신>전국 미분양 주택 8년여 만에 최소 外
28	아베, 세월호 분향소 조문/@	28		28	슬픔 딛고 다시 학교로(단원고 전교생 등교)
29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 설치"/@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29일 (화)

	M B C		S B S		K B S
1	"미흡한 대처 사과" 희생자 조문(대통령 "국민께죄송")	1	"국민 여러분께 죄송" ..분향소 조문("국민께죄송" ..분향소조문)	1	분향소 조문… "안전한 나라 만들 것" (대통령조문…유족호소)
2	'국가안전처' 재난 시 전권(국가안전처설치)	2	"국가안전처 신설..관료 적폐 추방" (국가안전처신설)	2	"국민께 죄송…국가안전처 신설" (사과…국가안전처신설)
3	공식 분향소 첫날 줄 잇는 조문(정부합동분향소설치)	3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 '비자금' 조사(청해진대표비자금조성조사)	3	유압 절단기 동원 좌현 격실 진입(난관좌현진입성공)
4	청해진 대표 '피의자'로 소환(청해진대표소환)	4	세월호 의혹..사고 직전 팔려고 내놨다(사고직전팔려고내놨다)	4	컨테이너 7톤 떠내려가…유실 우려(7톤'등등 '컨테이너)
5	관여 안 했다더니 억대 연봉(청해진해운서억대연봉)	5	세월호 '상표 값' , 유씨 일가에 年1억(상표값유씨일가에年1억)	5	침몰 7분 전 수십 명…선미우현, 대거구조(선미우현대거구조)
6	수억 원 유입 의혹 계좌추적(JYP계좌추적착수)	6	"선장, 개입하는 것 같았다" ("선장, 개입하는듯했다")	6	해경의 '선원구조' ,구조체계무너뜨려(구조체계망친 '선원구조')
7	이름값으로 수백 억 챙겨(이름값으로 '수백억')	7	희생자 265명으로.. "폭약 검토 안해" (동거차도, 중계차)	7	"문서제목서 '세월호' 삭제" …검색못하게?(문서제목서 '세월호' 빼)
8	독특한 이름 숨은 뜻은?(독특한유병언식작명)	8	아이들이 좋아했을 음식 올리며..(아이들좋아했을음식올리며..)	8	승무원 돌아가며 "선실대기" 30차례?(선실대기,30차례추정)
9	윤락여성 찾아가 고리대금업(구원파신협 '고리대금')	9	해경 구조, 아쉬움 남아 분노까지(해경구조, 아쉬움남아분노)	9	"선실대기" 만되풀이, 무슨 이유 있었나?(선실대기만되풀이, 왜?)
10	"천사회 위해 고액 기부금" ('억만장자' 예술가)/파리	10	"하늘에서도 같은 반 친구로.." (하늘에서도같은반친구로..)	10	조타실에도 방송 시설 있었는데…(조타실도방송가능)
11	거세진 물살 수색 어려움(사고해역, 중계차)	11	마르지 않는 눈물..끊이지 않는 행렬(마르지않는눈물)	11	<이 시 각>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12	구조 지연 논란 진실은?(언딘떠간잠수부 '마찰')	12	이렇게 천진난만했던 아이들이..(침몰직전동영상)	12	"평소에도 복원력 문제 있었다" (평소에도복원력문제	
13	선원혼사 통화내역 분석(선원-선사가족례통화)	13	해수부 장관 집무실이 '선주협회' 건물에(선주협회에장관집무실)	13	승객태반 안전 책임자 출항 전날 입사(출항전날입사한선원)	
14	퇴선 실패 통한의 초동대처(퇴선방송하나마나)	14	北,NLL 해상사격훈련..해안포 50여발(北,NLL해상사격훈련)	14	"뱃물수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미 권고('권고' 무시하다…)	
15	'면세유' 공급권 몰아주기 의혹(조합, 면세유몰아주기?)	15	하루새 200mm폭우, , 동해안 4월 산기록(삼척하루새200mm폭우)	15	청해진해운 "유 씨에게 매달 천만 원" (매달천만원지급)	
16	상습사고 말로만 '개선권고' ('폭주족' 청해진해운?)	16	예금금리는 최저..대출금리는 인상(예금금리최저,대출금리인상)	16	<이 슈> 탐욕이 부른 참극	
17	상처 달래는 따뜻한 쪽지(손글씨쪽지로위로)	17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될 듯(남한산성 '세계유산' 될듯)	17	<이 슈> 관료마피아 관 단체 고리 끊어야	
18	北 NLL 인근 사격 주민 대피(北사격훈련 '대피')	18	뒤늦은 점검에 '운항중지' 속출(뒤늦은점검..운항중지속출)	18	<데스크> 세월호 사고…정치권 책임은?(법체계정비나서야)	
19	中 언론 北 공군기지 공개(北주력부대사진공개)/베이징	19	올약도 '슬픔다독이기' ..줄어든 대중가요(올약도 '슬픔' 다독이기)	19	국회, '추모공원묘모비 건립 결의안' 가결	
20	개혁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개혁부진기관장해임)	20	집단우울감, 공감으로 극복해야(우울감, 공감으로극복해야)	20	北, NLL 포사격…서해5도 대피령(北,5NLL포사격)	
21	선거 일정 촉박 여야 경선 제개(여야경선일정제개)	21	"공공기관, 개혁실적 없으면 임금 동결" (개혁실적없으면임금동결)	21	<앵커> 中 언론, 北 기지 공개/베이징	
22	아찔한 등하굣길 곳곳 사고 위험(위험한등하굣길)	22	인터넷 익스플로러, 심각한 보안 결함(익스플로러심각한보안결함)	22	美에서 돈세탁에 대출 사기 혐의까지(대출사기처벌주목)	
23	블록 장난감 아기에게 위험(블록장난감삼킴주의)	23	정산나간 구단주 "흑인 데려오지마라" (인종차별발언폭문확산)/LA	23	돈봉투단비 대납…경선 초반 "부정 비상" (여야경선부정비상)	
24	<플러스>북한 핵실험 막으려면(北핵실험막으려면)	24	野, 방송법안 처리키로..여당안 수용(野, 방송법여당안수용)	24	강제 낙태불임 한센인, 국가가 배상해야(한센인출산금지반인권적)	
25	초강력 토네이도 美중남부 강타(美초강력토네이도)/뉴욕			25	블록 흡입 사고 60% 영유아(유아 '블록' 흡입주의)	
26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확실(남한산성도 '세계유산')			26	천년 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으로(남한산성 '등재' 확실시)	
				27	美연구팀 "걸으면 창의력 높아져" (걸을때창의력높다)/워싱턴	
				28	국제해사기구, 여객선 안전강화 추진外	
				29	승무원 어머니의 쪽지(쪽지에남긴…)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4월 30일 (수)

	M B C		S B S		K B S
1	<단독>선사 대표 유병언에 침몰 보고?(유병언에 침몰 보고?)	1	승객 외면한 선원들 '살인혐의' 검토(선원들에 살인혐의 검토)	1	"해경, 언딘 우선 잠수 위해 군 투입 통제"("언딘 위해 군 투입 통제")
2	<단독>이준석 선장 자주 술판 벌였다(선장 상습 음주운항)	2	"그만 살아라, 기다렸는다" 목살("짐 그만 살아라" 요구 목살)	2	둘째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쳐(황금 시간 놓쳐)
3	측근 줄소환 차남 출석 재통보(유병언 측근 줄소환)	3	다이빙벨, 첫 투입 30분 만에 물 밖으로(구조 현장)/동거차도	3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책임 통감"("초기 혼선 책임 통감")
4	"선실 구조 설계와 다르다"(도면과 달라 수색 난항)	4	4층 격실·5층로비 절단키로 진입(4·5층 절단키로 진입)	4	논란 속 언딘, 어떤 회사 갈래?(언딘은 어떤 회사?)
5	천안함 유족 진도 찾아 봉사(천안함 유족도 봉사)	5	<뉴스>35분이나 걸린 헬기..전달 안 된 VTS교신(35분이나 걸린 헬기)	5	수색에 4억받고가족에 "5억 더요구"(5억 더 요구)
6	구조 소방헬기 도지사 이용 논란(전남지사 소방헬기 이용)	6	사고 9일뒤에야 소집된 전문가 회의(9일 지나서야 전문가 회의)	6	2Km 밖 시신 수습…유실 수색 확대(유실 수려)
7	'대통령 사과' 여야 날선 공방(대통령사과 공방)	7	제정신인가?.."알바생은 장례비 못 줘"(알바생은 장례비 못 준다니)	7	다이빙벨 투입했지만…고장 철수(다이빙 벨 고장 철수)
8	"해경이 해군 저지" "혼란 예방"(해경 통제 논란)	8	"UDT 잠수, 해경이 통제했다"는데..(해경이 軍잠수 통제했다는데)	8	인양 크레인 철수…성급한 판단 백억 헛돈(백억 원 헛돈)
9	과적 보고 묵살 선사 직원 체포(선사직원 2명 체포)	9	"친구야 보고싶다"..퇴원 후 분향소로.("보고 싶다 친구야.")	9	구조 매뉴얼 안 지키고 허술하고(무용지물 매뉴얼)
10	아르바이트생 장례비 나 몰라라(서러운 아르바이트생)	10	천안함 유족들의 동병상련(동병상련 천안함 유족 방문)	10	해경 약 3분의 1 수영 못 해(해경 약 1/3 수영 못 해)
11	이해 사진 실제 가치는?(이해 사진의 가치는?)	11	주인 못 찾은 유류품들..또 눈물만(주인 잃은 유류품만..)	11	경비정 "탈출" 방송 선내선 못 들어(들리지 않는 탈출 방송)
12	"운항관리 제대로 하면 전출"("제대로 감독하면 보복")	12	국무회의 사과 거부..연출 논란까지(국무회의 사과 거부)	12	조타실에서 나온 의문의 남녀(조타실 의문의 남녀)
13	직원에게 정치후원금 강요(직원 정치 후원금 강요)	13	남해안 일부 패류독소 검출(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13	"과적 침몰 위험" 선사 묵살··직원 체포("침몰 경고··묵살)
14	마지막 작별·눈물의 분향소(분향소 추모 인파)	14	고속도로 사고처럼, 2차사고 잇따라(잇단 고속도로 2차 사고)	14	'대판다' 수사 본격··문서 폐기 현장?('대판다 수사··문서 폐기')
15	생사의 위기에도 "아기부터!"(위기의 순간 아기부터!)	15	멧돼지 피해보상, 법만 있으면 뭐하나(보상한다더니 "예산없다")	15	<이슈>어설픈 지휘(어설픈 지휘··곳곳 혼선)
16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꼭 필요(심리치유센터 개소)	16	130Km를 헬쓸고 간 美토네이도(130Km 휩쓴 美토네이도)/워싱턴	16	<이슈>선진국 사례(지휘 체계 일원화)/워싱턴
17	美 연방재난관리청 구조 사령탑(美 재난 사령탑)/워싱턴	17	말단권력의 횡포..폭발한 민심(폭발한 민심)/베이징	17	<이 시각 현장>서울 종로구 청계천(노란 리본 물결)
18	<데스크>더 깊은 애도를 위하여(이제는 달라져야.)	18	여야, 부산후보 확정..3자 대결로(여야 부산 후보 확정)	18	생존 학생들 합동 조문 "잊지 않을게"(생존 학생들 조문)
19	얼어붙은 소비 골목상권 위기(애도에 골목상권 위기)	19	北 "핵실험에 시효 없다"(北 "핵실험에 시효 없다")	19	무분별 성금 모금 중단 요구(무분별 모금 중단 요구)
20	황금연휴 "중·일 관광객 잡아라"(中·日 큰손 잡아라)	20	측근 줄소환..차남 모레까지 출석 통보(차남 모레까지 출석 통보)	20	"작은 함이라도.." 천안함 유족들 진도에(천안함 유족들 진도에)
21	단체여행 줄고 가족여행 늘어(가족단위 여행 늘어)	21	감시원, 해수부·해경 등 특감 절차 착수/@	21	외신 "한국 안전 뒷전" "후진국 사고 냈다"(외신 반응)/워싱턴
22	3월 산업 생산 반등 전망 불투명(생산 전망 불투명)	22	부실한 학교 안전교육..이젠 바로잡자(기껏해야 시청각 교육)	22	사고 막아라 산업계 안전 관리 비상(안전 비상 기업들)
23	9시간 넘게 일하면 뇌출혈 위험(9시간 근무 건강 위협)	23	세월호 참사 후 심리상담 50% 늘어(시리상담 50% 늘어)	23	<데스크>안전 관련 예산 살펴는?(안전에 투자해야)
24	"전자담배도 해롭다" 규제 강화(美 전자담배 규제)/뉴욕	24	힘든 일하는 사람, 뇌출혈 위험도 높다(뇌출혈 위험↑)	24	여야 경선 재개·광역 후보 속속 윤곽(부산 등 후보 윤곽)
25	XP익스플로러 치명적 보안 결함("인터넷 익스플로러 결함")	25	美NBA, 인종차별 발언 구단주 퇴출(인종차별 발언 구단주 퇴출)	25	공영방송 독립 훼손 입법 속전속결(공영방송 훼손 입법)
26	여야 부산시장 후보 결정(여야 부산시장 후보 결정)	26		26	美 FBI, 부패 지도자 은닉 재산 추적(FBI 가동)
27	말기암 청년 기적을 만들다(기적의 모금)/런던	27		27	美토네이도…비상경계령(토네이도)/현지
28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28		28	장시간 근로·격한 노동…뇌출혈 위험↑(초과근무 뇌출혈)
29	'김일성 묘 참배' 실형 확정/@			29	<간추린>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월호 분향소조문 外4개/@
30				30	말기암 청년의 꿈(말기 암 청년의 꿈)/런던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일 (목)

	M B C		S B S		K B S
1	해경 수사국장이 전 '세모' 직원(해경국장 세모 출신)	1	"침몰 순간, 적재량 조작부터 했다"("침몰 순간 적재량 조작")	1	침몰 중인데 적재량 축소 조작부터(침몰 중 적재량 조작)
2	"구원파 떠났다" 의혹 부인("수사 개입 안 했다")	2	"도망갈 때도 탈출 지시 가능했다"("탈출 지시 가능했다")	2	평형수 채우기도 시도했나?(평형수 채우기도 시도?)
3	세월호 선장 경찰 집에 재워(선장 해경 집 숙박, 왜?)	3	해경 국장이 세모출신 구원파였다(세모출신 구원파였다)	3	세모 경력 해경 핵심 국장 전격 경질(세모 출신 국장 경질)
4	"화물 고박 제대로 안했다"("화물 제대로 안 묶어")	4	선장을 유지장 아닌 아파트에(선장을 유지장 아닌 아파트에)	4	"한때 구원파"…유병언과 관계없다?(한때 구원파였지만·)
5	선내방송 불가능은 거짓말("방송 불가능" 거짓말)	5	논란 많았던 다이빙벨 성과 없이 철수(다이빙벨 성과 없이 철수)	5	"영향력 있는 지위"…수사 관여 안 했다?(이 국장 역할은?)
6	이 시각 수색 현장(시신유실 막으며 수색)/사고 해역	6	수색,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구조 현장)/동거차도	6	구속 전 수사관 집에서 1박…누가지시?(해경집에머문선장)
7	1차 수색 주말까지 마무리(주말까지 1차 수색 종료)	7	물살에 유실될라..애타는 가족들(유실될라..애타는 가족들)	7	다이빙벨 성과 없이 결국 철수(논란만 남기고 철수)
8	다이빙벨 성과 없이 자진 철수(다이빙벨 결국 철수)	8	<긴급>영타리 무게 기록, 항공화물처럼 하자(상습 과적 없애려면)	8	"20시간 작업 가능" 거듭된 말 바꾸기(말바꾸기)
9	"수색만 방해" 실종자 가족 분노(논란만 남기고 퇴장)	9	평형수 줄인 배, 이렇게 위험하다(vd형수 줄인 배, 이렇게 위험)/도쿄	9	수색 시간 하나…"다이빙벨 실상 밝혀야"("수색시간만 하나")
10	<단독>해경 지휘부 반 바다 경험 없어(바다 경험 없는 해경)	10	"고통을 함께"..다시 진도로 간 유족들("고통 나누고 싶다")	10	구조가 먼저라며…비용은 누가?(실패·비용 처리는?)
11	인력 늘리고도 초기 대응 허술(잠수요원 무력했나)	11	나누는 슬픔..벌써 65만 명이(65만 명이 슬픔 나눴다)	11	사선 넘는 혹사 잠수 부상 속출(혹사 잠수, 부상 속출)
12	해군 SSU 공기통 없이 출동(SSU 공기통 없이 출동)	12	"국가 예산, 안전을 최우선으로"("예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12	<이 시각 현장>세월호 침몰 해상
13	유병언 측근 첫 영장 청구(유병언 측근 첫 영장)	13	금 간 학교 건물..또다른 안전사각(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	13	다시 찾은 팽목항…실종자 가족 위로(진도 다시 찾은 유가족)
14	숨진 노숙인 정보로 예금 슬쩍(숨진 노숙인 돈 슬쩍)	14	"북한제보다 월등하다"다니..군 무인기 추락(군 무인기 또 추락)	14	동거차도 주민들, 생계 접고 바다만·(동거차도는 지금··)
15	<단독>여성 홈쳐보기 웹캠 해킹 비상(홈쳐보기 해킹 경보)	15	조작된 증거 재판활용..검사 3명 징계(증거조작 검사 3명만 징계)	15	쓸쓸히 장례··합동 분향소 안치 못하기도(쓸쓸한 장례)
16	경기장 난입 관중 실판 폭행(오심 불만 실판 폭행)	16	野, 강경파 반발에 당론 채택 또 무산(기초연금 당론 채택 또 무산)	16	<단독>유 씨 "재산 없다"…공적자금 거액 손실(유 씨 재산 없다)
17	연휴 시작 공항·도로 붐벼(최대 6일 황금연휴)	17	노동절 집회도 세월호 추모로(세월호 추모 속 노동절 집회)	17	<단독>"재산 나오면 상환"각서·에보, 재산 추적"재산 나오면 상환" 각서
18	숨죽여 우는 일본인 학생상 유족(잊혀진 일본인 학생상)	18	유 씨 측근 영장 청구..차남은 소환 불응(차남, 2차 소환에도 불응)	18	<이슈>관제센터 운용 실태는?(운용실태)
19	한국선급 안전진단 해군 땔뚜름(해군 함정도 검사 부실?)	19	與3원 단체 외유..그 뒤에 빈원성 밥값(단체외유 뒤 민원성 밥값)	19	<이슈>통합관리 필요(선진국 시례)
20	"재난 안전 예산에 우선순위"(재난 안전 예산 확대)	20	국회서 잠자는 119GPS추적법(119GPS추적법, 국회서 낮잠)	20	"국가 안전틀 바꾸는데 예산 우선 배정"("안전 틀 바꾸는 데 우선")
21	與 재난특위 野 국정조사 주장(여야 세월호 놓고 격돌)	21	대형참사, 기업에 직접 책임 묻는다(대형참사 기업책임)/도쿄	21	추천만 믿고 물류대상 뒤늦게 취소(뒤늦은 수상 취소)
22	"구조변경 침몰 보험금 없다"(구조변경 "보험금 없다")	22	조용하게 차분하게..달라진 5월 마케팅(차분한 5월 연휴 마케팅)	22	日 아베의 본심 "독일 사죄 따를 수 없어"("독일처럼 사죄 못 해")/도쿄
23	野 기초연금 당론 채택 또 실패(野 기초연금 당론 또 무산)	23	시진핑 시찰 직후에 터진 폭탄(폭탄테러)/베이징	23	세월호 애도 속 노동 현안 요구 자제(노동계도 세월호 애도)
24	결혼이민자 20만 정착 관건은?(결혼이민 20만 시대)	24		24	"증거 확인 소홀··담당 검사들 중징계 청구"(확인소홀 중징계 청구)
25	"독일처럼 과거사 사죄 못해"("독일처럼 사과 못 해")/도쿄	25		25	기초연금 놓고 진통…결정 또 미뤄(기초연금 결론 못 내)
26	잇따른 자연재해 美 곳곳 비상(美 자연재해 몸살)/워싱턴	26		26	공사 구조물 들이받아 아찔한 교량 충돌(또 규정 어겨)
27	한국영화 5월의 대반격(한국영화 다시 기지개?)	27		27	친러 무력 장악…동부 통제 안 돼(친러 장악 확산)/현지
28	민노총, 서울역에서 노동절 행사/@	28		28	<간추린>무인정찰기 송골매 추락 원인 조사 중 外 4개/@
29	증거위조 사건 검사 중징계/@			29	"가족…고맙고 행복해요"(소중해진 가족)
30	새정치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2일 (금)

	M B C		S B S		K B S
1	지하철 2호선 추돌 200여 명 부상(지하철 추돌 2백여 명 부상)	1	전동차 추돌..2량 탈선에 약 200명 다쳐(전동차 추돌..약 200명 부상)	1	또 사고…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또 사고…열차 추돌)
2	수습 지연 열차 운행 중단(지하철 사고 수습 지연)/상왕십리역	2	팡소리 후 정전..열차 문 열고 탈출(팡소리 후 정전..문열고 탈출)	2	열차 2량 탈선…추돌 상황 분석(추돌 상황 분석)
3	"자동 제동 장치 작동 안 해"(추돌사고 원인은?)	3	"대피 안내방송했다"는데..(대피 안내방송 했다는데)	3	부상 200여 명, 서 있던 승객 피해 커(200여 명 부상)
4	금수원 대표 탤런트 전양자(금수원 대표 전양자)	4	안전거리 유지장치 고장난 듯(안전거리 유지장치 고장난 듯)	4	"대기" 방송 못 믿고 선로 걸어서 탈출("못 믿어"…세월호 효과?)
5	전양자 출금 차남 출석 거부(전양자 출국금지)	5	탈선 열차 수리 중..퇴근길 혼잡 극심(사고 현장)/상왕십리역	5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 이상?(사고 원인은?)
6	주변 땅 싹쓸이 왕국 꿈꿨나?(금수원 왕국 꿈꿨나)	6	독도행 여객선, 아찔한 엔진 고장(독도 가던 여객선 아찔한 회항)	6	택시 부제 풀었지만, 퇴근길 혼잡 극심(퇴근길 혼잡 극심)
7	<단독>구원파 신도에 바기지 분양(신도에 바기지 분양?)	7	"규정 한도보다 두 배나 더 실었다"("규정보다 2배 더 실었다")	7	이 시각 복구 상황(복구 상황)/상왕십리역
8	프랑스 아해 마을 텅 빈 폐허(방치된 아해 마을)/쿠르베피	8	안 지켜진 매뉴얼..구체적 지침도 없다(안 지켜진 매뉴얼)	8	390여 명 탄 여객선 엔진 고장 회항(독도 여객선 고장 회항)
9	이 시각 수색 상황(내일 1차 수색 마무리)/침몰 해역	9	해경-해양구조협회, 물고 물린 유착(물고 물린 유착)	9	거제 유람선도 엔진 고장…복귀(거제 유람선도 고장)
10	예측불허 맹골수로 악천고투(유속 예측불허)	10	유실 막아라..인근 무인도까지 수색(구조 현장)/동거차도	10	8일 만에 고장…부실 점검?(안전 점검 8일 만에…)
11	4Km 밖 희생자 발견 유실 우려빠른 물살 유실 비상)	11	"15일까지 1차 수색"..잠수병 늘어("15일까지 1차 수색")	11	"통과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통과하면 7월 지급")
12	잠수부 피로 누적 안전 비상(지쳐가는 잠수부들)	12	사고 직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12	65세 이상 447만 명 혜택(65세 이상 차등 지급)
13	"대만 마련 뒤 대국민 사과"("대만과 함께 사과")	13	"이런 구호품은 그만 보내셔도.."(이런 구호품 그만 보내셔도..)	13	가벼운 치매 치료비 15%만 낸다(경증 치매도 보험 혜택)
14	다이빙벨 투입 이유가 ("다이빙벨 혼선 가중")	14	희생자 모욕하는 철없는 글들(희생자 모욕 철없는 글들)	14	<이 시각 현장>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서울광장)
15	천안함 폭침 때도 좌초설 주장(천안함 좌초설 주장)	15	"대만 마련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대만 마련해 대국민 사과")	15	4.5Km 밖 시신 수습…장기화에 유실 비상(4.5Km 떠밀려가…)
16	무자격 특채 고속 승진 의혹(특채과정 의혹덩이)	16	인천 대형병원에 불..환자 긴급대피(인천 대형병원에 불)	16	유실 시신 수색 반경 20Km가 핵심(반경 20Km가 수색 핵심)
17	출항 전 안전보고서 허위 작성(출항 전 엉터리 보고)	17	기초연금법, 곧 국회 통과될 듯(통과될 듯)/국회	17	실패 다이빙벨 부추긴 언론 책임은?(실패…책임은 누가?)
18	선원 묵은 모텔 말 맞춘 흔적(모텔서 말 맞추기 정황)	18	총정치국장에 황병서..말려난 최룡해(총정치국장에 황병서)	18	수습 마무리 후 "대안 갖고 대국민 사과"(박근혜 대통령)
19	독도행 여객선 엔진 고장 회항(독도 여객선 엔진 고장)	19	41살 측근이 온다..최연소 주한대사(최연소 주한美대사)/워싱턴	19	최측근 연기자 전양자 씨 소환 방침(전양자 씨 소환 방침)
20	손연재에 상습 악플 징역형(손연재 악플 처벌)	20	야생진드기 감염 환자 올해 첫 발생/@	20	염곡동 알대 "차명 의심" 2만평 땅 더 있어(부도 후 대거 매입)
21	수면 치과 치료 부작용 주의(치과 수면마취 안전?)	21	"유씨 차남, 8일까지 출석하라"("8일까지 출석"최후통첩)	21	<이슈>한국선급 부실검사 유착의혹(부실검사, 유착의혹)
22	연휴 기온 똑 미세먼지 주의(연휴쌀쌀·미세먼지)	22	수천만원 주고 산 사진, 시중가는 3만원(3만원짜리가 수천만원으로)	22	<이슈>독점 체제 개선해야(독점 체제 개선해야)
23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 임박(막바지 진통)/국회	23	재난지원하라는 돈으로 해외나들이(재난지원 자금으로 외유)	23	<데스크>제복에 담긴 의미는?(제복 의미 되새겨야)
24	세월호 참사 책임 여야 공방(세월호 후속대책 공방)	24	연극의 꿈.."하늘에서라도 이루길"("꿈 이뤄지길")	24	中 어선 연평도 꽃게 어장 점령(재난 틈타 꽃게 싹쓸이)
25	이번 연휴 가장 붐비는 곳은?(연휴 붐비는 곳은?)	25		25	北 2인자에 황병서…최룡해 자리 올라(北 2인자에 황병서)
26	신임 美대사 국방장과 비서실장(최연소 주한미대사)/워싱턴	26		26	김 씨 왕조 北, 2인자는 없다(2인자란 없다)
27	경남 거제 유람선 고장 승객 이송/@	27		27	"강제수용·처형" UN, 北 압박(北 인권 질책)/파리
28		28		28	"고삼석 위한 위인 입법" 논란(고삼석 위인 입법 논란)
				29	<간추린>"주한 미국 대사에 마크 리퍼트 내정" 外 4개
				30	목숨 건 탈출 행렬(목숨 건 탈출 행렬)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3일 (토)

	M B C		S B S		K B S
1	신호기 고장 나흘동안 몰랐다("신호기고장이사고원인")	1	'신호기 고장' 이 원인..나흘간 몰랐다('신호기고장이원인')	1	압수수색, 무선교신□행일지 등 확보(서울메트로압수수색)
2	이중 삼중 안전장치 모두 먹통(멈춰선안전장치	2	눈 감고 달렸던 2호선..뭘 점검했나(눈감고달렸던2호선)	2	탓열차 120m까지 점근,관제실 뭐했나?(관제실뭐했나?)
3	엉뚱한 안내방송에 우왕좌왕(불안한승객선로로탈출)	3	승객들은 달렸다..어둠 속 침착한 대피(승객이알아서대피)	3	<앵커>고장…나흘간 몰랐다
4	미안한 발길 어느덧 백만 명(휴일끝없는추모인파)	4	<긴급>시라진 '25년후폐쟈' 규정..위험천만(내규연없는전동차)	4	또 안내 방송 문제…실제와 다른 매뉴얼(또 '안내방송' 문제)
5	황금연휴 공항은 북적('골든위크' 공항북적)	5	'음파 탐지 장비' 동원해 유실막겠다(동거차도, 중계차)	5	신고도, 대피도 시민이 주도(신고□피…시민이주도)
6	보복 운전 처벌하려면?(위험한보복운전…어려운처벌)	6	가족과 함께 찾은 분향소..100만 육박(줄잇는가족단위조문)	6	사고 후 대피법 상황따라 달라(대피법, 상황따라달라)
7	군에서 또 성추행(멈추지않는성추문)	7	'사기범' 을 왜해경이..고유 업무 충실해야(짝퉁단속에해경출동)	7	"지시 요구에 선장, 어쩔 줄 몰라 해" (선원진술)
8	남은 격실 6곳 집중 수색(남은격실집중수색)	8	1조 넘는 예산, 해양안전은 1.6%뿐(해경안전예산1.6%)	8	<앵커>인양까지 '언딘' 에‥의혹
9	선장 묵은 아파트 CCTV 삭제(CCTV2시간만삭제)	9	유씨 차남과 친구, '천해지대표' 소환(유씨차남친구소환)	9	해외 법인 통해 비자금? '의혹' 99억 추정(의혹액수,99억추정)
10	'눈낫이 모임' 으로 경영 개입(경영개입단서확보)	10	나흘간 황금연휴..차분한 나들이(차분한연휴나들이)	10	'다판다' 대표 비자금 관여 여부 수사@
11	수상한 360여 억 살살이 뒤진다(수상한360여억자금추적)	11	65세 이상 노인 60%, 月20만원(노인60%, 월20만원)	11	<확대경>정비다 갖추고도 정작 활용은 못 해(정비갖추고도활용못해)
12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기초연금최대20만원)	12	광주 전략공천..경쟁자는 탈당선언(野, 광주전략공천..탈당선언)	12	길 멀렸지만 차분한 연휴‥조문 이어져(연휴시작‥조문계속)
13	전략공천 탈당 후폭풍(전략공천□탈당후폭풍)	13	초대형 산사태.. "2천여 명 매몰" (산사태로2천여명매몰)/카이로	13	교육부 믿고 '쉬소' , '위약금' 만 떠안아(교육부믿다 '위약금')
14	2인자 최룡해 당 비서로 좌천(2인자없는북한권력)	14	또 불붙은 우크라이나유혈충돌(또불붙은유혈충돌)/파리	14	아프간 큰 산사태… '천가구' 마을 시라져(산사태‥천여가구시라져)
15	오심잡아라비디오판독 '저울질' ('비디오판독' 도입저울질)	15	숲길에서 '지친 마음' 치유하세요(숲길걸으며심리치유)	15	北 최룡해 '강등' … '역할조정론' 도(최룡해강등‥역할조정?)
16	혼란 부추긴 브로커(혼란부추긴브로커)	16	'작은 영화' , 관심 만큼 투자해 주세요(작은영화상공비결은)	16	야, 공천반발발□당…여, '박심' 논란(공천발발,박심논란)
17	"다이빙벨심의중단" 외압논란('심의중단' '명백한외압')	17	中巡에 '고리장사' 하는 '유통센터' (중소기업에고리장사)	17	"기초연금법 하위 법령 조속 제정" 外
18	살아남은 고통‥깊은 슬픔(남모르는후유증)			18	봉사, 이름다운 진화(봉사,이름다운진화)
19	9□1 테러 아직도 생존 치료(10년넘게심리치료)/뉴욕				
20	생업 포기··빨길 뚝 지금 진도는?(뱃길안전우려에텅빈진도)				
21	한밤의 운치 궁궐 산책(경복궁,중계차)				
22	불붙은무력충돌 사상자속출(유혈사태확산‥내전우려)/파리				
23	아프간 산사태 "2천 백여 명 실종" @				
24	박준규 前국회의장 별세@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4일 (일)

	M B C		S B S		K B S
1	"수습 때까지 무한 책임감"(朴대통령)	1	실종자 가족 면담.. "무한한 책임 느껴"(朴대통령)	1	실종자 가족 면담..."무한 책임 느껴"(朴대통령)
2	"열차 위치 실시간 파악 불가능"(지하철 2호선 사고)	2	'길어진 체류'에 생업까지 전폐(실종자 가족들)	2	수색 현장 바지선 방문 수색 요원 격려(朴대통령)
3	앞뒤 열차 직접 통신 수단 없다(위치확인 불가능)	3	조문객 100만 넘어.. 휴일 잊은 추모(안산 합동 분향소)	3	제목 없음(구조·수색상황)
4	기관사 조사 "급하게 비상제동"(국토부 특별안전점검)	4	야속한 강풍.. 기름 퍼해도 확산(구조·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4	팽목항의 밥상..."빨리 돌아오길"(실종자 가족들)
5	"충성 경쟁하듯 유병언 보호"(측근 조사)	5	여객선, 안전점검 강화했다지만..(현장점검)	5	세월호 원래 선장도 "상습 과적 책임"(수사상황)
6	나머지 실종자는 어디에?(세월호 구조·수색상황)	6	8개역에서 '같은 사고 위험' 있었다(지하철 2호선 사고)	6	세월호 인양 계약에 해경 부당 개입?(안전 구난계약 문제)
7	무인도만 2백여 개 어떻게 수색(시신 유실)	7	하나의 선로, 두 개의 체계.. 이러니 위험(2호선 신호체계)	7	단원고 교사·졸업생 연휴에 진도 방문(봉사활동 참여)
8	걸음마 뗄 때가 가장 위험(어린이 안전사고)	8	묵념으로 시작한 여왕의 '마지막 무대'(김연아)	8	막내 남겨 놓고..이루지 못하 '귀농의 꿈'(알바인 희생자 사연)
9	맡긴 아이 사고 땐 누구 책임?(판결내용)	9	낚싯배, 무의도 앞바다 모래언덕 걸려(휴일 사건·사고)	9	연휴 가족 나들이..조문객 100만 명(휴일표정)
10	'파아노 대여' 사기 조심(렌탈 가장한 신종사기)	10	'가정의 달' 밀수 극성.. 카메이션까지(세관 단속현장)	10	어린이날 맞이 판촉전도 차분히(유통업계)
11	원조보다 비싼 이상한 과자 값(수입과자 가격 역전)	11	초등생들 "가족 대화, 30분도 안돼요"(설문조사 결과)	11	"아빠가 다니는 회사?"..논란의 편지(통신대기업)
12	이런 선물은? 바나나를 파아노로(어린이날 선물 제안)	12	'수직 증축' 허용했지만, 기대에는..(부동산 리모델링)	12	열차 기관사 "신호기 돌발 이상"(지하철 2호선 사고)
13	머리감기 두렵다 젊은 탈모 급증(건강정보)	13	늘어난 30·40 탈모.. 다이어트도 원인(건강정보)	13	노후화·점검 소홀..사고 재발 우려(사고 근본원인)
14	세월호 애도로 마지막 인사(김연아 아이스쇼)	14	'세월호' 보고도 계속되는 '안전 사고'(산업재해)	14	아프간 산사태..수색·구조 중단(수색포기)
15	침몰 영상 공개 가장 슬픈 날(SNS 내용분석)	15	끼리끼리 주고받은 해수부 연구용역(특혜성 수의계약)	15	중국군, 北 붕괴난민 대비 문서 마련(中긴급대응안)/도쿄	
16	해안가마다 민간 구조조직(英 사례)/런던	16	눈물 흘리며 상처 어루만지는 무대(공연계)	16	'대통령 의중' 논란..'전략 공천' 갈등(지방선거)
17	태풍 휩쓴 자리 절도범 기승(美 이재민 대상)/LA	17	아프간 산사태 현장, '잡단 무덤'으로(구조작업 중단)/카이로	17	<단신>8명 탄 낚싯배, 모래언덕에 걸려 外
18	드디어 온다 폴 매카트니(내한 예정)	18	할리우드 떠나는 할리우드 영화(제작장소 변화)/LA	18	1920년 말 첫 창작 동요(방정환 선생)
19	퇴임 후 더 인기있는 대통령(美 부시대통령)/워싱턴	19	한일 통산 300 세이브(프로야구 임창용 外)	19	
20	흑인은 'NO' 뿌리깊은 인종차별(美 실태)/워싱턴	20	2경기 연속 골.. 월드컵 청신호(이청용 外)	20	
21		21		21	
22		22		22	
23		23		23	
24		24		24	
25		25		25	
26		26		26	
27		27		27	
28		28		28	
29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5일 (월)

	M B C		S B S		K B S
1	차분한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헬기스케치)	1	어느덧 20일째.. "진상 밝혀달라" 서명운동(조문 표정)	1	하늘에서 보니…차분한 어린이날(헬기스케치)
2	與 서울시장 경선 '박심' 논란(김황식 발언논란)	2	세월호 평형수, 고작 1/4만 채웠었다(수사내용)	2	행사 대신 가족과 함께·안전 체험도(어린이날 표정)
3	野 광주 전략공천 거센 역풍(내홍 확대)	3	확장자 추가 수습.. 재난망 그물 설치(수색상황, 중계차/동거차도	3	"모든 어린이들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대통령)/@
4	강한 바람·파도 속 수색 성과(세월호 구조·수색)	4	연휴 잊은 자원봉사 "아픔을 함께.."(진도 현장)	4	어린 자녀들과 추도 발길…진도 가기도(분향소 조문행렬)
5	숨 가쁜 수색 사고해역 24시(잠수사들의 24시)	5	정상에서 내려오다 급정지.. 10명 다쳐(대구 케이블카)/TBC	5	"선원들, 구조 기회 4번이나 외면"(수사상황)
6	규정 어기며 목숨 건 잠수(수색 최선)	6	신호기, 외부업체 맡긴 채 '나 몰라라'(지하철 사고)	6	"짐 너무 실어 평형수, 기준의 1/3만 채워"(1등 항해사 진술)
7	경비정 출동 알고 선원들 대기(수사상황)	7	'어린이날 행사'대신 '안전 체험'(차분했던 어린이날)	7	근거리 여객선은 차량 묶지 않아도 돼?(규정 부실)
8	세월호 취항 국정원이 반대(보안상 결점 이유)	8	금 가고 깨지고.. '재난 위험' 학교 123곳(학교 시설 안전)	8	선내 자판기·냉장고 고정 의무 없어(연안 여객선)
9	카페라선 '위험한 항해' 여전(안전규정 한계)	9	'영어 이름'에 웬 '사주·오행'?(작명소 횡포)	9	작은 비품도 고정, 전복돼도 '그대로'(佛 사례)/르 아브르
10	선박 사고 '자동경보'로 막는다(E-내비게이션)	10	中 "촌스러운 교복은 싫어요"(교복 교환 운동)/베이징	10	무리한 증축, 동남아 매각 겨냥?(새로운 의혹)
11	철도에도 '안전점검 실명제'(정부 도입계획)	11	아크릴 선글라스, 눈 버릴 수 있어요(건강정보)	11	운항 수익보다 매매 차익이 목적?(매매가격 부풀린 의혹)
12	오피스텔 수익률 끝 모를 하락(공급과잉)	12	몇 호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내비'(건물내부용 내비앱)	12	잠수병 속출… '전문 시설' 서해엔 없어(인근 전문병원 부족)
13	진도 5갓짓 도료 공포(초대형 지진 전조 우려)/도쿄	13	이젠 사람 대신 '서비스 로봇' 시대(로봇 대중화)	13	신호 체계 '오류' 알고 있었나?(지하철 사고)
14	'꼬치구이'단속 이유는?(中 단속배경 논란)/베이징	14	D-30.. '세월호 변수'에 숨죽인 선거전(지방선거 동향)	14	같은 사고 4번, 아찔한 케이블카(대구 앞산 케이블카)
15	<플러스>불나면 어쩌려고·완강기 부실·숙박업소 설치 실태	15	치 개혁 동지에서 경쟁자로(대구시장 후보)	15	'태풍급' 강풍도…오늘 쌀쌀, 내일 회복(날씨 정보)
16	'장애인 고용' 위장 악덕 상혼(우선구매업체 악용)	16	'노령에 저임금'으로 이 힘든 일을..(국내 여객선 선원)/KNN	16	훈태평양 곳곳 강진…日 '대지진'후 최강(日 강진)/도쿄
17	주민등록번호 두 번 말소(공무원 실수)	17	승객 구했던 어민들도 '스트레스 장애'(2차 피해)	17	<이슈>제목 없음(해경 해난구조역량 문제)
18	'팥'이 뜬다 웰빙 디저트 인기(시장 각광)	18	돈 들여놓고 안 쓰는 '안전운항 장비'(제각각 해상교통관리)	18	지방선거 D-30 불법 선거 기승(당내경선 관련)
19	유방암 5년 지나도 재발 위험(건강정보)	19	큰 화재 막으려면.. '빈 공간'을 막아라(대형건물 굴뚝효과)	19	北, 국경 200m 이내 마을 모두 강제 철거(탈북민수 방지)
20	공공기관도 지방대생 외면(채용외면)	20	소통 없이는 안돼.. 역풍 맞은 '마차 퇴출'(뉴욕 센트럴파크)/뉴욕	20	中, 北 근로자 비자 제한…北 길들이기?(인력수출 제동)/단둥
21	<나눔>책부한 기부 문화 기업에 의존(개인기부 부족)	21	최악의 가뭄.. 식당에선 '물'도 안 줘(美 서부)/LA	21	제목 없음(마디모 악용 사례)
22	'포인트 기부' 약속 외면(카드회사)	22	'물방울 흐름'으로 만든 전기(국내 연구진 개발)	22	쇼핑카트 집 앞까지 끌고 가(유통업체 속앓이)
23	의료사고 중재 '유명무실'(제도적 한계)	23	장미홍 "일당받고 시위" 사과…허위사실 유포 수사/@	23	무등록 오토바이 캠퍼스 '위험' 질주(교정 법적용 제외)
24	이색 실험 가족이 노숙자라면?(美 구호단체 이색실험)	24	예술로 '아픈 마음'의 치유를..(전시회)	24	'젊은 피' 받자 늙은 쥐 회춘?(美 연구진 실험)/뉴욕
25	얼룩말 줄무늬 비밀 풀었다(과학계 해답)	25		25	<단신>홍콩 인근 해상서 선박 충돌…11명 실종 外
26	재개발 동네 '예술 마을'로 변신(서울 이화동·이태원동 外)	26		26	'반달' 할아버지 집 역사로(윤극영 작곡가)
27		27		27	
28		28		28	
29		29		29	
30		30		30	
31		31		31	
32		32		32	
33		33		33	
34		34		34	
35		35		35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6일 (화)

	M B C		S B S		K B S
1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 사망(민간 잠수부 1명 사망)	1	안타까운 희생..민간 잠수사 숨져(민간 잠수사 사망)	1	인도줄 작업 중 민간 잠수사 숨져(민간 잠수사 사망)
2	잠수 6분 만에 의식 잃어(6분 만에 의식 잃어)	2	우려했던 일이..너무 허술한 안전조치(허술한 안전 조치)	2	기뇌증 뭐기에··다른 원인은?(뇌 속 공기 방울 발생)
3	안전 무시 강행군 예고된 사고(규정 원칙 넘어선 사투)	3	잠수병, 혈액 속 질소가 원인(잠수병, 질소가 원인)	3	잠수 경력 30년 "나라 위한 일하려"("나라 위한 일 하려")
4	30년 잠수 베테랑 도우려 왔다··(잠수 30년 베테랑)	4	"이런 아픔 다시는 없기를.."(이웃 아픔 나눈 법요식)	4	무방비 감압실(응급 무방비 감압실)
5	"해경이 왔다 움직이면 안 돼"(승객, 해경 도착 알았다)	5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해 죄송"("국민 생명 못 지켜 죄송")	5	격실 64개 모두 개방 정밀 재수색(소조기…정밀 재수색)
6	수색 재개 64개 격실 모두 개방(64개 격실 모두 개방)	6	野 "책임규명, 특검에 맡겨야"("특검고려"..."수습먼저")	6	선박직전원탈출뒤"대기"방송되풀이("해경도착알고도 대기")
7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애도 물결(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7	10일까지 격실 64곳 모두 재수색(10일까지 재수색)/동거차도	7	세월호 증축 "유병언과 상의"(유 씨 아이디어 활용?)
8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죄송하고 마음 무거워")	8	"해경이 도착했어" 희망 못 살린 채..("해경 도착했어" 메시지만..)	8	사전교육·사직강요 조직적 수사 방해(조직적 수사 방해까지)
9	연휴 마지막 날 이제 일상으로(연휴 끝 일상으로)	9	<단독>공문으로 "해양구조협회 지원하라"(해경청장, 협회 지원 지시)	9	"희생자 명복··대통령으로서 죄송"(법요식 참석 "죄송")
10	세월호 참사 여야 공방 가열"특검·국정조사"·"정치공세")	10	신호기 이상 알고도 놔뒀다("신호기 오류 알고도 방치")	10	야 "진상 규명 특검"··여 "사고 수습 우선"("특검·국조" "수습 주력")
11	탈당시위 野 전략공천 후폭풍(야, 전략공천 반발 확산)	11	출발 늦어졌는데도 기관사·관제사는..(출발지연 통보 없었다)	11	부처님 오신 날··"세월호 아픔 함께"(부처님 오신 날··"위로")
12	유병언 전 회장 소환 임박(유병언 소환 초읽기?)	12	대관령에 내린 5월의 눈(강원 산간에 5월의 눈)	12	연휴 마지막 날··하늘서 본 석타일(연휴 마지막 날)/헬기
13	수상한 거래 2백억 땅 증여?(강남 땅 수상한 거래)	13	느낌이 달랐던 연휴..다시 일상으로(연휴끝..다시 일상으로)	13	소비 위축··"경기 침체 우려"(소비 위축 경기 주춤)
14	구원파 "검찰 수사는 종교탄압"/@	14	공원에서 운동기구 쓰다가 날벼락(공원서 기구 쓰다 날벼락)	14	일교차 봄날··27년 만의 5월 눈(큰 일교차·대관령 눈)
15	"신호기 이상 알고도 놔뒀다"(신호기 이상 무시)	15	번번이 속는 노인들 "외로워서 그래요"(외로움 노린 노인사기)	15	F-4 팬텀기 마지일 오작동 발사(마지일 오작동 발사)
16	신규 분양 아파트 나 홀로 훈풍(신규 아파트만 훈풍?)	16	의료 실비보험, 조건 없는 줄 알았는데..(장기치료에 무용지물)	16	"사고 막을 기회 14시간 전 두 번 있었다"(14시간 전 위험신호)
17	미국 버락?재 이틀 만에 한국에 바락?재 수송 작전)/스토닝턴	17	조폭, 불법 先物거래 사이트까지(조폭이 불법 先物거래)	17	<확대경>"애플에 1230억 원 배상"…시장 영향은?(삼성?애플?승자는)
18	세균 온상 지폐 얼마나 더럽나?(지폐에 세균 득실)/뉴욕	18	독도를 세계 지질공원으로..(독도, 세계 지질공원 추진)	18	북중 접경 압록강 밀수 현장(밀수 천국)/북중 접경
19	<플러스>위기의 한의학 부활의 길은?(위기의 전통 한의학+1	19	토종 야생화가 전하는 생명과 희망(활짝 핀 희망의 야생화)	19	美 사령관 "한반도 상황 더 악화"(北 장거리 미사일 우려)/워싱턴
20	여름 눈앞인데·대관령에 눈(27년 만의 5월 눈)	20	"美 FBI 공조로 차남 강제 소환 검토"("유씨 차남 강제 소환 검토")	20	<이슈>제목 없음(있는 법도 안 지켜)
21	목재의 재발견 아파트도 짓는다(10층짜리 나무 아파트)	21	공공기관 독자처한 관료 낙하산(관료낙하산이 독차지)	21	<이슈>대입(체험교육이 해법)
22	12·12 반란 주역 "연금 달라"(12·12 주역들 "연금 달라")	22	고교 친구끼리 두 번째 맞대결(고교 친구끼리 재대결)	22	퇴직 관료 재한 없이 재취업 113곳(재취업 통로 113곳)
23	인체 분쟁 알고보니 사재기(사재기에 인체 갈등)	23	다시 피로 얼룩지는 우크라이나(시가전에 30여 명 사망)/파리	23	D-29, 추모 분위기 속 선거 전략 고심(선거 뒤면 안 돼)
24	진화하는 사재기 수법(사재기 은밀하게)	24	7만 섬나라의반란 "핵실험멈춰라"("제소)/워싱턴	24	정부군·친러 정면 충돌··사실상 내전(우크라이나 내전 위기)/모스크바
25	의미와 경관 갖춰야 지질공원(지질공원 예비 후보)	25	서구식 교육 받는다고..여학생 집단 납치"남성학생 인신매매")/카이로	25	<간추린>12·12반란 10명 "연금달라" 소송 外 4개/@
26	<나눔>착한기업 되자 사회공헌 바람(착한기업 확산)	26		26	팽목항의 108연등(팽목항의 108연등)
27	"납치 여중생들 노예로 팔겠다"(여학생 납치)/파리	27		27	
28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7일 (수)

	M B C		S B S		K B S
1	"유병언 측근 차명계좌 수십 개" (유병언측근차명계좌)	1	달러환율1,030원 붕괴..6년 만의 최저(환율1,022.5원..6년래최저)	1	실종자 2명 늘어..중국인 추가 확인(생존2명줄고실종늘어)
2	계열사 수시 입금 현금으로 인출(계열사몽칫돈어디로?)	2	'세월호' 에스피글고 '환율' 에수출줄고(내수위축에수출마저..)	2	물살 느려져..오늘까지 격실 64개 수색(물살느려져..수색박차
3	유병언 압류 부동산 장남이 샀다(장남명의로회수?)	3	사고 22일째인데..또 줄어든 '구조' 숫자(또줄어든구조자숫자)	3	빈자리 늘어나는데…기약 없는 기다림("하루빨리가족에게")
4	해외 전시 사진 수백억대 강매(직원에 '아해' 사진경매)	4	"대피시킬까요?" 무전수차례받고도..(대피지시요청여러번받고도..)	4	"휴대전화 20여 대 자체 분석해 진상규명" (가족대책위)@
5	구조자 줄고 실종자 2명 늘어(실종자2명늘었다)	5	64개 격실수색완료..10일까지 한번더(동거차도, 중계차)	5	투입 경위 과악 못 해…책임 회피 급급(해경때단, 책임회피)
6	故 이광욱 씨 의사자 지정 추진(故이광욱,의사자추진)	6	"우리 아이는 어디에" ..더 커진 불안감(우리아이는어디에..)	6	엉뚱한 도면으로 수색하기도(엉뚱한도면수색도)
7	'기뇌증' 발견 사망 원인은?("산소공급문제가능성")	7	"거센 물살, 맨 몸으로 태풍 맞는 충격" (맨몸으로태풍맞는충격)	7	운항 규정 위반 "처벌 조항요구" 목소(위반해도처벌못해)
8	이준석 선장 3년 전 '표류 사고' ('항해사' 때도표류사고)	8	<뉴스8>이상현인력배치..수색보다 '윗분의전' (수색보다 '윗분의전')	8	병원기록협찍부..사실상 "혼외자맞다" ("간접증거..혼외자맞다")
9	전교조 추모영상 정치선동 논란(전교조추모영상논란)	9	지휘부 절반은 해상근무 경험 '0' (지휘부절반,비상근무안해)	9	뇌물 혐의 수사..2억 송금 관여 의혹(2억원송금뇌물수사)
10	'다이빙벨 소동' 관련자 고발("다이빙벨과장" 고발)	10	檢 "채동욱, 혼외자 있다" 결론(檢 "채동욱혼외자있다")	10	"감찰은 정당한 직무" …무혐의 논란(정보조회무혐의)
11	의로운 승무원 어머니 성금 기부("더어려운가족위해")	11	'청와대 뒷조사' 에는 면죄부(청와대뒷조사에면죄부)	11	여, 야당 비난..야, 검찰 비난(정치권반응)
12	<데스크>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분노와슬픔넘어서)	12	폐차시한은 없애고..정비는더느슨해지고(폐차시한폐지..정비더느슨)	12	환율급시 동반 '충격파' 수출 비상(환율급시동반 '충격파')
13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맞다" ("채동욱혼외자맞다")	13	위험한 '입석버스' ..우왕좌왕정부대책(입석버스' 우왕좌왕정부대책)	13	기업, 이익창출능력 악화(이익창출능력악화)
14	서울 집값 8년 전 수준 하락(서울집값 '8년전' 수준)	14	안전을 가르쳐야할 '학교버스' 가..(위험천만통학버스)	14	같은 임원인데..총수 일가 연봉은 4배(총수일가연봉은4배)
15	<현장>방치된 폐광 중금속 '콸콸' (폐광중금속오염)	15	채소풍년에 값폭락.. '갈아엎기' 파동(풍년에발갈아엎기)	15	<확대경>학비대출협압난2용악화… '삼중고' (20대 '삼중고')
16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위험(불법발기부전치료제)	16	너무 어려운 의료용어..쉽게 고쳐주세요(어려운보건용어)	16	<이슈>규제 강화했더니…
17	北 최악의 가뭄 남하 가능성(북한32년만의가뭄)	17	'영업정지' 철퇴에도 '편법보조금' 여전(변칙보조금횡행)	17	<이슈>유착 고리 끊어야
18	전방 민통선 축소 검토(민통선축소검토)	18	도심에 선보인 '아토피특성화학교' (도심아토피특성화학교)	18	'위험천만' 입석질주..뒤늦은 증차 계획(위험천만광역버스)
19	빚더미 청년층 신용등급 하락(청년신용등급하락)	19	막기는 네거티브전..후보고발까지(野-金불법선거운동공방)	19	<이시각>D-135…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준공
20	"댓글만 쓰면 큰돈" 거짓말("돈잘번다" 광고주의)	20	주목받는 김여정..내쳐지는 2인자(주목받는김여정)	20	<데스크> '7월 지급' 준비는?
21	한국형 3D영화 새로운 도전(3D영화는 '실험중')	21	유엔 "북, 공개처형 중단하라" (유엔 "北공개처형중단하라")/위상턴	21	북-러 경제협력 "한반도 종단철도 구상" (남북러철도연결논의)
22	환율 급락 1,000원 선 위협(환율1,020원대 '급락')	22	6개월째 잠자는 '민관협력' 법안(겉도는민관협력)	22	"불법 전화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공방)
23	수도권 여야 후보 기싸움 '맹맹' (경기지사 '정책대결')	23	뉴욕주도 '동해병기법' ..세월호 에도 결의(뉴욕주 '동해병기법')	23	의원직 사퇴도..야 '전략공천' 파열음(야, '전략공천' 파열음)
24	후보 단일화협정략공천 진통(진보당연대없다더니..)	24	잉락 총리 실각..태국 다시 혼돈으로(잉락총리실각)	24	태국헌재 "잉락해임" …과도총리 체제(잉락해임,또격랑속에)/방콕
25	고객과 함께 하는 나눔 실천(기부에서나눔으로)/뉴욕			25	또 기차역 흉기 테러…中,비상(또기차역테러,中비상)/상하이
26	무너지고 불타고..줄 잇는 재난(美,재난잇따라)/LA			26	"민간잠수사 故이광욱 씨 의사자 지정 추진" 外
27	태국 헌재, 잉락 총리 해임@			27	"더 어려운 이웃에게" ("더어려운이웃에게")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8일 (목)

	M B C		S B S		K B S
1	"추락 무인기 북한에서 발진"("무인기 모두 북한서 발진")	1	"유병언이 최종 책임자..공범 3명 검토"("유병언이 최종 책임자")	1	무인기 北 해주·개성·평강서 발진(해주·개성·평강서 왔다)
2	이륙부터 복귀 GPS 좌표 복원(GPS좌표복원 결정적)	2	소환불응 차남에 체포영장 청구(소환불응 차남 체포영장)	2	北 최전방 3개 군단 소속인 듯(北3개 군단 것인 듯)
3	중국제 수입 성능 개량("중국 제품 개량형")	3	한국선급에 수사정보 흘려준 해경(해경이 수사정보 유출)	3	비행 계획 입력 착이 핵심, 한 달 분석(착이 핵심, 한 달 분석)
4	대북 무기 금수 구멍 났나?(구멍 뚫린 대북제재?)/베이징	4	논란 많았던 연딩, 안정적업 불참키로(연딩 "안정에서 빠지겠다")	4	여야, 北 규탄··정청래, "국방정책 해임"(여야, 北 도발 규탄)
5	청해진해운 대표 과실치사 체포(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5	어버이날 보내는 답신 없는 편지(애끊는 어버이날)	5	신호기 장애, 300m 역주행? 후진?(300m 역주행? 후진?)
6	피로 누적 인명피해 잇따라(인명피해 잇따라)	6	항공대원 쓰러져..누적되는 피로누적 항공대원 쓰러져	6	풍랑 속 수색, 실종자 못 찾아(풍랑 속 수색 계속)
7	소조기인데·강풍에 수색 난항(소조기·높은파도 발목)	7	수색범위 60Km→80Km로 확대(구조현장)/동거차도	7	구명복 보니··여상·어린 학생에 양보(여상·어린 학생에 양보)
8	팽목항의 슬픈 어버이날(카네이션 대신 눈물만··)	8	1호선 신호기 장애..또 쓸어내린 가슴(1호선 급정차)	8	회장 유병언 명시, 유 씨 사원번호도(회장 유병언·사번 명시)
9	與 이완구·野 박영선 새 원내대표(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9	"무인기 3기, 모두 북한에서 발진"("무인기 3대 모두 北 발진")	9	한국선급에 압수수색 정보 등 유출(압수수색 정보 등 유출)
10	세모 부도 뒤 거액 송금(비자금 마련에 집중?)	10	"기술 수준은 낮지만 새로운 위협"("기술 낮지만 새로운 위협")	10	<데스크>>구조 현장 안전 살펴는?(구조도 안전하게)
11	교회 헌금까지 비자금으로("측근히 헌금까지 관리")	11	새 원내대표..與 첫 충정, 野 첫 여성(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11	<이시각 현장>전남 진도 팽목항
12	유병언 차남·장녀 체포영장 청구(소환불응 체포 영장)	12	월드컵 태극전사 23명 확정(월드컵 최종명단 발표)	12	팽목항의 어버이날(행목항의 어버이날)
13	중국 여객선 엔진 고장 호위 중/@	13	더 젊어졌다..유럽파 더 많아졌다(젊어지고 유럽파가 주축)	13	<확대경>우울한 노년··혼자만의 시간 줄여야(어울림이 비결)
14	편의점 인질극 특공대 진압(편의점서 인질극)	14	편의점 인질극..공포의 2시간(편의점서 대낮 인질극)	14	살버존(아무도 모르는 살버존)
15	울산 가스공장 폭발 5명 사상(가스공장 폭발 5명 사상)	15	단속 정보 알려주는 상해배 유착 경찰(상해배 단속 8척 알고보니.)	15	제목없음(승선 실명제 산 넘어 산)
16	무허가 반영구 화장 위험천만(무허가 반영구 화장 위험)	16	1개월 기상 예측, 절반도 안 맞았다(예보 절반도 안 맞아)	16	공장 보일러 폭발, 5명 사상(공장 보일러 폭발)
17	공짜로 알았는데·노인들 냉가슴(알뜰폰 불만 증가)	17	삼성SDS 연내 성장..3세 승계 가속(3세 승계 가속)	17	<이슈>해경의 몸집 불리기(사고 때마다 몸집 불리기)
18	성형 카테이션 이유 있는 변신(카테이션 신품종 개발)	18	스마트폰, 값 내리고 다양해지고..(값 내리고 다양하게)	18	<이슈>대책(구난구조 전 념해야)
19	"어머니가 진정한 MVP"("어머니가 MVP")/LA	19	농촌 부모님들 "농촌이 도시보다는.."("농촌 떠나기 싫다")	19	새 원내대표, 여 이완구·야 박영선(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20	신호기 고장 100미터 후진/@	20	野 전략공천, 후폭풍 확산(野 광주 전략공천 후폭풍)	20	자동 상장··야진보단체, 영동한 주장(기간 지나, 자동상장)
21	보행자 사망 1위 이유는?(보행자 사망 OECD1위)	21	"2호선 사고는 인재..전적으로 제 책임"(박원순 "제 책임")	21	삼성 SDS 상장(10년 만에 120배로?)
22	중국에서 날아온 솜털 눈(제주에 중국 솜털눈)	22	예행생 잡단 남치 국행위회 본노 불행제"문명 수치"..군사 개입 나선최/카이로	22	1/4 퇴직 신청, 퇴직강요 주장도(퇴직 강요 주장도)
23	스마트폰 다윗과 골리앗 전쟁(스마트폰 생존 경쟁)	23	유엔에서 맞붙은 남북.."핵실험 말라"(유엔서 맞붙은 남북)/뉴욕	23	편의점 인질극 특공대가 진압(특공대가 진압)
24	골프존 스크린골프의 갑?(끼어팔기에 과징금)	24	긴장의남중국해..중국-베트남 충돌(긴장의 남중국해)/베이징	24	<간추린>박근혜 대통령 동정 外 4개/@
25	이재용 부회장 2조 원 버나?(삼성 SDS 상장)	25	강덕수 前 STX회장 557억 횡령 혐의 구속 기소/@	25	어버이날 효도 비행(어버이날 효도 비행)
26	사라졌던 백일해 변종 등장(돌아온 백일해)	26	10억 명품악기를 유망주에게..(꿈의 악기 대여, 오디션까지)	26	
27	野 서울·경기 후보 TV토론(수도권 후보 정책경쟁)	27		27	
28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28		28	
29	무차별 학살 특수부대 급파(무차별 학살에 분노)/런던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9일 (금)

	M B C		S B S		K B S
1	"서민경제 위축 막아야"("소비위축 서민에 타격")	1	청와대 찾아간 유족들 "진상 규명해 달라"(청와대 찾아간 유족들)	1	소비 위축 선제 대응, 7조8천억 투입(7조8천억 원…선제대응)
2	재정 7조 8천억 원 추가 투입(7조8천억 미리 푼다)	2	"부적절한 발언에 죄송" 사퇴(KBS사장 사과…보도국장 사임)	2	일부 회복 조짐에도 소비 불안 여전(일부회복…불안 여전)
3	얼어붙은 소비 경제 타격(소비 곳곳 빨간불)	3	또 드러난 해경의 영터리 현장 보고(해경의 영터리 현장)	3	<단독>김혜경 씨 차명관리인 사실상 시인?(차명 관리인 시인?)
4	<단독>"구원파 258억 원 유병언 일가에"(구원파 돈세탁)	4	잠수부DB, 보고만 하고 실천은 안했다(잠수사 DB, 말뿐이었다)	4	과적방치 구속·다음 수사는 유병언(유병언 연루 정조준)
5	탤런트 전양자 씨 내일 소환(전양자 씨 내일 소환)	5	"유씨, 회장 신분으로 月 1천만원 받았다"("회장 신분으로 월 1천만 원")	5	내일까지 소조기…격실 전체로 수색 확대(소조기 끝나는데)
6	"침몰상황" 결재 거쳐 팩스로(허술한 팩스 보고)	6	금수원 대표 전양자 내일 소환(전양자 씨 내일 소환)	6	<확대경>애매한 수난구호법…해경 갈팡질팡(허둥지둥 왜?)
7	5층 선원객실 희생자 발견(선원객실서 승객 발견)	7	촛불 들고 어른의 책임을 묻다(촛불로 어른책임 묻다)	7	선령제한 없는 국제선 안전 빨간불(허술한 점검도 문제)
8	유실 방지 5중 방어선(시신 유실 막기 비상)	8	4층 일부, 붕괴 위험으로 수색 보류 (붕괴 위험으로 수색 보류)/동거차도	8	<이 시각 현장>지하철 안전점검 현장
9	"세월호 발언 왜곡"자진사퇴(KBS보도국장 사퇴)	9	세월호 소비 위축 더 오래갈 수도(소비위축 더 오래갈 수도)	9	부품 결함 사고…최근 점검도 정상?(부품결함…점검땐 정상)
10	세월호 대책 여야 공방(세월호 대책 공방)	10	재정 7조8천억 앞당겨 투입키로(재정 7조8천억 조기 투입)	10	서울시 "지하철 노후 차량 2022년까지 교체"/@
11	공인인증서 대규모 유출(공인인증서 대거 유출)	11	"노후 전동차 교체"..이번엔 지켜지나("노후 전동차 교체")	11	<데스크>근본 점검 이루어져야(근본 점검 되어야)
12	스파이앱 전화기 꺼도 도청(전화기 꺼도 도청)	12	겉핥기식 점검..7층 27개동에 고작 25분(겉핥기식 학원 안전점검)	12	제목없음(정박 어서도 운항 중?)
13	김정은 무인기 개발 집착(김정은 무인기 애착)	13	서해는 지금..중국 불법 조업 기승(서해 중국 불법조업 기승)	13	빛 공해… 뇌 기능 저하에 암까지(빛 완전 차단해야)
14	北 오바마 모욕 美 "역겹다"("北 언동 추하고 무례")/워싱턴	14	매일 오르는 고기값..삼겹살도 최고기도(삼겹살 최고기 값 고공행진)	14	인공 DNA로 새 생명체 탄생 길 열리나?(새 생명체 가능성?)
15	사라진 한류 한인타운 위기(위기의 한인타운)/도쿄	15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휴대폰 결제(휴대폰 소액 결제주의보)	15	<이슈>충격은 여전(충격은 여전)
16	진주 운석 "270억 원 달라"(운석가격협상 난항)	16	中 교류 늘어나자 위안화 위조 지폐(위안화 위조지폐 급증)	16	<이슈>마음 추슬러야(마음 추스려야)
17	<플러스>분쟁물 금지 우리 기업 불똥(분쟁광물 규제 움직임)+1	17	유정복 대 송영길..실세론vs견제론(인천시장 유정복 대 송영길)	17	유가족들 밤샘 농성…공식사과(밤샘농성…"사과")_
18	빛공해 암까지 일으킨다(빛공해 건강 위협)	18	전국 어디서나 5.30~5.31 사전투표(5/30~31 사전투표)	18	김시곤 보도국장 "일부 언론 왜곡 보도…사임"/@
19	저출산 일본 지자체 소멸 위기(저출산 인구비상)/도쿄	19	"과도한 야간 빛, 유방암 일으킬 수도"(야간 빛 공해)	19	밤 12시 이후(집시법 한정 위헌 이후)
20	93살 노인 사살 과잉대응 비난(美공권력남용 논란)	20	"잠들때 불빛, 뇌기능 떨어뜨린다"("잠들때 불빛, 뇌기능 저하")	20	"프랜차이즈 빵집도 보호?"(신규 출점 논란)
21	삼성 반도체 중국에서 만든다(삼성반도체 중국 생산)/시안	21	일본 겨냥한 안중근 기념관 방문(안중근 기념관 공식 방문)	21	제목없음(석호에 와래종 득실)
22	반값 비타민 원산지 논란(반값비타민 논란)	22	월드컵 코앞인데..노숙자들이 점령(파업 시위로 월드컵 비상)	22	日. 독도 자원 수탈..물개 씨 말렸대(독도 수탈 해녀도 동원)/시마휘현
23	유정복-송영길 인천 맞대결(인천 유정복-송영길 대결)	23	北, 오바마 비난..美"추하고 무례"("北비난, 추하고무례")/워싱턴	23	정부 대표단 첫 방문…日 반발(정부 대표단 첫 방문)
24	안중근 기념관 첫 공식 방문(안중근기념관 방문)	24	땅굴판뒤 통째로 호텔 폭파(시리아반군폭파)/카이로	24	"소녀들 돌려 보내라"…전 세계 나섰다(구출 작전 가시화)
25	<나눔>제3의 복지 기업 사회공헌(기업 복지사각 메운다)	25	"우리는 예비스타" 당찬 아역 배우들("우리는 예비스타")	25	<간추린>美 백악관 오바마 비하 추하고 무례 外4개/@
26	힐링 먹거리 집밥이 뜬다(집밥이 뜬다)	26		26	지구 실시간 공개(지구 실시간 공개)
27	현대스위스저축 전 회장 징역 4년/@	27		27	
28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0일 (토)

	M B C		S B S		K B S
1	전양자 출석 "검찰서 밝히겠다" (인천지검, 중계차)	1	참사 25일째..선체 붕괴 진행 중(통로붕괴위협..수색중단)	1	전양자 검찰 조사… "유병언 소환 임박" (전양자검찰조사)
2	증축[2]조된 곳 선체 붕괴(증축객실벽붕괴)	2	중단된 수색..기상까지 나빠져(동거차도, 중계차)	2	선체 내부 일부 붕괴, 풍랑까지(선체내부일부붕괴)
3	높은 파도에 수색 잠정 중단(높은파도·수색잠정중단)	3	전양자소환..유병언 형 피의자로(전양자소환..친형은피의자로)	3	<앵커>선체 붕괴…왜?
4	제주-부산 운항 여객선사 수사(여객선운영사압수수색)	4	자식에게 구명조끼 입히려던 모정(구명조끼입히려던모정)	4	"혹시라도" …바다로 나가는 진도 주민들("혹시라도" …바다로)
5	민간 잠수사 마지막 작별(민간잠수사영결식)	5	연결되지 않았던 마지막 전화(연결되지않은마지막전화)	5	안전 훈련 않고…방송설비 작동도 못 해(방송설비작동도못해)
6	골절상 2살 아이 차 안에 방치(골절상2살배기방치)	6	구조된사람들의 눈물 "더도와줬으면.." (구조된사람들의눈물)	6	"잊지 말아 주세요" …전국 추모 물결(전국추모물결)
7	철거 중 건물 붕괴 가스 누출(사건사고)	7	확산되는 추모집회.. "잊지 않을게요" (확산되는추모집회)	7	서울 28.3℃, 전국 올 최고…내일 비[2]풍(오늘 '여름' ,내일비바람)
8	안성 30.5도 한여름 더위(여름같은더위, 내일은비)	8	또 또 또 안전사고..무너진 건물(사건사고)	8	北주력기 총동원 과시, '金' 열에 최룡해(北주력기총동원, 과시)
9	與 경기 남경필 野 전남 이낙연(여야경선)	9	올들어 가장 더웠다..서울 28.3도(올들어가장더운날)	9	<앵커>내일 '투표' …유혈사태
10	야외 카페 영업 이중잣대 논란(야외영업단속에불만)	10	맨손으로 타는 '바위등성'..안돼요!(맨손암벽등반위험)	10	'협회' 법으로 양산 관료 재취업 악용돼?(협회, 입법과정서양산)
11	파스처럼 붙이면 S라인 몸매?(날씬해지는패치, 효과있나?)	11	내부비리고발에 '해고로보복' 하다니..(내부고발에해고로보복)	12	2살 여아 온몸에 멍, 차에 방치(온몸에멍, 차에방치)
12	넓게 더 넓게 숨은 공간 찾아라(숨은공간을찾아라)	12	북향에 거실, 3면이 베란다..상식깬 아파트(상식깬아파트)	12	CCTV로동업자업무감시… "사생활침해" (CCTV업무감시 "사생활침해")
13	무[1]추[2]파값 줄줄이 폭락(채솟값줄줄이폭락)	13	日백혈병신약, 뒤늦게부작용신고(日백혈병약부작용뒷북신고)/도쿄	13	장비 없이 바위 타기 위험천만(장비없이는금물)
14	'빅이슈' 가 만든 새로운 삶(노숙인삶바꾼잡지)	14	<건강>금기시됐던뇌질환전기치료, 이젠가능(시작된뇌질환전기치료)	14	현충원 내 '일본 나무' 모두 바꾼다(현충원내日나무교체)
15	전투기 총출동 군 장악력 과시('공군력과시' 전투비행편람)	15	與경기후보남경필..野전남후보이낙연(與경기남경필,野전남이낙연)	15	美창모 10원에 해체…이색 자구촌 소식(자구촌소식)
16	김여정 동행 전용기도 공개(김정은전용기공개)	16	크림반도의 군사 퍼레이드..푸틴의 질주(푸틴, 합병크림첫방문)	16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내일 기자회견外
17	청정 제주도 첫 고병원성AI(제주첫고병원성AI)	17	작은 음악가들, '세월호거리공연' 나섰다(세월호거리공연)	17	'어르신 자서전' 열풍(어르신자서전열풍)
18	연둣빛 신록 푸르른 오월(주말풍경, 헬기)	18	野 "정권의 KBS 부당간섭 의혹 명백히 밝혀야" @		
19	돌아온 르원스키 누구에게 득?(돌아온르원스키)/위성턴				
20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규모 집회@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1일 (일)

	M B C		S B S		K B S
1	급성 심근경색 응급 시술(이건희 회장)	1	檢 "즉각 진입했으면 전원 구조 가능했다"(해경 구조문제)	1	강풍 동반 비, 밤새 전국 확대(날씨 관련)
2	뇌손상 막기 위해 저체온 치료(현재 상황, 중계차)/삼성서울병원	2	강한 비바람.. 이틀째 수색 중단(세월호)	2	제주 만여 명 발 묶여..무더기 결항(항공가·여객선 차질)
3	후계 승계 작업 속도 낼 듯(삼성 영향)	3	끝 모를 기다림.. "어서 내 품으로."(실종자 가족들)	3	제목 없음(계곡물, 강풍 피해 주의)
4	친형 소환 "회삿돈 받았다"(유병언 조사, 중계차)/인천지검	4	호흡곤란·심장마비.. 응급 시술 받았다(이건희 회장)	4	악천후로 피항, 이틀째 수색 중단(세월호)
5	속도내는 수사 재소환 검토(유병언 측근들)	5	폐·심장 집중관리 받아와(현재 건강상태)	5	붕괴 심각, 잠수 공기 방울에도 흔들려(세월호 내부 붕괴)
6	최악의 날씨 이틀째 수색 중단(구조·수색상황)	6	삼성 초긴장.. 3세 승계 더 빨라질 듯(삼성 영향)	6	잠수복 찢기고, 붕괴 불안.. "포기 안 해"(수색 난관)
7	해경이 한강에 진출한 까닭은?(조직 확대 추진)	7	멈춰 선 KTX.. 뒤 열차 13편 지연(사건·사고)	7	임시국회..세월호 대책 초당적 협력(여·야 원내대표)
8	트럭에 경찰 매단 채 질주(사건·사고)	8	<News>외모는 깐깐하게. 안전은 대충대충(KTX 승무원)	8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안전 시스템 개혁' 담화/@
9	콧대 높은 명품도 앞당겨 할인(내수부진 영향)	9	오늘 밤 전국에 비.. 제주는 결항 중(날씨 관련)	9	급성 심근경색 응급 시술.."안정된 상태"(이건희 회장)
10	아주 크거나 작거나 車도 양극화(자동차 시장 상황)	10	또 험한 시위.. 한인타운 고사 위기(日 엿새른 시위)/도쿄	10	제목 없음(경영·후계 영향)
11	한국에서 쑥쑥 크는 커피나무(한국산 커피 도전)	11	"일방적 트레이닝, 고객 부상 책임져야"(헬스클럽)	11	앱 카드 첫 해킹..보안 '구멍'(부정결제 피해)
12	김진표 선출 남경필과 맞대결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	12	조립해서 만드는 집.. "빨라서 좋아요"(모듈러 주택)	12	제목 없음(유병언 수사)
13	세월호 대책 잰 걸음(대통령·정치권)	13	헷갈리는 긴급 전화.. 하나로 통합하자(비효율성)	13	제목 없음(日 시운마루호 사고 59년)/시마네현
14	시안에 광복군 표지석 세웠다(中 유적지 기념사업)/시안	14	오늘은 유병언 친형.. 내일은 장남(세월호 수사)	14	가스 배관도 안 막고..또 '안전 불감증'(강남 5층 건물붕괴)
15	9년 만에 돌아온 원조 아이돌(god)	15	'세모식 부활' 원천 봉쇄하겠다(법원 대책)	15	北 헐값 자원 유출 그 현장(北, 헐값 中판매)/단둥
16	잠수함 기갑부대 금녀 벽 깼다(英 여군 최전방 배치)/런던	16	"초당적 협력·5월 국회" 합의(여·야 원내대표)	16	남중국해 갈등 격화·박중 시위·억류(베트남 팔리핀)
17	야생동물 습격 도시정글 LA(美 가뭄 영향)/LA	17	野 경기 김진표, 與 남경필과 한판(재보선거 경기도지사)	17	<단신>국방부 "北 무인기 책임 회피·변명 유감" 外
18	"잊지 않겠습니다" 집회 확산(세월호 희생자 추모제)	18	되살아나는 西安 광복군 발자취(中 기념공원 조성)/시안	18	'광복 투쟁 터' 기념비로(中 시안 두취전)/시안
19	200여 편 무더기 결항(제주공항, 강풍영향)	19	광해, 관상, 역린.. '사극불패'?(극장가)	19	
20	다섯 중 한 명 불필요한 제왕절개(美 의사협회)/뉴욕	20	손흥민, 12호 골.. 기분 좋은 시즌 마감(레버쿠젠)	20	
21	북한 "무인기 사건은 남측 조작"/@	21	넥센 '홈런쇼'..LG 새 감독 양상문(프로야구)	21	
22		22	데뷔 8년 만의 첫 우승(박준원, 매경오픈)	22	
23		23		23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2일 (월)

	M B C		S B S		K B S
1	서울시장 정몽준·박원순 대결(후보 확정)	1	'선원'에 살인죄.. '해경'엔 과실치사 검토(수사상황)	1	유병언 찾아 금수원 전격 방문(수사상황)
2	광역단체 16곳 누가 맞붙나?(지역별 후보 정리)	2	"유, 임원 사표 받은 듯".. 경영 관여 증거(수사상황)	2	줄줄이 소환 거부, 강제 구인 검토(유병언 자녀들)
3	새정치 공천 갈등 위험 수위(전략공천 논란)	3	살신성인 승무원, '의사자' 첫 인정(박지영 外)	3	"복원력 문제" 잡단 사표도, 대표도 알아(세월호 승무원들)
4	살신성인 3명 의사자 지정(박지영, 정현선, 김기웅)	4	사흘째 수색 중단.. 객실 벽 일부 붕괴(구조·수색 상황)	4	제목 없음(해경 초동대응 문제)
5	체력 한계 대체 인력이 없다(잠수사 교체 막막)	5	<안전>국민 90% "대한민국은 안전 낙제국"(긴급 여론조사)	5	"대대적 조직 개편"…해경, 간장(필요이유)
6	기름 유출 생태 터전 위협(2차 피해)	6	'속도'만 생각하다 잊어버렸던 '교훈'(세월호가 남긴 교훈)	6	새 진입로 다각도 모색(구조·수색)
7	해경 해난구조 자체평가 '우수'(자화자찬)	7	준공 앞둔 건물이 '기우뚱'.. 붕괴 위기(충남 신축 건물)	7	27일째…간절한 팽목항(유가족들 재방문)
8	유병언 장남 체포영장 청구(수사상황)	8	"안전점검 보고서, 거의 엉터리였다"(여객선)	8	<이 시각>동거차도에서 본 사고 해상
9	'세월호 유언비어 수업' 의혹 조사/@	9	해양사고 내도 면허 취소는 0.1% 뿐(솜방방이 처벌)	9	서울시장, 정몽준-박원순 대결 확정(주요 대진표)
10	정부 비판 광고 교민사회 논란(美 뉴욕타임즈)/워싱턴	10	안전용 '스크린 도어'도 관리 못하면..(지하철)	10	제목 없음(이건희 회장, 회복 여부 내일쯤)
11	의식 회복 내일 새벽 판명(이건희 회장)	11	<News>공약이 바뀐다..'개발'에서 '안전'으로(정치권)	11	<확대경> 포스트 이건희' 삼성 경영권 판도는?(경영권 승계)
12	차분한 삼성 주가도 상승(삼성 영향)	12	與 서울 정몽준.. 박원순 시장과 한판(서울시장 후보)	12	제목 없음(잇단 어른 홍역…비상)
13	"임시번호판 안 돼" 수입차 꼼수(대리점 발급 거부)	13	공천 후유증 확산.. "安金 퇴진"까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13	완공 앞둔 건물 20도 기우뚱(충남 신축 오피스텔)
14	오피스텔 '기우뚱' 지반 허약?(충남 아산시)/대전	14	수면 상태에서 '저체온 치료' 중(이건희 회장)	14	<데스크>잇단 안전사고…대책은?(투자로 인식)
15	튤립 없는 '튤립축제'(이상기온 영향)	15	진드기 바이러스, 올해 첫 사망자(위험성·예방법)	15	제목 없음(합참 설계도 유출)
16	中 공군 '비밀병기' 원숭이(조류충돌 사고 예방)/베이징	16	'보금자리 주택' 첫 백지화.. 연쇄 파장(광명 시흥 지구)	16	참단 구조함, '관급' 핵심 장비 부실(통영함)
17	<플러스> "2030년부터 식량위기 온다"(미래 식량)	17	40년 만에 바뀐 '새마을'호(ITX-새마을호 첫 운행)	17	1인당 GDP 2만 4천 달러, 세계 33위(경제 전망)
18	바다의 무법자 삭탁에 올려 해결(쏠배감펭 요리 시연회)	18	공개된 '김정은 전용기'.. 러IL-62(北 매체 공개)	18	<이슈>제목 없음(1인당 GDP 33위 의미는?)
19	'홍명보호' 첫 소집 기자! 월드컵(축구대표팀 첫 훈련)	19	北 벌빰에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국방부 대변인)	19	올해 첫 사망·야생 진드기 비상(위험성·예방법)
20	서울 시내 대학가 홍역 비상(집단 발병)	20	제주에 AI.. 따뜻해지면 없어진다더니(철새도래지 확인)/JIBS	20	밀폐 공간서 스프레이 위험천만(용인 아파트 폭발사고)
21	진드기 감염 첫 사망자 발생(위험성·예방법)	21	아무렇지 않게 팔리는 '욱일승천기'(상품(美 역사적 인식 부족)/뉴욕	21	"시세 조종 전문가들에 주가조작 지시"(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22	<이슈>홍역 진드기 대책은?(질병관리본부 감염팩 과장 인터뷰)	22	돌아온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의 매력(음악시장)	22	"분리 독립 압도적 찬성"…유혈 충돌(우크라이나)
23	침투용 AN-2 로켓포 장착(北 공개)	23		23	<단신>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外
24	"거짓말하는 있을 수 없는 나라"(국방부)	24		24	정작 청소년은 못 봐(청소년영화 등급판정)
25	"마마보이 도덕성·책임감 높다"(연구결과)	25		25	
26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 공동 발의/@	26		26	
27	현재현 동양 회장 '주가조작' 기소/@	27		27	
28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3일 (화)

	M B C		S B S		K B S
1	유병언 장남 체포 실패(유병언장남자택진입)	1	17개시.도지사 후보확정..선거체제로(17개시.도지사후보확정)	1	유병언 장남 지택 수색, 체포 실패(장남자택수색…잠적)
2	유병언 16일 소환 금수원 긴장(금수원, 중계차)	2	유병언 16일 소환..막는 신도들(금수원, 중계차)	2	유병언 씨 16일 소환, 금수원 긴장(유병언16일소환)
3	세월호 선원 부상 동료 버려둬(동료마저버리고탈출)	3	뇌물 오간 선박 검사..공무원 로비드러나(뇌물오간선박검사)	3	붕괴 속 새 수색방법 고심, 추가수습(추가수습..붕괴고심)
4	수색 재개 시신 1구 발견(추가수습..수색난항)	4	객실 벽.진입로 일부 붕괴(객실벽.진입로일부붕괴)	4	"다친 동료 외면, 탈출" 살인죄 검토(다친동료마저외면)
5	28일의 기다림..간절한 팽목항(28일째간절한팽목항)	5	"화상자 가족충격, 장기간 치료해야"(정신충격심각..장기치료필요)	5	한국선급 측, 해수부 공무원 접대의혹(한국선급,공무원뇌물)
6	"많은 의견 수렴 대국민 담화" ("조만간대국민담화")	6	모레쯤 대국민담화..인적 개편 클 듯(모레쯤대국민담화)	6	현직 해경 간부가 '협회' 근무(해경간부가협회근무)
7	여야 총력전 체제 세월호 공방(선거체제..세월호공방)	7	구미 31도..한반도 동쪽이 뜨거웠다(구미31도..부산오존주의보)	7	후속 대책 난상 토론 '시스템' 에 초점(후속대책난상토론)
8	승부처 서울 여야 전략은?(정몽준편원순 '기싸움')	8	냉.온탕 날씨..농작물 피해 속출(냉.온탕날씨,농작물피해속출)	8	<확대경> "수면 상태서 치료" 경영공백 우려(당분간수면치료)
9	7월 재보선은 '미니 총선' (7월재보선미니총선)	9	<기동5기월간 교정460건..불안한 승강기(엠추고민히고..불안한승강기)	9	<이시각>경기도고양시농협하나로클럽고양점
10	"당분간 수면치료 상태 안정" ("당분간수면상태치료")	10	또 폭발사고..불안한 울산공단(또폭발사고..불안한울산공단)	10	구미31℃, 당분간 여름 더위(구미31℃,한여름더위)
11	환율 추락 수출 먹구름(100엔당900원대)	11	여전히 불안한 유람선..달라진 게 없다(여전히불안한유람선)	11	"남극 해빙 속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 (나사)
12	경북 경산 32도 벌써 여름?(전국곳곳30도돌파)	12	열선 과열에 앞유리 깨지는 쏘렌토(열선에유리파손,무상교환)	12	"北, 나라도아니다" … "대남보복전" ("北나라도아니다" "보복전")
13	"남극 해빙 돌이킬 수 없다" (남극빙하녹는다)/LA	13	카드결제 먹통..가맹점 30만 곳 피해(카드결제먹통피해)	13	<앵커>FTA10년…수입 과일 봇물
14	훔친 아이디로 상품 평가 조작(포털에상품평조작)	14	멸종위기 '삵', 북한산 서식확인(삵,북한산서식확인)	14	<앵커>가로등만 바꿔도…
15	당분 과다 음료 청소년 위협(청소년당분과다섭취)	15	"폭력남편이라도 살해는 정당방위 안돼"(법원판결)	15	일하는 노년 '어르신노조' 까지(어르신노조속속결성)
16	북한산에 '삵' 이 산다(북한산삵발견)	16	의식회복 늦어져..당분간 수면치료(당분간수면치료)	16	<데스크>급속한 노령화 준비는?
17	일부러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심(차선바꾸는차 '표적')	17	심장마비, 첫 4분에 생명달렸다(심장마비,첫4분에생명달려)	17	<이슈>대형 공약 후유증 여전
18	닷새째 녹물 생활 마비(신도시옅녹물불똥)	18	"ONE TEAM, 문제없다" (홍명보감독)	18	철도노조원등위치추적…경찰 "합법수사" ("위치추적" … "합법절차")
19	'생체 로봇팔' 판매 승인(美로봇팔판매승인)	19	입양아가 본 '베이버박스'의 아이들(입양아가본베이버박스아이들)	19	"은정적 처벌 재검토, 아동학대 근절" ("아동학대, 법엄정집행")
20	'독일파 4인방' 대표팀 합류(독일파4인방합류)	20	돌아온 국새 공개.."유출문화재 더 있다"("유출된문화재더있다")	20	<앵커>피랍여학생 영상공개/파리
21	<클릭스> '최저임금인상 바람'이유는?(최저임금인상바람)/뉴욕, 런던, 도쿄	21	피랍소년들 영상공개..대대적 수색작전(피랍소녀들영상공개)/카이로	21	<앵커> '러' 영역된 흑해 연안/트란스니스트리아
22	고압 수증기 폭발 8명 부상(고압수증기폭발)	22	천리우코리동부권, 크림반도 따라하기(우코리동부,제2의크림라나)	22	감사원, 세월호 사고 특감 내일 착수/外
23	"폭력남편 살해 정당방위 아냐"(폭력남편살해정당)	23	녹아내리는 남극빙하, 더 빨라졌다(녹는남극,돌이킬수없는수준)/워싱턴	23	멸종 위기 삵 북한산에(멸종위기삵,북한산에)
24	피랍 여학생 수감자 교환 요구(납치여학생공개)/파리				
25	돌아온 '국새' 일반에 공개(반환국새일반공개)				
26	나이스 카드 결제 한때 마비@				
27	北국방위 '보복전' 위협@				
28	감사원, 세월호 관련 기관 감사@				
29	세월호 유언비어 의혹 교사 사표@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4일 (수)

	M B C		S B S		K B S
1	반중 시위대 한국기업 습격(한국업체 50곳 파손)/베트남	1	장남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장남 A급 지명수배)	1	<단독>사고 1시간 동안 승객 유무도 파악 못 해(승객 유무도 파악 못 해)
2	중국·베트남 남중국해 충돌(남중국해 갈등 확산)/베이징	2	유씨 금수원 있는 듯..신도 1천명 집결(유씨 금수원 있는 듯)/금수원	2	119상황실, 구조보다 의전이 먼저?(구조보다 의전 먼저?)
3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장남 유대균 지명수배)	3	선장·항해사 기관장, 살인죄 적용(선장·선원에 살인죄)	3	<단독>"선장 ,사고 나자 떨기만 했다"("선장, '발발 떨기만")
4	유병언 연락두절 금수원 긴장(유병원 일가 장적)/금수원	4	구조도 바쁜 탓에 윗분 의전부터(구조보다 윗분 의전)	4	<단독>상습과적·화물량 축소 녹취 확보("상습 과적" 녹취 확인)
5	유병언 일가 초대형 염전 소유?(구원파 대형 염전 소유)	5	책임 떠넘기는 장판.."당장 사퇴해"("장판, 당장 사퇴해")	5	혼선·장관 처신 질타…"당장 사표"("당장사표 내라"직격탄)
6	이해 사진에 갑작스런 해외 호평(이해 사진 갑자기 호평?)	6	선체 붕괴로 진입로 상당수 막혀(진입로 상당수 막혀)	6	내일부터 대조기…"끝까지 수색"("끝까지 수색")
7	무너지는 선체 필사의 수색(마지막 실종자까지…)	7	"자식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	7	<이 시각 현장>안성, 문 닫힌 금수원
8	뜨지 못한 소방헬기 책임 공방(무용지물된 소방헬기)	8	<안전>148곳이 무너질 판인데..택없는 예산(148곳 무너질 판인데..)	8	유대균 A급 지명수배, 밀항 감시(유대균 A급 지명수배)
9	"초동대응 실패" 여야 질타(세월호 초기대응 질타)	9	"기초 말뚝 1/3을 안 박았다"("기초말뚝, 1/3만 박았다")	9	오리무중 유 씨 부자 어디에?(어디에 숨었나?)
10	"의전 챙겼다" "의료진 대기"(119 의전에 구조 뒷전?)	10	하천 범람하는데..경보 시스템은 먹통(범람하는데 경보 먹통)	10	삼성 "백혈병 보상"…보상 대상 이견(7년 만에 "사과·보상")
11	고용률 역대 최고 경기 회복?(고용률 역대 최고)	11	은퇴 선언.."믿음 준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박지성 은퇴 발표)	11	7년 간 계속된 반도체-백혈병 논란은?(백혈병 논란 '7년')
12	7년 만에 사과 "백혈병 보상"(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12	D-30, 열기는 높아졌는데 준비는..(D-30, 준비는?)	12	베트남 반중 시위, 한국 기업 피해(한국 기업에 불똥)/방콕
13	서울·경기 올해 첫 오존주의보(올해 첫 오존주의보)	13	"원정 8강을 향해"..다음 주 전술훈련(원정 8강을 향해)	13	<확대경>75살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임플란트 지원)
14	이른 더위 여름상품 불티(이른 더위에 매출 껑충)	14	"백혈병 사망 근로자 보상하겠다"(백혈병 공식 사과)	14	메르스 확산…유럽 미국도 긴장(메르스 공포 확산)+1
15	파일 덜 박아 건물 기울어(부실시공에 기우뚱)	15	노파는 정상이지만 의식회복 늦어져(의식회복 시점 불투명)	15	내일부터 후보 등록…서울 표심 안전 변수?(안전으로 표심 공략)
16	보험금 지급 거부 유족 반발("리조트 붕괴 보험 안돼")	16	<단독>자기앞수표도 거부하는 은행 횡포(은행 횡포)	16	경기는 접전 중…"채선피" "경제전문가"(경기 판세 급변하나?)
17	"발견자가 주인 국외 반출 금지"(문석등록제 도입)	17	反중국 시위 격화..한국 기업체도 피해(反중국 시위 격화)/베이징	17	"불법 선거 공무원 관여 등 단호 대처"/@
18	터키 탄광 폭발 200여 명 사망(탄광 폭발 200여 명 사망)	18	술, 조금만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요?("소량도 뇌에 악영향")	18	월드컵 4강주역 박지성 은퇴…"첫경기 중요"(박지성 은퇴)
19	곡물 섬유소 삼장 강화 효과(잡곡밥 심근경색 예방)	19	서울 올해 첫 오존주의보(첫 오존주의보)	19	<이슈>8강 신화(8강 신화 가능성은?)
20	<플러스>월드컵 D-30 꿈꾸는 별들(월드컵, 스타의 산실)+1	20	늙어가는 일본.."인구 1억을 유지하려"(日 인구억 유지 목표로)/도쿄	20	<이슈>관전 포인트는?(관전 포인트는?)+1
21	<토크>유병언 일가 수사 전망은?(수사 전망)/김용남 변호사	21	트집 잡힌 "없어져야 할 나라" 발언(과도한 北 자극?)	21	유럽, 인터넷 잊혀질 권리 첫 인정(잊혀질 권리 인정)/런던
22	서울시장 선거 초반부터 신경전(서울시장 부자 공방)	22	청계산 무인기 추정체 오인 발표 소동/@	22	<데스크>인터넷 기록 삭제 권리는?(기록 삭제 어디까지?)
23	안철수 측 인사 줄줄이 쓴잔(안철수 인사들 고배)	23	판 커진 재보선..거물급의 귀환?(판 커진 재보선)	23	軍 "무인기 발견"…알고보니 문짝(군 섣부른 발표 이유?)
24	메르스 확산 미국 초비상(美 메르스 확산 비상)/워싱턴	24	터키 탄광의 참사..사망 200명 넘어(터키 탄광 폭발)/카이로	24	제목 없음(잇단 안전사고 이유는?)
25	스무발자국 뒤 삶과 노래(스타 뒤 코러스의 삶)	25	중동판 시스 메르스 공포 확산(메르스 공포 확산)/워싱턴	25	터키 관광 폭발, 3백여 명 사망·실종(터키 탄광 폭발)
26		26		26	더 낸 세금 540억, "찾아가세요"(어떻게 돌려받나?)
27		27		27	국부 1경 630조 원, 절반이 토지(절반이 토지)
28		28		28	<간추린>서울·경기 올해 첫 오존주의보 발령 外 4개/@
				29	진정한 참교육 실천(스승의 참교육 봉사)

참고자료 7-4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5일 (목)

	M B C		S B S		K B S
1	선장 등 4명 '살인죄' 기소(선장 등 살인혐의 기소)	1	영상 편지(故 지은양 아버지)	1	<영상>세월호사고 해역 헬기
2	"증축·과적·운항 총체적 부실"(총체적 부실로 침몰)	2	참사 한 달..마지막 한 명까지(참사 한달..마지막 한 명까지)	2	선박직 15명 기소…선장 등 4명 살인죄(선장 등 4명 살인죄)
3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3	실종자 20명..애끓는 가족들(아직도 20명..애끓는 가족들)	3	승객 위험 알고도…"나 살 생각만 했다"(살인혐의 적용…왜?)
4	1차 수색 종료 실종자 20명(실종자 20명 어디에?)	4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한 30일(모두 함께 슬퍼한 30일)	4	"물 차면 문 안 열려"…자신들만 탈출("물 차면 문 못 연다" 알고…)
5	슬픈 스승의 날 노란 카네이션(눈물의 스승의 날)	5	유족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우리가 바라는 것은..")	5	이례적 부작위 살인죄 의미는?(의미는?)
6	구원파 "참사 책임은 해경"("참사 책임은 해경")	6	선장 포함 4명, 살인혐의로 기소(선장 등 4명 살인혐의 기소)	6	"조타 미숙이 사고의 직접 원인"("조타 미숙이 원인")
7	유병언 내일 소환 신도 집결(구원파 금수원 집결)/금수원	7	"구조 순서 말할까봐 탑승객 버렸다"("순서 말할까봐 먼저 탈출")	7	내일 소환…금수원, 신도 속속 모여(내일 소환…신도 모여)
8	금수원 주변 수상한 비밀별장(유병언 비밀별장)	8	진입 시도도 안 한 해경..내주 본격 수사(해경 다음주 본격 수사)	8	청해진부터 해경까지 전방위 수사(검찰, 해경도 정조준)
9	"신협은 사금고 거액 해외 유출"("신협, 유병언 사금고")	9	내일 10시 출석 통보..사흘째 농성 대치("내일 출석하라"..무응답)/금수원	9	충격·슬픔·분노의 30일(충격·슬픔·분노의 한 달)
10	잘려진 녹음 의전논란 진실은?(의전의혹 왜곡 논란)	10	신협의 수상한 대출..유씨 사금고처럼(신협의 수상한 대출)	10	경쟁만 있는 검증 없는 보도…실망·분노(불신 부른 재난보도)
11	"숭례문 단청 벗겨내라"("숭례문 단청 재 시공")	11	잡단지위권 공식화..무너진 평화헌법(日, 잡단지위권 공식화)/도쿄	11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비판지적 겸허히…)
12	보수는 뒷전 영똥한 데 돈 썼다(필요한 곳엔 안 쓰고·)	12	한반도 개입 가능성 생겨(한반도 개입 가능성 생겨)/도쿄	12	선체 붕괴 계속…4층 집중수색(수색 계속…4층 집중)
13	교민 피해 확대 중국인 철수(반중시위 피해 심각)/베트남	13	후보 등록 시작..본선 경쟁 막 올랐다(후보 등록 시작)	13	<확대경>염분·강한 조류에 선체 열리나 손상(개조 부분 붕괴 위험)
14	<단독>금 간 활주로 발 묶인 공군기들(활주로 부실시공)	14	서울 교육감, 보수3명 진보 2명(서울교육감, 보수3 진보2)	14	"어서 돌아오길" 팽목항은 지금("어서 돌아오길")
15	귀한 몸 벌집 없어서 못 판다("벌집꿀 "없어 못 판다")	15	결국 영터리로 학인된 숭례문 복원(숭례문 복원 영터리 확인)	15	슬픔 속 안산, 경제적 타격까지(참사 한 달..안산은)
16	<단독>필리핀 한인 또 총격 피살(필리핀서 청부 살인)	16	"다시는 이런일 없게"..국민에게 듣는다(국민에게 듣는다)	16	세월호 사고 가족에게 듣는다(세월호 사고 가족 대담)
17	연평도 어선 침몰 전원 구조(어선침몰, 선원 극적 구조)	17	신뢰 무너진 대한민국..새 전환점 필요(신뢰 무너진 대한민국)	17	총체적 부실·해피아 뿌리 뽑아야(산박 안전 총체적 부실)+1
18	은행 앞에 빨간 불량 딱지(금융사 성적표 공개)	18	절망 속에 빛난 희망..이들이 의인(절망 속에 빛난 희망)	18	비상 대피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대피 훈련도 없었다)
19	<단독>농협 축산경제 금품선거 수사(농협 부정선거 수사)	19	2만5천 명의 따뜻한 사람들(2만 5천명의 온기)	19	<이슈>제목 없음(재난 관리 엉성)
20	스승과 제자 한마음 한뜻(스승의 날 새 각오)	20	선생님 영전에 카네이션 "존경합니다"(선생님 영전에 카네이션)	20	<이슈>대안(국가 안전처…과제는?)
21	석유 만드는 꿈의 기술(햇빛으로 석유 생산)	21	"잊지 않을게요"...그 마음 역사기록으로(기록으로 남기자)	21	원로에게 듣는다…위기 극복 방법은?(원로에게 듣는다)
22	잡단적 자위권 공식 발표(日 잡단적 자위권 천명)/도쿄	22	슬픔 속 기억않은 소비..상기도 한산(슬픔 속 기억않은 소비)	22	<데스크>안전 불감증 해법은?(원칙과 기본 지켜야)
23	"우리 요청 없는 한 용인 안 돼"/@	23	구조 매뉴얼, 현장 중심으로 바꾸자(구조 매뉴얼, 현장 중심으로)	23	승객부터 구한 기사…"세월호와 대조"(불길 속 "승객 먼저")/베이징
2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지방선거 후보 등록)	24	컨트롤 타워, 제 역할 하려면..(컨트롤타워, 제 역할하려면..)	24	"사고는 알아내는 것" 총리 발언에 분노(망언에 민심 폭발)
25	1인당 신용카드 4장 야채로(줄어드는 신용카드)	25	그 때 그 자리에..9.11추모 박물관(9.11 박물관 공개)/뉴욕	25	日 집단 자위권 천명…정부 "면밀 주시")/도쿄+1
26	美 서부 최악의 가뭄 곳곳 산불(美 서부, 대형 산불)/LA	26	지도자의 망언..최악 참사에 "종종 있는 일"(총리 망언에 시민 분노)/카이로	26	후보 등록 시작…여야 전략은?(D-20 후보 등록 시작)
27		27		27	우리기업 80곳 피해추정…현장 가보니("80곳피해")/베트남
28		28		28	<간추린>감사원 "숭례문 단청에 화학접착제 사용" 外 4개
				29	스승의 날, 행사 대신에…(행사 대신에…)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6일 (금)

	M B C		S B S		K B S
1	박 대통령 세월호 유족 면담(대통령~유족 대표 면담)	1	소환 불응..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조사없이 바로 영장)	1	유가족 앞 첫 사과··"진심으로 위로"("정부부족··사과")
2	유병언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유병언 구속영장 청구)	2	"충돌 파하면서 법 심판 압박"("충돌 파하면서 법 심판 압박")	2	"구체적 대책 비랐지만 아쉽다"("아쉬운 점 많아")
3	금수원 신도 집결 긴장 고조(금수원 긴장 고조)/금수원	3	온종일 긴장감..장기 농성 태세(장기전 태세)/금수원	3	소환 불응··유병언 구속영장 청구(소환불응··영장청구)
4	종적 감춘 유병언 어디에?(어디에 숨었나)	4	유씨, 금수원 있는 듯..24시간 통제(유 씨 금수원에 있는 듯)	4	금수원 긴장 고조··인간 장벽까지(유병언 어디?··신도집결)
5	유병언 차남 프랑스로 이동(美 유병언 차남 수사)/워싱턴	5	<뉴스>재산 2400억 추정..美국세청도 조사(유 씨 재산 2400억 추정)	5	유병언 수사 장기화 우려(수사 장기화 우려)
6	신병확보 한·불 사법공조(프랑스 왜 갔나)/파리	6	대통령 면담.."특별법으로 규명해 달라"("특별법으로 규명해 달라")	6	선체 내부 재확인, 4층 등 집중 수색(4층 등 집중 수색)
7	2차 수색 착수 민간잠수부 철수(2차수색 돌입)	7	선체 붕괴에 수색 환경 더 나빠져(수색 환경 더 나빠져)	7	"끝까지 실종자 가족과 함께"("끝까지 함께…")
8	불매운동 생계위협 항의(세모 제품 불매 운동)	8	민간 잠수사 일부 철수..더 커진 걱정(민간 잠수사 일부 철수)	8	진도 주민들 이중고…하소연도 못 해(진도 주민들의 이중고)
9	<데스크>세월호참사 우리 사회의 의미(위로하고 극복해야)	9	<인천>당장 철거해야 할 도심의 시한폭탄(도심의 시한폭탄)	9	탑승자 구하다··끝내 주검으로(끝내 숨진 채 발견)
10	벗겨진 단청 재시공 먹먹(단청 재시공 먹먹)	10	안전, 개인소유주도 책임 물어야(개인소유주 책임 물어야)	10	<이 시각 현장>여의도 한강공원
11	활주로 부실 원칙 무시한 시공("설계대로 안 했다")	11	후보 등록 마감..부산 野단일화(부산시장 野 단일화)	11	말양 30도··주말도 초여름 더위(주말도 초여름 더위)
12	한국인 범죄 표적 대책 시급(필리핀 한인 피살 파장)	12	안전이 제1공약.. "안전서울은 내가"("안전 서울은 내가..")	12	<확대경>품위 있는 죽음 윤해도 의료 현실은?(품위 있는 임종을··)
13	성형외과에 정장 입은 떼강도(정장차림 떼강도)	13	투표용지만 7장..30~31일은 사전투표(투표용지만 7장)	13	반중 시위 피해 딛고 조업 재개(피해 딛고 공장 가동)/베트남
14	봄볕 쨍 노화 자외선 비상(노화자외선 주의보)	14	성형외과 털려던 양복 입은 강도들(양복 입은 강도들)	14	<이슈>제목 없음(남중국해 긴장 고조)/베이징
15	만병통치 과대광고 수백억 꿀꺽(주스가 만병통치약?)	15	아례적인 5월 일교차 15도..감기 비상(일교차 15도..감기 비상)	15	<이슈>제목없음(마·중 갈등 확산)/워싱턴
16	안 쓰는 휴대전화 돈 받고 파는 법(잘파는 중고폰)	16	내 돈 담보로 고리대출하는 보험사(보험사, 고리 대출 열중)	16	<압록강변>압록강변의 압대 작별 식사(작별 식사)/압록강
17	재미있는 광고 매출 쑥(웃긴광고로 재도약)	17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	17	카톡으로 송금까지··안전성은?(카톡송금 안전할까?)
18	박주영 부상 회복 대표팀 활기(박주영 부활 신호)	18	방글라데시의 세월호..실종자 수도 몰라(방글라데시의 세월호)	18	후보 등록 마감…40% 전과 기록(후보자 40% 전과 기록)
19	<플러스>대학생 창업 살펴와 과제대학생 창업 도전)+1	19	정원 퇴진 요구로 번진 탄광 참사(정권 퇴진 요구로 번진 참사)/카이로	19	<연속>서울 안전 격돌··주요 공약은?(안전이 최대 이슈)
20	후보 등록 마감 전과 수두룩(후보등록 마감)	20	진도·섬주민의 속앓이 "생업이 안돼요"(진도·섬주민의 속앓이)	20	<단독>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불··환자 사망(배터리 불로 사망)
21	서울 안전 대결 부산 野 단일화(시민건강·안전 공방)	21	절실한 심리 치유..지원은 혼선(심리치유도 지원도 혼선)	21	<집중>日 내부도 갈등··中 반발·美 환영(美환영··中 반발/도쿄
22	탄광 참사 터키 가중(탄광참사 시위 격화)/런던	22	안테넷 이젠 기술의 영역을 넘어(안테넷 기술의 영역을 넘어)	22	<집중>조건부 용인 정부 입장 논란(조건부 용인 논란)
23	개에 물린 보험금 한해 5천억 원(개의 습격 보험금 5천억)	23	칸 영화제 개막..전도연 심사위원에(칸 개막..본선작 없다)	23	여객선 침몰(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영록
24	새누리, 진선미 의원 사과 요구/@	24	캘리포니아 산불..해군 무기고도 위협(무기고 위협)/현지	24	<간추린KBS>보도본부 부장단 보직 시톼··"사장 시톼해야"外 4개/@
25	"이건희 회장 조금씩 나아져"/@	25		25	밀교대장 첫 발견(밀교대장 첫 발견)
26	방글라 여객선 침몰 수백명 실종/@	26		26	
27		27		27	
28		28		28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7일 (토)

	M B C		S B S		K B S
1	유병언 차명 휴대전화 15개 추적(비밀휴대전화추적)	1	특검 논의 가속화..野 "성역 없어야" ('세월호특검' 논의가속화)	1	금수원에 신도 3천 명 집결(금수원에3천명집결)
2	공권력 투입 대비 속속 집결(금수원, 중계차)	2	도심추모집회.. "이런 회생 다시는 없게" ('희생자추모' 도심집회)	2	금수원 도면 분석 4차례 실시도(금수원도면분석착수)
3	선체 곳곳 붕괴 진입로 막혔다(선체붕괴진입로막혀)	3	그 선생님에 그 아버님..열굴없는 감동(딸이그랬던것처럼..)	3	추가수습‥잠수가 2명 입원(강한물살‥추가수습)
4	잠수병 호소 줄줄이 긴급 이송(잠수병호소긴급후송)	4	영장심사 불응하면 공권력 투입(영장심사불응시공권력)	4	경비함정 90% 긴급구조장비 없어(90%긴급구조장비없어)
5	세월호 특검 이구동성 '수용' (세월호특검환영)	5	신도 2천명 집결..농성계속(금수원, 중계차)	5	<앵커>돈 내면 시험 면제?
6	대규모 촛불 보수단체 맞불(도심추모집회)	6	붕괴 위험지역은 잠수사 투입제한(붕괴위험, 잠수사투입제한)	6	벌써 해수욕장에…전국30℃안팎(전국30℃안팎)
7	소방대 오기 전엔 이렇게‥(불시에훈련‥모두가참여)/던던	7	여러기관이 한 몸처럼..45분내 총집결(45분내총집결)/LA	7	자외선 차단제 실험해보니(자외선차단제사용법)
8	몸이 기억하게 반복 또 반복(실제처럼‥몸에배도록훈련)/뉴욕	8	달리던 버스에 불..여전히 불안한 '안전' (달리던버스에불)	8	<앵커>옆 건물도 걱정…
9	활활 타고 들이받고(고속버스화재)	9	등록 후 첫 주말.. '40대민심' 이 변수(40대민심이변수)	9	기사, 신속대처 대응 큰 사고 막았다(빠른대처큰사고막아)
10	늑장 리콜 358억 원 벌금(늑장대응358억벌금)/워싱턴	10	여전한 '공천후폭풍' ..광주의 선택은?('공천후폭풍' 광주민심은?)	10	도심 '추모' 집회‥ "갈등조장" 맞불집회(추모집회…맞불집회)
11	시위에 과업 흥흥한 브라질(치솟는물가, 월드컵반대시위)/LA	11	차 안은 여름..에어컨 세균 피하려면(車에어컨세균득실)	11	후보 등록 후 첫 주말, 표심 잡기 '분주' (후보등록후첫주말)
12	월드컵 마케팅도 '조심조심' (조심스런월드컵마케팅)	12	결함 알고도 쉬쉬..최대벌금 물렸다('늑장리콜' 에최대벌금)	12	경기, 공동체-일자리 격돌(공동체-일자리격돌)
13	'치맥' 김치전 음식 한류 뜬다(음식한류뜬다)/상하이	13	왕자와 거지의 대결.. '거지' 가 이겼다(거지가이겼다)	13	'인사면도개업' 주장 "…사실 아니다" (개업주장-사실아니다)
14	자외선 '독' 아닌 '약' 되려면(적당한자외선은 '약')	14	<건강>고혈압환자, 치매걸릴 위험 더 높다(고혈압, 치매확률70%)	14	압록강변의 빈부격차(압록강변의빈부격차)
15	처형됐다더니‥무대 등장(총살설여가수 '건재')	15	실천한되는 식당의 '음식쓰레기줄이기' (구호뿐인쓰레기줄이기)	15	<앵커> '행상' 출신 총리… '변화'
16	101명이 부르는 '서른 즈음에' (팬이부른 '서른즈음에')	16	노인시대 일손부족을 '입는로봇' 으로(日 '입는로봇' 양산)/도쿄	16	고교생 15명, 햄버거 먹고 식중독 증세外
17	던진 물건 척척 잡는 로봇팔(날아가는물체잡는로봇)	17	인터넷으로 추구하는 '공공善' (인터넷, 미래는공공善)/보스턴	17	'세계의 지붕' 이 녹는다(세계의지붕녹는다)
18	주말에 표심잡자 동분서주(첫주말표심잡기)	18	자취 감췄던 황새, 야생복귀 훈련중(황새의야생복귀훈련)		
19	"청와대 뜻이라며 사직 종용" (김시곤前보도국장)				
20	맛있게 '삼삼한' 맛 찾아라(소금덜쓰는요리법)				

3사 메인 뉴스 아이템 비교 / 5월 18일 (일)

	M B C		S B S		K B S
1	세월호 사과 대국민 담화 발표(朴대통령)	1	침몰 보면서도 "못 들어갑니다"(해경교신 공개)	1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인명 피해 '상당'(北 사고)
2	금수원 내부 공개 "유병언 있다"(구원파 입장)	2	또 드러난 '우왕좌왕 뒷북 대응'(해경 대응문제)	2	붕괴 원인…"속도전·자재 빼돌리기"(사고원인)
3	시신 1구 수습 실종자 18명/@	3	추모집회 후 거리행진.. 113명 사법처리(세월호 추모집회)	3	北, 이례적 공개·사과..의도는?(北 속내)
4	해경 교신 첫 공개 "진입 어렵다"(초기대응 문제)	4	'금수원 탈출 시도' 첩보.. 차량 검문 중(유병언 수사)	4	"바다로 뛰어들게 해라"…"진입 불가"(해경 교신내용)
5	'우왕좌왕' 탈출 명령도 못했다(교신내용 분석)	5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답 없는 바다(구조·수색)	5	거센 물살에 선체 붕괴까지…'수색 난항'(세월호 수색)
6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北 이례적 공개)	6	내일 대국민담화.. 개각 언급여부 주목(朴대통령)	6	금수원 공개…"유씨 교주·교인 아니다"
7	기우뚱 오피스텔 철거하다 폭삭(충남 아산)	7	<안전>두집히고 꺼지고..위협받는 어른이 안전(에어바운스)	7	내일 '세월호 담화'…'관피아 개혁'제시할 듯(朴대통령)
8	아버지 제삿날에 층간소음 참변(서울 도봉구)	8	23층 아파트 붕괴.. 수백 명 사상한 듯(北 이례적 공개)	8	초여름 날씨…산·바다엔 나들이객(헬기스케치)
9	덥다 더워 벌써 바다로 풍덩(더위 표정)	9	층간 소음 '말다툼'이 '살해'로(서울 도봉구 아파트)	9	텐트 안 번개탄 피워..일가족 가스중독(야영장)
10	톡톡 쏘는 탄산수 인기 비결은?(청량감·건강)	10	또 무산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5.18 기념식)	10	층간 소음 갈등에 또 이웃 살해(서울 도봉구 아파트)
11	안심 먹거리로 대륙 뚫는다(中, 한식열풍)/상하이	11	KBS 기자 노조 "사장 즉각 사퇴하라"(세월호 보도논란)	11	노래 때문에 5·18 기념식 올해도 '반쪽 행사'(임을 위한 행진곡)
12	안 타지는 에어백 소비자 속 타져(차량 에어백 미작동)	12	삼성 "회복 중.. 올반병실로 이동 검토"(이건희 회장)	12	압록강변의 돌탑 돌담..이유는?(北 내부동향)
13	지리산 샛길 곰 만날 확률 '쑥'(곰 이동경로)	13	더 밝게 더 안전하게.. 똑똑한 전조등(차량 전조등 진화)	13	인천, '부채 해결'-'투자 유치' 격돌(지방선거, 격전지)
14	<재난대비>안전을 생활화 대피도 배운다(日 사례)/도쿄	14	날씨 더워지니 '접촉 피부염' 늘어나(원인·예방법)	14	수도권 후보 휴일 표심 잡기 '분주'(서울·경기도 후보들)
15	재난 딛고 만든 구조 체계(美 9.11 추모박물관)/뉴욕	15	등산로 벗어나면 위험.. 곰 만난다(지리산)	15	오피스텔 철거 중 붕괴…사고?(충남 아산시)
16	베트남서 침몰·결과는 달랐다(안전규정준수)/베트남	16	120년 만의 대홍수.. 국민 1/4이 이재민(보스니아)/파리	16	<단신>여야, 내일부터 '세월호' 임시국회 外
17	"한국 동의 없어도 북한서 작전"(日 아베정권)/도쿄	17	대한민국 인터넷 야바지가 말하는 인터넷(SDF, 전길남)	17	"기다릴게요" 노란 물결(도심 곳곳)
18	힐러리 건강 남편이 지원사격(美 정가)/워싱턴	18	與후보도, 野후보도 '빚 줄이기' 경쟁(인천시장 후보)	18	
19	척척 뿌리자 드러나는 도둑 지문(美 스마트워터 활용)/LA	19	골 감각 찾아가는 스타들(세계 월드컵 스타들)	19	
20	우주지구 쌍둥이 노화 속도는?(쌍둥이 역설 실험)	20	박은선 해트트릭.. 월드컵 출전권 땄다(여자 아시안컵 축구)	20	
21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21	삼성, 5연승 선두.. 수비로 자멸한 KIA(프로야구)	21	
22		22		22	

[별첨 4~10]

별첨 4 : 민실위 보고서 (2월 25일 자)

별첨 5 : 민실위 보고서 (3월 13일 자)

별첨 6 : 민실위 보고서 (3월 27일 자)

별첨 7 : 민실위 메모 (4월 10일 자)

별첨 8 : 민실위 메모 (4월 24일 자)

별첨 9 : 민실위 보고서 (5월 8일 자)

별첨 10 : 민실위 보고서 (5월 10일 자)

방통위_재난방송요청 및 고시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실 장

제출일자 : 2014. 6. 26.

위원명	요구일자	제 출 자 료 명
박민수 (새정치 민주연합)	’14. 6. 24.	1.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

참고자료 7-5

【창조기획담당관실 정보보안팀 김세한 ☎2110-1314】

1.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14. 4. 16.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발송(11:15경)하였고,

- 이어서 ’14. 4. 16.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대비 재난방송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호**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①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주관방송사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

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책임 있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주관방송사의 권한) ① 주관방송사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방송사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운용을 담당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방송사의 임무) ① 주관방송사는 재난 등의 예방,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기사·영상 등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방송사업자가 동시에 또는 녹음·녹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 등의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수습 및 복구상황은 물론 이재민 등 피해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4. 각 방송사업자 별로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

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9조(정확한 보도)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통계 또는 명단 등을 방송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7-6

KBS, MBC, 방통위 기관보고 종합 질의서

1. 전원구조 오보 관련

1) 전원구조 오보 - KBS가 원인 제공했나?

<‘전원구조’ 오보 이전 KBS 보도>

시간	보도내용	출처
10시14분	해경관계자는 침몰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수 있을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10시30분	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위험성은 비교적 낮은편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10시38분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면 아래 사람이 갇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경항공기 부기장 이교민 경위 인터뷰
10시47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48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52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0시56분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1시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자막
11시	해경 관계자는 모든 인명구조를 곧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 류현순 부사장님, KBS는 10시 4분부터 세월호 구조상황을 뉴스특보 체제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 이 시각 세월호는 60도 이상 기울어져 3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배에 갇힌 채 침몰해가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KBS는 이 긴박한 상황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해양경찰청, 중앙재난대책본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조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인명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실제상황과는 다른 낙관적인 보도를 함. 한번 보시죠.
- 10시 14분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구조 상황 소식을 전하며 “승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관계자는 침몰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1~2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검증되지 않은 해경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10시 30분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세월호 구조상황 소식을 전하며 "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라며 이 시각 300여명의 승객과 침몰해 버린 세월호에서 구조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특히 10시 38분 KBS는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는 해경항공기 부기장 이교민 경위를 전화 연결해 인터뷰했는데요, 이교민 경위가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해군함정 대부분에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 이라고 발언합니다.
- 김진수 주간님, 이교민 경위 발언 사실입니까?
- 저희가 확인하니, 이교민 경위는 사고현장에서 고정익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항공기를 관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저희가 이 경위에게 이렇게 발언한 근거를 물었더니, 이 경위는 "항공기 위에서 바라보기에 갑판 위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 승객 모두 구조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 한 마디로 본인의 '추측' 인거죠. 인터뷰 전에 이 경위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인지 확인했습니까?
- 이 경위는 현장에 구조함정이나 헬기와는 다른 주파수로 구조 지시를 받고 있었고, 때문에 현장 구조상황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 더 큰 문제는 이어서 나옵니다. KBS는 10시47분부터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자막 내보내셨죠? 사실입니까?
- 저희가 전원구조 오보의 진원지를 찾다보니, '단원고 행정실에서의 경찰 무전' 이라는 단원고 측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국조특위에 나온 단원고 전 행정실장도 경찰에게서 전원구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자 경찰청 관계자가, "10시 56분께 행정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KBS에서 전원구조란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면서 박 경사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박 경사가 단원서 상황실에 이를 물어봤던 것" 이라고 언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대 전후 KBS 특보를 다시 꼼꼼하게 봤어요.
- 그랬더니, 10시 47분부터 11시까지 5번이나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 >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7-6

- 온 나라의 국민이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이런 인터뷰와 자막, 낙관적인 보도가 전원이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고, 이 기대가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이세강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오보 촉발시킨 MBC

- 이진숙 본부장님, 4월 16일 '전원구조' 오보...자막은 MBN이 10여초 빨랐지만, '오보'는 MBC가 시작한 거 인정하시죠?
-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방통심의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영상과 오디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MBC가 첫 오보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MBC 홀로 생떼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 그럼 어디 언론학회 같은 곳에 맡겨서, 전원구조 오보를 어디서 처음 시작했는지 확인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장담 못하겠죠?
- 어쨌든 좋습니다. 소리는 듣지 않고, 자막만 보는 시청자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MBN이 10여초 먼저 했다고 치죠. 그러면 MBC의 잘못은 없어집니까?
- 제가 당시 시청률을 확인했어요. MBC 5%, MBN은 몇 %인지 아세요? 0.7%입니다.
- 공영방송 MBC가 시청률 1%도 안되는 종편채널에다 책임 떠넘기고 "우리가 처음은 아니다"고 지금 발뺌하는 겁니까?
- 당시 정부기관과 시청자들이 MBC와 MBN 중 누구의 오보에 더 영향을 받았을까요? 지상파다운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럼 지상파 허가증 반납하고 종편 승인장 신청하시죠?
- 지금 최초 '전원구조' 소식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계속 확인 중인데..어쨌든 MBC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단원고를 취재한던 MBN 기자가 학교의 누군가가 '학생들이 전원구조됐다'는 얘길 하는 걸 듣고, 그걸 자기 선배에게 보고하자, 그 선배가 주변에 있는 MBC 기자에게도 알려줬고, 이 기자가 단원고에 있던 MBC 후배기자에게 '맞냐?'고 확인한 뒤 '맞는 거 같다'고 답변하자, 곧바로 보도국에 보고한 뒤 자막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 최초 오보 시점과 무관하게, 수백명이 탄 배가 침몰했는데, 그 중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전원구조됐다'고 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빨리 온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 하지만 본부장님,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팩트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방송이 유념해야 할 사안 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 ‘정확성’ 아닙니까? 확인된 사실은 신속하게 보도해야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 맞죠?
- MBC를 필두로 온 방송과 언론이 쏟아낸 ‘전원구조 오보’에 온 국민과 정부, 심지어 청와대와 해경까지도 혼란에 빠진 거 인정하시죠?
-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겠습니까?

3) MBC 전원구조 오보, 1시간 동안 지속됐다!

- 그런데 말이죠...MBC는 더더군다나 단순한 사과로만 끝낸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 박상후 부장, MBC에서 최초 자막이 나간 뒤 목포MBC 한승현 취재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현장취재기자 확인결과 전원구조가 아닐 수 있다, 세월호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한 적 있죠?
- 그 전화 언제 받으셨어요?

<MBC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

세월호 참사 당일 목포MBC의 진도 현장 취재 기자는 박영훈 기자로 박 기자가 한승현 목포MBC 취재부장에게 보고한 것을 한승현 부장이 서울MBC 박상후 전국부장에게 11시 30분쯤 (당시 각 방송사 특보 상황 등으로 추정한 시간입니다) 전화를 걸어와 “현장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니 전원구조가 아닐 수 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약 10분 뒤 (역시 추정 시간입니다) 김선태 목포MBC 보도국장도 “사태가 예상 외로 심각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라고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목포MBC의 한승현 취재부장은 서울MBC 전국부 고현승 차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했으나 당시 특보 체제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라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MBC의 전화 보고는 이미 목포MBC 김현 기자의 전화 리포트를 통해 구조자 수가 정정된 다음이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또한 보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어민의 감이 그렇답니다.’는 등 짐작과 전언이어서 취재에 참고했을 뿐 이를 보도국 내에 전파하거나 방송에 반영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11시 30분쯤이라는데 맞나요?
- 이 시간이면 이미 MBC가 “해경에 따르면, 모두 161명을 공식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며 ‘전원구조’ 오보를 정정했다고 밝힌 11시 24분보다 늦은 시간인데요. 오보를 정정하는데는 목포MBC의 잇따른 보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네요?

참고자료 7-6

- 그래서 MBC도 특위에 제출한 답변에서 “목포MBC의 전화 보고는 이미 구조자 수가 정정된 다음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했죠? 맞습니까?
- 저희가 목포MBC 한승현 당시 취재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MBC 소속이 아니라 목포MBC 소속이라 오늘 안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좋습니다.
- 어쨌든 MBC가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믿더라도, 목포MBC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취재부장과 보도국장까지 전화해서 “전원구조는 사실이 아니다, 사태가 예상 외로 심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죠?
- 그렇다면 말이에요. MBC가 전원구조를 정정했다고 밝힌 시간 이후의 보도에는 목포MBC의 보고가 적절히 반영이 됐습니까?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뒤죽박죽, 이랬다저랬다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 한번 보시죠.

시간	보도내용	출처
11시23분	해군 발표에 따르면 11시 현재 함정에서 79명 헬기에서 32명 등 161명을 공식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MBC 김윤 기자
11시24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28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33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34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36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 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38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41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1시44분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
11시46분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	자막
12시18분	오늘 아침 9시에 조난신고를 보내왔던 세월호. 47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탔던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고 대부분의 승객과 선원은 구조가 된 현재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장 날씨가 나쁘지 않아서 해경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현 앵커
12시27분	그리고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조인원을 집계한 것은 161명, 해경이 12시 기준으로 집계한 것은 197명인데요, 숫자가 현장에서는 전원구조**됐다, 중대본과 해경이 약간씩 다른것은 그 집계에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시차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
12시30분	<해경, 197명 구조 확인>	자막
12시32분	다행히 **학생들은 그래도 무사히 구조가 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연락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최대현 앵커
12시35분	인솔교사 14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경기도 교육**	최대현 앵커

	청에 따르면 이들 모두 안전하게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12시39분	오늘 아침 출발했던 **세월호는 진도앞바다에서 완전히 침몰한 상태고, 타고 있던 477명은 모두 구조가 된 상태**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최대현 앵커
12시45분	지금 현장에서 구조된 승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배가 갑자기 기울어 져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현 앵커
12시48분	**현재 구조작업이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승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조 된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선체가 완전히 침몰된 가운데 선체안에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현 앵커
12시52분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들이 325명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전원구조 됐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종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마음 답답**하기만 할 것 같은데요	최대현 앵커

- 11시23분47초 “해경 161명 공식적으로 구조 발표” 리포트가 나갑니다.
- 그런데 그 직후인 24분부터 11시46분까지, MBC에서는 <해경“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 자막이 4번,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전원 탈출 한 듯>이 5번 나갑니다.



참고자료 7-6



- 어찌된 겁니까? 전원구조 오보가 11시23분에 정정된 거 맞습니까?
- 시청자들이 '아 다 탈출해서 구조됐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심지어 **12시 18분 55초**에는 뜬금없이 앵커가 **"47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탔던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고 대부분의 승객과 선원은 구조가 된 현재 상황"**이라며 **"육해공군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160명 정도 구조했다고 밝혔고, 목포MBC에서는 "배가 완전히 침몰했는데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고 보고까지 한 뒤에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갑니까? 이 역시 완전 오보이며, 11시 23분에 오보 정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거죠?
- 더 심각한 것은 이 이후에도 거의 1시간 동안 앵커 코멘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 등 승객이 모두 구조됐다"고 보도됩니다. 그 중간중간 '중대본 공식 구조 인원은 161명', '해경은 197명 구조 확인' 등 정부발표따라 구조자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보도들도 나오고요.
- 12시 45분에는 앵커가 "배가 갑자기 기울어 져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 3분 뒤인 48분에도 또 다시 앵커는 "현재 구조작업이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승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조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합니다.
- 그러다 1시가 되어서 "197명이 구조된 것으로 중대본에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 보도본부장님, 이 같은 MBC 보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11시 23분에 전원구조

오보가 정정된 거 맞습니까?
- 그렇다면 그 이후 앵커 코멘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 MBC 뉴스특보를 보던 시청자라면 12시50분까지는 당연히 '학생들도, 승객들도 다 배를 탈출해 구조됐구나' 라고 여기겠지요?
- 그리고 구조현장과 정부당국이 mbc 뉴스특보를 봤다면 '대체 뭐가 맞는거냐?' 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 목포MBC에서 올라온 보고만 제대로 챙기고 보도국 내에서 제대로 공유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못 인정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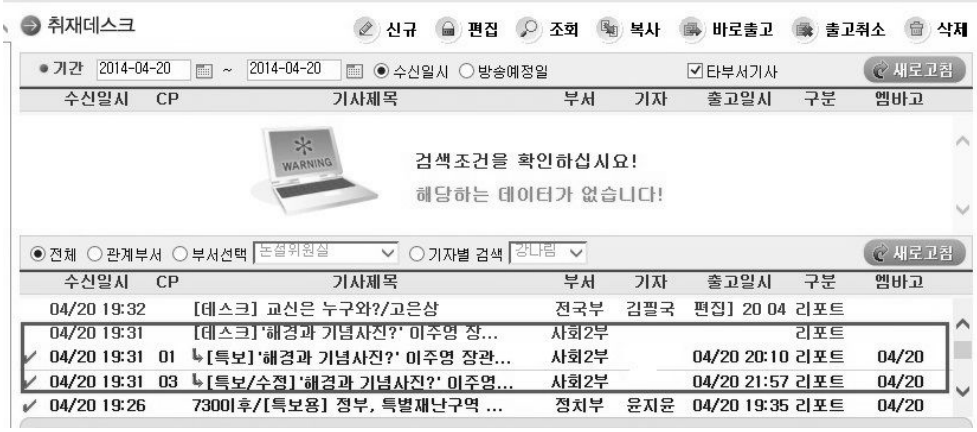
2. MBC의 정부 비판성/중요사안 발굴 아이템의 보도 누락 등

1) 안행부 국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 보도

- 보도국장님, 4월 20일 해수부장관 일행이 팽목항에 갔을 때, 장관 옆에 있던 안행부 간부가 "온 김에 기념사진 찍고 가시지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장관 일행을 가로막고 항의한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던 현장에서 고위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한 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었나요?
- 보도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에 따라 수많은 언론이 그날 바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MBC는 4월 20일 이 보도 했나요?
- 보도안했죠?
- 저희한테 제출한 답변에서 4월 21일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이란 리포트에서 "해당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국장이 사표를 내 수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는데, 이 보도가 해당 국장의 문제 행위를 지적한 보도였나요?
- 아니죠.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는 박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 출입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마치 그 사례 중 하나로 안행부 국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처럼 보도했어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51727_13490.html)
-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사안인데, 오히려 MBC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 대단히 교묘하게 활용해서, 대통령을 속칭 '빨아준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정작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7-6

- 4월 20일, 진도 현장에서 안행부 국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현장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사실입니까? 발제도 없었고, 원고를 송고한 일도 없습니까? 확실해요?
- 자 화면 한 번 보시죠.



4월 20일 뉴스시스템 캡쳐

-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 MBC 내부 보도게시판인데...사회2부에서 4월 20일 7시 31분 <[특보] ‘해경과 기념사진?’ 이주영 장관...> 기사를 작성해 올린 거 보이십니까?
- 이 기사는 뭐죠?
- 왜 “발제도 없고, 보고도 없었다”고 거짓답변을 했습니까?
-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MBC 기자들이 곧바로 상황을 보고했고,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는데, 박상후 전국부장이 이 아이템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요?
- 박상후 부장, 맞습니까?
- 그리고 8시30분에 정부에서 안행부 국장을 직위해제한다는 보도자료가 발표돼 현장에서 다시 “지금이라도 리포트하자”고 요청했는데, 박상후 부장은 역시 묵살했습니다. 맞죠?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막은 거잖아요.
- 당시만해도 뉴스데스크를 2시간 할 때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안인데 하지않았어요.

(-그러면서, 국회에는 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을 증감법에 따라 고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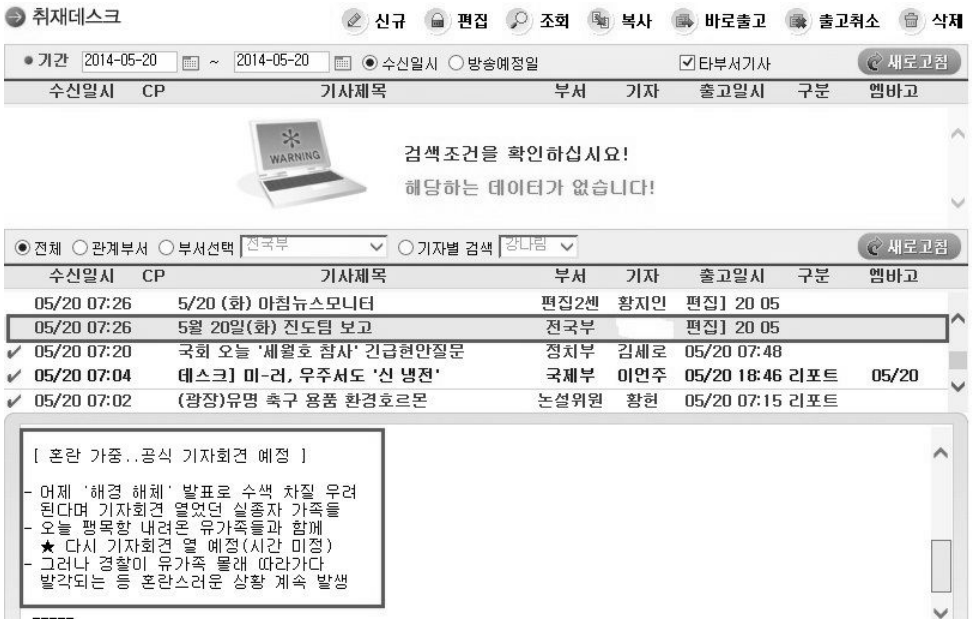
2) 목포해경 간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 발언 관련

- 박상후 부장님, 방송사 내부에서, 기자 ‘어떤 사안을 취재해 보도하겠다’고 하는 걸 ‘발제’라고 하죠?
- ‘발제’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죠?
- 문서로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전화통화로도 하죠? 형식이야 어쨌든간에 “이런 이런 이유로 이 아이템 했으면 좋겠다”고 데스크나 팀장에게 제안하는 게 ‘발제’죠?
- 4월 22일 밤 모 종편에서 <해경 간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막말 파문>을 보도합니다. 이 사안 아시죠?
- 연합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사에 이 보도를 받아 후속보도를 했고, 인터넷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어요.
- 그래서 다음날 어떤 전국부 기자가 부장에게 “이 아이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한 적이 있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 그런데 부장께서 뭐라고 했죠?
- “해경이 맞는 말 했다, 80명 구한거면 정말 잘한거니 기사 안된다”며 잘랐죠? (-저희가 그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 해경의 총체적인 무능과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은폐하고 조작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해경이 80명 구하면 잘하거다”고 생각합니까?
- 국민들로 지탄받고 있는 해경의 간부가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되려 ‘나 잘났다’고 막말을 하는데, 보도할 가치가 없습니까?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 그렇게 보고까지 받아놓고 또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는 ‘보고도, 발제도 없었다’고 거짓자료를 보냈어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3)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유가족 등 기자회견 누락 관련

- 보도국장님,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잖아요...이에 대해서 그날 바로 실종자 가족분들이 ‘해경 해체’에 “해경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등의 내용으로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실종자 가족들 기자회견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나요?
- 안했죠? 저희가 ‘기자들의 발제는 있었냐?’고 했더니 “발제는 없었다”며 “유가족 일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장 취재기자들이 사안을 크게 보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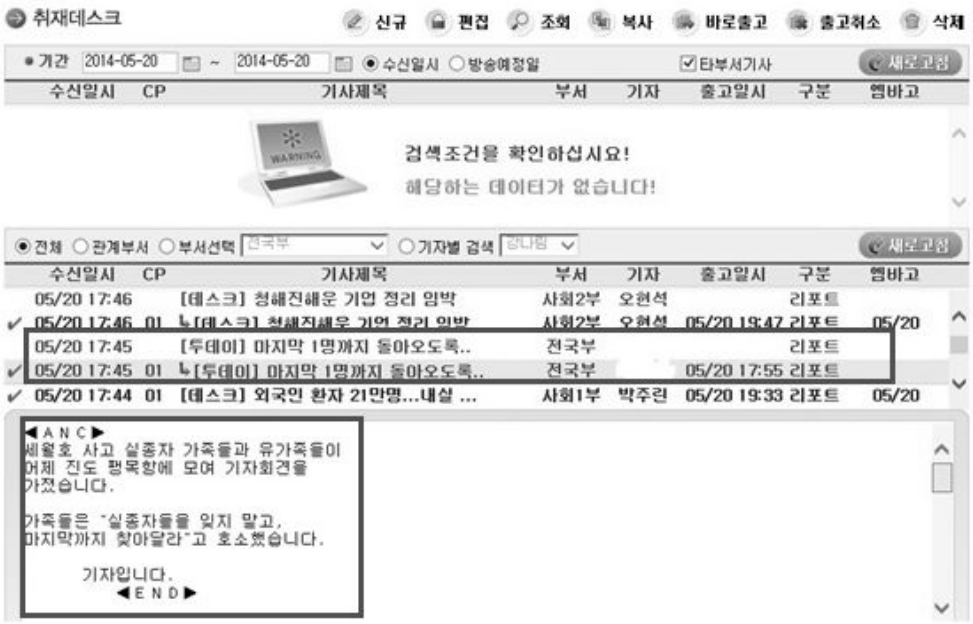
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답변을 했어요.
- 사실인가요?
- 자꾸 거짓자료 제출하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할 겁니까?
- 당시 진도 현장취재기자가 ‘수색상황’과 ‘실종자가족 기자회견’ 그리고 ‘해경 브리핑’ 등을 모두 전국부에 보고했는데, 박상후 부장 보고받으셨죠?
- 그리고 이 내용이 MBC 이브닝뉴스에서 상세히 보도됐어요. 맞죠?
- 이브닝뉴스의 보도는 누가 발제한 겁니까? 그 내용은 누가 정리해서 보낸 겁니까?
-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브닝뉴스에도 나갔기 때문에 뉴스데스크에도 당연히 나갈 줄 알고 현장에서 “수색 중단에 갑작스런 해경 해체까지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고통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는 기사까지 송고했습니다.
- 그런데 현장기자들의 발제가 없었다고요? MBC의 거짓답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대국민담화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 저희가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기자들의 발제가 없었냐?’며 ‘왜 이 사안이 뉴스데스크에서 단신으로 보도됐냐?’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MBC에서 보내온 답변이 뭐였습니까?
- “취재기자들의 리포트 발제는 없었다”, “유가족의 공식회견인만큼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단신으로 처리했다” 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국회를 이렇게까지 우롱할 수가 있습니까?
- 왜 리포트로 처리하지 않고 단신으로 처리했냐고 물었는데, ‘기사 가치가 있어 단신으로 처리했다’ 고요? 뭐하는 겁니까?
- 이날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내용과 목놓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등을 KBS는 9시뉴스 7번째 꼭지로, SBS는 메인뉴스 9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그런데 MBC는 단 2문장의 단신에 그쳤습니다. 도대체 MBC의 보도기준은 뭡니까?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불만 때문입니까?
-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고 했어요.
-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낸 답변이 사실입니까?
- 화면 보시죠.



5월 20일 진도 취재팀 오전 보고

- 진도에서는 이미 유가족들이 팽목항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라는 내용을 아침 7시 26분에 보고했습니다. 맞죠?
-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유가족들께서 팽목항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가자” 라고 눈물로 외치는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전국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아이템은 뉴스데스크로 갈 거라 여기고 기사를 구성했다 합니다.
- 그런데 전국부에서 “이 아이템을 단신으로 빼겠다” 고 연락이 오고 실제 단신으로 보도된 겁니다.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사를 올리면 전국부장의 생각이 바뀔까 싶어 저녁뉴스 기사로까지 표시해 기사를 송고했다고 하더군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 7-6



- 왜 거짓자료를 제출합니까? 이런 거짓투성이 자료 제출하면 MBC 잘못이 감춰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국정조사가 그렇게 우스워요?
  (-MBC의 거짓자료 제출과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해경 동영상 은폐 사실 최초 확인하고도 누락

- 보도국장님, 4월 27일 KBS가 9시뉴스에서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한 거 아시죠?
- KBS가 이렇게 보도한 다음날 아침, 해경은 곧바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해경이 선수쪽으로 가서 선원들만 구조하고, 선장 등 선원들이 자기들만 탈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 그러자 MBC도 그 영상을 따서 28일날에는 첫보도부터 6꼭지나 관련보도를 내보냈어요.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했다는거죠. 맞죠?
- 그런데요. 해경이 이 영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MBC에서 4월 25일에 이미 전국부에 발제해서 원고까지 보냈죠? 하지만 박상후 부장이 리포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 MBC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국부는 해당 리포트가 언론이 동영상 달라는

데 왜 안 주고 숨기느냐는 식의 의혹 제기만 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인터뷰 등 근거는 부족해 기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 그 이유를 답변했습니다. 맞죠?

- 또 "곧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정부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무조건 숨기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편집회의에서 논의는 없었다" 고도 밝혔습니다.
-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 분이 지상파 보도국 간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자질까지 의심스럽습니다.
-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그림' 이죠? 그럼 그 그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정부가 주지 않는다면,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할 만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 그런데, 국민들의 온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해경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뉴스가치가 없습니까?
- MBC는 답변에서 목포MBC가 보낸 리포트가 "언론이 동영상 달라는데 왜 안주고 숨기느냐는 식의 의혹제기만 했다" 고 했습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목포MBC는 MBC본사 전국부가 전국에 나갈 뉴스데스크 편성에서 제외시키자, 결국 목포MBC의 뉴스데스크 로컬시간에 첫보도로 이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 화면 보시죠. 바로 저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 7-6



- 내용도 한번 볼까요?
- “승객을 버린 선원들의 탈출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먼저 구조선박에 오르려는 모습과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 등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이후 공개된 영상과 일치하는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 27일 KBS보도도 이만큼 상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리포트가 어째서 의혹제기만한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뭘 판단한 겁니까?
- 박상후 부장, 지금도 당시 목포MBC에서 올라온 리포트를 자른 게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잘랐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5) 이밖에 해경비판 보도 누락

- 박상후 부장, 지난 4월 23일 진도 현장취재진이 ‘엇박자 구조작업’이란 제목으로 아이템을 발제했죠?
- 실제 당시 현장에서는 해경의 지휘가 혼선을 빚으면서 민간잠수사들이 반발하고, 특히 일부는 철수를 선언하고 현장을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 그런데, 박상후부장이 “이 아이템은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왜 해경에 불리한 내용이고, 그래서 정부에 누가 갈까봐 그런 겁니까?
- 그리고 26일에는 또 진도 현장에서 ‘구조인원 뻥튀기’라는 제목으로 아이템을 발제했는데, 실제 잠수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십명 안되는데, 정부가 500, 600명

투입했다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보도 역시 박 부장이 채택하지 않았다더군요. 물론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왜 누락시켰습니까?
- 박 부장이 채택하지 않은 이 아이템을, 이틀 뒤인 28일 KBS는 '앵커&리포트' 코너에서 <물량 공세 발표 혼란 불신 키웠다>는 제목으로 집중보도합니다. "대책본부는 그동안 하루 평균 5백에서 7백명 정도의 잠수요원을 투입했다고 밝혀왔는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간 인원은 하루에 적게는 열명 안팎, 많게는 80명에 불과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외에도 수두룩했습니다만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 어떻게 '해경비판 하지말라' 고 직접 청와대로부터 지시까지 받은 KBS보다 MBC가 더 합니까? 박 부장도 청와대 연락받았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3. 세월호 보도 자화자찬하는 MBC 관련

1) "세월호 보도, 시청자 주목받는 계기였다" 는 안광한 사장의 메일

- 안광한 사장님, 세월호 침몰 첫날, 방통심의위나 제가 보기에는 "학생 전원구조" 라는 세월호 참사 최악의 오보를 가장 먼저 낸 곳이 MBC이고, MB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종편 채널과 10여초 차이로 선두를 앞 다툰 곳이 바로 MBC일뿐 아니라 이밖에도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사장님은 MBC의 세월호 방송을 어떻게 평가했죠?

※ 4월 25일 안광한 사장이 MBC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 중 일부

세월호 참사는 크고 비극적이며 한국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할 교훈적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이 우리사회의 수준과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효순 미선양 방송"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비해, 이번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추스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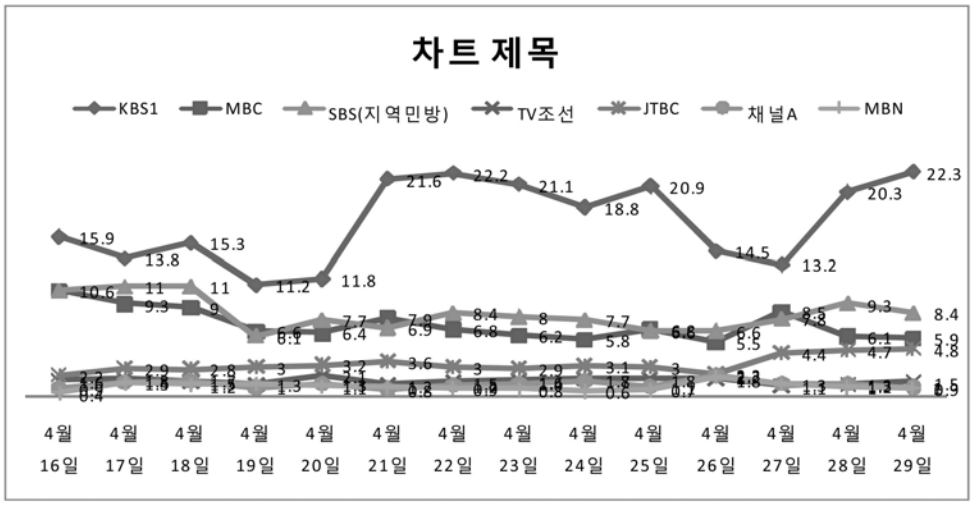
이번 사고가 학생들의 대규모 희생으로 더없이 가슴 아팠던 만큼, 이를 대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사명감도 남달라 MBC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보**

참고자료 7-6

방송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모두들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을 던져서 제 역할들을 해준 덕분에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사와 지역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가동해 보게 된 것도 향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생한 만큼의 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라 주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파이팅하고 MBC가 어떤 상황이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그 중의 으뜸입니다.

- 지난 4월 25일 사장께서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번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며 “특보방송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모두들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을 던져서 제 역할들을 해준 덕분에 우리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쓰셨죠?
- 나아가 “무엇보다도 고생한 만큼의 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라 주어 보람이 있었다”고도 쓰셨는데...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신거죠?
- 한마디로 MBC의 세월호방송은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을뿐 아니라 호응도 뒤따랐다는 건데...사장님 ‘시청자의 호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뭐죠?
- 바로 시청률이죠?
- 사장께서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낼 무렵...과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화자찬할 만큼 시청자들의 호응이 뒤따랐고, 그래서 시청률이 나왔나요?



- 한번 살펴볼까요?
- 4월 16일부터 2주치 지상파3사와 종편4사 보도프로그램 시청률입니다. MBC의 경우 4월 16일 10.6%로 시작했던 시청률이 사장께서 메일을 보내기 전날인 4월 24일에 5.8%까지 떨어집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날에는 5.5%까지 뚝 떨어집니다.
- 한마디로 시청률이 반토막이 난 거죠? 도대체 어디서 '시청자의 호응'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시간대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MBC의 경쟁상대인 민영지상파 SBS보다 시청률이 높았던 날은 딱 3일뿐입니다. 그것도 근소하게...특히 MBC가 시청률이 반토막날 동안 종편채널인 JTBC는 4.8%까지나 시청률이 치솟으며 MBC의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 도대체 뭘 보고 자화자찬이 가득한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까?
- 시청률로만 보면, MBC는 시청자의 기대를 저버렸고, 시청자들의 호응은 SBS와 JTBC로 향한 거 같은데...시청률만 보면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 MBC의 보험금 보도 관련

- 사장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 이진숙 본부장, MBC 내부에 따르면 김장겸 국장이 4월 23일 "이번 세월호 사고 관련 언론 보도는 칼럼, 논문 등 언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MBC 보도는 타사에 비해 논란이 될 만 한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본부장도 동의합니까? 같은 생각입니까?
- '전원구조' 오보 외에도 MBC가 참사 첫날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거 모르세요?
- 4월 16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사망 1억원" 등 세월호 승객들이 받게 될 보험금 액수를 상세하게 보도했죠?



참고자료 7-6

MBC는 지난 16일 <특집 이브닝뉴스> 19번째에 배치한 **<"두 달 전 안전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 리포트에서 "세월호는 선박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 5000만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단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휴대폰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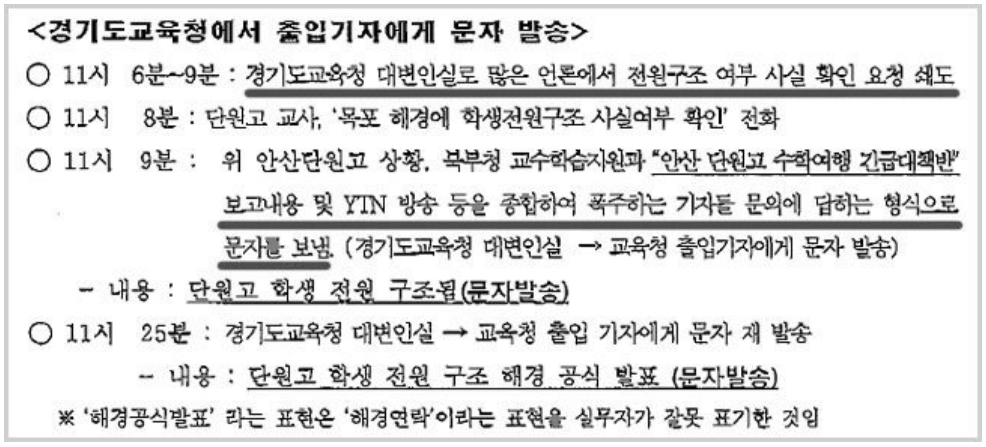
이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누리꾼들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언론이 어떻게 목숨값을 전하고 있나" 등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 수혜 여부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 속 보상 액수를 말하는 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 시청자들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언론이 어떻게 목숨값을 전하고 있나" 라는 등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이 보도 문제 없었나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 안광한 사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MBC 보도가 교훈적 공감대를 얻는데 큰 기여" 를 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 "MBC 뉴스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고 했는데, 그것이 사장의 말처럼 '시청자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MBC 보도가 일으킨 여러 문제때문이라 보는 게 타당하겠죠?
-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게 진심으로 사과하시죠.

3) '전원구조오보' 경기도교육청 탓하는 MBC 보도 관련

- 이진숙 본부장, 부하 간부 중에 배선영 사회1부장이 지난 4월 21일 '데스크리포트-함께 생각해봅시다' 라는 코너에서 <정부 재난대응체계 침몰>이라는 주제로 직접 리포트한 적이 있죠?
- "1. 부정확한 상황보고, 2. 통합 대응체계 부재, 3. 탐색 구조 지연" 이 세가지가 천안함 사건 때처럼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고 지적한 보도인데 알고 있나요?

- 정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MBC의 흔치 않은 보도 중에 하나인데요...그런데 리포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 "부정확한 상황보고"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재난담당 부서도 아닌 경기도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말로 마치 사건이 경미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리포트한 대목인데요...
- 이게 사실입니까?
- "학생들이 전원구조됐다"는 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건이 경미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것이 경기도교육청입니까?
- 이 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보낸 시간이 4월 16일 몇시몇분입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에게 문자 발송>

○ 11시 6분~9분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로 많은 언론에서 전원구조 여부 사실 확인 요청 쇄도

○ 11시 8분 : 단원고 교사, '목포 해경에 학생전원구조 사실여부 확인' 전화

○ 11시 9분 : 위 안산단원고 상황, 북부청 교수학습지원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긴급대책반" 보고내용 및 YTN 방송 등을 종합하여 폭주하는 기자들 문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문자를 보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 교육청 출입기자에게 문자 발송)

- 내용 :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됨(문자발송)

○ 11시 25분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 교육청 출입 기자에게 문자 재 발송

- 내용 :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 (문자발송)

※ '해경공식발표' 라는 표현은 '해경연락'이라는 표현을 실무자가 잘못 표기한 것임

- 출처 :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학생 전원 구조 문자 발송 경위'

- 두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데 첫 번째 문자를 11시 9분에 보냅니다.
- 그런데, MBC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 > 자막이 맨 처음 나간 시간이 몇시 몇분이죠?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학생전원구조' 오보 시간

방송사	최초 오보시간	오보 보도형식	최초 정정시간
MBC	**11:01**	**자막,앵커코멘트,기자리포트**	**11:24**
YTN	11:03	자막,앵커코멘트	11:34
채널A	11:03	자막,앵커코멘트	11:27
뉴스Y	11:06	자막,앵커코멘트	11:50
TV조선	11:06	자막,앵커코멘트	11:31
SBS	11:07	자막,앵커코멘트,기자리포트	11:19
MBN	11:08	자막,앵커코멘트	11:27
KBS	**11:26**	**자막,앵커코멘트,기자리포트**	**11:33**

– 자료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참고자료 7-6

- 정확하게 11시1분26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보다 8분여 더 이른 시간이죠?
- 시간순서로 보자면, 배 부장 지적처럼 '재난담당 부서도 아니면서, 학생전원구조 됐다는 말로 경미한 사안으로 오인' 하게 만든 책임이 경기도교육청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보다 MBC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까?
- 본부장, MBC가 이런 오보에 대해 사과한 게 언젭니까?
- 5월 21일입니다.
- 하지만 어떤 식으로 사과했죠?
-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이 문자보내기 전에 이미 오보가 나온 사실이 밝혀졌고, 그 중에서도 MBC가 가장 먼저 오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 전원구조 오보 MBC가 촉발시켰다" 고 보도자료를 냈더니,
-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틀린 주장으로 확인됐다" 며 "최 의원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화방송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고 최민희 의원을 비난한 리포트의 말미에,
- "한편 MBC는 이번 논란을 떠나 MBC 역시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를 내고 정정보도를 하는 등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시정차 여러분께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한 문장 언급한 게 방송을 통해 '학생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사과한 전부입니다.

※ MBC는 국조 자료요구 중 "**최민희 의원의 보도자료를 'MBC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한 상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MBC :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타 방송사에 오보의 책임을 미루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다만 'MBC가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다'는 최민희 의원실의 보도자료가 정확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해명하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사고 당일의 각사 보도를 세심하게 비교했다면 MBC가 "오보의 확대 재생산 경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MBC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악의적"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최민희 의원께서 상처를 입었다면 유감입니다.

-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보 등 잘못된 보도만 가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리포트를 따로 보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4) 사과에 인색하기 그지없는 MBC

-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도 MBC의 사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 KBS는 이미 4월 20일 자사를 포함 세월호 관련 보도를 자성하는 '미디어인사이드'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5월 15일에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로웠다. KBS는 이런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두꼭지에 걸쳐 사과하고 반성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 SBS도 같은 날 앵커의 유가족과의 대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언론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 JTBC의 경우는 침몰 첫날 구조된 학생에게 부적절한 질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그날 바로 메인뉴스 앵커가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MBC는 대체 이런 방송들보다 뭘 더 잘했길래, 그렇게 사과에 인색합니까?

5) 368명 구조 오보 - 받아쓰기보도의 폐해

- 지난 20여 년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등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참사를 겪었지만, ▲ 속보 경쟁과 정부 발표 받아쓰기 ▲ 유언비어를 확대하는 보도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2차 피해를 부른 보도 ▲ 분풀이를 조장하는 보도 ▲ 선정적인 보도 ▲ 오보 중계 등 이번 세월호 보도 역시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 과거 비슷한 참사와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차이는 취재인력의 증가를 제외하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 '전원 구조' 오보와 '368명 구조' 오보는 사고 초기 결정적인 구조 대응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낳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이는 정부 발표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는 '받아쓰기' 저널리즘,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음.
- 이세강 본부장, 이진숙 본부장, '세월호 오보 참사'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과 함께 출입처와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재난방송은 그 자체가 재난기관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참사 초기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구조상황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입장만을 보도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할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 심지어 보상금 문제까지 운운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국민이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해경의 적극적 구조태도를 독려하지 못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오보는 정확히 통계를 집계하지 못한 정부 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받아쓰기의 참극' 은 언론사의 몫입니다. 언론이 정부의 발표만을 받아 쓴다면 우리사회에 더 이상 언론이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잘못된 취재 관행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4. MBC의 내부 비판 탄압 관련

1) 권성민 PD 반성글에 6개월 정직

- 그런데 MBC의 세월호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들만 차가운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죠. MBC 내부에서는 그보다 더한 냉소와 자책, 나아가 분노까지 표출되었습니다.
- 그리고 시청자의 냉소에 대해서는 "호응했다"고 180도 왜곡한 MBC가 사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 MBC의 세월호 방송을 보다 못한 직원 중 한 명이, 그것도 보도와는 상관없고, 세월호 방송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예능PD이고, 입사 3년차밖에 되지 않는 막내PD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사를 대신해 MBC의 세월호 방송을 사과하는 글을 올렸는데,
- 안광한 사장, 이 PD에게 내려진 회사의 징계가 뭐죠?

※권성민 PD가 인터넷커뮤니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린 글 중

…

문제의 경영진 대부분이 유지된 채, 얼굴마담일 뿐이었던 김재철 사장은 전혀 다를 바 없는 다른 허수아비로 바뀌었습니다.그 사이 사측은 '시용직'이라는 전무한 고용형태로 대체인력을 대거 뽑았고, **눈에 거슬리는 이들은 차례차례 해고**해나갔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도, 사측의 직원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들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보란 듯이, 이미 두 차례나 중복징계한 바 있는 PD수첩 제작진에게 또 다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이들은 모든 비판으로부터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자화자찬하기에 바**

뽑니다.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보도가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떠들었습니다.

…

현재의 MBC는 크게 제1노조와 제3노조의 두 세력으로 양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경영진은 노골적으로 제3노조에 소속된 인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고, 제3노조 세력들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중에 사측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용기자세력은, 파업 인원들이 전원 복귀하여 제작 인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력직 채용 등의 형태로 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1노조 소속으로 활동하던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서 조정 등으로 취재부서로부터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남아도는 제3노조 세력의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질이나 완성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엠병신의 뉴스**입니다

….

계속해서 싸워온, 원래의 마봉춘을 자랑스러워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독을 차고 있습니다. 혹은, 노조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치욕을 삼키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력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거부할 수 없다면, 리포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바꿔가며 그래도 차라리 차악의 형태로 바꾸어 방송에 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뉴스, 내가 안하면 더 최악의 형태로 읽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세월호 관련 보도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당사자들은 못합니다.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나간 뉴스이니까요. 묵묵히 기레기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BC는 6월 10일 권성민 PD가 <오늘의 유머>에 **'엠빙신 PD입니다'라는 제목의 글**(5월 17일)을 올린 것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취업규칙 중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해 이를 공고했다. 권 PD에게는 특히 2010년 제정된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할 때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한다"는 조항 위반도 적용됐다. 권 PD의 징계는 9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안광한 사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됐다.

참고자료 7-6

- 무려 ‘정직6개월’ 입니다.
- 일부 표현이 과격하고,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입사3년차 PD에게 정직6개월이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2) 사내에서 비판 제기하면 무조건 탄압

- 그리고 일부 표현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권PD의 글이 사실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2012년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 무더기를 해고하고, 징계한 게 사실이잖아요?
- 그래서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해고무효’ 판결을 내려도 이를 무시하고, 최근에는 법원이, MBC에게 ‘해직자들을 MBC 직원의 신분으로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도 ‘본 재판의 2심 판결에서 MBC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7일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박성제 전 기자, 이상호 전 기자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이에 대해 MBC가 “법원 결정은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했다”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며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 시는 물론 패소 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의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으로 이는 재판부도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음.

- 그뿐입니까? 실제로 MBC에서는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미가 있는 직원들, 그리고 언론노조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가혹한 인사조치들이 횡행하고 있잖습니까?

날짜	내용	대상	사유
3월17일	부당전보	기자 5명 부당전보 -박00 이00 => 경인지사 -민00 양00 김00 => 미래방송연구실	
4월7일	부당징계	<PD수첩> 제작진 부당징계 -조능희 정직1개월 -김00 이00 감봉2개월	“광우병” 보도 이유로 정직3개월 감봉6개월=>2심까지 징계무효 =>양형과하다면 재징계하겠다

4월10일	부당전보	기자 1명 부당전보 임00 기자 => QC팀	보도국내 부서이나, 업무는 없음. 현업 배제 의도
4월23일	부당징계	조능희 PD 정직 2개월	'재징계' 관련 외부 인터뷰
	부당징계	김00, 최00 등 정직1개월 교육2개월	3년이내 최하인사평가 3회
5월13일	부당전보	기자2명 부당전보 양00, 김00 =>경인지사	
6월2일	부당징계	신00 기자 정직 1개월	박상후 기사 입사동기 '카톡방'에 공유 => '비밀 유출'
6월9일	부당징계	권00 피디 정직 6개월	인터넷 글 '회사 명예실추' 이유

[표5] 2014년 징계 및 전보 현황

- MBC기자회가 MBC의 세월호보도를 두고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낸 다음날, 보도국 중견 기자 2명을 경인지사로 발령내버렸죠?

> 기자회 성명(5.12)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5월13일 회사는 김혜성, 양효경씨 등 보도국 중견 기자 2명을 경인지사로 발령냈다. 경인지사는 기사를 쓰거나 리포트를 하는 곳이 아니며, 경인지역 관공서 등을 상대로 광고 및 사업영업을 하는 곳이다. 각각 14년, 15년차 기자들의 '기자'라는 직업을 일거에 박탈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인사 배경과 관련해서 이들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들은 '왜 이런 인사가 났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김혜성씨는 통일전망대 팀에서 프로그램 코너를 맡아 출연과 제작에 힘써왔으며 **양효경씨의 경우, 낮동안의 뉴스를 책임지는 주간뉴스팀 팀원으로서 특보체제로 가동됐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기자**였다

- 그리고 박상후 전국부장의 유족 폄훼 리포트를 카톡 동기방에 올리고 비판한 신모기자에게는 '정직1개월' 을 내렸죠?
- 최근에는 부장 등에 대한 보직 인사를 하면서, 노조에 가입한 부장들에 대해 보직을 박탈하고 좌천시키는 인사를 냈죠?

> MBC는 6월 26일 오후 늦게 인사를 냈다. **이번 인사에서 보직자 2명을 평사원으로 전보조치했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노조 가입자**들이다. 박장호 문화레저부장은 '보도국'으로, 최장원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은 '심의국'으로 전보됐다. **다른 보직자들과 달리 이들에게는 보직을 주지 않았다**.

- 그렇다면 "눈에 거슬리는 이들은 차례차례 해고해나갔다"거나 "제1노조 소속으로 활동하던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면 징계나 발령부서 조정

등으로 취재부서로부터 배제시켰다”는 권PD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입사3년차에 불과한 예능PD가 자사의 세월호 보도를 두고 반성하는 글을 썼기로소니 ‘정직6개월’이라는 ‘해고’ 다음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까?

3) 세월호 보도 노사간 논의조차 거부하는 MBC

- 안광한 사장님, 혹시 노동조합과 MBC 세월호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한 번도 없죠?
- 노조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회사측에 ‘공정방송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죠?
- 그 이유가 현재 MBC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무단협’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맞나요?
- “단체협약이 없어 개최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면서요?
- 지금 회사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 가장 문제삼는 내용인 ‘공정방송위원회’라는데 맞습니까?
- 정리하자면, 공정방송위원회를 빼라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세월호 보도를 논의할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자니깐,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그런거죠?
- 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 왜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거부합니까?
- 지난 5월 20일에는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가 긴급 안건으로 ‘세월호 보도’ 문제를 논의하자니깐, 이번엔 “미리 협의된 안건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요?
- 노조와 머리 맞대고 문제점 살펴보고, 대책 마련하고...그랬으면 이렇게 국정조사까지 받지 않았을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회가 나서야 합니까?
- 사장님, 2012년 최장기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5월 27일 노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죠?
-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당시 파업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불법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법원과 배심원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 “회사가 여러 가지 편파보도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기 공정방송협의회는 물론 임시 공방협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의 문제제기가 논의될 통로가 차단됐다. 그래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는 노조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잖아요.
- 물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죠?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으시죠?
- 그래서 지금도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또 노조를 파업하게 만들겁니까? 2012년 파업의 후폭풍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거 같은데, MBC를 어디까지 침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5. 문제유발자, 박상후 전국부장

1) 5월 7일 유가족 폄훼 리포트

- 박상후 부장님, 지난 5월 7일 직접 <‘함께 생각해봅시다’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라는 리포트를 한 적이 있죠?
- 그 보도에서 고 이광욱 잠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 이라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 이라고 주장했죠?
-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 고도 보도했어요. 무슨 뜻이죠?

박상후 전국부장의 5월 7일 <‘함께 생각해봅시다’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 리포트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인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참고자료 7-6

◀ 언딘 관계자 ▶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 그러니 안된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다 그렇게 나가고...우리한테 '인원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 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에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 박규생/고 박주현씨 아버지 ▶
"부산외국어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고 정차웅군의 유족들은 장례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가장 싼 수의와 관으로 장례를 치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고에서 초동대처 미흡은 물론이고 대책본부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의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 저나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는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라고 떠밀어 이광욱 잠수사가 사망했다' 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맞습니까?
- 박 부장은 본인이 이런 리포트를 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 원고 쓸 때 "진도 현지 상황이 몹시 살벌하니 기사 톤을 조절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면서요?
- "진도에 나가 있는 후배들이 행여 유가족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모두 수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면서요?
- 만에 하나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박상후 부장은 이 리포트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6월 4일 사내게시판에 쓴 글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던 5월 7일 진도에 파견나가 있던 경쟁사 친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용기있는 기사를 쓴다면서...자네가 무슨 기사 쓰는지 기자들 사이에는 소문 다 났어'. 이 친구는 방송이 나간 직후 '누군가 언젠가는 지적해야 했을 내용을 잘 보도했어' '아주 잘 했고 그런 리포트 할 수 있다는 게 부럽네'라고도 했다"**고 씀

- 박 부장께서 이 리포트를 하기 전 친구가 전화를 해서 "오늘 용기있는 기사를 쓴다며?" 라고 묻고 리포트 나간 직후에는 "누군가 지적해야 했을 내용을 잘 보도했다" 고 격려했다면서요?
- 본인도 "용기있는 기사" 라고 생각하고, "잘한 보도" 라고 생각하죠?
-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적절한 보도이고, 자식과 가족을 잃고 비통에 빠져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노란 리본을 달고 실종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MBC의 보도간부라는 분이 그런 가족들을 두고 "조급증에 걸렸다" 니, "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니 폄훼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자료 7-6

- 박 부장, 지금 이광욱 잠수사의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 박 부장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길래 '조급증' 운운합니까?
-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안 밝혀졌고, 이광욱 잠수사의 가족들은 도리어 해경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박 부장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길래,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이광욱 잠수사 사망원인 관련 5.8 JTBC 보도

해경은 민간 잠수요원인 고 이광욱 씨가 산소마스크를 벗고 탈출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때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선이 다른 줄과 얽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선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주입하는 장비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사 A : 콤프레서가 멈추면 공기 주입이 안 돼요. 콤프레서가 멈출 수도 있는 거죠. 뜻하지 않게.]

다른 잠수요원도 공급선 이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민간 잠수사 B : 확실하게 웬만큼 꼬여서는 (공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진짜 뚝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공기가 나온다. 꼬여도 나오게 돼 있다.]

장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간 잠수사 C : 점검이라는 게 얼굴에 쓰고 호흡 한 번 해보고 이런 게 점검이다.]

또 해경은 이 씨가 산업 잠수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무리하게 잠수 인력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부장의 리포트는, ① 숨진 잠수사는 사고 전날 처음 팽목항에 왔고, 사고 당일 아침 첫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는 사실 ② 사고 당시 잠수사들에 대한 의료 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했고 바지선에 전문 의료진도 없었으며, 사망 사고 직후에야 대책본부가 뒤늦게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사실 ③ 보도 시점 당시 잠수사의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왜곡보도로 비판받고 있음.

- 박 부장은 기본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 매우 큰 불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불만과 편견이 표출된 게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2) 단원고 교감, 학부모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 박 부장, 5월 7일 리포트가 사내에서 논란이 되자 5월 11일 사내게시판에 쓴 글에서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교감이 목숨을 끊기 전날 학부모 앞에서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것도 생각해보자"고 주장했죠?

> 박상후 부장은 5월 11일 사내게시판에 쓴 글
>
> 잠수사 이광욱씨도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실종자 가족들이 이 잠수사를 조문했다는 보도는 아쉽게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에 앞서 단원고 교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감이 목숨을 끈기 전날 단원고 교사들은 학부모 앞에 꿇어 앉은 채 왜 너희들은 무슨 낯으로 살아 있느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교감의 자살과 이 상황을 어떻게 직접 연관시키냐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제 리포트가 나간 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 보도가 팩트 위조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거겠지요.

- 한마디로 "학부모들이 교감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주장이죠?
- 학부모들이 교감께 "무슨 낯으로 살아있느냐?"고 질타한 건 사실입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썼습니까?

> ※박상후 부장 글의 '근거' 자료요구에 대한 MBC의 답변
>
> 세월호 참사 이틀 뒤 단원고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MBC 사내게시판 글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록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내 게시판이기는 하지만, 생살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타들어가는 슬픔이 인솔 책임을 진 단원고 교감과 교사들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됐던 상황을 다시 상기시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 **박상후 부장은 해당 글에 대해 사고 다음날인 17일 저녁 단원고 교감이 학생 가**

참고자료 7-6

<u>족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무릎을 꿇리는 등 모욕을 당했다는 4월 18일자 세계일보 기사 등을 참고해 작성</u>했으며, 당시 상황을 '무슨 낯으로 살아 있느냐'는 질타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MBC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MBC 보도국 간부라는 분이 아무리 사내게시판이라도해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니고, 대다수 언론도 아닌 딱 한 곳("교감이 멱살을 잡히고 무릎을 꿇리는 등 모욕을 당했다" 는 내용은 4월 18일자 세계일보에만 보도된 내용임)에 보도된 내용을 확대 과장해서 마치 '학부모들이 교감을 죽음으로 내몬 것' 처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불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 이광욱 잠수사가 죽은 것도, 단원고 교감이 자살한 것도 모두 유가족들 때문이라는 게 박 부장의 생각 아닙니까?

3) 유족 폄훼 망언 및 국민성 모독

- 이뿐만이 아닙니다.
- 5월 8일 KBS 보도본부장 등이 안산분향소 갔다가 유가족들에게 냉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그런 놈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 박 부장의 리포트, 그리고 사내게시판에 쓴 글 등 평소의 행적을 보면 얼마든지 유가족들에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 그리고 박 부장의 5월 7일 리포트는 유가족들만 폄훼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 해당 리포트에서,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 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 고 보도했죠?
- 자식들의 참담한 죽음에 분노하며 '제발 빨리 구해달라' 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은 모욕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모습에는 감동해서 치켜세웠네요?

- 박 부장, 쓰촨 대지진이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동일본대지진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세월호 침몰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 비교하기도 힘든 사례를 놓고 우리 국민성을 비하했는데, 박 부장, 세월호 참사 직후 지금까지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던가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과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던가요?

4) 박상후 리포트 비판 기자 징계

- 그야말로 '보도참사'나 다름없는 리포트를 해놓고, 후배 기자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된 곳도 아닌 동기들 카톡방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사적 대화를 캡쳐한 그림을 사내게시판에 그대로 올려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회사원 아닌 해사원"이라고 비난하고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로 고소할 거라고 했죠?
- 본인은 전국민이 보는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에서 유가족과 온 국민을 모욕해놓고, 후배기자가 사적공간에서 본인의 말도 안되는 리포트를 비판한 것은 두고볼 수 없었나보죠?
- 카톡글이 공개된 이후 그 기자는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죠? 중징계인데, 박 부장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 안광한 사장님, 그럼 대체 유가족과 국민들을 모욕한 박 부장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징계하시겠습니까?

5) 일베 심취한 박상후

- 박상후 부장님, 일베 아시죠?
- 평소 일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베에 온갖 패륜글들이 올라 온 거 아세요?
-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 넘쳐났어요. 이로 인해 구속된 일베 유저도 있고, 방통심의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10여건에 이릅니다.
- 그런데, 이 일베에 올라오는 글 중에 박 부장의 리포트나 글과 논리가 비슷한 글도 적지 않아요. 바로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일베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사 이광욱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가족들이 총리에게 물세례를

하고, 청와대로 가려고 했던 것을 두고 거세게 비난하는 글들도 수두룩합니다.

- 우연의 일치입니까? 평소 일베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심취해있었던 거 아닙니까?
- 증거가 있습니다!
- 박 부장님, 작년 11월12일 보도국 게시판에 '구룡마을 배경정보' 라는 문서파일을 올린 적이 있죠?
- 이 문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줬으며 시장의 권력을 남용한 비리사건'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 그런데 이 문서와 내용은 물론 토씨까지 똑같은 글이 일베에 11월 2일 게시된 적이 있습니다.
- 박 부장이 첨부한 문서는 이 일베 글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맞죠?
-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일베에 올라온 글이 10일 뒤 박 부장이 쓴 글에 올라갑니까?
- 그것만이 아닙니다.
- 지난 3월 29일 사내 게시판에 '다함께 생각해봅시다' 라는 글을 올렸죠?
- 화면에 나오는 글입니다. MBC 노조위원장 옆에 서 있는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의 사진에 붉은색 박스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석운 대표가 겸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강령을 소개하며 일부 문장에 역시 붉은색 박스를 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MBC노조에게 "한국진보연대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 무슨 의도로 올린 글이죠? MBC노조가 한국진보연대에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글이죠?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의 강령을 들어 노조에 대해 색깔공세를 하기 위해 쓴 글이죠?
- 그런데 박 부장님, 공교롭게도 박 부장이 쓴 글에 등장하는 빨간색이 박스처리된 똑같은 이미지가, 이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일베에 게시되었습니다.



- 비슷한 사진이 아니라 똑같은 사진입니다. 일베에서 퍼온 사진 맞죠? 아니면 어디서 났습니까? 박 부장이 직접 만들었습니까?
- 사회적으로 편지풍파를 불러일으키고 극심한 논란을 야기한 일베에, 공영방송 MBC의 보도국 간부가 이렇게 심취해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이런 간부가 일베의 주장을 사내게시판에다 옮기는 것을 넘어 방송보도에까지 옮기고 있으니, MBC에 망조가 들어도 제대로 든 것 같습니다.
- 안광한 사장님, 보도국의 부장을 넘어 MBC 자체가 일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거 아시죠?
- 작년 12월 18일 MBC ‘기분좋은 날’에서 유명 화가 밥 로스를 다루면서, 일베가 밥 로스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밥 로스’라면서 소개한 적 있죠?
- MBC에서 ‘모르고 한 일’이라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박상후 부장처럼 일베에 심취한 간부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수’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온갖 문제를 일으킨 박상후 부장께서 최근에 부장대우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면서요?
- 안광한 사장님, MBC는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일베에 심취하면 잘했다고 승진시켜주는 곳입니까?
- 이러니 어떻게 MBC의 보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자료 7-6

6. 김홍경씨 인터뷰 누락 및 KBS의 자료제출 거부 등

1) MBC 김홍경씨 인터뷰 '해경비판' 누락

- 이진숙 보도본부장, 세월호 생존자 김홍경씨 아시죠?
- 이분, 세월호 침몰 와중에 커튼과 소방호스를 연결해 학생들을 구한 분입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순간순간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 MBC도 4월 17일에 이 분 인터뷰를 보도했어요. 맞죠?
- 이 분이 촬영한 영상을 소개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이들이었지만, 더 많은 학생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히려 고개를 떨궜다"며 미담에 가깝게 보도했지요?
- 그런데 이 분이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해양경찰청 해양구조대가 너무나 어설프게 대응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는 말을 하며, "사고 직후 저를 인터뷰하러 온 방송사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말씀이 "어찌 된 일인지 이 말만 편집해버리더군요. 제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고 당시의 영상만 가져갔어요"라는 거에요.
- 그래서 제가 MBC에 김홍경씨 인터뷰한 영상을 자료요구해서 확인해봤습니다.
- 보니깐 김홍경씨가 "3-40분 사이 좀더 구조대들이 민첩하게 배에 진입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했으면, 내부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구조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텐데 급하다보니 밖에 있는 사람들만 구하고 더 중요한 배에 투입이 안된게 더 안타깝다"고 말씀했더라구요.
- 특히 영상을 찍은 이유 중 하나가 "구조를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라고도 말했습니다.
- 국장님, 김홍경씨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해경의 구조가 미흡했다, "밖에 있는 사람만 구하고 더 중요한 배에 투입이 안되어 더 안타깝다"고 한 부분...정말 중요한 지적 아닙니까?
-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경의 구조활동을 비판한 내용은 보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나요?
- 4월 17일이면 정말 침몰 직후인데...그때라도 해경의 잘못을 적극 지적하고, 여론을 환기시켰다면 해경이 구조 수색활동을 그렇게 건성건성,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지 않습니까?
- 긴박한 순간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을 구한 분의 미담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의

미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수백명이 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을까...' 를 밝히는 게 언론의 본분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2) KBS, 김홍경씨 인터뷰 동영상 제출 거부

- 류현순 부사장님, KBS에서도 4월 17일 김홍경씨가 촬영한 영상을 소개하고 인터뷰한 보도를 했어요.
-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해당 인터뷰 촬영 동영상은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방송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다", "KBS 원본영상은 회사 자산으로 외부 유출이 불가하다" 는 이유입니다.
- 부사장님, 국정조사가 우습게 보입니까? MBC도 제출한 영상을 KBS는 왜 제출안합니까?
- 인터뷰 영상이 'kbs 회사 자산' 이라고요? 그게 국회법, 국정조사법, 증감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할 소리입니까?
- 도대체 이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우리 재산인데 못주겠다' 는 거죠?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신거죠? 위원장님, 류 부사장을 비롯한 KBS 관계자들을 증감법에 따라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지금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KBS, MBC와 인터뷰한 생존자께서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KBS가 그 발언을 누락시킨건지, 누락시켰다면 왜 그랬는지 밝혀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주겠다' 고요?
- 이건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KBS의 자료제출 거부-법인카드내역/운행일지 관련

- 국조법, 증감법을 걸레짝 취급하는 KBS의 막무가내 자료제출거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 국민의 수신료로 임원들 연봉주고, 업무추진비로 쓰고, 차량운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달라니깐, "업무추진비 내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와 관

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사의 보도, 및 광고 등 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 고 거부했습니다.

-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달라는데, '경영상/영업상 비밀' 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른 공기업에도 있나요?
- 차량운행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차량 이용내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서 제출이 곤란한다" 고 거부했습니다.
- 류 부사장, 이번 국정조사가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 이는 명백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KBS의 자료제출 거부-백운기 관련

- 류현순 부사장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한 후 5월 12일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을 새 보도국장으로 임명했죠?
- 그런데, 백 국장이 바로 전날인 5월 11일 일요일 오후에 회사차를 타고 청와대를 갔다 온 사실이 드러난 거 아시죠?
- 회사차를 타고 갔다면 업무차 갔을텐데...무슨 일로 갔고, 누굴 만났나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회신

○ 길환영 KBS 사장의 차량 운행일지 및 백운기 KBS 보도국장 배차기록부

⇒ 길환영 사장의 차량 운행일지와 백운기 보도국장의 업무차량 이용내역(배차기록부)은 KBS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당사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백운기 국장이 5월 11일 관용차를 이용하여 만난사람, 영수증 등

⇒ KBS 임직원의 각종 업무활동에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상세히 공개할 수 없으며, 백운기 국장은 최근 과도한 업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연락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 사실이 밝혀진 직후 KBS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누굴 만났는지 제출하라고...그랬더니 KBS에서 “KBS 임직원의 각종 업무활동에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상세히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콧대가 높을대로 높은 KBS니깐 그러려니 했는데, 국정조사 답변은 더 어처구니없이 왔어요.
- 백 국장이 5월 1일 이후 청와대 소속 관계자와 만난 내역을 달라니깐, **“공식문서로 남아있지 않아 개인의 기록이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당사자는 개인활동에 관한 것으로 밝힐 수 없다는 의사를 제출했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부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 KBS 간부가 회사차를 타고 청와대를 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개인활동에 관한 것”이라 밝힐 수가 없다고요? 지금 국회를,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를 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 국회의원을 농락해도 유분수지, 처음에는 “회사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이제와서는 “개인활동이라 밝힐 수 없다”고요?
- 위원장님, KBS의 이 같은 작태는 명백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 부사장, 제가 이미 취재를 통해 백 국장이 5월 11일 오후 KBS차를 타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냐고요.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지금 위증을 하면 고발당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부사장이 백 국장이 누굴 만났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백 국장이 누굴 만났습니까?
- KBS 보도국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에 면접보고 충성서약을 하기 위해 간 거 맞지요?
- 부사장님, 내일이면 보도국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일요일 오후에 급하게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거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 만약 KBS 답변대로 백 국장이 개인활동으로 갔는데, 회사차를 이용한 거라면 KBS의 복무규정 등 규정을 위반한 거죠? 휴일 개인활동에 회사차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위반이 되고,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 제 질의 전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6

7. KBS 보도개입 관련

1) 길환영 사장 해임 등

- 류현순 부사장님, 지금 사장대행 중이죠? 왜죠?
- 길환영 사장이 이사회에서 해임제청되고 대통령이 해임해서죠?
- 왜 해임됐죠?

> 이사회는 야당 이사들이 **▲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지난달 제출한 길 사장 해임제청안에서 진통 끝에 첫번째 사유를 삭제**해 표결에 부쳤다.

-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등인데...먼저, 이 같은 사유는 KBS 이사회가 KBS의 이번 세월호 보도가 '부실한 재난보도'였음을 인정한 거죠? 집행기관으로서 받아들입니까?
- KBS의 부실한 세월호 보도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길 전 사장이 왜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까?
-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월호 유족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청와대와 길 사장이 KBS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KBS 대다수 직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죠?
- 자 여기서, 청와대와 길 사장이 KBS 보도에 개입해 온 것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 혹시 류 부사장도 청와대측으로부터 KBS 보도 등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하지마시고, 진실만을 말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런데 길 전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았죠?
- 모르십니까? 길환영 사장 본인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부사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 <길환영 전 사장이 5월 19일 KBS 기자총회에서 한 발언>
>
> "사장은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납니다. 상당히 고급 정보..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것이 우리 보도나 제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석상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식사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 중요한 의견이 있다고 전달하는 겁니다"

- 지난 5월 19일 KBS 기자총회에서 길환영 전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굉장히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난다. 상당히 고급정보..그런 대화를 나눈다. 그런 것이 보도나 제작에 필요하다 판단될 때 제가 전달한다”
- 청와대 이정현 수석 등이 길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김 전 국장의 폭로에 대한 길 사장의 답변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에 청와대 관계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 그런데, 길 사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들은 말을 보도나 제작과 관련해 ‘전달’했다했습니다. 그러며 그게 ‘지시가 아니고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류 부사장, 사장이 보도나 제작에 대해 밑에 간부나 기자, PD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게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지시’로 받아들여집니까?
- 류 부사장도 기자 출신이니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2) ‘해경비판 말라’ 지시/개입 관련

- 그런데 이 같은 길 사장의 발언은 이미 익숙한 궤변입니다.
- 류 부사장, 지난 5월 21일 국회 세월호 관련 현안질의에서 정홍원 총리가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KBS에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주고 사기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거 아시죠?
- 즉 이정현 전 수석이 KBS에 ‘해경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맞죠?
- 김시곤 국장은 이에 대해,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으나, 잘 안되자, 다른 쪽, 즉 사장을 통해 전달됐다’는 취지로 폭로했지요?
- 총리도 이런 전화가 ‘지시’나 ‘개입’이 아니라 ‘요청’이라고 했는데, 류 부사장...청와대에서 수석이 전화해서 이런 얘길하면 방송사에서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지시’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 그런 전화가 청와대에서 오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런 전화받아서 보도국장에게 전달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류 부사장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류 부사장, 지금 KBS 새사장 공모에 지원해서 6배수에 들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KBS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까?)

- 그리고 실제, 그 지시가 실행됐잖아요!
- 5월 5일 9시뉴스의 <이슈&뉴스-해상구조 시스템 재정비 시급> 리포트, 김시곤 국

장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죠?

- '그날 이례적으로 사장이 보도본부장실에 보도국장 등을 불러서 해경 비판하지 말라' 고 지시했다고 했죠? 그 자리에 김시곤 보도국장과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 이준안 취재주간, 이현주 편집주간이 사장과 함께 있었다는데, 하필 그 분들이 전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네요. 정말 유감입니다.(혹시 배석하신 분들 중에 이준안 주간이나 이현주 주간 있습니까?)
- 그 자리에서 길환영 전 사장이 "해경비판 말라" 고 지시했고, 이날 9시뉴스에 예정됐던 해경 비판성 리포트 원고가 싹 뜯어고쳐지잖아요.
-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의 실력, 즉 해난구조 능력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는 내용은 "창설 61년, 우리 해경은 왜 해난구조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까?" 정도로 바뀌었지요?
- 원래 원고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우왕좌왕하던 해경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고 접수부터 구조와 수색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 썼는데, 실제로는 "단속과 수사, 경비 분야는 주목받고 강화됐지만, 해난 구조는 소홀한 편이었다" 정도로 바뀝니다.
- "이런 해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안팎의 목소리" 는 "이런 해상안전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 로 바뀌었습니다.
- 류 부사장, 기자 출신이니 말해보세요. 앞에 꺼는 한 마디로 쎄게 조지는 기사인데, 뒤에 기사는 부드럽기 그지없습니다. 맞죠?
- 이세강 보도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진수 국제주간 맞죠?
- 부사장,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이정현 수석이 전화한 것도, 사장이 보도책임자들 불러모아 이야기한 것도 '지시' 나 '개입' 이 아니라 '요청' 이고 '의견제시' 입니까?

3) 지속적으로 이뤄진 청와대와 사장의 보도개입

- 좋습니다. 청와대의 전화가 이번 세월호참사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구조작업에 전념 중인 해경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최대한 양보해 '협조요청' 이라 합시다.
- 그런데, 이례적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이었잖아요.
- 김시곤 국장은 몇 번이나 이정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

서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사장으로 라인을 바꿔서 지시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개입한 사례를 더 볼까요?
- 5월 3일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9시뉴스에서 그걸 '자막'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당장 "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실제 뉴스가 끝난 뒤 자막을 들어냅니다.
-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처님오신날 동정을 9시뉴스 헤드라인 3번째에 넣었더니 "2번째로 올려라"라고 지시했고, 실제 2번째로 올라갔습니다.
- 이런 거까지 사장이 챙기는 게 보도개입 아닙니까?
- 이세강 본부장, 아닙니까?
- 김진수 주간, 아닙니까?
- 더 과거 사례까지 볼까요?
- "대통령 관련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 "국정원 수사 관련 뉴스는 순서를 좀 내리라는 주문이 있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톱으로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 실제로 분석해보니깐, 국정원 댓글 관련 보도는 1년 동안 32건, 그 중에서도 수사와 관련된 것은 19건으로 양 자체가 적었을뿐만 아니라, 뉴스 배치가 실제 뒤에 주로 있었습니다.
- 특히 작년 8월 21일 KBS가 단독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 12개' 리포트는 대통령 보도와는 180도 반대로 중요도에 비해 오히려 9시 20분이 지나 배치됐습니다.
- 윤창중 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건 발생 3일 동안 톱을 차지했던 아이템이, 4일째엔 두 번째로, 5일째엔 4번째로, 그리고 6일째는 9번째, 16일에는 15번째까지 밀립니다. 이 기간 동안 MBC와 SBS에서는 대부분 톱보도였고, 3~4번째에는 보도됐습니다.
- 청와대가 개입한거잖아요?
- 뿐만 아니죠.
-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나가면 몸살을 앓았다"고 했는데, 실제 해외순방때면 KBS 9시뉴스는 '박비어천가'로 넘쳐났습니다.
- 심지어 첫 미국해외순방과 관련해서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망칠대로 망친 순방임에도 KBS는 방미성과를 결산한다며 비슷비슷한 대담프로, 토론프로를 이틀 연속으로 편성하는 등 3편이나 제작합니다.
-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조차 이에 대해 "굉장히 난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러 차례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장이 재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

어요.
- 서재석 본부장, 이 사실 알고 계시죠?

8. 대통령을 '성역' 으로 다룬 KBS

1)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김시곤 국장 폭로 관련

- 이세강 본부장, 김시곤 국장이 KBS뉴스에는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 폭로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 사실이 아니라면 KBS 뉴스 가운데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 대통령은 성역입니까?
- 김시곤 국장은 또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 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까?
- 실제 뉴스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대통령 동정 헤드라인 순서에도 개입

- 김시곤 국장은 "(5월6일) 사장은 예고를 보고...전화가 걸려 옴...헤드라인에서는 나가는지 순서는 몇 번째인지 물음. 헤드라인에는 나가고 큐시트 순서에 따라 3번째라고 보도하자 사장은 2번째로 올리라고 요구"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 실제 뉴스에서는 세월호 관련 뉴스가 죽 나가고 대통령 동정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은 세월호 뉴스보다 대통령 뉴스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편집인가요? 소신껏 대답해보세요.
- 사장이 대통령 뉴스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왜 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이 법요식에 참석해서 어제 사과한 재차 사과한 것이 세월호 관련 뉴스보다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나요?
- 뉴스가치 대로 판단한다면 보도국은 사장 지시에 항의하고 뉴스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 사장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까?

3)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 4.17 1차 팽목항 방문

- 김진수 주간, KBS는 대통령이 팽목항 진도체육관에 방문한 것을 다루면서 마치 유가족들과 대통령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당시 진도체육관은 유가족들의 항의와 정부의 미진한 대답으로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현장 보고를 어떻게 받았나요?
- 당시 현장을 취재한 KBS 기자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 "경사 났어? 박수를 치고 그래!" 편집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의 반응입니다. 우리 뉴스에선 철저히 외면당한 목소리이기도 하죠. 자식을 바다 속에 홀로 둔 부모가 무능한 대처로 일관하는 정부에 할 수 있는 당연한 분노인데도요. 박수, 갈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공무원과 경호원 연단 위의 박 대통령과 땅바닥의 실종자 가족들을 벽처럼 갈라놓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 실제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 그런데 KBS는 보도에서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수 소리도 크게 넣었지요?
- 이런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앞서 현장 기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당한 (?) 지시에 실종자 가족들은 체육관이 떠나갈 듯 큰 박수로 화답하더군요. 오해마세요. 오직 KBS 뉴스9에서만 그랬습니다. 기묘한 편집술 덕에 이들 공무원들의 호응이 마치 가족 반응인 것처럼 둔갑한 게 문제죠. '날조' 입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 주간께서도 '날조' 라고 생각하십니까?

4)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 4월29일 대통령 조문

- 대통령이 4월 29일 안산분향소를 조문했을 당시 취재 원본에는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격앙된 목소리가 있지만 리포트에서는 이 목소리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취재 원본을 보실까요? (타임라인 1분50초 전후)
- 그런데 뉴스에서 대통령 조문은 매우 경건하고 품위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처럼 나옵니다. 현장음을 삭제를 한 건데 이건 정상적인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너무 시끄러워서 기자 리포팅이 들리지 않아서 줄였다' 고 했다던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들리게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왜곡된 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장음 삭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겁니까?

참고자료 7-6

5)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유족 연출 의혹 기사 누락

- 대통령의 조문 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할머니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 뉴스를 KBS는 기사를 썼나요?
- 왜 쓰지 않았나요?
- 경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주위를 계속 맴돈 점, 일반 조문객을 마치 유족처럼 보이게 한 점은 연출 의혹을 가질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 이렇게 의혹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다가 다음 날인 30일 청와대의 해명은 기사 3건을 작성했습니다.

▶4.30 단신 송창언 기자, 청와대 “유가족 위로 장면 연출 사실 아니다”
▶4.30 단신 이석호 기자, 청와대 “조문연출 보도는 모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일”
▶4.30 단신 이석호 기자, 박대통령 위로 할머니 “스스로 조문 간 것”
▶5.2 단신 변진석 기자/ 박대통령 만난 할머니 닮은 여성 “안산 간 적도 없어”

- 의혹은 보도하지 않고 해명만 보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취재기자들이 만약에 발제를 하지 않았다면 데스크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 정몽준 아들 발언 논란 등 의혹은 없고 해명만 있다

- 또 다른 예로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미개하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4월 18일이었는데 KBS는 4월 21일에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정몽준 씨가 사과를 하니까 그제서야 보도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보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물론 그것조차도 보도하지 않은 MBC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정상적인 건 아니죠?
- 오랫동안 취재 현장에 있었을텐데 해명이 없으면 의혹은 보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7) 세월호 관련 대통령 뉴스 - 4월29일 유가족 대책위 기자회견 누락

- 4월 29일 오후 6시 안산에서는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오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9시 뉴스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일선 취재기자들은 이 뉴스를 9시 뉴스에 반영해야 한다고 데스크에 보고를 했는데 묵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희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묵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같은 내용은 9시 뉴스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후 11시 뉴스라인과 아침 뉴스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 하지만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 제목은 **<유가족 대책위 "대통령 사과, 인정 안 한다">**였는데 데스크 과정에서 **<유가족 대책위, "성금은 장학금 기탁">**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사회2부 팀장은 김도엽, 부장은 장한식이다. 보도정보시스템에는 기사 수정은 김도엽 팀장이 한 것으로 돼 있음.

- 실제 기사 내용은 유가족들이 대통령 사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이뤘지만 제목은 부수적인 내용인 장학금 기탁으로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고. 11시 뉴스라인 기사 세월호 침몰 2주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장례나 추모공원도 중요하지만 팽목항의 실종자 아이들을 신경써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권(유가족 대표) :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 체계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대책위는 적극적인 구조 활동과 정확한 진상 규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집단 이기주의로 뭉친 권력층과 선박 관계자들,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 조문도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경근(유가족) :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마디 한 것, 이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자료 7-6

생활 재난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모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병권(유가족 대표) :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하신다면, 투명한 방식으로 한 라인을 구성하여 모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유가족들은 추모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그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에서 눈치를 보는 KBS 보도국의 습성이 잘 드러난 것 아닙니까?
- 또 뉴스라인에 이 리포트가 나갈 때에도 <대통령 사과>는 3번 째 아이템에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이템은 17번 째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편집인가요?
- 대통령이 사과하는 기사가 나가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사가 뒤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대통령의 발언 다음에 그 걸 평가하는 기사를 붙이면 '불경스러운 짓'이 되는 건가요?

4월29일 11시 뉴스라인 순서

1 뉴스라인 헤드라인
2 이 시각 수색 상황은? 류호성 사회
3 분향소 조문…"안전한 나라 만들 것" 송창언 정치
4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국가안전처 신설 이석호 정치
5 유압절단기로 격실 진입…16구 추가 수습 김민철 사회
6 세월호 컨테이너 7㎞ 떠밀려…"시신 유실 우려" 양창희 사회
7 침몰 7분 전 선미·우현서 승객들 대거 구조 박원기 사회
8 해경의 '선원 구조', 구조 체계 무너뜨려 김성한 사회
9 "해경, 문서 제목서 '세월호' 지워라" 김경수 사회
10 이 시각 진도 팽목항 이준석 사회
11 승무원 돌아가며 '선실 대기' 30차례 추정 염기석 사회
12 "선실 대기"만 되풀이, 무슨 이유 있었나? 이슬기 사회
13 조타실도 안내방송 가능…아무도 방송 안했다 손서영 사회
14 이 시각 합동분향소 정다원 사회
15 힘겨운 등교, 그리고 마지막 등교 김영민 사회
16 "수습 승무원 아들 구해주세요"…쪽지에 울음바다 함영구 사회
17 "대통령 사과 받아들일 수 없어" 신지혜 사회

- 다음날 아침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는 대통령 뉴스와 유가족 뉴스에 뜬금없는 날씨 뉴스를 끼워넣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정상적인 건가요?

4월30일 아침 뉴스광장 순서 7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국가안전처 신설 이석호 정치 8 진도 해역 유속 주말부터 느려져 KBS 기상뉴스 9 유가족 대책위 “대통령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지혜 사회

- 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은 다음날 9시 뉴스에서 다시 다뤄졌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사과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지고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만 나갔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 모르신다면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사 - 5월4일 대통령 팽목항 2차 방문

- 대통령이 팽목항을 두 번째 방문한 5월 4일 KBS 9시 뉴스는 이 소식을 톱 뉴스로 두 꼭지를 소화했습니다.
-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두 꼭지로 나눠서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염원으로 아버지가 가슴에 걸고 있는 실종딸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잠수병을 치료하는 감압실 등을 둘러보고, 잠수 요원들이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챙겼습니다.**”
- 이런 멘트는 기사로서 적절한 멘트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이런 기사가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등의 동정을 하는 보도를 하는 양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 5월 4일 KBS 9시 뉴스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이어 수색 현장으로 갔습니다. 바지선에서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가족들을 위로하고, 잠수요원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고자료 7-6

<리포트>
대통령이 바지선에 접근하자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건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나기 위해 이제 믿고 의지해야할 사람은 잠수요원들 뿐.
대통령의 당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 모두 내시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색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바지선에 와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꼭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염원으로 아버지가 가슴에 걸고 있는 실종딸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실종자 가족 한 사람도 유실됨이 없이 찾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께서 끝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할 거니까..."

박 대통령은 잠수병을 치료하는 감압실 등을 둘러보고, 잠수 요원들이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챙겼습니다.
또 수중 탐색은 물론, 실종자들이 먼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습니다.

9) 대통령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이상과 같이 KBS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세월호 참사 중에서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나마 해경 등 정부에 대한비판보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KBS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성역이었습니다.
- 김시곤 국장도 사장의 압력을 폭로를 했고요. 이런 기사들이 공영방송 KBS에서 해야하는 대통령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길환영 해임 이후 달라지지 않는 대통령 기사-6/30 보도 관련

- 자, 그래서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는데...과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 과연 KBS는 달라질까요?
- 길환영 사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대통령을 취급하는 KBS의 용비어천가식 보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대표적으로 6월30일 기사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총리 인선과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고 "인재풀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 그러자 6월30일 KBS 9시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재풀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톱으로 내보냈습니다. MBC와 SBS는 물론 JTBC 등 종편들 조차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톱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총기난사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 본부장님, 톱뉴스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KBS의 편집은 "대통령발언->인사난맥->총기난사->세월호" 순이었습니다. SBS는 "총기난사->인사난맥->대통령발언" 순서였고, 막 나가는 MBC조차 이번에는 "총기난사->대통령발언->세월호"였습니다.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KBS	MBC	SBS
6월30일 메인 뉴스 순서	**1. 박 대통령 "공직 후보 상시 발굴, '인재풀' 만들겠다"** 2. 여 "신상털기식 고쳐야"…야 "인사부터 제대로" 3. "김명수 후보자, 제자에게 칼럼 대필시켜" 주장도 4. 임 병장, 피신 동료에 총격… '없는 사람' 대우 받아 5. [단독] 임 병장 "수색팀 3차례 만났지만 제지 안 해" 6. "총기 난사 사건 때 군 승인 늦어져 119 헬기 출동 지연" 7. 검찰, 진도 VTS '근무 태만·CCTV 영상 삭제' 확인	1. 임 병장 "없는 사람' 취급당해"…탄창 바꿔가며 총격 **2. 박 대통령 "고심 끝에 유임…총기사건, 참으로 송구"** 3. 배드민턴장 건립, 벼 염분 피해 예방…세월호 지원금 줄줄 샜다 4. '오리무중 유병언' 영장 만료 임박…초조한 검찰, 처리 고심 5. 청부살인 서울시의원, 살해동기는?…'청탁' 받았나 6. "김명수 후보자 신문 칼럼도 대필"…"사실과 달라" 7. 與도 "김명수 의혹, 사실이면 감싸지 않겠다"	1. 임 병장 "없는 사람 취급했다"…집단 따돌림 시사 2. 임 병장, 특정인 조준사격 아닌 듯…대응사격 있었다 3. 김명수 후보자, 주식·논문·칼럼 의혹…제자 폭로까지 4. 여당도 싸늘…"김명수 의혹 사실이면 감싸지 않겠다" **5. 박 대통령, 인사난맥 '사과' 대신 '청문회 개선' 요청** 6. 어제 미사일 쏘더니…北 "적대행위 중단하자" 7. 대표팀 씁쓸한 귀국길…홍명보 "거취 고민 중"

참고자료 7-6

- 순수한 뉴스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KBS에서도 9시 뉴스를 제외하고는 12시, 5시, 7시, 뉴스라인, 다음날 아침 뉴스광장 등 모든 주요 뉴스들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을 톱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라디오 주요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9시 뉴스 톱만 대통령 발언이 됐습니까.

뉴스 이름	톱뉴스	대통령 발언 뉴스 순서
(TV) 뉴스12	총기난사	2
(TV) 뉴스5	총기난사	2
(TV) 뉴스7	총기난사	9 (단신 처리)
(TV) 뉴스9	대통령 발언	1
(TV) 뉴스라인 (11시)	총기난사	6
(TV) 뉴스광장 (7월1일아침)	일본 자위권	11
(라디오) 정오종합뉴스(12시)	총기난사	2
(라디오) 뉴스중계탑(14시)	총기난사	3
(라디오) 5시뉴스(17시)	총기난사	다루지 않음
(라디오) 저녁종합뉴스(19시)	총기난사	6 (단신처리)
(라디오) 20시뉴스	청량리역 화재	6 (단신뉴스)
(라디오) 22시뉴스	총기난사	6 (단시뉴스)

- 보도본부장님, 당초에는 총기난사 사건이 톱이었습니다. 맞죠? 저희가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언제 톱 뉴스가 바뀐겁니까?
- 9시뉴스에 근무하는 기자들은 저녁 본부장과 국장 간 회의 이후에 톱 뉴스가 바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 보도본부장은 톱뉴스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다른 모든 뉴스가 총기난사를 톱으로 다루는데 유독 9시 뉴스의 뉴스가치 판단만 '대통령 발언'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번 9시 뉴스 기사 배치는 청와대의 외압입니까 알아서 아부하는 KBS의 습성 때문입니까?
- 6월30일 KBS 9시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 “수색팀 3번 만났지만 무사 통과”…헬기 지연
2. ‘논문 가로채기·표절’에 칼럼 대필 의혹까지
3. 진도 VTS ‘근무 태만·CCTV 삭제’ 확인
4. 북 양궁팀 다음 달 방한…“적대 행위 중단” 제의
5. 대표팀 입국…네덜란드·코스트리카 8강 진출

- 헤드라인은 “총기난사->인사난맥->세월호”로 방송됐는데, 실제 뉴스는 “인사난맥->총기난사->세월호”로 진행됐습니다. 매우 기형적이고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 특히 KBS가 ‘총기난사를 한 임 병장이 수색팀을 3번 만났지만 무사통과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헤드라인에서도 특종답게 톱으로 뽑았어요. 근데 대통령 보도에 밀려버렸습니다.
- 실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KBS 기자는 “대통령 발언이 앞으로 가더라도 논문 표절 의혹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을 가는게 맞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 톱이 되면서 뉴스가 전반적이 이상해졌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시곤 국장의 폭로처럼 KBS 9시 뉴스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장이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30일 뉴스를 보면 뉴스가치와 전혀 다른 괴상한 편집이 됐습니다. 류현순 부사장은 사장을 대신해 대통령 기사를 직접 챙기고 있는 건가요?
-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11) 과도한 대통령 순방 보도

-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꼭지 늘리기 고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사건 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 때 KBS 뉴스는 대통령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 9시뉴스

	k		s	
6월9일	7	(단신)박 대통령,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	21	(단신)박 대통령, 다음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참고자료 7-6

		방		
6월15일	4	(단신)박 대통령, 내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없음
6월16일	맨뒤	(간추린단신)박 대통령, 첫 순방국 우즈벡 도착 외		없음
6월17일	17	한·우즈베크 정상 “가스개발-태양광 등 신규협력” (월드컵뉴스 뒤)	4	한-우즈벡 정상회담…"에너지 협력 강화"
6월18일	15	박 대통령, 유라시아 구상 “함께 실현” 제안		없음
6월19일	6	한-카자흐 정상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확대”	5	한-카자흐 정상회담…"4조 규모 에너지 사업 참여"
6월20일	14	박 대통령, 투르크 방문… “5조 플랜트 수주 지원” (월드컵 뉴스 뒤)	6	한-투르크멘 "5조 규모 경제협력 사업" 합의
6월30일	1	박 대통령 “공직 후보 상시 발굴, ‘인재풀’ 만들겠다”	5	박 대통령, 인사난맥 '사과' 대신 '청문회 개선' 요청
7월1일	6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민생 행보	9	전통시장 찾은 박 대통령…세월호 이후 첫 민생행보

* 아침뉴스

6월16일	4	(리포트) 박 대통령 오늘부터 중앙아 3개국 순방	7	(단신) 박 대통령,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6월17일	2	(리포트) 박 대통령 “유라시아 협력의 새 미래 열 것”	9	(단신) 오늘 오후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6월18일	17	(리포트) 한-우즈벡 정상 “가스개발·태양광 등 신규협력”	마지막	(리포트) 박 대통령, 사마르칸트 방문해 유적지 시찰
6월19일	11	(리포트) 박 대통령, 카자흐 도착…오늘 정상회담	6	(리포트) 박 대통령, 카자흐 도착…오늘 정상회담
6월20일	9	(리포트) 한-카자흐 정상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확대”	6	(단신)한-카자흐 정상회담…45억 달러 신규 사업 추진 합의

6월21일	11	(리포트) 한·투르크 정상회담…박 대통령, 오늘 귀국		없음

- 출국 1주일 전부터 출국할 예정이라고 9시 뉴스에서 말하고, 다음날 출국하면 내일 출국한다고 9시 뉴스에서 말하고,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9시 뉴스에서 도착한다고 말하고... KBS 뉴스가 청와대 방송입니까?
- 대통령이 뉴스가치 높다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메인뉴스에서 방송해야 합니까.
- KBS는 대통령이 출국하기 하루전인 6월 15일부터 도착하는 6월21일까지 7일 동안 아침 저녁 메인뉴스에서 리포트 10개와 단신 2개를 내보냈습니다. SBS의 경우 5개의 리포트를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관련

1) 재난보도 준칙 위반

- KBS, MBC 재난방송 매뉴얼 존재하죠? 선박침몰상황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자연적 재난재해는 상황별로 구체적인 재난방송 매뉴얼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만, 선박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회적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존재조차 하지 않죠?
- 세월호 언론 참사는 재난·재해 취재 경험이 없고, 평소 재난보도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자들이 재난 현장에서 일상적인 보도 경쟁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 MBC본부장님, 세월호 침몰 당일 MBC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은 사망 보험금이 1억 원”이라는 내용을 그래픽까지 사용해가면서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였습니까? 재난상황에서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라는 준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재난관리 기구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사고에 관한 검증된 사실이 중립적·객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의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 재난상황에서 보도과정에서의 팩트 체크를 누가 합니까? 세월호 보도에서 제대로 보고되고, 체크 되었습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못했죠?
- 오히려 24시간 재난방송이 오히려 재난을 낳기만 했음. 갑자기 늘어난 편성 시간

을 채우려다 보니 취재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속보 위주의 보도는 물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 되기만 했습니다.

- 또한, 재난방송에는 과거 자료화면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 자료화면을 사용 할 경우 반드시 화면 설명자막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KBS와 MBC는 사건 초기 과거 화면 사용을 남발 했으며, KBS는 '자료화면' 표시를 1초 정도 짧게 했고, MBC는 아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 '세월호 방송 참사' 방통위 뭘 했나?

- 4월 16일 방통위가 방송사들에게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대비 재난방송 강화 요청> 공문 보내셨죠? 이 공문 몇 시에 보내셨죠? 오후 4시 35분에야 방송사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제목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사고 대비 재난방송 강화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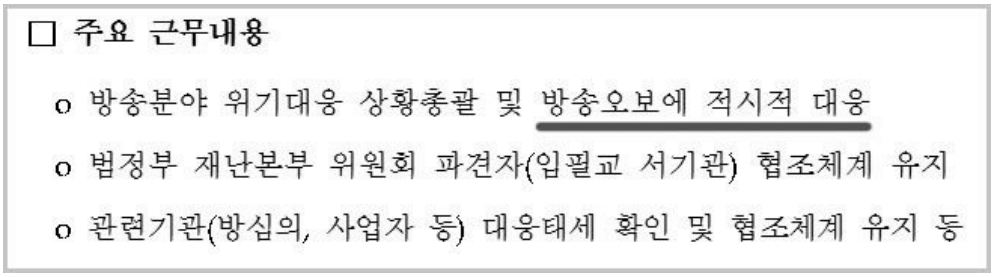
1. 관련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3. 2014년 4월 16일 08시58분 현재 진도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방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난방송 준칙, 사생활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재난관련 국민행동요령, 응급상황 협조요청 등 재난복구 방송에도 힘써 주시고,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통위가 4월 16일 16시35분에 방송사에 발송한 공문

- 이미 지상파를 포함한 대다수 방송들이 특보체제를 가동하고 있을 때 왜 뒷북 치셨습니까? 보내나마나 아무런 소용없는 공문을 보냈네요.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정방송 자제 등 협조 요청> 두 번째 공문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 방송들의 무분별한 보도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통위는 또 다시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요청만 내놨습니다.
- 방통위에서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하셨죠? 언제 구성되었죠? 이것도 세월호가 침몰한지 6일이 지나서야 운영됐습니다. 재난상황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중 '주요 근무내용'

- 주요 근무내용으로 '방송오보에 적시적 대응'을 명시했고, 이를 위해 방통위 파견자를 통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의 협조체계와 방심위 및 방송사들과의 협조체계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상황반' 제대로 운영됐습니까?
- 방통위는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각종 오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재난방송 고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거의 세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 재난 상황반 운영계획 초안을 만들면서 '방송사 조정통제' 문구를 넣어 방송통제 의혹만 불러 일으켜 논란만 키웠습니다.
- 지난 5월 21일 '세월호 긴급 현안질의'때 최성준 방통위원장께 "오보 경위를 파악했냐?"고 물으니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학생전원구조" 오보의 진상과 경위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파악하셨습니까?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방통위가 적시에 제대로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보도로 방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을 관할하는 방통위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유 경제원 현안 해부_004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황 근 |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Ⅰ. '세월호 참사보도' 유감

첫째, 20대 경제대국이자, 디지털 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에서 왜 이런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일까?

둘째, 매번 사건발생 때마다 정부가 약속했던 예방대책들은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정부의 재난대처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무능력하구나!

셋째, 매번 똑같은 사건도 문제지만, 언론보도행태도 그대로구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때보다는 조금 차분해진 것 같은데, 보도내용은 여전히 그대로네! 제대로 된 정보도 알려주지 못하고, 언론이 더 흥분하는 것 같아.

넷째, 이번 재난보도는 모두가 합심해서 재난에 대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간에 갈등만 더 조장하는 것 같아? 역시 정치권은 이 사건을 놓고도 쌈질만 하고 있네.

다섯째, 이렇게 문제와 의혹이 많았는데, 정부와 언론은 왜 평소 이런 문제들을 모르고 있었을까? 혹시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세월호 침몰' 재난보도 비교 >

	삼풍백화점 붕괴(1995)	세월호 침몰(2014)
재해보도 보다 정부나 관계기관에 대한 비판보도 주류	삼풍 백화점 사주, 경영진 도덕성 비판, 여론재판	세모그룹, 유병언 비리 권력과 해운업계 유착비리 구원파 보도
<재해대책본부>의 부실한 대응	<재해대책본부> 사고1주일 후 구성, 구청관계자 수뢰혐의 연루 실종자 집계 하루 만에 2배 증가	<사고대책본부> 우왕좌왕 정부의 대책미흡 비판, 해피아 논란 실종자, 탑승자 숫자 오락가락
검찰, 경찰 의존형 발표저널리즘	언론사의 분석적 보도 미흡	사망자/실종자 숫자만 반복보도 구조작업 등 대책기관 발표에만 의존
무분별한 취재경쟁	포토라인 무시, 마구잡이 사진촬영, 내시경 카메라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선정적 보도	희생자를 유족들 오열장면 클로즈업 남자친구 누구? 무엇 제일 먹고 싶은가?	구조학생에게 친구사망 질문 흥가헤 사건
갈등 조장	-	무분별한 SNS 소재 난발 시사 비평식 보도로 정치쟁점화 정부/유족들간 갈등 심화 다이빙 벨 등 구조방법 갈등 혼선 조장

2. 재난보도 현황과 문제점

1) 재난과 재난보도

0 재난이란?

"특정지점, 특정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지역사회 혹은 일부분이 심각하게 인명,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그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건"

0 재난보도란?

"특정한 시점에 발생되어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인재 또는 자연적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활동"

2) 재난보도의 특징

0 일반보도와 재난보도의 차이

- 일반 보도의 news value와 차이
- '사실성/접근성/흥미성' 보다 '전문성/정확성/계몽성'
- 사회적 갈등보다 사회적 통합 지향
- 재난보도는 '관찰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

0 재난보도의 목적

- 재난 발생사실과 피해의 전달
- 재난 피해의 최소화
- 재난 복구 지원
- 재난 예방 및 대책 모색

참고자료 7-7

3) 우리나라 재난보도 현황

0 선정주의적 보도(sensationalism, yellow journalism)

- 헤드라인, 자극적인 장면, 자극적 발언
- 재난대처에서 공동체 의식 조성 저해
- 사고의 근본원인이나 재난구호 본질 회피
- 의혹 제기성 보도

0 단발성 소나기성 보도

- 현장에서 법석을 떠는 그렇지만 가치 있는 정보 절대 결핍
- 하루 종일 특집 재난방송을 하지만 실제 의미 있는 정보들은 많지 않음
- 원인이나 대책 같은 문제보다 피해상황이나 피해현장 스케치성 보도
- 단순한 스트레이트 뉴스 위주 방송
- '소방차 저널리즘' : 전파낭비 비판
- 눈에 보이는 것은 입맛대로 골라서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자원동원식 보도' '쓰레기통 저널리즘'

0 공식발표에 의존하는 '발표 저널리즘'

- 전문기자제도의 부재
  "우리 방송에서 전문기자는 기상 캐스터 정도"
- 순환근무 제도
  "재난은 항상 재발하지만 취재기자에게는 항상 낯선 새로운 사건"
- 정부/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press release에 의존
  정부/공공기관과 언론사간 공생, 유착
- 언론의 환경감시, 권력견제 기능 소멸
  '세월호 참사 - 선박해양 분야 구조적 비리 - 유병언/사이비종교 문제'

"언론의 환경감시(surveilance)기능이 평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비극적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0 감성적이고 주관적 재난보도

-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않는 보도
- 감정에 매몰된 보도
-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
- SNS의 주관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소재 이용
- '마녀 사냥식' 갈등적 책임공방 유도
  선장선원 -> 선박회사 -> 해피아,관피아 -> 세모,구원파 -> 정부, 대통령
- 격앙된 사회 분위기 형성
- 사회적 갈등 조장
- 정치쟁점화

0 재난 단계별로 적합하지 못한 보도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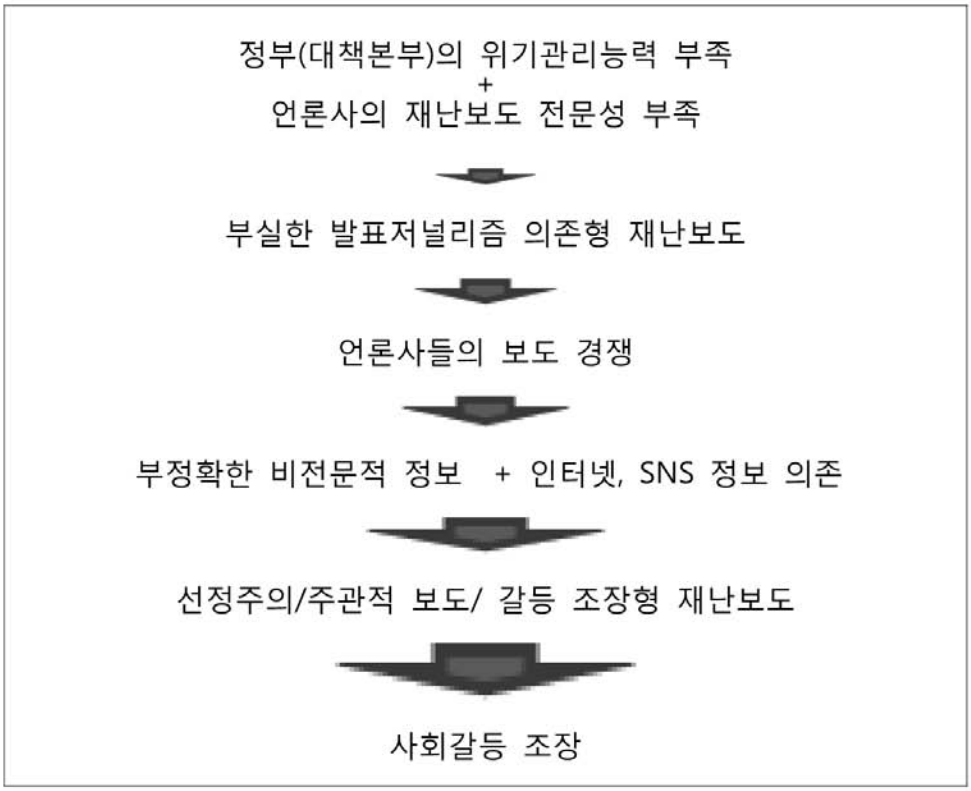
- 재난 발생단계 : 재해정보, 정확성, 신속성
- 응급대응단계 : 안부/생환 구조 중심 보도
- 수습단계 : 복구정보, 제도적 대처방안,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 점검
- 사건초기 부터 사건정보부터 문제점, 원인, 대안, 책임공방 같은 여러 보도들이 혼재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과 사회적 갈등 유발

0 재난보도 기자들의 자질 부족

- 전문성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자질 문제
- 과거와 같은 초상권 침해, 피해자 마구잡이 보도 등
  노골적인 보도폐해는 줄어들었지만, 보도태도는 여전히 의문
- SBS기자의 실실 웃는 장면
  KBS보도국장의 실언
  MBC 전국부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
- 재난보도는 '제3자적 방관자' 혹은 '구경꾼'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同病相憐'의 자세 필요

참고자료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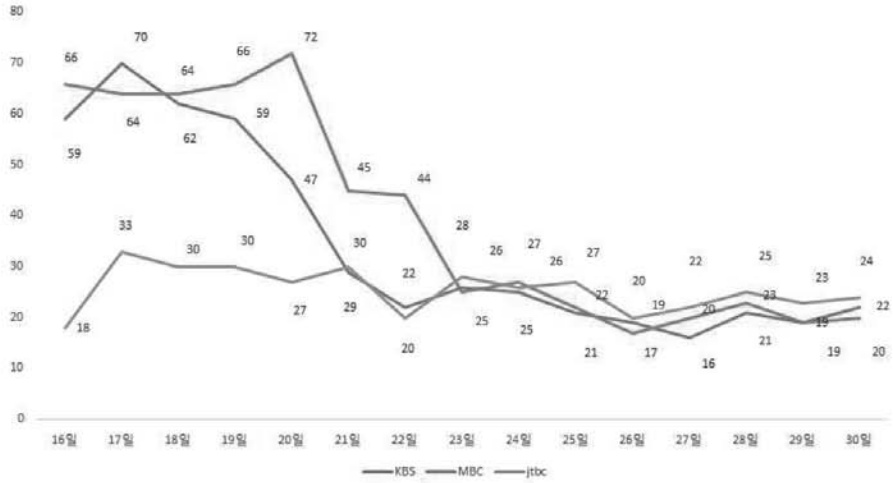
0 우리나라 재난보도 문제점



3. '세월호' 참사보도 실태

1) 주요 방송사의 '세월호 참사보도' 추이

- 초기 5일간 집중적으로 보도(4월 16일 - 20일)
- 재난발생 일주일 이후 보도 격감
- 사건초기에 KBS/MBC 보도 집중(특히 MBC)



2) 재난보도 내용

- 전체적으로 '기타 가십성' 기사와 '구조활동'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음.
- '기타 가십성 기사'는 세모나 구원파 등을 다룬 기사지만, 침몰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가십성 기사와 조문행렬/국민반응 같은 분위기관련 기사들로서 사건본질과 동떨어진 흥미성 보도들로 볼 수 있음.
- 방송사별로는 KBS와 jtbc가 가십성기사가 많았고, MBC는 구조활동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나마 KBS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음.

		방송사			Total
		KBS	MBC	jtbc	
재해정보	N	13	56	42	111
	%	2.5%	9.4%	11.0%	7.4%
피해상황	N	58	19	30	107
	%	11.2%	3.2%	7.8%	7.2%
재난피해자 보도	N	9	75	31	115
	%	1.7%	12.6%	8.1%	7.7%
구조활동	N	103	185	62	350
	%	19.9%	31.1%	16.2%	23.4%
원인	N	119	88	31	238
	%	23.0%	14.8%	8.1%	15.9%
검찰/경찰 수사 관련	N	15	47	48	110
	%	2.9%	7.9%	12.5%	7.4%
보상대책	N	4	0	0	4
	%	0.8%	0.0%	0.0%	0.3%
정책마련	N	10	14	6	30
	%	1.9%	2.4%	1.6%	2.0%
재난으로 인한 현상	N	4	36	18	58
	%	0.8%	6.1%	4.7%	3.9%
기타 가십 등	N	182	74	115	371
	%	35.2%	12.5%	30.0%	24.8%
Total	N	517	594	383	1494
	%	100.0	100.0	100.0	100.0

3) 재난보도의 주요 정보원

- 방송보도의 주요 정보원은 '중앙정부 혹은 구조관련기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정 정보원에 의존하지 않고 '취재기자' 기획보도가 많았음. 특히 KBS가 그 같은 성향이 매우 높았음.
- 방송사별로는 KBS가 '취재기자 단독보도'가 가장 많았고, jtbc는 '전문가'를 정보원으로 많이 인용함
- KBS,MBC는 피해자를 인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jtbc는 '피해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매우 적었고, 지상파방송사들이 거의 인용하지 않은 '일반평론가'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많았음.
- 이는 jtbc의 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접근해, 갈등적 보도프레임에 더욱 가까웠다고 추측할 수 있음.
- 또한 jtbc가 해외언론보도나 해외자료들을 인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방송사			Total
		KBS	MBC	jtbc	
중앙정부	N	155	163	116	444
	%	29.9%	29.1%	30.3%	29.8%
지방정부	N	4	1	3	8
	%	0.8%	0.2%	0.8%	0.5%
정치인	N	0	7	16	23
	%	0.0%	1.2%	4.2%	1.5%
시민	N	16	53	1	70
	%	3.1%	8.9%	0.3%	4.7%
피해자	N	67	81	20	168
	%	13.0%	13.6%	5.2%	11.2%
시민단체	N	3	0	2	5
	%	0.6%	0.0%	0.5%	0.3%
일반평론가	N	0	5	35	40
	%	0.0%	0.8%	9.1%	2.7%
전문가	N	64	85	91	240
	%	12.4%	14.3%	23.8%	16.1%
기자 취재	N	163	57	10	230
	%	31.5%	9.6%	2.6%	15.4%
SNS	N	1	29	21	51
	%	0.2%	4.9%	5.5%	3.4%
자료인용	N	8	60	12	80
	%	1.5%	10.1%	3.1%	5.4%
해외 언론 해외자료	N	9	8	56	73
	%	1.7%	1.3%	14.6%	4.9%
기타 가십 등	N	27	35	0	62
	%	5.2%	5.9%	0.0%	4.1%
Total	N	517	594	383	1494
	%	100.0%	100.0%	100.0%	100.0%

3) 재난보도 형태

- 보도내용별 전달방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보도형태였지만, '재난 피해자 보도'와 '기타 가십성 보도'들은 '묘사적' 전달방식이 많았음. 사고원인과 관련된 기사도 '묘사적' 형태기사가 많은 편임.
- 그 동안 재난보도와 관련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추론적' 기사는 6.0%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사고원인과 관련된 기사는 여전히 '추론적 기사'가 1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묘사적 기사'나 '추론적 기사'가 많다는 것은 보도의 정확성이나 객관적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함

		보도전달방식				Total
		객관적	해설적	추론적	묘사적	
재해정보	N	69	13	7	22	111
	%	62.2%	11.7%	6.3%	19.8%	100%
피해상황	N	68	11	5	23	107
	%	63.6%	10.3%	4.7%	21.5%	100%
재난피해자 보도	N	51	8	3	53	115
	%	44.3%	7.0%	2.6%	46.1%	100%
구조활동	N	251	23	14	62	350
	%	71.7%	6.6%	3.9%	17.7%	100%
원인	N	96	24	29	89	238
	%	40.3%	10.1%	12.2%	37.4%	100%
검찰/경찰 수사 관련	N	74	10	4	22	110
	%	67.3%	9.1%	3.6%	20.0%	100%
보상대책	N	4	0	0	0	4
	%	100%	0.0%	0.0%	0.0%	100%
정책마련	N	19	5	1	5	30
	%	63.3%	16.7%	3.3%	16.7%	100%
재난으로 인한 현상	N	40	5	4	9	58
	%	69.0%	8.6%	6.9%	15.5%	100%
기타 가십 등	N	160	27	23	161	371
	%	43.2%	7.3%	6.2%	43.4%	100%
total	N	832	126	90	446	1494
	%	56.7%	8.4%	6.0%	29.9%	100.0%

4) '세월호 침몰' 보도 프레임 분석

0 보도내용별 프레임 비교

- 전체적으로 '피해/대응 프레임' 기사가40.8%로 절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책임귀인프레임' 기사가 많았음.
- 보도내용별로 보면, '피해상황' '구조활동' '재해정보' 등의 기사는 '피해/대응정보프레임'이 많음.
- 그렇지만 '재난피해자보도(56.5%)' '기타 가십(36.1%)' '재난으로 인한 영향(29.3%)' 등은 '인간적 흥미프레임'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로
- 이번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관련 보도들이 '인간적 흥미프레임' 형태로 선정적이고 감성적인 기사가 많았다는 것으로 보여줌.
- 한편 '사고원인'이나 '검찰/경찰 수사' 관련 보도들은 '책임귀인 프레임'이 가장 많았지만, 검찰/경찰수사 관련보도들은 '갈등프레임' 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프레임						Total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위험 프레임	피해 대응 프레임	
재해정보	N	16	27	10	0	3	55	111
	%	14.4%	24.3%	9.0%	0.0%	2.7%	49.5%	100%
피해상황	N	9	9	13	1	1	74	107
	%	8.4%	8.4%	12.1%	0.9%	0.9%	69.2%	7.2%
재난피해자 보도	N	9	1	65	0	0	40	115
	%	7.8%	0.9%	56.5%	0.0%	0.0%	34.8%	7.7%
구조활동	N	57	9	23	1	2	258	350
	%	16.3%	2.6%	6.6%	0.3%	0.6%	73.7%	100%
원인	N	29	158	2	1	1	47	238
	%	8.3%	66.4%	0.8%	0.4%	0.4%	19.7%	100%
검찰/경찰 수사 관련	N	33	41	20	0	0	16	110
	%	30.0%	37.3%	18.2%	0.0%	0.0%	14.5%	100%
보상대책	N	0	0	2	0	0	2	4
	%	0.0%	0.0%	50.0%	0.0%	0.0%	50.0%	100%
정책마련	N	4	4	0	0	7	15	30
	%	13.3%	13.3%	0.0%	0.0%	23.3%	50.0%	100%
재난으로 인한 영향	N	9	9	17	6	2	15	58
	%	15.5%	15.5%	29.3%	10.3%	3.4%	25.9%	100%
기타 가십 등	N	42	83	134	3	21	88	371
	%	11.3%	22.3%	36.1%	0.8%	5.7%	23.7%	100%
Total	N	208	341	286	12	37	610	1494
	%	13.9%	22.8%	19.1%	0.8%	2.5%	40.8%	100.0 %

0 방송사별 보도프레임 분석

- 전체적으로 '피해/대응 프레임' 기사가 가장 많았음.
- 방송사별로 보면, MBC가 '피해/대응 프레임' 기사가 많았던 반면, KBS와 jtbc는 '책임귀인 프레임'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음. 이는 이번 재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한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재난주관방송사인 공영방송 KBS의 보도태도를 찾아 볼 수 있음. 무엇보다 다른 방송사들보다 KBS가 '인간적 흥미 프레임' 기사를 많이 내보낸 것은 문제점
- MBC, jtbc 와 달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 프레임' 보도가 적었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화된 보도행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방송사			Total
		KBS	MBC	jtbc	
갈등 프레임	N	50	108	50	208
	%	9.7%	18.2%	13.1%	13.9%
책임귀인프레임	N	146	80	115	341
	%	28.2%	13.5%	30.0%	22.8%
인간적 흥미 프레임	N	128	88	70	286
	%	24.8%	14.8%	18.3%	19.1%
경제적 결과 프레임	N	6	6	0	12
	%	1.2%	1.0%	0.0%	0.8%
위험 프레임	N	21	11	5	37
	%	4.1%	1.9%	1.3%	2.5%
피해/대응 정보 프레임	N	166	301	143	610
	%	32.1%	50.7%	37.3%	40.8%
Total	N	517	594	383	1494
	%	100.0%	100.0%	100.0%	100.0%

0 보도프레임과 형식비교

- 전체적으로 이성적 보도태도와 감성적 보도태도가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음. 프레임유형별로 보면, 극명하게 갈림. '갈등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위험프레임' 기사들은 감성적이었던 반면 다른 유형의 프레임들은 이성적 보도양상을 보임
- '인간적 흥미프레임' 기사들이 '묘사적 형태'로 주로 전달되고 있음.

참고자료 7-7

		프레임						Total
		갈등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위협 프레임	피해/대응정보 프레임	
이성적	N	74	198	110	8	18	389	797
	%	35.6%	58.1%	38.5%	66.7%	48.6%	63.8%	53.3%
감성적	N	134	143	176	4	19	221	697
	%	64.4%	41.9%	61.5%	33.3%	51.4%	36.2%	46.7%
Total	N	208	341	286	12	37	610	14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레임						Total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위협 프레임	피해/대응 정보 프레임	
객관적	N	85	161	102	6	19	459	832
	%	40.9%	47.2%	35.7%	50.0%	51.4%	75.2%	55.7%
해설적	N	26	43	16	1	4	36	126
	%	12.5%	12.6%	5.6%	8.3%	10.8%	5.9%	8.4%
추론적	N	15	33	13	0	1	28	90
	%	7.2%	9.7%	4.5%	0.0%	2.7%	4.6%	6.0%
묘사적	N	82	104	155	5	13	87	446
	%	39.4%	30.5%	54.2%	41.7%	35.1%	14.3%	29.9%
Total	N	208	341	286	12	37	610	14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보도프레임과 정보원

- 인용된 정보원 종류와 보도프레임간에 비교적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음. 중앙정부, 일반평론가, 전문가, 자료인용 기사들은 '피해대응보프레임'이 가장 많음.
- 특히 갈등프레임은 정치인, 일반평론가를 정보원을 사용하는 뉴스에서 많음.
- 책임귀인프레임은 시민단체, SNS, 정치인, 중앙정부를 정보원으로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음. 특히 시민단체들은 주로 책임소재를 따지는 뉴스의 주 정보원으로 사용됨.
- 시민들을 정보원으로 하는 기사들을 주로 '인간적 흥미 프레임' 기사들이었음.

5) '세월호 참사보도' 종합분석

0 소방차/소나기 저널리즘 행태 재연

- 초기 5일간 집중적으로 보도/ 7일차부터 정상화.

0 여전히 인간적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

- 객관적 보도 많이 늘고 추측성 보도 많이 줄었지만,
-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피해상황, 가십성보도 등은 인간적 흥미 프레임 여전

		정보원													Total
		행정부	지방정부	정치인	시민	피해자	시민단체	일반 평론가	전문가	기자 취재	취재	자료 인용	희의원 등 희의자료	기타	
정쟁 프레임	N	65	1	7	8	23	0	9	36	24	5	10	5	15	208
	%	14.6%	12.5%	30.4%	11.4%	13.7%	.0%	22.5%	15.0%	10.4%	9.8%	12.5%	6.8%	24.2%	13.9%
책임귀임 프레임	N	110	3	6	5	16	4	7	60	62	17	17	12	22	341
	%	24.8%	37.5%	26.1%	7.1%	9.5%	80.0%	17.5%	25.0%	27.0%	33.3%	21.3%	16.4%	35.5%	22.8%
인간적 흥미 프레임	N	43	0	7	37	82	0	2	16	57	10	6	24	2	286
	%	9.7%	.0%	30.4%	52.9%	48.8%	.0%	5.0%	6.7%	24.8%	19.6%	7.5%	32.9%	3.2%	19.1%
객관적 중립 프레임	N	0	1	0	1	2	0	0	0	5	0	0	1	2	12
	%	.0%	12.5%	.0%	1.4%	1.2%	.0%	.0%	.0%	2.2%	.0%	.0%	1.4%	3.2%	.8%
위험 프레임	N	5	0	0	1	2	0	2	9	4	0	6	5	3	37
	%	1.1%	.0%	.0%	1.4%	1.2%	.0%	5.0%	3.8%	1.7%	.0%	7.5%	6.8%	4.8%	2.5%
피해/대응 프레임	N	221	3	3	18	43	1	20	119	78	19	41	26	18	610
	%	49.8%	37.5%	13.0%	25.7%	25.6%	20.0%	50.0%	49.6%	33.9%	37.3%	51.3%	35.6%	29.0%	40.8%
Total	N	444	8	23	70	168	5	40	240	230	51	80	73	62	149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책임공방, 원인규명, 구조활동 등과 관련해서 갈등적 뉴스들이 많아,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적 통합기능 저해

- 특히 정치인, 일반 평론가, 시민단체 등을 정보원으로 하는 기사에서 두드러짐

0 재난주관방송인 공영방송 KBS의 차별화되지 않은 재난방송

- 타 방송사보다 인간적 흥미 보도가 더 많음.
- 다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는 자제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서 종합편성채널의 책임공방, 구조활동, 수사 등과 관련해 갈등지향적 보도는 문제점으로 보임. 특히 재난과 무관한 정치인, 평론가 등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

4. 재난보도 준칙과 문제점

1) 유명무실한 재난보도 준칙

0 모든 기존 연구들이 '재난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강조

재난보도 준칙이나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공영방송 KBS는 '재난주관방송'으로 방송법에 규정
- 기자협회 (2003)
- KBS 재난보도 준칙(2010)
- KBS 재난보도 매뉴얼(2011) 등

0 KBS의 재난보도 준칙

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한다.
② 방재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방재와 대응, 복구, 질서회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한다.
③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보도한다.
④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정보를 방송하는데 주력한다. 단순한 현장상황 전달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데 우선 노력한다.
⑤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표현을 자제하며,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⑥ 재난보도는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선정적인 보도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취재보도는 지양한다.
⑦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의 통계발표는 관련기관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식발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취재결과를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방송 시에는 자체집계 결과임을 밝힌다.
⑧ 재난방송에는 과거 자료화면 사용은 지양한다. 부득이 자료화면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화면 설명 자막을 내보낸다.

0 문제점

-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
- 실제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가 의문
  "매뉴얼 내용 반대로만 하는 것 아닌가?"
- 평소 숙지도 안 되어 있고, 훈련도 해 본적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준칙내용과 숙지가 관건

5. 재난보도 개선 방안

1) 구체적인 재난보도 매뉴얼과 활용

- 매뉴얼의 구체성 제고
- 매뉴얼과 준칙에 대한 평소 숙지 및 훈련
- 이전 재난사례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접근
-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나 준칙대로만 해도 재난보도의 질 크게 개선 가능

< 일본의 재난보도 매뉴얼>

참고자료 7-7

각국의 보도준칙	유목에 대한 내용		
일본	보도 매뉴얼	언어	보도목표는 재난피해 최소화 앵커나 기자는 우심코라도 '크다(大)', '심하다(激)', '매십다(烈)'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써선 안 된다. 지진은 '상당한 진동' '강한 지진' 정도의 표현까지만 '통곡', '초토화', '암흑천지' 같은 자극적 표현도 안 된다. '○○것 같다'는 불확실한 표현, '전멸(全滅)' 같은 과장된 표현 금지 '재해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 '붕괴된 건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소유주가 있다.' '심하다, 매십다, ~같다, 내가 느끼는 진도는 엷마다' 같은 주관적 표현 금지 '강한 지진이란 표현까지는 용인된다.'
		영상	말을 조용조용하게 한다. 시무적이다. 울부짖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망자의 유족을 인터뷰하지 않는다. 유족들이 애통해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 피해실태와 정부의 구조작전은 상세하게 보도. 정부의 조치나 발표를 충실 전달 정부의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평이나 남 탓을 하는 보도 금지 차분한 진행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분위기를 만든다
		자막	사망자 통계를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래픽	하단 스크롤을 통해 차분하게 고지하도록 한다
	취재매뉴얼	취재태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도 태도	피해자의 취재는 재해의 비참함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행정이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안전장치	취재와 방송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취재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취재시 인사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피해자 사진 찍을 땐 허락 공중전화는 피해자용, 휴대전화 사용 방송 앵커와 기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보도하라.
	취재시스템 매뉴얼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재난보도 요령을 몸에 익히기 위해 매일 밤 NHK 뉴스센터에선 가상 재난보도 훈련 실시 NHK 도쿄 본사의 재난보도 책임자들은 비상 시 오도록 회사로부터 반경 5㎞ 안에 거주 지진 발생 2분 안에 기상청 1보가 방송국에 도착하고, 10초 안에 재난방송 시작 진도 5 이상일 경우 방송 원고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장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상청 긴급정보는 방송용 대본이 돼 프롬프터에 뜬다.

2) 취재 전문성 제고

- 재난관련 전문기자 육성
- 재난전문 취재팀 상설화
- 재난관련 전문가 그룹 풀 확보
- 발표저널리즘에서 탈피

"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팀은 없고, 구성원칙은 외국 재난 사건의 경우 국제부에서 차출하는 형식이죠. 국내사건은 사회부에서 주로 차출해요. 미혼자위주로 연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단독적으로 취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현장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자를 선발합니다."(홍은희, 언론사 조직문화와 재난보도 취재관행, 2012)

3) 경쟁적인 취재 경쟁 지양

- 속보성 보다 정확성 준수
- 선정적 보도 경쟁 자제
- 언론사들의 시청률 경쟁을 위한 소재발굴경쟁 자제

"거기 홍수 났다는데 아무데나 그림 찍어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쏘아라"
"K본부 갔니? K본부 들어갔대요. 방송국은 못 들어 갔는데….
무조건 들어가 "뭐 이런 식이니까요"(홍은희, 언론사 조직문화와 재난보도 취재관행, 2012)

4) 정보원과 취재정보 선택의 신중성

- 속보경쟁보다 정확한 정보 확보 우선
-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한 원인분석, 대안보도
- SNS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 보도 신중
-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정보원이나 정보 지양

5)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적 통합

- 재난과 같은 위기(risk)시에 언론보도 역할 매우 중요
- 초기 재난대응단계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갈등적 보도 자제
- 재난보도의 정치/사회화 쟁점화 자제
-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보도 지양

6. 맺음말

0 재난보도는 '위험(crisis) 커뮤니케이션'

"위험사회(crisis society)에 대응하는 것은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문제"

참고자료 7-7

0 바람직한 위기관리 방향

- 정부의 효율적 재난대응 + 제대로 된 재난보도
- 정부의 효율적 위기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적 태도
- 위기관리의 한 주체로서 언론사와 언론인의 책무 인식

0 시스템이나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 즉, '언론인'의 문제

- 책임의식이 결여된 언론인
-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
-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하는 정치인
-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political citizen'

* 위 현안해부는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재난기 언론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의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발제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10] 민실위보고서0521

민실위보고서 [특별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 행 인 : 이 성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전화 : 789-3883~6 팩스 :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 www.mbcunion.or.kr

2014년 5월 21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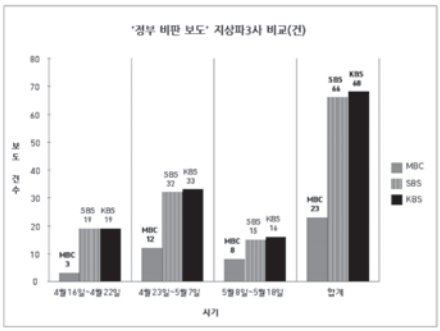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한 달' 자성과 사과 없는 MBC뉴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지난 14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과,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등에도 나오듯,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해경의 부실 대응과 무능은 공인(公認)된 팩트(fact)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어땠을까요? 민실위는 세월호 참사 한 달, MBC 뉴스데스크를 살펴봤습니다.

KBS 68건 : SBS 66건 : MBC 23건

세월호 참사 보도 한 달동안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 비판 보도(재난 대응 체계, 해경 초동 대처 문제 등)를 대폭 축소했다. 주요 일간지 뿐 아니라 KBS와 SBS 등 지상파 경쟁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KBS 68건 / SBS 66건 / MBC 23건)** 물론 해경 '자동 경보 시스템' 경보 등 의미 있는 단독 취재 보도도 여러 차례 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래 그래프 참고]**

특히 초기(참사 발생 1주일)에는 정부의 부실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적은 고사하고, 타사가 일제히 보도했던 해경 비판 기사도 찾기 힘들었다. 시기별로 구분해 추적해 봐도 이 경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프] 지상파 3사 '정부 비판 보도' 시기별 집계 및 합계

세월호 참사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해경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아이템, 기사 문장 등이 데스킹 과정에서 종종 묵살되거나 삭제됐다"며 "예를 들어 4월 23일,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는 '해경 간부의 막말 파문'을 아이템으로 발제했지만, 담당 데스크는 '대단한 것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MBC뉴스에 빠진 이 아이템은 그날 타사 메인뉴스에만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 비판 보도가 축소되는 와중에, 지난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참사사의 죽음을 실종자 가족 · 희생자 유족의 조급증과 연관시키는 '세월호 유족 모욕/폄훼 보도'가 방송됐다. 이밖에도 타사가 다 보도하는 주요 공통 스트레이트가 MBC뉴스에만 누락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MBC보다 정부 비판 보도를 훨씬 많이 한 KBS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청와대 보도 외압 및 지침 논란'에 휩싸여있다.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청와대 측의 외압을, 여러 루트로 받았다" 는 등의 폭로를 했기 때문이다. KBS 길환영 사장이 19일 이 폭로를 부인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 김시곤 전 국장은 "세월호 비판 보도의 경우 MBC는 KBS 보도의 절반도 안됐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상파 3사 '세월호 보도' 추적

1. 1차 시기 (4월 16일 ~ 4월 22일) : MBC '정부 비판 보도' 대폭 축소

리포트 내용	MBC	SBS	KBS
정부 재난 대응체계 결함, 정부 위기 관리 능력 문제, 각종 난맥상 지적 · 비판	1건	13건	13건
해경 등 구조기관 초동 대처 비판, 관련 의혹 취재	2건	6건	6건
합계	3건	19건	19건

[표1] 4월 16일 ~ 22일 지상파 3사 메인뉴스 비교.

※ 이 시기 MBC에서는 :

① 4월 16일 참사 당일 오전 "세월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다" "중앙정부 초기 집계가 잘못됐다"는 목포MBC 기자들의 네 차례 보고와 문제제기가 전달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속보 경쟁 속에서 중앙 정부 집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 때 MBC는 구조자 집계 관련 대형 오보를 면하거나 단독 보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② 4월 21일 '정몽준 의원 사죄 기자회견' '안전행정부 기념 촬영 국장 파문' 등 고위 공직자 관련 논란 보도가 잇따라 누락됐다.

③ MBC의 정부 비판 보도 분량이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는 상대적으로 앞섰다.

[참고] 이 시기 지상파 3사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

	MBC	SBS	KBS
(16일) 박 대통령 "구조에 최선"	1꼭지	1꼭지	1꼭지
(17일) 박 대통령 사고 현장 방문	2꼭지	1꼭지	1꼭지
(21일) 靑 수석 비서관 회의 "지위 막론 엄벌"	2꼭지	1꼭지	1꼭지

☞ 2면에 계속

참고자료 7-8

민실위보고서

2014년 5월 21일(수) < 2 >

☞ 1면기사 이어짐

2. 2차 시기 (4월 23일 ~ 5월 7일)
'정부 비판 보도' 축소 / 유족 폄훼 · 모욕 보도(5월 7일) 논란

리포트 내용	MBC	SBS	KBS
정부 재난 대응체계 결함, 정부 위기 관리 능력 문제, 각종 난맥상 지적 · 비판	1건	13건	10건
해경 등 구조기관 초동 대처 비판, 관련 의혹 취재 (수사상황 포함)	11건	19건	23건
합계	12건	32건	33건

[표2] 4월 23일 ~ 5월 7일 지상파 3사 메인뉴스 비교

※ 이 시기 MBC에서는 :

① 5월 7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유족 폄훼 모욕 보도' 논란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까지 적극 동참한 국상(國喪)"이었다. 부실 대응 논란 속에서 실종자 시신이 모두 수습되기 전까지는, 사태가 냉정하게 정리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였다.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근거도 박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7일 문제의 '유족 폄훼 모욕 보도 논란'이 발생했다.

"해경이 초동 대처와 구조 작업단계 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 재난 재응 체계도 부실했다"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도는 간과한 채,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식의, 상처와 모욕을 주는 리포트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 -
[함께 생각해봅시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 앵커 ▶
세월호 참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더해,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이번 사고에 녹아있을 텐데요.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 언딘 관계자 ▶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 그러니 안된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다 그렇게 나가고...우리한테 '인원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때 논란을 일으켰던 장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 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에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초기 일부 실종자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늠 수 없는 슬픔을 '혼네'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 박규생/고 박주현씨 아버지 ▶
"부산외국어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고 정차웅군의 유족들은 장례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가장 싼 수의와 관으로 장례를 치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고에서 초동대처 미흡은 물론이고 대책본부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의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 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전국부장은 이 기사에 대해 "격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MBC 보도가 팩트(fact) 위주로 시원했다는 찬사도 많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대한 팩트를 외면한 기사였다. (1) 숭진 잠수사는 사고 전날 처음 팽목항에 왔고, 사고 당일 아침 첫 수색작업에 투입됐다는 사실 (2) 사고 당시 잠수사 의료 · 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했고, 바지선에 전문 의료진도 없었고, 범정부 대책본부가 사고 직후 뒤늦게 신변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사실 (3) 당시 잠수사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하다못해 잠수사가 실종자 가족 등의 조급증과 압박에 시달렸는지 여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의 팩트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고, 그 조급증에 떠밀려 잠수사가 숨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고 왜곡했다.

기사에 인용된 외국 사례도 부적절했다.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인 세월호 참사를, 자연재해(自然災害)인 중국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에 비교하면서,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는 식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 행진을 외쳤던 유족들에 비해, 중국과 일본 재해 당사자들은 더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기사의 결론이었다. 이 기사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 대표 측은 "어차피 MBC뉴스 아무도 안보고 있지만, 뒤늦게 기사를 발견하고 심한 모욕감과 상처를 받았다"며 "유가족은 물론 국민 시청자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 독재자에 비유하는 등 한국 비난이나 혐한(嫌韓) 글을 수백 여 개 올린 일본 네티즌의 댓글 ("19세기에 개발된 다이빙 벨을 21세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 하나만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 벨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반화하기도 했다.

☞ 3면에 계속

☞ 2면기사 이어짐

② 타사의 '톱' 뉴스, MBC에는 빠져

1) 지난 5월 1일 SBS, KBS는 나란히 "세월호 선사 측이 침몰 중에 적재량 축소 조작부터 했다"는 수사 결과 스트레이트를 '톱 뉴스'로 올렸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에는 '톱 뉴스'는 물론 그 다음 뉴스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아래 사진 참조]**

사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는 <적재량 축소 조작> 기사가 애초부터 빠져있었다. 당일 오후 대검찰청 측 '기자 백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었지만, 검찰 취재 기자와 당일 뉴스 리포트 기자, 관련 부서 데스크 간에 제대로 내용 공유가 안 됐고, 그 결과 아무도 발제하지 않았음. MBC만 '물먹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5월 1일 <SBS 8뉴스> 톱 뉴스 5월 1일 <KBS 뉴스 9> 톱 뉴스



5월 1일 <MBC 뉴스데스크> 톱 뉴스

•SBS와 KBS가 보도한 <적재량 축소 조작>은 이날 MBC뉴스데스크에선 찾아볼 수 없었음

2) 유사한 사고는 이밖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SBS와 KBS 모두 공히 4월21일 주요 뉴스로 <기관사들 '전용통로'로 탈출>을 보도했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이 기사를 놓쳤고, 하루 지나서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민실위 확인 결과, 이 역시 검찰 브리핑 직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이었다.
현장 기자들은 "평목항 등 사고 현장, 진도 실내체육관, 합동수사본부, 대검찰청, 해경, 인천지검 등 취재처가 분산된 상황에서, 한동안 MBC 보도국에는 취재 내용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으며, 하루 종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3) 이런 와중에 MBC 현장 기자들이 발제했다가 보류('킬')된 아이템이 'KBS의 특종'으로 바뀌는 사태도 발생했다. 4월 27일, <KBS 뉴스 9>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일 선원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별도로 확보하고도 11일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경이 이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하자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 모두 이 내용을 '톱 뉴스'로 다뤘다. KBS는 "KBS의 공개 촉구 이후, 해경이 뒤늦게 공개했지만 편집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세월호 사고 현장의 목포 MBC기자들이 KBS 보도 이틀 전인 25일 이미 발제했던 아이템이었다. 서울 전국부의 판단으로 보류됐으며, 결국 25일 목포 지역 로컬 뉴스에만 방송됐다.

(3) 3차 시기 (5월 8일 ~ 5월 18일)
-'정부 비판 보도' 계속 축소
-'세월호 한 달' 부실 보도 (5월 15일)
-추모집회 축소 보도 (5월 10일)

※ 이 시기 MBC에서는 :

① 정부 비판 보도 계속 '축소'

5월7일 '세월호 유족 폄훼 모욕보도'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는 타사 지상파 뉴스에 비해 여전히 정부 비판 보도를 축소했다. 물론,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해경 비판 보도 비중은 늘어났으나, 타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표3 참고]**

리포트 내용	MBC	SBS	KBS
정부 재난 대응체계 결함, 정부 위기 관리 능력 문제, 각종 난맥상 지적 · 비판	2건	6건	4건
해경 등 구조기관 초동 대처 비판, 관련 의혹 취재 (수사상황 포함)	6건	9건	12건
합계	8건	15건	16건

[표3] 5월 8일 ~ 5월 18일 지상파 3사 메인뉴스 비교

② '세월호 한 달' 부실 보도 (5월 15일)



5월15일 <KBS 뉴스9> 5월15일 <SBS 8뉴스>

1) 5월 15일 KBS와 SBS는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아 대대적인 특집 뉴스 편성을 했다. KBS는 23꼭지, SBS는 19꼭지를 세월호 관련 보도에 할애했다. 유가족 영상편지, 실종자 가족들이 바라는 점, 정부 재난 대응체계와 컨트롤 타워 문제, 세월호 관련 자사 보도 비판, 수사상황 스트레이트 등 내용도 다양했다. 반면 MBC는 이날 10꼭지를 방송했는데 이 중 4꼭지는 유병언 전 회장과 구원파 관련 보도, 3꼭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 수사 속보, 1꼭지는 스승의 날 표정 등이었다.

2) 특히 KBS는 이날 메인뉴스에서 그동안 자사의 보도 행태에 대해 2꼭지에 걸쳐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당시,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한 육성 하소연은 뉴스에서 빼고 박수소리만 강조했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보도한 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가족 기자회견은 다루지 않았다> <유가족이 제기한 구조작업 검증도 하지 못했다> <길환영 사장 관련 폭로를 제때 뉴스에 내지 않았다> 등의 비판과 반성을 그대로 보도했다.
SBS도 유가족 대표와 앵커와의 대담을 5분 넘게 별도로 구성해, 사고 당일 첫날 구조인력과 구조자 숫자와 관련된 자사의 오보와 무비판 보도에 대해 지적하는 꼭지를 방송했다.

③ MBC는 어땠을까

KBS와 SBS 등 지상파는 물론, 중앙일보 등 보수지까지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아 일제히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낸 다음날, MBC 보도국 일선에서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부와 언론 등의 문제점을 조명해보는 기사를 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도국은 당초 앵커와 언론학자의 대담 아이템을 준비했다가, 다시 부장급 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 리포트로 아이템 성격을 변경해 방송했다. **[다음 면 박스 기사 참고]**

☞ 4면에 계속

민실위보고서 2014년 5월 21일(수) < 4 >

☞ 3면기사 이어짐

5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
[함께 생각해봅시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우리 사회의 의미"

◀ 앵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476명의 탑승객 중 284명이 숨지고 20명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지난 한 달 간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의미는 무엇인지, 김소영 사회2부장이 생각해봤습니다.

◀ 리포트 ▶

한 달 전 우리 국민은 '무기력하다'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3백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을 2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것은 충격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나 먼저 살자고 자식같은 학생들을 내팽겨쳤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는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은, 선진국 문턱에서, 내실을 키우지 못했던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총리가 책임을 지며 사임하겠다 밝히고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유족들을 만났지만 이 세상에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슬픔이 존재하는 법입니다</u>.

그리고, 그 깊은 슬픔을 국민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분노.

희생자 사망에는 무관심한 청해진해운을 향한 분노.

<u>그리고 속보 경쟁에 몰두한 언론을 향한 분노가 그렇습니다</u>.

◀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현재 종편이라던지 보도전문 채널이 생기면서 보도를 다루는 TV 채널들이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에는 거의 모든 채널들이 오보를 내고 그 다음에 속보 경쟁을 하면서.."

<u>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불행한 사람에 대해 깊은 주의를 갖고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힘에 인간다움의 자격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u>.

<u>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u>.

<u>"유족들의 불만 그 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제기가 됐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보도가 되지 않음으로써.."</u>

우리에겐, 그리고 우리 사회에겐, 이제 불행과 슬픔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발전적으로 극복하는 마음이 모일 때입니다.
MBC뉴스 김소영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대한 MBC 뉴스의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까?
민실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 <함께 생각해봅시다>가 9일 사이에 일종의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5월 7일 <함께 생각해봅시다>에서는 "유족의 조급증이 결국 장수사 죽음을 야기했다" "외국에 비해 덜 성숙했다"는 등의 유족 비난 보도를 해놓고, 5월 16일 <함께 생각해봅시다>에서는 "유족에게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깊은 주의를 가져야 한다" "유족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불만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모순은 구체적인 '자사 보도 비판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실위원들은 "정부 비판 보도 축소와 유족 폄훼 모욕 보도의 당사자인 MBC가, 자사 보도를 되짚어보는 문장 한 줄 넣지 않은 채, 최근의 KBS 사태 화면을 인용하며 '속보 경쟁에 몰두한 언론 전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비켜가는 기사를 썼다"는 의견을 모았다.

④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MBC 뉴스



[사진1] 5월19일 <SBS 8뉴스> 5월19일 <KBS 뉴스 9>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는 누락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해경 해체 등 파급력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다. 큰 기사였다.
그런데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의 주요 당사자는 누구였을까. 여야 정치권이 아닌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이었다. 그런 만큼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게 기사의 ABC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19일 대통령 담화 직후, 진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경 해체 발표로 실종자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깊이 우려한다"면서 "해경 해체 같은 대책보다 실종자 구조가 우선인 만큼, 마지막 1명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입장까지 발표됐다. 이 역시 기사였다. **[사진1 참조]** 그런데 타사 메인뉴스(심지어 제작거부로 파행 중인 'KBS 뉴스9'까지)에 다 보도된 이 기사가 <MBC 뉴스데스크>에는 아예 빠졌다.



[사진2] 5월 20일 <SBS 8뉴스> (리포트) 5월 20일 <KBS 뉴스9> (리포트)



5월 20일 <MBC뉴스데스크> (단신)

이 문제에 대해 뉴스데스크 편집부 측은 "유가족들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견을 모아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게 20일이었고, 실제 20일 뉴스데스크에 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기자회견마저 두 줄짜리 '단신'으로 처리했다. 반면 SBS와 KBS는 이 기자회견도 메인뉴스 리포트로 처리했다. **[사진2 참조]** 기자 회견 내용은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이 함께 모여 실종자 17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고, 담화문에 실종자 언급과 면담 요구 사항 등이 담겨지지 않은데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민실위원들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바다 속에 있는 마지막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현장성이 큰 기사였고, 대부분의 방송사가 주요 현장 아이템으로 발제를 했다"며 "MBC 현장기자가 리포트 기사까지 송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끝 -

Ⅷ. 가족대책위 문서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교황님

교황님. 저희 가족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바다 속에서 저희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으로서 그들이 안타깝게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우리에게 그 단 하나의 소망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여행에서 돌아오면 들려줄 많은 이야기들을 약속했지만, 다시는 아무런 말도 전할 수 없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미소로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 사랑스러운 웃음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될 만큼 낡은 배를 고쳐 안전한 척 사람들을 태웠고, 그날 밤 다른 배는 떠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세월호만 바다 위로 떠났습니다. 배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선원들은 승객들을 배에 대기시키고 자신들만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승객을 구조해야할 공무원들은 선원들만을 우선적으로 구조했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구조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편법과 정부의 부패한 관행이 겹쳐 이루어진 이 참사 앞에서 힘없는 국민인 우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들이 배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의 가족들은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부패한 현실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가족들마저 안아보지 못한 유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그 어두운 바닷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게 만든 모든 부정부패를 명명백백히 밝혀 유족들의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지나고 120일이 되고 7.30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끝난 지금, 그 약속은 적극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8-1

우리 유족들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 것도,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부정부패의 원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간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이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정부패가 바로잡혀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유가족들을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장하는 이로 몰아세우며, 마타도어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가족이 없는 세상에 힘겹게 눈을 뜹니다. 304명의 삶을 앗아간 지 120일. 저희에겐 영원같이 긴 시간이었던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그토록 가벼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2014년 4월 16일 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가족들의 품에 와서, 가족들의 수 만 번의 키스와 수만 번의 포옹으로 빚어진 삶의 보석들은 다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줄 수도, 교황인 당신 앞에서 웃음을 지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눈물 짓는 우리 유족들만이 당신 앞에 이렇게 서있습니다.

교황님. 당신 앞에 올 수 없었던 수 백명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춥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부정부패와 냉담한 현실 속에서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그 작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2014. 8. 11.

유가족 일동.

보도국장 사표수리 촉구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입니다**.

저희 유가족은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표수리에 대한 약속이 오늘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시곤 보도국장의 즉각적인 사표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표수리는 KBS에서의 완전한 퇴사를 의미하고, 보직변동을 포함한 일체의 자리이동 등은 사표수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표수리에 대한 귀 사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시어 내일(5/13) 자 귀사에서 방송하는 모든 뉴스시간에 사과방송과 함께 보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KBS 사장의 9일 자 유가족 앞에서의 약속은 유가족 및 전 국민에 대한 또다른 기망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김시곤 국장에 대한 파면과 KBS 사장 및 보도본부장에 대한 사태까지 요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귀사의 빠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2014년 5월 12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

참고자료 8-3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신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가족대책위 문의: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 오영중(010-****-****), 부단장 박주민(010-****-****)

제 목 [보도협조요청]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 증거보전신청

날 짜 2014. 8. 7. (총 2쪽)

보 도 자 료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신청 기자회견

일시 · 장소: 8월 7일 (목) 정오, 광화문 광장 농성장 앞

1. 지난 7. 25. 목포지원에서 나타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는 100개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상적인 업무, 즉 보안측정(점검)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과 동시에 진행하였다고 2차례 해명한 바 있습니다.

2.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은 모순되고 일관성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의혹만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2014. 8. 5. 대전지방법원에 해양수산부가 보관중인 세월호 증개축, 출항 관련 인허가 서류, 보안측정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한 자료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작성 및 보관중인 ①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② 2013. 2. 27~28에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문서, 사후 보고문서, ③2013. 3. 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문서, 사후 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④세월호와 관련된 선박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4. 아울러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주VTS’ 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 절차에 관해 최근 해양수산부측 소송수행자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주VTS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10여 개의 해상교통관제센타(VTS)를 운영하고 있는바, 모든 VTS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해경 관할인 진도VTS측은 애초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훼손하였다가 나중에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음)

[첨부]

1. 증거보전신청서
2. 제주VTS 증거보전 답변서

세월호 희생자 · 실종자 ·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한변협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참고자료 8-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세월호 참사 한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고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

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신뢰 재건에 앞장서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 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하여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중간 브리핑(VTS)

진도 및 제주 VTS 증거보전 결과 보고
: 관제도 실패, 사후조치도 실패, 총체적 실패

1. 증거보전 개요

진도 및 제주VTS에 보관 중인 2014. 4. 16. 07:00~12:00 세월호 관련 교신기록, 레이다영상 및 AIS기록, 시스템 로그인 기록(현재까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데이터 이미징으로 획득한 디지털증거를 각 관할 법원에 보관하여 향후 국가배상청구 재판 등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원 수명법관이 당사자 입회하에 각 현장에서 집행하였다.

2. 진도VTS

① 도메인 워치(Domain watch)

진도VTS측(해경) 설명에 의하면, 세월호가 관제영역에 진입할 당시 선박충돌방지 목적으로 설정하는 도메인 워치(Domain watch)를 수동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결국 진도VTS관제사는 세월호가 관제영역에 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

② 관제영역 진입시부터 사고발생시 까지 약2시간 이상 세월호와 교신시도 없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제영역에 들어오자마자 수동으로 도메인 워치(Domain watch)를 설정하였으나 2시간 동안 아무런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8시 50분부터 배의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180도 이상 시계방향으로 급회전하였고, 심지어 북쪽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하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아무런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③ 9시3분경, 진도VTS AIS상 '목포해경'이 세월호를 호출하는 교신내용이 포착

9시3분경, ‘목포해경’이 세월호를 호출하는 교신내용이 진도VTS AIS상 포착(호출음성 크게 들림)됨에도 불구하고, 진도VTS는 세월호를 전혀 호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목포해경이 세월호를 호출하는 것은 목포해경이 세월호의 비상상태를 알고 공용채널로 세월호를 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진도VTS는 침묵했다.

④ 세월호의 운항요약

세월호의 평균 속도 21노트 내외(당시 인근선박인 ‘둘라에이스’는 평균 14노트 내외), 맹골수도 진입이후 19노트 내외, 병풍도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08:45분 이후 급격히 속력감소하면서 08:48분 이후 시계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기 시작하여 불과 몇 분 만에 북쪽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⑤ 선박충돌회피 목적 급변침여부

진도VTS AIS화면상으로는 사고 직전 세월호 주변에 충돌가능한 선박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급변침여부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⑥ 해경구조 선박에 대한 AIS항적 기록 부재

123호 경비정은 AIS 신호가 표시되지 않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구조헬기의 활동은 화면에 나타났다.

⑦ 진도VTS의 소극적 관제대응과 세월호의 무책임한 행동 속출

세월호가 ‘탈출시키면 구조가 가능한지 재차 묻자’ 진도VTS는 세월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결국 선장이 알아서 판단하라’ 취지의 지시만 하였다. 반면, 세월호는 9시 24분에 선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38분 다시 선내 방송하였다고 교신하였다.

3. 제주VTS

① 아주 특별한 첫 교신

세월호의 사고 후 첫 교신은 제주VTS였다. 사고현장이 제주VTS로부터 거의 80킬로 떨어진 곳이라서 안정적인 교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는 왜 사고 직후(08:55) 제주VTS에 교신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주VTS도 통신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인근 다른 VTS나 해경에 바로 인도하지 않고 교신을 지속하였다.

② 정기운행 선박에 대한 제주VTS의 특별한 관리

제주VTS는 세월호가 제주를 정기운항하는 여객선이어서 특별히 관리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③ 채널변경 경위

08:55 세월호-->제주VTS(12번 채널:제주 고유채널)
09:00 제주VTS -->세월호 : 21번 채널로 유지하자고 지시함
09:05 제주VTS<-->세월호 : 다시 12번 채널로 교신함

이미 심각한 침몰상황을 첫 교신때(배가 넘어갑니다, 해경불러주세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상공용채널인 16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대신 12, 21을 반복한 경위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④ 21번 채널로 09:00이후 09:05분까지 교신한 기록 녹음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어야 한다. 당시 교신내용을 무선통신일지 형식으로만 남기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 특히 이 당시 교신내용은 '배가 좌현으로 기울고,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인명피해 파악불가, 퇴선대비 및 인명구조'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⑤ 제주VTS측이 첫 상황파악(08:55) 후 해경 등에게 구조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제주VTS가 제대로 상황전파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는 이를 해경이 제대로 보고 받고도 제대로 구조조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8-6

가족대책위_천만인 서명 용지, 취지문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청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

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오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참고자료 8-6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번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 36(초지동 667-1) “유가족대책위 사무실”

☎ 031)413-0299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514명 명단

가영현 (연수원 31기)	강문대 (연수원 29기)	강민주 (변시 1회)	강부환 (연수원 39기)
강서영 (변시 2회)	강영신 (연수원31 기)	강은현 (연수원 39기)	강정면 (연수원 21기)
강정한 (연수원 30기)	강지훈 (연수원 36기)	강행옥 (연수원 16기)	강희철 (연수원 11기)
경수현 (연수원 42기)	고미진 (연수원 33기)	고봉수 (연수원 40기)	고안수 (연수원 41기)
고은희 (연수원 41기)	고지운 (변시 1회)	공도란 (연수원 43기)	공성록 (연수원 36기)
곽경태 (연수원 37기)	곽영수 (연수원 41)	구본민 (연수원 15기)	구태언 (연수원 24기)
국성웅 (변시 2회)	국중돈 (연수원 17기)	권기종 (변시 1회)	권남인 (변시 1회)
권도연 (연수원 42기)	권성연 (연수원 29기)	권성환 (연수원 41기)	권성희 (연수원 19기)
권오훈 (연수원 42기)	권정호 (연수원 30기)	김광순 (연수원 36기)	김기현 (변시 2회)
김기호 (변시 2회)	김남두 (연수원 40기)	김남훈 (변시 1회)	김낭규 (연수원 41기)
김다섭 (법무 8기)	김도헌 (연수원 40기)	김명진 (연수원 37기)	김문경 (변시 1회)
김미조 (변시 2회)	김미진 (연수원 36기)	김미혜 (연수원 42기)	김민경 (변시 1회)

김민선 (연수원 41기)	김민선 (연수원 42기)	김민영 (연수원 41기)	김민욱 (연수원 41기)
김민정 (연수원 35기)	김민주 (변시 2회)	김민중 (변시 2회)	김범구 (변시 2회)
김범래 (연수원 41기)	김병조 (연수원 37기)	김병주 (연수원 22기)	김보라 (연수원 2기)
김보람 (연수원 37기)	김삼연 (연수원 38기)	김삼화 (연수원 17기)	김상겸 (변시 1회)
김상하 (연수원 33기)	김상훈 (연수원 29기)	김상희 (변시 1회)	김서현 (연수원 32기)
김선주 (연수원 43기)	김설 (변시 1기)	김성진 (연수원 31기)	김세연 (연수원 23기)
김세영 (변시 2회)	김소연 (변시 1회)	김소영 (변시 2회)	김소진 (변시 2회)
김수윤 (연수원 40기)	김수정 (연수원 30기)	김수진 (변시 2회)	김순득 (연수원 39기)
김신혜 (연수원 42기)	김연주 (연수원 42기)	김영성 (연수원 19기)	김영운 (연수원 39기)
김영주 (연수원 34기)	김영훈 (연수원 27기)	김옥선 (연수원 40기)	김완수 (연수원 37기)
김용호 (연수원 39기)	김원아 (변시 1회)	김윤관 (변시 1회)	김윤지 (변시 2회)
김의중 (변시 2회)	김이랑 (변시 2회)	김이지 (연수원 41기)	김재식 (연수원 31기)
김재진 (연수원 36기)	김재호 (연수원 34기)	김재희 (연수원 2기)	김정선 (연수원 40기)

김정욱 (변시 2회)	김정인 (변시 2회)	김정현 (변시 2회)	김정혜 (연수원 26기)
김헌 (연수원 42기)	김종귀 (연수원 41기)	김종호 (변시 1회)	김주관 (연수원 35기)
김주영 (변시 2회)	김준 (연수원 34기)	김지수 (연수원 43기)	김지영 (연수원 32기)
김지원 (변시 2회)	김지현 (연수원 41기)	김진희 (변시 1회)	김차연 (변시 1회)
김창건 (연수원 43기)	김철호 (연수원 42기)	김태규 (변시 2회)	김태중 (연수원 42기)
김택수 (연수원 30기)	김학무 (연수원 39기)	김학수 (연수원 25기)	김학웅 (연수원 32기)
김학자 (연수원 26기)	김현 (연수원 17기)	김현경 (변시 1회)	김현명 (연수원 41기)
김현지 (변시 1회)	김혜겸 (연수원 42기)	김혜진 (연수원 41기)	김효정 (연수원 38기)
김효정 (변시 2회)	김희수 (사시29회)	남삼식 (연수원 20)	남성렬 (연수원 24기)
노민우 (연수원 40기)	노성현 (연수원 41기)	노환주 (변시 2회)	라은정 (연수원 40기)
류병욱 (연수원 38기)	류승미 (연수원 43기)	류승민 (연수원 35기)	류재율 (변시 2회)
류재철 (연수원 33기)	류정화 (변시 2회)	류지혜 (변시 1회)	류화진 (연수원 34기)
문계정 (연수원 37기)	문병만 (연수원 37기)	문영곤 (변시 2회)	문정구 (연수원 33기)

문창현 (연수원 39기)	문철기 (연수원 25기)	박가림 (연수원 38기)	박경수 (법무 10회)
박광직 (연수원 31기)	박기억 (연수원 28기)	박동하 (변시 2회)	박명희 (연수원 41기)
박미선 (변시 1회)	박민영 (변시 2회)	박상옥 (법무 15회)	박상흠 (변시 2회)
박서용 (변시 2회)	박석민 (연수원 32기)	박선경 (연수원 38기)	박선영 (연수원 38기)
박성우 (연수원 41기)	박성채 (연수원 40기)	박소영 (연수원 33기)	박수연 (변시 2회)
박신영 (변시 1회)	박연정 (연수원 43기)	박영생 (변시 2회)	박영신 (연수원 43기)
박은수 (연수원 12기)	박일지 (변시 2회)	박재홍 (변시 1회)	박정남 (군법 11회)
박정언 (변시 1회)	박정호 (변시 2회)	박종배 (연수원 37기)	박종운 (연수원 29기)
박주민 (사시45회)	박주선 (변시 2회)	박주현 (변시 2회)	박준식 (연수원 43기)
박준식 (변시 2회)	박중섭 (법무 9회)	박지영 (연수원 32기)	박지훈 (변시 1회)
박지흔 (변시 1회)	박진석 (연수원 36기)	박진식 (연수원 33기)	박진철 (연수원 35기)
박현근 (변시 1회)	박현화 (연수원 33기)	박혜란 (변시 2회)	박효선 (연수원 41기)
방현영 (변시 2회)	배수진 (연수원 37기)	배우미 (연수원 42기)	배의철 (연수원 41기)

배재철 (법무 8회)	백상필 (법무 1회)	백성길 (법무 7회)	백승재 (연수원 31기)
백승철 (변시 1회)	서국화 (연수원 42기)	서상범 (연수원 32기)	서성숙 (변시 2회)
서성일 (연수원 40기)	서주희 (연수원 39기)	서중희 (연수원 33기)	서창효 (연수원 41기)
서치원 (연수원 41기)	서혜진 (연수원 40기)	석보서 (변시 2회)	성락인 (연수원 38기)
성창익 (연수원 24기)	성효진 (연수원 43기)	소리나 (연수원37기)	소순무 (연수원 10기)
손다미 (변시 2회)	손영삼 (변시 2회)	손준호 (변시 3회)	송기호 (연수원 30기)
송난근 (연수원 31기)	송도영 (연수원 39기)	송수현 (연수원 35기)	송영은 (연수원 37기)
송윤정 (연수원 37기)	송인원 (변시 2회)	송준호 (연수원 43기)	송지현 (변시 1회)
송태석 (연수원 35기)	신광식 (연수원 29기)	신보경 (변시 1회)	신수환 (변시 2회)
신영희 (변시 2회)	신윤경 (연수원 42기)	신현호 (연수원 16기)	심재범 (변시 2회)
안대헌 (연수원 40기)	안미현 (연수원 43기)	안성희 (변시 2회)	안시현 (변시 1회)
안영주 (연수원 43기)	안원모 (연수원 11기)	안윤정 (변시 2회)	안지현 (연수원 32기)
안혜영 (변시 1회)	안호영 (연수원 25기)	양세원 (연수원 2회)	양세희 (연수원 2회)

양소영 (연수원 30기)	양연순 (연수원 37기)	양웅 (연수원 32기)	양재규 (연수원 41기)
양재원 (연수원 41기)	양홍석 (연수원 36기)	양희석 (변시 2회)	양희철 (연수원 42기)
엄영신 (변시 1회)	엄윤상 (연수원 35기)	엄정숙 (연수원 39기)	엄태섭 (변시 2회)
엄현식 (연수원 38기)	여지은 (연수원 41기)	염동진 (변시 2회)	염진아 (변시 1회)
오동현 (연수원 40기)	오세범 (연수원 43기)	오세한 (연수원 42기)	오엘림 (변시 2회)
오영중 (사시 49회)	오재욱 (연수원43기)	오지상 (변시 1회)	오지원 (연수원 34기)
오지헌 (변시 1회)	우아롬 (변시 2회)	우준현 (연수원 37기)	우희창 (연수원 43기)
위승용 (연수원 35기)	유록수 (연수원 40기)	유승수 (변시 2회)	유유희 (연수원 37기)
유지승 (변시 1회)	유진범 (연수원 36기)	유진희 (연수원 34기)	윤기상 (변시 2회)
윤성경 (연수원41기)	윤영선 (연수원 24기)	윤재두 (변시 2회)	윤재원 (연수원 40기)
윤지애 (연수원 40)	윤학채 (연수원 31기)	윤현하 (연수원 34기)	윤형모 (연수원 13기)
윤혜영 (연수원 39기)	이건영 (연수원 18기)	이경희 (변시 2회)	이나영 (연수원 41기)
이남진 (연수원 16기)	이덕규 (변시 2회)	이동길 (변시 2회)	이동산 (변시 2회)

이동현 (연수원 41기)	이동훈 (변시 2회)	이명숙 (연수원 19기)	이미영 (변시 2회)
이민정 (변시 2회)	이민종 (연수원 31기)	이병철 (연수원 42기)	이보람 (변시 1회)
이본석 (법무 15기)	이빛나 (변시 2회)	이상명 (연수원 34기)	이상민 (연수원 29기)
이상훈 (변시 2회)	이선 (변시 2회)	이선휘 (변시 2회)	이성숙 (변시 1회)
이소아 (연수원 38기)	이소정 (연수원 39기)	이소정 (연수원 36기)	이승채 (연수원 17기)
이승형 (연수원 39기)	이시정 (연수원 41기)	이연이 (연수원 38기)	이영자 (연수원 42기)
이용민 (변시 1회)	이원목 (연수원 19기)	이원익 (연수원 35기)	이원희 (변시 2회)
이유미 (변시 2회)	이유정 (연수원 23기)	이윤상 (변시 2회)	이은숙 (연수원 37기)
이은주 (연수원 37기)	이은혜 (연수원 43기)	이인철 (연수원 34기)	이일 (연수원 39기)
이장미 (변시 2회)	이장주 (연수원 33기)	이재용 (연수원 13기)	이정호 (연수원 27기)
이일 (변시 1회)	이종민 (변시 2회)	이종현 (변시 1회)	이준형 (연수원 35기)
이지욱 (변시 2회)	이지은 (연수원 32기)	이진호 (연수원 36기)	이찬 (연수원 43기)
이창준 (변시 2회)	이창훈 (연수원 32기)	이태엽 (연수원 28기)	이태영 (변시 2회)

이한나 (변시 2회)	이향미 (변시 1회)	이현주 (연수원 43기)	이형원 (연수원 38기)
이혜영 (변시 2회기)	이화영 (변시 2회)	이희중 (연수원 30기)	임동번 (연수원 29기)
임성빈 (변시 2기)	임성호 (변시 2회)	임영주 (변시 2회)	임영준 (연수원 43기)
임유선 (변시 2회)	임재빈 (변시 2회)	임정화 (변시 2회)	임주용 (연수원 31기)
임춘화 (변시 2회)	장경아 (연수원 41기)	장민수 (변시 1회)	장성근 (연수원 14기)
장성욱 (연수원 37기)	장완익 (연수원 19기)	장은민 (연수원 42기)	장정우 (변시 1회)
장지현 (변시 1회)	장혜승 (변시 2회)	전경능 (연수원 31기)	전문수 (연수원 26기)
전민영 (연수원 41기)	전범진 (연수원 41기)	전병덕 (연수원 38기)	전성훈 (연수원 43기)
전수기 (변시 1회)	전우정 (변시 2회)	전희정 (변시 2회)	정관영 (연수원 33기)
정규수 (연수원 33기)	정민경 (변시 2회)	정민영 (변시 2회)	정범성 (연수원 32기)
정선희 (연수원 41기)	정성훈 (연수원 33기)	정세형 (연수원 43기)	정수경 (연수원 39기)
정수인 (연수원 43기)	정영석 (연수원 43기)	정영훈 (연수원 34기)	정웅섭 (변시 1회)
정원영 (변시 1회)	정재원 (변시 1회)	정정훈 (연수원 33기)	정준길 (연수원 25기)

정지석 (연수원30기)	정지아 (연수원 42기)	정태용 (법무 11회)	정행주 (연수원 40기)
정현주 (연수원 32기)	조경휘 (변시 2회)	조기 (연수원 38기)	조대진 (변시 1회)
조묘진 (변시 2회)	조문경 (변시 2회)	조상규 (연수원 37기)	조성권 (연수원 42기)
조성원 (변시 1회)	조성찬 (연수원 32기)	조세영 (변시 2회)	조수연 (변시 2회)
조수진 (변시 1회)	조순열 (연수원 33기)	조아라 (연수원 43기)	조은별 (변시 1회)
조장곤 (연수원 40)	조정윤 (변시 2회)	조정현 (변시 1회)	조지영 (연수원 36기)
조하영 (연수원 19기)	조현욱 (연수원 19기)	주성훈 (연수원 34기)	주익철 (연수원 33기)
주현빈 (변시 2회)	지영선 (연수원 36기)	진준형 (연수원 34기)	진창환 (변시 2회)
차명심 (연수원 41기)	차미경 (연수원 33기)	차현환 (연수원 32기)	채희상 (연수원 40기)
최계숙 (연수원 42기)	최국신 (연수원 32기)	최근서 (연수원 13기)	최동욱 (변시 2회)
최문환 (연수원 31기)	최병근 (연수원 26기)	최병선 (연수원 16기)	최석봉 (연수원 43기)
최성중 (연수원 41기)	최승철 (연수원 35기)	최영 (연수원 39기)	최영 (변시 2회)
최영동 (연수원 28기)	최용근 (연수원 20기)	최유나 (변시 2회)	최윤수 (연수원 34기)

최장섭 (연수원 18기)	최재마로 (연수원 41기)	최정규 (연수원 32기)	최정민 (연수원 36기)
최정은 (변시 1회)	최종원 (변시 2회)	최준성 (변시 2회)	최지영 (변시 3회)
최지우 (변시 2회)	최현오 (연수원 36기)	최현희 (연수원 26기)	최형주 (연수원 42기)
최혜진 (연수원 43기)	태원우 (연수원 32기)	태지영 (연수원 28기)	하상현 (연수원 19기)
하성협 (변시 1회)	하태웅 (법무 5회)	한경태 (변시 1회)	한상하 (변시 2회)
한수연 (연수원 42기)	한승미 (연수원 41기)	한시환 (연수원 32기)	한용호 (변시 2회)
한정윤 (연수원 40기)	한종술 (연수원 19기)	함선혜 (변시 2회)	허윤정 (연수원 40기)
허이훈 (연수원 35기)	허진민 (연수원 36기)	현덕규 (연수원 22기)	형창우 (연수원 35기)
홍민정 (변시 2회)	홍민호 (변시 2회)	홍성호 (연수원 41기)	홍소은 (변시 2회)
홍인섭 (연수원 34기)	홍장미 (변시 1회)	홍지백 (연수원 43기)	홍지숙 (연수원 39기)
황경태 (연수원 41기)	황규표 (연수원 27기)	황보람 (변시 2회)	황선기 (연수원 36기)
황성재 (연수원 10기)	황성필 (연수원 22기)	황수철 (변시 2회)	황영해 (연수원 38기)
황은영 (연수원 38기)	황필규 (연수원 34기)		